

청소년 정치참여 실태와 활성화방안 연구

모상현 · 최용환 · 남미자 · 정건희



연구보고 21-R04

청소년 정치참여 실태와 활성화방안 연구

모상현, 최용환, 남미자, 정건희

연구보고 21-R04

청소년 정치참여 실태와 활성화방안 연구

저 자 모상현, 최용환, 남미자, 정건희

연구진 연구책임자_모상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_최용환(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_남미자(경기도교육연구원 부연구위원)
_정건희(청소년자치연구소 소장)
연구보조원_박소영(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사업운영원)
_홍정윤(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조사연구원)

보고서를 펴내며

오랫동안 청소년은 사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정치적 의사결정과정에서 참여할 기회가 실질적으로 배제되어 왔으며, 청소년 당사자와 관련된 주요 정책이나 사업에서 소외되어 왔습니다. 이는 청소년이 주체적이고 건강한 시민으로서 성장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 발달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019년 12월 공직선거법의 개정으로 인한 선거연령의 하향 조정은 청소년 정치참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청소년의 정치적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제도적 틀 속에서 정치적 의사결정과정에서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중요한 전환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이 자신과 관련된 주요 문제에 대해 스스로 목소리를 내고 자신을 둘러싼 정치적 현안과 사회적 이슈에 직접적으로 참여·제안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청소년 당사자가 정책적 환경을 개선·변화시킬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부여된 것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청소년의 정치참여 현안과 실태를 파악하여 정치 참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살펴보는 정책연구는 청소년의 정치 참여가 청소년 관련 정책 전반에 미칠 수 있는 미래적 영향력과 이에 대한 법·제도적으로 지원 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 정치참여에 대한 법·제도적 고찰과 청소년

참여기구 및 청소년의회 현황 개관을 통한 개선과제 및 정책적 시사점 도출, 영국, 독일, 미국 등 해외사례 분석을 통한 한국 상황에서의 적용 가능성 모색, 청소년의 정치참여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및 정치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심층 요인 분석, 청소년 현장 및 학계 전문가 대상 AHP 및 IPA 분석 등 다각적인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청소년의 정치적 참여 기회 및 저변을 확대하고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연구보고서 작성을 위한 기초적 토대를 제공해 주신 원내·외 공동 연구진과 해외사례 분석을 통해 한국 현실에서 청소년 정치참여의 적용 가능성과 지평을 열어 주신 세 분의 집필진, 그리고 보고서의 도표, 편집, 내용을 꼼꼼히 살펴주신 연구사업운영원 선생님과 외부 전문 지원인력들, 이분들의 노고가 없었다면 보고서는 그 빛을 발할 수 없었을 겁니다. 다시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마음을 전해 봅니다. 본 연구보고서가 미약하지만 청소년 정치참여 활성화와 참여정책의 방향성을 제고하는데 작은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2021년 12월
연구진을 대표하여
연구책임자 모상현

연구요약

1. 연구목적

- 오랫동안 청소년은 사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정치적 의사결정과정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실제적으로 배제되어 왔으며, 이는 청소년 당사자와 관련된 주요 정책이나 정책 사업에서의 소외를 가져와 책임 있는 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지 못해 건강한 성장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최근 청소년의 정치참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청소년은 정책의 주요 대상이자 정책적으로 자신이 처한 환경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주체적인 존재로 재인되고 있음(모상현, 2019). 2019년 12월 공직선거법이 개정으로 인한 선거연령하향은 청소년의 정치적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제도적 틀 속에서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작용함.
- 청소년이 자신과 관련된 주요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을 둘러싼 정치적 현안과 사회적 이슈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제안할 수 있도록 공론화 할 수 있는 기회의 제공과 이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정치참여 현안과 실태를 파악하여 정치참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살펴보고, 청소년의 정치참여가 민주시민역량 증진과 함께 다양한 청소년의 발달에 어떻게 기여하고, 적극적 참여개념으로서의 청소년 정치참여가 청소년 정책 전반에 미칠 수 있는 미래적 영향력과 이를 법·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마련하는데 있음.

2. 연구방법

- 문헌고찰

청소년 정치참여 관련 이론적 배경 검토, 정치참여의 의미와 개념정의, 제도적 기구로서 진행되어 왔던 청소년 참여활동의 성과와 한계 및 확장 가능성, 청소년의 정치참여의 근거가 되는 법령 분석, 선행연구 리뷰 등 문헌 고찰을 수행함.

- 전문가 자문 실시

청소년 정치참여 활성화 및 제약 요인 파악, 청소년 정치참여 동향 및 법·제도 개선을 통한 활성화 방안, 청소년 및 전문가대상 설문도구 개발, 청소년의 정치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방안 도출 등을 목적으로 전문가 자문회를 실시함.

- 정치참여 법·제도 및 참여기구 현황 고찰

청소년의 정치참여의 근거인 관련 법령과 지자체 학생인권, 학생자치, 학교 자치 조례 등의 분석을 실시하여 정치참여의 근거의 정당성 확보 및 청소년 참여기구 현황 고찰을 통한 시사점 도출 및 정책 개선과제를 제안함.

- 해외사례 조사

청소년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틀을 이미 갖추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시·지원하고 있는 해외사례를 살펴보고, 그 특성을 파악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얻고자함. 해외사례로는 전통의 의회 중심의 청소년 참여활동초점을 맞추고 있는 영국, 비판적 관점에서 청소년 참여를 담론 중심으로 시각화하는 독일과 기관별 유기적인 네트워크 체계가 강점인 미국 등 세 국가를 선정함.

- 양적 설문조사

전국의 중·고등학교 청소년 약 3,000명(완료표본 2,816명)을 대상으로 정치 참여 일반현황, 정치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긍정 및 제약 요인과 활성화 증진

방안 등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 실시함. 조사내용은 정치의식, 정치효능감, 사회적 현안이슈에 대한 관심정도, 정치참여 등 사회참여 경험여부, 정치참여 참여 및 비참여 동기, 정치참여 방식, 정치참여 제약 및 활성화 요인, 법·제도적 지원 방안 등에 포함됨.

추가적으로 청소년 현장 전문가 301명을 대상으로 정치참여 활성화 요인, 참여확대 제약 요인 및 개선 방안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 및 계층적 분석기법(AHP)과 활용, 중요도·수행(IPA) 분석을 실시함.

- 질적 면접조사(FGI)

청소년 참여기구가 학교 자치회 및 의회에서 활동 경험이 있거나, 자발적으로 정치참여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과 참여경험이 없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정치참여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내외적 요인에 대한 심층적 탐색과 제도적 제약과 보완점, 활성화 요인 등을 파악하기 위한 면접조사를 실시함. 면접조사에는 20명의 학생 청소년이 참여함(중·고등학생×정치참여/정치 비참여 집단별 각 5인).

- 정책실무협의회 개최

청소년의 정치참여 제약요인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지원방안 등을 중심으로 정책지원 방안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실무협의회 및 포럼을 진행함.

3. 주요 연구결과

1) 해외사례 분석

- 영국은 지난 20년간 청소년의회를 운영해오면서 청소년의 체계적인 정치 참여구조를 마련하였고, 청소년 참여기구가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있지만, 중앙과 지방정부, 의회, 학교, 청소년 단체와 청소년이 적극적인 서로 연계되는 시스템을 구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청소년 권한 강화에 기여하고 있음. 국가와 주 단위의 청소년의회 이외에 지역 단위로 운영되는 600여 개의 지방 청소년위원회(LYC)의 기능은 청소년의 의견 전달과 사회 운동, 캠페인에 국한된 것이 아닌 정책의 직접적 관여와 관리의 영역까지 정부가 청소년 정치참여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안정적이며 적극적인 참여기회 확산에 기여하고 있음.
- 현재 독일은 청소년 정치참여와 관련해 우수 사례 국가임에도 비판적 시각에서 볼 때, 독일의 청소년 정치참여는 법과 제도화된 틀에 의한 규범적 구속력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는 역으로 청소년의 정치적 참여가 지역정치, 사회봉사, 학교와 같이 일상세계의 관계 속에서 사회운동, 청소년 문화적 운동들과 같은 비제도적 참여형태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즉 정치참여를 위해 구축된 제도와 규범과 이러한 제도화된 틀에 지배받는 대신에 스스로의 입장을 세워 나가는 과정과 문제해결을 위해 청소년 정치참여가 논의되는 일종의 담론의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음.
- 미국의 경우 학교와 학교 밖의 청소년 단체와 사회교육 및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시민성 함양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으며, 청소년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각 주별 시민교육 강화와 지방정부와 협의기구들의 공공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다양한 입법과 참여의 학습과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참여기구와 유사한 청소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그 기능과 역할은 자문형과 정부제도형을 분류 될 수 있으며, 실행 기능 측면에서 차이 점이 있음.

2) 양적조사(실태조사)

-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정치참여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치적 현안에 대한 관심도는 약 30% 수준이었으며, 경제 수준이 높을수록, 부모학력이 높을수록,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진보 성향 일수록 높은 관심도를 보임.
- 정치 주요 이슈는 여론과 미디어 동향,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관심도가 가장 높았고, 집단에 따라 남학생은 대통령과 정부, 국회 의정활동, 정당 관련 이슈에 대한 관심이, 여학생은 사법부 판결이나 시민단체 활동 이슈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모든 이슈에 대한 관심이 높게 관찰됨. 중간수준의 경제적 집단과 정치 중도 성향 집단이 타 집단보다 주요 이슈에 대한 관심도가 낮았으며, 학업 성적이 높을수록, 부모학력이 높을수록 정치 주요 이슈들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도 높아지는 것으로 관찰됨.
- 청소년이 가장 큰 관심을 보인 정치 분야는 교육과 문화예술체육 분야였으며, 가장 낮은 비율의 관심을 보고한 분야는 정치행정 분야였음. 남학생이 더 큰 관심을 보인 정치 분야는 정치 행정, 경제, 과학기술 분야였으며, 여학생은 교육, 사회복지, 문화예술체육 분야였으며, 고등학생은 중학생에 비해 정치 전반에서 높게 관찰됨. 중간수준의 경제적 집단이 경제적 수준이 높거나 낮은 집단보다 주요 정치 분야 대한 관심도가 낮았으며, 학업 성적이 높을수록, 부모학력이 높을수록 정치 주요 정치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도 높아지는 것으로 관찰됨. 정치 성향의 경우, 대부분 진보, 보수, 중도 성향 순으로 정치 분야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보임.

- 정치 이슈에 대한 대화 대상은 부모님, 친구, 온라인 유저, 학교 선생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부모님 또는 친구와 대화를 나누는 여학생의 비율이 남학생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관찰됨. 중간 경제 집단이 정치 관련 대화를 덜 나누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높은 경제 집단은 부모님과의 대화가, 낮은 경제 집단은 온라인 유저와의 대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관찰됨. 낮은 학업성적 집단은 중간 또는 높은 학업성적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모님과의 정치 관련 대화를 덜 나누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러한 경향은 부모학력에 따른 차이에서도 유사하게 관찰됨. 보수 또는 진보 집단이 중도 집단에 비해 친구들과 더 많은 정치 관련 대화를 나누며, 부모님과 대화는 진보 집단이 여타 정치 집단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관찰됨.
- 정치 견해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고 응답한 요인은 언론매체, 부모님 순이었으며, 온라인 유저나 학교 선생님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배경 변인별 응답 비율에서는 여학생이 각 요인이 정치적 견해에 미치는 영향을 전반적으로 높게 인식하였고,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차이는 언론매체에서만 관찰되었으며, 고등학생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중간 경제 집단이 여타 집단에 비해 각 요인의 영향력이 낮았으며, 성적이 높을수록, 부모학력이 높을수록 각 요인의 영향력이 높았다고 보고함. 진보 성향 집단은 보수 또는 중도에 비해 각 요인의 영향력을 높게 보고함.
- 정치관련 정보의 획득은 주로 소셜미디어, Youtube, TV 뉴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디어 전반에 걸쳐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주요 미디어를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등학생의 미디어 이용률 또한 중학생들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남. 경제적 수준이 높은 집단이 대체적으로 미디어 이용률이 높았으며, 학업성적이 낮을수록, 부모의 학력이 낮을수록 정치관련 정보 획득을 위해 미디어를 이용하는 비율이 낮게 보고됨. 진보 집단은 다른 정치 집단에 비해 주요 미디어들을 더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정치 이슈에 대한 게시글을 읽거나 온라인 청원 또는 서명에 참여한 청소년의 비율은 약 20~30%에 머물렀으며, 소셜미디어를 통한 정치활동 중 학교급 간의 차이가 나타난 활동은 정치 게시글 읽기와 온라인 청원 또는 서명이었으며, 해당 경험을 한 고등학생의 비율이 중학생보다 높게 나타났음. 경제적 수준이 낮은 청소년들이 일부 상대적으로 소셜미디어를 통한 정치활동 경험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진보 성향 집단이 중도 또는 보수에 비해 각 정치활동 전반에 걸쳐 경험률이 높았고,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정치활동을 경험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모의 학력에 따른 경험의 차이는 거의 발견되지 않았음.

- 선거에 대한 관심은 대통령 선거 이외에 매우 낮은 수준으로 관찰되었으며, 남학생에 비해서는 여학생이 주요 선거들에 대해 관심이 높았으며, 교육감 선거에는 고등학생의 관심도가 더 높은 반면, 대통령 선거에 대한 관심은 오히려 중학생이 더 높았음. 경제 수준에 따른 관심도 차이는 두드러지지 않은 반면,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또는 부모의 학력이 고학력일수록 선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관찰되었으며, 진보, 보수, 중도 성향 순으로 선거 관심도가 높은 것으로 드러남. 대통령 선거 투표 의향 비율은 약 80% 정도, 국회의원 선거와 교육감 선거는 60%에 이룸. 주요 선거 투표 의향은 여학생과 고등학생에게서 더 높게 관찰됨. 경제적 수준에 따른 차이는 거의 없었으며, 교육감 선거 투표 의향은 경제 수준과 학업성적이 높고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진보 성향 집단에서 높게 관찰됨.
- 선거권 연령 만 17세 하향에 대해 찬성 의견이 근소한 차이로 반대 의견에 비해 높게 나타났음. 연령 하향에 반대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중학생이 고등학생에 비해 다소 높았으며, 중간 수준 경제 집단의 하향 찬성한 비율이 낮았음. 학업 성적이 높을수록, 부모의 학력 높을수록 하향 동의 비율이 높았음. 진보 성향 집단이 타 집단보다 동의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교육감

선거 연령을 만 16세로 하향하는 것에 대해서는 약 40%의 청소년들이 찬성하였고, 반대 비율은 36.6%로 나타남. 여학생과 고등학생의 반대 비율이 각각 남학생과 중학생의 반대 비율을 다소 상회하는 결과를 보여주었음. 중간 경제 집단이 타 집단에 비해 하향 찬성 비율이 낮았고, 학업성적과 부모학력이 높을수록, 진보 성향 집단이 높은 찬성 비율을 보여줌.

- 전체 정치 활동 경험 중 20% 이상 경험한 활동은 학교(학급) 자치회 활동과 모의선거활동뿐이었으며, 자치회 활동의 경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학교급간의 차이는 거의 관찰되지 않았으며, 진보 성향 집단이 보수 또는 중도 보다 높게 나타났음. '정치활동경험이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긍정적 답변이 높았으며, 역량 중 다른 정치적 견해 수용하는 태도에 대한 도움 여부에 50% 이상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여타 다른 역량들에 대해서도 40% 이상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함. 대부분 역량에 대해 보다 높은 긍정 답변을 보고한 집단은 여학생이었으며, 고등학생의 비율이 다소 높았음. 경제적 수준, 학업성적, 부모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정치 활동 경험의 역량 강화에 대한 긍정 평가가 높게 나타났으며, 진보 성향이 가장 높게, 중도 성향이 청소년들이 가장 낮게 나타남.
- 정치 관련 토론 활동 경험 비율은 1/3 수준에 미치지 못했으며, 여학생이, 고등학생들이 더 많은 정치 관련 토론을 경험한 것으로 관찰됨. 경제 수준이 높거나 부모학력이 고학력일수록 토론 경험 비율이 높았으며, 성적이 낮을수록 토론 경험이 낮게 나타났으며, 진보 성향 집단이 여타 집단보다 높은 비율로 관찰됨. 학교 수업에서의 모의 선거 경험은 매우 낮았으며, 가장 높은 비율로 보고된 모의 대통령 선거 경험 비율이 6.5%에 불과했음.
- 교내 규칙 제·개정 및 행사 기획 시 학생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지만, 의견 수렴 통로는 충분히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됨. 학생의견 수용 정도를 비교적 높게 평가한 집단은 여학생 및 중학생이 높게 평가하였으며,

경제적 수준 상위 집단에서 높은 비율로 나타났던 반면, 학업성적 수준에 따른 차이는 관찰되지 않음. 부모학력이 높을수록 학교 규칙 제·개정 시 학생 의견이 잘 반영되고 있다고 평가했으나, 의견 수렴 통로에 대한 평가는 가장 낮은 수준으로 보고됨. 학생 의견 수렴 통로에 대한 긍정 비율이 높은 집단은 보수 성향 집단이었으며, 규칙 제·개정 및 행사 기획 시 학생 의견 반영에 대해서는 진보 성향 집단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청소년 중 35~45%가 정치참여 활성화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특히 리더십 함양 또는 정치 이슈에 대한 토론수업의 필요성은 거의 절반에 가까운 비율로 응답함. 여학생과 고등학생의 비율이 보다 높았으며, 학업성적이 높거나 부모학력이 높을수록, 진보 성향 집단일수록 정치참여 활성화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 정치참여저해 요인으로는 절반에 가까운 청소년들이 입시위주의 교육제도가 저해 요인이라고 하였으며, 약 1/3의 청소년들이 정치참여의 실천적 기회의 부재, 학생 정치참여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저해 요인으로 보았음. 각 요인을 저해 요인으로 응답한 비율은 여학생 또는 고등학생에게서 높게 관찰되었으며, 무엇보다 낮은 경제 수준 집단에서 대부분의 요인들을 저해 요인으로 평가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학업성적이 높거나 부모의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진보 성향 집단일수록 높은 비율로 저해 요인으로 평가함.
-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학교 및 가정에서의 결정권 보장과 정치 및 인권 교육의 확대가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여학생과 고등학생 집단에서 높은 비율로 관찰됨. 특히 정치 및 인권 교육의 중요성을 여학생이 비교적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됨. 중·고등학생의 정당가입 허용이 중요하다 주장한 비율은 중학생들에게서 다소 높게 관찰되었음. 중간 경제 수준 집단에서 각 요인의 중요성 정도가 가장 낮은 비율로 관찰되었으며, 학업성적이 높거나 부모의 학력이 높은 집단에서 각 요인들이 정치참여 활성화에

중요 요인으로 평가한 비율이 높으며, 진보 성향의 청소년들이 관련 요인들의 중요성을 높게 평가하는 경향성이 관찰됨.

- 차기 대통령이 갖추어야 할 자질로는 정책실행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였으며, 위기관리능력, 도덕성, 민주적 정책결정 등의 중요성도 정책실행력과 거의 유사한 비율로 관찰되었음. 여학생이 각 자질의 중요성을 높게 평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특히 도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여학생의 비율은 남학생에 비해 뚜렷하게 높게 관찰됨. 고등학생이 비전제시와 인사능력의 중요성에서 다소 높게 평가하였으며, 경제적 수준 간 두드러진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음.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부모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각 자질의 중요성을 높게 평가하였으며, 진보, 중도, 보수 순에 따라 응답비율 차이가 관찰되었으며, 특히 도덕성 요인에 대해 보수집단이 진보 또는 중도 집단에 비해 현저히 낮은 비율로 관찰됨. 차기 대통령이 해결해야할 분야는 교육과 경제였으며,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평가된 분야는 통일안보 분야였음. 대부분의 분야에 대해 여학생과 고등학생이 더 높은 비율로 응답하였으며, 경제적 수준에 따른 차이는 거의 관찰되지 않았음. 다만,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각 분야에 대한 중요도를 높게 평가한 반면 고학력부모(대학원졸 vs. 대학졸) 간의 차이는 다소 미미했음. 진보 성향 집단에서 각 분야의 해결을 희망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보수 집단에서 대부분의 분야에서 가장 낮게 관찰되었음.
- 현 정부에서 시급히 해결되어야할 청소년 문제로 80% 이상이 청소년자살 문제에 응답했으며, 청소년 대상 성폭력, 학교 폭력 순으로 높게 나타났음. 반면, 선거권연령하향은 다른 문제들에 비해 시급하다고 평가하는 수준이 낮았음. 청소년 문제 전반에 걸쳐 해결이 시급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여학생에게서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여학생의 90%가 청소년 대상 성폭력 문제 해결에 응답함. 입시위주 교육문제를 제외한 대부분의 문제에 대해 고등학생보다 중학생에게서 더 높게 나타났음. 경제적 수준 별 두드러진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음. 학업성적 하위 집단이 상위 및 중위 집단에 비해 문제해결의 시급성에 대해 낮게 관찰되었으며, 입시위주 교육과 선거연령 하향 문제의 경우 부모학력(대학원졸) 상위 집단에서 가장 크게 느낀 반면, 학교폭력문제와 청소년 대상 성폭력 문제의 시급성을 가장 크게 느낀 청소년들은 부모학력(고졸) 하위 집단으로 관찰됨. 전반적인 현안 해결이 시급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집단은 대부분 진보 성향 집단이었으며, 보수 성향 집단이 가장 낮은 비율로 관찰됨.

-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는 대체적으로 낮은 편이었으며, 가장 높은 신뢰도는 시민단체(NGO)로 30%에 못 미치는 비율이었으며, 가장 낮은 신뢰도는 정당으로 15% 내외였으며, 그 외의 기관은 20% 내외로 관찰됨. 신뢰도 수준은 전반적으로 여학생과 중학생에게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경제적 수준이 높거나 학업성적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높은 것으로 관찰되었지만, 부모학력에 따른 차이는 드러나지 않았음. 진보 성향 집단이 가장 기관을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수 성향의 기관 대한 신뢰도는 중도 성향 보다 낮게 관찰됨.
- 2021 지방보궐(서울 및 부산) 선거 참여 여부에 응답한 청소년은 총 93명이었으며, 그 중 66%($N=61$)가 투표권이 없는 청소년들이었으며(응답오류), 투표권을 가진 청소년($N=32$) 중 투표에 참여한 청소년($N=12$)보다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청소년($N=20$)이 더 많았음. 선거 참여 청소년 중 후보자의 공약을 기준으로 투표에 임한 청소년들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정당을 기준으로 후보자를 선택한 청소년의 비율이 그 다음으로 높게 관찰되었음. 공약 기준 후보자 선택 비율은 여학생들이 높은 반면, 정당이나 후보자 능력기준 비율은 남학생들이 더 높게 관찰됨. 경제 수준 하위 집단에서 공약 기준으로 투표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학업성적 상위 집단은 후보자가 속한 정당을 기준으로 투표하였으며, 학업성적 하위 집단은 대부분은 후보자 공약 기준으로 투표에 임함.

- 투표 불참자의 경우 관심이 없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이는 기타 이유(마음에 드는 후보가 없음, 시간이 없음)들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대부분 남학생들이 관심이 없다는 이유로 불참했으며, 여학생들은 기타 사유에 균등하게 분포됨. 경제 수준 상위 집단의 과반은 시간이 없어서, 중위 집단의 절반은 관심이 없어서, 하위 집단은 모두 마음에 드는 후보가 없어서 투표에 불참했다고 응답함. 학업성적 상위 및 중위 집단 대다수는 시간이 없어서 라고 응답하였으나, 하위 집단 대부분은 마음에 드는 후보가 없어서 라고 보고하였음. 정치적 중도 성향 집단에서는 불참 이유가 각각 고르게 나타난 것에 반해, 진보 성향 집단은 모두 시간이 없어서 투표에 불참한 것으로 나타남. 부모학력 고졸 집단은 대부분이 시간이 없어서라고 응답한 반면, 부모학력 대졸 집단의 경우 시간이 없어서 불참했다는 비율이 가장 낮게 관찰됨.

※ 투표 참여자(N=12)의 경우 배경 변인 별 분석 시 각 셀별 표본 수가 현저히 적어 변인 별 비교 결과는 유의한 의미가 없다고 판단됨.

- 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도는 낮은 편으로, 정책과 입법 과정이 국민의 의사와 공익을 반영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약 20% 수준으로 관찰되었으며,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에 비해, 경제 수준 상위 집단이 하위 집단에 비해 그리고 학업 성적이 높을수록 신뢰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보수 성향 집단이 진보 또는 중도 보다 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관찰됨.
- 정치효능감은 전반적으로 보통 수준(5점 기준 3.1점)으로 여학생이 남학생들에 비해, 고등학생이 중학생에 비해 비교적 높게 관찰됨. 경제 수준 중위 집단이 상위 집단 보다 비교적 낮게 관찰되었으며,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정치 효능감이 높게 나타남. 부모의 학력 높거나 진보 성향 집단에서 정치효능감 수준이 비교적 높게 관찰됨.
- 전반적으로 민주시민의식은 높게 나타났으며,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비교적

높게 관찰됨. 학업성적 상위 집단에서 민주시민의식이 높게 관찰되었으며, 정치 보수 성향 집단이 진보 또는 중도 집단에 비해 비교적 낮게 관찰됨.

3) 질적조사(면접조사)

(1) 중학생 대상 면접조사

- 정치참여 경험이 있는(有) 중학생 청소년들은 참여경험이 정치적 성장과 정치 역량 강화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사고의 확장, 책임감 배양, 타인과의 소통 역량 증진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견인한 것으로 드러남. 정치 관심 영역은 교육, 문화, 복지, 사법체계 등으로 세분화되었으며, 정치적 견해 형성에 부모님의 영향이 가장 컸고, 다른 정치적 견해에 대해 공통적으로 '존중하는 태도'를 피력했으며, 정치적 견해가 엇갈리는 것도 올바른 정책 형성에 있어 바람직한 것으로 인정함. '청소년을 미성숙하다고 바라보는 사회의 인식'이 청소년 정치참여를 저해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으로 간주했음. 이는 기성세대의 고정관념으로 이러한 인식으로부터 탈피해 청소년들에게 정치 참여의 권한을 부여한다면 청소년들의 정치참여와 관심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 하고 있고, 학교에서 정치에 대한 기초적인 수준의 교육조차 받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고했으며, 입시에만 치중하게 만든 현 교육제도 또한 저해 요소로 지적함. 민주사회에서의 선거의 기능과 중요성에 공감하였으며, 선거연령 하향 조정의 경우, 청소년 또한 국민이 일원으로서 동등한 권리를 부여 받아야 하며, 특히 교육감 선거의 경우, 교육의 수혜자이자 당사자인 청소년들이 선거권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지만, 일부 하향 조정에 반대하는 청소년들은 실질적인 정치 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들의 정치 권리 행사는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음을 지적함. 기관 신뢰도에선 언론에

대해 강한 불신을 드러냈으며, 차기 대통령의 자질로는 국민과 소통, 희생과 책임감, 도덕성, 공약을 지켜나갈 수 있는 역량, 정책의 일관성 등이 중요하게 인식됨.

- 정치참여 경험이 없는(無) 중학생 청소년들은 정치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 정도가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 이슈에 대한 타인과의 대화나 정보 검색 활동 또한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대부분 정치와 사회 변화의 관계에 대한 자신의 확실한 태도여부, 즉 '정치효능감'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지 못하였으며, 입법, 행정, 사법 등 각 정부 기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기본지식이 부재했지만, 정치참여에 대해선 공통적으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음. 정치를 자신들의 삶과 무관한 '지루하고 재미없는 주제'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학교에서의 정치 또는 선거 교육은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에서 벗어난 것으로 간주하였음. 선거권 연령 하향에 대해 '현 선거권 연령을 유지' 쪽을 선택했으며, 만 18세 이하로 조정될 경우, 진지하지 않은 태도로 투표에 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으며, 다만 교육감 선거의 경우, 청소년들의 이익과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선거 연령 하향에 찬성하는 의견 또한 관찰됨. 차기 대통령의 자질로는 국민과의 소통 역량, 공약 이행에 대한 의지, 리더십 등이 중요하게 인식됨.

(2) 고등학생 대상 면접조사

- 정치참여 경험이 있는(有) 고등학생들은 참여경험이 정치 자체에 대한 관심 증대,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확립, 타인과의 소통 역량 증진 등의 방식으로 청소년들의 정치적 성장과 정치역량 강화에 기여한 것으로 보았으며, 다양한 정치 영역(환경, 경제 등)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교육 분야에 대한 관심이 가장 두드러짐. 정치적 견해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사람은 부모님

이었으며, 정치를 통한 사회 변화는 정치 주체 즉, 정치인과 국민의 참여와 무엇보다 정치인들을 평가하고 감시하는 국민들의 관심이 수반될 때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피력함. 정치참여저해 요소는 실질적 정치 교육의 부재와 성인의 청소년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청소년들은 미성숙하다')에 기인된다고 견해였으며, 청소년들이 직접 정치에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정치 교육의 전환이 필요하며, 선거권 연령 하향에 대해서는 '선거권뿐만 아니라 피선거권까지 하향 조정'부터, '더 이상의 하향은 불가하다.'는 의견까지 다양하게 나타났지만, 선거권 연령 하향에 앞서 실질적인 정치교육이 선행되어야 함을 피력함. 기관 신뢰도에선 언론에 대해 강한 불신을 드러냈으며, 차기 대통령의 자질로는 공정성, 정의, 인내심, 지도력, 청렴함, 국가를 위하는 진실한 마음, 인재 고르는 안목 등이 중요하게 인식됨.

- 정치참여 경험이 없는(無) 고등학생 청소년들은 정치가 자신들의 삶과 크게 연관되어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정치적 핫 이슈들에 대해서만 가끔 관심을 가질 뿐, 전반적인 정치에 대한 관심 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정치적 이슈에 대한 정보 경로는 주로 뉴스나 부모님을 통해서였으며, 정치적 견해 형성에 부모님이 큰 영향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됨. 정치가 사회 변화를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정치적 견해가 다른 상대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인정을 필요하다고 인식함. 학교에서 충분한 정치 교육을 받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치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정치교육 부재와 입시부담이었음. 선거 연령의 하향 조정은 학업에 매진하는 청소년들에게 과중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고 선거에 진지하지 못한 태도로 임할 청소년들이 많을 것이라고 우려, 부정적 시각을 피력함. 입법부(국회)에 대한 청소년들의 불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매체를 통해 보도되는 국회의 부정적 모습에 대한 반발심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대통령에게 필요한 자질로는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에게 걸맞은 품행과 인성, 책임감, 국민과의

소통 역량 등이 중요하게 인식됨.

4) 전문가 조사(AHP & IPA 조사)

- 지금까지 청소년의 정치참여 활성화에 대한 현황과 청소년의 실태조사 의견을 분석함. 그러나 청소년 정치참여 활성화의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현장 또는 학계 전문가들을 바탕으로 보다 심층적 연구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청소년전문가패널단’을 대상으로 청소년 정치참여의 활성 요인과 앞으로 중요한 과제를 분석함. 이를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응답자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청소년전문가패널단’ 소속의 전문가들로 청소년활동분야의 현장전문가 집단인 ‘청소년전문가(활동)’, 청소년보호복지분야의 현장전문가 집단인 ‘청소년전문가(보호복지)’ 그리고 학계 및 연구소 등에 종사하는 전문가 집단인 ‘청소년전문가(기타)’로 구분됨. 조사는 9월 중순부터 10월 초까지 온라인 URL로 진행하며 응답하도록 하였음. 전체 사례 수는 301명임.
- 전문가들은 청소년들의 정치참여 활성화의 일반적 인식으로 입시위주의 교육 제도가 학교 안팎에서 학생들의 정치참여를 많이 저해하고 있는 요인으로 지적하였음. 또한 학교와 가정에서의 역할이 학교 안팎에서 학생들의 정치참여를 활성화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함. 다음으로 대체로 가짜뉴스 증가와 1인 온라인 미디어 사용의 증가가 청소년의 정치참여에 많은 영향을 주는 사회적 이슈로 인식되고 있었음. 그리고 제도권 내 젊은 정치인의 증가가 청소년의 정치참여 활성화에 중요한 최근 정치 환경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음. 마지막으로 전반적으로는 모든 분야 전문가들이 청소년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해 토의, 토론을 통한 의사결정 및 의사결정 참여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음.

- 다음은 AHP 분석을 실시하여 청소년 정치참여와 관련된 주요 사항별 중요도를 도출하였음. 분석된 주요 사항에 해당하는 항목은 크게 5개로 ① 청소년 정치 참여 교육의 시기적 중요성, ② 청소년 정치참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관의 중요성, ③ 청소년의 정치참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화 상대의 중요도, ④ 청소년들의 정치참여 활성화와 관련한 정치행위의 중요도, ⑤ 청소년의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해 다방면(교육, 직접 참여 등)의 사례로 활용할 수 있는 우리나라 주요 선거의 중요성임.
- AHP 분석결과, 청소년 전문가들이 청소년 정치참여 교육의 시기적 중요성을 판단한 결과에 따르면, 그 가중치는 ‘청년기’,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순으로 나타남. 가장 높은 가중치로 계산된 청년기는 40.6%이고, 고등학교는 27.7%, 중학교는 16.8%, 초등학교는 14.9%임. 따라서 청소년 전문가들이 상대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치참여 교육 시기는 청년기임.
- 청소년 전문가들이 청소년 정치참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관의 중요성을 판단한 결과에 따르면, 가중치 기준으로 볼 때 ‘학교 및 청소년시설’, ‘시도 교육청’,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정당’ 순임. 가장 높은 가중치로 계산된 학교 및 청소년시설은 36.9%이고, 시도교육청은 27.1%,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는 23.4%, 정당은 12.6%임. 따라서 청소년 전문가들이 상대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청소년 정치참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관은 학교 및 청소년시설임.
- 청소년 전문가들이 청소년 정치참여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화 상대의 중요성을 판단한 결과에 따르면, 가중치 기준으로 볼 때 ‘부모님’, ‘학교 선생님’, ‘친구들’, ‘온라인 유저’ 순으로 나타났음. 가장 높은 가중치로 계산된 부모님은 29.6%이고, 학교 선생님은 26.5%, 친구들은 25.8%, 온라인 유저는 18.1%임. 따라서 청소년 전문가들이 상대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청소년 정치참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화 상대는 부모님이며, 이는 가장 낮은 온라인 유저보다

11.5% 포인트 높은 수준임.

- 청소년 전문가들이 청소년들의 정치참여 활성화와 관련한 정치행위의 중요도를 판단한 결과에 따르면, 가중치 기준으로 볼 때 ‘자치활동’, ‘투표’, ‘정치교육’, ‘SNS 활동’ 순으로 나타났음. 가장 높은 가중치로 계산된 자치활동은 32.8%이고, 투표는 26.2%, 정치교육은 25.2%, SNS 활동은 15.7%임. 따라서 청소년 전문가들이 상대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청소년 정치참여 활성화와 관련된 정치행위는 자치활동이며, 이는 가장 낮은 SNS 활동보다 17.1% 포인트 높은 수준임.
- 청소년의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해 다방면(교육, 직접 참여 등)의 사례로 활용할 수 있는 우리나라 주요 선거의 중요도를 판단한 결과에 따르면, 가중치 기준으로 볼 때 ‘교육감 선거’, ‘대통령 선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의회의원 선거’ 순으로 나타났음. 가장 높은 가중치로 계산된 교육감 선거는 27.6%이고, 대통령 선거는 27.5%,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17.4%, 국회의원 선거는 14.4%, 지방의회의원 선거는 13.0%임. 따라서 청소년 전문가들이 상대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청소년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례로 활용될 수 있는 선거는 교육감 선거임.
- 본 조사에서는 중요도-성과 분석(IPA: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을 활용하여 정부에서 해결해야할 청소년 관련 문제와 그 실행(성과) 정도를 파악함. 상대적으로 중요도와 성과가 모두 높아서 유지 강화해야 할 영역에 해당하는 청소년 관련 문제는 존재하지 않음. 하지만 중요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성과를 보이는 중점개선 영역에는 총 4개의 청소년 관련 문제가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학교 폭력 문제, 청소년 자살 문제, 청소년 대상 성폭력 문제, 입시위주의 교육 문제가 그에 해당함. 이 문제들은 해결을 통한 성과 향상을 위해 중점적으로 개선해야할 것들임. 중요도와 성과 모두 낮은 수준에 해당하는 점진개선 영역에는 1개의 청소년 관련 문제로, 게임 중독

문제가 그에 해당함. 낮은 중요도에 비해 높은 성과를 나타내는 지속유지 영역에는 총 4개의 청소년 관련 문제가 포함되었으며, 학생인권 문제, 학교 밖 청소년 등 위기청소년 문제, 안전 문제, 선거권 연령 하향 문제가 그에 해당함.

- 결론적으로 청소년 전문가들의 판단 및 인식에 기초해서 볼 때, 특히 중점개선 영역에 해당하는 학교 폭력 문제, 청소년 자살 문제, 청소년 대상 성폭력 문제, 입시위주의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가장 시급함을 알 수 있음.
- 청소년 전문가 대상으로 이루어진 설문 분석 결과에 비추어 볼 때, 크게 4가지 점에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음. 첫째, 청소년의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기본 설문조사에 따르면, 정치참여 활성화에 다음의 요인들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시민성 함양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입시위주의 교육 제도, 학교에서 정치 및 인권 교육의 확대, 가짜뉴스 증가, 제도권 내 젊은 정치인 증가, 청소년의 주도적인 참여,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의 일상적인 정치참여 확대, 참여의 개방성 확보 등 전 과정에 걸쳐 청소년참여의 가치 및 원칙이 고려되는 정책 실천, 토의, 토론을 통한 의사결정 및 의사결정 참여 등이 그에 해당함.
- 둘째, 청소년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AHP 분석에 따른 중요성 판단 결과를 보면, 중요도가 높은 교육 시기는 청년기이며, 관련 기관 중에서도 학교 및 청소년시설의 중요도가 높고, 정치참여에 영향을 주는 대화 상대로는 부모의 중요성이 높으며, 정치행위 중에서는 자치활동의 중요성이 높음. 그리고 정치 참여 활성화 사례로 활용될 수 있는 선거 중에서는 교육감 선거가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체로 청소년과 보다 가깝고 친밀하고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대상(물)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성 역할을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음.
- 셋째, 최근에는 온라인 환경의 발달로 인해 많은 청소년들이 다양한 형태의

각종 온라인상의 청소년 미디어 환경에 노출되어 있지만, 정치참여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오프라인 상의 친밀성과 밀접성이 더 높은 대상인 부모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소년 정치참여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대화 상대의 중요성에 대한 설문에서는 부모가 가장 높은 중요성을 보인 반면, 온라인 유저는 가장 낮은 중요성을 보였다. 그리고 정치참여 활성화와 관련한 정치행위의 중요성 설문에서도 SNS 활동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청소년 정치참여 활성화에 온라인과 같은 형태로 형성되어 있는 각종 청소년 미디어보다는 부모의 영향력이 더 큼.

- 넷째, 청소년 정치참여 활성화는 청소년 관련 문제와 밀접하게 관계되며 일부 문제는 복합적 영향 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청소년 문제들이 선결될 필요가 있음. IPA를 활용한 전문가 설문 분석에 따르면, 특히 학교 폭력 문제, 청소년 자살 문제, 청소년 대상 성폭력 문제, 입시위주의 교육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음. 그 중요성에 비해 문제해결의 성과가 낮기 때문에 향후 이들 문제에 대한 해결 노력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물론 그 외 청소년 관련 문제들 역시 청소년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선결 과제로 인식하고, 구체적인 해결 성과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함.

4. 정책 제언

청소년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								
정책제언	정책방향	세부 정책대안	관련 정책추진체계					
			중앙	광역	기초	국책	산하	시설
유관법률 개정	1. 청소년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유관법률의 개정	1-1. (1안) 청소년기본법 개정 1-2. (2안)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	●	●	●	●	●	●
유스(Youth) 정치 아카데미 운영	2.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춘 '유스 정치 아카데미' 운영	2-1. (1안) 청소년사실의 (가칭) '유스 정치 아카데미' 운영	●	●				●
정치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3. 세대 간 소통의 정치문화 형성을 위한 '부모와 함께하는 정치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3-1. 부모와 함께하는 대한민국 정치 역사와 소양 교육 3-2. 부모와 함께 하는 정치 이슈 토론 3-3. 미디어를 활용한 세대 간 새로운 정치소통			●	●	●	●
지역사회 내 범 청소년 의회 구성 및 시범운영	4. 청소년 참여기구, 청소년의회 및 학생자치회 등 범 청소년 참여 기구 구성 및 시범운영	4-1. 범 청소년의회 구성 4-2. 범 청소년의회 시범운영 4-3. 범 청소년의회 확대운영		●	●			●
선거권 보호 및 투표율 제고	5. 선거권 보호 및 투표율 제고 방안 마련	5-1. 선거권 보호방안 마련 5-2. 투표율 제고를 위한 모의투표 프로그램 개발·운영	●					●

그림 1. 정책 제언 요약

- 첫째, 청소년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유관법률의 개정을 제안함. 우선 청소년 정책에 관한 기본사항을 담고 있는 청소년기본법에 청소년의 정치참여와 관련한 입법적 근거를 명시할 필요성이 있음. 이와 더불어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는 청소년활동진흥법에서 청소년의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입법적 근거를 체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청소년기본법의 제2조 1항, 제3조 3항을 개정하고, 청소년활동진흥법의 제7장을 제정하여야 함(정책제언의 신규대조표 참조).
- 둘째, ‘유스 정치 아카데미’ 운영을 제안함. 기존의 청소년 정치참여 활성화와 관련된 제도 시행에서 나타난 주요 문제점 중 낮은 정책 반영률은 청소년들의 정책 전문성이 낮다는 점에서 기인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이 정책과 관련된 기본 소양을 배양하는 것이 필요함. 따라서 청소년들의 정책제안이 정책에 반영되기 어려운 현상은 청소년들이 정책화 과정, 정책수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이와 관련된 기초교육이 부재하다는 점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음. 이에 일선 지자체와 청소년시설에서 ‘유스 정치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청소년들의 정치참여의 결과물이 정책화될 수 있도록 한다면, 제도의 형식적 운영이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유스 정치 아카데미’는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과정(의제설정, 사회문제 이해, 정책평가), 정책수단의 이해(정책유형과 정책과정의 갈등관리), 정책집행의 이해(예산의 집행, 결산, 결정) 등을 학습하고 활용함. 그 운영은 고양시 청소년 제안창작소를 참조할 만 함.
- 셋째, 부모와 함께하는 정치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을 제안함.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청소년의 정치의식 함양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가정이며 부모임. 따라서 청소년의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청소년과 부모 간 관계에 기초하여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함. 이에 대한 주요 정책 방향 중 하나는 세대 간 소통의 정치문화 형성을 위한 ‘부모와 함께하는 정치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함. 단순히 청소년의 정치 활성화 차원을 넘어 그것을 통해 세대 간 소통의 정치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함. 이를 위해 크게 3가지 세부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음. '부모와 함께 하는 대한민국 정치 역사와 소양 교육', '부모와 함께 하는 정치 이슈 토론', '미디어를 활용한 세대 간 새로운 정치소통'이 그에 해당함.

- 넷째, 지역사회 내 청소년 관련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정책제안 및 정책 수립에 이르기까지 대표성을 가지고 실제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범 청소년 의회의 구성과 운영이 필요함. 단지 개별 기구나 단체의 의견 주장에만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 내 주요 의제가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활동들을 전개함으로써 청소년의 삶의 질 제고와 민주적 참여의식을 고양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으며, 각각의 영역에서 분절적으로 운영되어 왔던 청소년 참여기구들이 통합적인 형태로 실제적 정치참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 청소년 관련 지역 사회 현안에 대해 보다 다각화된 시각과 문제 해결의 현실적·구체적 접근이 가능하며, 청소년 대표성 확보로 인한 의회 예산 요청 등 실제 의회 권한에 대한 가능성이 커질 수 있음.
- 다섯째, 2021년 4월 7일 지방보궐(서울 및 부산) 투표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 투표율은 37.5%에 불과해 전체 평균인 56.8%보다 현저히 낮게 관찰됨. 이에 모의투표 경험이 투표 참여를 독려할 수 있어 투표율 제고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줄 수 있으며, 학교정치교육 과정과 연계하여 청소년의 정치적 의사 형성 능력을 증진시키고 정치에 대한 관심도 제고 및 정치참여 동기를 높일 수 있음. 이에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 투표율 제고를 위한 모의투표 프로그램의 개선안을 마련해 볼 필요가 있음.

청소년 정치참여 실태와 활성화방안 연구

연구보고 21-R04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추진체계 6
3. 연구내용 8
4. 연구방법 11

II. 청소년 정치참여 선행연구 고찰

1. 청소년 참여활동과 정치참여에 대한 이론적 논의 19
2. 청소년 정치참여의 의의와 한계 22
3. 청소년 정치참여 활성화 요소와 시민역량 개발 24

III. 청소년 정치참여 법·제도 현황과 참여기구 운영 실태

1. 청소년 정치참여 근거로서 법·제도적 현황 32
2. 청소년 참여기구 43
3. 청소년의회 48

IV. 청소년 정치참여 해외사례 분석 및 시사점

1. 청소년 정치참여 해외사례 분석 개요 63
2. 영국 청소년 정치참여 사례분석 및 시사점 67
3. 독일 청소년 정치참여 사례분석 및 시사점 95
4. 미국 청소년 정치참여 사례분석 및 시사점 122

V. 청소년 정치참여 실태조사

1. 조사개요 163
2. 조사대상 164
3. 조사도구 개발 165
4. 표본설계 166
5. 조사결과 178
6. 실태조사 조사결과 요약 305

VI. 청소년 정치참여 면접조사(FGI)

1. 면접개요 321
2. 중학생 청소년 대상 면접조사(FGI) 결과 325
3. 고등학생 청소년 대상 면접조사(FGI) 결과 336

VII. 청소년 정치참여 활성화에 대한 전문가 AHP 및 IPA분석

1. 조사개요 349
2. 청소년 정치참여 활성화에 대한 기본 설문 결과 352
3. 청소년 정치참여 활성화에 대한 전문가 의견 AHP분석 .. 361
4. 청소년 정치참여 활성화에 대한 전문가 의견 IPA분석 .. 366
5. 전문가 의견 조사 시사점 376

Ⅷ. 정책 제언

- 1. 청소년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유관법률의 개정 383
- 2. ‘유스 정치 아카데미’ 운영 386
- 3. 부모와 함께하는 정치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392
- 4. 지역사회 내 범 청소년의회 구성 및 시범운영 396
- 5. 선거권 보호 및 투표율 제고 방안 마련 400

참고문헌 403

부 록 429

Abstract 447

표 목차

표 I-1. 전문가자문 개최 계획	12
표 I-2. 설문조사 개요	13
표 I-3. 면접(FGI) 조사 개요	14
표 I-4. 해외우수사례 집필 개요	15
표 I-5. 정책연구실무협의회 및 포럼 개최	16
표 III-1. 법령에 따른 청소년 연령	32
표 III-2. 청소년 참정권 관련 현황	38
표 III-3. 학생의 정치참여와 관련된 학생인권조례	41
표 III-4. 각 시·도교육청의 학생자치활동지원조례	42
표 III-5. 청소년 참여 기구와 정책	44
표 IV-1. 영국의 청소년 정치참여 관련 정책	70
표 IV-2. 영국의 청소년참여 활동 지원 예산1)	71
표 IV-3. 청소년의회 구성	74
표 IV-4. 영국 청소년의회 선거구별 의석 배정(2019년)	75
표 IV-5. 영국 청소년의회 정기회의와 청소년의원 활동내용	76
표 IV-6. 연도별 청소년투표를 통해 선정된 주제	79
표 IV-7. 유스보이스프로젝트(Youth Voice Project)	84
표 IV-8. 시민교육(Citizenship education) 과정	89
표 IV-9. 시민교육(Citizenship education) 수업내용	90
표 IV-10. 2013 독일연방의회선거 선거 참여 상황	102
표 IV-11. 정당 회원 가입 조건 현황	117
표 IV-12. 정당 가입자 중 청소년 및 청년 회원 비율(%)	118
표 IV-13. 주(state)별 지방선거 연령 하향의 법적 실행가능성	155
표 V-1. 설문조사 개요	163

표 V-2.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64
표 V-3. 중학교 지역×학년별 학생 수, 학교 수	167
표 V-4. 고등학교 지역×학년별 학생 수, 학교 수	167
표 V-5. 중학교 지역×학년별×성별 학생 수	168
표 V-6. 고등학교 지역×학년별×성별 학생 수	169
표 V-7. 학교급별 표본규모 및 예상 표본오차	171
표 V-8. 단순비례배분에 의한 표본크기 할당 : 학생 수	172
표 V-9. 학교급×지역구분별 표본 학교 수	173
표 V-10. 주요 조사문항 및 출처	178
표 V-11. 전반적인 정치적 현안에 대한 관심도	184
표 V-12. 주요 이슈(주제)에 대한 관심도_전체	186
표 V-13. 주요 이슈(주제)에 대한 관심도_변인 수준 별	188
표 V-14. 정치 분야별 관심도_전체	192
표 V-15. 정치 분야별 관심도_변인 수준 별	194
표 V-16. 정치 관련 이슈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대상_전체	198
표 V-17. 정치 관련 이슈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대상 _변인 수준 별	200
표 V-18. 정치적 견해 형성에 영향을 미친 요인_전체	203
표 V-19. 정치적 견해 형성에 영향을 미친 요인_변인 수준 별	205
표 V-20. 정치관련 정보 획득을 위한 미디어 이용_전체	209
표 V-21. 정치관련 정보 획득을 위한 미디어 이용 _변인 수준 별(표 계속)	210
표 V-22. 소셜미디어를 통한 정치경험_전체	213
표 V-23. 소셜미디어를 통한 정치경험_변인 수준 별	214
표 V-24. 선거 관심도_전체	217
표 V-25. 선거 관심도_변인 수준 별	218
표 V-26. 투표 의향_전체	221
표 V-27. 투표 의향_변인 수준 별	222
표 V-28. 선거권 연령 하향(만 17세)에 대한 찬반 의견	225
표 V-29. 교육감 선거권 연령 하향(만 16세)에 대한 찬반 의견	227
표 V-30. 학교 안팎 정치 활동 경험 유무_전체	229
표 V-31. 학교 안팎 정치 활동 경험 유무_변인 수준 별	231
표 V-32. 정치활동경험의 역량 강화 도움 여부_전체	234
표 V-33. 정치활동경험의 역량 강화 도움 여부_변인 수준 별	235
표 V-34. 학교 수업에서 경험한 정치관련 토론	238

표 V-35. 학교 수업에서 경험한 모의 선거_전체	239
표 V-36. 학교 수업에서 경험한 모의 선거_변인 수준 별	241
표 V-37. 학교 내 학생의견 수용정도_전체	243
표 V-38. 학교 내 학생의견 수용정도_변인 수준 별	245
표 V-39. 학생들이 느끼는 정치참여 활성화 교육의 필요성_전체	248
표 V-40. 학생들이 느끼는 정치참여 활성화 교육의 필요성 _변인 수준 별	250
표 V-41. 정치참여저해 요인_전체	253
표 V-42. 정치참여저해 요인_변인 수준 별	255
표 V-43. 정치참여 활성화 요인_전체	258
표 V-44. 정치참여 활성화 요인_변인 수준 별	260
표 V-45. 차기 대통령이 갖추어야 할 자질_전체	263
표 V-46. 차기 대통령이 갖추어야 할 자질_변인 수준 별	265
표 V-47. 차기 대통령이 발전시켜주길 희망하는 분야_전체	268
표 V-48. 차기 대통령이 발전시켜주길 희망하는 분야 _변인 수준 별	270
표 V-49. 현행 정부에서 해결돼야 할 청소년 관련 문제_전체	274
표 V-50. 현행 정부에서 해결돼야 할 청소년 관련 문제 _변인 수준 별	276
표 V-51. 공공(민간)기관에 대한 신뢰_전체	280
표 V-52. 공공(민간)기관에 대한 신뢰_변인 수준 별	282
표 V-53. 2021 지방보궐 선거(서울 / 부산) 참여 여부 _변인 수준 별	285
표 V-54. 2021 지방보궐 선거(서울 / 부산) 후보자 선택 기준 _변인 수준 별	287
표 V-55. 보궐 선거기간 동안의 경험_전체	289
표 V-56. 보궐 선거기간 동안의 경험_변인 수준 별	291
표 V-57. 2021 지방보궐 선거(서울 / 부산) 후보자 선택 기준 _변인 수준 별	294
표 V-58. 정책 신뢰도_전체	297
표 V-59. 정책 신뢰도_변인 수준 별	298
표 V-60. 정치효능감_전체	299
표 V-61. 정치효능감_변인 수준 별	301
표 V-62. 민주시민의식_전체	303
표 V-63. 민주시민의식_변인 수준 별	304

표 VI-1. 면접영역 및 면접내용	322
표 VI-2. 면접대상자(정치참여 경험이 있는 청소년)	324
표 VI-3. 면접대상자(정치참여 경험이 없는 청소년)	324
표 VII-1. 응답자 특성	350
표 VII-2. 청소년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교육 분야	353
표 VII-3. 학교 안팎에서 학생들의 정치참여를 저해하는 요인	354
표 VII-4. 학교 안팎에서 학생들의 정치참여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요인	355
표 VII-5. 청소년 정치참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적 이슈	356
표 VII-6. 청소년 정치참여 활성화에 중요한 최근 정치 환경	357
표 VII-7. 청소년 정치참여 활성화에 중요한 주요 요인	358
표 VII-8. 청소년 정치참여 활성화에 중요한 추진 전략	359
표 VII-9. 청소년 정치참여 활성화에 중요한 주요 교육내용	360
표 VII-10. 현행 정부에서 해결되어야 할 청소년 관련 문제의 중요성	369
표 VII-11. 현행 정부에서 해결되어야 할 청소년 관련 문제의 성과 ..	370
표 VIII-1. 청소년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유관법률의 개정	383
표 VIII-2. 청소년기본법 개정 예시	384
표 VIII-3.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 예시	385
표 VIII-4. '유스 정치 아카데미' 운영	386
표 VIII-5. 부모와 함께하는 정치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392
표 VIII-6. 지역사회 내 범 청소년의회 구성 및 시범운영	396
표 VIII-7. 선거권 보호 및 투표율 제고 방안	400

그림 목차

그림 I-1. 연구 추진체계 및 추진 단계별 내용	7
그림 III- 1. 청소년특별회의 운영과정	45
그림 IV-1. 독일 청소년의 자원적 참여 활동	104
그림 IV-2. 독일 12~25세 청소년의 직위 소지 참여 단체 및 협회 유형	106
그림 IV-3. 독일 연방 총선 연령별 투표 성향	119
그림 IV-4. 세계 주요 국가의 청소년 투표율(18~29세)	126
그림 V-1. 조사도구 개발절차	165
그림 V-2. 전반적인 정치적 현안에 대한 관심 정도	185
그림 V-3. 주요 이슈(주제)에 대한 관심 정도(전체)	186
그림 V-4. 개별 주제(이슈)에 대한 관심 정도(변인 수준 별)	190
그림 V-5. 정치 분야별 관심 정도(전체)	192
그림 V-6. 정치 분야별 관심 정도(변인 수준 별)	196
그림 V-7. 대상별 정치 관련 이슈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정도 (전체)	199
그림 V-8. 대상별 정치 관련 이슈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정도 (변인 수준 별)	201
그림 V-9. 정치적 견해 형성에 영향을 미친 정도(전체)	203
그림 V-10. 정치적 견해 형성에 영향을 미친 정도(변인 수준 별)	207
그림 V-11. 정치관련 정보 획득을 위한 미디어 이용 정도(전체)	209
그림 V-12. 정치관련 정보 획득을 위한 미디어 이용 정도 (변인 수준 별)	211
그림 V-13. 소셜미디어를 통한 정치경험 정도(전체)	213
그림 V-14. 소셜미디어를 통한 정치경험 정도(변인 수준 별)	215

그림 V-15. 선거 관심도 정도(전체)	217
그림 V-16. 선거 관심도 정도(변인 수준 별)	219
그림 V-17. 투표 의향 정도(전체)	221
그림 V-18. 투표 의향 정도(변인 수준 별)	223
그림 V-19. 선거권 연령 하향(만 17세)에 대한 찬성 비율	226
그림 V-20. 교육감 선거권 연령 하향(만 16세)에 대한 찬성 비율	228
그림 V-21. 학교 안팎 정치 활동 경험 비율(전체)	230
그림 V-22. 학교 안팎 정치 활동 경험 비율(변인 수준 별)	232
그림 V-23. 정치활동경험의 역량 강화 도움 정도(전체)	234
그림 V-24. 정치활동경험의 역량 강화 도움 정도(변인 수준 별)	236
그림 V-25. 학교 수업에서 정치관련 토론 경험 정도	238
그림 V-26. 학교 수업에서 모의 선거 경험 정도(전체)	240
그림 V-27. 학교 수업에서 모의 선거 경험 정도(변인 수준 별)	242
그림 V-28. 학교 내 학생의견 수용 긍정 정도(전체)	244
그림 V-29. 학교 내 학생의견 수용 긍정 정도(변인 수준 별)	246
그림 V-30. 학생들이 느끼는 정치참여 활성화 교육의 필요 정도(전체)	248
그림 V-31. 학생들이 느끼는 정치참여 활성화 교육의 필요 정도(변인 수준 별)	251
그림 V-32. 요인별 정치참여저해 정도(전체)	253
그림 V-33. 요인별 정치참여저해 정도(변인 수준 별)	256
그림 V-34. 요인별 정치참여 활성화 정도(전체)	258
그림 V-35. 요인별 정치참여 활성화 정도(변인 수준 별)	261
그림 V-36. 차기 대통령이 갖추어야 할 주요 자질(전체)	263
그림 V-37. 차기 대통령이 갖추어야 할 주요 자질(변인 수준 별)	266
그림 V-38. 차기 대통령이 발전시켜주길 희망하는 분야별 중요도(전체)	268
그림 V-39. 차기 대통령이 발전시켜주길 희망하는 분야별 중요도(변인 수준 별)	272
그림 V-40. 현행 정부에서 해결돼야 할 청소년 관련 문제 수급 정도(전체)	274
그림 V-41. 현행 정부에서 해결돼야 할 청소년 관련 문제 수급 정도(변인 수준 별)	278
그림 V-42. 공공(민간)기관에 대한 신뢰 정도(전체)	280
그림 V-43. 공공(민간)기관에 대한 신뢰 정도(변인 수준 별)	283

그림 V-44. 지방보궐 선거(서울 / 부산) 참여 비율(변인 수준 별) …	286
그림 V-45. 2021 지방보궐 선거(서울 / 부산) 후보자 선택 기준 (변인 수준 별) …	288
그림 V-46. 보궐 선거기간 동안의 경험(전체) …	290
그림 V-47. 보궐 선거기간 동안의 경험(변인 수준 별) …	292
그림 V-48. 2021 지방보궐 선거(서울 / 부산) 후보자 선택 기준 (변인 수준 별) …	295
그림 V-49. 정책 신뢰도 응답 비율(전체) …	297
그림 VII-1. 청소년들의 정치참여 교육의 시기적 중요성 …	362
그림 VII-2. 청소년들의 정치참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관별 중요성 …	363
그림 VII-3. 청소년들의 정치참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화 상대의 중요성 …	364
그림 VII-4. 청소년들의 정치참여 활성화와 관련한 정치행위의 중요성 …	365
그림 VII-5. 청소년들의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례로 활용 할 수 있는 주요 선거의 중요성 …	366
그림 VII-6. IPA 매트릭스 …	367
그림 VII-7. 청소년 전문가 대상의 전체 IPA 결과 …	371
그림 VII-8. 활동 분야 청소년 전문가 대상의 IPA 결과 …	372
그림 VII-9. 보호복지 분야 청소년 전문가 대상의 IPA 결과 …	374
그림 VII-10. 기타 분야 청소년 전문가 대상의 IPA 결과 …	375
그림 VIII-1. 정책 제언 요약 …	382
그림 VIII-2. 유관법률 개정안 …	384
그림 VIII-3. '유스 정치 아카데미' 교육 구성안 …	389
그림 VIII-4. 고양시 청소년 제안창작소 교육 …	391
그림 VIII-5. 부모와 함께하는 정치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안 …	394
그림 VIII-6. 지역사회 내 범 청소년의회 구성 …	398
그림 VIII-7. 청소년 모의투표 기대효과 …	402

○———— 제1장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 연구추진체계
- 3. 연구내용
- 4. 연구방법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으로서 지닐 수 있는 중요한 권리 중 하나는 사회 공동체 일원으로서 국가 정책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개진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정책의 방향에 대해 일정 정도의 정책적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인간을 “정치적 동물, 즉 공동체적 혹은 사회적 존재”로 규정한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국가라는 공동체 안에서 권리인 동시에 의무로서 정치적 행위를 수행하는 존재이며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회적 활동의 주체라 할 수 있다(강옥선, 2019: 8). 정치적 행위의 주체로서 인간은 국가 정책에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공동체가 지향하는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고 이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는 근본인 것이다. 즉 정치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국민은 국가의 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하여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그 민주적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때 실질적 시민권의 의미를 지닐 수 있는 것이다. 시민으로서의 국민이 국가라는 사회 공동체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고 그 과정을 민주적으로 보장 할 수 있을 때 권리로서 정치 행위는 그 정당성을 확보 할 수 있다.

그러나 한동안 청소년은 소극적인 보호의 대상으로 인식되었으며 시민성에 기반한 직접 정치에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는 매우 제한된 실정이었다. 오랜 기간 동안 청소년은 사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정치적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1) 제1장은 모상현 선임연구위원과 최용환 연구위원이 공동으로 집필하였다.

기회가 배제되었기 때문이다. 시민으로서의 권리인 정치적 참여에 청소년을 배제시키는 것은 실질적 시민권의 제한이라 할 수 있다. 시민으로서 그 권리를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은 청소년 당사자와 관련된 주요 정책이나 정책 사업에서의 소외를 가져오며 국가 공동체 내에서 자신과 관련된 정책에 참여할 권리를 갖지 못함으로 책임 있는 시민으로서의 성장할 수 있는 기회조차 제공받지 못하는 것이다. 이는 시민으로서의 청소년의 성장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청소년의 성장 과정에서 시민권에 기반하여 형성·발달되는 민주시민역량은 한 국가의 민주주의의 실현과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며, 일반 청소년의 시민권에 대한 인식은 필수 불가결한 조건인 것이다. 일부 제도적 법령(청소년 기본법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등)을 근거로 청소년의 참여에 대한 뒷받침을 마련하고 사회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제 정치행위로서의 참여는 여전히 요원한 셈이다.

최근 청소년의 정치참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청소년은 정책의 주요 대상이자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의 정책적인 변화를 주도하고 이끌어 낼 수 있는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모상현, 2019). 과거의 수동적 존재로서 보호의 대상으로 간주되었던 청소년은 자신을 둘러싼 정치적 현안과 사회적 이슈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필요한 정책을 직접 제안할 수 있는 시민성을 지닌 존재로 인정받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2019년 12월 공직선거법이 개정으로 인한 선거연령 하향은 청소년의 정치적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제도적 틀 속에서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이미 선거권 18세 하향 조정 이전부터 청소년의 참여는 다양하게 공론화되었으며 이는 참여의 주요한 발달궤적을 통해 살펴볼 수 있으며 정치참여의 근거로서 의미가 있다.

UN 및 UNESCO 등 국제기구에서는 청소년을 사회발전의 주체이며 독립된 인격체로 사회적 책무성을 지닌 존재로 인정하고 있으며 시민적 관점에서 이러한 주체성은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 및 기관 등에 영향을 미치는 참여를 통해 드러나며(최창욱, 전명기, 2013: 3), 청소년의 참여를 규범적으로 보장할 필요성과 이를

권리로서 존중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이 필요하다고 역설되어 왔다(윤민중, 정은진, 정건희, 2016: 3). 유엔아동권리협약(CRC)의 ‘참여’는 아동·청소년의 삶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고 존중받을 권리로서 규정되어 있으며(동협약 12조), 이는 사회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영향력을 동등하게 행사할 권리(Wringe, 1981, 최창욱, 김승경, 2010: 12 재인용)로서 스스로의 의사결정을 통해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성취해 나가는 자기 결정권에 기반 한 권리로 이해될 수 있다(김영지, 김희진, 2015: 42).

우리나라에서는 1998년 시행되었던 ‘제2차 청소년육성 5개년 계획’과 더불어 청소년참여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었으며(최창욱, 문호영, 김정주, 2016: 29), 2003년 개정된 「청소년기본법」을 통해 청소년 참여의 법적 근거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이후 청소년 정책의 주요 사업 추진방향으로 일환으로 청소년참여 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특별회의 등이 제도화됨으로서 청소년 스스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현재까지 제공받고 있다(조혜영, 최창욱, 2008; 윤민중 외, 2016: 3 재인용).

청소년은 자신과 관련된 주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소년의 참여가 필수불가결하며, 이는 직접적으로 일상생활에 관련된 정책에 영향을 미치거나 교육제도 또는 작업환경과 관련된 사회적 참여유형이나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데 목표를 둔 매우 적극적인 행동인 정치참여 행위로도 나타날 수 있다(천정웅, 1997: 20-21). 청소년의 참여는 청소년 활동의 핵심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에 청소년 참여, 특히 정치참여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봄으로서 청소년 당사자의 정책 참여기회의 제공을 확장해 나가고 보다 적극적 행위로서의 정치참여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정치참여 현안과 실태를 파악하여 정치참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살펴보고, 청소년의 정치참여가 민주시민 역량 증진과 함께

다양한 청소년의 발달과 역량 증진에 어떻게 기여하고, 적극적 참여개념으로서의 청소년 정치참여가 청소년 정책 전반에 미칠 수 있는 미래적 영향력과 이를 법·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방향에 대해 고찰하였다.

2. 연구추진체계

본 연구의 추진체계는 ① 청소년 정치참여에 대한 이론적 논거 정립을 위하여 정치참여의 의미와 의의를 청소년의 참여적 관점에서 파악하기 위한 선행연구 고찰을 진행하였다.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정치참여의 개념적 이해, 청소년 참여의 의의와 한계, 그리고 현행 정치참여 정책의 현황을 점검해보고, 청소년 정치참여가 추구해야 할 기본 방향과 연구 필요성과 추진전략을 설정했다. ② 청소년의 정치참여를 법·제도적인 차원에서 보장하고 정책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토대가 되는 청소년기본법, 청소년진흥법 및 초·중등교육법, 공직선거법과 해당 조례 및 규칙 등에서 관련 조항을 살펴보고, 학생 정치참여의 정당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기구로서 청소년 참여기구 및 청소년의회의 운영 등의 운영 현황과 사례를 개괄하여, 향후 정책개선 과제로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③ 이미 청소년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법 제도적인 제도적 틀을 갖추고 이를 지원하고 있는 영국, 독일, 미국 등 해외사례를 살펴보고, 국가 별 정치참여 활성화 현황 및 제도적 특성에 따른 특성을 파악 하여 추후 정책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④ 청소년의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및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여 다양한 조사영역에서 일반 청소년 대상 전국단위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정책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⑤ 실태조사와 함께 정치참여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과 참여경험이 없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치참여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내외적 요인에 대한 심층적 탐색과 활성화/비활성화 요인 등을 파악하기 위한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⑥ 청소년 현장 전문가

대상 실태조사 및 분석(AHP/IPA)을 실시하여, 정책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⑦ 최종적으로 상기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 및 정책방안을 정교화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추진체계 및 추진 단계별 내용 다음의 [그림 1-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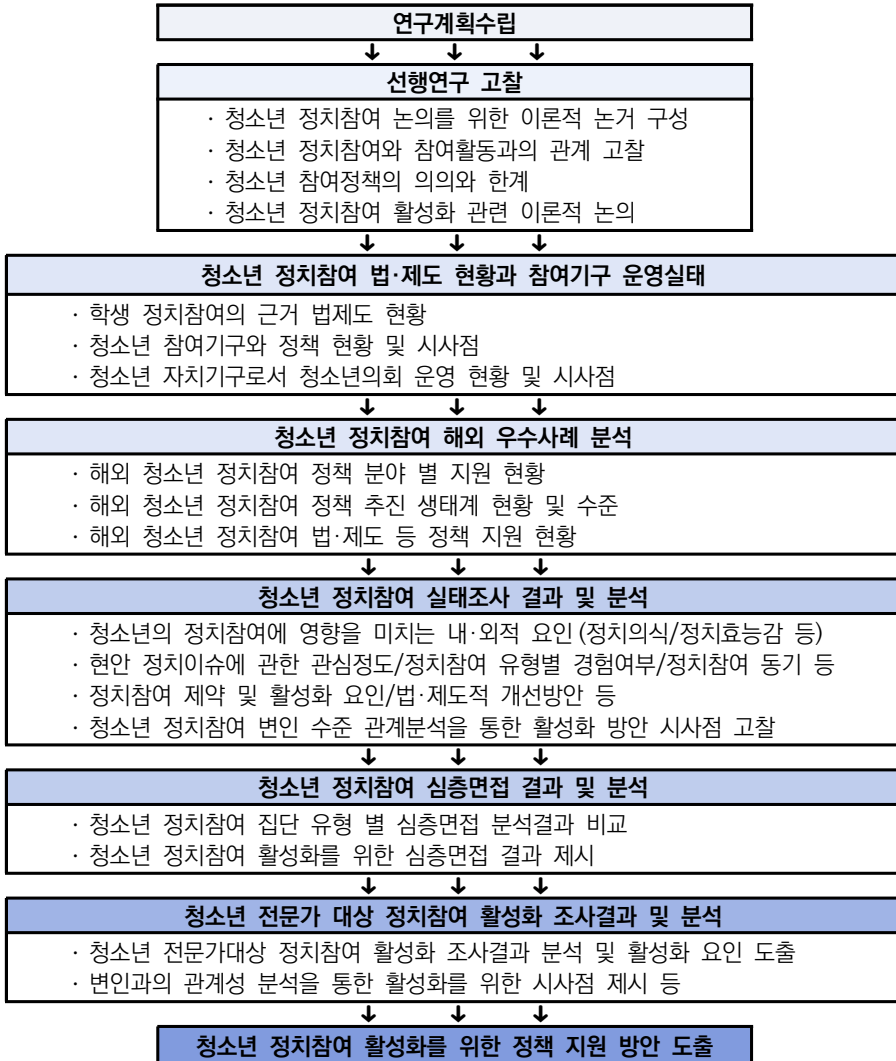


그림 1-1. 연구 추진체계 및 추진 단계별 내용

3. 연구내용

1) 청소년 정치참여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및 문헌고찰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정치참여에 대한 이론적 논거 정립을 위하여 정치참여의 의미와 개념을 청소년의 참여적 관점에서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청소년 정치참여와 기존의 제도적 틀 안에서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던 청소년 참여활동과의 차이점 및 그 의의를 고찰하고, 권리로써 참여활동이 지닌 관련 참여정책을 개괄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그동안 노정 되었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였다. 무엇보다 정치참여의 토대로서 청소년 참여활동의 근거형성과 추후 청소년 활동 및 학교 자치활동 등을 통하여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학교 안팎에서의 청소년 참여활동을 바탕으로 청소년 정치참여 활동이 지향해야 할 기본 방향과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도출하였다.

또한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청소년의 정치참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심리·법제도를 포함한 청소년 내외적 요인을 다각적으로 고찰하고 여기에서 추출된 요인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청소년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한점과 개선방안을 고찰하였다. 청소년의 정치참여의 역사가 깊고 현재에도 활발하게 정치참여 이루어지고 있는 국외 우수 사례를 고찰하기 위한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하기 위한 근거를 제시하였다.

2) 청소년 정치참여 법·제도 및 참여기구 현황 분석

청소년의 정치참여의 근거인 청소년기본법, 청소년진흥법 및 초·중등교육법 등에서 명시하고 있는 관련 조항과 선거권 하향 조정 등의 사안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및 지자체 학생인권, 학생자치, 학교자치 조례 등의 분석을 통해 학생 정치 참여의

근거와 정당성을 확보하며, 청소년 참여기구 및 청소년의회의 운영 등의 운영 현황과 사례를 개괄하여, 향후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선 과제로 제안하였다.

3) 청소년 정치참여 실태 및 현황 분석

청소년의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및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정치참여 일반 현황을 파악하고, 정치참여에 내·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한계점, 이를 증진 할 수 있는 활성화 요인을 확인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정치참여 실태 파악을 위해 전국의 중고등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내용으로는 정치의식, 정치효능감, 사회적 현안 이슈에 대한 관심정도, 정치참여 등 사회참여 경험여부, 정치참여 참여 및 비참여 동기, 정치참여방식, 정치참여 제약 및 활성화 요인, 법·제도적 지원 방안에 등이 포함되었다. 또한 설문조사 내용에 근거하여, 청소년 참여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이해와 다각적인 분석을 위해 심층 면접지를 개발하고, 심층 분석을 실시하였다.

4) 청소년 정치참여 관련 청소년 대상 면접 분석

면접조사는 정치참여 혹은 사회 참여활동 경험 청소년과 정치참여 비경험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FGI)을 실시하여, 양적연구에서 다루기 어려운 내용을 포함하고 청소년의 정치참여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내외적 변인에 대한 심층적 탐색과 제도적 제약, 활성화 요인 등을 파악하여 청소년들의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도출하였다. 본 면접조사는 청소년 특별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 및 청소년의회와 청소년시설(운영 혹은 자치위원회) 등 청소년

참여기구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거나, 학교 내 자치회 활동 및 자발적으로 정치참여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과 정치참여 비경험 일반 청소년 등으로 구성된 2개 집단을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을 하였다.

5) 청소년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현장 전문가 의견 분석

청소년 시설, 학교 혹은 단체 등에서 청소년 대상 참여사업 및 참여관련 프로그램 등을 운영했거나 직간접적으로 참여(권리교육 등) 운영과 관련이 있는 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청소년 정치참여 활성화 요인, 참여확대를 제약하는 요인 및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등이 무엇인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전문가 조사를 실시하였다. 청소년 지도사 및 교사 등 현장 전문가를 주요 대상으로 하여 조사를 진행하였고, 이외에 다양한 청소년 유관 분야의 영역에서 현장 실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6) 청소년 정치참여에 대한 해외사례 분석

청소년 정치참여 해외사례 중 대표적인 우수 사례를 선별하여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청소년의 정치참여 해외사례는 해당 국가의 청소년 정치참여 현황 및 실태, 정치 생태계를 포함한 청소년의 정치참여 활동환경, 활성화를 위한 활동 및 교육 등의 지원 방안 및 법·제도화 체제 방안 등을 중심으로 소개하였다. 해외사례 선정 기준은 선행연구 고찰, 해외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선정 기준을 정하였고, 우리나라 청소년 정치참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당 국가별 특성에 부합하는 사례를 최근 동향을 반영하여 선정하였다. 해외사례 분석을 통해 청소년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해외의 법·제도적 운영 체계, 활성화를 위한 정치권 및 지역사회 지원체계, 자발적 정치참여 현황과 현안문제 대응을 위한 정치참여 참여

방식 및 청소년의 성인기 이행과정에서의 그 성과와 의의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청소년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7) 청소년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 방안 제시

청소년 대상 실태조사와 심층 면접 등을 바탕으로 청소년의 정치참여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 전문가 조사결과를 통해 파악된 청소년 정치참여 활성화의 제약요인과 추진요인 및 자문가 자문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청소년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가늠해 보고 이를 구체적인 정책 및 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4. 연구방법

1) 문헌연구

청소년 정치참여 관련 이론적 배경 검토, 정치참여의 의미와 한계, 제도적 기구로서 진행되어 왔던 청소년 참여활동의 성과와 한계 및 확장 가능성, 학교 안팎에서의 정치참여 동향, 청소년 정치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내외적 구성 요인, 해외 우수사례 선정과 수집, 청소년 및 전문가의 정치참여 실태파악을 위한 설문도구 및 청소년 대상 면접도구 개발 등을 위한 문헌연구를 실시하였다. 우선적으로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정치참여의 개념적 이해, 청소년 참여의 의미와 한계, 그리고 현행 정치참여 정책의 현황을 점검해보고, 청소년 정치참여가 추구해야 할 기본 방향과 연구 필요성과 추진전략을 설정하였다. 이를 토대로 연구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연관 주제로 기 수행된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해외 우수사례 선정을 위한 기준제시 및 조사도구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또한 청소년의 정치참여의 근거가 되는 청소년기본법, 청소년진흥법 및 초·중등 교육법, 공직선거법 및 지자체 학생인권, 학생자치, 학교자치 조례 등의 문헌 및 법령을 비교 분석하고, 청소년 참여기구 및 청소년의회의 운영사례 및 그 현황을 파악하여 정책적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였다.

2) 전문가 자문

청소년의 정치참여 활성화 및 제약 요인 파악, 청소년 정치참여 동향 및 법·제도 개선을 통한 활성화 방안, 청소년 및 전문가대상 설문도구 개발, 청소년의 정치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방안 도출 등을 목적으로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하였다. 청소년 시설, 학교 혹은 단체 등에서 청소년 참여사업 및 참여관련 프로그램 등을 운영했거나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현장 전문가 및 유관 연구 수행 경험이 있는 학계 전문가,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 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 등 전문가를 중심으로 자문회의를 실시하였다. 자문회의는 국내외 정책 동향, 해외사례 파악을 위한 기준 선정, 실태조사 및 심층조사 실시를 위한 설문 내용 개발 및 정치참여 제약요인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지원방안 등을 중심으로 논의되며, 무엇보다 청소년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 방안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다.

표 1-1. 전문가자문 개최 계획

횟수	자문영역(내용)	자문진	비고
1차	연구추진 방향 설정 자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관 학계 전문가 • 청소년 참여활동 관련 사업 등 운영경험이 있는 현장 전문가 •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 등 	-
2차	국내외 청소년 정치참여 정책동향 및 해외 정책 우수사례 자문		
3차	설문조사 도구개발 자문(조사내용 타당성 검토 등)		
4차	유관 조사 결과 간 연계성 및 타당성 자문		
5차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 자문		

3) 양적 연구

전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치참여 일반현황, 정치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긍정 및 제약요인과 활성화 증진 방안 등을 확인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내용은 정치의식, 정치효능감, 사회적 현안이슈에 대한 관심정도, 정치참여 등 사회참여 경험여부, 정치참여 참여 및 비참여 동기, 정치참여 방식, 정치참여 제약 및 활성화 요인, 법·제도적 지원 방안 등에 포함된다. 추가적으로 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정치참여 활성화 요인, 참여확대 제약 요인 및 개선 방안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 및 AHP/IPA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분석은 영역 및 문항 별 실태분석과 함께, 청소년의 정치참여가 청소년 시민의식 등 발달과정에 미칠 수 있는 효과성 파악을 위해 유관 변인과의 관계 분석도 실시하였다.

표 1-2. 설문조사 개요

주요 요소	내용	비고
모집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전국의 중·고등 청소년 • 청소년 관련 사업 경험이 있는 현장 전문가 	
표집 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중·고등학교 • 본원 전문가 인력풀 등 	
표본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고등학교 청소년 각 1,500명 총 3,000명 내외 • 현장전문가 300명 내외 	실태조사 AHP / IPA
표집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층화다단계 집락표집 • 할당표집 	
조사 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년 5~8월 	
통합조사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대상 (참여) / 전문가 대상 (참여안함) 	

4) 질적 연구

청소년 참여기구가 학교 자치회 및 의회에서 활동 경험이 있거나, 자발적으로 정치참여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과 참여경험이 없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정치참여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내외적 요인에 대한 심층적 탐색과 제도적 제약과 보완점, 활성화 요인 등을 파악하기 위한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질적 연구를 위한 면접대상자는 학교급별로 중학생 10명, 고등학생 1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정치참여 경험 유무에 따라 각 5명씩 4개의 모둠 총 20명의 표본을 선정하였다.

표 1-3. 면접(FGI) 조사 개요

주요 요소	내용	비고
참여자 수	• 총 20명 내외 (중·고등학교×참여/비참여 집단별 각 5인)	
참여자 유형별 특성	• 청소년 정치참여 활동 경험 청소년 • 정치활동 비참여 청소년	
면담방식	• 반구조화 된 방식으로 진행된 소집단 FGI 면담진행	
면담 시간 및 횟수	• 1회 1시간 30분 내·외로, 각 집단별 1회 실시	
면담자료 기록방식	• 녹취 후 전사	
면담 시기	• 2021년 6~8월	
면담자	• 연구진 및 관련 전문가	

5) 해외사례 조사

청소년 정치참여 해외사례 중 대표적인 우수 사례를 선별하여 사례분석을 하였다. 해외사례는 해당 국가의 청소년 정치참여 현황 및 실태, 정치 생태계를 포함한 청소년의 정치참여 환경 활성화를 위한 활동 및 교육 등의 지원 방안 및 법·제도화 체제 방안 등을 중심으로 소개하고, 우리나라 청소년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방안에 반영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청소년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틀을 이미 갖추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시·지원하고 있는 해외사례를 살펴보고, 국가별 특성을 반영한 정치참여 활성화 현황 및 제도적

특성에 따른 그 장단점을 파악 하는 것은 추후 정책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각국의 특성을 파악하여 우리나라 청소년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발을 위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해외사례로는 전통의 의회 중심의 청소년 참여활동을 통한 청소년 참여 활성화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영국, 비판적 관점에서 법·제도화된 틀 안에서의 참여와 청소년 스스로 참여 역량 제고 사이에서 담론 중심으로 문제를 시각화하는 있는 독일, 다양한 영역에서 청소년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기관별 유기적인 네트워크 체계가 강점인 미국 등 세 국가를 선정하였다.

표 | -4. 해외우수사례 집필 개요

주요 요소	내용	비고
선정국가	• 우리나라 청소년 정치참여 활성화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영역별 특성이 뚜렷한 사례를 포함하고 있는 국가 (영국, 독일, 미국)	
내용	• 해당 국가 청소년 정치참여 현황 및 실태, 정치참여 생태계 정치참여 활성화 지원 방안 및 법·제도화 체제 방안	
방법	• 해당 국가 (청소년) 정치참여 전문가를 위촉하여 수행	
시기	• 2021년 4 ~ 8월	

6) 정책연구실무협의회 및 정책포럼

청소년 정치참여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 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 및 시·도교육청 담당자 및 청소년 참여 활동의 주요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와 정책연구실무협의회를 실시하였다. 이는 청소년의 정치참여 제약요인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지원방안 등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지원방안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다. 또한 본 연구과 관련하여 ‘청소년 정치참여 현안과제 및 활성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국회, 선거연수원 및 현장전문가 및 청소년 등이 참여할 수 있는 포럼을 개최하였다.

표 1-5. 정책연구실무협의회 및 포럼 개최

	주요 내용	참석대상	비고
협의 회의	1회 - 청소년의 정치참여 최근 동향 - 학교 안팎 청소년의 정치참여 제약 요인 및 활성화 방안	여가부, 교육청, 청소년전문가 및 연구진	
	2회 - 청소년 및 활동가 대상 조사결과에 따른 정책 과제 개발 및 활용방안 - 학교 안팎 청소년 정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비제도적 지원방안	유관 부처, 지자체, 교육청 청소년전문가 및 연구진	
포럼	-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지원방안	국회, 선거연수원, 관련 학회, 청소년전문가, 청소년 및 연구진	

○ — 제2장 청소년 정치참여 선행연구 고찰

- 1. 청소년 참여활동과 정치 참여에 대한 이론적 논의
- 2. 청소년 정치참여의 의의와 한계
- 3. 청소년 정치참여 활성화 요소와 시민역량 개발

1. 청소년 참여활동과 정치참여에 대한 이론적 논의

과거의 우리나라 청소년 교육은 입시에 편중되어 청소년의 사회참여 활동 및 시민역량 함양 등을 위한 교육이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청소년 인권 및 기본권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사회적 주체로서 청소년이 재조명되면서 교육현장에서도 시민성 함양을 위한 사회참여 활동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청소년의 사회참여 활동이 시민의식 형성 및 증진을 촉진한다는 연구들을 통해 청소년의 사회참여활동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Youniss와 Yates(1999)에 따르면 청소년기에 경험하는 자원봉사활동 등의 사회참여 활동이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성인기의 시민 참여를 증진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것으로 나타났다. Cheung 외(2004)는 홍콩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여 사회성의 변화를 추적하는 연구를 통해 자원봉사, 지역사회봉사 및 리더십 훈련과 같은 사회개발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민주주의 의식과 시민의식에 기여하였다는 사실을 밝혀냈으며, Albanesi, Cicobnani, Zani(2007)의 연구에서도 청소년기에 다양한 참여활동 경험이 청소년의 공동체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을 증명하였다.

이용교와 이증섭(2010)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사회참여 활동이 많을수록 청소

2) 제2장은 모상현 선임연구위원과 최용환 연구위원이 공동으로 집필하였다.

년의 시민성이 높아지고, 친사회성 및 사회적 신뢰감이 시민성의 제고에 매개가 될 수 있음을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전지원과 전자배(2018)는 3천여 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종단연구 자료를 토대로 연구대상을 참여활동 수준에 따라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이를 차이검증으로 분석한 결과, 청소년기의 교내·외 참여활동 경험이 이후 초기 성인기에서의 시민의식과 정치참여의 차이로 이어지는 것을 실증적으로 밝혀냈다. 조호운, 조성환, 김영희(2012)의 연구는 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이 시민의식과 청소년의 자가지각을 긍정적으로 형성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사실과 더불어 또래관계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실증분석을 통해 밝혀냈다.

봉사활동 이외에도 청소년의 사회참여 활동은 연구마다 다양한 기준으로 측정되었는데, Menezes(2003)의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인 6개 유럽 국가의 청소년 사회참여 활동을 자원봉사활동뿐만 아니라 스카우트, 종교 관련 단체 활동 등의 교내/외 활동, 시민단체 활동까지 모두 포함하여 측정하였으며 이러한 학생들의 참여활동이 시민의식 함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와 함께 참여 빈도가 높을수록 반드시 영향력이 비례적으로 제고되는 것이 아니라 참여 경험의 질(quality)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개인의 권리 및 사회적 다원주의를 촉진하는 차원에서 개인적 통합의 기회를 중요시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한은영과 김미강(2013)은 청소년의 참여활동 중 봉사활동, 교류활동, 환경보존활동을 사회참여 활동으로 정의하고 사회참여 활동과 공동체 의식 간의 관계에 있어서 거주 지역에 대한 인식이 지니는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는데, 분석 결과 청소년이 참여활동을 통해 참여활동 장소인 거주 지역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며 이를 통해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허인숙과 이정현(2004)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사회참여활동을 학교에서의 사회참여활동으로 보다 좁게 제한하고, 사회 정규수업 시간에서의 사회참여 활동을 평가에 적극 반영하는 학교와 소극적으로 시행하는 학교, 그리고 사회참여 활동을

일체 시행하지 않는 학교 등 세 개의 군으로 구분하여 비교하였는데, 비교분석 결과 4개의 시민성 영역(관용의식, 민주적 의사결정 태도, 공동체 의식, 자발적 참여 의식)에서 모두 사회참여 활동 변인이 정의 관계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혀냈다.

청소년의 사회참여 활동은 청소년의 시민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민교육의 연장선상에서 그 중요성이 조명되고 있으며, 교육 현장에서도 민주시민교육을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방향으로 시행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존의 시민교육이 교과 지식 중심의 인지적 접근에서 이루어졌다면, 현재는 청소년에게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관점에서 ‘참여’의 가치를 강조하고, ‘참여’라는 도구를 활용하여 ‘참여’라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접근이 활용되고 있다(이봉민, 2014). 이에 따라 청소년의 사회참여 활동 및 시민교육은 성인기의 정치참여 의사를 향상하는 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청소년으로서의 정치참여도 가능하게 하는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데에서 연계성을 찾을 수 있다.

Checkoway, Allison, Montoya(2005)는 ‘참여’를 자신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하는 활동이라고 정의하였으며, 청소년의 참여 단계를 8단계로 구분하여 참여 모델을 제시하여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가 가장 높은 단계인 ‘실질적 권한 부여’의 수준이 되어야 함을 보였다. 황여정(2017)의 연구 또한 청소년 주도성, 실질적인 권한 부여(의사결정과정 공유 및 실질적 영향력 행사) 등을 통해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여 청소년 참여 기회의 확대, 청소년참여에 대한 인식 개선 등의 환경이 조성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이를 제도화할 수 있는 참여 모형을 구축하였는데, 이는 청소년 ‘참여’의 가치를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청소년의 참여는 개인적으로는 잠재역량을 키우고 사회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는 청소년 정책에 참여할 수 있어 정책에 기여하고 청소년 인권 신장 및 건전한 민주시민 육성이라는 차원에서 중요성을 갖는다(조금주, 2017). 이러한

의미에서 청소년의 참여는 정치참여의 연장선상에서의 분석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천정웅(1997: 20-21)은 정치적 의미에서의 참여와 사회적 의미에서의 참여가 명확히 구분된다고 하였는데, 천정웅(1997)은 Castenmiller(1997)의 구분을 인용하여 사회적 참여가 '공식적, 정치적 과정보다는 직접적으로 일상생활에 관련된 정책에 영향을 미치거나 교육제도 또는 작업환경에 개입하는 것과 관련'되는 것에 반해, 정치적 참여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데 목표를 둔 시민의 매우 적극적인 행동'으로 정의하였다고 밝혔다. 이를 근거로 청소년의 참여활동 또한 사회참여 활동 및 보다 적극적인 참여로서의 정치참여가 구분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모상현(2019)의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소년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청소년이 93.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의 정치참여 욕구가 매우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연구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정책수요자인 청소년의 의견수렴을 제도화하여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구체적 방안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민교육을 강화하여 스스로 권리를 인식하고 참여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청소년이 자기주도성을 높일 수 있도록 활동방향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2. 청소년 정치참여의 의의와 한계

청소년의 참여에 대한 중요성 및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이 강화됨에 따라 청소년 스스로도 정치참여 욕구가 증가하고 능동적으로 정치참여에 임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Easton과 Dennis(1965)는 개인이 정치적 주체인 시민으로서 갖추는 정치적 성향 및 가치의 규범을 정치사회화라고 정의하였으며, 청소년기는 정치사회화가 시작되는 중요한 시기라고 보았다. 따라서 청소년의 정치참여는 구조적으로 보호 및 보장되어야 하는 중요한 권리로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 청소년이

정치참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투표, 후원, 선거운동 등의 전통적 정치참여 방법과 집회, 시위, 불매/구매운동 참여 등의 간접적인 정치참여 방법이 있다(민영, 노성중, 2011). 그러나 현행 제도에 따르면 10대 청소년에게는 참정권이 있어 제도적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 및 사회제도에 대한 의견 개진이 시위나 집회참여와 같은 대안적 참여형태가 주로 나타나고 있다(민영, 노성중, 2011). 이러한 정치참여의 구조적·제도적 한계에 대한 문제점은 최근에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으며, 정치적 이슈로서 대대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창호(2017)의 연구에서도 선거연령 하향에 대한 논의와 함께 고등학생의 정치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짐에 따라 청소년의 정치참여 욕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청소년의 65.9%가 현행 투표연령을 만 18세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응답하여 정치참여에 대한 욕구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 보완과 함께 교육 현장에서의 민주시민교육 제도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

정희옥과 정승희(2018)의 연구도 청소년의 정치의식 수준을 분석하였는데, 청소년의 분석 결과 투표 참여에 대한 욕구는 높은 반면 정치 관심도, 정치 신뢰도를 비롯한 전반적 정치참여 의사 수준이 국제시민교육연구(ICCS) 데이터에 포함된 10개 국가의 평균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치참여 의사와 정치신뢰도에 대한 부정적 응답이 높다는 점에서 청소년의 정치의식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학교급별 맞춤형 정치교육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이윤주와 정상우(2018)의 연구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으로 다문화교육 및 세계시민교육과 연계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이 사회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등 적극적인 정치참여 교육 방안에 대해 제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함양하는 것이 청소년의 정치참여 활성화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청소년 정치참여 관련 선행 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청소년의 정치

참여는 민주시민 육성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현재 청소년의 연령에 따른 투표권 제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 부족, 그리고 정치교육체계의 미비 등에 대한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3. 청소년 정치참여 활성화 요소와 시민역량 개발

오늘날의 청소년은 과거보다 인터넷을 통해 사회적·정치적 참여가 자유로워짐에 따라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청소년의 의견 개진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재신과 이영수(2009)는 개인의 정치참여가 다양한 요인(정치적 불만, 정치 관여도, 정치정보 습득 양과 경로)에 의해 종합적으로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는데, 이는 정치정보 습득이 방대해지고 습득 경로가 다양해지는 오늘날의 인터넷 확대 현상과 맞물려 청소년의 정치참여가 더욱 활성화되는 근거가 된다.

Besley(2006)는 기존의 유흥거리로서의 TV 시청이 정치참여를 감소시키는 반면, 인터넷은 신문의 영향력을 넘어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정치참여를 제고한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Collin(2008)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정치 참여와 인터넷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는데, 단순히 정책 참여 수단으로서의 인터넷 활용을 넘어 청소년의 정치적 정체성을 형성하고 청소년 정책 참여를 실현하는 플랫폼으로서 인터넷의 역할이 확장되었음을 주장하였으며, 또한 인터넷이 기존의 전통적인 정책 참여의 장벽을 해결하였다는 점에서도 높이 평가하였다.

민영과 노성중(2011)의 연구에서는 ‘정치적 정체성’이 형성되는 청소년기의 인터넷 커뮤니케이션이 청소년의 정치참여와 정치의식(정치적 가치 및 시민의식)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실증분석을 통해 증명하였으며, 특히 한국과 미국의 청소년을 비교하여 영향력의 차이를 확인하고 이러한 차이가 어떠한 요인에서 기인하는지를 밝혔다. 분석 결과, 인터넷의 이용 동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인터넷의 정치사회화 효과가 다르며, 청소년의 정치참여에 인터넷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특히 한국의 청소년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미국의 청소년이 오락적 인터넷 이용에 더 관용적이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즉, 한국의 청소년이 인터넷을 정보적, 정치적으로 이용할 때 인터넷의 정치참여 영향력이 증진된다는 것이다. 이렇듯 청소년의 인터넷 미디어에 대한 접근성의 향상은 정치참여를 촉진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또 다른 주요 요인으로는 청소년의 정치적 관심 및 정치효능감을 들 수 있는데, 앞서 살펴 본 이재신과 이영수(2009)의 연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치에 대한 관심 및 관여의 정도가 높을수록 정치참여가 활발해지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이창호와 모상현(2012) 또한 청소년의 정치참여가 인터넷, 소셜미디어 등 뉴미디어의 영향력이 큰 만큼, 탈물질주의가치(소속감, 자기표현 등) 또한 정치 및 사회적 참여를 활성화시키는 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혔다. 한편, 이봉민(2014)은 시민교육을 통해 공동체 의식과 같은 태도와 청소년의 주관적 규범에 영향을 주어 정치효능감을 제고함으로써 청소년의 정치참여를 촉진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정치참여의 효과를 시민교육을 매개로 증대시킬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시민교육은 청소년 정치참여의 기반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므로, 청소년기에 갖게 되는 정치참여 관련 태도는 성인기에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다양한 시민교육을 통해 청소년의 참여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김윤나(2012)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의사결정 역량이 특히 취약하여 청소년 정책참여활동의 핵심인 민주적 과정과 절차를 통해 결정하는 일련의 활동이 위축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분석, 토론, 의사결정의 핵심기술 등에 대한 교육을 체계화하여 청소년이 습득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심익섭(2001) 또한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정치교육은 불가피하다고 보았으며, 한국 시민사회의 시민교육이 비체계적이고 불분명하고 단순한 교과과정에 그친다는 점과 더불어

교육에 있어 지식적 측면이 과도하게 강조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시민과 청소년 주도의 교육 내용 및 환경을 조성하고, 민주시민교육 개발전담기관 설치의 필요성 등을 제시하였다. 이운주(2015)의 연구에서도 청소년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인지적 중심의 정치참여 교육에서 벗어나 실천기능 중심의 정치참여 교육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특히 실천 중심의 학습은 개인 차원의 교육이 아닌 집단 차원의 집합적 의사결정에 기반한 협동학습 등이 주축이 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정치참여 교육의 활성화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이 제시한 대안적 정치교육 청소년이 능동적으로 시민 역량을 개발하여 성인기에 정치적 주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자양분이 될 것이다.

위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청소년의 참여활동, 특히 사회참여 활동 경험은 청소년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주도적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촉매가 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정치참여 활동은 사회참여 활동의 수준을 넘어 더욱 적극적으로 정치적 의사결정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민주시민 역량과 정치적 욕구가 수반되어야 하는 활동이며, 청소년이 이러한 정치참여를 통해 정치효능감과 더불어 능동적 주체로서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는 민주시민교육이 체계적이고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민주시민교육은 이제 첫 걸음을 떼었을 뿐, 실제적인 교육 목표 수립 및 실제적 교육 내용 구성을 하지 못한 바, 충분한 논의와 연구를 통해 민주시민교육의 실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제도적·구조적으로 지니고 있는 청소년 정치참여의 한계를 세밀하게 분석하여, 단순히 투표연령 제한 완화 등의 표면적 수단이 아니라 청소년이 단계적으로 정치참여에 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최근 2021년 3월에 개정된 공직선거법으로 이전의 정치참여보다 선거를 통한 공정성과 대표성이 늘어나는 만큼 선거과정에서 피선거권자의 도덕

성과 윤리적 측면은 더욱 깊이 연구될 필요가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소득의 불평등과 양극화와 공정한 분배가 더욱 어려워 질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젊은 층을 대변할 정당의 역할이 모호해 질 수 있다(Piketty, 2020). 이에 코로나19에 대비한 청소년층의 더욱 적극적인 정치참여가 필요하다.

○———— 제3장 청소년 정치참여 법·제도 현황과 참여기구 운영 실태

- 1. 청소년 정치참여 근거로서
법·제도적 현황
- 2. 청소년 참여기구
- 3. 청소년의회

본 장에서는 청소년의 정치참여의 제도적 근거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정치참여 법·제도 현황을 살펴보고, 제도권 내에서 학생 청소년의 정치참여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참여기구를 개괄 할 예정이다. 일상적으로 정치는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정치참여는 법·제도의 토대 위에서 가능하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고 자유롭다는 자연법적 원칙을 바탕으로 인간으로서 존엄은 법·제도적인 장치에 의해 보장되어야 한다. 학생들의 정치참여 역시 법·제도적인 차원에서 보장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학생 청소년의 정치참여의 근거로서 학교 안팎에서의 학생 청소년의 정치참여를 정책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토대 마련의 기초가 되는 청소년기본법, 청소년진흥법 및 초·중등교육법 등에서 명시하고 있는 관련 조항을 살펴보고, 선거권 하향 조정 등의 사안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및 학교 내에서의 정치참여 활성화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지자체 학생인권, 학생자치, 학교자치 조례 등을 통해 학생 정치참여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또한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기구로서 청소년 참여기구 및 청소년의회의 운영 등의 운영 현황과 사례를 개괄하여, 향후 정책개선 과제로서 정책적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학생 청소년은 정치참여는 다양한 양상으로 표출될 수 있으며, 참여를 위해 민주적 의사결정에 의한 구조가 갖추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법·제도적 기반 없이는 실제적으로 운영되기가 어렵다. 역으로 학교운영 관련한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고 하더라도 민주주의의

3) 제3장 1절은 경기도교육연구원 남미자 부연구위원이, 2절과 3절은 청소년자치연구소 정건희 소장이 집필한 내용을 원내 연구진이 재구성하였다.

원리로서 학생 청소년의 실제적 권리와 자유가 보장 않는다면 제도로서의 민주주의는 실질적 민주주의로 이어지기 어렵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둘의 관계는 항상 필요충분조건으로 기능되어야 한다.

1. 청소년 정치참여 근거로서 법·제도적 현황

1) 청소년기본법, 청소년진흥법 및 초·중등교육법

청소년 개념은 주로 연령에 따른 범주로 설명된다. 다만 법의 성격에 따라 연령 범주는 상이한데, 청소년기본법의 경우 청소년을 9세 이상 24세 이하로 정의하고 있으며, 청소년보호법의 경우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으로 정의한다. 대체로 보호의 목적이 강해질수록 연령이 낮아진다. <표 III-1>과 같이 청소년과 유사한 연령 범주이지만 민법상 법률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미성년자로 규정하고 있다.

표 III-1. 법령에 따른 청소년 연령

법적개념	연령 범주	관계법률
청소년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자	청소년기본법 제2조,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조,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 학교밖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
	만 19세 미만인 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사행행위 등 규제처벌에 관한 특례법
	18세 미만의 자(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미디어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미성년자	19세가 되지 않은 자	민법 제4조

* 출처: 전민경, 장미(2021). 경기도청소년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연구. p.36.

연령을 기준으로 청소년과 비청소년을 구분하다보니, 미성년자로서 청소년을 법적 보호의 대상으로 이해하고 상대적으로 청소년의 권리에 대해서는 다소 소홀하게 다루어지는 측면이 있다.

청소년의 연령 범주가 가장 광범위한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사회구성원으로서 청소년이 기본권을 보장받고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삼고 있다. 이와 같은 기본 이념(제2조제1항)을 정책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방향으로 청소년의 참여 보장을 언급하고 있으며, 동법 제5조2에서도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자신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 즉, 정치참여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부가 위원회, 협의회 등에 청소년을 포함하여 운영하고 별도의 청소년참여위원회 등의 운영과 같은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는 기구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12조에 의해 청소년특별회의를 매년 개최하도록 하고 있다. 청소년특별회의는 청소년 당사자가 참여하여 청소년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제안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p>청소년기본법</p> <p>제2조(기본이념)</p> <p>① 이 법은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음과 아울러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며 보다 나은 삶을 누리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p> <p>② 제1항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장기적·종합적 청소년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추진 방향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청소년의 참여 보장 2. 창의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청소년의 능동적 삶의 실현 3. 청소년의 성장 여건과 사회 환경의 개선 4. 민주·복지·통일조국에 대비하는 청소년의 자질 향상 <p>제5조의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p> <p>① 청소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p> <p>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원활하게 관련 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심의 등의 절차에 청소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p>

수렴하여야 하며, 청소년 관련 정책의 심의·협의·조정 등을 위한 위원회·협의회 등에 청소년을 포함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제안된 내용이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청소년특별회의의 개최)

① 국가는 법정부적 차원의 청소년정책과제의 설정·추진 및 점검을 위하여 청소년 분야의 전문가와 청소년이 참여하는 청소년특별회의를 해마다 개최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특별회의의 참석대상·운영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출처: 청소년기본법의 현행 조문은 청소년기본법(2020.5.19. 일부개정, 법률 제17285호)의 내용을 인용함.

청소년진흥법은 청소년기본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다양한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로서, 제4조에서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운영하여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5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이 다양한 활동에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청소년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조(청소년운영위원회)

① 제10조 제1호의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제16조 제3항에 따른 위탁운영단체(이하 “수련시설운영단체”라 한다)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고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수련시설운영단체의 대표자는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수련시설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청소년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청소년활동의 지원)

- ① 청소년은 다양한 청소년활동에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꿈과 희망을 실현할 충분한 기회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청소년지도자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출처: 청소년활동진흥법의 현행 조문은 청소년활동진흥법(2020.5.19. 일부개정, 법률 제17286호)의 내용을 인용함.

청소년은 오랫동안 성인기와 아동기의 중간기의 존재로 바라보면서 불완전한 존재로 여겨져 왔다. 특히 근대화시기에 거의 모든 청소년들이 근대적 시민 양성 기관인 학교에 속하게 되면서 청소년과 학생은 거의 같은 개념으로 이해되기 시작했다. 이는 보호와 교육의 대상으로 청소년을 바라보는 시각을 공고히 하는 역할을 했으며, 청소년의 정치참여는 매우 제한적인 수준에서만 허용되어왔다.

초·중등교육법 제17조에서 학생의 학교에서의 참여 활동을 학생의 자치활동으로써 권장, 보장하도록 하고 있으나 세부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즉, 학교에서 학생의 자치활동은 학칙에 근거하여 그 조직이 구성되고 운영된다. 학칙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학생의 자치활동은 위축될 수도 장려될 수도 있다. 그러나 학칙은 동법 제8조에 의거, 학교장에 의해 법령의 범위에서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으며, 학생은 학교장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학칙에 의해서 지도 및 징계의 대상이 된다(동법 제18조). 이는 같은 법규 내에서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에서는 학교장 또는 학칙에 의해 자유로운 제한이 가능한 구조로 규범·구조적 모순이 있다(김효연, 2020). 학교에서 학생의 자치활동은 학교가 정해놓은 틀 안에서만 권리가 주어지며, 이런 상황에서 학생의 자치활동에 대한 권리가 보장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뿐만 아니라 학생은 학교운영에 대해서도 그 참여의 권리가 제한적이다. 교육

기본법 제5조제2항에서 “학교운영의 자율성은 존중되며, 교직원, 학생, 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초·중등교육법 제31조제2항(학교운영위원회 설치)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을 교원대표, 학부모대표, 지역사회 인사로 정함으로써 학생을 배제하고 있다.

학생은 학교운영에 관하여 교원이나 학부모와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참여하지 못하고 단순히 의견을 수렴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4(의견수렴 등)에 의하면, 학교운영위원회의 판단 하에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 등에 대해서만 학생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칙 또는 조례가 있는 경우에만 학생대표가 학생들의 의견 수렴을 토대로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을 뿐이다.

<p>초·중등교육법</p> <p>제8조(학교 규칙)</p> <p>① 학교의 장(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를 말한다)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p> <p>② 학칙의 기재 사항과 제정·개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7조(학생자치활동)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호되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p> <p>제18조(학생의 징계)</p> <p>① 학교의 장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p> <p>②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려면 그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p> <p>제31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p> <p>①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p>

<p>② 국립·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그 학교의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p> <p>③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수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범위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초·중등교육법 시행령</p>
<p>제59조의4(의견 수렴 등)</p> <p>①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려는 경우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32조제1호, 제5호, 제6호, 제9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사항 2. 그 밖에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정한 사항 <p>②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32조제1호, 제6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사항 2. 그 밖에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 <p>③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하게 할 수 있다.</p>

* 출처: 초·중등교육법(2021.3.23. 일부개정, 법률 제17958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2021.6.22.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1790호)의 내용을 인용함.

2) 공직선거법

<표 III-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난 2019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만 18세 이상 국민에게 선거권이 부여되었다. 이는 미성년자로서 보호의 대상으로만 여겨져 온 아동청소년 중 일부(18세 청소년)를 비청소년(성인)과 동등한 정치적 의사결정의 주체로 보는 시작한 것이다. 19세에서 18세로 단 1세가 낮춰진 것이지만 한국 사회에서 처음으로 미성년자인 학생에게 선거권이 주어졌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학생은 미성숙하기 때문에 교육이 필요한 존재로 정치와

관련해서도 주변(친구, 교사 등)에 쉽게 휩쓸릴 수 있기 때문에, 학교는 무정치적인 공간이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왔다. 그러나 18세로의 선거 연령 하향은 고등학생이 스스로 정치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시민으로서 주체성을 갖고 있음을 인정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다만 현재는 선거권 연령만 18세로 하향되었다. 그러나 참정권에는 선거권 이외에도 피선거권, 정당가입과 활동, 선거운동 등 다양한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 특히 정당가입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며, 자유로운 정당가입과 활동은 일상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된다. 그런 점에서 반드시 선거권 연령과 동일할 필요는 없으며 이미 여러 나라에서 선거권 연령보다 낮은 16세에 정당가입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들 권리에 대한 확대가 필요하다.

표 III-2. 청소년 참정권 관련 현황

선거권	피선거권	선거운동의 자유	정당 활동의 자유
18세 미만 제한	25세 미만 제한 (대통령은 40세 미만 제한)	18세 미만 제한	18세 미만 제한 (국회의원 선거권 없는 자)
주민발안	주민투표		국민투표
19세 미만 제한	19세 미만 제한		19세 미만 제한

* 출처: 공현(2020). 18세 선거권, 그리고 청소년 참정권 확대의 의미와 과제. p.33.

18세 청소년의 상당수는 고등학교 재학생이다. 같은 학년, 같은 학급에 재학하고 있으나 생년월일에 따라서 선거권이 주어지거나 주어지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은 선거권 부여 기준이 연령일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게 한다. 또 현실적으로 선거권이 있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이 섞여 있는 교실 상황에서 현실 정치의 문제를 교육적으로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미비한 실정이다.

선거권 연령이 18세로 낮춰진 이후 치러진 2020년 4월 15일 총선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는 “국공립학교 교원이 선거권이 있는 18세 학생을 대상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를 조사 또는 발표하는 것”을 「공직선거법」 제86조 위반으로, 사립학교 교원 역시 같은 법 제9조와 제85조를 위반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선거권이 없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모의투표 역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0.2.6.). 이로 인해 4·15 총선 과정에서 초중등학교에서 모의선거는 이루어질 수 없었다.

더불어 선거운동과 관련해서도 학습권, 수업권 침해 등을 이유로 제약이 많았다. 만 18세 미만, 즉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선거운동이 금지되었으며, 선거권이 있는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교내에서는 선거운동이 금지되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0.1.28.).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과 정당활동의 자유를 확대하고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을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1.5.25.). 여기에는 교육을 목적으로 선거권이 없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모의투표를 허용하는 안이 포함되어 있다.

3) 지자체 학생인권, 학생자치, 학교자치 조례

학교 안에서의 일상적인 민주주의는 청소년의 정치참여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남미자, 장아름, 2020). 청소년의 상당수는 학교가 일상의 장이며 학교라는 시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적 대화, 수업, 학교 운영과정 등에서 학생들이 정치적 주체로 참여하는 일상적인 정치참여 경험은 사회에서의 정치참여에 대한 효능감을 높이며 적극적인 참여를 가능하게 한다.

청소년의 정치참여는 선거권, 정당가입 등과 같은 법적 권리의 보장만큼이나 일상에서의 청소년 인권의 문제와도 맞닿아있다(이은선, 2018). 정치는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정치참여는 민주주의라는 토대 위에서 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학생의 인권 보장은 가장 기초가 되는 영역이다. 2010년 경기도교육청에서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를 제정한 이래, 광주(2011년), 서울(2012년), 전북(2013년)의 교육청에서 제정하여 공표하였다(오동선, 강은숙, 2019). 2018-2019년에 경상남도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시도되었으나 반대 집회 등으로 실패했으며, 2021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여 공표하였다.

학생인권조례의 주요 내용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정규교과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 두발·복장 자유화 등 개성을 실현할 권리, 소지품 검사 금지, 휴대폰 사용 자유 등 사생활의 자유 보장, 양심·종교의 자유 보장, 집회의 자유 및 학생 표현의 자유 보장, 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학생인권 옹호관 및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설치 등 학생인권침해 구제 등이다(오동선, 강은숙, 2019).

학생인권조례의 내용 중에서 학생의 정치참여에 관련된 시도교육청 학생인권 조례의 구체적 조항은 다음 <표 III-3>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III-3. 학생의 정치참여와 관련된 학생인권조례

조항의 주요 내용	경기	광주	서울	전북	제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심·종교의 자유 학생은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안 된다. 	16조	13조	16조	16조	1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현의 자유 학생은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학생은 서명이나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모을 권리를 가진다. 학생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 	17조	14조	17조	17조	1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치활동의 권리 동아리, 학생회 그 밖의 학생자치조직의 구성과 운영 등 학생의 자치활동은 보장된다. 학교장은 학생자치조직의 구성과 운영 등 학생자치활동의 자율과 독립을 보장하고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학교는 성적, 징계를 받은 사실 등을 이유로 학생자치조직의 구성원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18조	15조	18조	18조	1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칙 등 학교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학생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이하 학교규정이라 한다)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19조	15조	19조	19조	1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학생은 학교 운영과 교육청의 교육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학생대표는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20조	15조	20조	20조	1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참여)위원회 학생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학생참여위원회를 둔다. 	36조	23조	33조	41조	-

* 출처: 오동선, 강은숙(2019). UN 아동권리협약에 의거한 시·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의 비교 분석. p.16-17을 토대로 재구성.

경기, 광주, 서울, 전북, 제주의 학생인권조례에서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학생의 참여권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학생의 자치활동, 학교운영에의 참여 등과 같이 학교라는 시공간에서의 학생 참여권을 보장하려고 한다는 점이다.

더불어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학생자치활동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학생의 자치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학생자치활동 지원 조례는 「초·중등교육법」 제17조4)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5)에 근거하고 있다. 이들 조례에는 학생자치와 학생참여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육감이 학생자치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학생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이와 같은 학생자치활동 지원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 <표 III-4>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III-4. 각 시·도교육청의 학생자치활동지원조례

조항의 주요 내용	서울	부산	대전	경남
학생자치활동 계획을 수립, 시행	4조(매년)	5조(5년)	5,6조(매년)	4조(3년)
학생자치활동 지원위원회 설치	5,6조	10,11조	9조	9,10조
학생의회	-	9조	8조	7조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에서 2021년 9월 17일 인출.

가장 최근에는 경기도교육청과 강원도교육청에서 학교자치조례를 제정하고 공포하였다⁶⁾. 학교자치조례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 학교 공동체의 자치를 실현하고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목적

4) 초·중등교육법 제17조(학생자치활동)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호되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5)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0조(학생자치활동의 보장) 학교의 장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6) 경기도교육청에서 2019년, 강원도교육청에서 2021년에 제정되었으며, 내용은 거의 동일하다.

으로 한다. 학교자치조례에서 제시하는 학교운영의 원칙은 아래와 같으며, 이를 위하여 학부모회, 교사회, 직원회, 교직원회, 학생회를 둘 수 있다고 명시한다.

제3조(학교운영의 원칙)

-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기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학교운영의 자율성은 존중하며, 교직원·학생·학부모 등이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 노력하여야 한다.
- ② 학교의 장은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위하여 학교의 운영과정에서 다음 각 호를 준수하도록 노력한다.
 1.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학교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보장한다.
 2. 교사가 교육의 내용과 방법, 평가 등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판단하고 결정한 사항에 대해 존중한다.
 3. 학생이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그 의견을 존중한다.

* 출처: 경기도 학교자치 조례(2019.11.11. 제정, 경기도조례 제6403호)의 내용을 인용함.

학생인권, 학생자치활동 등과 같이 학생의 정치참여 권리를 확대하려는 노력들은 대개 강제성이 없는 조례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다보니 학생의 참여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노력이 계속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나 여전히 학생의 학교 안에서의 참여권은 제한적이다.

2. 청소년 참여기구

1) 청소년 참여기구 개요

청소년 정책참여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청소년 정책 참여기구가 마련되었다. 대표적으로 청소년특별의회,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있다. 이들 기구의 특성을 개괄적으로 나타내면 아래의 <표 III-5>와 같다.

표 III-5. 청소년 참여 기구와 정책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 참여위원회	청소년 운영위원회	청소년참여예산제도
목적	청소년 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공감, 청소년 참여를 통한 청소년의 역량 개발	정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청소년 정책 마련에 청소년의 주체적 참여	청소년수련시설의 주인으로서 청소년	청소년이 직접 예산 사업 제안
법적 근거	청소년기본법 제12조 (청소년특별회의의 개최)	청소년기본법 제5조 의2(청소년 자치권 확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조(청소년운영위원회)	지방재정법 제39조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참여)
주요 기능	청소년과 청소년 전문가가 함께 범정부 적 청소년 정책 과제 발굴 및 제안	정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정책에 대한 의견제시, 정책 발굴 및 제안	청소년수련시설과 프로그램 참여 및 모니터링	청소년이 직접 제안 하는 정책에 대한 실질적 예산 편성
현황	-	전국 233건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설치, 운영	전국 331개의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운영 중	-

* 출처: 청소년참여포털. <http://www.youth.go.kr> 에서 2021년 9월 29일 인출.

먼저, 청소년특별회의는 UN 등의 국제기구에서 청소년 정책 참여에 대한 권고를 토대로 2004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05년 청소년기본법 제12조(청소년특별회의 개최)에 의해 마련된 기구이다(조금주, 2017: 360).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주관한다. 전국 17개 시·도 청소년참여위원이 청소년특별회의의 위원으로 활동하며, 매년 청소년특별회의의 위원과 청소년 전문가가 함께 토론, 워크숍 등을 통하여 청소년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제안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난 15년간 520여개의 정책과제를 제안했고, 이 가운데 461개의 정책과제가 정부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다).

7) 청소년참여포털. <http://www.youth.go.kr> 에서 2021년 9월 29일 인출.



* 출처: 대전청소년활동진흥센터. http://www.tjvc.net/sub2/menu_5.php 에서 2021년 9월 30일 인출.

그림 III - 1. 청소년특별회의 운영과정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기구이며, 1998년에 시행된 ‘제2차 청소년 육성 5개년 계획’에 의해 시작되었다.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주관하여 청소년특별위원회보다 지역의 청소년 정책과 관련된 논의에 집중할 수 있다.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청소년들을 선발하여 지역 청소년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기회균등 및 소수자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려는 점이 특징이며 지역 여건에 따라 20여 명 내외로 구성한다. 정기회의는 주로 토요일에 운영되고, 여성가족부와 광역자치단체 회의는 연 8회 이상, 기초자치단체 회의는 연 4회 이상 개최되며, 긴급한 안전이 발생하면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주된 활동은 지역에서의 청소년 참여활동을 위한 조사, 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등이다⁸⁾.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조(청소년운영위원회)에 의해 설치

8) 청소년참여포털. <http://www.youth.go.kr> 에서 2021년 9월 29일 인출.

되었으며,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하여 구성하고 운영한다. 청소년 운영위원회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 과정에서 청소년이 시설과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와 모니터링을 하는 기구로서, 그 과정을 통하여 청소년이 청소년수련시설의 주인으로서 자리매김하도록 하는 기구이다. 청소년수련시설은 2020년 기준으로 전국 331개가 설치·운영 중이다⁹⁾.

청소년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며, 청소년의 정책 제안에 대한 실효성과 시의성을 기준으로 실제 사업으로 편성한다. 2011년 주민참여예산제의 의무시행 이후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에서 청소년참여예산제도 도입을 세부과제로 설정하면서 2015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년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윤민중 외, 2016: 39). 청소년참여예산제도는 청소년 당사자로부터 단순한 정책 관련 의견 청취의 수준을 넘어 실제적인 정책 실행을 위한 예산 편성과 구성에 대한 권리라는 점에서 다른 청소년 참여기구와는 다른 특성을 가진다.

2) 시사점

오랫동안 제도화된 청소년 정치참여 활성화 방안으로 논의되어온 청소년 참여 기구의 설립 취지와 운영에 따른 비판적 관점에서의 시사점과 정책적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참여기구는 법적으로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실질적인 권한은 요원한 과제로 남아 있다. 청소년의 권리가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참여 권리를 위한 제도적 틀을 갖추고 사회 참여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는 하나 실제 청소년 참여기구에서 활동하는 청소년들은 여전히 운영상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조금주, 2017). 법적 권한은 있으나 실질적인

9) 청소년참여포털. <http://www.youth.go.kr> 에서 2021년 9월 29일 인출.

권한이 없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 현장 지도자들은 청소년 참여기구에 대해서 사업적 측면에서 사업으로 계획을 세우고 활동하는 것도 참여로 이해하기도 하며 이슈를 생산하고 만들어 보고 싶다는 의지 자체를 청소년 참여로 인식하기도 한다. 즉, 이들의 실질적 정치사회 참여는 정책을 제안하고 논의하는 사업 과정에서 미미하게 나타난다.

둘째, 청소년 참여기구의 실질적인 정책집행 권한을 법적으로 부여되어 있지 않아서 실제적으로 청소년이 제안한 정책이 구현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세종시의 우수사례에서도 다양한 정책들이 제안되지만 모두 정책으로 받아들여져 구현되지 않는다. 시 차원에서 검토하여 지자체장이나 관계자들의 특별한 의지가 있을 때 가능한 일이다. 그 가운데에서 세종시는 여러 관계자들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2에는 “청소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법적 청소년 참여기구로서 청소년참여위원회(청소년기본법 제2조의2), 청소년특별회의(청소년기본법 제12조), 청소년운영위원회(청소년활동진흥법 제4조)에 그 설치규정을 명문화하였고, 구성과 운영 등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다만 청소년 참여기구의 설치와 역할이 법제화되었음에도 실제적으로 청소년들의 목소리와 정책 참여권 부여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단순히 청소년 참여기구가 절차적으로 청소년들의 의견을 국가나 지자체, 청소년수련시설에 전달하는 것에 국한되어 있는 상태인 것이다. 현실적으로 청소년정책 집행이나 시설운영 측면에서 청소년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청소년 참여기구를 포함한 지역사회 전체 청소년의 요구와 필요를 대변할 수 있도록 폭넓게 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청소년특별회의의 정책 제안 수치만 나올 뿐 지역에서의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주요 사례는 정책제안에서 멈추는 경우가 많다. 특히 대표성에 대한 부분에서도 논란이 있는 바 현재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참여위원회와 지역에 청소년의회, 교육청의 학생회 대표, 학교

밖 청소년기관의 대표, 다문화청소년 등 다양한 청소년들의 대표성을 가진 청소년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대표성 있는 참여기구로의 변모를 모색해 볼 필요성도 제기된다.

넷째, 청소년 참여기구의 청소년참여위원회와 청소년특별회의가 중첩이 되어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특별회의의 경우 다양한 주체(청소년, 지도자, 전문가, 정부 등)의 명확한 역할 배분과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책임자의 의무적인 참여가 요구되며, 시군구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경우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참여기회를 확보하고 수렴된 의견에 대한 정책 반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될 필요성이 제안되었다(최창욱, 전명기, 2013). 청소년시설의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위원회 원활한 운영을 위해 청소년 및 지도자의 교육훈련을 확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제안되었다(최창욱, 전명기, 2013). 이처럼 각 청소년 참여기구의 기능 역할 체계정립과 운영의 전문화가 청소년 참여 활성화 방안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최창욱, 전명기, 2013). 각 참여기구마다의 역할과 정체성이 명확한 바 가급적 각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래로부터의 정책 제안이라는 취지로 참여위원회와 특별회의의 중첩된 활동에 대한 고려도 할 수 있으나 현장에서 실질적인 참여위원회 활동이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나마 활동력이 있고 주도성이 있는 대표 청소년들이 특별회의에 집중할 때 지역의 참여위원회 활동은 약화될 것이다.

3. 청소년의회

1) 민간단체 주도의 청소년의회

2000년경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의회 산하에 청소년의회를 시험적으로 운영한 것이 시작이다. 이와 함께 민간 주도 청소년의회

설립계기는 2002년 말에 아동·청소년의 참여에 대한 특집을 다룬 유니세프의 '세계 아동 현황 보고서 2003'을 접한 전국사회교과모임의 청소년참여에 대한 논의로부터 찾을 수 있다(대한민국청소년의회, 2004). 유니세프의 '세계 아동 현황 보고서 2003'은 아동·청소년의 참여의 의의와 필요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세계 각국의 아동·청소년의회 사례를 수록하고 있다. 특히 성인들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는 사회에서 주변부에 위치해 있는 아동·청소년의 인권향상, 정책 투입, 시민성 함양 등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아동·청소년의회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UNICEF, 2002). 청소년의회는 2003년 5월에 정의교육시민연합, 전국사회교사모임, 유니세프한국위원회, 흥사단교육운동본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주관으로 전국 온라인 선거를 통해서 출범하였다. 이렇게 출범한 청소년의회는 활동의 목적으로 전자민주주의의 실험을 통한 디지털 시대의 민주적 참여의식 고취 및 또래 지도자 양성, 청소년의 자율적 의사표현 및 정책 반영, 인권 보호와 주체적인 문제 해결능력 신장 등을 내세우고 있다¹⁰⁾. 민간 청소년의회는 의회 형태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유형에 비해 장점이 있다(김명정, 2009). 특히 의회는 민주주의 제도들 중에서도 시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조지형, 2007). 또한 민간 청소년의회는 직접 선거를 통해 의원이 선출되므로 상대적으로 참여 동기의 자발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문제를 공론화하고, 청소년들이 의사결정과 심의 등의 과정을 주도하며 이를 정책으로 반영하기 위한 다양한 행동을 실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김명정, 2009). 그렇지만 그 동안의 활동 속에서 문제점과 한계를 노출시키기도 하였다. 구체적으로 국회의 조직과 활동방식을 모방함으로써 나타나는 지나친 형식주의, 대부분이 학생 청소년이라는 신분 제약 속에서 나타나는 활동의 한계, 의원들 간의 소모적 갈등 양상, 2년마다의 주관 단체 변경으로 인한 지원시스템의 불안정, 전국적으로 흩어져

10) 대한민국청소년의회. https://youthassembly.or.kr/bbs/board.php?bo_table=B01&sca=설립취지에서 2021년 7월 1일 인출.

있는 의원들의 분포로 인한 의사소통과 대면 활동의 한계, 일부 의원과 전문위원이 보인 권위주의적 태도, 비 법제 임의기구에서 나타나는 정책 투입과 정부 지원의 한계, 의원 리더십 형성을 위한 자체 연수 기회 부족 등을 들 수 있다. 청소년의회가 지속적으로 발전되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점이 극복되어야 할 것이다(김영인, 2007). 결국 주관단체의 대한민국청소년의회에 지나친 간섭 등의 문제로 인해 제4대 대한민국청소년의회는 주관단체와 결별을 선언하였다¹¹⁾. 대한민국 청소년 의회는 2010년 2월 제12회 임시회의 시점부터 의원들이 자체적으로 사무처를 구성하였다. 현재 단체 등록 명칭은 공히 대한민국 청소년의회로서 과거 의원들이 구성한 사무처(성인)로 구성되어 주관단체에서 독립된 하나의 법인단체로 활동하고 있다. 과거 5개 단체가 운영하였던 청소년의회는 대한민국 국민 중 만 14~18세의 국민이라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졌다. 이때의 대한민국 청소년의회의 정원은 총 100명이었다. 현재 대한민국 청소년의회는 대한민국 국민 중 만 13~18세의 국민이라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2017년 기준으로 대한민국 청소년의회는 제9대 청소년의원 200여명이 활동 중이다¹²⁾.

독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최근 대한민국 청소년의회 활동을 살펴보면 ‘청소년 국회의원’ 운영으로 청소년의 인권보호 및 권익 증진을 위한 입법청원과 캠페인 진행 온라인 회의와 의원총회를 통해 전국 청소년들과 교류하는 프로그램 의장단, 정치법제, 외교통상, 교육과학기술, 학생권익, 통합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입법청원 의정체험 프로그램으로는 청소년국회 캠프로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기타 토론 토의대회, 자기주장발표대회, 청소년 기자단과 비평단, 청소년 영상뉴스와 라디오, 청소년학교 캠프 등을 운영한다¹³⁾. 사회 현장에서 실제적인 정치사회 참여활동 보다는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의회

11) 위키백과. 대한민국의 청소년의회. https://ko.wikipedia.org/wiki/대한민국의_청소년의회 에서 2021년 7월 1일 인출.

12) 위키백과. 대한민국의 청소년의회. https://ko.wikipedia.org/wiki/대한민국의_청소년의회 에서 2021년 7월 1일 인출.

13) 대한민국청소년의회. <https://youthassembly.or.kr/> 에서 2021년 7월 1일 인출.

내 처리법안도 실제 국회나 지자체 등의 법이나 조례 등으로 제안하고 만들어 가는 것이라기보다는 ‘대한민국청소년의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단법인 내의 프로그램으로서 정책 제안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지방자치 단체 주도의 청소년의회

"청소년의회"란 시 관내에 거주하고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 19세 미만 청소년들이 시의회에서 지방의회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모의회의를 말하고,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자신과 관련된 정책과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군산시 어린이·청소년의회 조례). 어린이·청소년의회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정치·사회 참여 의식을 높이고, 정책 결정에 참여함으로써 어린이와 청소년의 참여권을 보장하며, 건전한 토론 문화, 민주적 의사결정 체험으로 민주시민으로의 역량을 습득하고,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의회 활동을 통하여 스스로의 목소리를 당당히 드러낼 수 있는 권리 주체로서의 능력과 자질 함양하는 것을 운영목적으로 하고 있다(군산시, 2017).

최근 청소년의회가 여러 지자체에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주요한 이유가 유니세프로부터 아동친화도시를 인증받기 위한 과정으로 나타난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Child Friendly Cities Initiative: CFCI)는 지방 정부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유엔 아동권리협약이 지방정부의 행정체계 내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이다(유니세프한국위원회, 2019).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는 아동이 유엔아동권리협약에 포함된 권리를 실현하고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도록 아동 친화적인 지차제를 의미한다(유니세프한국위원회, 2019). 이러한 지역사회에서 아동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행정체계와 제도 내에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자신의 의견이 실제로 반영되는 경험을 통해 권리의 주체자로 성장할 수 있다(유니세프한국위원회, 2019). 즉, 아동친화도시는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하고 발달하여 아동·청소년의 핵심

역량을 개발하고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역사회 환경을 마련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 도시이다(UNICEF, 2005). 유니세프는 2004년 처음으로 아동친화도시의 구성요소를 제시하였다. 아동친화도시의 구성요소는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로 한국에서는 10가지 구성요소(아동의 안전을 위한 조치 등)를 기반으로 아동친화도시가 조성되며, 아동과 청소년의 참여와 정책 등을 실제화하기 위한 주요한 역할로서 각 지자체별로 아동·청소년 의회 조례를 만들어 운영해야 한다. 현재 아동·청소년의회, 어린이의회, 청소년의회 등의 명칭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의회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지방정부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 협의회’ 창립총회가 2015년 9월 14일 서울 종로구 창성동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서 전국 27개 지방자치단체 대표 및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개최됐다.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 협의회’는 아동친화도시 인증이 완료된 서울 성북구를 비롯해 완주군, 군산시 등 2021년 8월 기준으로 51개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다¹⁴⁾.

3) 청소년의회 주요 운영 사례

국내 청소년의회 구성과 운영은 특별시의 구, 광역시, 시, 군 단위별 각 청소년의회 중 우수사례로 예시될 수 있는 군산시, 서울특별시 금천구, 광주시 및 완주군 청소년 의회의 운영 사례를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1) 군산시 청소년의회

군산시의 청소년의회는 기존에 아동친화도시를 운영하기 위해서 지자체 중심으로 조례를 만든 것과는 다른 형태로 만들어져 구성되었다. 청소년자치연구소에서

14) Unicef. <http://www.unicef.or.kr> 에서 2021년 7월 6일 인출.

운영하는 청소년자치공간 달그락달그락에서 활동하는 청소년들은 다양한 분야의 자치활동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청소년참여포럼을 진행한다. 달그락의 청소년들은 ‘청소년이 지역에 참여하고 행동하는 기록’이라는 제목의 약자로 ‘청소년 지역 여행기’라는 제목으로 청소년참여포럼을 진행했다. 포럼은 지역 중심으로 활동하는 다양한 청소년자치기구의 청소년들이 추진위를 구성하고 영역을 나누어 그 분야에 대해서 자료조사, 전문가 인터뷰, 청소년들의 의견 취합 등의 과정을 거친다. 이후 청소년들이 조사하고 분석한 자료들을 정리하여 지자체에 제안할 정책들을 개발하는 청소년지역여행기 포럼을 진행한다.

본 포럼을 통해 취합된 청소년 관련 정책들은 군산시 지자체 담당 공무원 및 시의원, 청소년 관련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의 과정을 거치게 되며 지역사회 청소년 정책의 주요 사안으로 제안된다. 포럼은 주로 청소년들이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며 기초자치 단체 차원에서의 청소년 정책 관련 주요 사안에 대해 관련 참석자의 상호 토론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포럼에서 정리된 의견들은 군산시에 정식으로 발송하여 정책제안서 형식으로 접수되며, 제안된 내용별로 시 관련 부서에 회람되어 정책의 내용들을 확인하고, 실제 반영 가능한지 불가능지 내용별로 심의하여 군산시 청소년의회를 운영하는 ‘청소년자치연구소’로 공문으로 발송해준다. 2015년도에는 포럼에서 제안한 관련 청소년정책 및 사업의 제안 중 자전거전용도로 확장, 불량식품 유통 방지 및 진로체험 지원, 학교 밖 청소년지원 등의 사업을 비롯하여 다양한 사업들이 시정에 반영되어, 정책으로 실현되는 실제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이후 2019년부터 2021년까지의 군산시의 어린이청소년의회 활동을 종합해보면 3, 4월에 선착순으로 의원 모집 및 선발이 이루어지고, 5월에 의회 발대식과 6월 의장단 및 상임위원회 구성이 된다. 이후 아동권리, 지방의회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진다. 부가해서 판사, 검사, 변호사 역할 분담해서 토론회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한다. 모의 법정과 국회 견학 등의 프로그램, 교육 및 아카데미 등

때 회기 마다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의회 회기로 진행한다. 형식적 운영과 짧은 시간에 행사 중심으로 진행되는 의회활동에 의해서 의원 본연의 활동인 “청소년 정책과 예산에 대한 의견 수렴, 토론 등 참여활동,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청소년 정책과 예산편성 의견 제출”¹⁵⁾ 등이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게 현실이다. 이에 대한 보완을 위하여 전문 활동가들이 투입되어 청소년의회 의원들의 정치참여가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시의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2) 금천구 청소년의회

금천구 청소년의회는 학생회를 통한 구성과 자기추천 등 두 가지 방법을 통해 구성되며, 학생회의 대표는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 대표로 선출된 학생들(학생회, 학생간부 등)을 중심으로 청소년의회참여 의사를 지닌 청소년들로 구성된다(조성익, 2017: 23). 관내 학생 대표를 청소년의회 구성으로 선출하는 이유는 청소년의 많은 수가 학생 청소년이며, 의회의 대표성 차원에서 그 정당성을 지닐 수 있기 때문이다(금천구 청소년의회 사업담당자 면담내용, 2017.9.5.). 한편, 학생 대표 이외에 자기추천을 통해서도 청소년의회에 참여할 수 있다. 자기추천 방식은 제도권 학교에 적을 두지 않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이나, 청소년의회에 참여할 의사가 있지만 학교 내 학생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지 않는 청소년들에게도 참여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조성익, 2017: 23). 이와 같은 참여방식을 통해 2017년 금천구 청소년의회는 약 120명의 청소년 의원들로 구성되었다(황여정, 2017).

의회의 의사결정 구조는 청소년정당제를 도입하여 추진되었다. 의회 초기 구성 단계 의회 체계에 대한 청소년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청소년정당제를 채택하게

15) 군산시 청소년 자치권 확대를 위한 조례 (2016.9.29. 제정, 전라북도군산시조례 제1371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자치법규/군산시청소년자치권확대를위한조례/\(1371,20160929](http://www.law.go.kr/자치법규/군산시청소년자치권확대를위한조례/(1371,20160929) 에서 2021년 6월 21일 인출.

되었다. 무엇보다 청소년 정당제의 채택을 통해 대부분 청소년 참여 기구에서 나타나는 업무특성에 따른 분과별 하위 조직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분과별 조직을 우선으로 하는 조직 체계에서는 개별 하위분과들이 기능적으로 분화되어 있지만 명목적 성격이 강하여 전체 체계 내에서 각각의 사업을 분장, 조정하거나 체계성을 갖추고 기능하는 실행조직으로서의 역할은 미비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개별 조직을 아우를 수 있는 전체 조직이 구성되지 않은 상화에서 소속감이나 정체성 등이 약하다는 문제점 들이 드러났다. 이에 개별 분과로서 기능하는 참여구가 아닌 ‘청소년정당’을 구상하게 된 것이다(박석준, 2017; 황여정, 2017 재인용).

금천구 청소년의회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마을정부 개념을 도입했다는 것이다. 마을정부는 정책의 집행기관으로 청소년들이 주도하는 입법과 행정의 틀을 갖춘 민주적 조직체계로서 여타 구 단위 청소년의회와 차별화 될 수 있다. 마을정부를 구성하기 위해 다수당 등을 선출하여 마을 정부를 구성해야 하며, 이에 금천구에서는 청소년총선거를 실시한다. 총선거를 통해 청소년들은 참정권의 근간이 되는 ‘실제 투표’를 경험할 수 있었으며, 자신이 지지하는 청소년정당에 투표를 함으로써, 청소년정책에 직접적으로 본인의 의견 표명을 할 수 있게 되었다(조성익, 2017: 31). 총선거를 통해 가장 다수의 표를 획득한 얻은 정당이 집권당이 되며, 집권당에서 마을정부를 대표하는 ‘마을총리’가 선출된다. 마을총리는 다른 청소년정당에서 제시하는 공약을 아울러 실현할 수 있도록 부처를 구성하고, 각각 구성된 부처의 ‘마을정부 장관’은 정당의 청소년당원 들 중에서 지명된다. 마을정부 장관으로 지명된 후보자들은 임명 전 금천구 청소년네트워크가 주관하는 인사 청문회의 과정을 거치며, 그 이후 장관으로 임명된다(조성익, 2017: 30).

또한 청소년 정책 사업에 실질적인 예산반영을 위해서 금천구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청소년 관련 예산 심의 권한 일부를 청소년의회에 이양하도록 하였으며, 금천구 차원에서 청소년의회의 의결사항을 존중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와 관련한 업무협약도 체결하였다(조성익, 2017: 28; 황여정, 2017 재인용).

무엇보다 금천구 청소년의회가 지역사회에서 뿌리내리고 나름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지역사회 청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참여가 있었기 때문이다. 금천구 청소년의회는 현재 지역 기반 청년단체인 「꿈지락네트워크」가 사업의 전반적인 운영을 맡고 있으며, 본 청년단체의 특징은 소속 청년들이 대부분 지역사회에서 청소년 참여활동을 통해 성장한 청년들이라는 사실이라는 점이다(황여정, 2017). 금천구의 청소년의회의 실질적인 운영단체로서 꿈지락네트워크가 주요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민주시민역량교육, 교복입은 시민교육 등의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2018년 금천구 청소년의회 주요 성과로 ① 기존 청소년참여위원회와 성격이 겹쳐 올해부터는 통합하여 운영, ② 청소년네트워크(청소년참여위원회+청소년의회 등) 구성을 통한 비슷한 성격의 청소년 조직의 일원화로 운영의 효율성 증진, ③ 청소년총선거 관련 나이 제한 축소로 청소년 선거권 확대(기존 중·고등학생 뿐 아니라 초등학생(만 9세)까지 선거권 확대하여 청소년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 등을 위한 사업추진 등이다.

(3) 광주시 청소년의회

광주광역시시는 전국 광역시·도 최초로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된 어린이·청소년 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광주광역시어린이청소년의회는 “2015년 4월에 제정된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제7조에 의거하여 어린이·청소년의 정책 참여를 보장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여 온전한 시민으로서 사회참여와 환경을 마련하고자 추진”하고 있다. 특히 광주광역시 어린이·청소년이 정책 발굴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어린이·청소년 정치 기반 마련 및 민주시민으로서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고, 청소년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당사자인 아동·청소년의 요구와 지역에 맞는 정책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고 있다. 어린이·청소년

의회의 주요 기능은 어린이·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자문·심의 등 절차, 정책·예산 수립 과정, 예산의 심의·확정 과정에서 청소년이 참여하고 이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다. 특히 광주시청소년의회는 청소년관련 예산의 실질적 제안을 위하여 청소년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는데 지역사회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책제안 공모 및 발굴을 하고 청소년참여예산 심사 및 확정은 어린이청소년의회 및 시민평가단이 공동으로 진행하여 청소년참여예산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하여 청소년참여예산 공모 당선 제안서를 보완 및 정책화 논의를 거쳐 청소년참여예산 당선작을 추진하는 과정을 거친다.

(4) 완주군 청소년의회

완주군은 전국 군단위에서는 최초의 아동친화 도시다. 이 중 어린이·청소년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는데 “완주군 청소년 참여기구의 네트워크 구축 및 각 학교별 대표성 확보를 통하여 다양한 아동 정책 제안을 수렴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완주군은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을 위해 관내 초, 중, 고등학교와 청소년 참여기구 당 1명 이상 추천을 의뢰하여 지역별 균형과 대표성을 확보하고, 「어린이·청소년의회 본회의」에서 아동정책에 대한 안건을 심의·의결하며, 어린이·청소년의회 결과에 대하여 피드백을 강화할 것을 추진하였다(완주군, 2018).

주요 활동내용으로는 본회의, 임시회의에서는 균정질의, 안전상정 및 의결, 자유발언 등이 이루어지고 월1회 열리는 소위원회에서는 아동·청소년관련 정책의제토의 및 모니터링과 주민참여예산 사업 발굴 및 공모를 진행하고, 아동이 기획하는 행사 운영도 진행한다(완주군, 2018). 의회운영 추진 목적으로 아동이 보호대상이 아닌 지역사회의 관심과 권리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균정에 참여하여 정책수립의 주체로서 정책제안 및 발의를 통해 아동의 의견 제시 등을 두고 있다.

완주군은 아동참여예산 정책 반영을 위한 예산편성 과정에 지역주민 스스로 사업예산을 제안하는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을 통해 아동청소년분야에 예산을 배정하고 아동·청소년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는 사업을 우선시하여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4) 시사점

청소년의회는 2000년경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의회 산하에 청소년의회의 시범 운영과 함께, 민간 주도 청소년의회 설립의 계기로 독자적인 청소년의회가 설립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최근에는 유니세프로부터 아동친화도시를 인증받기 위한 과정의 일환으로 청소년의회가 설립·운영되고 있으며, 군 단위 최초로 인증을 받은 완주군, 시 단위에서 최초 인증 도시인 군산시 그리고 주요 사례로 보고되고 있는 서울의 금천구와 광주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청소년들의 몇 가지 시사점과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정치사회 참여 조직은 현실 정치에 구조적이며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안과 대안이 요구된다. 초기 청소년의회는 운영하는 주관 단체의 잦은 변경과 형식주의 그리고 학생이라는 위치와 전국 규모의 조직운영으로 인한 문제점을 노출했고, 이후 청소년들이 독자적인 대한민국청소년의회를 구성했으나 현실 정치사회 참여보다는 관련 프로그램 중심의 운영에 대한 한계를 보였다. 초기 청소년의회는 열악한 청소년의 정치사회 참여 여건 속에서도 전국적 규모로 처음 시도된 의회제 형식의 청소년참여라는 의미를 지녔다. 온라인상의 전국 규모의 선거와 다양한 활동을 중심으로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관련한 성인들의 사무처와 전문위원 간의 유기적 결합 또한 의미가 있었으나 지나친 형식주의와 의원들 간의 소모적 갈등 양상, 특히 2년마다 주관 단체 변경으로 인한 불안정성으로 인해 결국 청소년들의 독자적인 대한민국청소년의회가 조직

되어 운영이 되고 있다. 독자적인 운영 또한 현실의 정치 사회 참여 활동이기 보다는 프로그램과 이벤트 중심의 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민간 기관에서의 주요한 활동의 한계로서 비법제 임의기구에서 나타나는 정책 투입과 지원의 부족함을 보여주는 한계였다. 대한민국 청소년의회의 주요 목적에서도 나타나듯이 청소년의 의견이 실제로 정책에 반영되도록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청소년의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요구된다. 이는 단순한 프로그램적 접근이라기보다는 민간의 청소년의회 또한 현실적인 정치적 관여가 일어 날 수 있는 ‘운동’적 성격의 활동이 요구되면 프로그램보다는 가능한 운동성 강한 활동가들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둘째, 청소년의회의 선발전차가 다양하게 접근되어 나름의 지역적 대표성을 가지려고 노력하는데 선출 이후 그에 맞는 권한부여도 있어야 할 것이다. 청소년들이 의회에 출마하면서 자신의 공약을 개발함으로써 지역사회에 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관심을 갖고 유관 정책에 청소년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이후 관련 정책이 실제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지자체 및 기초 자치단체 차원의 구조적인 노력과 지원이 있어야 한다.

셋째, 청소년의회의 활동이 실제적인 예산 반영과 정책, 조례를 만들어 가기 보다는 교육과 캠페인을 중심으로 한 활동이 주를 이룬다. 예를 들어 대다수 본회의를 통해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의문점이나 불편해하는 사항의 해결방법 등을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등 의사결정 과정 및 의사진행 체험기회를 부여할 뿐 실제적인 예산에 대한 분석 제언을 통한 변화나 정책의 변경이나 진행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 청소년의회 선거구별 정책 의제 또한 청소년들의 환경 개선 의제 등 민원 수준의 활동 정책들이 대부분이다. 정책을 아이디어 차원에서 접근하여 선거에 참여하게 한 방법은 의회 활동에 관심 있는 청소년들의 선발 방식에 긍정적인 대안으로 보이지만 이후 실제 의원으로서 관련 공약이 실제화 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기초자치 단체 차원에서 관련 정책과 예산에 대한 분석, 그리고 정책 사업을

어디까지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행정적이고 재정적인 권한 부여가 있어야 할 것이다.

넷째, 실제 예산을 배정해서 매년 우선순위를 설정해 사업을 진행하는 참여예산 정책 예산을 점차 확대해 가야 한다.

다섯째, 청소년의회 운영에 관련 현장 전문가 또는 지자체에서 운영하고자 한다면 관련 전담자의 역할에 의해서 정치참여 수준의 차이가 크다. 실제 상당한 예산을 매년 아동, 청소년의회의 제안으로 운영이 가능한 지자체부터 형식적인 교육과 체험활동 수준으로 의회 회기를 마감하는 경우까지 차이가 크다. 청소년의회 운영은 관련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 확립이 중요한데 이는 청소년들이 대부분 학생이라는 위치의 특수성을 존중하고 교육뿐만 아니라 지자체 내에 아동, 청소년관련 정책의 정보 공유와 함께 자신의 역할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이 부여될 때 가능한 활동이다.

○ — 제4장 청소년 정치참여 해외사례 분석 및 시사점

- 1. 청소년 정치참여 해외사례
분석 개요
- 2. 영국 청소년 정치참여 사례
분석 및 시사점
- 3. 독일 청소년 정치참여 사례
분석 및 시사점
- 4. 미국 청소년 정치참여 사례
분석 및 시사점

1. 청소년 정치참여 해외사례 분석 개요

미국 및 유럽의 많은 국가에서는 청소년의 정치참여 활성화와 시민역량을 증진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 정부 차원에서 이와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해 오고 있다. 국가, 지방 자치 차원에서 청소년 참여활성화를 위한 지원방향과 법·제도적 지원체계에서는 차이가 있으나 국가 및 지방자치 정부의 특성에 따라 미래 민주 시민으로서의 한 사회를 이끌어 나갈 중요한 자원으로 정치 및 참여 활성화를 통한 성장과 발전의 기회로서 다양한 지원체계가 구축되어, 제공되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경우 선거권 연령 하향 조정과 발맞추어, 학교 내외의 다양한 공간에서 청소년들의 참여를 위한 요구 등이 확대 되고 있다. 이에 우리보다 앞서 청소년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법 제도적인 제도적 틀을 갖추고 이를 지원하고 있는 영국, 독일, 미국 등 해외사례를 살펴보고, 국가별 특성을 반영한 정치참여 활성화 현황 및 제도적 특성에 따른 그 장단점을 파악 하는 것은 추후 정책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각국의 특성을 파악하여 우리나라 청소년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발을 위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본장에서는 우리나라보다 앞서 청소년 정치 및 참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온 해외 각국의 현황과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청소년 정치참여 활성화를

16) 제4장 1절은 모상현 선임연구위원이, 2절은 큼청소년행복연구소 박경미 소장이, 3절은 평택대학교 이민희 교수가, 4절은 대구가톨릭대학교 천정용 교수가 집필하였다.

위한 정책 개발을 위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인 청소년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해 부합할 것으로 판단되는 영국, 독일, 미국의 청소년 정치참여 현황 및 실태 등을 통한 사례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청소년 우대정책 개발의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영국의 경우 전통의 의회 중심의 청소년 참여활동을 통한 청소년 참여활성화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독일은 비판 정치학적 관점에서 법·제도화된 정치적 참여에 고착된 청소년들의 문제 해결 및 갈등 해결을 위한 스스로의 참여 역량 제고를 위한 담론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끝으로 미국은 다양한 영역에서의 청소년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 방안 및 각 유관 기관별 유기적인 네트워크 체계의 강점과 청소년 참여기구의 실제적 기능과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였다.

특히 해당 국가별 청소년 정치참여 활성화 관련 전반적인 정책추진 방향, 청소년 정치참여 정책 현황, 법·제도적 지원 사례 및 주요 특성을 등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중앙정부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지자체 및 시도 단위, 학교 안팎에서의 청소년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발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위에서 열거한 해당 국가에서 추진되고 있는 주요 청소년 정치참여 활성화 사례를 통한 청소년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 동향은 다음과 같이 요약 될 수 있다.

첫째, 영국은 지난 20년간 청소년의회를 운영해오면서 청소년의 체계적인 정치참여구조를 마련하였고 학교 안팎의 정치참여 교육 지원을 통해 청소년의 정치참여 활성화를 지원 있다. 국가 차원에서 청소년 참여기구가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있지만, 중앙정부 수준의 정책측면에서 청소년참여를 강조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중앙과 지방정부, 의회, 학교, 청소년 단체와 청소년이 적극적인 서로 연계되어 있다. 무엇보다 영국에서의 청소년 정치참여를 위해 정부와 의회는 청소년의 선거와 투표가 실제상황과 같게 진행되도록 시스템을 구현하고, 청소년의회 의원에게는 영국의회에서의 토론 기회를 보장하고, 청소년의원의 합의된 의견은 정부와 의회에 공식적으로 전달된다. 이러한 결과물로 2020년도에는 청소년주도의

법안이 최초로 발의되기도 하였다. 즉, 청소년 정치참여는 청소년이 실제적 민주 절차에 참여하는 경험을 보장한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참여기구를 통한 의회 활동 등은 청소년의 권한을 강화하고 있다. 국가와 주 단위로 운영되는 청소년의회 이외에 지역 단위로 운영되는 600여 개의 지방청소년위원회(LYC) 역시 지방정부 및 의회의 지원으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러한 활동들은 청소년의 의견 전달과 사회 운동, 캠페인으로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의 직접적 관여와 관리의 영역까지 확대해 가며 청소년의 의견이 다방면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고, 정부가 다각적인 참여 방법 보장을 통해 청소년의 안정적이며 적극적인 참여기회를 확산시킨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독일은 오랫동안 청소년의 정치교육의 법·제도적 틀을 갖추고,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청소년 정치 활성화의 우수 사례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독일은 청소년 참여를 바라는 보는 두 가지 시각에서 다소 비판적으로 이해될 수 있다. 전자는 법, 정치,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있는 청소년의 정치참여가 사회화 대상으로서의 청소년들에게 제반 정치참여의 조건들을 인정해줌으로서 제도화된 관계들에 의한 규범적 구속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후자는 청소년의 능동적인 정치적 참여가 지역정치, 사회봉사, 학교와 같이 일상세계의 관계들과, 사회운동, 청소년 문화적 배경들과 같은 비제도적 참여형태들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청소년이 법, 정치, 그리고 청소년 참여형태들을 통해서 함께 형성되는 가에 대한 질문과, 또한 어떻게 현재의 세대적 위치에서 청소년 연령과 연계된 자유공간들과 참여형태들에 대한 문제들이 드러날 수 있는 가에 관한 질문들이다. 이러한 답론은 현재 독일에서 청소년 정치참여를 둘러싸고 논의되는 일종의 답론의 과정이며, 정치참여가 무엇보다 정치적, 사회적 통합의 중심적인 방법이라는 제도적 틀에 청소년이 잘 적응하게 되는 정부와 청소년이 상호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관점은 비판 사회학적 측면에서 기성세대의 권력형성을 위한 의사소통 매개체로 전환시키려는 의도로 이해될 수 있다. 이에 이러한 상황에서 정치참여를 위한

동기는 오직 청소년들이 제도화된 강요에 지배받는 대신에 스스로의 입장을 세워 나가는 과정과 문제해결을 위한 민주적 관계들 속에서만 찾아지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경우 청소년 정치참여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청소년 정치참여는 중요한 사회 변화를 초래하는데 기여해왔다. 미국의 청소년 정치참여 활성화와 관련된 특징 중 투표는 청소년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중요한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청소년 시민성 함양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학교와 학교 밖의 청소년단체와 사회교육 및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시민성 함양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으며, 청소년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각 주별 시민교육 강화와 지방정부와 협의기구들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참여확산 노력 등을 들 수 있다. 즉, 청소년의 정치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입법과 참여의 학습과 확산을 위한 공공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참여기구와 유사한 청소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그 기능과 역할은 자문형과 정부제도형을 분류 될 수 있다. 자문형 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단체나 시민교육 기관에서 활동한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구성원이 되어 자치단체 정부의 공공정책이나 이슈와 관련한 권고안을 제시하거나 특히 그 명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건강문제, 주거문제, 안전문제 등 청소년과 관련한 현안별로 별개의 위원회로 운영하는 것은 독특한 접근으로 볼 수 있다. 정부제도형 청소년위원단의 경우에는 정부와의 공동협력은 물론, 자치정부의 하나의 부서로서 기능하는 권한과 실행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청소년참여위원회나 청소년운영위원회와 유사하지만 실행 기능 측면에서 그 차이점을 확인하였다.

다음에서 예시로 들은 영국, 독일 및 미국의 청소년 정치참여 사례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 및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영국 청소년 정치참여 사례분석 및 시사점

1) 영국 청소년 정치참여 활동 개요

영국은 국가 지원의 청소년 참여기구를 중심으로 청소년의 다양한 참여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대표적인 청소년 참여기구로는 국가와 주¹⁷⁾ 단위로 운영되는 ‘청소년의회(Youth Parliament: YP)’가 있으며, 청소년들은 ‘청소년의회(YP)’를 통해 선거와 투표 등 민주절차를 경험하고, 합의된 의견을 정부와 의회에 전달하는 공식적인 기회를 얻는다. 또한 영국 정부는 정부의 정책 수립과 집행과정에 청소년이 관여할 수 있도록 청소년주도의 연구조사, 정책 모니터링, 디지털 플랫폼(Digital platform), 사회 행동(Social action) 등 다방면의 참여 방법을 법·정책·재정적 측면에서 지원하고 있다(Department for Digital, Culture, Media and Sport [DCMS], 2018a). 영국에서 운영되는 청소년 참여기구의 운영 주체와 법·정책, 예산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운영 주체

영국 청소년의 정치참여는 국가, 지방정부, 청소년 단체(비영리 자선단체), 청소년의 협력을 통해 수행되고 있다. 국가 단위에서는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Department for Digital, Culture, Media & Sport: DCMS)’에 소속된 ‘시민사회와 청소년부(Civil Society and Youth Directorate: CSYD)’가 청소년참여를 총괄하고 있으며, 영국의 각 주에서도 독자적인 의회와 행정부를 구성하기 때문에 주별로 청소년 참여기구를 설립·운영하고 있다. 또한 영국은 2010년부터 청소년

17) 영국은 잉글랜드, 웨일스,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로 구성된 국가이다. 이 장에서는 영국의 각 구성국을 ‘주’로 구분한다.

사업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화하여 지역 중심의 청소년 참여기구가 활성화 되어 있다(Local Government Association, 2019.3.27.). 이러한 국가와 지역 중심의 청소년 참여기구는 청소년 주도(Youth-led)의 자선단체와 청소년에게 운영 주도권을 이양하는 형태로 협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청소년 참여기구 대부분이 청소년의 직접운영·관리·결정의 권한을 보장하고 있다.

청소년 참여기구의 운영방법은 정부의 직접운영과 위탁운영으로 구분된다. 직접운영은 정부가 자체적으로 전담인력을 고용하는 경우로, 각 주에 설치된 청소년 의회가 이러한 운영형태를 갖고 있다. 위탁운영은 정부가 청소년 사업을 수행하는 자선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운영하는 형태로 청소년 참여기구 대부분이 이에 해당한다. 현재 정부로부터 청소년 참여기구의 운영을 수탁한 자선단체로는 영국 청소년위원회(British Youth Council: BYC)가 대표적이다. 영국청소년위원회(BYC)¹⁸⁾는 정부와 협약을 통해 2011년부터 청소년 참여기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정부가 새로운 단체를 공모한 바 있으나 영국청소년위원회(BYC)가 재선정되었다. 정부 중심의 직접운영과 위탁운영체제 이외에도 다양한 비영리 청소년 단체들이 청소년의 선거, 투표, 청소년의 의견 수렴 등 세부영역에서 청소년 참여를 자발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2) 법·정책적 근거

2021년 7월 기준으로 영국에는 청소년의 정치참여를 보장하는 구체적인 법 조항은 없으나, 청소년 관련 법을 통해 청소년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18) 영국청소년위원회(BYC)는 청소년주도 자선단체로 1948년에 국가청소년위원회로 설립되었으나 1963년 정부로부터 독립하여 자선단체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영국청소년위원회(BYC)는 국가청소년위원회로서 25세 이하 청소년에게 이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한 결정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청소년들이 지역, 국가 및 국제적으로 사회와 민주적 의사결정에 다양한 자원봉사, 캠페인, 의사결정자, 리더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주요 기능이다(최창욱, 전명기, 2013; British Youth Council, 2021a).

이와 관련된 법으로는 교육감찰법(Education and Inspection Act: EIA)과 국가 시민서비스법(National Citizen Service Act: NCSA)이 있다. 교육감찰법(EIA, 2006)은 지방정부의 청소년¹⁹⁾ 서비스 지원역할을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정부 연합회(Local Government Association: LGA)²⁰⁾는 이를 기반으로 ‘효과적인 청소년 서비스를 위한 6가지 핵심 원칙²¹⁾’을 제시하여 청소년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역할에 참여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익숙해지도록 돕는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²²⁾. 국가시민서비스법²³⁾은 잉글랜드에 거주하는 16~17세 청소년의 사회 행동(Social action)을 지원하는 법령으로, 사회 행동이 청소년의 정치참여와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지만, 청소년의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는 수단으로써 사회 행동을 강조하고 있다(이광호, 송지은, 2016; DCMS, 2018a).

영국 청소년의 참여기구는 <표 IV-1>과 같이 정부의 정책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2010~2015년 정부 정책: 청소년’은 유스보이스프로그램(Youth Voice Programme)으로 영국청소년의회, 청소년선택위원회, 지방 청소년위원회 등을 명시하였고 현재까지도 대부분의 유스보이스프로그램이 지속되고 있다(Cabinet office & Department for Education, 2013). 또한 ‘2018 시민사회전략(Civil Society Strategy: CSS)’은 청소년이 국가정책 수립과정에 참여하는 권한을 강조하며 ‘시민사회 청소년운영단’, ‘청소년감찰단’, ‘디지털 참여’ 등을 제시하여, 청소년의 참여 권한을 확대하고 있다(Local Government Association, 2019.3.27; DCMS, 2018a).

19) 교육감찰법에서 청소년 나이는 13~19세로 정의되나, 학습능력이 부족한 경우 24세까지 포함한다.

20) 지방정부연합회는 잉글랜드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21) ① 청소년주도(Youth-led), ② 포괄성, 평등성 및 다양성(Inclusivity, equality and diversity), ③ 존중(Respect), ④ 질적 향상, 안전, 웰빙(Quality, safety and well-being), ⑤ 임파워먼트(Empowerment), ⑥ 긍정적 접근(Positivity Empowerment)

22) Local Government Association. Bright Futures: our vision for.

<https://tinyurl.com/4ckpzrca> 에서 2021년 7월 25일 인출.

23) National Citizen Service Act 2017.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2017/15/contents/enacted> 에서 2021년 7월 2일 인출.

표 IV-1. 영국의 청소년 정치참여 관련 정책

정책	청소년참여 영역	세부내용
2010-2015 정부 정책: 청소년	보다 넓은 기회제공 (Providing wider opportuniti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스보이스프로그램(Youth Voice Programme)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영국청소년의회(UK Youth Parliament) ② 청소년선택위원회(Youth Select Committee) ③ 국가조사그룹(National Scrutiny Group) ④ 지방청소년위원회(Local Youth Councils) • 국가시민서비스(NCS)의 확장 • 청소년의 사회 행동 지원 기관 역량 강화
2018 시민사회전략 ¹⁾	청소년을 위한 기회 (Opportunities for young peop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과 국가정책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시민사회 청소년 운영단(Civil Society Youth Steering Group): 청소년 관련 정책 및 정부 계획의 개발과 수립과정 감독 ② 청소년감찰단(Youth Commissioners and Inspectors Group): 청소년 관련 국가 프로그램의 위원회, 모니터링, 평가에 참여 ③ 디지털 참여(Digital Solution):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청소년의 관점 파악 • 국가시민서비스(NCS)

* 출처: Cabinet office & Department for Education(2013)과 DCMS(2018a)의 내용을 발췌하여 구성함.

* 주: 1) 시민사회전략은 시민과 조직이 국가의 통제에서 벗어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정부 정책이다. '사람', '장소', '사회적 분야', '민간분야', '공공분야' 등 총 5개 분야에서 15개의 수행과제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중 '사람' 분야에 제시된 미션에 '청소년을 위한 기회(Opportunities for Young People)'가 포함되어 있다.

(3) 운영예산²⁴⁾

영국 청소년의 정치참여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정부 보조금과 기금, 자선단체의 후원금 등을 통해 마련된다. 현재 운용되는 정부 보조금은 <표 IV-2>에서 보는 바와 같이 ① 청소년참여보조금(Youth Engagement Grant: YEG), ② 유스보이스

24) 잉글랜드에서 운용되는 예산을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그룹보조금(Youth Voice Groups Grant: YVGG), ③ 영국청소년의회보조금(UK Youth Parliament Grant: UKYP Grant)이 대표적이다. 정부 보조금은 기존에 ‘Youth Voice UK’이라는 이름으로 정부가 주도하는 모든 청소년 참여 기구를 통합·지급하였으나, 2021년부터 참여기구의 특성별로 정부 보조금을 구분하고 있다. 정부는 비영리 자선 기부단체를 대상으로 운영단체를 공모·선정하여 1년 단위로 해당 보조금을 지급한다. 운영단체로 선정된 단체는 자체예산의 50~70% 이내에서 보조금을 수령 할 수 있으며, 나머지 사업비는 운영단체가 후원금을 통해 마련하는 구조이다.

표 IV-2. 영국의 청소년참여 활동 지원 예산¹⁾

구분	세부내용				보조금 지원 대상
	명칭	금액(파운드)	지원방법	사용영역	
1	Youth Engagement Grant	58,350	연간 단체운영비의 50% 이내	민간청소년 참여기구운영	비영리 자선 기부단체 (Charities, benevolent & philanthropic organisations)
2	Youth Voice Groups Grant	17,000	연간 단체운영비의 50% 이내	국가청소년 참여기구	
3	UK Youth Parliament Grant	233,000	단체운영비의 70% 이내	영국 청소년의회	
4	#iwill Fund	40million	1:1매칭펀드	청소년 사회 행동	청소년 및 청소년 조직

* 출처: DCMS(2018b, 2021.3.12., 2021.7.15.)와 #iwill(<https://www.iwill.org.uk/about-us/iwillfund> 에서 2021년 7월 2일 인출)에서 발췌한 내용으로 재구성함.

* 주: 1) 청소년참여를 지원하는 예산은 정부 보조금 이외에도 다양한 기금으로 형성되어 청소년 활동을 주도하는 비영리 자선 기부단체 또는 프로젝트를 계획하는 청소년에게 지급되고 있다.

정부 보조금의 내용을 살펴보면, 청소년참여보조금(YEG)은 청소년들이 그들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국가 수준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지원된다. 이와 관련된 프로그램의 운영단체로 선발되면 자체 운영비의 50% 이내에서 보조금을 수령 할 수 있다(DCMS, 2021.7.15.).

두 번째, 유스보이스그룹보조금(YVGG)은 2018년 시민사회전략(CSS)에 근거해 신설된 유스보이스프로그램 지원금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정부 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직접 감시하고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는 참여기구로 구성되며, 운영단체로 선발되면 단체운영비의 50% 이내에서 보조금을 지원받는다(DCMS, 2018b).

세 번째, 영국청소년의회보조금(UKYP Grant)은 영국청소년의회(UKYP)에 대한 지원금으로 운영단체의 연 예산 70% 이내에서 233,000파운드가 지원된다, 해당 보조금의 규모는 최근 3년간 같은 수준을 유지되고 있으나, 2011년과 비교해 30% 감소하였다²⁵⁾. 더욱이 브렉시트로 인해 유럽연합에서 지원되던 매칭펀드도 중단되어 영국청소년의회(UKYP)의 예산은 과거와 비교하면 축소되었다. 영국 청소년의회보조금(UKYP Grant)은 영국청소년의회(UKYP)의 국가 단위 행사를 운영하는 데 사용되며, 청소년의원의 선출을 위한 비용과 인력 등은 지방정부에서 별도로 부담한다. 하지만 지방정부의 예산집행에 관한 법적 강제조항은 없다. 추가로 영국의회(UK Parliament)는 청소년의원의 영국의회 참석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DCMS, 2021.3.12.).

마지막으로 #iwill Fund²⁶⁾는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DCMS)와 국가 복권공동모금(National Lottery Community Fund)의 협력기금으로, 잉글랜드 기반 #iwill Movement²⁷⁾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2016년 11월에 설립되었다. 해당 기금이 지원하는 #iwill Movement는 10~20세 청소년이 지역사회의 긍정적 변화를 위해 참여하는 사회 행동으로, 자원봉사, 후원, 캠페인 등을 말한다

25) CYP Now(2021.4.26.). UK Youth Parliament tender 'set up to fail' by government, campaigners warn.

<https://www.cypnow.co.uk/news/article/uk-youth-parliament-contractor-set-up-to-fail-campaigners-warn> 에서 2021년 7월 2일 인출.

26) 2016년 이전에는 National Youth Social Action Fund가 같은 임무를 수행하였다.

27) 기존 명칭은 #iwill Campaign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었으나 2020년 후반부터 명칭이 변경되었다.

(DCMS, 2021.7.19.). 또한 청소년이 정치참여의 목적으로 진행하는 캠페인이나 청소년 이슈에 대한 연구조사 등 다양한 참여 활동이 #iwill Fund의 지원을 받고 있다. #iwill Fund는 펀드에 참여하는 단체와 1:1 기금구조를 형성하여 청소년의 사회 행동을 지원하며, 사회 행동에 대한 아이디어를 가진 청소년은 펀딩에 참여하는 단체에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기금을 지원받는 형식이다. 영국에는 #iwill Fund 이외에도 지역별로 다양한 기금이 조성되어 있으며, 청소년의 사회 행동을 지원하고 있다²⁸⁾.

2) 영국 청소년 정치참여 유형: 지역별 의회 및 참여 프로그램

영국의 청소년 참여기구(Young Citizens)는 국가 주도의 청소년의회(Youth Parliament)²⁹⁾와 유스보이스프로그램(Youth Voice Program)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이 주도하는(Youth-led) 자선단체의 자발적 참여 활동도 활성화되어 있다. 더불어 영국은 청소년의 사회 행동(Social action)을 독려하기 위한 기금과 국가조직을 구성하여 청소년들이 자연스럽게 자신들과 관련된 이슈에 관심을 두도록 유도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영국 청소년의 참여 유형을 1) 청소년의회, 2) 유스보이스 프로그램, 3) 비영리 자선단체의 청소년참여 지원, 4) 청소년 사회 행동(Social action)의 순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청소년의회

영국의 청소년의회(YP)는 국가 단위에서 운영하는 영국청소년의회(UK Youth Parliament: UKYP)와 각 주 정부에서 운영하는 스코틀랜드 청소년의회(Scottish

28) #iwill. What is the #iwill Fund?. <https://www.iwill.org.uk/about-us/iwillfund> 에서 2021년 7월 2일 인출.

29) 청소년 정치참여 관련 정책에 의하면, 영국청소년의회는 유스보이스프로그램 중 하나로 분류된다.

Youth Parliament: SYP), 북아일랜드 청소년의회(Northern Ireland Youth Assembly: NIYA)가 있다.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경우 별도의 청소년의회를 구성하지 않고 영국청소년의회(UKYP)의 운영지침에 따르고 있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별도의 청소년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기도 한다(e.g. Young Essex Assembly)³⁰⁾.

영국에서 운영하는 모든 청소년의회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2조에 따른 청소년 참여를 기본 목표로 제시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이 민주적 절차에 참여하여 자신들의 의견을 의사 결정자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둔다. 각 청소년 의회의 구성을 살펴보면 <표 IV-3>과 같다.

표 IV-3. 청소년의회 구성

청소년의회	설립연도	참가 청소년 나이	구성 ¹⁾
영국청소년의회 (UKYP)	2000	11~18	205개 선거구 / 379개 의석
스코틀랜드청소년의회 (SYP)	1999	12~25 (청소년의원은 14세부터)	32개 선거구, 11개 국가 자발적조직 / 153개 의석
북아일랜드청소년의회 (NIYA)	2020	13~17	18개 선거구 / 90개 의석

* 출처: British Youth Council(2019), Scottish Youth Parliament(<https://syp.org.uk/> 에서 2021년 7월 2일 인출), Northern Ireland Youth Assembly(<http://www.niyouthassembly.org/> 에서 2021년 7월 2일 인출)에서 발췌한 내용으로 재구성함.

* 주: 1) 2021년 7월 기준으로 제시하였음.

① 영국청소년의회(UKYP)³¹⁾

영국청소년의회(UKYP)는 영국 전역의 11~18세 청소년들이 민주적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그들의 선출된 목소리를 사용하여 사회변화를

30) Young Essex Assembly. <https://www.young-essex-assembly.org.uk/> 에서 2021년 7월 2일 인출.

31) British Youth Council(2019). UK Youth Parliament Rulebook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함.

주도하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영국청소년의회(UKYP)는 1998년 보수당 의원이었던 앤드류 로(Andrew Rowe)에 의해 최초로 제안되었으며, 2000년에 교육부의 승인을 얻어 설립되었고, 청소년의원은 2001년에 최초로 선발되었다 (Hayes, 2021). 현재는 영국청소년위원회(BYC)가 정부로부터 수탁하여 유스보 이스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의원의 선출은 205개 선거구에서 진행되며, 총 379개 의석이 배정되어 있다. <표 IV-4>는 2019년 기준 영국청소년의회(UKYP)의 선거구별 의석수를 나타낸다.

표 IV-4. 영국 청소년의회 선거구별 의석 배정(2019년)

지역	선거구(수)	의석(수)
잉글랜드	152	295
북아일랜드	18	18
스코틀랜드	8	16
웨일스	21	23
기타(Army Welfare Service)	2	4
총합	201	356

* 출처: British Youth Council(2019). UK Youth Parliament Rulebook. Appendix1을 재구성한 것임.

2019년은 기존 205개 선거구 중 4개 지역을 제외한 201개 선거구 356명의 의원이 선출되었다³²⁾. 선거구의 의석수는 해당 지역의 청소년 인구비율³³⁾에 따라 결정되는데, 해외의 영국 주둔군 자녀들을 대표하는 청소년의원의 의석도 보장하고 있다. 또한 성별, 소수민족, 장애, 취약계층의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구성

32) 각 지역의 청소년의원 선출과 활동 비용은 해당 선거구에서 부담하고 있다. 해당 예산은 법적 강제사항이 없으므로, 지역에 따라 예산상의 이유로 의석수를 변동할 수 있다.

33) 청소년 인구 22,800명당 1개 의석이 배정됨; 잉글랜드 308명(1/22,800), 북아일랜드 18명(의회 선거구 기준), 스코틀랜드 25명(1/22,800), 웨일스 24명(1/22,800), 해외 영국 주둔군 자녀 4명.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잉글랜드의 경우 청소년의원으로 출마하기 위해서 반드시 영국청소년위원회(BYC) 회원으로 가입해야 하며, 스코틀랜드의 경우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청소년의회에서 청소년의원으로 선출된 후에 영국청소년의회(UKYP) 의원에 출마할 수 있다. 청소년의원 선출과정은 지방의회가 담당하며 의원의 임기는 2년³⁴⁾이다.

선출된 청소년의원은 의회(UKYP) 활동을 위한 규정집을 직접 개발하여 지침으로 활용하고 있다. 규정집에서 제시하는 청소년의원의 행동강령은 ‘정당과 정치적 견해를 대변하지 않고 오직 청소년의 이슈를 대변하는 활동’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영국청소년의회(UKYP) 내에 특별한 계급을 두지 않을 것을 정하고 있다. 그 밖에 해당 규정집에서 설명하는 청소년의원의 역할을 운영절차에 따라 살펴보면 <표 IV-5>와 같다.

표 IV-5. 영국 청소년의회 정기회의와 청소년의원 활동내용

구분	회의 / 활동명	내용
1	정기회의 (Annual conferen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중 1회 개최 참석대상 : 청소년의원 전원 내용 : 청소년의원의 공약(청소년 이슈) 논의를 통해 ‘청소년 회담과 투표’안건 결정 / 청소년의원 대상 리더십 교육 / 네트워크형성 등
2	청소년회담과 투표 (Make Your Mark Ballot)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중 1회 개최 참석대상 : 전국청소년 내용 : 정기회의에서 결정된 안건(청소년 이슈)으로 전국 청소년 투표 진행 / 주요 이슈 선정(국가, 주, 지역 단위)
3	영국의회 참석 (House of Commons sitt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중 1회 개최 참석대상 : 청소년의원 전원 내용 : 영국의회 참석, ‘영국청소년회담과 투표’에서 선정된 이슈에 관해 의사 발언 후 청소년의원 투표를 통해 차기년도 국가캠페인 우선순위 선정

34) 2019년에 임기를 시작한 청소년의원의 경우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해 임기가 2년 연장되어 2022년 2월까지 활동이 보장된다.

구분	회의 / 활동명	내용
4	법안 발의 및 캠페인 (Draft Bill and Campaig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안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국의회 참석을 통해 최종 결정된 이슈를 기반으로 법안 발의(2020년에 최초 시행) • 캠페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중 개최(차기 년도) - 영국의회 참석에서 결정된 우선순위 이슈를 중심으로 연중 캠페인 진행
5	운영위원회의 ¹⁾ (Procedures Group Meeting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국청소년의회 운영위원회에 의해 요청된 회의 • 내용 : 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논의 / '영국의회 참석' 시 의사 발언자(Debate Leads) 15명 선출

* 출처: British Youth Council(2019)의 내용을 재구성한 것임.

* 주: 1) 운영위원회는 영문으로 Procedures Group 또는 Steering Group으로 불리며, 영국청소년의회(UKYP)의 운영을 맡은 별도의 조직이다. 운영위원회는 16~18세 청소년으로 청소년의원이나 운영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으로 선출된다.

가. 정기회의(Annual conference)

정기회의는 연 1회 진행되며 선출된 청소년의원이 모두 참석한다. 청소년의원은 해당 회의에서 자신들의 공약(청소년 이슈)과 관련한 논의를 하고, 논의를 통해 확정된 청소년 이슈들은 추후 진행하는 '청소년회담과 투표(Make Your Mark Ballot)'에서 주요 안건으로 제시된다. 그 밖에도 청소년의원은 정기회의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리더십에 관한 교육을 받는다.

나. 청소년회담과 투표(Make Your Mark Ballot)

세계에서 가장 큰 청소년회담인 Make Your Mark는 전국에 있는 청소년들이 청소년의회의 정기회의를 통해 합의된 안건으로 토론을 진행하고 투표에 참여하는 과정이다. 회담에 제시된 안건들은 국가, 주, 지역 단위로 구분되어 있으며, 투표를 통해 선정되는 청소년 이슈들도 국가, 주, 지역을 구분하여 선정된다. 청소년회담과 투표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학교, 영국의회(지원팀: Education and Engagement

Team)의 지원으로 진행되며, 투표는 종이투표로 진행됐으나, 2020년부터는 코로나 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다.

다. 영국의회 참석(House of Commons Sitting)

청소년의원 전원은 매년 11월³⁵⁾에 영국의회(House of Commons)에 참석하여 Make Your Mark Ballot을 통해 선정한 국가 단위 이슈 중 상위 5개 이슈에 관한 의사 발언을 하고, 논의와 투표를 통해 최종 이슈를 선정한다. 각 주와 지역의 이슈는 지역 의회에서 논의된다. 영국의회에 참석하여 의사 발언을 하는 Debate leads는 15명으로 구성되는데, 각 주를 대표하는 청소년의원들과 해외 영국 주둔 군 자녀를 대표하는 청소년의원, Make Your Mark Ballot에서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인 지역의 대표 등으로 구성된다.

라. 법안 발의 및 캠페인(Draft Bill and Campaign)

영국의회 참석(House of Common Sitting)을 통해 최우선 이슈가 정해지면, 청소년의원들은 해당 이슈를 기반으로 법안을 발의하며, 해당 이슈는 차기 년도 연중 캠페인의 주제가 된다. 선정된 이슈를 법안으로 발의하는 과정은 2020년에 최초로 시도되었다(UK Parliament Education and Engagement Service, 2020). 또한 청소년의원은 해당 이슈의 홍보를 위해 청소년들과 함께 캠페인을 진행하고, 타 청소년 참여기구들과 협력하여 조사연구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참여 활동을 수행한다. <표 IV-6>은 연도별로 선정된 주제이다.

35)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과 2021년은 일정과 방법이 변경되었다.

표 IV-6. 연도별 청소년투표를 통해 선정된 주제

연도	단위	투표수	투표율	선정된 주제
2011	국가	65,532	1.10%	교통수단(Transport)
2012	국가	253,637	4.31%	평생교육과정(Curriculum for life)
2013	국가	478,386	8.12%	16세 선거권, 평생교육과정
2014	국가	846,488	14.88%	정신건강, 최저생활임금
2015	국가	969,992	16.46%	정신건강, 인종차별과 종교차별 해결
2016	국가	978,216	16.60%	16세 선거권, 평생교육과정
2017	국가	954,766	16.20%	16세 선거권, 평생교육과정
2018	국가	1,106,788	18.80%	16세 선거권, 흉기 범죄
2019	국가	838,288	13.93%	기후변화, 흉기 범죄
	주	840,322	14.04%	
2020	국가/주	185,677	3.13%	대학 학비 면제, 정신건강, 기후비상사태 (climate emergency) 플라스틱 오염 (stop plastic pollution)
	지역	180,786	3.05%	

* 출처: Youth Parliament(2020). Make Your Mark 2020 Results Report의 내용을 표로 재구성함.

마.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회(Procedure Group: PG)는 영국청소년의회(UKYP)의 운영을 위해 선출된 그룹이다. 운영위원은 청소년의원 또는 운영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 16~18세 청소년으로 선정되며, 임기를 수행하는 동안 청소년의원이 될 수 없고, 투표로 최대 2년간 임기 연장이 가능하다. 이들은 주로 청소년의원이 참석하는 정기회의, 영국의회 참석, 청소년회담 및 투표 등 전반적인 운영을 지원한다. 운영위원회의(Procedures Group Meeting)는 운영위원의 요청으로 청소년의원들의 참석 하에 진행되며, 영국청소년의회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고, 영국의회 참석 시 발의하는 Debate leads를 선출한다.

② 스코틀랜드 청소년의회(Scottish Youth Parliament, SYP)³⁶⁾

스코틀랜드 청소년의회(SYP)는 청소년들이 민주적인 목소리로, 자신들이 직면한 문제를 논의하고, 변화를 주도하는 국가적 플랫폼으로서 미션을 제시하는 청소년 참여기구이다. 스코틀랜드 청소년의회(SYP)는 1999년 6월 30일에 공식 출범하였으며, 영국 역사상 292년 만에 스코틀랜드의회가 부활하면서, 청소년의 적극적인 정치참여를 유도하고자 기존 청소년위원회(Scotland Youth Council: SYC)를 스코틀랜드 청소년의회(SYP)로 승격하였다. 현재 청소년의회(SYP)는 스코틀랜드의회가 직접운영 중이며, 모든 활동은 청소년주도로 진행된다.

스코틀랜드 청소년의회(SYP)는 32개 지자체와 11개의 국가 자발적 조직(National Voluntary Organizations, NVO)³⁷⁾에서 선출된 청소년의원(Member of SYP, MSYP) 153명(2021년 7월 기준)으로 구성된다. 임기는 18개월로 14~25세 청소년은 누구라도 청소년의원에 출마할 수 있으며 스코틀랜드에 거주하는 12~25세 청소년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청소년의원 선거에 후보로 출마를 희망하는 청소년은 청소년 이슈를 공약으로 제시함으로써 출마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후보 출마 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청소년이 거주하는 선거구의 지원인력(주로 청소년지도사)이 청소년의 선거 준비과정을 돕는다. 또한 청소년의원 지원자는 후보자 훈련(Candidate training)을 받게 되는데, 훈련을 이수한 이후에도 선거출마를 확실시하면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시작할 수 있다. 청소년의원 선출은 청소년의회에 협력하는 국가자발적조직(NVO), Young Scot의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³⁸⁾.

36) Scottish Youth Parliament. The Scottish Youth Parliament "The democratically elected voice of Scotland's Young people".

<https://syp.org.uk/wp-content/uploads/2021/04/Stand4SYP-Engagement-Presentation-final.pdf> 에서 2021년 7월 2일 인출.

37) 2021년 7월 기준 11개 조직이 SYP에 참여하고 있으며, 참여조직은 상시 모집 중임. 참여 중인 자발적 조직: ① The Boy's Brigade ② Carers Trust ③ Church of Scotland ④ Federation of Student Islamic Societies ⑤ Girlguiding Scotland ⑥ LGBT Youth Scotland ⑦ RNIB Haggerty ⑧ Scripture Union ⑨ Scouts Scotland ⑩ Who Cares? Scotland ⑪ YMCA.

스코틀랜드 청소년의회(SYP)는 이사회(Board), 외부 자문단, 주제별 위원회(Subject Committees, SC), 주제별 위원회 대표단(Conveners Group, CC), 크리에이티브 홍보팀(Creative Communications Team, CCT)으로 구성된다. 먼저, 이사회(Board)는 의장 1명, 부의장 1명, 이사 5명 등 7명의 청소년으로 구성되며 매년 6월에 진행되는 스코틀랜드 청소년의회(SYP)의 정기회의(Annual General Meeting)에서 청소년의원들에 의해 선출된다. 이들은 스코틀랜드 청소년의회(SYP)를 대표하여 정기국무회의(Annual cabinet meeting), 정당 간 교섭 회의(Cross party meeting) 등에 참석하여 청소년의 의견을 전달하고, 스코틀랜드 의회에 청소년으로부터 수렴한 의견을 전달한다. 두 번째 외부 자문단은 스코틀랜드 청소년의회(SYP) 이사회에 소속된 조직으로 성인 4명으로 구성되며, 이사회로부터 요청받는 안전에 대한 전문지식을 공유한다. 세 번째, 주제별 위원회(SC)는 청소년 이슈를 중심으로 구성된 위원회로써, 매년 6월에 정기회의를 통해 선정된 주제를 중심으로 주제별 위원회(SC)가 구성된다. 청소년의원은 주제별 위원회(SC) 중 하나의 위원회에 소속되어 활동을 전개한다. 현재 운영되는 주제별 위원회(SC)는 ① 문화미디어 ② 교육과 평생학습 ③ 평등과 인권 ④ 영국과 국제적 관계 ⑤ 건강과 웰빙 ⑥ 직업, 경제, 공정한 일 ⑦ 정의 ⑧ 사회안전 ⑨ 운동과 레저 ⑩ 교통, 환경, 농촌 등이 있고, 최근에 코로나19에 대한 주제가 추가되었다. 네 번째 주제별 위원회 대표단(CG)은 주제별 위원회에서 선출된 청소년의원으로서, 스코틀랜드 청소년의회(SYP)에서 진행되는 모든 활동과 주제별 위원회(SC) 회의 등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마지막으로 크리에이티브 홍보팀(CCT)은 청소년들이 직접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하여 다른 청소년들과 온라인을 통해 소통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청소년의회는 정기회의를 통해 선정된 주제를 기반으로 청소년들의 추가적인 의견을 장기간 수렴하며, 이를 기반으로 영국청소년의회(UKYP)와 같이 투표를

38) Scottish Youth Parliament. <https://syp.org.uk/> 에서 2021년 7월 2일 인출.

통해 주요 이슈를 선정, 캠페인을 진행한다. 또한 이사회(Board)는 청소년이 선정한 이슈를 정책결정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최근에 스코틀랜드 청소년의회(SYP)는 청소년의원의 공약과 청소년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향후 자신들이 목표하는 '2021~2016 Manifesto: From Scotland's Young People'을 작성하여 정책결정자에게 홍보하고 있다.

③ 북아일랜드 청소년의회(Northern Ireland Youth Assembly, NIYA)

북아일랜드의회는 2020년 7월에 북아일랜드 청소년의회(NIYA)의 설립을 발표하였다. 2021년부터 청소년을 모집하고 앞으로 2년간 의회의 구조와 과정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전에는 별도의 의회를 구성하지 않고 2013년부터 영국청소년위원회(BYC)의 지원을 받아 영국청소년의회(UKYP)에서 활동할 청소년의원을 선출하는 형태였으나, 2017년에 정부 예산으로 인해 중단되었다가, 2020년에 청소년의회를 구성한 경우이다. 북아일랜드 청소년의회는 13~17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2021년 4월 26일부터 5월 21일까지 청소년의원 후보자를 모집하였다. 청소년의회는 18개 선거구와 지역의 특성화 분야에 소속된 청소년을 대상으로 90여 명의 청소년의원을 무작위 선출(Random number generator)기법을 통해 선출할 예정이다. 청소년의원의 임기는 2년이며 소모임 등의 정기모임 및 4회의 정기회의를 진행하고, 일 년에 두 번 북아일랜드의회 의장과의 회담을 계획하고 있다³⁹⁾.

(2) 유스보이스프로그램(Youth Voice Programme)

영국에서 유스보이스프로그램(Youth Voice Programme)은 청소년 참여기구의 총칭으로 사용되며 앞서 기술한 청소년의회를 포함한 청소년의 정치참여기구를 말한다⁴⁰⁾. 앞서 기술한 영국청소년의회(UKYP)를 제외하고 현재 운영되는 유스

39) Northern Ireland Youth Assembly. <http://www.niyouthassembly.org/> 에서 2021년 7월 2일 인출.

보이스프로그램으로는 청소년선택위원회, 지역청소년위원회가 대표적이며, 최근 시민사회전략으로 신설된 유스보이스프로젝트(청소년운영단, 청소년감찰단, 디지털 참여) 등이 있다.

① 청소년선택위원회(Youth Select Committee: YSC)

청소년 선택위원회(YSC)는 영국의회(UK Parliament)와 영국청소년위원회(BYC)의 지원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로, 11~18세에 해당하는 11명의 청소년으로 구성되어 있다. 선택위원회의 위원은 영국청소년의회 청소년의원, 지역청소년위원, 각 주(잉글랜드,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웨일스)에서 선출된 의원 등으로 구성된다. 청소년선택위원회는 Make Your Mark Ballot에서 선정된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조사를 수행하고 토론을 거쳐 관련 주제에 관한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하는 역할을 한다. 정부는 이에 대한 응답 보고서를 작성할 의무를 갖는다⁴¹⁾.

② 지역청소년위원회(Local Youth Council: LYC)

지역청소년위원회(LYC)는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의 관점을 대표하는 청소년 주도의 단체로 영국 전역에 620여 개의 위원회가 활동하고 있다. 지역청소년위원회(LYC)는 청소년의 관점이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토론회, 캠페인을 진행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을 검토하고 지역 청소년 서비스를 점검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동시에 지방정부와 함께 청소년기회기금⁴²⁾(Youth Opportunity Fund)을 관리하고 지역과 관련된 조사위원으로도 활동한다⁴³⁾.

40) 유스보이스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영국청소년위원회(BYC)는 청소년이 참여 프로그램을 유스보이스비클(Youth Voice Vehicle)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41) British Youth Council(2021b). Youth Select Committee.

<https://www.byc.org.uk/uk/youth-select-committee> 에서 2021년 7월 28일 인출.

42) 청소년이 자신의 지역사회에서 수행하는 활동과 프로젝트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금으로 지방정부에서 운용하고 있다(British Youth Council, 2021a).

② 유스보이스프로젝트(Youth Voice Project: YVP)⁴⁴⁾

유스보이스프로젝트(Youth Voice Project)는 영국이 2018년에 수립한 시민 사회전략(CSS)에서 계획한 청소년 참여기구로, 청소년들이 국가의 정책 형성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젝트이다. 2019년부터 2020년 3월까지 파일럿 프로젝트로 운영되었다가 2021년부터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되었다. 현재 유스보이스프로젝트는 영국청소년위원회(BYC)가 운영을 하고 있다. 유스보이스프로젝트(YVP)는 잉글랜드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10~25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세부 프로그램은 <표 IV-7>과 같다.

표 IV-7. 유스보이스프로젝트(Youth Voice Project)

프로젝트명	내용
청소년운영단 (Civil Society Youth Steering Group)	•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 및 정부 계획의 개발과 수립과정 감독
청소년감찰단 (Youth Inspectors Group)	•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국가 프로그램의 위원회, 모니터링, 평가에 참여
디지털 참여 (Digital platform)	•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청소년의 관점 파악

* 출처: DCMS(2018a). Civil society strategy: Building a future that works for everyone. p.45의 내용을 표로 구성함.

가. 청소년운영단(Civil Society Youth Steering Group)

청소년운영단은 정부의 정책 개발과 수립과정을 감독하는 청소년 그룹으로 15~24세 3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청소년들의 의견을 캠페인, 회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집하여 관련된 이슈를 중심으로 프로젝트를 운영하기도 하고, 관련된 정책 결정에 발언권을 얻을 수 있다. 2021년 현재는 영국 정부의 환경정책

43) British Youth Council(2021c). Local Youth Council Network.

<https://www.byc.org.uk/uk/local-youth-council-network> 에서 2021년 7월 28일 인출.

44) DCMS(2018a)를 기반으로 작성함.

분야에서 청소년들의 의견을 제안하기 위해 청소년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

나. 청소년감찰단(Youth Inspectors Group)

청소년감찰단은 청소년에게 영향을 주는 국가 프로그램을 심의하거나, 모니터링, 평가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청소년감찰단은 청소년들이 지역의 서비스를 직접 향상하고, 자신들이 거주하는 지역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다. 이에 청소년 감찰단에게는 지역 방문과 검열을 통해 국가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국가보조금 결정자로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또한 청소년감찰단은 그들의 검열을 통해 확인된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과 정책이 향상될 수 방향에 대해 정부에 제안할 수 있다.

다. 디지털 플랫폼(Digital platform)

디지털 플랫폼은 청소년이 정부 정책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는 플랫폼이다. 디지털 플랫폼은 청소년운영단이 진행한 디지털 청소년참여 프로젝트(digital youth engagement project)를 통해 구체적인 방향성을 정하였고, 2020년 7월 2일에 시작되었다. 현재 사용되는 디지털 플랫폼은 인스타그램(Instagram page: Involved)으로 13~25세 청소년이 정부에 의견을 제시하는 틀로 사용하고 있으며, 온라인(라이브)을 통해 청소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3) 비영리 자선단체의 청소년참여 지원

영국에서는 청소년의 정치참여를 지원하는 비영리 자선단체가 활성화되어 있다. 해당 단체들은 청소년과 청년이 정치와 민주주의에 관심을 두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도 하고, 청소년들의 의견을 공유하거나 표현할 수 있도록 토론의 장을 마련하기도 한다. 이러한 단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정치 문해력 교육 지원단체

Shout Out UK(SOUK)는 청소년 네트워크로, 더욱 많은 청소년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정치 문해력 교육을 제공하며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생각과 의견을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플랫폼이다. SOUK의 주된 활동은 청소년의 정치·미디어 문해력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인데, 이를 위하여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워크숍과 훈련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유스보이스 플랫폼을 운영하여 청소년이 자신들과 관련된 이슈로 유급 기사를 작성하도록 지원한다⁴⁵⁾.

② 청소년 정치참여 지원단체

청소년의 참여를 지원하는 자선단체인 My Life, My Say(MLMS)는 청년주도의 참여조직으로 정치적 성향을 배제하고, 청소년과 청년들이 민주주의에 참여하는 과정을 다방면으로 돕고 있다. MLMS는 포괄적(Inclusive), 전문성(Expert), 연계(Connected), 도전(Challenging) 등 4가지의 운영가치를 제시하며, 청소년과 소외된 사람들이 정치적 대화에 참여하도록 콘퍼런스를 개최하고, 청소년의 목소리가 이해관계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토론의 장을 열고 있다. 또한 정부, 기업과 제 3 조직에 청소년의 관점을 전달하는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⁴⁶⁾.

국제적인 사회적기업인 Bite the Ballot은 시민과 지역사회 참여에 특화된 단체로 학교, 청소년, 사람들에게 정치 소개하고, 정치가 사람들의 삶에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설명하는 워크숍과 이벤트를 주로 진행하고 있다⁴⁷⁾.

45) Shout out UK. About SOUK. <https://www.shoutoutuk.org/about-us/> 에서 2021년 7월 2일 인출.

46) My Life, My Say. <http://www.mylifemysay.org.uk> 에서 2021년 7월 2일 인출.

47) Bite the Ballot. <http://www.bitetheballot.co.uk> 에서 2021년 7월 2일 인출.

(4) 청소년 사회 행동(Social Action)

청소년의 사회 행동은 영국 정부가 2010년 이래로 강조해온 정책 분야이다. 영국 정부는 이를 위하여 정부, 자원봉사조직, 교육기관 등이 청소년의 사회 행동을 지원하도록 독려하고 있으며, 매년 청소년의 사회 행동에 관한 효과성 연구를 발표하여 사회 행동이 청소년의 인지능력, 성격, 정서, 학교생활뿐만 아니라 정치적 참여, 사회적 결속 등 적극적인 시민성에 끼치는 영향력을 강조하고 있다(DCMS, 2021.7.19.). 영국 정부가 청소년의 사회 행동을 활성화하는 과정은 영국 내에 형성된 다양한 기금을 통해 살펴볼 수 있으며, 성인기로 접어드는 청소년에게 사회 행동의 경험을 제공하는 국가시민서비스(NCS)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영국에서 운용되는 대표적인 사회 행동 지원 기금에는 #iwill Fund가 있다. #iwill Fund는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DCMS)와 국가복권공동모금(National Lottery Community Fund)의 협력기금으로, 청소년의 사회 행동을 지원하고 있다. 지금은 #iwill Fund로 통합된 National Youth Social Action Fund 역시 청소년들의 사회경제적 차이를 줄이고 사회 행동에 참여하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운영되었다. 그 밖에도 Youth Social Action Journey Fund 등 다양한 기금이 조성되어 청소년의 사회 행동을 지원하는 자선단체 및 기타 조직을 지원하고 있다(DCMS, 2021.7.19.).

국가시민서비스(NCS) 역시 청소년의 사회 행동을 지원하는 국가 주도의 프로그램이다. 국가시민서비스(NCS)는 사회 행동을 강조하는 정부 지침 아래 2011년에 NPO의 형태로 시작되었다가 2019년 12월에 국가기관이 되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 국가시민서비스(NCS)는 성인기로 접어드는 16~17세 청소년에게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세부 프로그램으로는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 사회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모험, 삶의 기술, 자신에 관한 탐구 등을 경험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여름방학에는 캠프의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국가시민서비스

(NCS)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청소년과 청년은 ‘Change makers’와 ‘Further makers’로 활동할 수 있다. ‘Change makers’의 경우에는 지역사회에서 지속 가능한 사회 행동 프로젝트(e.g. 환경운동, 취약지역 건물보수 등)를 운영하는 단체에 참가 하는 기회를 부여받게 되고, ‘Further makers’는 일정 보수를 지원 받으며 지역사회에 있는 단체(e.g. 공공기관, 회사, 자원봉사 단체 등)를 경험할 기회이다. 국가시민서비스(NCS)는 이러한 사회 행동의 경험을 통해 청소년들이 자신과 지역사회에 관한 관심을 확장하여 적극적인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⁴⁸⁾.

3) 영국 청소년 정치참여 활성화 방안: 리더십, 정치, 시민교육

영국에서는 청소년의 정치참여에 대한 다양한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실제 참여 활동을 하는 청소년에게는 리더십 교육을 통해 참여 역량을 향상 시키고 있으며,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도 정치와 시민교육이 제공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청소년 의회에 참석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교육과, 북아일랜드의회가 주최 하는 정치 교육, 영국의 정규교과로 지정된 시민교육을 살펴보고자 한다.

영국에서는 청소년의회에 참가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영국청소년의회(UKYP)의 경우 선출된 의원을 대상으로 유스보이스리더십프로그램>Youth Voice Leadership Programme)을 제공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청소년의 참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으며 일반 청소년도 참여할 수 있다. 교육에 일주일간 지속하며, 토론, 모의 활동, 캠페인 등의 활동을 계획하는 등 리더로서 수행하는 역할의 주요한 기술과 지식 등을 배우게 된다. 스코틀랜드 청소년의회(SYP)도 청소년이 선거에 출마하기 전에 후보자 훈련의 성격으로 교육이 진행된다. 청소년의원에 출마를 희망하는 청소년은 의원직과 관련한 전문적 훈련을

48) National Citizen Service. <https://wearencs.com/> 에서 2021년 7월 2일 인출.

받게 되고 청소년의원으로서 역할에 대해 훈련을 받은 후에도 출마를 희망하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두 번째 북아일랜드의회에서 제공하는 정치 교육은 청소년들이 의회, 민주주의, 민주적 과정들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치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해당 교육은 아동, 청소년뿐만 아니라 교사도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의회에 대해 알고 싶은 사람들에게 무료 교육 프로그램과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교육은 <표 IV-8>과 같이 교육방문(Educational visits), 아웃리치(Outreach visits to schools), 교육 도구(Teaching toolkit), 교사를 위한 전문적 교육 이벤트(Professional learning events for teachers) 등이 있으며 연령과 대상별로 특화되어 있다⁴⁹⁾.

표 IV-8. 시민교육(Citizenship education) 과정

구분	내용
교육방문 (Educational visits)	• 교육을 신청 후 의회에 방문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모의 선거, 법률·제정, 의원과 만남 등의 경험을 제공
아웃리치 (Outreach visits to schools)	• 학교에 직접 방문하여 교육을 제공함. 의회에 관해 설명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직접 참여 프로그램 운영
교육 도구 (Teaching toolkit)	• 연령별 정치 교육 도구와 교사훈련 프로그램 제공
교사역량지원(Professional learning events for teachers)	• 교사 대상 의회의 역할 정보를 제공하고, 시민권 및 정치 문해력 교육에 접근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공

* 출처: Northern Ireland Assembly Education Service.
<https://education.niassembly.gov.uk/about-education-service> 의 내용을 표로 재구성함.

세 번째 영국에서는 2002년부터 시민교육(Citizenship education)을 정규 교육과정으로 제공하고 있다(Department for Education, 2010.11.25). 영국의

49) Northern Ireland Assembly Education Service.
<https://education.niassembly.gov.uk/about-education-service> 에서 2021년 7월 2일 인출.

국가교육 과정은 4단계로 구성되는데, 시민교육은 1~2단계인 초등교육과정에서 선택과목으로, 3~4단계인 중등교육과정에서는 필수과목으로 지정되어 있다. 특히 2008년에는 시민교육이 중등교육 자격시험(General Certificate of Secondary Education, GCSE)의 선택과목으로 지정되면서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었다 (Department for Education, 2013).

표 IV-9. 시민교육(Citizenship education) 수업내용

구분	핵심 단계	학년	연령	시민권 교육 수업내용(Subject Contents)
선택 교 과 목	1	1~2	5~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장하는 개인,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신 자신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유지·행동하기 위한 규칙과 기술 자신과 타인에 대한 감정, 아동과 노인에 대한 견해, 권리 학교와 학교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사회적 기술: 공유, 규칙, 놀이, 도움, 논쟁 해결, 따돌림(bullying)에 저항
	2	3~6	7~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장하고 변화하는 개인,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신 넓은 세상과 지역사회의 상호의존성 사회정의와 도덕에 대한 감각 자신의 선택과 행동이 지역사회, 국가, 글로벌 이슈, 정치·사회 제도에 미치는 영향 학교와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적 참여 방법 건강과 환경에 대한 자신감, 정보에 입각한 선택 방법 자신과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책임감 따돌림(bullying)에 저항
필수 교 과 목	3	7~9	11~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민, 의회, 왕정의 역할을 포함한 민주적 정부의 정치 시스템 투표, 선거, 정당의 역할을 포함한 의회운영 시민의 자유 경찰, 법원·재판소의 운영을 포함한 법과 규율 및 사법제도 공공기관과 봉사 단체의 역할, 학교기반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포함하여 시민들이 공동체를 개선을 위해 협력하는 방법 돈의 기능과 용도, 예산 책정 및 위험 관리의 중요성 등
	4	10~11	14~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 권력, 시민, 의회가 갖는 힘, 행정·입법·사법부와 자유 언론의 역할 등을 포함한 의회 민주주의와 헌법의 핵심요소

구분	핵심 단계	학년	연령	시민권 교육 수업내용(Subject Conten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와 지역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민주적 선거 과정에서 시민이 취할 수 있는 행동 및 선거제도 • 민주적, 비민주적 정부, 영국 정부의 국제적인 관계 • 인권과 국제법, 영국의 법률 제도, 다양한 법체계, 법의 활용 • 국가, 지역, 종교, 종족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존중 • 시민이 자신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이바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다양한 책임 있는 활동, 자원봉사의 능동적 참여기회 • 소득과 지출, 신용과 부채, 보험, 저축과 연금, 금융 상품과 서비스, 공공자금 조달 및 지출방법

* 출처: Department for Education(2013.9.11., 2015)을 번역 후 표로 재구성함.

영국의 교육부(DfE)가 제시하는 시민교육의 목적은 청소년이 사회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식과 기술 및 이해력 등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시민교육의 내용을 <표 IV-9>에서와 같이 살펴보면, 핵심단계 1~2에서는 공동체 안에서의 역할, 타인과 사회에 대한 책임과 권리 등을 학습 내용으로 포함하며, 3~4단계에서는 청소년들이 민주주의, 정부, 법의 수립·집행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Department for Education, 2013.9.11). 이처럼 영국의 시민교육은 청소년들이 정확한 정치·사회적 지식을 기반으로 적극적인 시민으로서 공동체 참여를 이어가는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데 큰 의미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박선영, 2019).

영국 시민교육은 정부에서 2018년에 발표한 시민사회전략(CSS)에서도 적극적인 시행이 권고되었다. 시민사회전략(CSS)에서는 학교 안과 밖에서의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 in and out of school)을 언급하며 앞서 제시한 학교에서의 시민교육과 학교 밖 다양한 자원이 협력하는 방향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학교에서 청소년들이 시민교육을 받고 학교 밖에서는 시민으로서 참여할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다양한 기관⁵⁰⁾과 협력하고 있다.

4) 영국의 청소년 정치참여 특징과 정책적 시사점

영국은 지난 20년간 청소년의회를 운영해오면서 청소년의 체계적인 정치참여 구조를 마련하였고, 다양한 청소년참여 기회 역시 확대해왔다. 또한 영국에서의 청소년참여는 학교 안팎의 교육 지원을 통해 더욱 강화되고 있다. 물론, 현재까지 국가 단위에서 청소년 참여기구가 법으로 규정되지 않고 있지만, 영국 정부는 정책적 측면에서 청소년참여를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중앙과 지방정부, 의회, 학교, 청소년 단체, 청소년이 적극적인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영국 청소년 정치참여의 특징과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국에서의 청소년 정치참여는 청소년이 실제적 민주절차에 참여하는 경험을 보장한다. 민주적 절차는 누구나 차별 없이 선거나 투표에 참여할 수 있고, 자신들의 의견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하여 합의에 이르는 과정을 말한다. 영국에서 운영되는 청소년의회는 이러한 민주적 절차를 실천하는 대표적인 청소년참여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청소년의회는 자체규정을 통하여 청소년이라면 누구라도 성별, 인종, 장애와 상관없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선거에 참여하고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하고 있다. 2020년과 2021년에 선발된 청소년의원의 비율을 보면 여성이 50% 이상을 차지하며, 장애가 있는 청소년이 20%, 전체 의원의 1/3은 유색인종에 해당한다. 이밖에도 정부와 의회는 청소년의 선거와 투표가 실제상황과 같게 진행되도록 시스템을 구현하고, 청소년의원에게는 영국 의회에서의 토론 기회도 보장된다. 또한 청소년의원의 합의된 의견은 정부와 의회에 공식적으로 전달된다. 2020년도에는 청소년주도의 법안이 최초로 발의되기도 하였다. 더욱이 영국청소년의회 내부에서는 청소년의원 간의 특별한 계급을 두지 않는 원칙을 세움으로써 자체적으로도 수평적인 구조에서 토론과 합의를 거쳐

50) 교육부와 협력하고 있는 단체로는 Envision, Association for Citizenship Teaching 등이 있으며, 이러한 단체들은 청소년이 시민교육, 국가시민서비스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거나, 자원봉사, 모금 활동 등 실제 사회 행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도 한다.

최종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청소년의회의 운영과정에서 청소년이 경험하는 실제적 민주절차는 청소년의 민주적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모든 청소년에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의 합의된 의견에 대표성을 부여할 수 있다.

둘째, 영국은 정부 주도로 청소년의 참여 방법을 다각화하고 있다. 영국 정부가 지원하는 청소년 참여기구를 살펴보면, 국가와 주 단위로 운영되는 청소년의회가 있으며, 조사연구, 정책 모니터링, 사회 행동 등의 활동이 있다. 청소년의회는 모든 청소년이 직면하는 이슈에 관해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와 의회에 합의된 의견을 전달하는 일련의 과정이 진행하며, 지역 단위로 운영되는 600여 개의 지방청소년위원회(LYC) 역시 지방정부 및 의회의 지원으로 지역 단위에서 활동을 전개한다. 또한 정부와 의회는 청소년이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다양한 연구조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기금 조성을 통해 지원하고 있으며, 정부와 비영리 단체들이 조성한 다양한 협력기금들은 청소년의 캠페인, 펀딩 등의 사회 행동(social action) 활성화를 위해 활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청소년이 정부 정책의 수립과 집행과정에 관여할 수 있도록 청소년감찰단을 구성하는 등 정책 감시의 역할도 보장하고 있다. 즉, 청소년의 참여 영역을 청소년의 의견 전달과 사회 운동, 캠페인으로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의 직접적 관여와 관리의 영역까지 확대해 가며 청소년의 의견이 다방면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가 청소년의 다각적인 참여 방법 보장하는 것은 청소년의 안정적이며 적극적인 참여기회를 확산시킨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영국의 청소년 참여기구는 청소년의 권한을 강화하고 있다. 영국청소년 의회의 경우 청소년이 직접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집행하고, 의회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산편성, 행사 운영정책 등을 청소년이 직접 결정하는 권한을 확인할 수 있다. 영국청소년의회를 정부로부터 수탁하여 운영하는 영국청소년위원회(BYC)도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강사, 참석자 등 변경상황이 발생할

시 청소년의회(운영위원회)와 합의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이 운영하는 캠페인과 조사연구 등의 경우에도 별도의 기금마련을 통해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정부와 운영단체의 관리 권한을 축소하고 청소년의 자발적이며 창의적인 참여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청소년 참여기구의 운영에 있어 청소년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은 청소년과 성인의 관계를 상하 구조가 아닌 수평적 구조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근간이 될 수 있다. 또한 청소년주도의 자발적인 의견 전달이 가능해지므로 청소년이 전달하는 의견에 대표성을 부여할 수 있게 된다.

넷째, 영국에서는 청소년의 참여 역량 향상을 위한 적극적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영국청소년의회의 경우 청소년의원으로 선발된 후 리더십 교육을 통해 청소년의원으로서의 역량 향상을 지원하고 있으며, 스코틀랜드 청소년의회는 청소년의원에 출마를 희망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통해 선거운동과 선출 시 역할 등에 대해 교육하고 교육 후에도 출마를 희망하는 경우 선거운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무엇보다 영국에서는 시민교육을 정규교과과정으로 지정하고 중등교육자격시험(GCSE)의 선택과목으로 지정하는 등 시민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청소년이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적 지원은 지역사회에서 자발적으로 참여 가능한 청소년 참여기구 활동과 상호 작용을 통하여 청소년의 참여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실제로 영국에서는 시민교육에 참여한 청소년을 중심으로 10년(2001 ~ 2009)간 패널조사를 시행한 결과, 시민교육에 참여한 청소년 집단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정치적 참여경험이 증가하였고, 시민교육에 참여한 청소년의 정치적 참여에 있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Avril, David, Thomas, & Joana, 2010).

이처럼 영국은 청소년에게 다방면의 참여기구를 통하여 실질적인 민주절차와 조직 운영의 경험을 제공하고 교육을 통해 참여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시민으로서 자신의 참여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3. 독일 청소년 정치참여 사례분석 및 시사점⁵¹⁾

1) 독일 청소년 정치참여 활동 개요

독일의 청소년정책과 관련된 개괄적인 현황에 관하여 잘 알 수 있는 내용들은 무엇보다 연방정부가 매 임기 중에 발행하는 ‘아동·청소년 보고서(Kinder- und Jugendbericht)’에 수록되어 있다. 이 보고서는 선거에서 독일 국민으로부터 선택받은 정부가 부여받은 임기동안 수행한 청소년에 관한 정책을 독일의 의회와 상원(上院)에 책자 형태로 제출하도록 하는 「아동·청소년지원법」 제84조에 따른 것이다. 1965년 처음 연방 의회와 상원에 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2020년 11월 11일에 16번째 보고서⁵²⁾가, 이 보다 앞서 2017년 1월 2일에는 15번째 ‘아동·청소년 보고서’⁵³⁾가 제출되었다. 따라서 최근 독일의 청소년 정치참여에 관한 독일의 정책적 현황이 고찰되기 위해서는 특별히 15, 16번째 ‘아동·청소년 보고서’에 관한 내용들에 관하여 살펴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특히 그 이유로 15번째 ‘아동·청소년 보고서’는 독일의 청소년정책에서 청소년들의 참여가 독일의 민주화 형성에 중요한 가치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16번째 ‘아동·청소년 보고서’는 이러한 청소년의 정치참여는 이의 전제가 되는 정치교육과 청소년의 정당에의 참여가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의 궁극적인 시대적 과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7년 1월에 독일 의회에 제출된 15번째 ‘아동·청소년 보고서’의 서문은 독일 연방정부의 입장 표명하면서 “보고서가 확신하는 것과 같이, 청소년 참여는 현행

51) 이 글은 필자가 독일 연방정부가 임기 중에 독일의회와 상원에 제출했던 15번째, 16번째 두 ‘아동·청소년 보고서’들에 수록되어 있는 주요 내용들을 발췌하여 편역하였다.

52)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ngen(2020). 16. Kinder- und Jugendbericht. Förderung demokratischer Bildung im Kindes- und Jugendalter. bmfsfj.de.

53)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ngen(2017). 15. Kinder- und Jugendbericht. Bericht über die Lebenssituation junger Menschen und die Leistungen der Kinder- und Jugendhilfe in Deutschland. bmfsfj.de.

청소년정책의 ‘주안점’이다”⁵⁴)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 말의 의미는, 청소년은 스스로 다양한 역할들과 참여의 형태들 속에서 정치적인 행동가가 되어 있다는 것을 뜻한다. 대부분 청소년은 기존의 정치적 제도들이나 행위 형태들, 특히 선거 참여나 정당들, 다른 정치적 조직들에서의 공동체 안에서도 비교될 만큼 뚜렷한 정치적 거리를 나타내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들의 정치적 참여에 성인들이 간과하고 있는 점은, 많은 청소년이 제한된 공동 결정권한과 구성 공간을 넘어서는 정치적 관심을 보이고 있고, 민주주의에 만족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이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공적인 의사표명과 정치참여의 넓고 다양한 형태들을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이들은 구체적이고 일상과 관련된 주제들을 위하여 NGO 활동과 같은 사회 운동이나 저항단체에 속하면서 시위, 서명 운동, 불매 운동, 블로그나 비디오, 플래시 몹(Flashmobs), 유튜브(Youtube) 활동 등 다양한 그들만의 정치적 참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보고서는 흔히 기성세대들이 젊은 세대들은 정치에 부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편견이라고 말하고 있다. 보고서는 동시에 어떻게 하면 기존 의회나 정부에 불신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의 정치참여 관심이 정당, 노동조합, 청소년 기구들을 통해 드러나게 하면서, 동시에 그들의 일상과 관계될 수 있는 가에 대하여 질문을 던지고 있다.

독일 연방정부는 위의 질문이 타당하고, 정치와 모든 민주주의적 기관들이 이에 함께하는 행동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청소년과 청년들이 우리 사회의 선거나 정당들과 같은 민주적 결정구조들에 참여하는 것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에 대하여 우려하고 있다. 이는 젊은 세대를 위한 의미 상실과 의회민주주의를 위한 정당성 상실의 위협이 되기 때문이다. 청소년과 청년의 난민 지원, 환경보전 행동과 같이 프로젝트에 기반하고 있는 행동들에의 주목할 만한 참여는 기본적으로 연방정부에 대한 평가를 경험하는 일이다. 따라서 독일 정부는 선거와 정당

54)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ngen(2017). 15. Kinder - und Jugendbericht. Bericht über die Lebenssituation junger Menschen und die Leistungen der Kinder - und Jugendhilfe in Deutschland. bmfsfj.de. p.12.

들이 자유롭고 개방된 사회를 위하고, 모든 시민들을 위하여 존재하는 본질적인 것이라는 사실과, 그러므로 젊은 세대가 이러한 사회의 형태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 가치가 있는 것임을 그들에게 성공적으로 전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청소년의 정치참여를 세 가지 형태로 분류하고 있다. 첫째, 결정에 영향을 받지 않는 청소년상담과 같은 형태, 둘째, 청소년과 관련된 정치적 주제에 부분적으로 참여하면서 공동으로 결정할 수 있는 형태, 셋째, 청소년들이 독립적, 자주적으로 결정하도록 젊은 세대로의 책임을 양도하는 형태이다. 이를 줄여서 표현하자면 청소년과 함께 대화하고, 함께 결정하고, 더 나아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정책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다. 즉, 보고서에서는 청소년의 정치참여에 있어서 민주주의적인 결정의 책임과 사회 참여의 관계에 중점을 두고 강조하고 있다. 보고서는 청소년이 그의 사회적 주변 환경에서 민주주의적 환경의 정치적 문화를 체험하지 못하게 된다면, 오로지 사회적으로 이러한 참여 형태를 이용할 수 있는 자들에게만 정치에 참여의 기회가 주어지게 되고, 이는 온라인 참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의 결과가 될 것으로 말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청소년들 사이의 사회적 불평등뿐만 아니라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와 청소년 간의 힘의 불균형까지도 주목해서 청소년의 정치참여를 서로 다른 입장에서 깊이 인식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이 목표하는 것은 결국 청소년들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의 형성과정과 결정과정에 능동적으로 함께 협력하여 참여하는 것이다.

2) 독일 청소년의 정치참여 특징과 형태

(1) 독일 청소년의 정치참여 특징

독일에서 청소년과 정치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측면에서 논의가 되고

있다. 하나는 현대사회 속에서 사회화 대상으로서의 청소년은 그들에게 법적, 제도적, 사회적 조건들을 인정해줌으로서 정치적 조정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청소년은 스스로 정치적 행동가로서 등장해서 이러한 정치적 조정을 넘어서 여러 사회정치적인 관계들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여기서 청소년이 정치적 조정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보다 제도화된 정치적 관계들과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법적 규범에 수동적으로 따르게 되는 것과 대의 민주주의의 원칙에 맡겨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는 달리 청소년의 능동적인 정치적 참여와 활동은 지역정치, 사회봉사, 학교와 같이 일상세계의 관계들과, 사회운동, 청소년 문화적 배경들과 같은 비제도적 참여형태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다. 말하자면 정치적 조정 대상으로서의 청소년은 노동시장, 교육, 복지, 보건, 법, 경제 정책 등을 통해 권리를 보호받고, 행위를 지도받아서 사회화 대상으로 생산되는 존재라는 것이다. 한편, 통일 후 독일이 UN의 아동권리협약에 비준한 1992년 이래로 최근 20년간은 정부의 이러한 조정 대상으로서의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아동에 대한 조정으로 옮겨지면서 청소년정책은 더욱 정부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독일도 청년실업 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특히 교육정책 영역에서 청소년에 대한 정치적 조정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져서 통합적 학교형태와 사립학교의 도입 등으로 학교교육정책의 상황이 변화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청소년의 정치적 행동들은 지역 사회 차원과 청소년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청소년단체들에서 능동적으로 발현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치적 행동가로서의 청소년은 위에서 서술한 정부의 조정에 따른 수동적인 청소년의 정치참여와는 달리 활동적이고 능동적인 정치참여를 의미하고 있다. 젊은 세대는 그 어떤 역사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도 기성세대보다도 더 적극적이고, 열정적이며, 능동적으로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에 실천적 행동으로 참여해왔다. 독일에서도 1968년을 전후해서 세계적인 학생운동에의 동참을 비롯하여, 1970년

대와 80년대 이래 수많은 청소년운동들이 있어 왔다. 이렇게 역사의 과정에서도 출되었던 청소년운동들은 제도화된 민주화에 대한 요구와 교육체계의 확장, 「청소년지원법」의 개혁 그리고 기성 정치문화에 대한 청소년의 참정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귀결되었었다. 하지만 현재 이러한 청소년 정치참여는 의회민주주의 체계에서 양적으로 보아서도 다수의 의견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2014년 연방의회선거에서 고령 유권자들이 선거의 결과에 더욱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연방통계청의 통계로 증명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는 전체 유권자의 1/3이 60세 이상의 고령 유권자들이고, 30세 이하의 젊은 층 유권자는 1/6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로는 이러한 고령 층 유권자들의 선거참여도가 젊은 층 유권자들의 참여도보다 훨씬 높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독일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영국이 EU에서 탈퇴하는 것에 대한 국민투표 결과를 보면 고령층 유권자들이 탈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 것이 그 실례이다.

(2) 독일 청소년의 정치참여의 형태

청소년의 정치참여와 저항의 공간은 기성 정치 공간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청소년의 정치참여 형태들은 목적이 분명하고, 단기간에 수행되며, 구속적이지 않다. 이들의 정치참여는 정치적 결정사항들 중에서 자신들과 관련된, 한 특정한 관심 사항에 집중하여 목적을 관철시키려는 경향이 뚜렷하다. 2015년에 이들은 독일의 환경보호와 관련된 정치적 행동으로서 석탄 산업에 의한 지속적 환경파괴에 대하여 시위를 하였고, 인라인스케이트 공원의 건설을 위한 지역사회 정치적 참여나 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회정치적 운동단체들과 함께 정부의 피난민 수용소 건설에 대하여 때로 폭력이 수반된 시위를 하는 등의 정치적 참여를 수행하였다. 독일에서의 이러한 청소년의 정치참여 사례들에서 볼 수 있듯이,

청소년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정치적으로 행동할 뿐만 아니라 사회발전의 상황들, 집단적 권리의 획득, 다원적 사회 질서에 대한 정치적 관심을 가지고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 사회운동들과 지역사회 운동단체들의 맥락에서 청소년의 정치적 저항 행위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치적인 주제들만이 우선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회적 불공정과 잘못된 대의정치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청소년 정치참여는 전통적인 환경보호 운동, 인권관련 운동, 자본주의 비판 운동들의 형태들이 있어 왔다. 그러나 이뿐만 아니라 최근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정치적으로 저평가되었던 젊은이들이 그들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참여를 위해 여러 유럽의 도시들에서 있었던 대규모의 폭력적인 청소년 시위들로 참가한 것도 정치참여의 한 형태로 주목될 필요가 있다.

청소년의 정치참여 형태들 중에는 1990년대에 극우주의와 외국인 혐오에 편승한 청소년의 참여도 있다는 것에 대하여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이러한 인간적대적이고, 법을 준수하지 않는 정치적 형태는 성인들에 있어서도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존재한다. 지방의 헤게모니적인 보수적 문화는 그러한 풍토를 청소년을 통해서 재생산하게 된다. 지역의 보수적인 정치적 경향은 통독 후 경제가 어려워 지자 독일 거주 외국인들이나 난민들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게 되었고, 심지어 신나치주의(Neo-Nazismus)를 촉발시키기도 하였다. 이후에도 독일의 난민 수용 문제는 독일의 정치적, 사회적 이슈로 큰 정치적 반향을 국민들에게 불러오는 문제가 되었는데, 독일정부는 이러한 극우주의에 대하여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프로그램을 충분히 개발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는 결국 현재 독일의 청소년 그룹들이 반다원주의적이고 인종주의적 정치 그룹들과 그들의 행동들에 반대하는 입장을 강하게 표명하지 못하고 있는 결과를 낳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비제도적 영역에서의 청소년의 자발적인 사회정치적 참여 형태 외에도 학생대표로서, 청소년의회나 청소년위원회, 청소년포럼 등의 제도적 영역에서의 위원회나 협회 회원으로서의 청소년 정치참여 형태가 있다. 여기에 참여하는 청소년

들은 원칙적으로 자신이 속해있는 제도 영역에서의 이익을 대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들은 청소년에게 중요한 과제나 문제들에 대하여 기관장과의 상담과 토론을 거쳐서 제도적으로 합의되거나 규정된 권리들을 가지게 된다. 청소년의 제도화된 영역에서의 정치참여는 따라서 내용과 방법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정치적 결정 과정에서도, 범주나 중요도 설정을 하는 데에 있어서 특정한 한계들에 놓이게 된다. 특정한 한계들은 결국 교육적이거나 제도적 정치 관계들에 관여하는 성인들에 의하여 결정되게 된다. 이러한 사실은 청소년 정치참여의 “민주적 공동결정에 대한 훈련 무대”라고 종종 오도되어 나타나고 있으며, 정치교육의 수단으로 서술되고 있는 것이다.

3) 독일 청소년의 정치참여 실태

최근 독일에서 청소년의 정치참여는 정치적 단체들과 정치와 관련된 일들에 있어서 다시 강하게 주제화 되고 있다. 이는 유럽으로부터 연방정부나 지방단체를 넘어서 기초 자치단체에까지 청소년과 관련된 정치적 대책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독일에서 청소년의 정치참여 실태로 실제 나타나는 행위는 청소년의 선거에의 참여와 비 제도화된 영역에서의 정치참여적 성격을 가진 프로그램들에의 참여이다. 아래에서는 독일 청소년의 이러한 다양한 정치참여 실태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1) 청소년의 정치참여 사례 : 선거와 정치조직들에의 참여

① 청소년의 선거에의 정치참여

청소년에게 선거에의 참여는 가장 넓게 알려진 정치참여의 형태이고, 오늘날 까지 비교적 가장 변동이 적게 정치적 책임을 지는 표현의 형태이다. 독일에서는

청소년이 18세가 되면 선거에 참여할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고 있다. 일부 주(州)나 지역의 기초 자치단체 선거에서는 16세가 되면 선거에 참여하도록 청소년에게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⁵⁵⁾. 독일은 4년마다 총선이 있게 되는데 올해 2021년 9월 16일 20번째 연방의회 선거가 있을 예정이다. 독일 연방정부의 15번째 ‘아동·청소년 보고서’에서는 2013년에 있었던 총선에 대한 통계표를 아래와 같이 인용하여 제시하였다⁵⁶⁾.

표 IV-10. 2013 독일연방의회선거 선거 참여 상황

연령	유권자 수	%	투표자 수	%	연도별 선거 참여율(%)			
					2013	2002	1990	1983
18-21	2,015,200	3.3	1,294,100	2.9	64.2	70.2	64.7	84.3
21-25	3,365,000	5.4	2,029,700	4.5	60.3	68.1	61.8	81.5
25-30	4,406,200	7.1	2,747,800	6.1	62.4	72.1	66.3	83.8
30-35	4,289,600	6.9	2,811,200	6.3	65.5	76.7	71.3	87.0
35-40	3,922,100	6.3	2,694,500	6.0	68.7	79.6	75.7	89.3
40-45	4,776,900	7.7	3,458,100	7.7	72.4	80.0	79.6	91.1
45-50	6,316,900	10.2	4,718,500	10.5	74.7	81.1	82.1	92.2
55-60	11,521,100	18.6	8,698,600	19.4	75.5	84.0	84.6	92.7
60-65	8,504,100	13.7	6,784,000	15.1	79.8	86.4	86.5	92.3
70 이상	12,826,800	20.7	9,598,300	25.4	74.8	78.4	74.5	84.9
합계	61,946,900	100.0	44,834,800	100.0	72.4	79.6	78.4	88.4

* 출처: Bundestagswahl. <https://www.bundeswahlleiter.de/bundestagswahlen/2013.html> 에서 2021년 8월 13일 인출.

위의 <표 IV-10>을 보면 전체적으로 표에서 제시한 연도 중 가장 최근인 2013년도 독일 연방의회 선거에 18~25세의 청소년들의 선거 참여율은 전체 유권자

55) Wikipedia. Wahlrecht. https://de.wikipedia.org/wiki/Wahlrecht#Deutschland_2 에서 2021년 8월 13일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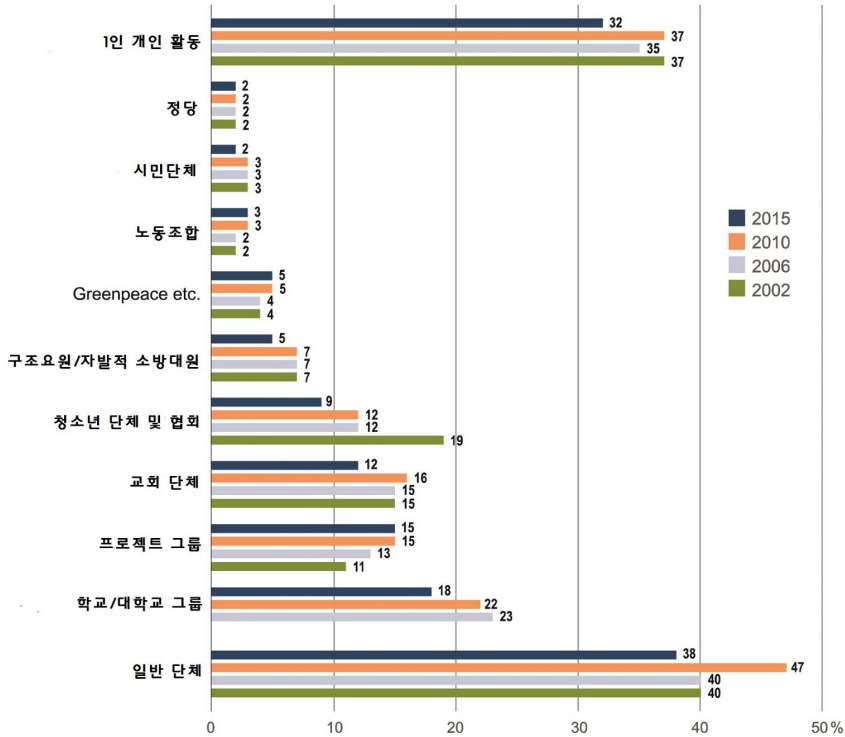
56)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ngen(2017). 15. Kinder- und Jugendbericht. Bericht über die Lebenssituation junger Menschen und die Leistungen der Kinder- und Jugendhilfe in Deutschland. bmfjsf.de, p.234.

수 61,946,900명의 8.8%에 해당하고 숫자로는 5,380,200명이다. 이 숫자는 60세 이상의 전체 투표자 수의 비율이 77.3%인 것에 비해 많이 낮은 수치이다. 선거권을 가진 연령에 해당하는 총 청소년 유권자 수 중 62.2%의 청소년들만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표에서 보여주고 있는 사실은 30세 이하의 연령층 그룹들에서의 선거 참여율은 모든 연령의 그룹들보다 가장 적다는 것이다. 1990년 독일 통일의 혼란 속에서 치러진 선거를 제외하고 선거에의 청소년 참여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소년 정치참여의 한 형태로서의 청소년 선거 참여는 부정적 경향으로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② 청소년의 정치조직들에의 정치참여

독일에서 14~19세 연령의 청소년은 가장 활발하게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그룹이다. 청소년들이 사회정치적 참여를 위하여 가장 중요하게 조직된 사회적 공간들은 청소년 단체나 협회이고, 학교나 대학교도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들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영역들인 스포츠, 문화, 기술, 자연보호 등에 관계된 단체나 협회들은 이들의 욕구와 문제들과 연관되어 있고, 따라서 이들에게는 정치적인 사회화 과정을 가능하게 하는 공간들이 열려져 있다. 청소년 단체에서 청소년들은 수행에 대한 책임을 가지면서, 공동의 활동들에 대하여 결정하고, 참여를 조직하며, 더 나아가 정치적 입장을 가지고 정치적 과정의 가장 다양한 주제 범위들에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 단체나 조직에 청소년이 가입하는 문제는 우선 자신의 개인적인 일상의 상황에 달렸다고 할 수 있다. 봉사적 이거나 자발적인 참여는 많은 경우 직접 정치적 목표와 연관이 있지 않다 할지라도, 이는 특정한 과제들과 영역들에서 책임을 지는 의미에서의 사회정치적 행위로 이해될 수도 있다. 연방독일 사회는 결정적으로 민간과 공공의 단체들이나 협회들을 통해서 바로 특징이 지어진다. 모든 연령 그룹들의 자발적인 참여는 그러한 사회의 주체적 인식의 표현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15~30세 연령의 독일의 청소년을

유럽과 비교해보면 2014년에 30%나 더 이러한 단체나 협회에서 자원봉사를 활발히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European Commission, 2016: 255).



* 출처: Shell Deutschland Holding(2002, 2006, 2010, 2015).

그림 IV-1. 독일 청소년의 자원적 참여 활동

한편, 독일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봉사 참여의 발전에 관하여 여러 연구들에서 이율배반적인 조사결과를 보이고 있다. 연방자율조사 결과에 따르면 1999년 ~ 2009년의 10년 동안 15~30세 연령의 자발적 봉사 참여 젊은이들은 지속적으로 1/3 정도를 보여 왔는데, 2014년에는 47%로 대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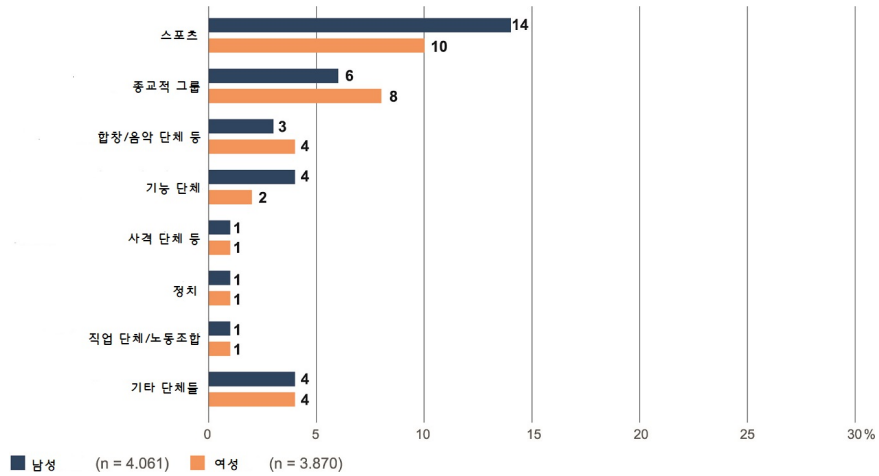
반대로 Shell-Jugendstudien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독일의 12세~25세의 청소년들의 자발적 사회참여는 2010년 47%에서 2015년에 38%로 하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Schneekloth, 2015: 196). 위의 [그림 IV-1]의 Shell 통계에서 보면 무엇보다 학교와 대학교 및 교회 단체와 청소년 단체와 협회에서의 청소년 참여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감소된 인원은 개인적이거나 스스로 조직한 활동들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감소의 원인으로는 고등학생과 대학생이 교육정책의 결정에 의해 새로이 도입된 G8⁵⁷⁾과 새로운 대학의 학위구조⁵⁸⁾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유추되고 있다.

아래의 [그림 IV-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4년 AID⁵⁹⁾: A-Befragungen을 통해 조사된 결과에 의하면 독일 청소년들은 자신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단체나 협회에서 일정한 직위를 가지고 봉사하며, 직무 훈련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스포츠가 가장 높은 비율로 직위를 가지고 참여하는 영역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청소년들의 자발적 참여의 질적 제고를 가능하게 하는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는 종교그룹에의 참여가 많았고, 이어서 기능단체에도 적지 않게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주목할 만 한 점은 정치단체에서 직위를 가지고 참여하는 청소년의 정도는 매우 낮다는 사실이다. 반면에 여성과 남성의 비율이 동등한 비율로 참여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결과이다.

57) "achtjähriges Gymnasium"의 약칭으로 독일의 대학입학 자격인 아비투어(Abitur)를 준비하는 인문계 학교가 9년 과정으로 되어 있던 것을 정부가 개혁하여 2012년~2015년 동안 독일 전역에서 8년 과정으로 축소할 것을 일컫는다. 이러한 개혁의 실질적 이유는 청소년이 1년 일찍 직업세계로 나아가 1년 먼저 납세를 하게 하는 독일의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

58) 위의 G8과 같은 맥락에서 유럽의 대학 학위구조가 Bologna-Process에서 개혁되었다. EU를 중심으로 1999년 이탈리아 Bologna에 유럽의 29개국 교육부 장관들이 모여 미국의 학위 체계와 같이 학사 학위를 Bachelor, 1~2년 과정의 석사학위를 Master로 수여하여 대학 졸업생의 질을 단계적으로 높이고, 대학의 재정을 강화하려는 경제적 목적을 가진 개혁이다.

59) Aufwachsen in Deutschland(독일에서의 성장)의 약칭



* 출처: AID: A(2014). Aufwachsen in Deutschland: Alltagswelten-Befragungen 2014. <https://surveys.dji.de/index.php?m=msw,0&slD=107> 에서 2021년 8월 13일 인출.

그림 IV-2. 독일 12~25세 청소년의 직위 소지 참여 단체 및 협회 유형

(2) 청소년의 정치참여 프로그램들

앞에서 서술된 청소년과 정치의 관계에 대한 두 가지 측면은 정부의 조정에 따라 청소년이 수동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것과 청소년이 자발적인 정치적 행동가로서 여러 사회정치적 관계들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독일 연방정부에 제출된 15번째 ‘아동·청소년 보고서’는 이에 관한 논의들과 그간의 청소년 정책의 축소에 대하여 비판적인 정치적 반응들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반응들 중 처음 나타난 것이 청소년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연방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BmFSFJ⁶⁰)에서 2012년 전국적으로 발의된 “독자적 청소년 정책(Eigenständige Jugendpolitik)”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 연령 대상들에 대한 정부의 정치적 조정에 더 많은 주목을 불러일으키고, 여러 다양한 영역에서의 정치적

60)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의 약칭

과정들에 청소년들의 참여를 더욱 제고시키려는 시도이다. 이와 관련되어 이 프로그램에서는 청소년정책을 위한 노선들이 새로이 강구되고, 교육, 참여와 같은 중점주제들과 함께 청소년을 위한 첫 번째 정치적 의제(Agenda)가 결정되었다. 위의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하여 독일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대표적인 청소년 단체협회인인 독일연방청소년연맹(Deutsche Bundesjugendring; DBJR)은 청소년의 입장에서 중요한 정치적 과제영역들을 파악하여 “ich-mache-Politik⁶¹⁾”이라는 프로젝트를 개발하였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미디어 규제적 시각들, 미래 세대들을 위한 부담의 감축, 모든 정치적 영역들에 대한 청소년 참여의 전망들과 조정들, 청소년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활동들과 운동단체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등이 중점적으로 제시되었다. 독자적인 청소년정책의 구조화를 위한 시도는 우선 전문가들의 담론에 의해서 조직화되었다. 2015년~2018년 기간 동안에는 코디네이터 역할을 맡은 ‘아동·청소년지원단체(AGJ⁶²⁾)’에서 시작된 “청소년에게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행동(Handeln für eine jugendgerechte Gesellschaft)” 프로그램이 수행되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이미 정치적 결정들과 관련되어 강구된 참여와 시험의 진행이 기초자치단체, 주(州), 연방 전역에서 더욱 발전되고,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시도되었다. 이 진행과정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가장 중요한 시각이 소위 “청소년 체크(Jugend-Check)”이다. 이는 “청소년에게 정의로움”을 고려한 입법의지와 정치적 결정들이 시험대에 올라야한다는 것과 동시에 참여의 형태들이 형성되어 고착되기 위한 재정적, 미디어적, 방법적, 협력적 기술의 지원 관계들이 숙고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렇게 청소년의 정치참여에 대한 그들의 입장을 대변해주는 것과 함께, 이러한 맥락 속에서 어떻게 청소년들이 그들 세대의 대표자들로서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와 결정의 책임에 대한 수위는 어느 정도로 설정되어야 하는 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아래

61) 직역하면 “내가 청치를 만든다.”라는 말로서 청소년이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62) Arbeitsgemeinschaft für Kinder- und Jugendhilfe의 약칭

에서는 이러한 독일의 청소년 정치참여와 관련된 프로그램들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소개된다.

① “독자적 청소년정책” 프로그램⁶³⁾

‘독자적 청소년정책’ 프로그램은 원래 2009년부터 연방, 주(州), 지역에서 독일 전역에 해당되는 청소년정책의 정치적 출발점으로 채택된 후, 전략적으로 시범 실시되었다. 이후 프로그램으로 자리를 잡게 된 후,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계속 발전되었다. ‘독자적 청소년정책’의 발전은 독일 전역으로 확산된 하나의 과정으로서, 이는 정치와 그 밖의 다른 사회 영역들에서 참여하고 있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함께 협력하는 과정이다. 여기서 “독자적”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의 핵심적인 일어로 후퇴하거나, 다른 영역들에 대한 책임에서 떠나자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청소년 시기의 삶에 대한 가치를 드러내는 것을 뜻하고 있다. 청소년은 더 이상 정치적으로 단편 조각이나 관할 대상으로 분할되어서는 안 된다. 청소년 시기는 하나의 전체로서 인식되고 그에 대한 전체적인 의미를 부여받아야 되는 것이다. 청소년은 명백히 아동의 시기에서 어른으로 넘어가는 존재 그 이상을 의미하고 있다. ‘독자적 청소년정책’이 보여주고 있는 여러 도전들은 어떠한 일상의 용어나 전문적 개념들도 청소년 시기의 모든 것에 대하여 결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특별히 보여주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기본노선들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다.

- ‘독자적 청소년정책’은 모든 청소년과 젊은 성인들에게 적용된다. 이 정책은 젊은이들에게 매력적인 전망과 참여 기회들을 열어 놓아서, 이들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여 형성하고, 확신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한다.

63) 이 프로그램에 대한 글은 필자가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2015). Eigenständige Jugendpolitik. Dialogprozess, Leitlinien, Herausforderungen.” 보고서 내용 중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발췌하여 편역하였다.

- ‘독자적 청소년정책’은 예방적이고 공정하게 한다. 이 정책은 모든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출발상황에서 공평한 기회를 가능하게 하고, 특별한 지원은 어려운 조건에서 생활하거나, 사회적 요구들에 아직 미숙한 젊은이들에게 제공된다.
- ‘독자적 청소년정책’은 스스로 구성된 단체들이나 연합회들과 같은 적절한 절차와 구조들을 지원함으로써 청소년들이 그들의 이익들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한다. 청소년들은 어떻게 그들의 삶의 세계가 형성되고, 그들의 미래가 영향을 받게 되는지에 대하여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
- ‘독자적 청소년정책’은 학교, 청소년지원, 정치, 시민사회, 경제, 미디어, 과학 그리고 청소년 스스로 모두가 함께해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의 전 사회적 과제이다.
- ‘독자적 청소년정책’은 우리 사회가 청소년을 통하여 유지하고,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잠재력과 기회를 만든다. 이 정책은 청소년의 참여에 대하여 가치를 평가하고, 공공에서의 긍정적인 모습을 장려한다.

‘독자적 청소년정책’ 프로그램은 위의 5개 기본노선들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으며, 여기에 더해 다음과 같은 원칙과 목표를 가지고 있다.

- 우리 사회는 청소년을 필요로 한다. -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참여와 그들의 잠재력. 그리고 청소년들은 결정적 시기인 청소년기에 사회의 지원과 인정을 필요로 한다. 오직 바른 기본조건들만으로서 그들은 자신들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여 형성할 수 있고, 확신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다. 따라서 독일에서 정치와 사회는 청소년들의 도전들과 구체적인 욕구들을 논쟁의 중심으로 이끌어내도록 요구된다.

② “ich-mache-Politik” 프로젝트⁶⁴⁾

‘ich-mache-Politik’ 프로젝트는 위에서 서술한 ‘독자적 청소년정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2011년부터 독일의 대표적인 청소년단체협회인 독일연방청소년연맹에서 시작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독자적 청소년정책’의 발전을 위해서 청소년이 참여하는 하나의 사업이다. 여러 참여 회의들에서 12~27세의 청소년들은 각처에서 그룹이나 혹은 개인적으로 교육, 참여, 학교로부터 직업으로의 전이, 이 프로젝트의 온라인 플랫폼인 “ePartool”과 같은 주제들을 프로젝트 과정으로 가지고 올 수 있다. 이 프로젝트는 정치가 이러한 입장들에 대하여 국면을 전환시켜 주제들에 대하여 서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얼마나 청소년들의 참여가 구체적인 효과를 가져 오는지는 정치의 환류로 볼 수 있는 ‘ePartool’에서 공개된 기고들에서 보여주고 있다. 회의의 논의에 올라온 주제들은 프로젝트 과정의 결과들에 기초하고 있다. 이러한 것이 항상 과정에서 도출된 실제적인 담론들에 연계되고, 유입되고, 직접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하는 청소년 참여를 가능하게 한다. ‘ich-mache-Politik’ 프로젝트의 중요한 기초들은 주제와 관련되어 충분히 검토를 거친 대화로부터의 반응과 효과에 대한 설명에 이르기까지 참여회의들로부터 도출된 몇몇의 걸음걸음들이다.

“정보를 전해라!”라는 구호아래서 ‘ich-mache-Politik’ 프로젝트는 청소년들에게 과정의 결과들을 정규적으로 참여회의의 형태로 전하여 마무리한다. 결정적 관점들이 도출되고, 그로부터 참가 그룹들과 개인들이 충분히 논의하여 검토할 수 있는 문제들이 개발된다. 이렇게 ‘ich-mache-Politik’ 프로젝트의 청소년 정치 참여 과정에서 만들어진 문제들은 다시 ‘독자적 청소년정책’ 프로그램으로 넘겨지고, 여기에 있는 조정 그룹이 참가자들에게 피드백(feedback)을 하게 된다. 이 외에도 프로젝트 팀이 직접 전문가 포럼에 문의를 요청하기도 한다.

64) “ich-mache-Politik”은 직역하자면 “내가 정치를 만든다”라는 말이다. 이 글의 내용은 필자가 “Deutscher Bundesjugendring(Hg.)(2014). Macht/Junge Politik!”에서 발췌하여 번역하였다.

“지원하라!”라는 구호아래서는 ‘ich-mache-Politik’ 프로젝트가 청소년단체들, 학생단체들, 사회운동단체들과 같은 자생적인 청소년 연대 및 학교와 청소년활동과 청소년지원 관련 민간단체들에게 협력에 대한 가능성을 알리고 있다. 이와 함께 사회적 네트워크들과 인쇄나 온라인 미디어들에게도 각각의 참여회의들이 소개되고 있다. 주제들에 대한 논의에 대한 각처 지원 장소들에 관한 정보는 홈페이지⁶⁵⁾에서 찾을 수 있다. 여기에는 참여자들에게 <주제에 관한 정보> 및 <실습지원>, 그리고 더 많은 방법적 조언들이 서비스되고 있다. 회의가 워크숍으로 전환될 시에도 청소년들은 ‘ich-mache-Politik’ 프로젝트로부터 필요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다.

“입장을 표명하라!”의 구호아래에서는 교육, 참여, 학교에서 직업으로의 전이에 관한 주제영역들에 관하여 2014년 5월까지 7개 참여 회의들이 개최되었다. 각 장소에서 그룹들, 학급들, 프로젝트들, 워크숍들, 개인 참여자들은 전문가의 생각들과 논의들을 서로 간에 충분히 논의하였다. 각 주제들과 회의과정에서 발전된 전문적 견해들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고, 자신의 입장을 발전시켜 ePartool에 등록하기 위하여 회의 하나 당 약 3개월의 시간이 주어졌다. ‘ich-mache - Politik’ 프로젝트의 이러한 구호들 외에도 “기여하라!”에서는 회의에서 생성된 생각들을 모아서 공개하는데 기여하고, “선정하라!” 구호에서는 다음회의로 넘어가기 전에 중요한 주제들을 선정하고, “실행하라!” 구호아래에서는 회의를 통해 얻어진 결과들에 대한 평가들, 생각들, 요청들을 ‘독자적 청소년정책’ 프로그램에 포함시켜 정치적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계하고 있다. ‘ich-mache - Politik’ 프로젝트에서 개최되는 모든 회의들에 대한 다양한 반응들과 실행들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ich-mache-Politik’ 프로젝트의 온라인 플랫폼인 ePartool은 실행에서 있게 되는 모든 기여들을 상세하게 공감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65) <https://mitwirkung.dbjr.de/mitmachen/> 참고.

③ “Jugend-Check”⁶⁶⁾

‘Jugend-Check’은 심사와 민감성을 위한 한 도구이자 프로그램이다. 12~27세의 청소년들에게 계획되고 있는 법의 의도가 주는 영향 정도를 알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표준화된 ‘Jugend-Check’의 실행 방식은 연방가정·노인·여성·청소년부가 독일연방청소년협회, 연방청소년감사국, 독일청소년연구소, 아동·청소년지원협회(AGJ⁶⁷⁾)와 함께 협력하는 워크그룹과의 협업을 통해서, 법의 결과를 평가하고 사정하는 기관인 InGFA⁶⁸⁾에 의해서 개발되었다. 청소년에게 정의로운 정책을 위한 효과적인 민감성과 심사 도구로서의 ‘Jugend-Check’에 대한 요구는 위에서 서술한 ‘독자적 청소년정책’의 원칙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우리 사회의 모든 형성과정들에서 청소년의 관심들이 고려되고 함께 생각되어야만 한다는 취지이다.

‘Jugend-Check’을 위한 역량센터인 KomJC⁶⁹⁾은 2017년 8월 1일 지속적인 발전과 수행을 위하여 베를린에 설립되었다. ‘Jugend-Check’은 독일 연방가정·노인·여성·청소년부의 ‘청소년전략(Jugendstrategie)’의 한 중요한 요소이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생활사와 관심사가 정치적 주목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Jugend-Check’을 통하여 청소년의 생활사에 대한 계획된 법들이 할 수 있는 영향력들이 체계적으로 상세하게 파악된다. 이들은 청소년의 6개 생활영역들과 11개 영향력의 규모를 통해서 시험된다. 시험 결과들은 ‘Jugend-Check’에 서술되고, 조정차원에서 관련 정부에게 전달된다. 인지된 것들은 의회의 상담 과정에서 KomJC의 웹사이트에 공개된다. ‘Jugend-Check’의 실행 방식은 지속적으로 성장되고 계속 발전되고 있다. 법의 의도를 심사하는 것과 함께, KomJC는 청소년

66) 이 글의 내용은 필자가 “Deutsches Forschungsinstitut für öffentliche Verwaltung(Hg.)(2018). Erster Bericht des Kompetenzzentrums Jugend-Check. Für eine jugendgerechte Gesetzgebung.”에서 발췌하여 편역하였다.

67) Arbeitsgemeinschaft für Kinder- und Jugendhilfe의 약칭

68) Institut für Gesetzesfolgenabschätzung und Evaluation의 약칭

69) Kompetenzzentrum Jugend-Check의 약칭으로 KomJC는 정부로부터 우선 2년 간 지원받게 된다.

에게 정의로운 법에 대하여 민감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 정치, 관리, 공개성을 추구하고 있다. 또한 연방과 주(州)에 있는 정치 기관들과 함께, 그리고 시민사회와 전문적 활동분야들과 함께 협력과 교류의 노력이 경주되고 있다. KomJC는 관심 있는 기관들과 행동가들을 위한 상담을 'Jugend-Check'의 주제에 따라 제공하기도 한다.

'Jugend-Check'은 참여도구가 아니며, 청소년 정치참여를 위한 부속물로 이해되어서도 안 된다. 'Jugend-Check'은 정치적 결정을 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보를 제공하여 민감하도록 함으로서 입법의 과정과 공적인 논쟁에서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력들이 인식되도록 돕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청소년의 정치참여 과정들이 문제시 되지 않고, 보완되도록 하는 것이다.

4) 독일 청소년 정치참여 활성화 방안

독일 연방정부의 15번째 '아동·청소년 보고서'는 청소년의 사회화 절차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절차가 어떻게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규정되어야 하는가와 사회화 절차가 어떠한 기대들을 청소년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가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청소년이 어떻게 스스로 정치적 행동가로 참여하고, 어떻게 일상의 조건들을 함께 만들어가는 데 참여하게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의 가능성에 대하여도 언급하고 있다. 말하자면 어떻게 청소년이 법, 정치, 그리고 청소년 참여형태들을 통해서 함께 형성되는가에 대한 질문과, 또한 어떻게 현재의 세대적 위치에서 청소년 연령과 연계된 자유공간들과 참여형태들에 대한 문제들이 드러날 수 있는가에 관한 질문들이다. 결국 근본적인 것은 어떻게 핵심 도전 과제들이 정치적으로 규정되느냐와 어떠한 조건들 아래서, 어떠한 행동공간들과 함께 청소년들이 이 과제들을 극복하면서 형성되느냐에 관한 것이라는 점을 보고서는 강조하고 있다.

청소년의 이러한 정치참여 가능성과 활성화를 타진하기 위해서는 이미 앞에서 서술된 바와 같이 청소년이 직접 선거에 참여하는 방안과 이들이 청소년의 정치참여와 관련된 조직들과 다양한 프로그램들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논해져야 한다. 이러한 논의에는 청소년이 이른 연령부터 직접 선거나 정당 및 관련 청소년 단체의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더욱 활성화하는 방안들이 있을 수 있다. 독일에서는 오래 전부터 청소년에게 18세부터 선거권을 부여하여 이들이 직접 투표에 참여하게 됨으로서 정치에 참여하는 기회를 부여하였다. 최근에는 점차 주(州)들이 주 선거나, 지역 자치단체 선거에서 선거권 연령을 16세로 더 낮추어 시행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청소년의 정치참여 가능성과 활성화를 위한 가장 직접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있는 실질적 사례이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정당이나 정당관련 정치조직들과 기관 및 단체들에 일찍부터 가입하여 정치 교육과 실습을 받는 것이 가장 효과 있는 또 하나의 청소년 정치참여 활성화 방안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아래에서는 청소년의 정치참여 활성화 방안으로 청소년의 정치참여 연령과 청소년의 정당 가입 및 관련 활동들에 대하여 고찰된다.

(1) 청소년 연령의 법 규정

청소년 연령을 법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도 청소년의 연령의 범주가 각국마다 제각기 다르고 따라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연령도 각기 다른 데에서 알 수 있다. 독일의 청소년 연령은 1975년 제정된 독일의 「사회법」(SGB⁷⁰⁾의 VIII권에서 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지원법」에 따르고 있다. 이 법은 원래 독일이 통일되기 전에는 「청소년 지원법」이었는데, 통독 후 이 법이 새롭게 제정되어 1991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되었다. 이 법은 시대적 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지금까지 독일의 모든

70) Sozialgesetzbuch의 약자

청소년정책을 주도하는 법이다. 독일은 우리와는 달리 오랜 기간 동안 아동정책을 가족정책 안에서 부분적으로 다루어 왔다. 하지만 통일 후 독일 정부가 1992년 UN의 아동권리협약에 비준을 하게 되면서 이를 전후해서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이 새로이 제정된 「아동·청소년지원법」에 의거해서 수행되고 있다. 따라서 학술계에서는 아동 연령과 청소년 연령에 대한 논쟁이 그치지 않고 있지만 이 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고 있다. 이 법은 ‘아동’을 0~13세로 규정하고, ‘청소년’은 14~17세까지로 정하고 있다. 이 법에서 정하는 청소년 연령과 관련하여 특이한 점은 14~17세로 정하고 있는 ‘청소년’ 연령과 달리 ‘젊은 성인’이라는 개념 아래에 18~26세의 연령을 부여하고, ‘젊은 사람’이라는 개념에는 0~26세까지를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서로 다른 연령들로 청소년의 개념의 범주를 법적 용어로 나누어 적용되는 것은 독일의 보호, 복지, 고용, 노동, 교육, 보육, 국방 등의 정책들에서 정책의 수혜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교육지책으로 이해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독일의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아동·청소년’을 함께 묶어 0~13세로 정하고 있고, 법 조항에 따라서는 14~17세로도 적용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근로보호법」에서는 ‘아동’을 0~14세로, ‘청소년’을 15~17세로 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밖에도 교육정책의 영역에서는 학자금 대출의 대상 연령도 24세 미만에 적용되는 등 정부의 각 정책 영역들에서의 청소년 연령의 범주가 서로 달리 규정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때에 정치라는 것이 정부의 모든 정책 영역들을 망라하고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의 정치참여 연령을 어떻게 이해하고, 규정해야 하나냐는 것은 하나의 난제라 아니할 수 없다.

현재 독일에서는 일반적으로 ‘성년(成年)’의 연령을 18세로 정하고, 청소년이 이 연령에 도달하면 참여권과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주(州) 선거나 지역자치단체 선거에서는 16세에 선거권과 종교의 자유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주가 점차 늘어나고 있어, 선거 연령이 18세로 통일되었다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한편, 유엔의 ‘아동권리협약’에서는 무제한적으로 아동들의 참여권을 인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권리도 자신의 생각을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이 될 때에 한해서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으로 볼 때에 결국 정치적으로 참여하고, 선거에 참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숙’이 이루어진 연령이 청소년의 정치참여 연령의 기준이 될 수가 있다. 하지만 ‘성숙’의 척도는 어떻게 정해질 수 있는가에 대한 논쟁이 있을 수 있어 청소년의 정치참여 연령의 문제에는 아직 정답이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아동 연령과 청소년 연령이 독일의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에 혼선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상황 인지라, 독일 연방정부가 2013년에 제출한 14번째 ‘아동·청소년 보고서’에서는 독일의 「사회법」 8장에 속해있는 「아동·청소년지원법」을 따로 떼어 독립시켜 “독자적인 「아동·청소년법」” 제정을 촉구하였었다. 이에 대하여는 아직도 논의 중에 있는 상황이다. 정보사회에 들어오면서 청소년들은 기성세대보다 정보의 접근 역량이 뛰어나고, 과거보다 우리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와 관련된 제반 문제들에 대하여 기성세대보다 더 많은 정보들을 접하고 있다. 이는 정보사회가 청소년들을 더욱 성숙하게 만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독일 정부가 차제에 “독자적인 「아동·청소년법」”을 제정할 시 청소년의 정치참여를 활성화하는 방안으로서 청소년의 선거권 연령이 오스트리아처럼 16세로 하향 조정되는 것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

(2) 정당에서의 회원활동을 통한 청소년의 정치참여 활성화

독일 연방정부는 가장 최근인 2020년 11월 11월에 연방의회에 16번째 ‘아동·청소년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16번째 ‘아동·청소년 보고서’의 주제는 “아동과 청소년 연령에서의 민주주의의 교육 지원”이다. 독일의 15번째 ‘아동·청소년 보고서’에서 중요하게 보고되었던 ‘청소년의 정치참여’의 주제가 16번째 보고서에서는

이의 실천적 수행을 강조하고 있는 ‘청소년 정치교육’으로 연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16번째 ‘아동·청소년 보고서’는 민주주의와 정치교육의 관계를 불가분의 관계로 설정하고 어린 청소년 시기부터 정치교육을 통해 이들의 정치 참여를 바르게 실천하려는 의지와 계획을 보고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청소년의 정치교육 일환으로 정당에 대한 이해와 정당에의 가입을 통해 일찍부터 청소년의 정치참여에 대한 교육과 실천적 훈련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

표 IV-11. 정당 회원 가입 조건 현황

정당	최소 연령	최소 연회비
CDU ⁷¹⁾	16세	72€, 25세 이하 청소년 우대
CSU ⁷²⁾	16세	70€, 교육 중인 24세 이하 청소년 30€
SPD ⁷³⁾	14세	60€, 30€ 저소득인, 18€ 청소년 정당회원
Die Grüne	무제한	순수입의 1%, 청원에 따른 할인 가능
Die Linke	14세	무소득인 18€, 월급 500€부터 36€
FDP ⁷⁴⁾	16세	60€ (27세까지)
Die Partei	16세	10€
Tierschutzpartei	16세	78€, 저소득인 39€, 18세 이하 18€
AfD ⁷⁵⁾	16세	120€, 사회취약계층 30€까지 감액 가능

* 출처: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ngen(2020). 16. Kinder- und Jugendbericht. Förderung demokratischer Bildung im Kindes- und Jugendalter. bmfjsf.de.

정당은 유럽의회, 연방의회, 지방의회, 지역의회에 협력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민들에 의해 정통성과 지속성을 가지고 조직된 단체이다. 독일 헌법의 21조에는 정당의 형성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 정당에 관한 조항에는 특정한 과제들이 구체화되어 국민의 의사형성에 협력하는 일반적 자구들로 표현되어 있다. 보고서는 정당을

71) Christlich Demokratische Union Deutschlands의 약칭

72) Christlich-Soziale Union in Bayern e. V.의 약칭

73) Sozialdemokratische Partei Deutschlands의 약칭

74) Freie Demokratische Partei의 약칭

75) Alternative für Deutschland의 약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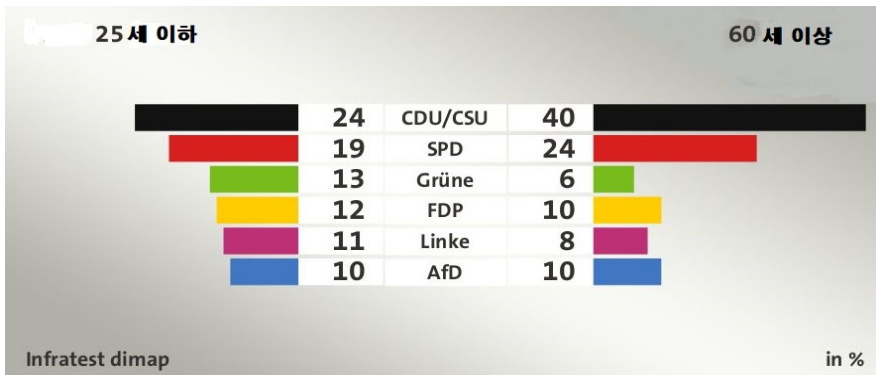
통한 청소년의 정치참여에 관한 논의를 지난 2017년에 있었던 19회 연방국회 선거를 사례로 들어 전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난 19회 연방의회 선거에서 청소년 들은 기존 주요 정당들과 함께 애완동물 등 동물 보호를 외치는 “동물 보호당 (Tierschutzpartei)”과 우리나라에서 허경영의 국가혁명배당금당과 같이 Martin Sonneborn이 이끄는 해학적인 정당인 “정당(Die Partei)”에도 많은 관심을 보였다. 위의 <표 IV-11>을 보면 거의 모든 정당들이 우리나라에서 고등학교 1학년 연령이 되는 16세가 되면 정당에 가입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놓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진보정당인 SPD와 Die Linke는 우리나라 중학교 2학년 연령부터 정당 가입이 허용되고 있고, 녹색환경의 이념을 가지고 있는 진보적인 정당 Die Grüne는 정당의 가입에 나이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 파격이 주목할 만하다. 1년간 정당 회비는 청소년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인 한화 3만~5만 원 정도로 각 정당들이 받고 있어, 각 정당들이 청소년의 정치참여를 통한 사회화와 정치교육을 적극 유도하고, 지원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아래의 <표 IV-12>에서는 이러한 정당들에 청소년과 같은 젊은 연령층이 얼마나 실제로 회원으로 가입되어 활동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표 IV-12. 정당 가입자 중 청소년 및 청년 회원 비율(%)

연령 정당	16세 이하	16~20세	21~25세	26~30세	31~35세	연령 총합
CDU	-	0.7	2.0	3.1	4.0	9.8
CSU	-	0.3	1.5	2.9	4.1	8.8
FDP	-	2.6	6.1	7.1	7.0	22.8
SPD	0.0	1.0	3.1	4.6	4.9	13.6
Grüne	0.0	2.2	5.3	8.1	9.0	24.6
Die Linke	0.1	3.4	7.2	8.1	6.7	25.5

* 출처: Niedermayer(2015). Parteimitglieder in Deutschland: Version 2015. p.28.

위의 <표 IV-12>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정치적 성향은 전통적인 대표적 진보 정당인 SPD보다 더 진보적인 정당인 Die Grüne와 Die Linke에 35세까지의 청소년 및 청년들이 가입회원 4명 중 1명의 비율로 가장 많이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중도정당인 FDP에 가입회원의 22.8%가 청소년 및 청년의 연령층으로, 전통적인 진보정당인 SPD 가입 비율 13.6%보다 훨씬 높게 나타난 것이 매우 이채롭다. 전통적인 보수정당인 CDU와 CSU에는 각각 9.8%, 8.8%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보아 독일 청소년 및 청년과 같이 젊은 세대들은 전통적으로 지배적인 양대 정당인 SPD와 연합정당 CDU/CSU에 거부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정당에 가입하여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들과는 달리, 아래 [그림 IV-3]과 같이 실제 투표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다른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 출처: ARD Tagesschau Bundestagswahl 2017 Bilder.
<https://www.tagesschau.de/wahl/archiv/2017-09-24-BT-DE/umfrage-alter.shtml> 에서 2021년 8월 13일 인출.

그림 IV-3. 독일 연방 총선 연령별 투표 성향

위의 [그림 IV-3]은 지난 2017년에 열린 19회 연방의회 선거에서 나타난 18~25세 청소년과 60세 이상 고령자의 투표 결과를 정당별로 비교하여 간략하게

잘 보여주고 있다. 독일에서 전통적인 기성정당들은 보수정당으로서는 기독교민주당인 CDU와 독일 남부 바이에른(Bayern) 주(州)를 근거로 하는 기독교사회당인 CSU, 진보정당으로 사회민주당인 SPD, 중도정당으로 자유민주당인 FDP, 후발주자로 녹색환경을 이념으로 하는 진보정당으로의 Die Grüne가 있다. CDU와 CSU는 보통 보수 연합정당으로 선거에 참여하고 있다. Die Linke와 AfD는 독일 통일 이후에 출현한 정당들로 Die Linke는 SPD에서 갈라져 나온 진보정당이고, AfD은 외국인을 혐오하는 극우정당으로 구 동부 동독지역에서 득세하고 있다.

[그림 IV-3]을 분석해 보면 25세 이하의 청소년들이 보수 연합정당인 CDU/CSU를 가장 많이 지지하고 있고, 이는 청소년 4명 중 1명에 해당되고 있다는 사실이 눈에 띈다. 또한 유대인을 혐오하고, 반여성주의이며, 근본주의를 내세우는 극우정당 AfD에 청소년 투표자 10명 중 1인의 비율이 나타난 것도 놀랄만한 일이다. 그래도 청소년들의 투표 경향이 진보적 성향의 정당인 SPD, Die Grüne, Die Linke에 43%, 보수적 성향의 정당인 CDU/CSU, AfD에 34%, 중도성향의 FDP에 12%로 나타나고 있어, 아직은 진보적 성향이 더 강한 것으로 보이고 있다. 반면에 60세 이상의 고령층에서는 보수적 성향의 정당에 50%, 진보적 성향의 정당에 38%, 중도성향 정당에 10%로 나타나, 연령이 높아질수록 보수적 성향의 투표 경향 전통은 독일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방 정부의 16번째 보고서는 정당에의 청소년 정치참여에 관한 맺음말로 전망과 추천의 글에서 민주주의는 정당을 필요로 하고, 정당은 청소년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새로워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생명력 있는 정당은 자라나고 있는 사회의 뿌리와 같은 청소년에게 의존하고 있고, 정당들이 점차 현행 사회갈등의 노선들을 줄여나가는데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은 청소년들의 관심들과 문제들에 더 많이, 그리고 정당의 기본프로그램들에는 더 적게 정당의 정치교육 사업의 중심을 옮겨야만 한다. 이와 함께 정당들은 조직 구조를 보다 젊게 만들고, 젊은 정당 가입자들에게 매력적으로 형성되어야 한다. 또한

정당들과 그들 산하의 젊은 세대 조직들에의 회원가입에 연령제한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비판적으로 성찰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조직에서 중요한 직위를 맡는 조건도 40세 이하에서 27세 이하로 낮추는 것이 청소년들에게 매력 상승의 큰 걸음이 되고, 청소년의 정치참여가 활성화 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5) 독일 청소년 정치참여의 정책적 시사점

독일 연방정부의 15번째 '아동·청소년 보고서'는 독일에서의 청소년 정치참여가 청소년을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적 행동가로서 인정하기에 부적합한 특정한 주제들에 지배되고 있다고 총평하고 있다. 즉, 정치과학적 설계에 의한 청소년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의 아주 낮은 선거참여율과 정당정치 및 노동조합에의 참여 비율의 배경에는 청소년의 정치 거리두기와 정치혐오에 대한 지속적인 담론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적인 사항들, 사회적 운동들과 시위장면들로 나타나고 있는 청소년 정치참여 형태들은 이러한 맥락에서 외면당하거나 일탈 행동으로 배척되고 있다는 해석이다.

이렇게 볼 때에 독일에서 청소년의 정치참여에 있어서의 난제는 어떻게 서로 다른 다양한 영역들에서의 결정과정에 청소년의 목소리들을 담아낼 수 있을까 하는 문제에 있다. 민주주의와 참여의 관계는 시민사회의 정치문화에서 매우 밀접한 관계이다. 그런데 이 관계가 독일에서는 성장의 제도화된 틀 안에서, 사회적 참여의 전망에서나 청소년에 정의로운 민주주의적 환경에서, 정치교육 측면에서 아주 적게 연계되어 성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함께 독일의 청소년 정치참여에 있어서 딜레마는 청소년 참여와 관련하여 제도화 하는 과정과 일상세계 과정을 중재하는 차원으로 담론이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참여가 무엇보다 정치적, 사회적 통합의 중심적인 방법이라는 주제는 성장의 제도적 관심 속에서 궁색하게 되고 있다. 말하자면 청소년의 제도화된 정치참여는 정부가 형성해 놓은 제도적

틀에 청소년이 잘 적응하게 되면 정부와 청소년이 상호 “win-win” 할 수 있다는 것을 포장하는 장치인 것이다. 여기서 15번째 ‘아동·청소년 보고서’는 하버마스를 인용하면서(Habermas, 1992), 이러한 제도적으로 결합된 청소년의 정치참여의 관점에는 이를 기성세대의 권력형성을 위한 의사소통 매개체로 전환시키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보고 있다. 이렇게 보면 오늘날 제도화된 성장의 틀 안에서의 청소년 정치참여에 관한 토론들은 그에 상응하는 기성정치와 청소년 간의 힘의 균형을 위한 전략과 의사소통적 갈등해결의 정치적 문화와는 거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치참여를 위한 동기는 오직 청소년들이 표면적인 적응에의 강요에 지배받는 대신에 스스로의 입장을 세워 나가는 과정과 갈등해결을 위한 민주적 관계들 속에서만 찾아지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총체적으로 보면 참여에 대한 제도적 이해를 떠나서 현재 참여가 정치적으로 요구되고, 가능하게 되는 청소년 정치참여의 윤곽이 명확히 드러나고 있지 않다는 사실만이 확실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불평등과 청소년과 성인 간의 힘의 불균형에 직면해서, 청소년들의 다양한 입장들의 합의가 가능해지는 ‘참여적 평등’의 사회적 정서가, 다시 말하면 하나의 객관적이고 상호주체적인 참여적 평등의 조건이 어떻게 형성될 수 있는가에 대한 전망들이 아직 찾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현재 독일이 가지는 청소년 정치참여의 딜레마이다.

4. 미국 청소년 정치참여 사례분석 및 시사점

1) 미국 청소년 정치참여 활동 개요

정치참여는 투표를 통해 선거에 참여하거나 정당활동 또는 선출직으로 의회나 행정부의 공적 정책결정과정에서 참여하는 것과 같은 정치과정에서의 전반적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Saud, Ida, & Mashud, 2020). 그러나 이는 제도적

절차와 관련한 개념이며, 보다 넓게는 자치활동과 시민교육, 지역사회참여활동,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에게 청원하기 위해 서명을 받는 일 등의 이른바 직접적인 정치행동까지를 포함하면서 시민참여(civic participation)와 정치적 행동주의(political activism)로까지 이어진다. 청소년 행동주의는 선거에서의 투표 참가에서부터 시민교육 참가, 토론클럽활동, 정당을 위해 일하는 것, 정치적 서명운동에 이르는 많은 내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Akiva, Carey, Cross, Delale-O'Connor, & Brown, 2017).

민주주의 선진국으로 다양한 인종과 민족으로 어우러진 미국은 연방정부와 지방 정부 등으로 구성되는 복합적인 정책환경 속에서 역동적인 시민참여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에서의 청소년 정치참여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미국에서의 청소년 정치참여는 민주적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 왔으며 사회 변화를 위한 지속적인 촉진요인으로 작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과 청년의 선거참여와 정치적 행동주의 등은 주요한 주제로 지속적으로 탐구되고 있다(Weiss, 2020). 특히 미국은 선거권 연령을 21세에서 18세로 낮아진 1971년 이후 청소년들의 정치참여가 본격화되었으며, 대통령선거와 중간선거 등에서의 투표율과 결과 분석 등을 통해 정치참여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Isaac, 1992; Kitchel, 2015).

여기에서는 주로 최근의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미국 청소년들의 선거참여를 비롯한 정치과정참여의 실태와 변화 추이 및 시민성 함양을 위한 참여적 프로그램과 청소년위원회의 참여활동을 알아보고 비제도적 참여로서의 청소년들의 정치행동과 관련한 사례들을 소개하기로 한다. 나아가 청소년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지원 체제와 관련 논의를 통해 미국 청소년 정치참여의 특징을 요약하면서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고찰한다. 미국의 정치체제와 사회적 시스템과 문화가 우리나라와 다른 점이 많지만, 변화하는 청소년 세대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적 전환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함의를 찾기를 기대한다.

2) 청소년 정치참여 실태와 변화추이

(1) 청소년 선거참여와 투표율 추이

청소년의 정치참여에 대한 미국 사회의 관심과 지지는 양면적인 입장이다. 우선, 청소년에 대한 표현의 자유와 정당한 법적 절차에 대한 권리 등이 점진적으로 확장되어 왔으며, 1971년 이후 연방 수정헌법을 통해 18세 청소년에게 연방과 주 선거에서의 투표권이 허용되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주에서 18세를 성인 연령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학교에서는 여전히 필요한 경우 학생들의 가방, 개인 사물함(locker) 및 지갑 등을 열어보는 규제가 있다(천정웅, 이민희, 박선영, 황성하, 2013).

청소년의 선거권 연령과 관련한 논란도 지속되고 있다. 전국청소년인권연맹(National Youth Rights Association)을 비롯하여 청소년 옹호론자들은 선거 연령을 만 16세 또는 그 이하로 낮추자는 요구를 꾸준히 하고 있다⁷⁶⁾. 청소년의 투표 연령을 낮추는 것에 대해서는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지지가 나타나고 있지만, 실제 선거에서의 청소년들의 투표 참여는 오히려 점차 낮아지는 경향을 알 수 있다.

미국의 투표율을 보면, 지난 40여 년 동안 전체 연령대에서 투표 참여가 감소되어 왔으며, 청소년의 투표율이 경우도 선거에 따라 다소 증감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2000년도 대통령선거에서는 18세에서 24세 연령집단에서의 투표율은 42%였는데, 이는 1972년의 투표율이 55%였으며 1992년에는 50%로 나타난 것에 비하면 감소한 것이다. 다른 한편, 25세 이상의 투표율은 2000년에는 66%, 1972년에는 68%, 그리고 1992년에는 70%를 기록하였다(Center for Information and Research on Civic Learning

76) NYRA. <http://www.youthrights.org/issues/voting-age/> 에서 2021년 6월 3일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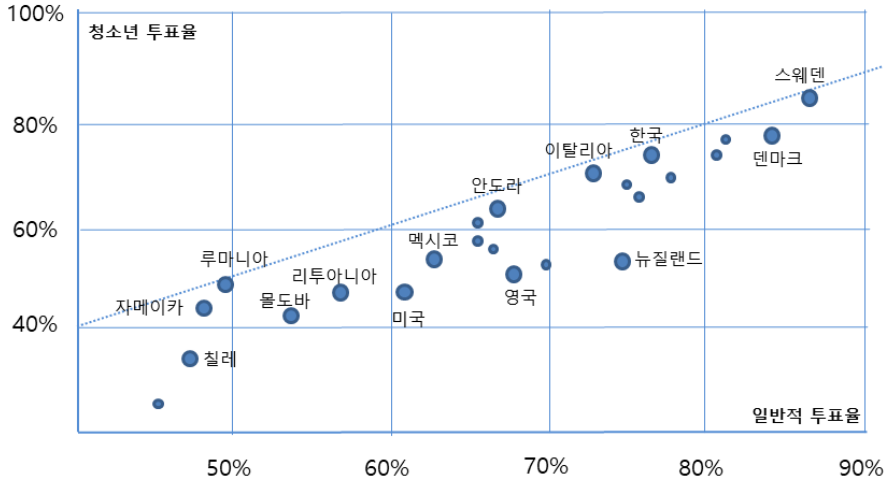
and Engagement [CIRCLE], 2005). 이에 따라 퍼트남(Putnam, 2002)은 청소년의 투표참가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난 이러한 결과는 사회자본의 감소는 물론, 궁극적으로는 미국 민주주의를 약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의회선거에서의 청소년 투표율도 점차 감소 추세를 보여준다. 예를 들면, 1972년도에는 24%였으며, 1998년도에는 18%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은 각 정당들의 노력으로 2002년도 의회선거에서는 다소 올라가기는 했지만, 청소년들의 투표참가율은 대체로 이 정도의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 전망이다(CIRCLE, 2005). 실제로 2008년도의 대통령선거에서의 청소년 투표율은 감소 추세가 지속되는지 반등하는지에 대한 기대를 갖게 했으나, 그 결과는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18-29세 연령층은 50%에 못 미치는 투표율을 나타냈으며 이는 미국인 전체 투표율과 비교하면 15% 정도의 차이로 낮은 것이다⁷⁷⁾.

이와 같이 대통령 선거와 의회선거에서의 투표율을 보면, 미국 청소년들의 투표율이 성인들보다 분명히 낮게 나타나지만, 이러한 현상은 미국만의 상황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세계 주요 24개 국가들의 투표율을 비교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전체 투표율이 청소년 투표율을 앞서는 것은 모든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이들 24개 국가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부유하고 민주주의적이며 문맹률이 낮은 나라들로 전체적으로 미국과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⁷⁸⁾.

77) The New York Times(2020.10.8.). Why Don't Young People Vote, and What Can Be Done About It?. <https://www.nytimes.com/2020/10/08/upshot/youth-voting-2020-election.html>에서 2021년 7월 10일 인출.

78) The New York Times(2020.10.8.). Why Don't Young People Vote, and What Can Be Done About It?. <https://www.nytimes.com/2020/10/08/upshot/youth-voting-2020-election.html>에서 2021년 7월 10일 인출.



* 출처: The New York Times(2020.10.8.). Why Don't Young People Vote, and What Can Be Done About It?. <https://www.nytimes.com/2020/10/08/upshot/youth-voting-2020-election.html> 에서 2021년 7월 10일 인출.

그림 IV-4. 세계 주요 국가의 청소년 투표율(18-29세)

(2) 청소년 투표율에 대한 논의들

그러면 청소년의 투표율이 성인들 보다 낮은 이유는 무엇인가? 미국의 경우 100여 년 전에 이미 미국의 투표율이 낮은 집단들 가운데 청소년, 소수 인종, 교육수준이 낮은 계층, 빈곤층 등이 속하는 것으로 분석된 바 있는데, 오늘날에도 같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청소년 투표율이 낮은 원인에 대해 다양한 분석이 있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논의한다⁷⁹⁾.

첫째, 습관형성(habit formation)의 측면이다. 투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형성되는 하나의 습관인데, 청소년들의 경우 이러한 것을 형성할 기회가 보다

79) The New York Times(2020.10.8.). Why Don't Young People Vote, and What Can Be Done About It?. <https://www.nytimes.com/2020/10/08/upshot/youth-voting-2020-election.html> 에서 2021년 7월 10일 인출.

적고 이러한 습관이 재강화된다는 것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람들은 습관적 비투표자에서 습관적 투표자로 된다는 것이다(Allen & Light, 2015).

둘째, 기회비용(opportunity cost)의 측면이다. 계속되는 선거를 통해 자주 투표를 하게 되는 것보다는 첫 투표나 두 번째 투표 경험이 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청소년들에게는 직접적인 기회비용이 있다. 일반적인 성인들의 경우보다 청소년은 고용여건상 탄력적인 시간 활용이 어렵고 투표하는데 필요한 재정적 어려움도 있으며, 지역사회 내의 유대감이 깊지 않은 일시적 거주 상황에 있을 가능성도 있다. 다음으로 투표 과정을 학습하는 간접적 기회비용도 있는데, 투표 장소를 확인하거나, 후보에 대해 알아보는 것 등이 포함된다. 중요한 사실은 미국의 경우,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몇 가지는 역사적으로 의도된 것이라는 점이다. 노예제도와 인종주의와 관련이 있으며 투표를 더욱 어렵게 하는 “투표자 ID법”과 같은 정책도 있어서, 청소년을 포함하여 투표율이 낮은 집단들에게는 상대적으로 불균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고 본다(McConville, Stokes, & Gray, 2018).

셋째, 대안적 참여(alternative participation)의 측면이다. 청소년 투표율은 다른 형태의 정치적 행동에 참여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일반적으로 낮은 투표율은 대중저항(mass protests), 점령운동(occupy movements), 및 새로운 정치참여 플랫폼으로써의 소셜미디어의 사용 증가 등과 같은 형태의 시민 행동주의(civic activism)의 증가와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특히 청소년들 간에 더욱 상관성이 높게 나타나는데, 독일, 프랑스, 영국의 경우에서도 성인들과 비교할 때 청소년들은 청원용 서명운동(sign petition)에 더 많이 참여하고 시위(demonstration)에는 두 배 이상 참여하는 것을 알 수 있다(Akiva et al, 2017).

이러한 분석결과를 보면 청소년의 투표율이 낮은 이유를 정치나 선거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Holbein과 Hillygus(2020)는 최근의 책, “Making Young Voters”에서 이를 확인해 주고 있다. 미국에서 청소년들이 선거에 관심을 갖는 정도는 76%로 나타나고 대통령이 누구인가에 대한 중요

성에 74%가 동의하고 있으며, 공적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응답 비율도 85%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투표 의사는 83%가 있다고 답변하여 가장 높은 응답을 보인 것이다. 미국의 청소년들의 투표율이 낮다고 보기 전에 성인들의 경우를 볼 필요가 있는데, 성인 투표율이 높은 국가에서는 청소년의 투표율도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격차는 전체 투표율이 높아지면 크게 줄어든다. 달리 말하면, 청소년의 투표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청소년 투표율은 전체 투표율에 근접하게 된다⁸⁰).

청소년의 정치참여와 관련하여 주목할 점은 각급 학교에서 모의투표를 실시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선거 기간 동안 초·중·고등학교에서 대통령 후보에 대한 의견을 정책분석과 토론을 거치거나 모의투표를 통해 표현하는 것이다 (Larsen, Levinsen, & Kjaer, 2016). 모의투표는 투표권이 없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일종의 청소년참여 프로그램이다. 따라서 모의투표이지만, 청소년들은 실제 선거에서 후보가 제시하는 공약과 정당의 정책노선을 바탕으로 투표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 효과는 크다(김종갑, 2020; McDevitt & Kiouisis, 2006). 모의투표는 온라인 투표(online voting)로 이루어지며 투표결과도 실제 선거의 공식 결과와 함께 공표한다. 1988년부터 2018년 중반까지 실시된 키즈보팅(Kids Voting)에 참여한 청소년의 수는 백만 명에 달한다⁸¹).

실제로 한 통계자료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고 있는 만 18-19세 유권자가 80% 이상인 것으로 제시한 바 있는데, 이는 실제 투표율은 청소년이 성인 연령층 보다 상대적으로 낮지만 정치적 견해와 성향을 갖고 있는 청소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80) Duke(2020.4.7.). Making Young Voters-new book from Sunshine Hillygus.
<https://polisci.duke.edu/news/making-young-voters-new-book-sunshine-hillygus-0> 에서 2021년 7월 10일 인출.

81) McDevitt, M., & Kiouisis, S. (2006). Experiments in Political Socialization: Kids Voting USA as a Model for Civic Education Reform. CIRCLE Working Paper 49, Medford: CIRCLE.
<https://kidsvotingusa.org/resources/independent-research/509-kidsvoting-model-for-civic-education-reform-2006/file> 에서 2021년 7월 23일 인출.

말해 준다⁸²). 학생을 대상으로 한 모의투표가 투표참여를 유인하는 효과를 가져다 준다고 보는데, 이는 모의투표를 통해 학교에서 가정으로 토론이 이행되는 과정을 통해 부모의 정치적 관심을 확대하게 되는 이른바 분수효과(trickle-up effect)가 나타난다는 것이다(Linimon & Joslyn, 2002). 따라서 모의투표는 선거연령 하향 조정의 의미와 취지를 살리는 방법이기도 한다. 18세 유권자들이 자신들에게 부여된 선거권을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주시민으로서의 가치관 정립과 정치참여의식을 높이는 하나의 정치교육 방안이기도 한 것이다(김종갑, 2020).

(3) 2020년 선거참여와 2021년 하버드 청소년여론조사

미국 청소년의 선거참여와 관련하여 최근 2020년 미국 대통령선거는 이전과는 다른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면서 앞으로 Z세대의 투표의 힘(voting power)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려 주고 있다⁸³). 2020년 대통령선거에서의 청소년 투표율은 2016년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는데, 당시 '에디슨연구소(Edison Research)'에서는 출구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선거권을 가진 18-29세 청소년의 투표율은 52-55%가 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2016년도 대통령선거에서의 출구조사 결과는 42-44%였다⁸⁴). 2020년 선거의 실제 결과는 미국인 중 약 159.8백만 명이 투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바이든(Biden) 대통령은 78백만 표를 득표하여 트럼프 대통령 보다 약 5.5백만 표가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특히 현재 8세부터 23세 사이의 연령으로 볼 수 있는 Z세대는 전체 투표율과 바이든 대통령의 득표율

82) GALLUP(2014.7.10.). Party Identification Varies Widely Across the Age Spectrum. <http://www.gallup.com/poll/172439/party-identification-varies-widely-across-age-spectrum.aspx> 에서 2021년 7월 23일 인출.

83) Make it(2020.11.18.). The 2020 election shows Gen Z's voting power for years to come. <https://www.cnbc.com/2020/11/18/the-2020-election-shows-gen-zs-voting-power-for-years-to-come.html> 에서 2021년 6월 25일 인출.

84) CIRCLE(2020.11.25.). Election Week 2020: Young People Increase Turnout, Lead Biden to Victory. <https://circle.tufts.edu/latest-research/election-week-2020> 에서 2021년 7월 10일 인출.

등의 두 가지 기록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⁸⁵). 청소년 투표자의 약 65%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투표한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는 다른 연령집단들 보다 약 11%가 높은 것이다. 그리고 조지아나 펜실바니아와 같은 주에서는 청소년 투표자가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본다⁸⁶).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21년 4월에 발표한 하버드 대학교 케네디 스쿨 정치학 연구소에서 실시한 하버드 청소년여론조사 41판 (Harvard Youth Poll, 41st Edition)의 결과는 지금의 미국 청소년들의 투표 추이에 대해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을 밝혀주고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 18-29세의 미국 전체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표본조사의 결과는 특히 유색 청소년들 가운데 미국에 대한 희망적 기대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10년 전보다 보다 더 많은 비율의 청소년들이 정치참여적이며 특히 현재의 바이든 대통령(President Biden)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높은 지지와 진보적 정책에 대한 호의성 및 미국인들에 대한 높은 믿음(faith)을 보여주었다⁸⁷).

하버드 청소년여론조사는 2021년 3월 9일부터 22일까지 전국 청소년 2,513명을 대상으로 바이든 행정부(Biden Administration) 취임 첫 100일에 대한 의견과, 미국 공화당, 정신건강 및 소셜미디어의 영향 등에 대한 견해를 조사하였다.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가 가장 큰 투표군이 됨에 따라 이들의 가치와 참여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보여주고, 이들이 관심을 갖는 미국의 당면 현안들에 대한 긴급성을 알려 주고 있다. 하버드 청소년여론조사의 주요 결과 중 청소년 정치참여와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⁸⁸).

85) CIRCLE(2020.11.25.). Election Week 2020: Young People Increase Turnout, Lead Biden to Victory. <https://circle.tufts.edu/latest-research/election-week-2020#youth-voter-turnout-increased-in-2020> 에서 2021년 7월 10일 인출.

86) Make it(2020.11.18.). The 2020 election shows Gen Z's voting power for years to come. <https://www.cnbc.com/2020/11/18/the-2020-election-shows-gen-zs-voting-power-for-years-to-come.html> 에서 2021년 6월 25일 인출.

87) The Institute of Politics at Harvard University(2021.4.23.). Spring 2021 Harvard Youth Poll. <https://iop.harvard.edu/youth-poll/spring-2021-harvard-youth-poll> 에서 2021년 7월 10일 인출.

첫째, 미국 청소년들은 10년 전보다 더욱 정치참여적이며 진보적 정치가치에 대해서도 2016년 조사 때보다 더 높은 응답을 나타냈다. 10여 년 전 당시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당선 후 1년 정도 되었을 때 조사한 결과를 보면 약 24%가 정치적으로 적극적이라고 응답했는데, 지금 그 비율이 36%로 높게 나타난 것이다. 동일연령집단(cohort) 중에서는 흑인 청소년들이 4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건강 보험문제, 기후문제, 이민문제, 빈곤문제, 소수자 우대 정책(affirmative action) 등과 같은 이슈들에 대해 현 정부의 개입노력을 보다 우호적으로 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⁸⁹⁾.

둘째,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호의성이 2020년 봄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18-29세까지의 청소년 중 약 59%가 바이든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해 대체로 호의적으로 본다. 코로나바이러스의 대응에 대해서는 약 65%가 동의하고 인종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약 57%가 동의하였다. 이러한 전반적인 호의적 평가에 대한 추세는 특히 흑인 청소년들은 77%, 히스패닉계는 70%로 높게 나타났고, 응답자 중 대학생의 경우는 61%였으며, 대학 졸업자들은 67%로 높게 나타났다. 여성은 61%로 남성의 57% 보다 다소 높게 직무수행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⁹⁰⁾.

3) 청소년 정치참여 실태 및 유형: 참여사례 및 참여프로그램

(1) 청소년 시민성 함양과 믹바 챌린지(Mikva Challenge) 사례

① 청소년 시민성 함양 프로그램

미국은 시민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각각의 연령층에 맞는 다양한 정치교육 프로

88) The Institute of Politics at Harvard University(2021.4.23.). Spring 2021 Harvard Youth Poll. <https://iop.harvard.edu/youth-poll/spring-2021-harvard-youth-poll> 에서 2021년 7월 10일 인출.

89) The Institute of Politics at Harvard University(2021.4.23.). Spring 2021 Harvard Youth Poll. <https://iop.harvard.edu/youth-poll/spring-2021-harvard-youth-poll> 에서 2021년 7월 10일 인출.

90) The Institute of Politics at Harvard University(2021.4.23.). Spring 2021 Harvard Youth Poll. <https://iop.harvard.edu/youth-poll/spring-2021-harvard-youth-poll> 에서 2021년 7월 10일 인출.

그램을 제공하고 있다(이정진, 2021). 특히 청소년의 시민성 함양을 위한 제도적 노력은 시민교육(civic education)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주로 학교에서의 사회과 교과(social studies)와 역사과목 및 학교 밖에서의 사회단체 중심의 자율적 프로그램을 통해 실시된다. 학교에서의 교육은 초등학교에서는 미국의 역사와 정치에 대한 이해를 통한 애국심과 일체감 향상을 목표로 하지만, 중·고등학교로 가면서 정치구조와 참여, 인권, 관용 등의 시민적 지식과 태도를 강조하는 것으로 나아간다⁹¹⁾. 사회단체에서는 학교와 연계하면서 부모와 지역사회와 관련한 자료와 정보제공을 통해 시민적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⁹²⁾.

미국의 시민성 함양 프로그램으로는 ‘정의를 위한 베이사이드 학생들’(Bayside Students For Justice)과 ‘아이인게이지 여름 시민회의(iEngage summer civics institute)’와 믹바 챌린지(Mikva Challenge)의 ‘유세연단(Soupbox)’ 프로젝트 등이 긍정적 성과를 나타낸 대표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Andolina & Conklin, 2019). 첫째, ‘정의를 위한 베이사이드 학생들’은 서부 해안도시의 종합고등학교에서 일단의 교사들이 중심이 되어 개발한 다학교 프로그램(multi - school program) 중 하나이다. 참가 청소년의 40% 정도가 공공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인종, 언어, 사회경제적 지위 등에서 다양한 배경을 가졌으며, 지역사회에서의 부정의와 어려움을 겪는 원인을 찾아보는 실천적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활동가(community activists)가 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들은 사회문제의 배후에서 작용하는 권력관계를 규명하고 기존의 규범들에 도전하는 거시적인 사회적 활동을 실행한다(Schugurensky, 2004).

둘째, ‘아이인게이지 여름 시민회의(iEngage summer civics institute)’는

91) 유연수(2017.7.6.). 미국 청소년의 민주시민 교육.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https://www.nypi.re.kr/brdartcl/boardarticleView.do?menu_nix=iBwuo1rV&brd_id=BDIDX_zeWpQx5V8ZThtw5o5fm99&cont_idx=158&edomweivgp=R 에서 2021년 5월 15일 인출.

92) Association of American Colleges & Universities. Civic Learning: Leading Organizations.

<https://aacu.org/resources/civic-learning/organizations> 에서 2021년 8월 10일 인출.

베이러 대학교(Baylor University)에서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5일간의 여름캠프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이 이웃, 학교 지역사회를 위해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도록 기획한다. 참가자들은 지역의 시민 지도자들과의 상호작용과 봉사학습(service-learning) 등을 통해 지도력을 함양한다⁹³. 베이러로스쿨(Baylor Law School)에서 입법 절차를 배우고, 지방 판사가 담당하는 모의재판에 참가하고 타지역과 다른 주의 공공기관을 방문하고 지역사회의 현장적인 이슈들에 대해 연구하고 ‘아이시민성 게임(iCivic games)’을 하거나 봉사학습에 참여한다. 참가자들은 캠프기간 동안 옹호 프로젝트를 만들고 연구하고 논의한 이슈에 대한 지역사회 웹사이트를 제작한다⁹⁴.

셋째, ‘유세연단(Soupbox)’ 프로젝트는 시카고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므바 챌린지(Mikva Challenge) 기관에서 주관하는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와 관련한 사회문제를 주제로 연설하는 유세 콘테스트이다(Andolina & Conklin, 2021). 이를 통해 교실, 학교 및 지역사회에 지속적인 변화를 촉진하는 영향을 끼치는 강력한 힘을 갖는다⁹⁵. 이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활동에는 ① 학생, 학교, 공동체 등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 쟁점들에 관한 견해에 대한 공개적 연설, ② 학교와 사회의 개혁적 변화의 지지 ③ 사회적·가족적 배경이 다른 청소년들과의 협력, ④ 이슈에 관한 연구, 그리고 ⑤ 학교와 사회의 변화를 위한 실천 계획의 개발 등이 포함된다(윤종희, 2016).

② 므바 챌린지(Mikva Challenge) 사례

므바 챌린지(Mikva Challenge)는 시민성 함양을 위한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93) Baylor University. iEngage Summer Civics Institute.

<https://www.baylor.edu/soe/index.php?id=935599> 에서 2021년 8월 10일 인출.

94) iEngage Summer Civics Institute. iEngage 2021 UPDATE.

https://blogs.baylor.edu/iengage/?_ga=2.137746361.843974444.1629365629-1123332920.1629365629 에서 2021년 8월 10일 인출.

95) Mikva Challenge. <https://mikvachallenge.org/our-work/programs/> 에서 2021년 7월 23일 인출.

변혁을 주장하면서 애브너 므바(Abner Mikva)와 조이 므바(Zoe Mikva)가 공동으로 만든 것이다.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열정과 생활과의 연계를 위해서는 시민 교과를 통해서만 아니라 직접적 정치 활동에 대한 실천적 경험이 중요하다고 보았다(윤종희, 2016). 므바 챌린지는 1997년에 처음 시작하여, 2021년 8월 현재까지 약 2500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참여했으며, 미국 전역 22개 도시와 카운티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다⁹⁶⁾. 전문연수를 받은 교사들은 957명이며 교사들 중의 97%는 므바 챌린지 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시민성 지식이 향상되었다고 보고한다⁹⁷⁾.

므바 챌린지는 청소년을 지적이고, 능력을 갖춘 능동적 시민이자 지역사회의 지도자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선거 참여’, ‘정책 형성’, ‘지역사회 문제 해결’ 등과 관련한 주요 영역에서의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이 시민적 지식, 리더십 기술을 배우고, 직접적인 정치참여와 지역사회 당면 문제에 대한 직접적 접근을 통해 태도 변화를 도모하고자 한다(윤종희, 2016).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위에서 언급한 ‘유세연단 프로젝트(Soapbox Project)외에도 실천적 시민 학습(Action Civic Classrooms), 선거와 선거운동 경험(Election & Campaign Experiences), 및 청소년주도 옹호활동(Youth-led Advocacy) 등이 있다⁹⁸⁾.

첫째, 실천적 시민학습(Action Civic Classrooms)은 교육자와 청소년지도자들이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개발하고 행동에 대해 알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 실천적 시민학습 과정에 관한 포트폴리오를 제공한다. 다양한 상황과 학생들의 욕구에 최적화되도록 각 단원을 적절히 적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Yoldas, 2015). 실천적 시민학습은 존 듀이(J. Dewey)와 제인 애덤스(J. Addams)가 프로젝트 기반의 민주적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제안한 교육 모델로, 최선의 청소년 교육은 진정한 민주적 활동에 참여하는 기회를 갖는 것으로 본다(윤종희, 2016). 여기에는 직접적인 선거운동 참여에서부터 특정한 정책·가치·행동 노선의 공개적 지지까지

96) Mikva Challenge. <https://mikvachallenge.org/our-work/programs/> 에서 2021년 7월 23일 인출.

97) Mikva Challenge. <https://mikvachallenge.org/about-us/history/> 에서 2021년 7월 23일 인출.

98) Mikva Challenge. <https://mikvachallenge.org/our-work/programs/> 에서 2021년 7월 23일 인출.

포함되고 공적 토론에서 새로운 시민 미디어를 창설하는 것과 같은 다양한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활동들이 이루어진다(윤종희, 2016).

둘째, 선거와 선거운동 경험(Election & Campaign Experiences)은 학생이 선거운동과 후보 및 선출직 정치인과 상호작용을 통하여 청소년들이 선거에 대해 알고 참여하도록 권한부여(empower)한다⁹⁹⁾.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유권자들의 투표자 등록을 지원하고 자원봉사를 통해 정치인의 선거활동을 도우는 것뿐만 아니라 공정선거 감시활동에도 참여한다. 이를 통해 선거와 관련한 지식과 실무적 절차를 배우며, 정치적 쟁점을 토론한다. 또한 SNS 등을 활용하여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표명하며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함양하게 되며 스스로 선택한 정당과 후보자를 만나서 당면 이슈에 대해 의견을 듣는 기회도 갖게 된다(윤종희, 2016). 미카 챌린지는 또한 시카고의 선거관리위원회와 공정선거를 위한 감시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선거 때마다 투표과정을 배우고 선거관리자로서 봉사한다.

셋째, 청소년주도 옹호활동(Youth-led Advocacy)은 청소년들이 공공 정책을 결정하는 도시의 지도자와 학교지도자들을 직접 만나는 기회를 갖는다. 여기에는 시 전역의 청소년위원회 학생의견위원회 및 멘토링 프로그램 등에 참여할 기회들이 포함된다¹⁰⁰⁾. 이러한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은 공공 정책이 어떻게 형성되고 집행 및 평가되는지를 직접 알 수 있는 경험을 하고 시장과 교육감, 경찰국장 및 시의원 등 지역사회의 행정책임자들이 청소년과 관련한 각종 정책결정을 도우는 역할을 하게 된다. 청소년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 취약계층 학생의 교통문제, 학교 내외의 폭력과 방과 후 학습에 관한 문제 등 청소년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이슈들이 관련된다(Brady, Chaskin, & McGregor, 2020).

99) Mikva Challenge. <https://mikvachallenge.org/our-work/programs/> 에서 2021년 7월 23일 인출.

100) Mikva Challenge. <https://mikvachallenge.org/our-work/programs/> 에서 2021년 7월 23일 인출.

(2) 청소년위원회 참여활동 사례와 프로그램

청소년위원회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청소년이 자신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정치사회적 이슈나 공공정책에 대해 시 정부(city government)에 의견을 제시하거나 자문 및 권고(recommendation)를 하는 자문형 청소년위원회(youth council)와 청소년과 관련한 공공정책의 형성, 집행, 평가 등의 전반적인 과정에 핵심적 행위자의 역할을 하는 정부 제도적 청소년위원단(youth commission)의 두 가지 형태를 알아보기로 한다.

① 자문형 청소년위원회 참여 사례

자문형 청소년위원회 사례는 앞에서 살펴 본 므바 챌린지(Mikva Challenge)에서 활동한 청소년들이 참여하고 있는 시카고의 “도시전역 청소년자문위원회(Citywide Youth Councils: CYC)”를 들 수 있다. 이들은 시 정부의 공공정책의 형성, 실행 및 평가과정에서 이슈 중심의 청소년위원회를 만들어서 청소년참여를 강화한다. 위원회는 시카고 청소년들이 자신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핵심적인 시의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작용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시카고의 모든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다(Andolina & Conklin, 2021). 2021년 8월 기준으로 ① 청소년건강위원회, ② 시카고학생자문위원회, ③ 시카고주거국청소년위원회, ④ 소년사법위원회, ⑤ 청소년안전자문위원회 등 5개가 활동하고 있다(Mikva Challenge & A Better Chicago, 2021).

청소년건강위원회(Teen Health Council: THC)는 다양한 고등학교 청소년 그룹으로 시카고 시 보건국(Chicago Department of Public Health)과 시카고 공립학교 학생건강복지국(Chicago Public Schools Office of Student Health and Wellness)과 협력하면서 시카고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성적 건강을 개선하기 위해 일한다. 청소년건강위원회(THC)는 또한 또래들에게 정신적·신체적

복리에 관련한 스트레스와 트라우마의 영향에 관하여 배우고 알려주기 위해 루리 아동병원(Lurie Children's Hospital)과 함께 일한다¹⁰¹⁾. 청소년건강위원회가 설치된 배경은 201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당시 이 위원회에 참여했던 청소년들이 소속 학교에서 청소년건강팀을 구성하여 학교의 보건 문제를 파악하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한 적이 있는데, 이후 시 전역의 청소년 건강증진 활동을 하는 것으로 발전하게 된다. 시 전역에 약 60여 개 팀들이 건강활동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청소년건강회의(Youth Health Summit)를 매년 개최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으며 소속 학교에서 건강증진 활동가로 활동한다. 최근 청소년건강위원회는 시 보건위원회와 공동으로 반(反)비만 캠페인을 시작했으며, 성 건강(sexual health) 증진을 위한 교육정책(2013년)과 콘돔사용 캠페인(Chicagoans Wear Condoms)을 전개했다. 2021년 8월 기준 22명의 위원이 참여하고 있다(Mikva Challenge & A Better Chicago, 2021).

시카고 공립학교(Chicago Public School: CPS) 학생자문위원회(Student Advisory Council: SAC)는 시카고 공립교육감(Chief Executive Officer of Chicago)에게 학교관련 정책과 쟁점에 대해 청소년들의 관점에서 자문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들은 공립학교 지도자들과 공동으로 학교와 지역사회의 폭력, 대학입시와 취업 준비, 학교 자원 활용 등에 대해 연구하고, 실천계획을 수립한다. 시카고학생자문위원회는 교과과정, 기술, 교육자원, 학생-교사 책임성 등과 관련한 공립학교의 발전을 위해 권고 15항을 제시한 바 있으며, 학내 사이버 불링(cyber-bullying) 이슈에 관한 동영상을 만들고 그와 관련한 교육과정을 개발했다. 2021년 8월 기준으로 22명의 위원이 활동 중이다¹⁰²⁾.

시카고 주거국 청소년위원회(Chicago Housing Authority Youth Council: CHA). 시카고 시 주거국의 책임자에 대한 청소년자문기구로서의 역할을 한다.

101) Mikva Challenge. <https://mikvachallenge.org/our-work/programs/> 에서 2021년 7월 23일 인출.

102) Mikva Challenge. <https://mikvachallenge.org/annual-reports/> 에서 2021년 7월 23일 인출.

시카고 주거국 관할 주거시설 거주자들의 삶을 개선하는 정책과 실천에 관하여 권고한다(Mikva Challenge & A Better Chicago, 2021). 2021년 8월 기준으로 16명의 위원이 있으며, 이들은 2020년 여름에 초청 인사들과 함께 약 6주간의 협의과정을 통해 많은 제안을 하였다. 첫 주는 서로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 권고(recommendation)하는 이슈에 대하여 필요한 데이터 찾고 연구에 착수하였다. ‘CHA 청소년이 말하다!(CHA Youth Speak!)’와 ‘전문성 개발(professional development)’에 관한 두 가지 제안을 하였다¹⁰³⁾. 대표적으로 ‘CHA 청소년이 말하다!’라는 권고는 다음과 같은 5가지 단계를 거쳐 실행되었다. 1단계는 CHA 청소년기획팀과의 공동협력을 통해 13-24세 연령을 목표로 하는 자원들을 찾아 알리는, 뉴스레터를 만들기 시작했다. 2단계는 각 섹션별 사례를 모으고, 3단계는 청소년의 이야기를 뉴스레터에 게재하였으며, 4단계는 시카고 주거국과 관련한 다양한 서비스 기관들을 연결하도록 하는 CHA 공동협력을 하였으며, 5단계는 보다 많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셜미디어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소년사법위원회(Juvenile Justice Council: JJC)는 쿡 카운티 이사회(Cook County Board) 의장과 사법자문위원회(Justice Advisory Council)와 파트너십의 관계에서 청소년과 사법시스템과 관련한 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해 다양한 청소년 관점을 제공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쿡 카운티 청소년들의 구금률과 상습적 범행률을 줄이는데 강조를 둔다(Mikva Challenge & A Better Chicago, 2021).

2021년 8월 기준 26명의 위원이 있다. 2020년 여름의 경우,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이 모든 것을 변하게 하였는데, 소년사법체계에서 지속되어 온 주요한 불균형 문제들이 더욱 눈에 드러나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청소년들에게 힘든 역경을 가져다주는 소년사법제도에서의 이슈 영역들을 찾아내고 청소년 범법자들의 상습적 범죄를 막고 팬데믹으로 더욱 악화될 수 있는 기술적 불균형과 청소년들이 다시 지역사회로 복귀하는데 따른 장벽들을 줄이는 것에 관하여 제시되었던 카운티

103) Mikva Challenge. <https://mikvachallenge.org/our-work/programs/> 에서 2021년 7월 23일 인출.

에서의 해 묶은 약속들에 대해 4가지를 권고하였다. 여기에는 지역사회복귀에 따른 장벽에 대한 복귀 로드맵(roademap to reentry)과 교육에의 접근(access to education), 사후 돌봄(aftercare)과 석방 후 서비스(post release service)로서 온라인 가상 가석방 서비스(virtual probation service)와 트라우마 스크리닝(trauma screening) 등이 포함된다¹⁰⁴).

청소년안전자문위원회(Youth Safety Advisory Council: YSAC)는 시카고 경찰국(Chicago Police Department: CPD)과 파트너십으로 모든 경찰 구역에서 진정한 청소년의 목소리를 통합하면서 경찰과 시카고 청소년의 긍정적 상호작용을 증가하기 위해 일하며, 2021년 8월 기준 21명의 위원이 참여하고 있다. 2020년 여름에는 시카고의 지도자들과 시카고 경찰국 운영을 맡는 관계자들을 만났으며 두 가지 권고를 제시하였다¹⁰⁵. 첫 번째 권고는 지역사회 치안전략으로 뉴욕시 경찰국의 사례를 따라 시카고 경찰국에서도 청소년지역사회센터를 만드는 것이다. 이것은 필요로 하는 모든 청소년에게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고 특히 폭력 피해자나 이민자, 흑인, 원주민, 유색인종, LGBTQ+ 동성애자 등을 위한 청소년 프로그램, 정신건강과 교육자원 및 지역사회중심의 행사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두 번째 권고는 학교치안을 담당하는 자원관(School Resource Officer: SRO)들에 대한 의무와 지역 중심의 지속적이며 청소년 통합적인 연수과정을 제공할 것을 요청하였다(Mikva Challenge & A Better Chicago, 2021).

② 정부제도형 청소년위원단 참여 사례

정부제도형 청소년위원단의 사례로는 햄프턴 청소년위원단과 샌프란시스코 청소년위원단의 사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먼저, 버지니아(Virginia) 주 햄프턴(Hampton) 시 청소년위원단(youth commission)은 시 정부가 청소년의 시민적

104) Mikva Challenge. <https://mikvachallenge.org/our-work/programs/> 에서 2021년 7월 23일 인출.

105) Mikva Challenge. <https://mikvachallenge.org/annual-reports/> 에서 2021년 7월 23일 인출.

참여(civic engagement)를 증진하는 역할을 한 경우로써, 특히 청소년위원단 뿐만 아니라 청소년 임파워먼트를 시 기관과 비영리 단체의 문화가 되도록 했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정부제도형 청소년위원단 사례로 알려져 있다(Carlson, 2006). 햄프톤(Hampton) 시의 시민적 참여 시스템은 상보적이고 서비스와 리더십 개발을 위한 구조화된 통로를 제공하는 몇 가지 제도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단순하고 일회적인 것(서비스 날, 하천 청소 등)에서부터 보다 복잡하고 지속적인 청소년에 의해 주도되는 청소년위원단(youth commission)과 청소년기획가(youth planner) 등과 같은 시스템을 갖고 있으며, 각급 학교의 교장 자문위원회와 시 교육위원회 등에도 청소년대표를 포함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청소년의 실질적인 참여를 제도화 하고 있다(Sirianni & Schor, 2009).

햄프톤(Hampton) 시는 버지니아 주의 해안에 있는 인구 15만 여명의 도시로 주민의 반은 백인이고 반은 흑인이며 적절한 경제기반을 가지고 소득 격차가 거의 없는 중소도시이다. 비당파적 의회와 매니저(manager) 형태의 정부를 가지고 있으며 시 의회 구성원 가운데 가장 많은 표를 받는 사람이 시장이 된다(Hampton Coalition for Youth, 1993)¹⁰⁶⁾. 1990년대 이전까지는 풀뿌리 지역사회나 청소년 조직화의 전통이 거의 없었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에 경제개발과 재정수지의 악화를 경험하면서, 당시 시장인 제임스 이슨(James Eason)과 시의회에서 임명된 행정관인 밥 오닐(Bob O'Neill)은 지역정부를 재창조하는 일련의 이니셔티브에 뜻을 같이 하고 관료주의적 계층제를 줄이고 공동협력적 근린계획을 통하여 권력을 시민들에게 확장하였다¹⁰⁷⁾.

중요한 점은 공동협력 계획과정에서 제도화된 청소년위원단(youth commission)을 만들게 된 계기인데, 당시 '올터너티브즈(Alternatives)'라는 단체는 청소년의

106) Hampton Youth Commission.

https://hampton.gov/DocumentCenter/View/1766/HYC-application_complete2013?bidId=에서 2021년 6월 26일 인출.

107) Hampton, VA. Youth Commission. <https://hampton.gov/221/Youth-Commission> 에서 2021년 6월 26일 인출.

생각을 반영하기 위해 청소년 20명을 모집하였는데, 이들은 지도자가 자신을 문제가 있고 고쳐야할 대상으로 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의미있는 일에 도전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진정한 기회를 원한다는 뜻을 밝혔다(천정웅, 2020). 이에 따라 ‘올터너티브즈(Alternatives)’는 청소년리더십 개발에 초점을 두는 청소년 중심의 단체로 재창조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 당시 “긍정적 청소년발달(PYD)”과 “지역사회 청소년개발(CYD)”을 강조하기 시작한 전국적 청소년개발 네트워크의 도움을 받게 되면서 전국적으로 중요한 기관으로 발전하게 되는 계기를 갖게 된다(Hughes & Curnan, 2000).

이러한 흐름이 지속되면서, 마침내 1992년 여름 이틀간의 합숙 모임에서 청소년 임파워먼트에 근거를 둔 합의된 비전(vision)을 만들게 되면서 시 정부에 “청소년들이 사회의 삶에 관련되도록 하는 기회를 주는 종합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햄프톤 청소년연합(Hampton Coalition for Youth)’을 시 정부의 부서로 배치함과 동시에 공공기관, 기업, 비영리 단체, 기타 기관 등과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천정웅, 2020). 그 후 몇 년 뒤에 청소년위원단이 만들어지면서 햄프톤(Hampton) 시는 시민적 관여 시스템의 토대를 마련하는 결정적 시기를 맞게 되었다(Hampton Coalition for Youth, 1993). 오늘날, 햄프톤(Hampton) 청소년위원단은 청소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정책 이슈에 관해 일할 것을 선택하는 상당한 도덕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천정웅, 2020).

다음으로 캘리포니아(California) 주 샌프란시스코(San Francisco) 시 청소년 위원단(youth commission)의 경우도 햄프톤(Hampton) 시와 유사하지만 또 다른 특성을 가진 정부제도형 청소년위원단의 사례로 알려져 있다. 무엇보다 샌프란시스코는 강한 진보적 정치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광범위한 지역사회, 인종 및 저항과 직접적 행동을 선호하는 청소년 조직화 집단으로 당파적 기반에서 조직화된 강한 시장 위원회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시 청소년위원단의 배경은

1975년에 창립한 ‘콜먼 옹호(Coleman Advocate)’라는 청소년복지기관인데, 소년 사법시스템과 위탁가정시스템과 관련한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아동 운동과 청소년운동을 이끌어가는 최전선에 있는 단체로 볼 수 있다¹⁰⁸). 무엇보다도 청소년위원단을 시 헌장(city charter)에 명시하는 운동을 전개하였는데, 시 정부 내 감독기구가 이를 거절하자, 선거캠페인을 통해 압력을 행사함으로써 결국 승인하도록 만들었다. 이런 점에서 청소년위원단은 “풀뿌리 투쟁”의 결과였으며, 아래에서 위로 가는 사회운동이었던 것이다. 당시의 선출직 지도자들은 적극적이기 보다는 반응하지 않을 수 없어 응한 것으로 평가한다. 청소년에 대한 강한 옹호와 선거 캠페인에 기원을 두었기 때문에, 샌프란시스코 청소년위원단은 “청소년 인권”과 “청소년운동” 프레임(frame)을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청소년에게 영향을 주는 모든 법안은 반드시 위원회의 검토를 받아야 하며 지역사회 중심 서비스와 같은 서비스 유형의 질적 수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각 부서의 예산은 그 우선순위를 검토하고 필요하면 정책 변화를 제안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Sirianni & Schor, 2009).

샌프란시스코 청소년위원단은 12-23세의 17명의 청소년으로 구성되어 있다. 햄프톤(Hampton) 시 보다 수는 적지만 인구 구성을 고려하고 현지 대학의 청소년을 포함할 수 있다. 위원들은 응모과정을 통해 총원되고 선정되는데, 이 과정에서 성인 직원이 주요한 역할을 한다¹⁰⁹). 총원 통로는 다양한데, 햄프톤(Hampton) 시에서와 같이, 직원들이 지도 역량이 있다고 증명된 사람을 찾거나, 웹사이트에서 이력서와 인터뷰 등을 통해 추천이 이루어지며 슈퍼바이저는 11명이며 각자 한 명의 청소년 위원들을 선정한다. 시장은 위원 1명을 선정하는 것 외에 위원단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추가로 5명을 선발한다. 위원들은 여름에 2일 반 동안의 훈련을 통해 샌프란시스코 시 정부 내에서의 위원단의 역할에 대한 기초학습과 팀 빌딩

108) Youth Commission. <https://sfgov.org/youthcommission/about-us> 에서 2021년 6월 26일 인출.

109) Youth Commission. <https://sfbos.org/youth-commission> 에서 2021년 6월 26일 인출.

(team building)과 옹호기술을 배운다. 또한 주기적으로 대중연설, 입법, 예산 및 관련 기술 등에 대한 소규모 연수가 있다. 위원단에는 3명의 성인 직원이 있으며 청소년 임파워먼트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숙련되어 있다¹¹⁰⁾.

햄프톤(Hampton) 청소년위원단(youth commission)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직원 수는 적지만, 샌프란시스코 청소년위원단은 여러 가지 일에서 적극적이다. 입법과 예산의 검토, 조언과 옹호활동, 대중 포럼의 소집 및 청소년 주도 프로젝트에 대한 재정 지원과 함께 주기적으로 시 전역의 “청소년 투표” 기회가 있을 때에는 청소년들의 견해를 제시하기 위해 참여하도록 하면서 특히 시 선거가 있기 전에 등록하도록 돕는다. 청소년위원단의 기본 임무는 시 현장에 명시되어 있으며, 정보를 수집하고, 관심과 욕구를 찾고, 계획을 수립하고 제안하며, 모든 제안된 입법과 예산 가운데 청소년에 영향을 끼치는 것에 대해서 검토하고 평가한다 (Sirianni & Schor, 2010). 회계연도가 임박한 상황에서는 청소년 프로그램에 대해 제안된 예산을 삭감하고 다른 부서, 소방서나 경찰서에서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예산을 남기도록 하는 대안을 제시한 바도 있다¹¹¹⁾.

(2) 정치참여로서의 청소년 행동주의

청소년의 정치참여 방식은 제도적이거나 비제도적인 두 가지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공식선거에 참여하는 것이 중심이 되지만, 비제도적으로는 다양한 정치행동과 관련한 행동주의적 활동들이 주로 논의된다(천정웅, 2018). 미국에서의 청소년 행동주의의 예는 기후위기, 동물권 이슈, 페미니즘, 청소년 인권 등 다양한 의제에서 찾아볼 수 있다. 최근에 청소년들은 특히 SNS를 비롯한 소셜미디어와 함께 성장하면서 세계와 정치인들에게 디지털 공간 속에서

110) Youth Commission. <https://sfbos.org/youth-commission> 에서 2021년 6월 26일 인출.

111) Youth Commission. <https://sfgov.org/youthcommission/about-us> 에서 2021년 6월 26일 인출.

다양한 메시지를 확장하고 있다(Conner & Rosen, 2016). 신문이나 전화와 같은 이전의 방법과는 달리 간단한 클릭만으로도 대중적 지지를 바로 결집하는 것이 특징이다. 리더십이 중앙집권적이지 않더라도 누구든지 참여적 활동가가 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¹¹²⁾. 최근의 대표적인 사례로 2013년 결성되어 활동하고 있는 “흑인의 삶도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 BLM)”는 운동에 청소년들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2015년 봄에 전국적 행진운동과 평화적 저항운동 및 시위가 확산된 것을 들 수 있다(장세룡, 2016).

특히 2018년 2월 14일 미국 플로리다의 더글러스 고등학교에서 있었던 총기 참사로 17명이 사망하게 되면서 당시에 생존한 학생들을 중심으로 총기 규제를 호소하는 전국적인 집회가 “우리 생명을 위한 행진(March for Our Lives)”으로 조직되었다. 이는 SNS 등을 통해 총기 규제를 요구하는 항의운동으로 전국적으로 전개되었고, 같은 해 5월 18일 텍사스의 한 고교에서 또 다른 총기참사로 10명이 사망하게 되면서 미국 학생들 사이에서 더욱 확산되고 있다. 이들은 #NeverAgain 이라는 해시태그로 총기 개혁을 목표로 하는 청소년 행동으로 나아가고 있다. 2018년 3월 24일 워싱턴 디시(Washington D.C.)에서 있었던 집회에 주최 측 추산 약 80만 명이 참석하게 되면서 역사상 가장 큰 일일 시위로 기록되었다¹¹³⁾.

2020년에는 미국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청소년주도의 많은 정치사회적 행동들이 나타났는데, 그중에서도 피어리어드(Period), 유나이티드 위 드림(United We Dream), 팀 이너프(Team ENOUGH), 라quan 맥도날드를 위한 정의(Justice for Laquan McDonald), 그리고 미래연합(Future Coalition) 등의 사례가 주목 받고 있다¹¹⁴⁾. 청소년들이 어떻게 자신의 문제를 공론화하고 정치적 영향력을

112) 서울시 NPO 지원센터(2020.9.6.). 2010년대 미국 청소년 운동.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npo_aca&wr_id=4430 에서 2021년 6월 25일 인출.

113) Teen Vogue(2019.12.16.). Youth Activist Movements of the 2010s: A Timeline and Brief History of a Decade of Change.

<https://www.teenvogue.com/story/youth-activist-movements-2010s-brief-history-timeline-decade-of-change> 에서 2021년 6월 25일 인출.

갖추어 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으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청소년 정치행동의 성공 요인들이 분석되고 있다.

피어리어드(Period)는 누구나 깨끗하고 안전한 생리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월경 운동(Menstrual Movement)"을 장려한다. 해시태그와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행동전략이 돋보인다¹¹⁵). 유나이티드 위 드림(United We Dream)은 이민자 신분엔 상관없이 모든 이민자의 영구적 보호를 지원한다. 스토리텔링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전략을 활용하는 것을 발전 요인으로 보고 있다¹¹⁶). 팀 이너프(Team ENOUGH)는 자살, 가정폭력, 소외된 지역사회, 총기난사 등 총기폭력과 관련된 여러 분야의 이슈와 관련한 청소년주도 행동이다. 아이디어를 소셜미디어를 통해 함께 공유하고 총기 폭력은 물론, 기후변화 문제와 같은 특정 이슈를 넘어 소통하고 교류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성공적인 것으로 본다¹¹⁷).

또한 라관 맥도날드를 위한 정의(Justice for Laquan McDonald)는 라관 맥도날드(Laquan McDonald)라는 17세 흑인이 시카고 경찰의 총격으로 사망한 이후, 경찰의 책무성, 형사사법개혁, 대마초 합법화 등을 주장하고 있다. 현실 정치 개입을 위한 계획의 구체성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¹¹⁸). 미래 연합(Future Coalition)은 기후위기, 총기규제, 문화교류, 성 평등 등을 위해 활동하는 50여개의 여러 청소년 정치참여 단체를 아우르면서 청소년 조직가들이 서로 힘을 합치기로 결심하여 만든 전국 네트워크 조직이다. 미래연합은 '미래를 위한 금요일(Fridays for

114) Common Sense Media(2020.4.1.). 6 Youth-Led Political Movements to Inspire You to Vote. <https://www.common sense media.org/blog/6-youth-led-political-movements-to-inspire-you-to-vote> 에서 2021년 6월 25일 인출.

115) The Guardian(2017.11.11.). 'We're having a menstrual liberation': how periods got woke. <https://www.theguardian.com/society/2017/nov/11/periods-menstruation-liberation-women-activists-abigail-radnor> 에서 2021년 6월 25일 인출.

116) United We Dream. <https://unitedwedream.org/about/#principles> 에서 2021년 6월 25일 인출.

117) Team ENOUGH. <https://www.teamenough.org/who-we-are> 에서 2021년 6월 26일 인출.

118) Chicago Tribune(2020.10.20.). Six years after Laquan McDonald shooting, activists rally for justice for slain teen. <https://www.chicagotribune.com/news/breaking/ct-jason-van-dyke-rally-2021021-p626eogowfcntptiblib2cd7m-story.html> 에서 2021년 7월 10일 인출.

Future)'을 중심으로 한 기후 활동가 그레타 툰베리(Greta Thunberg)의 활동에서 비롯된 학생 시위를 배경으로 결성되었다. 미래연합은 2020년에 가능한 많은 청소년들이 투표 등록을 하고, 선거에 참여하도록 한 것을 성공적으로 보고 있다¹¹⁹⁾.

4) 청소년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지원체계

(1) 청소년 시민성 함양과 시민교육 법제의 강화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으로 청소년의 시민성 함양을 위한 제도가 강화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미국의 모든 학생들은 시민성 함양을 위한 교과과정상의 과목을 수강해야 하며, 19개 주에서는 ‘미국시민권 시험(U.S. citizenship exam)’ 통과가 고교 졸업에 전제되어 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시민성 함양에 관한 관심이나 시간 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학습과정이 이론에 치우치고 지역사회 봉사활동, 모의 법정 등과 같은 실천 행위로 연결되지 못하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투표권 행사 등 학생들이 시민으로서의 책임을 행사할 준비를 소홀하게 한다고 본다¹²⁰⁾.

이에 따라 최근 인디애나(Indiana) 주와 캔자스(Kansas) 주 등에서 시민성 함양을 위한 교육제도를 강화하는 입법들이 이루어지고 있다¹²¹⁾. 먼저, 인디애나 주에서는 중학교 시민교육을 의무화하였다. 이에 따라 주(州) 내 모든 중학생은 6-8학년 동안 반드시 시민교육을 한 학기 동안 이수해야 하도록 규정하고 주 전역의 모든 공·사립학교가 2023-24학년도에 6학년이 되는 학생부터 이수하도록

119) Future Coalition. <https://futurecoalition.org/what-we-do/> 에서 2021년 7월 10일 인출.

120) The National's Report Card. https://www.nationsreportcard.gov/hgc_2014/#civics 에서 2021년 7월 10일 인출.

121) 정우석(2016.5.18.). 스웨덴의 강력한 아동학대 금지 정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 해외동향리포트. https://www.nypi.re.kr/brdartcl/boardarticleView.do?menu_nix=iBwuo1rV&brd_id=BDIDX_zewPqUx5V8ZThtw5o5fm99&tab=&seltab_idx=0 에서 2021년 7월 10일 인출.

하였다. 이는 또한 2022년 7월 1일까지 주 교육부에서는 시민교육을 위한 표준 교육과정을 개발해야 하며 시민교육위원회(Civic Education Commission)를 구성하여 중학교 시민교육을 감독하도록 명시하고 있다¹²²⁾.

또한 캔자스 주에서는 고교 졸업 시 시민교과 시험 통과를 의무화하였다. 캔자스 주 교육위원회(Kansas State Board of Education)는 법안이 헌법을 침해한다는 보아 졸업요건 설정에 반대하였으나, 주 하원의 찬반 투표와 최종 투표를 거쳐 상원으로 이송되었다. 법안에 따르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미국시민권시험’을 반드시 통과해야 하며 시험 문항은 전체 128개 문항 가운데 60개 문항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합격 점수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응시 회수를 여러 차례 가능하도록 하고, 합격 요건을 교사가 자체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지하는 측에서는 책임 있는 시민이 되기 위한 기초 지식 습득에 이 시험이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반대하는 측에서는 학생들이 이미 받고 있는 역사 수업으로 시민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한다¹²³⁾.

(2) 참여 확산을 위한 공공네트워크 구축

청소년의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논의와 법안 제출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성과들도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서 특별히 주목할 점은 앞에서 살펴본 자문형 청소년위원회(youth council) 참여활동이 다양한 청소년단체와 센터, 기관 등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시 정부 차원의 청소년위원단(youth commission)이 확산되면서 자치단체별 조례 제정과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더욱 공고해 지고

122) U.S. News(2021.3.25.). Indiana Lawmakers Require Civics Class for Middle Schoolers. <https://www.usnews.com/news/best-states/indiana/articles/2021-03-25/indiana-lawmakers-require-civics-class-for-middle-schoolers> 에서 2021년 7월 10일 인출.

123) U.S. News(2021.3.3.). House Gives Initial Approval to Civics Test for Graduation. <https://www.usnews.com/news/best-states/kansas/articles/2021-03-03/house-gives-initial-approval-to-civics-test-for-graduation> 에서 2021년 7월 10일 인출.

있는 것이다. 특히 청소년위원단 운영의 강화 움직임은 크게 두 가지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데, 하나는 미국의 자치단체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각 도시들의 네트워크인 전국도시연맹(National League of Cities: NLC)을 통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앞에서 고찰한 햄프톤(Hampton) 시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은 청소년참여 옹호자와 그 단체들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청소년참여 촉진에 적극적인 움직임들이 지속되고 있는 점이다(Sirianni & Schor, 2009).

첫째, 전국도시연맹(National League of Cities: NLC)은 1924년 미국도시연합(American Municipal Association)으로 설립되었으며, 워싱턴 디시(Washington D.C.)에서 도시(cities)와 타운(towns)을 위한 옹호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연수, 교육 및 최상의 실천 도구(toolkit)를 회원 도시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그중에는 규모가 각기 다른 1600여 개 도시가 있으며 약 18,000개의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주 도시연맹(state municipal leagues)이 가입되어 있다¹²⁴⁾. 이러한 NLC가 지역 도시의 혁신과 청소년 임파워먼트 및 시민 참여를 강조하는 전국적 흐름에 따라 각 지역의 선출직 대표들이 청소년(15-18세)을 ‘도시회의(Congress of Cities)’ 연차대회를 비롯한 전국 컨퍼런스에 초대하도록 하였으며, 그 결과 참석한 5,000여 명의 시 대표들 가운데 청소년이 수백 명 이상 포함되었다. 2000년 이후 NLC는 청소년·교육·가족연구소(Institute for Youth, Education, and Families: IYEF)를 설치하고 청소년 참여와 청소년 개발에 초점을 두게 되었으며, 연구소에 참여한 그룹들은 여러 가지 위원회 유형의 참여 모델들 중에서도 청소년위원단 (commission)과 청소년위원회(council)를 촉진하는데 적극적이었다.

둘째, 햄프톤(Hampton) 시의 혁신가들은 청소년의 정치참여 역량 함양을 위한 학습과 확산의 또 다른 중요한 네트워크를 제공한다. ‘햄프톤청소년연합(Hampton Coalition for Youth)’과 ‘올터너티브즈(Alternatives)’ 등의 일부 파트너 기관들은 특히 전국적 일을 중요시하였다. 이들은 우선, 햄프톤 청소년위원단 모델을

124) National League of Cities. <https://www.nlc.org/about/> 에서 2021년 7월 10일 인출.

전국도시연맹(NLC), YMCA, 및 서치연구소(Search Institute) 등의 여러 청소년 기관들이 후원하는 전국적 회의와 연수 워크숍에서 발표하였다(Sirianni & Schor, 2009). 이들은 특히 청소년개발향상활동과정(Advancing Youth Development curriculum)의 청소년참여 구성요소를 개발한 베스트 이니셔티브(BEST Initiative)의 핵심 파트너들이다. 여기에는 기초 과정 모듈과 다양한 청소년지도자들의 슈퍼바이저와 연수 촉진자들을 위한 도구(toolkit)들이 포함되어 있다. 베스트 이니셔티브(BEST Initiative)는 교육개발아카데미(Academy for Educational Development: AED)의 전국 지역청소년업무연수원(National Training Institute for Community Youth Work: NTI)에서 맡아하고 있으며 전국 BEST 네트워크 프로젝트(National BEST Network)에 참여하는 18개의 시 및 지역 연수 파트너들을 가지고 있다. 약 10000명의 청소년지도자들과 슈퍼바이저들이 1996년 이후 베스트 이니셔티브(BEST Initiative)에 의해 실시된 연수를 받았다¹²⁵⁾.

햄프톤(Hampton) 혁신가들은 햄프톤에서 성공적으로 운영한 성과를 경험한 청소년지도자들을 자문팀에 포함하였으며, 이들을 중심으로 청소년위원단, 문화 변화 전략, 및 청소년 기획가 등에 관심을 갖는 도시와 카운티들에 대해 집중적인 자문을 제공하였다. 특히 구체적인 경우에 사용하도록 만든 다양한 연수 자료집과 햄프톤 시의 청소년위원단 운영 매뉴얼은 이 분야에서는 최고로 알려져 있다. 햄프톤에서만 배포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 개발과 청소년 시민참여 분야에서의 많은 자원들과 관련한 가이드 자료들에도 수록되어 있으며, 전국적으로 배포되고 있다(Sirianni & Schor, 2009).

(3) 청소년 투표율 제고와 투표권 보호 제도

미국에서의 청소년 투표율 제고 방안과 관련하여 전문가들의 입장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단기, 중기, 장기적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다¹²⁶⁾. 첫째, 단기적으로는

125) <http://academyforeducationaldevelopment.org/hub.net/> 에서 2021년 8월 10일 인출.

청소년들이 선거인단에 등록하고 투표를 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등록방법과 등록기일, 투표용지는 어떻게 작성하는지, 무엇이 있으며 어떻게 작성하는지 그리고 투표 장소는 어디이며 장소에 도착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단계적으로 배우도록 함으로써 첫 유권자(first-time voter)가 되도록 하는 동원화 노력(mobilization efforts)을 권고한다. 일반적으로 투표에 대한 자각을 증대시키려는 저명인사들을 활용하는 노력은 신선한 측면은 있지만, 그 효과는 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¹²⁷⁾.

둘째, 중기적으로는 선거인 등록에 대한 시스템 장벽을 줄이는 일이 중요하다. 청소년 투표율과 전체 투표율 간의 관련성이 높다는 점에서 보면 전체 투표율 증가를 목적으로 하는 조치들은 청소년 투표율 향상에도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만큼 더 청소년 참가율을 국민 전체 참가율에 가깝게 되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이다(Galston, 2004). 실제로 미국 선거에서 투표율은 선거인 등록과정이 보다 쉬운 주에서 더 높게 나타난다. 예를 들면, 선거일 임박해서까지 등록을 할 수 있게 한다거나, 등록 사무소를 저녁때와 주말에도 열고 부재자 투표(absentee registration)를 허용하는 것 등이다. 16세나 17세에 사전 등록을 하도록 허용하면 18세 생일날에 자동적으로 등록하도록 해줌으로써 등록률과 투표율을 2.1% 이상 높였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또한 당일 등록제는 전체 연령집단은 물론 특히 청소년들의 투표율을 높일 수 있다고 보며 다소 복잡한 방법이지만 자동 투표 등록제를 활용할 수도 있다. 선거연령에 달하면 시민 누구나 별도 절차 없이 투표자 명부에 등재되는 것이다¹²⁸⁾.

셋째, 장기적 방안은 시민성 함양을 위한 교육이나 시민참여활동을 강화하는

126) The New York Times(2020.10.8.). Why Don't Young People Vote, and What Can Be Done About It?. <https://www.nytimes.com/2020/10/08/upshot/youth-voting-2020-election.html> 에서 2021년 7월 10일 인출.

127) Vote411. <https://www.vote411.org/first-time-voter-checklist> 에서 2021년 8월 10일 인출.

128) The New York Times(2020.10.8.). Why Don't Young People Vote, and What Can Be Done About It?. <https://www.nytimes.com/2020/10/08/upshot/youth-voting-2020-election.html> 에서 2021년 7월 10일 인출.

것이다. 청소년들에게 물어보면, 투표를 하지 않는 첫째 이유가 투표용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당황스럽고, 투표하려고 해도 어디로 가서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이라고 답한다(Miller, Sharmako, Brown, & Svetaz, 2021). 이러한 준비 결여에 대한 하나의 방법은 실제적인 시민성 함양 교육 특히 투표방법에 대해 가르치는 것이다. 이는 투표가 정상적(normal)이고 가치롭다(worthwhile)는 것에 대해 일찍부터 받아들이게 되고 청소년의 선거참여를 방해하는 단기적 장애를 극복하도록 하는 동기를 부여한다. 학생들에게 투표시연을 본 후에 실제 투표를 하게 하면 투표율이 5.7% 증가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¹²⁹⁾.

미국의 민주당은 최근 청소년선거권과 관련하여 청소년 유권자의 투표권 보호 법안을 발의하였다¹³⁰⁾. 이는 특정 유권자들의 투표를 방해하거나 투표열의를 꺾음으로써 투표결과에 영향을 주고자 하는 이른바 유권자억압전술(voter suppression tactics)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한 것이다¹³¹⁾. 민주당 의원들에 따르면 기존 선거법이 18세 청소년에게 투표권을 부여한 ‘미국 수정헌법 제26조’를 위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본다. 현재 청소년들은 매우 엄격한 유권자 등록 조건을 적용받고 있으며, 투표 장소에서 일부 대학은 제외되어 학생참여가 어려운 등의 여러 가지 장벽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청소년의 선거참여권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법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과 후원자들은 선거에서의 해당 법안이 연령차별을 줄이는데 기여하므로 정부는 다음 세대의 민주주의 참여를 위해 이를 격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129) The New York Times(2020.10.8.). Why Don't Young People Vote, and What Can Be Done About It?. <https://www.nytimes.com/2020/10/08/upshot/youth-voting-2020-election.html> 에서 2021년 7월 10일 인출.

130) CNNPolitics(2020.8.13.). Lawmakers introduce new bill to protect youth voting rights. <https://www.cnn.com/2020/08/13/politics/legislation-youth-voting-rights/index.html> 에서 2021년 8월 10일 인출.

131)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2021.8.1.). Block the Vote: How Politicians are Trying to Block Voters from the Ballot Box. <https://www.aclu.org/news/civil-liberties/block-the-vote-voter-suppression-in-2020/> 에서 2021년 8월 10일 인출.

(4) 인터넷 활용 e-전략과 온라인 앱을 통한 청소년 행동주의

오늘의 청소년은 TV에 의존하기보다는 점차 대안 매체를 통해 정치적 정보를 이용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인터넷의 빠른 속도, 저렴한 비용, 접근 용이성 및 상호작용성 등의 여러 가지 특성으로 인해 인터넷이 청소년의 시민 참여, 정치 토론 및 정치적 활동을 장려하는 중요한 매체로 부각되고 있다(Banaji & Buckingham, 2013). 미국 아메리칸 대학교 '미디어와 사회적 영향 센터(Center for Media & Social Impact)'에서 실시한 온라인 시민에 대한 내용분석 결과를 보면 인터넷이 '청소년 시민 문화'의 길을 열어 놓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젊은 세대들의 정치참여와 시민참여의 방식을 바꿀 잠재력이 있다는 기대를 갖게 한다¹³²⁾. 현재 온라인에는 투표, 자원봉사 및 정치참여로부터 대안 저널리즘에 이르기까지 'e-시민'들을 중심으로 하는 웹사이트가 너무도 많으며, 그 대부분이 청소년 스스로 제작·운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청소년과 청년에게 선거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다양한 e-전략이 전개되고 있다. 최근의 예로는 이슈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해 유권자들이 각 후보들이 유권자들에게 부응하고 있는지를 점수화하고 등급을 정하는 후보 선택 사이트를 들 수 있다. 또한 특정 온라인 전략의 경우 다른 것보다 사이버 시민 참여를 장려하는데 효율성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청소년들은 직접 찾아보거나 이메일을 확인할 것인지 등을 선택하는 방식의 선택(opt-in)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에 보다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편이다. 방문자들이 질문을 할 수 있는 채팅 룸이 가장 인기가 있으며, 청소년 세대의 이슈를 알려 주는 이메일, 후보가 운영하는 웹로그, 그리고 지역 캠페인 등이 인기가 있다¹³³⁾.

청소년의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해 청소년들이 주도하는 정치적 행동주의가

132) Center for Media & Social Impact (CMSI).

<https://cmsimpact.org/report-list/participatory-civic-media/> 에서 2021년 6월 3일 인출.

133) CIRCLE. <https://circle.tufts.edu/understanding-youth-civic-engagement> 에서 2021년 7월 10일 인출.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턴아웃, 젊은 활동가들의 앱(Turnout, the Young Activist's App) 개발 사례는 온라인을 통한 행동주의로 볼 수 있다¹³⁴⁾. 이는 미국 메사추세츠 주 케임브리지 출신의 제프 샤피로(Zev Shapiro)라는 고등 학생을 중심으로 청소년 행동주의와 투표 참여율 향상을 위해 청소년 주도로 설립 하여 만든 앱이다¹³⁵⁾. 샤피로는 이 앱은 청소년조직화를 위해 개발된 것이며 자전거를 타거나 달리기하는 사람들의 경로 공유와 건강을 주제로 소통하는 앱인 스트라바(Strava)라는 앱과는 다르다고 말한다¹³⁶⁾. 그는 “이 앱은 시민 교훈, 친구들이 무엇을 하는지 볼 수 있는 홈 액티비티 피드, 이벤트, 투표하려고 등록한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자원 등을 갖추고 있고,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따라 영향력 점수를 부여한다”라고 말한다¹³⁷⁾.

실제로 이 앱은 2018년 플로리다 파크랜드 총기사건 이후 이루어졌던 ‘우리의 생명을 위한 행진’ 등의 다양한 규모의 집회와 시위에 참여를 원하지만, 그 방법을 모르는 청소년이 많다는 점을 알고, 이러한 청소년들의 행동주의가 지속될 수 있도록 조직화하는 온라인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샤피로는 주위를 둘러보았으나 그러한 기능을 하는 플랫폼이 따로 없다는 것을 알고 직접 턴아웃 앱을 만들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들의 앱이 널리 확산된 것은 다양한 세대와 경험을 아우르는 협업을 통해 팀으로 일하였기 때문으로 본다¹³⁸⁾.

(5) 청소년 선거 연령 하향을 위한 캠페인 전개

청소년의 선거권을 16세로 하고자 하는 운동이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예를

134) TurnUp. <https://www.turnup.us> 에서 2021년 6월 25일 인출.

135) TurnUp. <https://www.turnup.us/our-history> 에서 2021년 6월 25일 인출.

136) Strava. <https://www.strava.com/features> 에서 2021년 6월 25일 인출.

137) 서울시 NPO 지원센터(2020.9.20.). 2020년 주목할 만한 미국 청소년 운동 6가지.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npo_aca&wr_id=4436 에서 2021년 6월 25일 인출.

138) Common Sense Media(2020.4.1.). 6 Youth-Led Political Movements to Inspire You to Vote. <https://www.common Sense Media.org/blog/6-youth-led-political-movements-to-inspire-you-to-vote> 에서 2021년 6월 25일 인출.

들면, VOTE16USA라는 단체에서는 다음과 같은 5가지를 주창하면서 16세로까지 선거권을 주도록 하는 캠페인을 확산하고 있다. 첫째, 투표를 습관화해야 하며, 둘째, 16세와 17세는 투표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셋째, 16세와 17세도 몫을 가지고 있으며 넷째, 선출직 지도자들은 동등한 구성원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다섯째, 16세로 낮추는 것이 시민교육을 강화하는 것이라는 점 등을 강조한다¹³⁹⁾.

선거권 연령을 16-17세로 낮추는 시도는 국제적으로도 독일, 오스트리아, 에스토니아, 스코틀랜드, 에콰도르, 아르헨티나 등 적어도 16개 국가에서 이미 적용하고 있으며, 노르웨이는 2011년부터 21개 도시에서의 지방선거에서 적용하고 있다. 스코틀랜드는 2015년에 모든 선거에서 16세의 투표를 인정했다. 미국의 경우 메릴랜드(Maryland) 주 타코마 파크(Takoma Park) 시를 비롯하여 하이아트빌(Hyattsville), 그린벨트(Greenbelt) 시 및 리버데일(Riverdale) 시 등 네 개 도시에서 적용하고 있으며, 매사추세츠(Massachusetts) 주를 비롯한 캘리포니아(California), 버몬트(Vermont), 워싱턴 디시(Washington, D.C.) 오레곤(Oregon) 등의 주에서 캠페인을 전개 중이며 법안 마련을 위한 노력들이 진행 중이다. 2019년에 실시한 16세로 선거권을 하향하는 것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약 17%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옹호론자들은 1971년에 21세에서 18세로 하향할 때에도 지금과 유사하게 여론은 17%만 찬성하였다는 점을 강조한다. 자치단체와는 달리 연방정부 차원의 선거연령 조정을 위해서는 또 한 번의 헌법 수정이 필요한 상황이며, 각 주별로도 각기 관련 규정이 다르고 지방정부 선거에서의 연령 하향을 적용하기 위해서도 주에 따라서는 주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거나,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 많으며, 현행의 주법으로도 지방정부에서의 선거권 하향이 가능한 주는 7개로 나타나고 있다.

139) VOTE16USA(2020.2). Young Voices at the Ballot Box.

<https://vote16usa.org/wp-content/uploads/2020/05/white-paper-5.14.20.pdf> 에서 2021년 7월 15일 인출.

표 IV-13. 주(state)별 지방선거 연령 하향의 법적 실행가능성

구분	내용	
가능한 주	•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매릴랜드, 뉴 저지, 뉴 멕시코, 오클라호마, 워싱턴 디시	7개
법령 불분명한 주	• 아칸소, 하와이, 아이다호, 미주리, 네바다, 오하이오, 사우스 다코다, 유타, 위스콘신	9개
법 개정 필요한 주	• 아라스카, 코네티컷, 델라웨어, 플로리다, 조지아, 일리노이, 인디애나, 아이오아, 캔자스, 켄터키, 루이지애나, 메인, 매사추세츠, 미시간, 미네소타, 미씨씨피, 몬타나, 네브라스카, 뉴 햄프셔, 뉴욕, 노스 캐롤라이나, 노스 다코다, 오레곤, 펜실베이니아, 로드 아일랜드, 테네시, 버몬트, 와싱턴, 와이오밍	29개
주 헌법상 하향금지	• 알라바마, 애리조나, 사우스 캐롤라이나, 텍사스, 버지니아, 웨스트 버지니아	6개

* 출처: VOTE16USA(2020.2). Young Voices at the Ballot Box. <https://vote16usa.org/wp-content/uploads/2020/05/white-paper-5.14.20.pdf> 에서 2021년 7월 15일 검색.

5) 청소년 정치참여의 특징과 시사점

미국은 청소년 정치참여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이는 중요한 사회 변화를 초래 하는데 기여하였다. 정치참여의 여러가지 형태 중에서도 투표는 청소년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고, 정치참여의 힘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실태와 변화 추이 및 최근의 여론조사의 결과를 알아본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¹⁴⁰⁾. 또한 미국의 청소년 정치참여의 내용은 다양한 시민성 함양 프로그램과 정치적 행동주의의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으며, 청소년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각 주별 시민교육 강화와 지방정부와 협의기구들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참여확산 노력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청소년 투표율 향상을 위한 단기 중기, 장기적인 방안들에

140) ADL. 10 Ways Youth Can Engage in Activism.

<https://www.adl.org/education/resources/tools-and-strategies/10-ways-youth-can-engage-in-activism>에서 2021년 7월 15일 인출.

대해 고찰하고 민주당 등 정치권에서의 입법 노력과 청소년 주도의 행동주의 사례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이제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미국 청소년 정치참여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정리하면서 그에 따른 시사점을 찾아보기로 한다.

첫째, 청소년 투표권은 1971년 연방 수정헌법에 의해 18세로 되었으며, 그 이후 각종 선거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대통령선거와 의회선거 등의 시기와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고, 전체 투표율 보다는 항상 낮게 나타나고 있다. 다만, 최근 2020년 대통령 선거에서 청소년 투표율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 주목되고 있다. 미국 청소년의 투표율이 낮은 것은 유권자 등록제도와 ID 카드에 따른 문제, 청소년의 생활과 고용상황에 따른 여러 여건 등이 전반적으로 관련되고 있으며, 2021년 4월의 하버드 청소년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10년 전보다 더욱 정치참여적이고 진보적인 정치 가치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와는 정치제도와 사회시스템, 문화적 상황 등에서 다른 점이 많은 미국에서의 결과이지만, 최근 선거권 연령이 18세로 된 이후의 한국 청소년의 정치참여 결과와 유사한 점과 차이점에 대한 고찰은 중요한 함의를 갖게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청소년의 정치의식과 태도 및 정치참여와 관련한 다양한 상황에 대한 인식과 제도적 개선사항의 필요성 등을 알아보는 청소년 여론조사(youth poll)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021년 3월에 41번째 조사를 실시한 하버드 청소년여론조사는 미국 청소년의 정치참여에 대한 의식과 정당에 대한 의견 등을 지속적으로 알아보고 있다는 점에서 유용성을 인정받고 있다. 기존의 청소년 대상의 유사한 실태조사와는 차별화되면서 청소년 정치참여를 중심으로 하는 권위 있는 여론조사로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둘째, 청소년 시민성 함양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학교와 학교 밖의 청소년 단체와 사회교육 및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다. 특히 학교에서의 시민교육뿐만 아니라 믹바 챌린지(Mikva Challenge)와 같은 프로그램은 청소년의

선거참여와 정책형성 및 공동체적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실천적 체험활동을 통해 전개하고 있다. 유세연단(Soapbox) 프로젝트와 선거운동 경험 활동은 우리나라에서도 청소년 정치참여와 관련한 정책개발을 위해 활용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들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쟁점들에 대한 견해를 공개적으로 연설을 통해 밝히고, 상호 협력을 통해 연구하며 실천하는 새로운 참여제도로 만들어 볼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 창안제나 현재 운영 중인 정책제안대회 등과 다른 형태와 내용으로 새롭게 정책 사업화하는 것이다. 필요하다면 이러한 활동을 종합적으로 운영하는 청소년 중심의 공간을 만들어가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청소년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자문형과 정부제도형의 경우를 알아보았는데, 우리나라의 청소년참여위원회나 청소년운영위원회와 유사하지만 크게 다른 점을 확인하였다. 자문형 청소년위원회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청소년단체나 시민교육기관에서 활동한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구성원이 되어 자치단체 정부의 공공정책이나 이슈와 관련한 권고안을 제시하거나 특히 그 명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건강문제, 주거문제, 안전문제 등 청소년과 관련한 현안별로 별개의 위원회로 운영하는 것은 독특한 접근으로 볼 수 있다. 더욱이 햄프톤(Hampton)이나 샌프란시스코(San Francisco)에서 볼 수 있는 정부제도형 청소년위원단의 경우에는 정부와의 공동협력은 물론, 자치정부의 하나의 부서로서 기능하는 권한과 실행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있지만, 당초의 입법 취지와는 다르게 자치단체 정부기관에서 직접 운영하지 않고 청소년기관에서 위탁하는 형태로 변질되어 그 본래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새로운 검토와 입법적 보완이 요청된다.

넷째, 청소년의 정치참여와 관련한 행동주의와 디지털 환경을 고려할 때 Z세대에서 알파세대로 나아가고 있는 청소년 세대에 대한 전환적 접근이 필요하다. 미국의 청소년 행동주의는 기후위기와 인권문제는 물론, 안전한 생리의 접근, 총기 난사, 이민자 보호, 자살과 가정폭력, 경찰폭력에 따른 사법개혁, 성 평등 등 다양한

이슈와 관련하여 조직화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흑인의 삶도 중요하다(Black Lives Matter)’와 ‘우리 생명을 위한 행진(March for Our Lives)’ 등과 같은 전국적 행진운동과 저항운동이 확산되면서 청소년조직화 운동이 나타나고 있으며, 대중매체를 넘어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전략이 당연시되고 있다. ‘턴아웃, 젊은 활동가의 앱(Turnout, the Young Activists App)’에서와 같은 청소년 투표를 향상과 집회와 시위의 참여방법을 공유하는 앱의 제작을 통해 청소년 행동주의는 새로운 모습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와 유사한 정치사회적 경험을 우리나라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보면, 시대적 상황이 주는 환경 변화에 주목하면서 청소년의 역할과 역량, 특히 투표의 힘(voting power)을 인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건강한 민주주의적 삶에서 중요한 것은 그에 필요한 시민역량을 함양하고 시민적 관여를 통해서 이루려는 접근일 것이다. 청소년 업무 전반을 혁신하는 일이 긴요한 국가·사회적 과제가 되어야 할 당위는 이미 충분하다.

다섯째, 미국에서 볼 수 있는 청소년의 정치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입법과 참여의 학습과 확산을 위한 공공 네트워크 구축 노력에 대한 함의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인디애나 주와 캔자스 주에서 제시된 시민성 함양을 위한 시민교육 강화 법안들은 물론, 미국 민주당에서 제안한 청소년 투표권 보호를 위한 법안 등은 청소년 정치참여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책임 있는 시민이 되는데 필요한 정책적 노력을 강조하고 청소년의 선거권을 제대로 보장되도록 하는 의미를 갖는다. 또한 미국의 자치 도시를 중심으로 구성된 전국도시연맹(National League of Cities)은 청소년위원회 제도의 실질적인 확산을 위해 노력하며, 청소년을 공공정책과 행정의 주체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햄프톤(Hampton)을 중심으로 한 청소년 개혁가와 전문가들은 햄프톤에서의 청소년위원단과 정부행정문화의 변화 및 청소년 기획가 등의 성공사례를 전국적으로 널리 알리고 각급 지도자들을 위한 연수과정을 개발하고 자문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청소년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입법화 노력과 제도적 보완을 지속하는 것은 물론, 청소년을 정책의

동반자로 제대로 인정하고 참여의 공고화를 위한 연대적 네트워크 구축과 성공적인 참여 성과를 발굴하고 확산하는 정책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끝으로 미국의 청소년 정치참여의 사례 분석을 통해 18세 선거권 이후의 청소년에 대한 인식 전환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청소년 업무에서도 청소년을 객체화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존의 접근을 전환하여 청소년 발달과 리더십을 전제하여 시민적 관여와 청소년 조직화 및 정치참여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청소년 업무와 관련한 정책적 접근과 내용, 제도화 등의 전반에서 청소년 참여적 맥락과 연계하면서 성과로 이어지게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미국의 청소년 정치참여 사례가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은 ① 그동안의 실태조사와는 다른 청소년 정치참여를 중심으로 하는 여론조사의 주기적 실시, ② 유세연단프로젝트와 같은 체험활동을 새로운 참여제도화하고 청소년 중심의 학교 밖 운영 공간의 확보, ③ 청소년자문위원회의 다양화와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자치단체 직접운영을 위한 입법적 보완, ④ 청소년 행동주의와 디지털 세대로서의 청소년의 역할과 투표의 힘(voting power)을 인정하는 청소년 업무 전반의 혁신, 그리고 ⑤ 참여의 공고화를 위한 연대적 네트워크 구축과 성공적 참여 성과 발굴과 확산을 위한 정책적 방안 도출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 — 제5장 청소년 정치참여 실태조사

- 1. 조사개요
- 2. 조사대상
- 3. 조사도구 개발
- 4. 표본설계
- 5. 조사결과
- 6. 실태조사 조사결과 요약

1. 조사개요

청소년의 정치참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의 개요는 다음의 <표 V-1>과 같다. 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본 조사에 대한 본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승인(승인번호: 202105-HR-고유-013)을 2021년 5월 24일 획득하였다.

표 V-1. 설문조사 개요

주요 요소	내용
모집단	전국 17개 시도의 중1~고3 재학생
표집 틀	2020 교육통계연보
표본 수	약 3,000명 ¹⁴²⁾
표집방법	층화다단계집락표집
조사시기	2021년 5~8월
조사내용	학교 안팎에서의 정치참여 제약 및 활성화 요인, 정치효능감, 민주시민 역량, 선거권 연령하향, 정부기구 신뢰도, 청소년 관련 정치현안, 정치적 이슈 관련 정보 탐색, 정치의식 영향력 요인, 정치 관련 대화 상대, 정치적 의사 표현 방법 등
조사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본으로 선정된 학교에 설문조사 협조공문 및 안내문 발송 조사에 협조해주겠다고 응답한 학교를 대상으로 조사전문기관의 면접원 학교 방문 및 학급단위 자기기입식 집단 면접

141) 제5장 4절 표본설계는 강현철 교수(호서대학교)가 집필한 것으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21년 한국 아동·청소년 통합조사' 참여 과제에 공동으로 수록되었으며, 나머지 절은 모상현 선임연구위원과 최용환 연구위원이 공동으로 집필하였다.

2. 조사대상

조사대상은 전국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표집 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의 <표 V-2>에 기술되어 있다.

표 V-2.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 명, %)

구분		빈도(명)	비율(%)
전체		2,816	100.0
성별	남학생	1,464	52.0
	여학생	1,352	48.0
학교급	중학교	1,400	49.7
	고등학교	1,416	50.3
경제적 수준	상	1,295	47.5
	중	1,137	41.7
	하	292	10.7
학업성적	상	729	26.8
	중	1,202	44.1
	하	794	29.1
정치성향	보수	201	9.3
	중도	1,698	78.6
	진보	262	12.1
부모학력	고졸	559	20.4
	대졸	1,481	54.2
	대학원졸	291	10.6
	잘 모르겠음	403	14.7

142) 코로나19 4단계 진입으로 조사기간 동안 전체 학교가 원격등교로 전환된 상황에서 조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애초 목표 표본 수인 3,000명의 93.9%에 해당되는 2,816명을 최종표본으로 표집·완료함.

3. 조사도구 개발

청소년의 정치참여 실태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도구는 기 개발된 조사도구와 문헌분석을 바탕으로 청소년 정치참여 현안 전반과 관련 학교 안팎에서의 정치참여 제약 및 활성화 요인, 정치효능감, 민주시민 역량, 선거권 연령하향, 정부기구 신뢰도, 청소년 관련 정치현안, 정치적 이슈 관련 정보 탐색, 정치의식 영향력 요인, 정치 관련 대화 상대, 정치적 의사 표현 방법 등의 문항으로 설문지 초안을 개발하였으며 연구진의 검토 후 전문가 자문을 거쳐 수정·보완되었다. 이와 함께 그리고 조사전문기관으로부터 전반적인 문항 구성과 관련한 로직체계, 문항과 답문항의 일치도, 문항 이해도 및 질문의 적절성 등에 대한 검토 과정을 거친 후 최종문항이 확정되었다(그림 V-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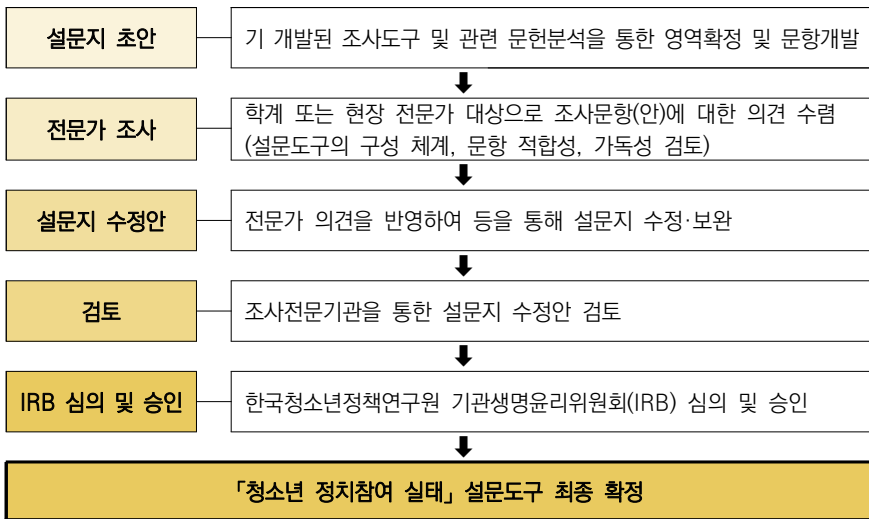


그림 V-1. 조사도구 개발절차

4. 표본설계¹⁴³⁾

1) 모집단 분석

(1) 모집단

본 조사의 모집단은 조사시점 기준 전국 중학교 1~3학년, 고등학교 1~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2) 모집단 분석

먼저, 모집단을 17개 지역별, 학교급별, 학년별로 정리하면 <표 V-3>과 <표 V-4>과 같다. 전체 조사대상 학생 수는 2,646,369명이며 학교 급 별 학생 수는 중학교 1,315,481명(49.7%), 고등학교 1,330,888명(50.3%)이다. 고등학교의 경우 고교유형과 학제를 기준으로 2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였으며, 각 유형에 포함된 고등학교는 다음과 같다.

○ 유형 1(인문계고): 일반고 중 일반 고등학교, 자율고 중 일반 고등학교, 특수목적고 중 과학, 국제, 외국어고등학교

○ 유형 2(자연계고): 가사, 공업, 농림업, 상업, 수산, 실업, 예술, 체육, 해양, 종합고등학교, 특성화고 중 대안, 일반 고등학교

143) 표본설계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21년 한국 아동·청소년 통합조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음.

표 V-3. 중학교 지역×학년별 학생 수, 학교 수

(단위 : 명)

구분	학생 수			학교 수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서울	73,292	67,771	65,599	386	386	386
경기	131,630	119,381	112,084	639	639	638
인천	27,647	24,767	23,860	136	136	135
강원	13,424	12,113	12,300	163	160	162
충북	14,947	13,449	13,093	126	127	127
충남	20,699	18,822	17,979	184	184	184
대전	14,503	13,288	12,891	88	88	88
세종	4,591	4,147	3,672	25	25	25
경북	22,353	20,277	19,868	259	259	257
경남	33,299	29,574	28,355	264	262	261
부산	26,409	23,923	23,426	169	170	170
대구	22,161	20,092	20,220	124	124	124
울산	11,618	10,264	9,849	64	63	63
전북	17,394	15,772	15,770	208	208	208
전남	16,456	15,017	14,552	249	247	248
광주	15,543	14,153	13,701	91	90	90
제주	6,965	6,402	6,119	45	45	45
합계	472,931	429,212	413,338	3,220	3,213	3,211

* 주: 지역은 학교 소재지를 기준으로 구분함.

표 V-4. 고등학교 지역×학년별 학생 수, 학교 수

(단위 : 명)

구분	학생 수						학교 수					
	유형 1(인문계고)			유형 2(자연계고)			유형 1(인문계고)			유형 2(자연계고)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서울	59,737	60,432	58,811	14,591	14,873	14,902	239	239	239	81	81	81
경기	97,272	96,801	91,640	20,768	20,913	21,335	365	360	359	115	115	115
인천	19,782	20,041	18,737	5,303	5,281	5,393	92	93	92	32	32	32

구분	학생 수						학교 수					
	유형 1(인문계고)			유형 2(자연계고)			유형 1(인문계고)			유형 2(자연계고)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강원	9,623	9,649	9,733	3,484	3,521	3,649	78	78	78	38	38	38
충북	10,035	9,880	9,786	3,846	3,822	3,977	53	55	55	29	29	29
충남	15,153	14,932	14,585	4,359	4,224	4,184	78	78	78	39	39	39
대전	11,666	11,714	11,241	2,464	2,485	2,683	48	48	48	14	14	14
세종	3,420	3,280	2,811	310	168	182	17	16	15	3	2	3
경북	17,278	17,581	17,320	4,690	4,830	4,706	129	128	128	56	56	56
경남	25,668	25,642	25,040	4,041	4,141	4,158	151	151	151	39	39	39
부산	18,630	19,501	19,041	6,404	6,425	6,220	102	102	102	39	40	40
대구	16,177	17,624	17,049	4,985	4,830	4,732	71	71	71	22	22	22
울산	8,267	8,773	8,016	2,024	1,977	2,245	44	44	44	13	13	13
전북	13,961	14,267	14,292	3,207	3,307	3,565	99	99	99	34	34	34
전남	11,344	11,819	11,796	4,574	4,588	4,668	88	87	87	56	55	55
광주	12,174	12,718	12,201	2,606	2,823	2,889	52	51	51	16	16	16
제주	4,629	4,829	4,470	1,509	1,565	1,594	21	21	21	9	9	9
합계	354,816	359,483	346,569	89,165	89,773	91,082	1,727	1,721	1,718	635	634	635

* 주: 지역은 학교 소재지를 기준으로 구분함.

표 V-5. 중학교 지역×학년별×성별 학생 수

(단위: 명)

구분	남학생 수			여학생 수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서울	38,012	35,357	34,331	35,280	32,414	31,268
경기	67,339	61,305	57,589	64,291	58,076	54,495
인천	14,121	12,868	12,327	13,526	11,899	11,533
강원	7,028	6,319	6,419	6,396	5,794	5,881
충북	7,698	6,885	6,817	7,249	6,564	6,276
충남	10,791	9,763	9,258	9,908	9,059	8,721
대전	7,409	6,843	6,751	7,094	6,445	6,140
세종	2,245	2,116	1,816	2,346	2,031	1,856
경북	11,618	10,679	10,411	10,735	9,598	9,457
경남	17,198	15,382	14,808	16,101	14,192	13,547

부산	13,575	12,341	12,207	12,834	11,582	11,219
대구	11,321	10,474	10,624	10,840	9,618	9,596
울산	5,985	5,340	5,196	5,633	4,924	4,653
전북	8,953	8,143	8,295	8,441	7,629	7,475
전남	8,455	7,716	7,483	8,001	7,301	7,069
광주	8,126	7,336	7,083	7,417	6,817	6,618
제주	3,576	3,340	3,241	3,389	3,062	2,878
합계	243,450	222,207	214,656	229,481	207,005	198,682

표 V-6. 고등학교 지역×학년별×성별 학생 수

(단위 : 명)

구분	유형 1(인문계고)						유형 2(자연계고)					
	남학생수			여학생수			남학생수			여학생수		
	4학년	5학년	6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서울	31,383	31,864	30,939	28,354	28,568	27,872	6,615	6,783	6,803	7,976	8,090	8,099
경기	49,623	49,766	47,342	47,649	47,035	44,298	10,964	11,218	11,520	9,804	9,695	9,815
인천	10,226	10,246	9,753	9,556	9,795	8,984	2,782	2,804	2,824	2,521	2,477	2,569
강원	4,957	4,935	4,972	4,666	4,714	4,761	1,939	1,961	2,127	1,545	1,560	1,522
충북	5,088	5,064	4,954	4,947	4,816	4,832	2,230	2,149	2,287	1,616	1,673	1,690
충남	7,755	7,676	7,573	7,398	7,256	7,012	2,494	2,476	2,541	1,865	1,748	1,643
대전	6,059	6,082	5,872	5,607	5,632	5,369	1,371	1,378	1,524	1,093	1,107	1,159
세종	1,706	1,619	1,367	1,714	1,661	1,444	136	97	120	174	71	62
경북	8,681	8,873	8,686	8,597	8,708	8,634	3,142	3,205	3,177	1,548	1,625	1,529
경남	13,104	13,089	12,695	12,564	12,553	12,345	2,629	2,670	2,746	1,412	1,471	1,412
부산	9,330	9,784	9,628	9,300	9,717	9,413	3,811	3,880	3,763	2,593	2,545	2,457
대구	8,042	8,851	8,727	8,135	8,773	8,322	3,043	3,023	2,990	1,942	1,807	1,742
울산	4,189	4,536	4,111	4,078	4,237	3,905	1,273	1,236	1,349	751	741	896
전북	6,904	7,114	7,254	7,057	7,153	7,038	2,058	2,113	2,338	1,149	1,194	1,227
전남	5,706	5,960	5,847	5,638	5,859	5,949	2,625	2,584	2,782	1,949	2,004	1,886
광주	6,264	6,542	6,307	5,910	6,176	5,894	1,433	1,625	1,619	1,173	1,198	1,270
제주	2,387	2,481	2,358	2,242	2,348	2,112	865	898	915	644	667	679
합계	181,404	184,482	178,385	173,412	175,001	168,184	49,410	50,100	51,425	39,755	39,673	39,657

2) 표본설계

(1) 표본크기

표본크기는 표본추출방법, 모집단의 특성, 층화방법 등에 의해 영향을 받지만, 단순임의추출 상황에서 통계분석 단위별로 평균 추정치의 목표오차(d)를 얼마나 통제할지에 따라 아래 식(1)로 계산할 수 있다.

$$n = \frac{N(zs)^2}{Nd^2 + (zs)^2} \quad (1)$$

식(1)에서 N 은 모집단의 크기, s 는 관심변수의 표준편차, z 은 신뢰계수를 의미한다(신뢰수준 95% 하에서 $z = 1.96$). 조사내용이 비율일 경우에는 모비율 추정에 대한 표본크기를 식(2)를 통해 계산할 수 있다.

$$n = \frac{Nz^2pq}{Nd^2 + z^2pq} \quad (2)$$

식(2)에서 p 는 비율의 값으로, $q = 1 - p$ 이다. 본 연구에서 1차 표본추출 단위는 학교 단위이며, 추출된 학교에서 표본학급을 선정해 해당 학급의 모든 학생을 조사하는 층화집락추출방법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목표오차를 실제로 기준 이하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위 식(2)에서 산출한 표본크기보다 크게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조사 소요비용, 조사기간 등도 표본크기를 결정하는 현실적인 기준으로 고려되기도 한다.

표 V-7. 학교급별 표본규모 및 예상 표본오차

구분	모집단 크기	표본규모		표본오차*
		학생수	학교수	
중학교	1,315,481	1,500	120	2.5%p
고등학교	1,330,888	1,500	105	2.5%p
전체	2,646,369	3,000	225	1.8%p

* 단순임의추출 가정 하에서 계산됨

본 연구의 표본크기는 조사의 비용 및 시간 등을 고려해 3,000명(중학교 1,500명, 고등학교 1,500명)으로 결정되었다. 이때 단순임의추출을 가정하는 경우 모비율의 추정에 대한 예상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하에서 약 $\pm 1.8\%p$ 이며, 중학교 및 고등학교 각 학교급별 예상 표본오차는 약 $\pm 2.5\%p$ 이다. 층화집락추출의 상황 하에서 실제 표본오차는 예상 표본오차보다 크게 나타날 수 있으나, 일반적인 기준에서 충분히 허용할만한 표본오차 수준으로 판단된다.

(2) 층화

조사내용의 특성과 모집단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집단을 2020년 10월 교육통계DB 기준으로 전국 중학생 및 고등학생 현황을 참고해 지역 및 학교 구분을 층화변수로 고려하였다. 층화변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역구분 : 권역 (5개)
- 학교구분 : 중학교, 고등학교 유형 1, 유형 2 (3개)
- 학년 : 1, 2, 3학년 (3개)

(3) 표본배분

본 조사의 1차 추출단위는 학급(학교)이고, 2차 추출단위는 학생이다. 본 조사에서는 표본배분을 위해 변형비례배분을 수행하였으며, 이 때 다음의 원칙하에 학교 수 및 표본크기를 결정하였다.

- 각 학년별로 지역구분×학교급 각 층에 최소한 한 개 이상의 학교가 할당 되도록 한다.
- 학년별로 층별 모집단 크기에 비례하게 학교 수를 할당하되, 학교급별로 표집될 학생 수가 1,500명(전체 3,000명)을 넘도록 한다.

조사모집단인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경우, 전국 학급당 평균 학생 수는 약 중학교 27명, 고등학교 25명 정도이다. 따라서 지역구분×학교급별 모집단 크기에 비례하게 표본크기를 배분하되, 위의 원칙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층별 조사될 표본 수를 결정하였다.

표 V-8. 단순비례배분에 의한 표본크기 할당 : 학생 수

구분	중학교	고등학교	
		인문계고	전문계고
서울	236	202	50
경기 / 인천	501	388	89
강원 / 충청	217	166	49
경상	367	295	75
전라 / 제주	180	145	42
합계	1,500	1,196	304

* 총계: 3,000명

표 V-9. 학교급×지역구분별 표본 학교 수

구분	중학교	고등학교	
		인문계고	전문계고
서울	9(3)	9(3)	3(1)
경기 / 인천	18(6)	12(4)	3(1)
강원 / 충청	9(3)	6(2)	3(1)
경상	15(5)	12(4)	3(1)
전라 / 제주	6(2)	6(2)	3(1)
합계	57(19)	45(15)	15(5)

* () 안의 수치는 학년별 학교 수임. 총계: 117(39)개

(4) 표본추출

각 학교구분과 지역구분별로 할당된 표본추출은 <표 V-8> 결과를 활용하여 확률비례추출법으로 선정하였다. 즉, 각 학년별로 15개(지역구분 5개×학교급 3개) 층 내에서 조사대상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하여 확률비례추출법을 통해 표본 학교를 선정하되, 각 학년별로 학급 수가 2개 이상이며, 학급당 평균 학생 수가 20명 이상인 학교가 추출될 수 있도록 조정하였다. 그리고 선정된 표본학교에서 각 학년별 1개 표본학급을 임의로 선정하고, 선정된 표본학급의 모든 학생들을 조사하였다.

그러나 선정된 학교에서 조사를 거부할 경우, 동일한 층 내에서의 다른 학교를 무작위로 대체했다. 또한 학교 섭외과정에서 우열반, 특수반 등과 같이 특별편성된 학급은 제외하고, 지역별, 성별 비율도 고려해서 최종 학교 및 학급을 선정하였다.

(5) 성별 사후층화

본 연구는 학교 및 학급 단위로 추출하여 조사하므로, 성별은 표본추출 시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변수임에도 표본설계 및 표본추출을 할 때 성별 구성 비율을

고려하기가 어렵게 된다. 따라서 표본에서의 성별 분포가 모집단 분포와는 상이하게 조사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후층화 가중치를 적용해 표본에서의 성별 분포의 편향을 조정하고자 하였다.

3) 가중치와 모수추정

(1) 가중치

본 조사의 표본추출은 일종의 층화집락추출법으로, 학교와 지역구분을 층으로 간주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각 층에서 일차추출 단위인 학교의 경우 학생 수를 기준으로 확률비례추출법을 통해 선정하고 이를 통해 추출된 표본학교에서 무작위로 학급을 선정한 후에 해당 학급의 학생을 조사하는 것으로, 선정된 표본학교에서 학생을 임의로 선정하여 조사하는 방식의 이단집락추출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단집락추출법에 의한 표본 추출률을 아래 식(3)으로 나타낼 수 있다.

$$f_{hij} = n_h \frac{B_{hi}}{\sum_{i=1}^{N_h} B_{hi}} \cdot \frac{n_{hi}}{B_{hi}} = n_h \frac{n_{hi}}{\sum_{i=1}^{N_h} B_{hi}} \quad (3)$$

식(3)에서 N_h 는 h 층에 속한 전체 학교 수, n_h 는 h 층의 표본 학교 수, B_{hi} 는 h 층에서 i 번째 학교의 학생 수, n_{hi} 는 선정된 표본 학교에서 조사를 실시한 학생 수를 의미한다.

표본 추출률에 대한 가중치(설계 가중치)는 추출률의 역수로, 아래 식(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W_{hij} = \frac{\sum_{i=1}^{N_h} B_{hi}}{n_h n_{hi}} \quad (4)$$

또한 최초 표본단위가 단위무응답인 경우에 보정하기 위하여 최초 목표 표본 크기(n_{hi})를 유효 표본크기(r_{hi})로 나누어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기본 가중치는 설계 가중치와 무응답 조정 가중치를 곱하여 계산되며,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W_{hij}^a = \frac{\sum_{i=1}^{N_h} B_{hi}}{n_h n_{hi}} \times \frac{n_{hi}}{r_{hi}} = \frac{\sum_{i=1}^{N_h} B_{hi}}{n_h r_{hi}} \quad (5)$$

식(5)에서 r_{hi} 는 추출된 표본학교에서 조사가 완료된 학생 수를 나타낸다. 또한 각 세부 층에서의 성별($k = 1, 2$) 모집단 크기를 반영해 사후층화 가중치를 산출하며, 사후층화 가중치는 식(6)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W_{h(k)j}^b = \frac{N_{h(k)}}{\sum_{l=1}^{n_{h(k)}} W_{h(k)j}^a} \quad (6)$$

위 식(6)에서 $N_{h(1)}$ 과 $N_{h(2)}$ 는 각 세부 층의 남학생, 여학생의 모집단 크기를, $\sum W_{h(k)j}^a$ 는 각 세부 층의 성별 기본 가중치 합계를 의미한다.

최종 가중치는 식(7)과 같이 기본 가중치와 사후층화 가중치의 곱으로 계산된다.

$$W_{h(k)ij}^f = W_{hij}^a \times W_{h(k)j}^b \quad (7)$$

(2) 모수추정

① 용어 정의

- Y_{hij} : 관측치 (각 조사항목에 대한 응답)
 - h : 층 번호 ($h = 1, 2, \dots, H$). 학교구분 \times 지역구분에 따른 번호.
 - i : 각 층 내에서의 학교 번호 ($i = 1, 2, \dots, n_h$).
 - j : 각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번호 ($j = 1, 2, \dots, m_{hi}$).
 - m_{hi} : h 번째 층의 i 번째 학교에서 추출된 학생 수
- w_{hij} : 표본 가중치
 - h 번째 층, i 번째 학교, j 번째 학생에 대한 표본 가중치
- $n = \sum_{h=1}^H \sum_{i=1}^{n_h} m_{hi}$: 전체 표본크기

② 모평균 추정

- 관찰 값 Y_{hij} 가 수치형(numerical) 변수일 때, 모평균에 대한 추정치는 표본 가중치를 고려하는 가중평균(Ratio estimator)으로 계산됨.
- $\bar{Y} = \left(\sum_{h=1}^H \sum_{i=1}^{n_h} \sum_{j=1}^{m_{hi}} w_{hij} Y_{hij} \right) / w \dots$: 모평균 추정치
 - $w \dots = \sum_{h=1}^H \sum_{i=1}^{n_h} \sum_{j=1}^{m_{hi}} w_{hij}$: 표본 가중치의 합계

③ 모비율 추정

- 관측치 Y_{hij} 가 범주형(categorical) 변수일 때, 각 범주 c_k 에 대하여 지시 변수(indicator variable) $Y_{hij}^{(c_k)}$ 를 생성하며, 지시변수로부터 모평균과 동일하게 가중평균을 계산하여 각 범주 c_k 의 모비율 추정치를 계산함.

- $Y_{hij}^{(c_k)} = I(Y_{hij} = c_k) = \begin{cases} 1, & \text{if } Y_{hij} = c_k \\ 0, & \text{otherwise} \end{cases}$
- c_k : Y_{hij} 가 가질 수 있는 범주의 값 ($k = 1, \dots, l$)

④ 분산 추정

- $\hat{V}(\bar{Y}) = \sum_{h=1}^H \hat{V}_h(\bar{Y})$: 분산 추정치
- N_h : 층 h 의 총 학교 수
- f_h : h 번째 층의 표본 추출율, n_h/N_h .
- $n_h > 1$ 일 경우,

$$\hat{V}_h(\bar{Y}) = \frac{n_h(1-f_h)}{n_h-1} \sum_{i=1}^{n_h} (e_{hi\cdot} - \bar{e}_{h..})^2$$

$$e_{hi\cdot} = \left(\sum_{j=1}^{m_{hi}} w_{hij} (Y_{hij} - \bar{Y}) \right) / w_{hi\cdot}$$

$$\bar{e}_{h..} = \left(\sum_{i=1}^{n_h} e_{hi\cdot} \right) / n_h$$

- $n_h = 1$ 일 경우,

$$\hat{V}_h(\bar{Y}) = \begin{cases} \text{missing, if } n_{h'} = 1 \text{ for } h' = 1, 2, \dots, H \\ 0, & \text{if } n_{h'} > 0 \text{ for some } 1 \leq h' \leq H \end{cases}$$

⑤ 표준오차, 오차한계(표본오차) 추정

- $\text{StdErr}(\bar{Y}) = \sqrt{\hat{V}(\bar{Y})}$: 표준오차 추정치
- $z_{\alpha/2} \times \text{StdErr}(\bar{Y})$: 오차한계(표본오차) 추정치
- 95% 신뢰수준일 때($\alpha=0.05$), $z_{\alpha/2}=1.96$

5. 조사결과

1) 조사문항 구성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들의 정치참여 실태 전반에 관한 현황을 파악하는 데 있다. 청소년의 정치참여 실태와 현황을 살펴보기 위한 조사영역 및 설문문항은 기존 개발된 문항을 본 연구에 적합하게 수정·보완하였으며 신규 문항은 연구의 목적성에 부합하도록 연구진에 의해 개발되었다. 무엇보다 설문도구의 구성은 조사영역 별 문항의 합치성, 실제 정치참여 실태를 파악하여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활용가능성, 현재적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는 시의성, 주요 변수 간 비교가능성 등을 바탕으로 개발되었다. 기 개발된 설문문항은 응답자들이 명확하고 쉽게 응답할 수 있도록 문항 질문과 답 항의 수정 등의 과정을 거쳤으며, 관련 선행연구 및 전문가 자문진들 검토과정 후 시의성 있는 문항들을 추가 구성하였다. 본 조사에서 사용된 설문문항의 내용과 출처현황은 다음의 <표 V-10>과 같으며,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에 비추어 기존 문항을 활용·추가 보완하여 활용하기도 하였으며 조사에 필요한 문항 중 기존 출처가 없을 경우 연구자가 직접 개발하였다. 본 조사의 문항 구성은 다음과 같다.

표 V-10. 주요 조사문항 및 출처

조사영역	조사문항	출처
정치관심 전반	1문항	연구진 개발
정치이슈 관심	8문항 (국회의정, 사법부 판결, 대통령 및 정부, 여론 및 미디어, 정당, 선거, 국제정치, 시민단체)	김은미, 양소은 (2013)
정치분야 관심	8문항 (행정, 외교, 통일안보, 경제, 교육, 과학기술, 사회복지, 문화예술체육)	김은미, 양소은 (2013) 수정·보완

조사영역	조사문항	출처
정치관련 대화	4문항(친구, 부모님, 선생님, 온라인유저)	이창호(2017)
정치적 견해 형성에 영향을 미친 요인	7문항 (친구, 부모님, 선생님, 온라인 유저, 언론매체, 정치 관련 수업 및 프로그램, 관련 서적)	연구진 개발
정치효능감	3문항 (국가정책에 대한 합리적 판단, 정치적 문제를 이해하고 참여할 능력, 관심과 참여의 국정운영 도움)	김명정(2009), Jung, Kim, & De Zúñiga (2011)
정책 신뢰도	2문항(국회입법 신뢰도, 정부정책 신뢰도)	연구진 개발
민주시민의식	4문항 (다른 견해에 대한 개방성, 다른 견해에 대한 경청, 다른 견해에 대한 수용성, 다른 견해집단 실력행사 인정)	정일권, 이준웅, 배영(2013)
정치관련 정보 획득을 위한 미디어이용	6문항 (TV, 라디오, 소셜미디어, 인터넷신문, 포털, 정치팟캐스트, Youtube)	이창호, 성윤숙, 정낙원(2012) 보완
소셜미디어를 통한 정치경험	4문항(게시글 읽기, 의견달기, 퍼나르기, 온라인청원)	배상률(2015) 문항수정
선거관심	5문항(지방선거1, 지방선거2, 국회의원, 교육감, 대통령)	이창호(2017)
투표의향	5문항(지방선거1, 지방선거2, 국회의원, 교육감, 대통령)	
선거권 연령 하향	1문항(17세 선거권 하향 조정)	이창호(2017) 수정·보완
교육감 선거권 하향	1문항(16세 선거권 하향 조정)	
학교 안팎 정치 활동경험	6문항(모의선거, 의회, 참여기구, 정치토론, 정치관련 동아리, 학생(학급)자치회)	이창호(2020) 보완
정치활동경험 도움 여부	4문항(정치문제 이해, 해결, 의사결정, 다른 의견 수용)	연구진 개발
정치관련 토론 (학교 수업)	1문항	
모의선거경험 (학교 수업)	4문항(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 및 교육감, UN)	이창호(2017) 수정·보완

조사영역	조사문항	출처
학교 내 학생 의견 수용정도	3문항(학교규칙 제·개정, 학교행사, 학생 의견 수렴정도)	연구진 개발
정치참여 활성화 교육	5문항 (토론수업, 모의선거, 민주시민교육, 리더십교육, 정치기관 견학)	이창호(2017) 수정
정치참여저해 요인	5문항 (가정에서의 자기결정권, 학교에서의 자기결정권, 학교 현장에서의 기회제공, 입시교육, 정치참여 부정적 인식)	연구진 개발
정치참여 활성화 요인	1문항 (가정에서의 자기결정권, 학교에서의 자기결정권, 정치 교육확대, 정당가입, 학교 밖 정치참여)	
대통령자질	8문항 (비전제시, 인사능력, 위기관리, 정책결정, 정책추진력, 도덕성)	민영(2008) 수정
대통령 정책분야	8문항 (행정, 외교, 통일안보, 경제, 교육, 과학기술, 사회복지, 문화예술체육)	연구진 개발
청소년 문제현안	9문항 (입시교육, 선거권 하향, 학교 폭력, 게임 중독, 안전, 위기청소년, 자살, 인권, 성폭력)	이창호(2017)
공공(민간)기관에 대한 신뢰	6문항 (정부[중앙, 지방], 정당, 국회, 언론, 시민단체)	장근영, 박수역 (2011) 보완
2021 지방보궐 선거 참여 (서울 / 부산)	참여 여부	연구진 개발
보궐 선거 후보 선택기준 (참여자에 한함)	1문항 (공약, 정당, 능력, 이미지, 청렴성, 학력 중 택1)	이창호(2020)
보궐 선거기간 동안의 경험	3문항(대화여부, 관련 정보탐색, 지지여부)	연구진 개발
투표불참여유	5문항(후보, 공약, 관심, 시간, 두려움)	

먼저, 우리 사회의 정치적 현안 전반을 묻는 질문에 대해 단일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정치적 이슈와 정치 분야는 상호 분리하여 질문하였다. 정치이슈의 문항은 주로 각 정치(민간 및 언론 포함)기구의 주요 이슈로 구성되었으며, 정치 분야는 행정부의 주요 기능과 역할에 기준하여 관련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마찬가지로 응답자의 정치 분야에 관한 관심정도도 후자와 동일하게 구성하였다. 정치적 이슈에 대해 주로 대화를 하는 대상자에 대한 질문 및 정치적 견해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묻는 질문은 김은미와 양소은(2013)의 논의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문항을 개발하여 구성하였다. 정책 신뢰도는 주로 입법부와 행정부의 정책 신뢰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정치효능감은 김명정(2009)과 Jung 외(2011)가 개발한 척도를 참고하여 4문항으로 구성하였고 가독성 제고 차원에서 재구성하여 활용하였다. 민주시민의식을 묻는 질문은 주로 다른 정치적인 견해를 지닌 대상이나 집단에 관한 포용력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정치관련 정보 획득을 위한 미디어 이용정도는 TV, 라디오, SNS, 인터넷 신문, 포털 뿐 아니라 정치팟 캐스트와 유튜브 이용정도로 평정하였다. 정치적 행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주로 온라인 공간에서의 활동 정도를 파악하는 문항으로 질문하였다. 청소년의 선거 전반에 관한 관심과 투표 의향을 파악하기 위해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교육감 및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문항으로 질문하였다. 최근 핫이슈로 등장한 선거권 하향에 관해서는 대다수 학생 청소년이 자신의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교육감 선거 연령과 관련된 문항을 추가하여 질문하였다. 학교 안팎에서의 정치 및 자치 활동 참여 정도를 묻는 질문은 실제로 해당 활동에 참여한 청소년들에게서 자신의 정치역량에 어떻게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는지 연계하여 질문하였다. 구체적으로 학교 안팎에서의 자치 및 정치 활동경험이 정치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모의선거, 청소년의회활동, 참여기구 활동, 정치토론참가 등의 활동에 참여 한 적이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학교 내 정치적 경험 정도를 묻는 질문은 주로 모의 선거와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교 내에서의 청소년의

자신과 관련된 규칙, 활동 등의 의견 수용정도를 묻는 질문을 통해 학교 내에서의 권리수준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학교 내에서의 정치참여 활성화의 필요성과 학교 안팎에서의 청소년 정치참여 저해요인 및 활성화요인에 대한 질문을 통해 정책 제언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받고자 하였다. 내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대통령의 자질을 묻는 질문은 민영(2008) 문항을 참조하여 재구성하였으며, 대통령이 시급히 해결해야할 정치현안을 묻는 질문의 경우 행정부의 주요 기능과 역할에 기준하여 관련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현행 정부에서 해결해야할 청소년 관련 문제를 묻는 질문은 주요 질문들이 총 망라되어 구성되었다. 정치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묻는 질문은 장근영과 박수익(2011)이 활용한 문항을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추가적으로 시대적 정치 트렌드를 반영하기 위해 2021년 4월 7일 치러진 서울 / 부산 보궐 선거에 참여했는지 여부와 참여자의 경우 후보선택의 기준 및 선거기간 동안의 정치행위에 대한 참여여부를 파악하는 문항으로 질문을 구성하였다. 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청소년의 경우 그 이유를 묻는 문항으로 질문하였다.

각 조사 항목에 대한 경험의 정도, 주관적 견해의 정도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응답자에게 리커트 5점 척도에 평정하도록 요구하였다(예, ① 전혀 ~하지 않다 ② 별로 ~하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 ~하다 ⑤ 매우 ~하다). 본 문항의 답변은 자기기입식으로 조사대상자가 해당문항에 스스로 평정하여 기입하는 방식으로 요구되었다. 본 질문도구에서 역 문항은 사용되지 않았다.

본 조사 자료의 결과 분석을 위해 통계패키지 SPSS for win과 Excel을 활용하였으며, 분석을 위한 변인 별 집단 분류기준은 다음과 같다.

- 성별 구분은 남녀 청소년으로 분류함
- 학교급 구분은 중학교 및 고등학교로 분류함
- 경제적 수준은 리커트 7점 척도 기준으로 상[6+7]/중[3+4+5]/하[1+2] 3개 집단으로 재코딩하여 분류함.

- 학업성적은 리커트 5점 척도 기준으로 상[4+5]/중[3]/하[1+2] 3개 집단으로 재코딩하여 분류함.
 - 정치적 성향은 리커트 척도 10점 기준으로 보수[0+1+2]/중도[3+4+5+6+7]/진보[8+9+10] 3개 집단으로 재코딩하여 분류함
 - 부모의 학력 수준은 대학원 졸업/대학교 졸업/고등학교 졸업/모르겠음 4개 집단으로 재코딩하여 분류함. 초등 및 중학교 졸업 항목을 합산하여 분류기준으로 삼았음.
- ※ 모든 변수 분석에서 무응답은 결측으로 처리 하였으며, 부모학력은 부와 모 중 높은 학력 기준으로 코딩하였으며, 부모님 안계심 답항은 사례수가 비미하여 결측으로 처리함.
- ※ 추가로 해당 변수 및 변인 수준 별 자세한 분석결과는 추후 발간 예정인 기초조사 분석보고서 참고.

2) 조사결과 분석

표 V-11. 전반적인 정치적 현안에 대한 관심도

(단위 : %, 평균)

배경 변인	사례수	없다	보통 이다	있다	계	평균	표준 편차	
전체	2,769	40.1	29.0	30.8	100.0	2.87	1.13	
성별	남학생	1,439	39.0	27.9	33.1	100.0	2.91	1.20
	여학생	1,330	41.3	30.3	28.4	100.0	2.83	1.05
학교급	중학교	1,372	43.0	28.7	28.3	100.0	2.80	1.12
	고등학교	1,396	37.4	29.3	33.3	100.0	2.93	1.14
경제적 수준	상	1,272	37.6	29.4	33.0	100.0	2.94	1.13
	중	1,117	43.7	28.5	27.8	100.0	2.77	1.12
	하	287	39.0	30.8	30.1	100.0	2.89	1.14
학업 성적	상	719	34.8	25.6	39.7	100.0	3.09	1.17
	중	1,175	38.0	31.2	30.8	100.0	2.89	1.08
	하	784	48.7	29.7	21.6	100.0	2.62	1.11
정치 성향	보수	198	40.6	17.1	42.3	100.0	3.08	1.39
	중도	1,666	37.1	32.3	30.6	100.0	2.90	1.08
	진보	259	21.1	24.9	54.0	100.0	3.45	1.17
부모 학력	고졸	545	43.7	30.5	25.8	100.0	2.76	1.10
	대졸	1,456	38.6	29.3	32.1	100.0	2.91	1.13
	대학원졸	286	31.9	27.5	40.6	100.0	3.13	1.16
	잘모르겠음	398	48.2	28.7	23.1	100.0	2.66	1.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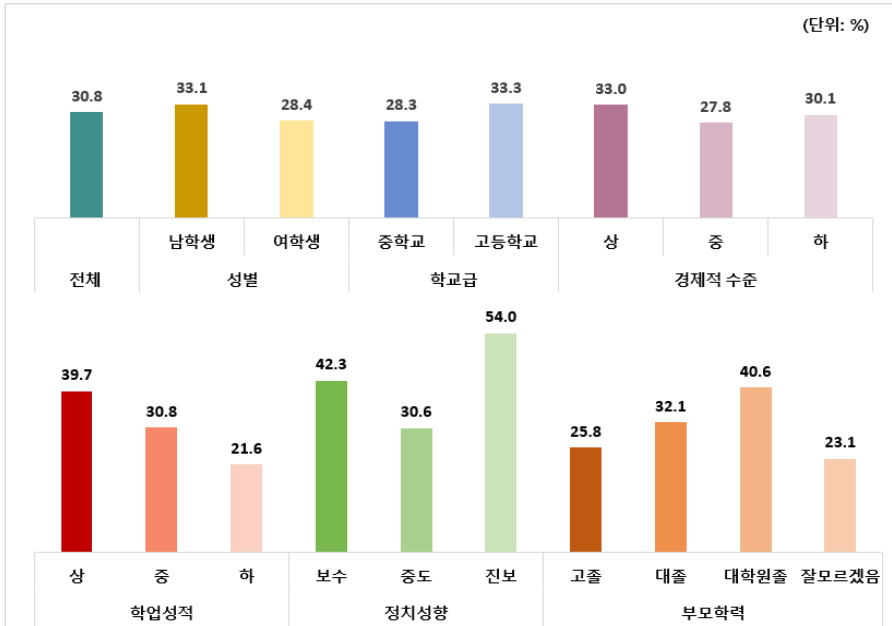


그림 V-2. 전반적인 정치적 현안에 대한 관심 정도

〈표 V-11〉과 [그림 V-2]를 보면 전반적인 정치적 현안에 관한 관심도는 30.8%로 조사되어, 관심이 없다(40.1%) 비율보다 9.3%정도 낮게 조사되었다. 성별 특성에서는 남학생(33.1%)이 여학생(28.4%)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학교급 별 특성에서는 중학생(28.3%)보다는 고등학생(33.3%)의 경우 높은 비율로 관찰되었다. 사회 경제적(S.E.S)인 특성 중 경제적 수준이 높거나(33.0%) 낮을 경우(30.1%) 중간 수준(27.8%) 보다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부모학력이 높은 수록 그 차이가 두드러지게 관찰되었다(40.6%)>32.1%)>25.8%). 또한 학업 성적 변인에서도 뚜렷한 차이가 관찰되는데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전반적인 정치적 관심도가 높게 나타났다(39.7%)>30.8%)>21.6%). 정치성향의 경우 중도성향(30.6%)의 경우 낮게 관찰되었으며, 진보성향(54%)의 경우 매우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보수성향(42.3%)의 경우도 비교적 높게 관찰되었다.

표 V-12. 주요 이슈(주제)에 대한 관심도_전체

(단위 : %, 평균)

주요 이슈 관심도	사례수	없다	보통이다	있다	계	평균	표준편차
국회 의정활동 관련 이슈 관심도	2,804	58.7	24.1	17.2	100.0	2.40	1.10
사법부의 판결 관련 이슈 관심도	2,808	51.2	22.3	26.5	100.0	2.62	1.23
대통령과 정부 관련 이슈 관심도	2,798	37.5	25.6	36.9	100.0	2.94	1.25
여론과 미디어 동향 이슈 관심도	2,801	33.7	26.6	39.7	100.0	3.02	1.23
정당 관련 이슈 관심도	2,799	58.9	23.8	17.3	100.0	2.37	1.14
선거 관련 이슈 관련 관심도	2,809	38.4	27.5	34.1	100.0	2.89	1.22
국제정치 관련 이슈 관심도	2,800	47.5	25.8	26.7	100.0	2.67	1.22
시민단체 활동 관련 이슈 관심도	2,805	47.9	30.1	21.9	100.0	2.58	1.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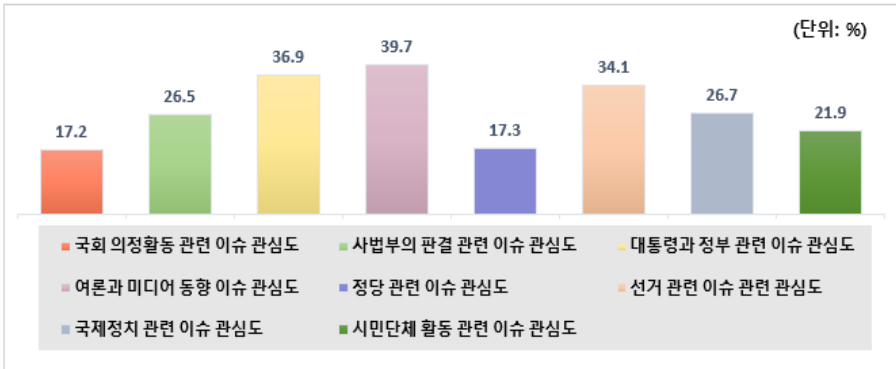


그림 V-3. 주요 이슈(주제)에 대한 관심 정도(전체)

〈표 V-12〉와 [그림 V-3]에서와 같이 주요 이슈에 대한 관심도 수준은 주제에 따라 그 차이가 두드러지게 관찰되었다. 여론과 미디어 동향 이슈 관심도(39.7%,

$M=3.02$)가 가장 높게 관찰되었으며, 그 다음은 대통령과 정부 관련 이슈 관심도 (36.9%, $M=2.94$), 선거 관련 이슈 관련 관심도(34.1%, $M=2.89$) 순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국제정치 관련 이슈(26.7%, $M=2.67$) 및 사법부의 판결 관련 이슈(26.5%, $M=2.62$)가 뒤를 따랐다. 상대적으로 정당관련 이슈(17.3%, $M=2.37$), 국회 의정활동 관련 이슈(17.2%, $M=2.40$) 및 시민단체 활동 관련 이슈 (21.9%, $M=2.58$)는 관심을 받지 못해 비율 및 평균값이 낮게 관찰되었다.

표 V-13. 주요 이슈(주제)에 대한 관심도_변인 수준 별

(단위 : %)

배경 변인 수준	규회 의정활동 관련 이슈		사법부의 판결 관련 이슈		대통령과 정부 관련 이슈		여론과 미디어 동향 관련 이슈						
	없다	보통이다	있다	보통이다	있다	보통이다	없다	보통이다	있다				
성별	남학생	57.2	23.5	19.3	54.8	22.2	23.0	36.0	26.8	41.2	34.8	26.3	38.9
	여학생	60.3	24.7	14.9	47.2	22.5	30.3	39.2	24.7	32.1	32.5	27.0	40.5
학교급	중학교	61.1	22.1	16.8	55.4	22.3	22.3	39.0	24.3	34.9	37.4	27.4	35.2
	고등학교	56.4	26.0	17.6	47.0	22.3	30.7	36.1	27.3	38.8	30.1	25.9	44.1
경제적 수준	상	58.0	24.9	17.1	48.6	24.0	27.4	35.0	27.9	39.3	32.1	26.4	41.5
	중	60.2	24.8	15.0	55.0	21.4	23.5	41.2	22.9	32.7	35.5	27.4	37.1
	하	58.9	20.5	20.6	50.0	18.8	31.2	36.2	28.9	39.2	34.6	26.1	39.3
학업 성적	상	52.2	26.0	21.8	43.4	22.7	33.9	31.2	29.2	44.8	28.0	25.5	46.5
	중	58.5	25.2	16.3	49.3	24.9	25.8	35.8	26.0	35.4	30.5	29.1	40.4
	하	66.2	21.6	12.3	62.0	18.3	19.6	46.7	22.4	30.3	44.1	24.5	31.4
정치 성향	보수	47.5	23.4	29.1	48.2	19.5	32.3	35.5	19.7	46.4	32.4	18.7	48.9
	중도	56.1	28.0	16.0	48.0	25.9	26.0	35.4	28.0	37.1	32.6	28.3	39.1
	진보	48.0	18.9	33.1	37.9	14.4	47.7	19.8	34.4	60.3	17.3	24.3	58.5
부모 학력	고졸	61.7	23.1	15.1	55.3	20.3	24.4	39.8	25.5	33.9	38.2	24.8	37.0
	대졸	59.1	24.0	16.9	51.1	21.8	27.1	36.1	26.7	38.2	31.7	27.0	41.4
	대학원졸	52.5	23.7	23.7	42.5	26.4	31.0	30.3	29.8	46.2	24.7	25.7	49.6
질모르겠음	59.9	28.3	11.8	53.3	25.6	21.2	46.0	20.5	26.2	41.4	30.6	28.0	

표 V-13. 주요 이슈(주제)에 대한 관심도_변인 수준 별(표 계속)

(단위 : %)

배경 변인 수준	정당 관련 이슈		선거 관련 이슈		규제정치 관련 이슈		시민단체 활동 관련 이슈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성별	남학생	57.2	23.5	19.3	54.8	22.2	23.0	26.8	41.2	34.8	26.3	38.9	
	여학생	60.3	24.7	14.9	47.2	22.5	30.3	39.2	24.7	32.1	32.5	27.0	40.5
학교급	중학교	61.1	22.1	16.8	55.4	22.3	22.3	39.0	24.3	34.9	37.4	27.4	35.2
	고등학교	56.4	26.0	17.6	47.0	22.3	30.7	36.1	27.3	38.8	30.1	25.9	44.1
경제적 수준	상	58.0	24.9	17.1	48.6	24.0	27.4	35.0	27.9	39.3	32.1	26.4	41.5
	중	60.2	24.8	15.0	55.0	21.4	23.5	41.2	22.9	32.7	35.5	27.4	37.1
	하	58.9	20.5	20.6	50.0	18.8	31.2	36.2	28.9	39.2	34.6	26.1	39.3
학업 성적	상	52.2	26.0	21.8	43.4	22.7	33.9	31.2	29.2	44.8	28.0	25.5	46.5
	중	58.5	25.2	16.3	49.3	24.9	25.8	35.8	26.0	35.4	30.5	29.1	40.4
	하	66.2	21.6	12.3	62.0	18.3	19.6	46.7	22.4	30.3	44.1	24.5	31.4
정치 성향	보수	47.5	23.4	29.1	48.2	19.5	32.3	35.5	19.7	46.4	32.4	18.7	48.9
	중도	56.1	28.0	16.0	48.0	25.9	26.0	35.4	28.0	37.1	32.6	28.3	39.1
	진보	48.0	18.9	33.1	37.9	14.4	47.7	19.8	34.4	60.3	17.3	24.3	58.5
부모 학력	고졸	61.7	23.1	15.1	55.3	20.3	24.4	39.8	25.5	33.9	38.2	24.8	37.0
	대졸	59.1	24.0	16.9	51.1	21.8	27.1	36.1	26.7	38.2	31.7	27.0	41.4
	대학원졸	52.5	23.7	23.7	42.5	26.4	31.0	30.3	29.8	46.2	24.7	25.7	49.6
잠모르겠음	59.9	28.3	11.8	53.3	25.6	21.2	46.0	20.5	26.2	41.4	30.6	28.0	

〈표 V-13〉과 [그림 V-4]를 보면, 주요 이슈에 관한 관심도 비율(%)은 남녀 성별 특성에 따라 다르게 관찰되는데, 남학생의 경우 대통령과 정부 관련 이슈(41.2%)여학생 32.1%)에서 매우 높게, 국회 의정활동(19.3%)여학생 14.9%) 및 정당 관련 이슈(20.8%)여학생 13.5%)에서도 비교적 높은 비율로 관찰되었고, 여학생은 사법부의 판결 관련 이슈(30.3%)남학생 23.0%)에서 매우 높게, 시민 단체 활동 관련 이슈(22.8%)남학생 21.1%)에서도 비교적 높게 관찰되었다. 비록 남녀 학생 간 큰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지만, 여론과 미디어 동향 관련 이슈에서는 남녀 모두 높은 관심도(남학생 38.9%, 여학생 40.5%)가 나타났다.

학교급별 특성에서는 중학생의 경우 고등학생 보다 모든 이슈 영역에서 관심도 수준이 낮게 나타났으며, 특히 사법부의 판결(고등학생 30.7%)중학생 22.3%) 및 여론과 미디어 동향 관련 이슈(고등학생 44.1%)중학생 35.2%)에서 그 차이가 두드러지게 관찰되었다. 경제적 수준과 정치성향의 경우 일정한 경향성을 보여주는데, 중간수준 및 중도 성향의 경우 대부분의 이슈에서 낮은 관심도 수준을 보였다. 정치성향에서의 두드러진 차이는 진보성향 집단에서 모든 이슈에서 대한 관심도 수준이 다른 두 집단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그 차이는 사법부의 판결 관련 이슈(진보 47.7%)보수 32.3%)중도 26.0%), 대통령과 정부 관련 이슈(진보 60.3%)보수 46.4%)중도 37.1%), 여론과 미디어 동향 관련 이슈(진보 58.5%)보수 48.9%)중도 39.1%), 선거 관련 이슈(진보 54.9%)중도 41.6%)보수 34.1%) 및 국제정치 관련 이슈(진보 51.6%)보수 30.8%)중도 26.7%)에서 매우 높게 관찰되었다.

학업성적과 부모학력에서도 일정한 경향성을 보여 주는데 두 변인의 수준이 높을수록 대부분의 이슈에서 높은 관심도 수준을 보여주었다. 학업성적이 높은 집단의 경우 다른 두 집단 보다 사법부의 판결 관련 이슈(상 33.9%)중 25.8%)하 19.6%), 대통령과 정부 관련 이슈(상 44.8%)중 35.4%)하 30.3%), 선거 관련 이슈(상 44.3%)중 33.0%)하 26.9%) 및 국제정치 관련 이슈(상 36.3%)중

25.4%)하 19.5%)에서 매우 높은 관심도 수준이 관찰되었다. 또한 부모학력 변인에서도 동일한 경향이 관찰되는데 부모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대부분의 이슈에서 관심도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그 중 대통령과 정부 관련 이슈(대학원 29.8%)대졸 26.7%, 고졸 25.5%)와 여론과 미디어 동향 관련 이슈(대학원 49.6%)대졸 41.4%, 고졸 37.0%)에서 그 차이가 두드러지게 관찰되었다.

표 V-14. 정치 분야별 관심도_전체

(단위 : %, 평균)

정치 분야	사례수	없다	보통이다	있다	계	평균	표준편차
정치 행정 분야	2,807	52.2	26.2	21.7	100.0	2.53	1.18
외교 분야	2,808	48.3	26.6	25.1	100.0	2.61	1.21
통일안보 분야	2,806	45.6	27.3	27.1	100.0	2.69	1.22
경제 분야	2,798	39.6	28.0	32.4	100.0	2.85	1.22
교육 분야	2,802	29.3	28.4	42.3	100.0	3.13	1.22
과학기술 분야	2,797	38.1	26.2	35.7	100.0	2.91	1.26
사회복지 분야	2,802	40.5	32.1	27.4	100.0	2.77	1.17
문화예술체육 분야	2,806	32.7	28.4	38.9	100.0	3.06	1.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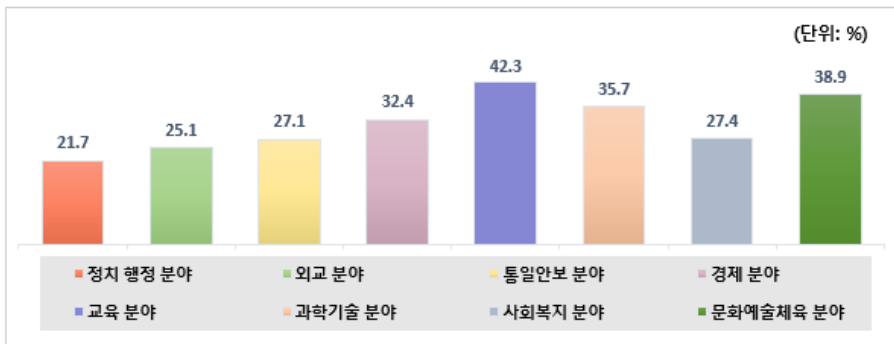


그림 V-5. 정치 분야별 관심 정도(전체)

〈표 V-14〉와 [그림 V-5]에서 청소년들이 가장 높은 관심도를 보인 정치 분야는 교육 분야(42.3%, $M=3.13$)였다. 문화예술체육 분야에 대한 관심(38.9%, $M=3.06$)이 그 뒤를 따랐으며, 과학기술 분야(35.7%, $M=2.91$)와 경제 분야(32.4%, $M=2.85$)에서도 역시 30%를 상회하는 관심 수준이 관찰되었다. 사회복지 분야(27.4%, $M=2.77$), 통일안보 분야(27.1%, $M=2.69$), 외교 분야(25.1%, $M=2.61$), 정치 행정 분야(21.7%, $M=2.53$)에 대한 관심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는데, 특히 정치 행정 분야에 대한 관심도는 전체 정치 분야 중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표 V-15. 정치 분야별 관심도_변인 수준 별

(단위 : %)

배경 변인 수준	정치 행정 분야						외교 분야						통일안보 분야						경제 분야							
	없다		보통이다		있다		없다		보통이다		있다		없다		보통이다		있다		없다	있다						
성별	남학생	50.3	24.6	25.1	47.7	26.1	26.2	47.0	25.2	27.8	37.4	25.8	36.8	여학생	54.2	27.8	17.9	49.0	27.1	24.0	44.1	29.6	26.3	41.9	30.4	27.7
	학교급	중학교	56.4	24.7	18.9	50.4	25.6	24.1	46.5	26.2	27.3	42.0	28.0	30.0	고등학교	48.0	27.6	24.4	46.2	27.5	26.2	44.7	28.4	26.9	37.2	28.0
경제적 수준		상	50.9	25.0	24.1	45.3	26.6	28.0	43.4	27.9	28.7	37.3	28.1	34.6	중	54.6	26.3	19.1	50.8	26.9	22.2	48.6	27.6	23.8	42.9	29.4
	하	51.0	27.4	21.7	49.0	24.2	26.7	46.2	27.0	26.8	40.3	23.4	36.2	상	43.5	26.0	30.5	39.1	25.7	35.2	40.7	26.8	32.5	30.9	27.5	41.6
	학업 성적	중	51.6	28.4	20.0	46.6	29.1	24.3	44.2	28.6	27.2	39.4	29.9	30.7	하	62.0	21.7	16.3	58.6	23.3	18.1	53.2	27.2	19.6	49.2	26.0
정치 성향		보수	44.3	18.6	37.0	47.2	20.0	32.8	53.8	18.1	28.1	34.7	23.6	41.6	중도	49.7	29.2	21.1	44.6	29.8	25.6	42.5	30.1	27.4	37.0	31.2
	부모 학력	진보	35.8	19.4	44.7	29.9	20.9	49.2	37.6	24.8	37.5	27.9	20.4	51.6	고졸	55.6	24.4	20.0	53.0	24.9	22.2	49.7	27.2	23.1	40.6	29.8
대졸		51.6	26.2	22.2	46.1	26.5	27.4	45.0	27.7	27.3	38.8	27.6	33.6	대학원졸	43.8	26.3	29.9	41.7	29.2	29.1	41.8	24.5	33.7	34.8	31.3	33.9
전문대졸	57.5	27.0	15.5	52.6	28.3	19.1	47.0	31.4	21.6	46.7	26.5	26.8														

표 V-15. 정치 분야별 관심도_변인 수준 별(표 계속)

(단위 : %)

배경 변인 수준	교육 분야		과학기술 분야		사회복지 분야		문화예술체육 분야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성별	남학생	34.2	29.0	36.8	32.8	25.1	42.1	44.9	32.1	23.0	39.2	27.2	33.7
	여학생	24.1	27.7	48.2	43.9	27.4	28.7	35.7	32.1	32.2	25.7	29.8	44.6
학교급	중학교	32.0	27.7	40.3	40.9	24.7	34.5	45.4	31.2	23.4	34.1	28.1	37.7
	고등학교	26.6	29.1	44.3	35.4	27.7	36.9	35.7	33.0	31.3	31.2	28.7	40.1
경제적 수준	상	26.1	29.1	44.8	36.1	26.0	38.0	39.1	32.8	28.1	29.8	28.6	41.6
	중	31.9	29.8	38.4	40.6	27.9	31.5	41.7	33.5	24.8	35.2	29.0	35.7
	하	33.5	23.1	43.4	37.8	21.9	40.3	39.0	27.7	33.3	34.4	23.8	41.9
학업 성적	상	21.7	25.7	52.6	29.1	24.3	46.6	34.8	33.8	31.4	29.9	30.3	39.7
	중	26.8	31.6	41.6	38.2	28.3	33.5	38.7	33.6	27.6	30.6	28.9	40.5
	하	40.3	27.1	32.6	46.5	25.3	28.2	47.3	29.6	23.1	38.0	25.6	36.4
정치 성향	보수	25.9	26.0	48.1	39.6	18.2	42.2	43.5	25.7	30.7	38.7	29.6	31.7
	중도	27.4	30.9	41.7	35.2	28.2	36.6	36.9	34.6	28.5	30.8	29.4	39.8
	진보	19.6	20.5	60.0	29.6	22.4	48.0	33.8	26.4	39.8	27.2	23.5	49.3
부모 학력	고졸	34.0	29.9	36.1	42.4	28.4	29.2	39.6	35.8	24.6	32.1	30.4	37.5
	대졸	27.0	28.8	44.2	37.6	26.2	36.2	40.0	32.0	28.0	31.7	27.6	40.7
	대학원졸	22.4	25.5	52.1	32.4	23.6	44.0	35.6	28.6	35.8	29.3	29.0	41.7
잘모르겠음	37.0	29.5	33.5	38.6	27.2	34.2	44.8	33.6	21.6	38.4	29.0	3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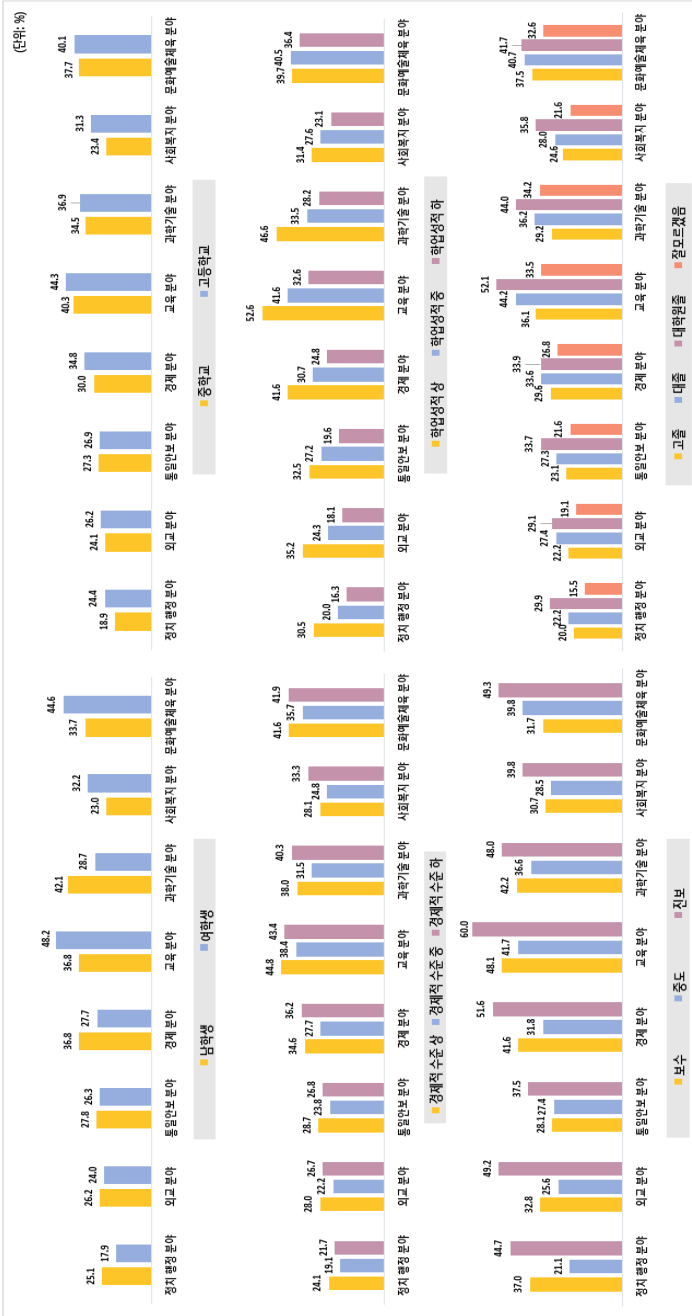


그림 V-6. 정치 분야별 관심 정도(변인 수준 별)

〈표 V-15〉와 [그림 V-6]을 보면 정치 분야별 관심도 비율(%)은 남녀 성별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남학생들이 더 높은 관심 수준을 드러낸 분야로는 정치 행정 분야(25.1%>여학생 17.9%), 경제 분야(36.8%>여학생 27.7%), 과학기술 분야(42.1%>여학생 28.7%)가 있었으며, 특히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남학생들의 관심 수준은 여학생들의 관심 수준을 크게 웃도는 것(13.4%)으로 관찰되었다. 여학생들이 더 높은 관심 수준을 보인 분야는 교육 분야(48.2%>남학생 36.8%), 사회복지 분야(32.2%>남학생 23.0%), 문화예술체육 분야(44.6%>남학생 33.7%)로, 세 분야 모두에서 남학생들의 관심 수준보다 약 10% 가까이 높은 관심 수준을 각각 보여주었다.

학교급별 차이의 경우, 대부분의 정치 분야에 대한 고등학생의 관심 수준이 중학생들의 관심 수준보다 높게 관찰되었는데, 그 중 사회복지 분야(고등학교 31.3%>중학교 23.4%)에 대한 관심도의 차이가 가장 두드러졌으며, 그 외에도 정치 행정 분야(고등학교 24.4%>중학교 18.9%), 경제 분야(고등학교 34.8%>중학교 30.0%), 교육 분야(고등학교 44.3%>중학교 40.3%)에 대한 관심 수준에서 교급별 차이가 나타났다.

경제적 수준에 따른 정치 분야별 관심도는 모든 분야에 걸쳐 유사한 경향성을 띠고 있는데, 중간 수준의 경제적 환경에 놓인 학생들의 관심도가 상 또는 하 수준의 학생들의 관심도에 비해 낮은 것으로 관찰되었으며, 상·하 수준의 학생들 간의 관심도에서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학업 성적에 따른 정치 분야별 관심도의 양상 또한 비교적 일관적인 것으로 드러났는데, 문화예술체육 분야(중 40.5%>상 39.7%>하 36.4%)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학업 성적이 높을수록 각 분야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 같은 양상은 부모학력 변인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부모의 학력이 고학력일수록 각 분야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보이는 경향성이 대부분의 정치 분야에 걸쳐 나타났으며, 특히 부모학력이 대학원 졸업 집단의 경우 정치 행정 분야(29.9%>대졸 22.2%,고졸 20.0%), 교육 분야

(52.1%>대졸 44.2%>고졸 36.1%), 과학기술 분야(44.0%>대졸 36.2%>고졸 29.2%), 사회복지 분야(35.8%>대졸 28.0%>고졸 24.6%)에서 여타 집단에 비해 두드러지게 높은 관심 수준을 나타냈다.

정치 성향의 경우, 모든 정치 분야에서 진보성향 집단이 다른 두 집단에 비해 가장 높은 관심도를 보였다. 특히 외교 분야(진보 49.2%>보수 32.8%>중도 25.6%), 경제 분야(진보 51.6%>보수 41.6%>중도 31.8%), 교육 분야(진보 60.0%>보수 48.1%>중도 41.7%)에서 관찰된 진보성향 집단의 관심도는 여타 집단의 관심도를 10% 이상 상회하는 수준에서 두드러졌다. 대부분의 정치 분야에서 보수성향 집단이 중도성향 집단보다 높은 관심도를 드러냈는데, 중도성향 집단이 보수성향 집단보다 높은 관심도를 보인 분야는 문화예술체육 분야(진보 49.3%>중도 39.8%>보수 31.7%)가 유일했다.

표 V-16. 정치 관련 이슈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대상_전체

(단위 : %, 평균)

대상	사례수	하지 않는다	보통 이다	한다	계	평균	표준 편차
친구들	2,806	54.6	15.1	30.3	100.0	2.60	1.36
부모님	2,806	36.6	19.5	43.9	100.0	3.08	1.34
학교 선생님	2,805	77.3	13.9	8.8	100.0	1.83	1.05
온라인 유저	2,807	75.1	12.7	12.2	100.0	1.86	1.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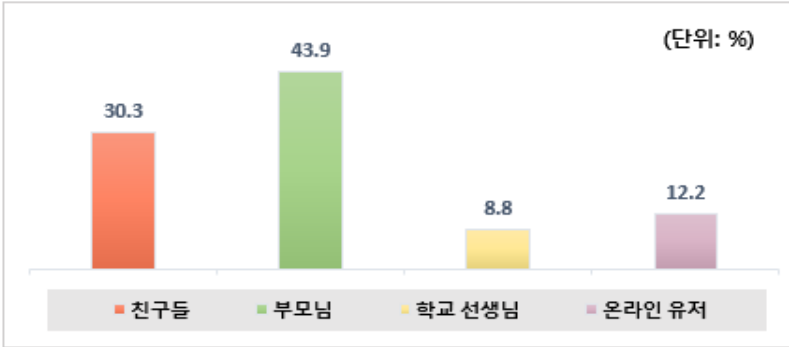


그림 V-7. 대상별 정치 관련 이슈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정도(전체)

〈표 V-16〉과 [그림 V-7]에서와 같이 청소년들이 정치 관련 이슈에 대해 가장 많은 대화를 나누는 대상은 부모님(43.9%, $M=3.08$)으로, 절반에 가까운 청소년들이 부모님과 정치 관련 이슈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들과 정치 관련 이슈에 대해 대화하는 청소년들의 비율은 30.3%($M=2.60$)였으며, 온라인 유저(12.2%, $M=1.86$)와 학교 선생님(8.8%, $M=1.83$)이 그 뒤를 이었으나, 부모님 또는 친구들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비율을 보고하였다.

표 V-17. 정치 관련 이슈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대상_변인 수준 별

(단위 : %)

배경 변인 수준	친구들			부모님			학교 선생님			온라인 유저														
	하지 않는다	한다	보통이다	하지 않는다	한다	보통이다	하지 않는다	한다	보통이다	하지 않는다	한다	보통이다	한다											
	성별	남학생 51.7	14.7	33.6	41.8	19.7	38.5	77.6	13.7	8.7	71.7	14.7	13.6	여학생 57.7	15.6	26.7	31.0	19.3	49.7	77.0	14.2	8.8	78.7	10.6
학교급	중학교 57.0	13.7	29.3	35.4	18.5	46.1	76.0	14.2	9.8	74.6	12.1	13.2	고등학교 52.2	16.6	31.3	37.8	20.5	41.7	78.6	13.6	7.8	75.6	13.3	11.1
경제적 수준	상 54.5	13.3	32.2	32.1	18.5	49.4	75.9	13.7	10.4	75.9	11.7	12.3	중 56.8	16.9	26.2	41.5	20.1	38.4	79.6	14.1	6.4	77.1	12.5	10.4
학업 성적	상 55.6	12.5	31.9	34.4	16.9	48.8	80.6	11.2	8.2	79.1	9.9	11.0	중 52.9	17.2	30.0	33.5	21.1	45.4	74.1	16.8	9.1	73.9	14.1	12.1
정치 성향	하 57.5	14.3	28.3	43.8	19.0	37.2	79.8	11.5	8.7	73.0	13.2	13.7	보수 47.3	11.1	41.6	41.0	13.7	45.2	77.5	13.3	9.2	67.0	11.0	22.0
부모 하력	중도 54.0	16.9	29.1	33.6	22.2	44.2	76.1	14.8	9.1	74.1	14.8	11.1	진보 46.1	12.3	41.6	26.9	11.5	61.6	78.0	13.0	9.0	9.1	9.1	19.9
	고졸 51.8	16.9	31.3	36.6	22.8	40.7	78.7	13.9	7.5	74.8	11.9	13.3	대졸 56.1	14.0	29.8	36.4	18.0	45.6	77.7	13.0	9.2	76.3	12.3	11.4
	대학원졸 58.3	13.0	28.6	30.3	17.8	51.9	82.0	10.9	7.1	75.9	9.9	14.2	전문대졸 52.5	18.1	29.5	42.6	21.9	35.5	71.3	19.0	9.7	69.7	17.0	1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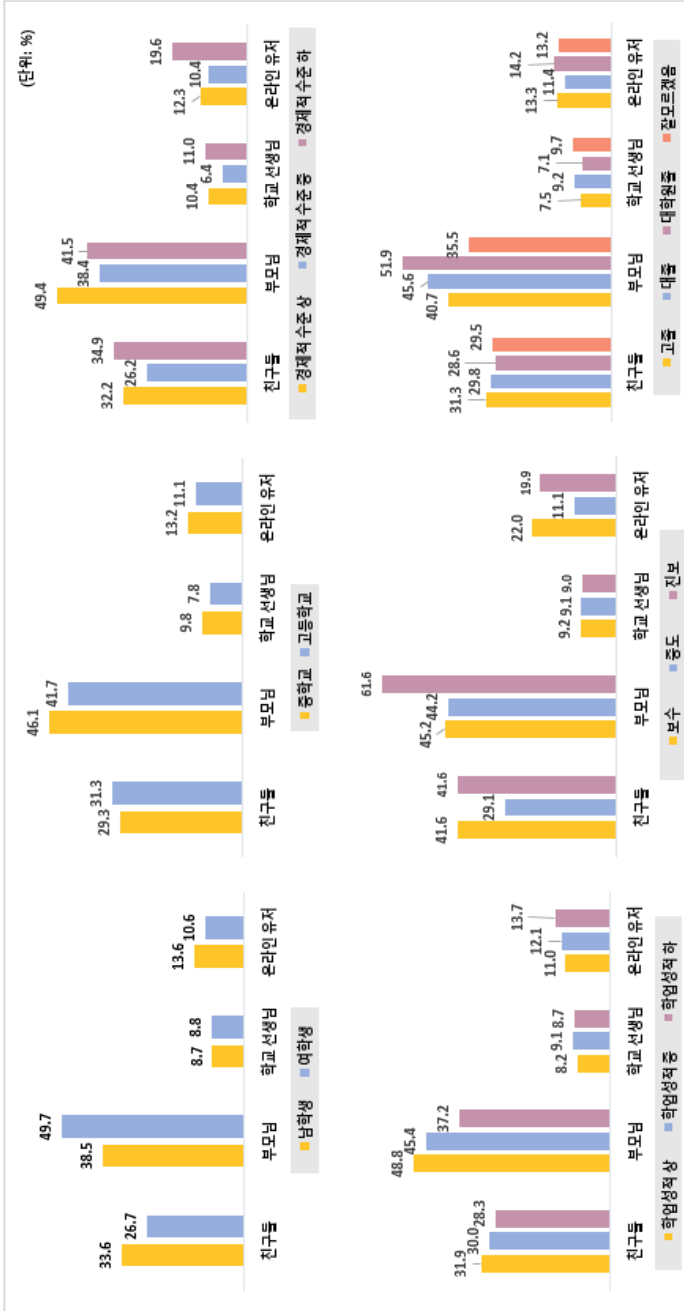


그림 V-8. 대상별 정치 관련 이슈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정도(범인 수준 별)

〈표 V-17〉과 [그림 V-8]에서와 같이 정치 관련 이슈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대상은 성별 특성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고한 학교 선생님(남학생 8.7%, 여학생 8.8%)이나 온라인 유저(남학생 13.6%, 여학생 10.6%)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으나, 친구들과 대화하는 비율이 남학생(33.6%)여학생 26.7%)이 더 높은 반면, 부모님과 대화하는 비율은 여학생 (49.7%) 남학생 38.5%)이 더 높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학교급에 따른 차이의 경우, 부모님을 제외한 나머지 3개 대상에서는 큰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으나, 부모님과 정치 관련 이슈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비율이 고등학생보다 중학생(46.1%)고등학생41.7%)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수준의 영향은 대화 대상에 따라 상이하게 관찰되었다. 먼저, 중간 수준의 경제력을 가진 집단이 상 또는 하 수준의 집단에 비해 모든 대상에 걸쳐 가장 낮은 비율을 공통적으로 보고하였다. 높은 경제적 수준의 집단과 낮은 경제적 수준의 집단의 비율은 친구들과(상 32.2%, 하 34.9%)과 학교 선생님(상 10.4%, 하 11.0%)에서는 대동소이하였으나, 부모님과 대화를 나누는 비율은 상 수준의 집단이 비교적 높은 반면(상49.4%) 하 41.5%), 온라인 유저와 대화를 나누는 비율은 하 수준의 집단이 더 높은(하 19.6%)상 12.3%) 것으로 관찰되었다.

학업성적에 따른 차이는 부모님과 대화를 나누는 비율에서만 드러났는데, 중간 이상의 학업 성적을 가진 학생들에 비해 낮은 학업 성적을 가진 학생들의 부모님과의 대화 비율이 비교적 낮은 것(상 48.8%, 중 45.4%)하 37.2%)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경향성은 또 다른 배경 변인인 부모학력에서도 관찰되는데, 친구들과, 학교 선생님, 온라인 유저에서 나타난 집단 간의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은 반면, 부모의 학력이 저학력일수록 부모님과의 대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대학원졸 51.9%) 대졸 45.6%)고졸 40.7%) 나타났다. 정치성향의 경우, 학교 선생님과 대화를 나누는 비율에서는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친구들과(보수 41.6%, 진보 41.6%) 중도 29.1%)이나 온라인 유저(보수 22.0%, 진보 19.9%)중도 11.1%)와 대화를

나누는 비율에서는 중도 성향의 집단이 여타 집단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관찰되었다. 부모님과 대화를 나누는 비율은 진보 성향 집단이 보수 성향 집단이나 중도 성향 집단에 비해 두드러지게 높은 수준(진보 61.6%>보수 45.2%, 중도 44.2%)을 보고 하였다.

표 V-18. 정치적 견해 형성에 영향을 미친 요인_전체

(단위 : %, 평균)

요인	사례수	미치지 않는다	보통 이다	미친다	계	평균	표준 편차
친구들	2,807	57.6	23.1	19.3	100.0	2.35	1.20
부모님	2,807	35.6	26.5	37.9	100.0	2.98	1.29
학교 선생님	2,802	62.9	23.4	13.7	100.0	2.15	1.13
온라인 유저	2,785	64.3	21.1	14.7	100.0	2.12	1.17
언론매체	2,799	28.4	28.3	43.3	100.0	3.15	1.26
정치 관련 수업 혹은 프로그램	2,806	47.7	29.8	22.5	100.0	2.54	1.21
관련 서적 등 독서	2,807	55.3	26.0	18.7	100.0	2.37	1.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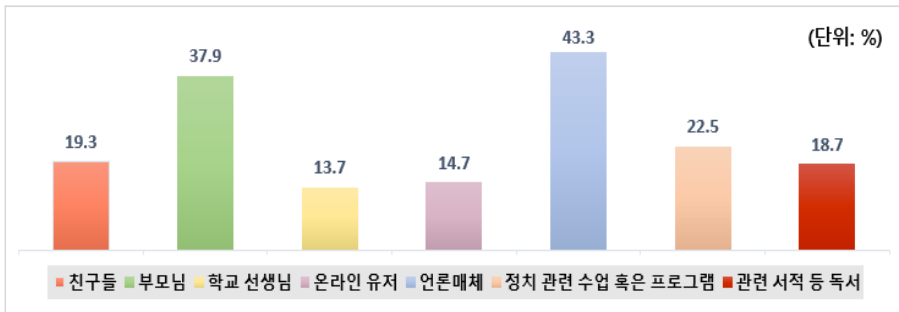


그림 V-9. 정치적 견해 형성에 영향을 미친 정도(전체)

〈표 V-18〉과 [그림 V-9]를 보면 각 요인들이 청소년들의 정치적 견해 형성에 미치는 영향의 비율은 다양했다. 청소년들의 가장 높은 비율로 보고한 요인은 언론매체(43.3%, $M=3.15$)였으며, 부모님이 자신의 정치적 견해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한 비율이 37.9% ($M=2.98$)로 그 뒤를 따랐다. 그 다음으로는 정치 관련 수업 혹은 프로그램(22.5%, $M=2.54$), 친구들(19.3%, $M=2.35$), 관련 서적 등 독서(18.7%, $M=2.37$) 순으로 높은 비율이 관찰되었다. 온라인 유저(14.7%, $M=2.12$)와 학교 선생님(13.7%, $M=2.15$)의 비율과 평균값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들의 정치적 견해 형성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표 V-19. 정치적 견해 형성에 영향을 미친 요인_변인 수준 별

(단위 : %)

배경 변인 수준	친구들				부모님				학교 선생님				온라인 유저													
	미치지 않는다	보통이다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보통이다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보통이다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보통이다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보통이다	미친다											
	성별	남학생	57.0	24.4	18.6	41.7	25.4	32.9	66.5	21.5	11.9	67.3	19.1	13.6	여학생	58.3	21.8	20.0	29.0	43.3	59.1	25.4	15.6	60.9	23.2	15.8
학교급	중학교	57.4	24.5	18.1	33.3	27.5	39.1	60.0	25.5	14.5	66.3	19.9	13.9	고등학교	57.8	21.7	20.5	37.9	25.4	36.7	21.3	12.9	62.3	22.2	15.4	
경제적 수준	상	56.2	23.3	20.5	31.3	26.8	41.9	60.7	23.3	16.0	64.3	19.9	15.8	중	60.0	23.4	16.6	38.8	27.4	33.8	22.8	11.2	66.0	21.7	12.3	
	하	57.0	21.5	21.4	42.9	20.2	36.9	64.3	21.1	14.5	55.7	24.8	19.5	상	58.5	20.8	20.7	29.0	25.4	45.6	17.5	15.5	65.6	17.0	17.4	
	중	55.9	26.3	17.8	34.7	27.8	37.6	59.1	26.9	13.9	63.0	22.8	14.2	하	60.1	20.8	19.1	43.4	25.3	31.3	21.8	12.1	64.3	22.7	13.1	
학업 성적	보수	54.0	24.7	21.3	40.5	21.3	38.2	70.9	15.7	13.3	59.2	17.2	23.7	중도	56.9	24.7	18.4	34.4	27.5	38.1	61.2	25.0	13.9	62.4	22.9	14.7
	진보	54.9	18.2	26.9	26.8	22.8	50.3	63.5	18.4	18.1	62.7	17.2	20.1	고졸	56.3	23.9	19.8	39.7	26.9	33.4	63.4	21.9	14.7	61.9	27.2	10.9
	대졸	58.9	21.9	19.2	34.2	26.1	39.8	63.7	22.9	13.4	64.3	20.0	15.7	대학원졸	56.6	23.2	20.2	26.1	23.4	50.6	65.6	21.1	13.3	65.2	13.8	21.0
절모르겠음	58.1	26.3	15.6	44.4	28.9	26.7	61.2	24.6	14.2	66.2	22.4	11.4														

표 V-19. 정치적 견해 형성에 영향을 미친 요인_변인 수준 별(표 계속)

(단위 : %)

배경 변인 수준	언론매체			정치 관련 수업 혹은 프로그램			관련 서적 등 독서			
	미치지 않는다	보통이다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보통이다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보통이다	미친다	
성별	남학생	33.2	27.0	39.8	53.8	26.7	19.5	60.2	23.8	15.9
	여학생	23.2	29.6	47.2	41.1	33.1	25.7	50.0	28.4	21.7
학교급	중학교	31.1	28.2	40.7	48.6	28.8	22.6	56.0	25.9	18.1
	고등학교	25.7	28.4	46.0	46.8	30.8	22.5	54.6	26.1	19.3
경제적 수준	상	26.9	28.0	45.1	47.7	27.8	24.5	54.1	25.2	20.7
	중	30.3	30.2	39.5	47.8	31.1	21.1	55.7	27.2	17.1
	하	28.1	26.2	45.7	46.7	32.9	20.5	54.5	27.7	17.8
학업 성적	상	23.0	24.7	52.3	46.1	27.2	26.6	50.7	22.9	26.4
	중	26.3	31.7	42.0	45.0	32.1	22.9	52.3	29.8	17.9
	하	36.5	27.8	35.7	53.0	28.5	18.4	62.3	24.4	13.4
정치 성향	보수	29.9	22.9	47.3	55.7	18.1	26.2	53.5	20.8	25.7
	중도	26.6	30.8	42.6	45.7	32.1	22.2	52.7	29.1	18.2
	진보	22.1	22.4	55.4	44.3	26.5	29.2	49.6	19.8	30.6
부모 학력	고졸	30.3	31.0	38.8	46.9	31.4	21.7	55.5	28.9	15.6
	대졸	26.9	27.3	45.9	47.0	28.8	24.2	53.7	25.4	20.9
	대학원졸	23.0	23.5	53.5	48.0	27.9	24.2	53.3	23.9	22.7
잘모르겠음	35.2	34.8	30.0	51.1	32.6	16.4	59.4	27.9	1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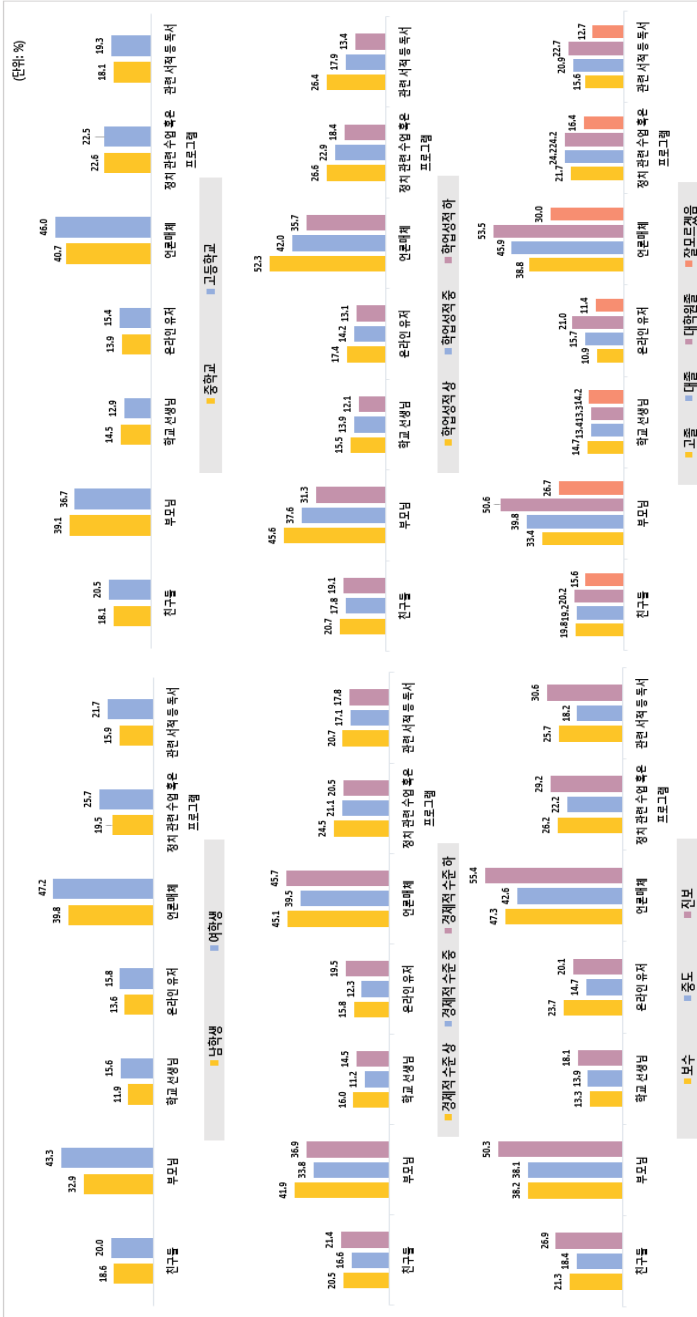


그림 V-10. 정치적 견해 형성에 영향을 미친 정도(변인 수준 별)

〈표 V-19〉과 〈그림 V-10〉에서 대부분의 요인에 대해, 각 요인이 정치적 견해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적 높게 평가한 집단은 여학생들이었다. 특히 부모님(여학생 43.3%)남학생 32.9%), 언론매체(여학생 47.2%)남학생 39.8%), 정치 관련 수업 혹은 프로그램(여학생 25.7%)남학생 19.5%), 관련 서적 등 독서(여학생 21.7%)남학생 15.9%) 요인에서 그 차이가 두드러졌다. 학교급 수준에서 5% 이상의 응답 비율의 차이를 보인 요인은 언론매체(고등학교 46.0%)중학교 40.7%)가 유일했다.

경제적 수준의 경우, 상·하 수준 집단에 비해 중간 수준 집단이 대부분의 요인의 영향을 낮게 평가한 것으로 관찰되었으며, 정치 관련 수업 혹은 프로그램(상 24.5%)중 21.1%, 하 20.5%)과 관련 서적 등 독서(상 20.7%)중 17.1%, 하 17.8%)의 영향에 대한 평가는 중간 경제 수준 집단과 낮은 경제 수준 집단의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적에 따른 차이는 대부분의 요인에서 유사한 경향성을 띠는데, 친구들(상 20.7%, 중 17.8%, 하 19.1%)을 제외한 나머지 요인에서 학업 성적이 높을수록 각 요인의 영향을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특히 부모님(상 45.6%)중 37.6%)하 31.3%), 언론매체(상 52.3%, 중 42.0%)하 35.7%), 관련 서적 등 독서(상 26.4%, 중 17.9%)하 13.4%)에 대한 응답에서 이 같은 경향성이 크게 두드러졌다.

정치 성향의 경우, 진보 성향의 집단이 여타 성향의 집단에 비해 대부분의 요인을 높게 평가하였는데, 온라인 유저의 영향에 대한 평가는 오히려 보수 성향 집단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보수 23.7%)진보 20.1%)중도 14.7%). 부모학력에 따라 영향력에 대한 평가가 달라진 요인은 부모님(대학원졸 50.6%)대졸 39.8%)고졸 33.4%), 온라인 유저(대학원졸 21.0%)대졸 15.7%)고졸 10.9%), 언론매체(대학원졸 53.5%)대졸 45.9%)고졸 38.8%), 관련 서적 등 독서(대학원졸 22.7%, 중 20.9%)하 15.6%)였으며,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각 요인의 영향력을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표 V-20. 정치관련 정보 획득을 위한 미디어 이용_전체

(단위 : %, 평균)

주요 미디어	사례수	이용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이용한다	계	평균	표준편차
TV 뉴스	2,807	27.3	21.1	51.6	100.0	3.31	1.27
라디오 뉴스	2,806	75.4	16.1	8.6	100.0	1.89	1.03
소셜미디어	2,804	25.5	20.1	54.3	100.0	3.41	1.37
인터넷신문	2,805	54.9	21.5	23.6	100.0	2.43	1.29
포털뉴스	2,801	30.7	25.0	44.3	100.0	3.12	1.33
정치팟캐스트	2,804	79.9	16.0	4.1	100.0	1.70	0.92
Youtube	2,806	25.6	20.4	54.0	100.0	3.44	1.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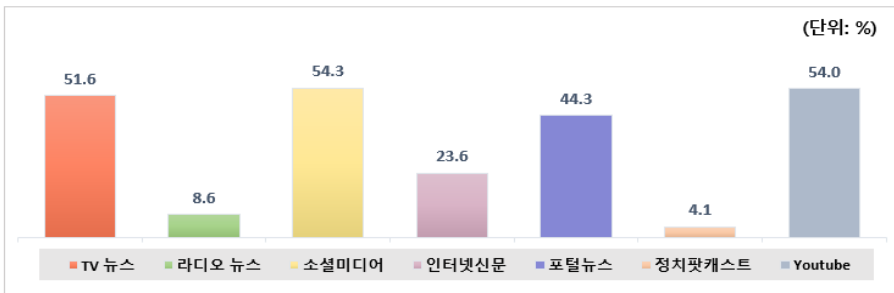


그림 V-11. 정치관련 정보 획득을 위한 미디어 이용 정도(전체)

청소년들이 정치관련 정보 획득을 위해 이용하는 미디어 중 높은 비율로 보고된 것은 소셜미디어(54.3%, $M=3.41$), Youtube(54.0%, $M=3.44$), TV 뉴스(51.6%, $M=3.31$)로, 청소년들의 반수 이상이 정치관련 정보 획득을 위해 해당 미디어 매체들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털뉴스(44.3%, $M=3.12$) 또한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미디어로 나타났으나, 과반의 비율을 넘지 못했다. 인터넷신문(23.6%, $M=2.43$), 라디오 뉴스(8.6%, $M=1.89$), 정치팟캐스트(4.1%, $M=1.70$) 순으로 포털뉴스의 뒤를 따랐으나, 라디오 뉴스와 정치팟캐스트의 이용률은 여타 미디어들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표 V-21. 정치관련 정보 획득을 위한 미디어 이용_변인 수준 별(표 계속)

(단위 : %)

배경 변인 수준	포털뉴스				정치팟캐스트				Youtube		
	이용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이용한다	이용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이용한다	이용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이용한다		
	성별	남학생 37.3	24.8	37.9	79.2	16.4	4.3	25.5	19.2	55.3	
	여학생 23.7	25.2	51.1	80.6	15.4	3.9	25.8	21.7	52.6		
학교급	중학교 34.9	26.2	38.9	81.2	15.3	3.5	26.3	19.0	54.7		
	고등학교 26.7	23.8	49.5	78.6	16.7	4.8	25.0	21.7	53.2		
경제적 수준	상	28.1	24.4	47.5	79.0	16.2	4.7	24.4	18.1	57.5	
	중	32.7	25.7	41.6	79.7	16.3	4.0	27.4	23.0	49.6	
	하	35.0	21.4	43.5	82.1	14.5	3.4	23.0	22.7	54.3	
학업 성적	상	26.2	24.6	49.2	78.7	15.3	5.9	25.2	19.4	55.4	
	중	28.6	24.0	47.4	79.4	16.8	3.8	24.0	21.6	54.4	
	하	38.4	25.6	36.0	80.9	15.6	3.5	28.3	20.3	51.4	
정치 성향	보수	32.8	20.4	46.8	78.9	14.2	6.9	29.4	13.1	57.5	
	중도	28.6	25.6	45.8	78.3	17.8	3.9	23.3	21.4	55.3	
	진보	25.1	19.9	55.0	75.3	14.8	9.9	24.0	15.5	60.5	
부모 학력	고졸	32.2	26.3	41.5	79.4	18.0	2.6	26.5	20.6	52.9	
	대졸	29.4	23.8	46.8	81.5	13.6	4.9	24.8	21.4	53.8	
	대학원졸	24.5	22.9	52.6	76.4	18.9	4.7	22.9	20.3	56.8	
잘모르겠음	37.7	27.8	34.5	76.1	20.6	3.3	28.1	18.6	5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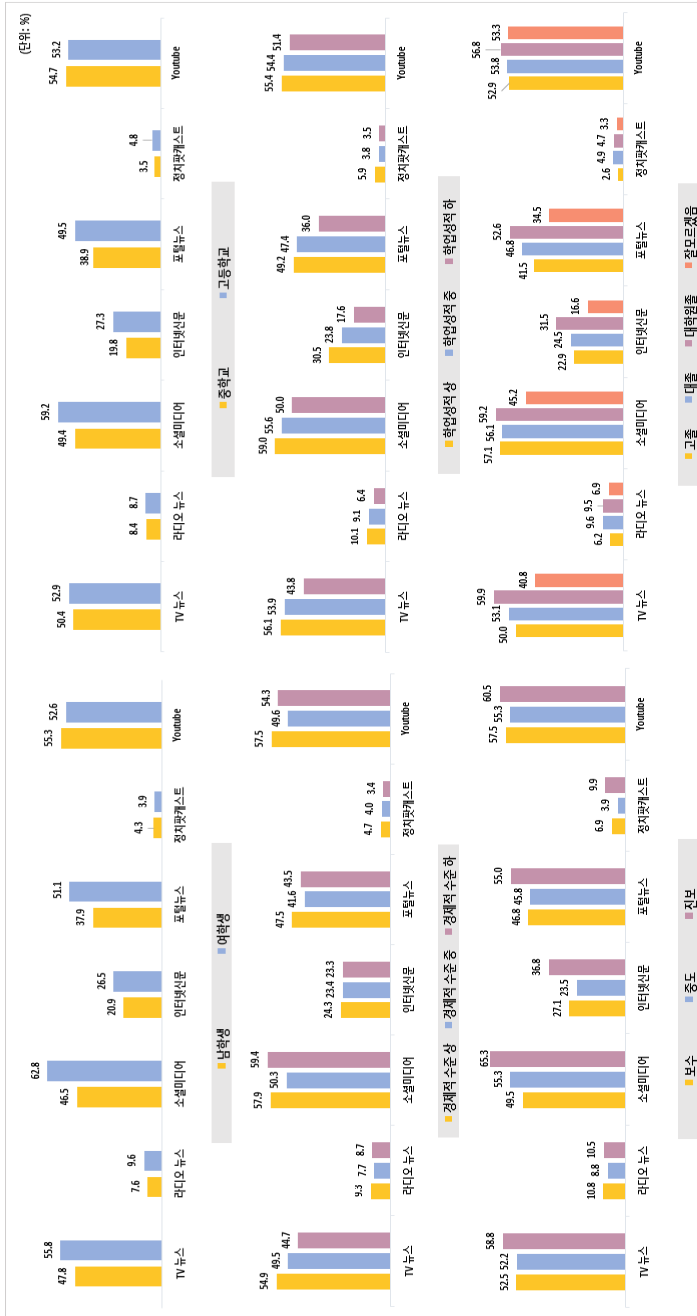


그림 V-12. 정치관련 정보 획득을 위한 미디어 이용 정도(변인 수준 별)

성별 특성에 따른 미디어 이용률의 차이는 TV 뉴스(여학생 55.8%)남학생 47.8%), 소셜미디어(여학생 62.8%)남학생 46.5%), 인터넷 신문(여학생 26.5%)남학생 20.9%), 포털뉴스(여학생 51.1%)남학생 37.9%)에서 나타났으며, 특히 여학생들의 소셜미디어와 포털뉴스 이용률이 남학생들에 비해 크게 높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학교급별 차이는 소셜미디어(고등학교 59.2%)중학교 49.4%), 인터넷 신문(고등학교 27.3%)중학교 19.8%), 포털뉴스(고등학교 49.5%)중학교 38.9%) 이용률에서 관찰되었는데, 고등학생들의 해당 미디어 이용률이 중학생들에 비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적 수준의 경우, 대부분의 미디어에서 상 수준의 집단이 가장 높은 이용률을 보고하였다. 다만 소셜미디어의 이용률은 하 수준의 집단이 근소하게나마 가장 높았으며(하 59.4%)상 57.9%)중 50.3%), 대부분의 미디어 이용률이 중간 수준의 집단에서 가장 낮았으나, TV 뉴스 이용률은 중간 수준의 집단이 하 수준 집단에 비해 높은 것으로 관찰되었다(상 54.9%)중 49.5%)하 44.7%). 학업성적에 따른 이용률 차이는 TV 뉴스(상 56.1%,중 53.9%)하 43.8%), 소셜미디어(상 59.0%, 중 55.6%)하 50.0%), 인터넷 신문(상 30.5%)중 23.8%)하 17.6%), 포털뉴스(상 49.2%, 중 47.4%)하 36.0%)에서 나타났는데, 학업성적이 하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낮은 이용률이 두드러지는 경향성을 보였다.

정치성향의 경우, 진보 성향 집단의 미디어 이용률이 모든 미디어에서 가장 높게 관찰되었다. 특히 소셜미디어(진보 65.3%)중도 55.3%)보수 49.5%), 인터넷 신문(진보 36.8%)보수 27.1%)중도 23.5%), 포털뉴스(진보 55.0%)보수 46.8%, 중도 45.8%)부분에서 진보 성향 집단의 이용률이 여타 성향의 집단보다 크게 높았다. 부모학력에 따른 미디어 이용률 차이 또한 관찰되었는데, 대부분의 미디어에서 부모가 고학력인 집단의 이용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TV 뉴스(대학원졸 59.9%)대졸 53.1%)고졸 50.0%), 인터넷신문(대학원졸 31.5%)대졸 24.5%)고졸 22.9%), 포털뉴스(대학원졸 52.6%)대졸 46.8%)고졸 41.5%)에서 그러한 경향성이 두드러졌다.

표 V-22. 소셜미디어를 통한 정치경험_전체

(단위 : %, 평균)

정치경험	사례수	하지 않았다	보통 이다	했다	계	평균	표준 편차
정치문제나 이슈에 대한 게시글 읽기	2,791	44.7	20.1	35.3	100.0	2.78	1.34
정치문제나 이슈에 대한 자신의 견해나 의견 달기	2,806	82.0	10.8	7.2	100.0	1.65	1.02
정치문제나 이슈에 대한 타인의 글을 공유하거나 퍼나르기	2,805	72.1	14.3	13.6	100.0	1.91	1.20
정치문제나 이슈에 대한 온라인청원 이나 서명참여	2,807	64.1	13.1	22.8	100.0	2.17	1.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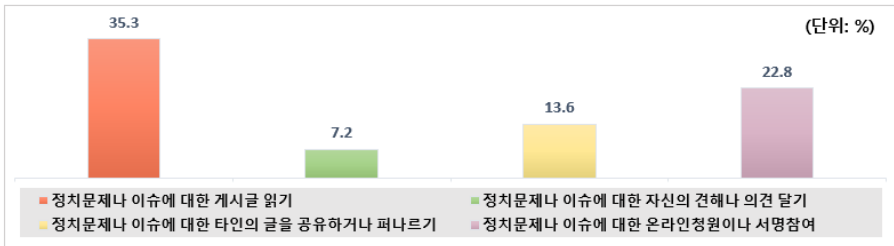


그림 V-13. 소셜미디어를 통한 정치경험 정도(전체)

소셜미디어를 통한 정치 경험 중 가장 높은 비율로 보고된 것은 정치문제나 이슈에 대한 게시글 읽기(35.3%, $M=2.78$)였다. 정치문제나 이슈에 대한 온라인 청원이나 서명참여(22.8%, $M=2.17$)의 경험이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정치문제나 이슈에 대한 타인의 글 공유 또는 퍼나르기(13.6%, $M=1.91$)와 정치 문제나 이슈에 대한 자신의 견해나 의견을 단 경험(7.2%, $M=1.65$)이 그 뒤를 이었으나, 10% 내외의 비율로 보고되어 청소년들이 거의 경험하지 않는 소셜미디어 정치활동으로 나타났다.

표 V-23. 소셜미디어를 통한 정치경험_변인 수준 별

(단위 : %)

배경 변인 수준	정치문제나 이슈에 대한 게시글 읽기		정치문제나 이슈에 대한 자신의 견해나 의견 달기		정치문제나 이슈에 대한 타인의 글을 공유하거나 퍼나르기		정치문제나 이슈에 대한 온라인청원이나 서명참여						
	하지 않았다	보통 이다	하지 않았다	보통 이다	하지 않았다	보통 이다	하지 않았다	보통 이다					
성별	남학생	45.9	20.3	33.8	79.4	12.2	8.4	74.7	13.9	11.4	69.4	13.7	16.9
	여학생	43.3	19.8	36.9	84.8	9.3	5.8	69.2	14.8	15.9	58.4	12.4	29.2
학교급	중학교	50.1	18.0	31.9	82.9	9.7	7.4	72.5	13.1	14.4	72.6	10.5	16.9
	고등학교	39.4	22.1	38.5	81.1	11.9	7.0	71.7	15.6	12.7	55.7	15.6	28.7
경제적 수준	상	42.8	19.5	37.6	81.4	11.1	7.6	72.9	12.4	14.8	63.9	14.1	22.0
	중	46.7	20.9	32.4	82.6	10.8	6.6	73.1	15.0	11.9	65.0	11.9	23.1
	하	42.0	20.0	38.0	80.1	11.0	8.9	66.0	16.0	17.9	57.3	13.0	29.7
학업 성적	상	36.3	19.8	43.9	79.7	9.8	10.5	72.2	10.7	17.1	60.8	14.0	25.2
	중	45.5	19.2	35.3	82.3	11.4	6.3	72.7	15.3	12.0	62.4	13.3	24.3
	하	50.3	21.8	27.9	82.8	11.3	5.9	71.7	14.5	13.9	68.1	11.8	20.1
정치 성향	보수	43.6	14.8	41.6	76.1	10.8	13.1	68.6	7.2	24.1	61.4	8.6	30.0
	중도	42.2	21.8	36.0	81.5	11.9	6.6	71.7	16.0	12.3	62.5	15.0	22.5
	진보	30.3	14.9	54.8	71.8	9.7	18.5	60.3	14.3	25.4	52.1	10.6	37.3
부모 학력	고졸	44.0	22.6	33.4	81.8	11.8	6.4	71.2	12.9	15.9	61.9	12.1	25.9
	대졸	44.7	19.0	36.3	83.5	9.7	6.8	73.0	12.9	14.1	63.1	13.1	23.8
	대학원졸	36.7	16.6	46.7	82.4	7.1	10.5	76.2	10.2	13.6	62.7	11.1	26.2
참모르겠음	49.4	23.5	27.1	75.3	16.9	7.8	68.3	21.8	9.9	69.2	15.7	1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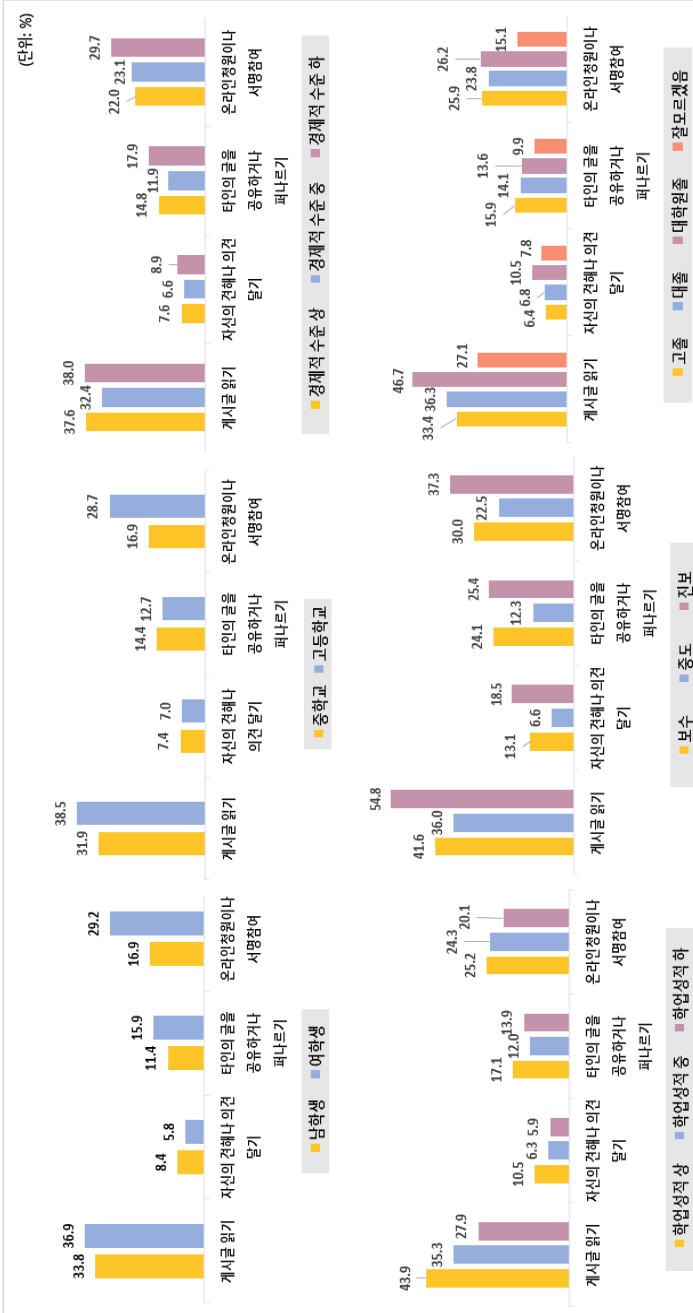


그림 V-14. 소셜미디어를 통한 정치경험 정도(변인 수준 별)

소셜미디어 정치경험의 유무가 성별 특성에 따라 두드러진 차이를 보인 것은 정치문제나 이슈에 대한 온라인청원 또는 서명참여 경험(여학생 29.2%)남학생 16.9%)이었으며, 여학생들의 경험률이 남학생에 비해 크게 높았다. 여타 정치 경험들 또한 성별에 따라 서로 다른 비율을 보고하였으나 그 차이가 미미하였다.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정치문제나 이슈에 대한 게시글 읽기(고등학교 38.5%)중학교 31.9%), 정치문제나 이슈에 대한 온라인청원이나 서명참여(고등학교 28.7%)중학교 16.9%)에서 나타났는데, 중학생들보다 고등학생들이 해당 활동들에 대한 더 높은 비율의 경험을 보고하였다. 경제적 수준에 따른 경험율의 차이도 일부 나타났는데, 정치문제나 이슈에 대한 게시글 읽기(상 37.6%, 하 38.0%)중 32.4%) 경험에 있어 중간 수준의 집단이 다소 낮은 경험률을 보고하였고, 정치문제나 이슈에 대한 타인의 글을 공유하거나 퍼나른(하 17.9%)상 14.8%)중 11.9%) 경험과 정치문제나 이슈에 대한 온라인청원이나 서명에 참여(하 29.7%)중 23.1%, 상 22.0%) 경험에서 비교적 높은 경험률이 하 수준 집단에서 관찰되었다.

학업성적별 경험률의 차이는 대부분의 경험에 걸쳐 공통된 양상을 보였는데, 학업성적이 높은 집단일수록 소셜미디어를 통한 정치활동을 경험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치문제나 이슈에 대한 타인의 글을 공유하거나 퍼나른(상 17.1%)하 13.9%)중 12.0%) 경험의 경우, 학업성적이 하 수준인 집단의 경험률이 중간 수준의 집단보다 높았다.

정치성향에 따른 경험률의 차이 또한 비교적 일관적인 경향성을 보이는데, 중도 성향 집단의 경험률이 다른 두 집단의 경험률보다 대부분 낮게 보고되었으며, 진보 성향 집단의 경험률이 가장 높게 관찰되었다. 특히 정치문제나 이슈에 대한 게시글 읽기(진보 54.8%)보수 41.6%) 중도 36.0%)를 경험한 진보 성향 집단의 비율은 다른 두 집단의 비율을 높게 상회했으며, 정치문제나 이슈에 대한 온라인청원이나 서명참여(진보 37.3%)보수 30.0%)중도 22.5%) 경험의 비율 차이 또한 두드러졌다. 부모의 학력 수준별 경험 비율의 차이는 대부분 나타나지 않았으나, 정치

문제나 이슈에 대한 게시글 읽기(대학원졸 46.7%)대졸 36.3%, 고졸 33.4%)에서는 대학원졸 부모 집단 간과 여타 집단 간의 큰 차이를 보였다.

표 V-24. 선거 관심도_전체

(단위 : %, 평균)

주요 선거	사례수	없다	보통 이다	있다	계	평균	표준 편차
지방 선거1(광역시/도 단체장)	2,804	53.9	25.5	20.7	100.0	2.45	1.18
지방 선거2(시, 군, 구 기초자치단체장)	2,801	53.7	27.4	18.9	100.0	2.43	1.16
국회의원 선거	2,803	42.1	25.8	32.1	100.0	2.78	1.26
교육감 선거	2,801	50.5	26.4	23.1	100.0	2.55	1.23
대통령 선거	2,804	17.5	18.3	64.1	100.0	3.72	1.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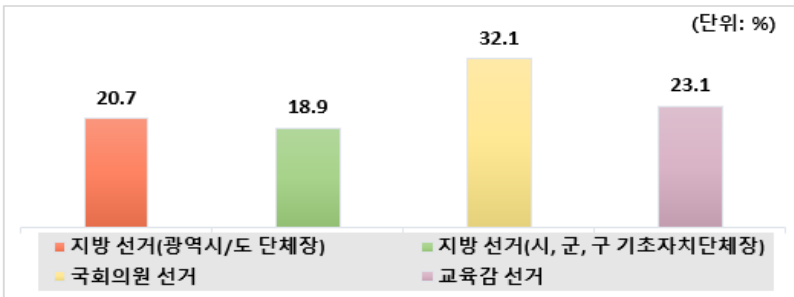


그림 V-15. 선거 관심도 정도(전체)

대통령 선거(64.1%, $M=3.72$)에 대한 청소년들의 관심은 여타 주요 선거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국회의원 선거(32.1%, $M=2.78$)에 대한 관심이 대통령 선거의 뒤를 따랐으나, 관심 비율이 대통령 선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준이었다. 청소년들의 교육감 선거에 대한 관심도(23.1%, $M=2.55$)는 국회의원 선거에 비해 낮았지만, 광역시/도 단체장 지방 선거나(20.7%, $M=2.45$) 시, 군, 구 기초자치단체장 지방 선거(18.9%, $M=2.43$)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25. 선거 관심도_변인 수준 별

(단위 : %)

배경 변인 수준	지방 선거1 (광역시/도 단체장)				지방 선거2 (시, 군, 구 기초자치단체장)				국회의원 선거				교육감 선거				대통령 선거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보통	이대	보통	이대	보통	이대	보통	이대	보통	이대	보통	이대	보통	이대	보통	이대	보통	이대	보통	이대
성별	남학생	56.3	24.4	19.3	56.1	26.8	17.1	44.7	24.4	30.9	54.9	25.0	20.1	20.8	19.3	59.9				
	여학생	51.2	26.6	22.2	51.1	28.1	20.8	39.3	27.3	33.4	45.7	27.9	26.5	14.0	17.2	68.8				
학교급	중학교	55.4	24.4	20.3	54.9	26.0	19.1	42.0	24.6	33.3	52.4	27.6	20.0	17.4	16.5	66.1				
	고등학교	52.4	26.5	21.1	52.5	28.8	18.7	42.2	26.9	30.9	48.6	25.2	26.3	17.7	20.1	62.2				
경제적 수준	상	52.2	26.6	21.1	51.4	28.2	20.4	38.1	27.7	34.3	48.1	26.9	25.0	16.3	16.0	67.6				
	중	55.1	25.4	19.5	56.0	26.1	17.9	44.9	25.5	29.6	52.7	26.2	21.0	18.8	21.2	60.1				
	하	57.0	24.9	18.1	56.3	26.4	17.3	49.1	20.4	30.5	52.0	23.5	24.5	18.3	19.7	62.0				
학업 성적	상	48.5	27.0	24.5	47.9	26.7	25.4	33.8	25.8	40.4	42.9	26.7	30.4	11.8	14.6	73.7				
	중	52.0	27.1	20.9	51.6	29.0	19.4	41.1	27.7	31.2	49.0	28.0	23.0	16.6	19.2	64.2				
	하	61.8	23.2	15.0	62.6	24.8	12.5	51.5	23.6	25.0	59.7	23.1	17.2	24.1	21.2	54.7				
정치 성향	보수	53.8	16.8	29.4	51.9	22.4	25.7	42.6	18.1	39.3	50.7	23.2	26.0	20.2	13.8	66.0				
	중도	51.9	29.0	19.1	51.8	30.0	18.2	39.3	28.4	32.3	49.0	28.2	22.8	16.2	19.1	64.8				
	진보	47.0	22.7	30.3	45.4	24.6	30.0	33.0	22.9	44.0	38.7	21.5	39.8	12.1	10.9	77.0				
부모 학력	고졸	57.5	24.4	18.1	58.1	25.9	16.0	46.4	22.7	30.8	54.9	26.1	19.0	18.9	20.1	61.0				
	대졸	52.7	25.9	21.4	52.3	27.4	20.2	40.0	27.0	32.9	48.5	27.0	24.4	14.7	17.4	67.9				
	대학원졸	47.9	23.7	28.5	46.9	26.9	26.1	37.2	22.5	40.2	44.7	22.4	33.0	12.7	13.1	74.3				
질모르겠음	59.5	29.1	11.4	60.0	27.5	12.4	48.5	29.4	22.0	57.4	25.7	16.8	29.9	24.3	4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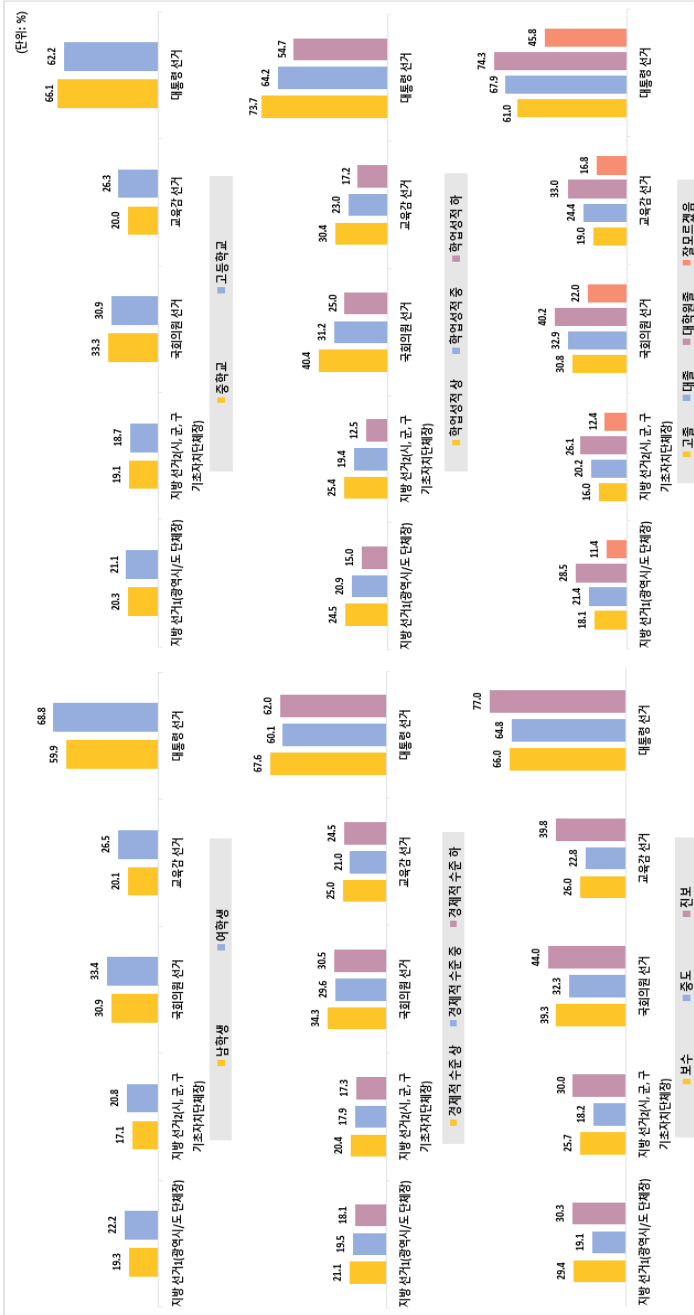


그림 V-16. 선거 관심도 정도(변인 수준 별)

〈표 V-25〉와 〈그림 V-16〉을 보면, 일반적으로 남학생들보다 여학생들이 선거에 더 큰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여타 주요 선거에서는 그 차이가 크지 않은데 반해, 교육감 선거(여학생 26.5% 남학생 20.1%)와 대통령 선거(여학생 68.8% 남학생 59.9%)에서 여학생들의 관심이 남학생들에 비해 비교적 뚜렷하게 높았다.

학교급에 따른 차이 또한 교육감 선거와 대통령 선거에서 두드러지는데, 교육감 선거에 대해 고등학생들이(26.3%)중학생 20.0%) 더 큰 관심을 보인 반면, 대통령 선거에는 오히려 중학생들이(66.1%)고등학생 62.2%) 더 큰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경제적 수준에 따라 각 선거에 관심을 갖는 정도는 대부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대통령 선거의 경우 높은 경제 수준의 학생들이 중간 그리고 낮은 경제 수준의 학생들보다 더 높은 관심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상 67.6%)하 62.0%, 중 60.1%).

선거에 대한 관심의 차이는 학업성과 부모학력 변인에서 유사한 양상을 띠는데, 학생의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각 선거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보였으며, 부모의 학력이 높은 수준일수록 각 선거에 대한 관심 역시 높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정치 성향 또한 일정한 경향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진보 성향 집단의 관심도가 가장 높게, 중도 성향 집단의 관심도 가장 낮게 보고되는 양상이 모든 선거에 걸쳐 공통적으로 관찰되었다. 특히 교육감 선거(진보 39.8% 보수 26.0%)중도 22.8%)와 대통령 선거(진보 77.0% 보수 66.0%)중도 64.8%)에서 보고된 진보 성향 집단의 관심도는 다른 두 집단의 관심도를 10% 이상 크게 상회하였다.

표 V-26. 투표 의향_전체

(단위 : %, 평균)

주요 선거	사례수	없다	보통이다	있다	계	평균	표준편차
지방 선거1(광역시/도 단체장)	2,804	26.7	24.6	48.7	100.0	3.36	1.33
지방 선거2(시, 군, 구 기초자치단체장)	2,805	26.7	25.2	48.1	100.0	3.35	1.33
국회의원 선거	2,803	18.6	21.4	60.0	100.0	3.68	1.30
교육감 선거	2,804	20.8	23.1	56.1	100.0	3.59	1.33
대통령 선거	2,806	9.5	12.3	78.2	100.0	4.21	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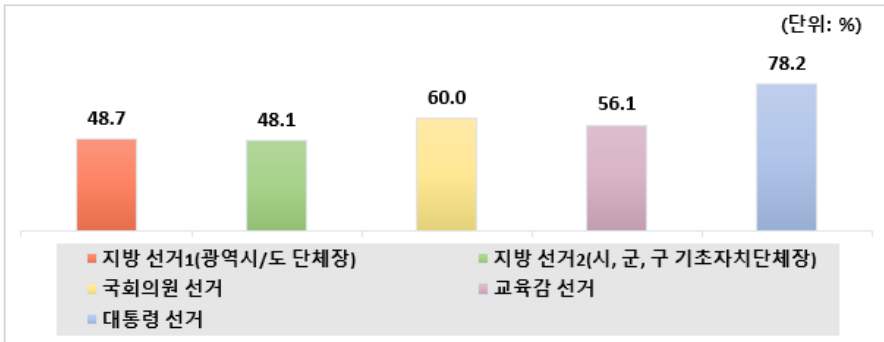


그림 V-17. 투표 의향 정도(전체)

〈표 V-26〉과 [그림 V-17]에서 청소년들의 투표 의향이 가장 높은 선거는 대통령 선거(78.2%, $M=4.21$)였으며, 국회의원 선거(60.0%, $M=3.68$)와 교육감 선거(56.1%, $M=3.59$)가 각각 두 번째와 세 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고하였다. 광역시/도 단체장 지방 선거(48.7%, $M=3.36$)와 시, 군, 구 기초자치단체장 지방 선거(48.1%, $M=3.35$)에 대한 투표 의향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았으며, 해당 지방 선거에 대한 투표 의향을 밝힌 학생들이 과반을 넘지 않았다.

표 V-27. 투표 의향_변인 수준 별

(단위 : %)

배경 변인 수준	지방 선거1 (광역시/도 단체장)		지방 선거2 (시, 군, 구 기초자치단체장)		국회의원 선거		교육감 선거		대통령 선거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보통 이다	보통 이다	보통 이다	보통 이다	보통 이다	보통 이다	보통 이다	보통 이다	보통 이다	보통 있다						
성별	남학생	32.7	25.5	41.8	32.6	26.4	41.0	23.8	23.1	53.1	28.2	25.6	46.1	12.8	14.0	73.2
	여학생	20.2	23.7	56.0	20.3	24.0	55.8	13.0	19.6	67.4	12.7	20.3	67.0	6.0	10.5	83.5
학교급	중학교	31.0	24.5	44.5	30.7	25.4	43.9	20.5	21.7	57.8	24.2	25.8	50.1	10.3	12.8	76.9
	고등학교	22.5	24.8	52.7	22.7	25.1	52.2	16.8	21.1	62.1	17.4	20.4	62.1	8.8	11.8	79.4
경제적 수준	상	25.8	24.7	49.5	25.9	25.1	49.0	17.3	20.3	62.4	19.0	22.0	59.0	8.5	11.4	80.1
	중	26.9	25.3	47.8	27.1	26.4	46.4	19.3	23.6	57.1	21.3	23.8	54.9	10.2	13.7	76.0
	하	30.5	22.7	46.9	28.6	23.0	48.4	20.9	19.9	59.2	25.9	22.4	51.6	11.2	13.2	75.6
학업 성적	상	22.4	21.4	56.2	20.8	24.0	55.2	14.2	17.4	68.4	15.0	19.8	65.2	6.8	9.1	84.2
	중	25.0	26.0	49.0	26.1	25.5	48.4	17.6	21.4	61.0	20.0	23.0	57.0	8.7	13.3	78.0
	하	33.1	26.2	40.7	32.5	27.2	40.3	23.9	26.0	50.0	27.0	25.5	47.6	13.2	14.5	72.3
정치 성향	보수	34.2	17.3	48.6	34.7	17.7	47.7	26.0	15.2	58.8	29.5	18.6	51.8	13.5	11.7	74.9
	중도	25.0	26.3	48.7	24.9	27.7	47.3	17.2	22.8	59.9	20.1	23.7	56.2	9.2	12.3	78.6
	진보	23.7	16.5	59.8	25.4	15.0	59.6	14.2	13.4	72.4	16.8	13.6	69.6	7.9	7.9	84.3
부모 학력	고졸	29.0	24.8	46.2	29.0	26.7	44.3	22.9	21.3	55.7	26.1	23.5	50.4	10.6	14.6	74.8
	대졸	24.1	25.0	50.9	24.5	23.9	51.6	14.7	23.0	62.3	17.0	22.1	60.9	7.4	11.0	81.6
	대학원졸	21.3	16.3	62.3	21.3	20.7	58.1	15.8	14.6	69.6	15.4	15.9	68.7	6.0	7.4	86.6
질모르겠음	37.1	30.7	32.2	35.0	33.8	31.2	28.4	22.8	48.8	31.1	29.3	39.7	18.2	19.0	62.8	

<표 V-27>과 <그림 V-18>에서 성별에 따른 투표 의향을 살펴보면, 여학생들의 투표 의향이 남학생들의 투표 의향보다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남학생들에 비해 높은 여학생들의 투표 의향은 모든 선거에 걸쳐 공통적으로 관찰되었으며, 그 차이 또한 모두 10~15% 내외로 비교적 큰 폭으로 나타났다.

학교급에 따른 차이를 보면, 대부분의 선거에 대한 고등학생들의 투표 의향이 중학생들에 비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대통령 선거에 대한 투표 의향(고등학생 79.4%, 중학생 76.9%)은 두 집단 모두 높은 비율로 나타나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 반면, 교육감 선거에 대한 투표 의향(고등학생 62.1%)>중학생 50.1%)은 다른 선거들에 비해 매우 큰 폭의 차이를 보였다.

경제적 수준에 따른 투표 의향의 유의미한 차이는 교육감 선거(상 59.0%)>중 54.9%, 하 51.6%)에서만 나타났는데, 특히 경제적 수준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간의 차이가 비교적 크게 두드러졌다.

학업성적과 부모의 학력은 모든 선거에서 유사한 경향성의 집단별 차이를 보고 하였다. 학업 성적이 높은 학생일수록 또는 부모의 학력이 높은 수준에 속할수록 높은 투표의향을 나타냈는데, 이는 각 선거에 대한 모든 투표 의향에서 관찰되었으며, 특히 높은 학업 성적과 낮은 학업 성적 또는 대학원졸 부모와 고졸 부모 집단 간의 비교에서 최소 11.9%(대통령선거(상 84.2%)>하 72.3%))에서 최대 18.3%(교육감선거(대학원졸 68.7%)>고졸 50.4%))까지의 큰 차이가 나타났다.

정치 성향에 따른 투표 의향의 경우, 대부분의 선거에서 진보 성향 집단의 투표 의향이 가장 높은 것으로 관찰되었으며, 보수 성향 집단과 중도 성향 집단의 차이는 중도 성향 집단이 다소 높은 것으로 보고된 교육감 선거(진보 69.6%)>중도 56.2%)>보수 51.8%)와 대통령 선거(진보 84.3%)>중도 78.6%)>보수 74.9%)를 제외하면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표 V-28. 선거권 연령 하향(만 17세)에 대한 찬반 의견

(단위 : %)

배경 변인 수준	사례수	찬성	반대	잘 모르겠음	계	
전체	2,801	37.9	34.6	27.4	100.0	
성별	남학생	1,454	39.6	30.7	29.7	100.0
	여학생	1,347	36.2	38.9	24.9	100.0
학교급	중학교	1,391	42.2	29.8	28.0	100.0
	고등학교	1,409	33.7	39.4	26.8	100.0
경제적 수준	상	1,287	38.9	35.1	26.0	100.0
	중	1,131	35.2	34.3	30.5	100.0
	하	290	40.6	36.9	22.6	100.0
학업 성적	상	724	41.9	35.1	23.0	100.0
	중	1,194	35.9	36.5	27.6	100.0
	하	792	35.9	32.5	31.5	100.0
정치 성향	보수	200	41.6	35.4	23.1	100.0
	중도	1,691	38.3	33.6	28.1	100.0
	진보	259	50.7	32.7	16.6	100.0
부모 학력	고졸	555	35.8	35.5	28.7	100.0
	대졸	1,473	38.3	38.0	23.7	100.0
	대학원졸	289	40.8	34.5	24.7	100.0
	잘모르겠음	401	33.9	24.2	41.9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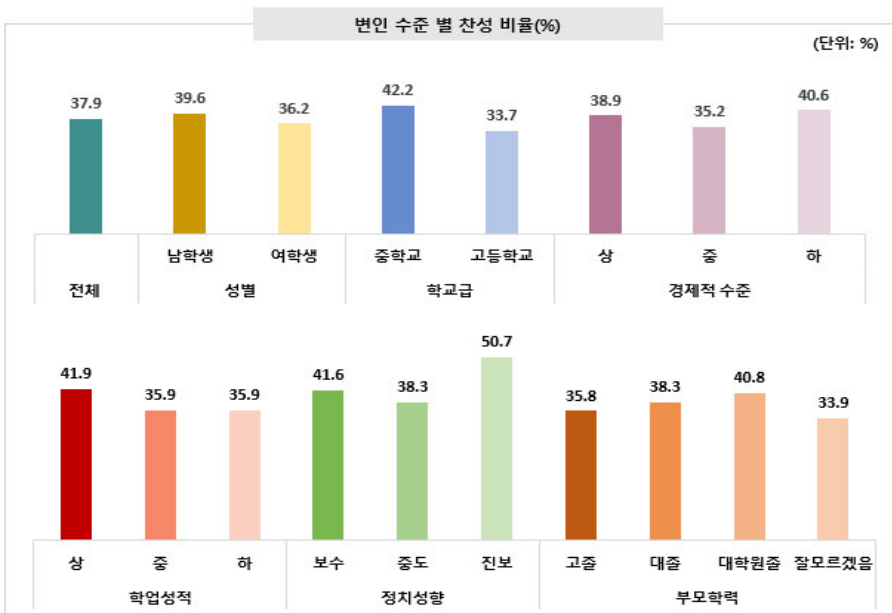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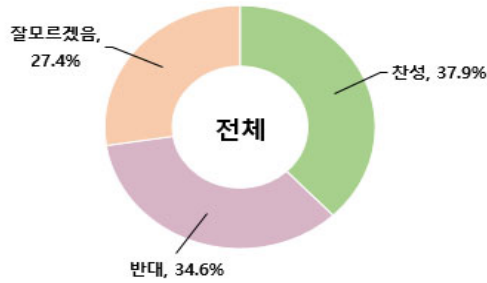


그림 V-19. 선거권 연령 하향(만 17세)에 대한 찬성 비율

〈표 V-28〉과 [그림 V-19]를 보면, 선거권 연령 하향에 대한 찬성 의견은 37.9%, 반대 의견은 34.6%로, 찬성의 비율이 미세하게나마 높게 나타났다. 성별 특성의 경우, 남학생 찬성 39.6%, 여학생 찬성 36.2%로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반대 비율에서 남녀 간의 의견 차이(여학생 38.9%)남학생 30.7%)가 비교적 두드러졌다.

학교급에 따른 의견 차이가 관찰되었는데, 고등학생의 33.7%가 선거권 연령 하향에 찬성한 반면, 중학생의 42.2%가 선거권 연령 하향에 찬성하여 고등학생에 비해 8.5% 높은 찬성 비율을 보였다. 경제적 수준이 높거나(38.9%) 낮을 경우(40.6%), 중간 수준(35.2%) 학생에 비해 선거권 연령 하향에 찬성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학업 성적이 높은(41.9%) 학생이 학업 성적이 중간 수준(35.9%)이거나 낮은(35.9%) 학생보다 찬성 비율이 높았다.

또한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선거권 연령 하향에 찬성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성(대학원졸 40.8% > 대졸 38.3% > 고졸 35.8%) 관찰되었다. 정치 성향에 따른 차이는 비교적 두드러졌는데, 진보 성향 집단(50.7%)의 찬성 비율이 보수(41.6%) 또는 중도 성향 집단(38.3%)보다 9.1~12.4%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29. 교육감 선거권 연령 하향(만 16세)에 대한 찬반 의견

(단위 : %)

배경 변인 수준		사례수	찬성	반대	잘 모르겠음	계
전체		2,801	40.1	36.6	23.3	100.0
성별	남학생	1,454	39.4	34.7	25.9	100.0
	여학생	1,347	40.8	38.7	20.5	100.0
학교급	중학교	1,392	41.9	32.0	26.1	100.0
	고등학교	1,409	38.3	41.2	20.5	100.0
경제적 수준	상	1,287	41.4	37.4	21.2	100.0
	중	1,131	37.5	35.8	26.7	100.0
	하	291	42.5	35.8	21.7	100.0
학업 성적	상	726	48.5	35.2	16.3	100.0
	중	1,194	37.3	36.4	26.3	100.0
	하	791	35.8	37.9	26.3	100.0
정치 성향	보수	200	43.1	36.9	19.9	100.0
	중도	1,691	41.6	34.3	24.1	100.0
	진보	259	51.3	35.3	13.3	100.0

배경 변인 수준		사례수	찬성	반대	잘 모르겠음	계
부모 학력	고졸	555	36.2	39.4	24.4	100.0
	대졸	1,473	40.5	38.2	21.3	100.0
	대학원졸	289	51.0	34.0	15.0	100.0
	잘모르겠음	401	33.9	29.4	36.7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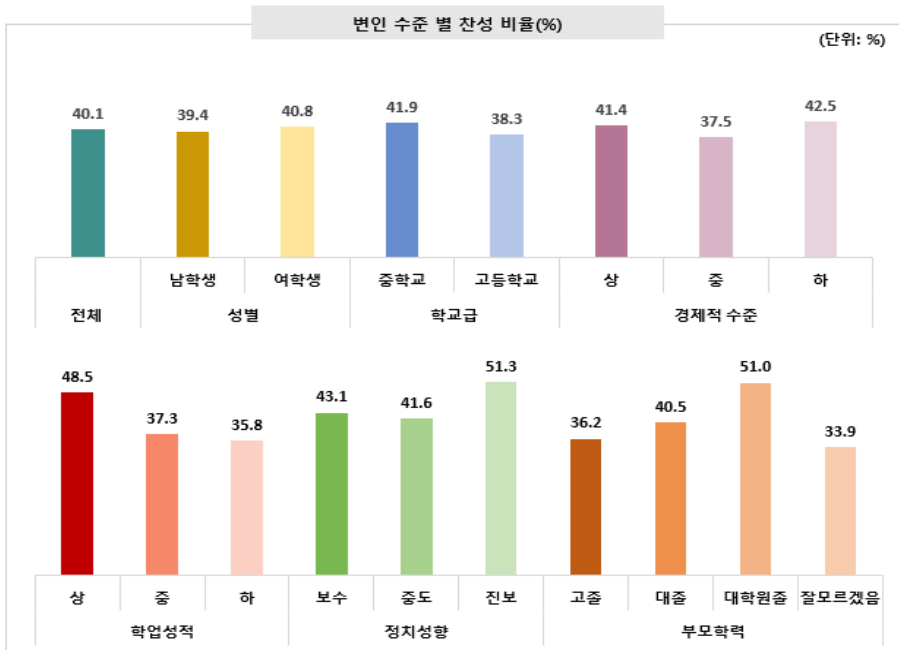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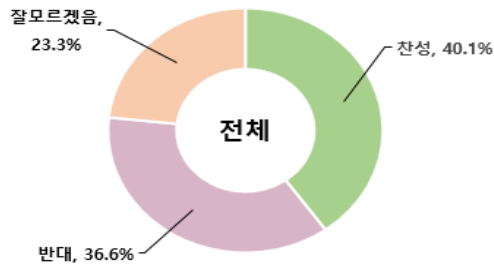


그림 V-20. 교육감 선거권 연령 하향(만 16세)에 대한 찬성 비율

〈표 V-29〉과 [그림 V-20]에서와 같이 교육감 선거권 연령 하향에 대한 찬성 의견은 40.1%로 반대 의견인 36.6%보다 다소 높게 보고되었다. 성별에 따른 찬성 비율의 차이는 거의 관찰되지 않았으나(남학생 39.4%, 여학생 40.8%), 교육감 선거권 연령 하향에 반대하는 여학생의 비율이 남학생들보다 4% 가량 높게 나타났다(여학생 38.7% 남학생 34.7%).

학교급에 따른 의견 차이 또한 반대 비율에서 더 크게 드러났는데, 찬성 비율에서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은 반면(중학교 41.9%, 고등학교 38.3%), 반대 비율에서 비교적 큰 차이를 보였다(고등학교 41.2% 중학교 32.0%). 경제적 수준의 경우, 중간 수준의 학생들이 상, 하 수준의 학생들보다 낮은 비율의 찬성률을 보고하였다(상 41.4%, 하 42.5%) 중 37.5%.

학업성적과 부모학력 변인의 경우, 학업 성적(상 48.5%) 중 37.3%, 하 35.8%)이 높은 수준일수록 또는 부모의 학력(대학원졸 51.0%) 대졸 40.5% 고졸 36.2%)이 높은 수준일수록 찬성 의견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성향에 따라 집단을 구분했을 때, 진보 성향 집단(51.3%) 보수 43.1%, 중도 41.6%)의 찬성 비율이 다른 정치성향의 집단에 비해 높게 관찰되었다.

표 V-30. 학교 안팎 정치 활동 경험 유무_전체

(단위 : %)

활동 경험	사례수	있다	없다	계
모의선거활동	2,737	22.1	77.9	100.0
어린이의회·청소년의회 활동	2,733	11.5	88.5	100.0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특별회의활동	2,736	8.0	92.0	100.0
정치토론이나 정책제안대회참가	2,734	5.3	94.7	100.0
정치·사회문제 관련 동아리활동	2,737	9.5	90.5	100.0
학교(학급) 자치회관련 활동	2,743	35.1	64.9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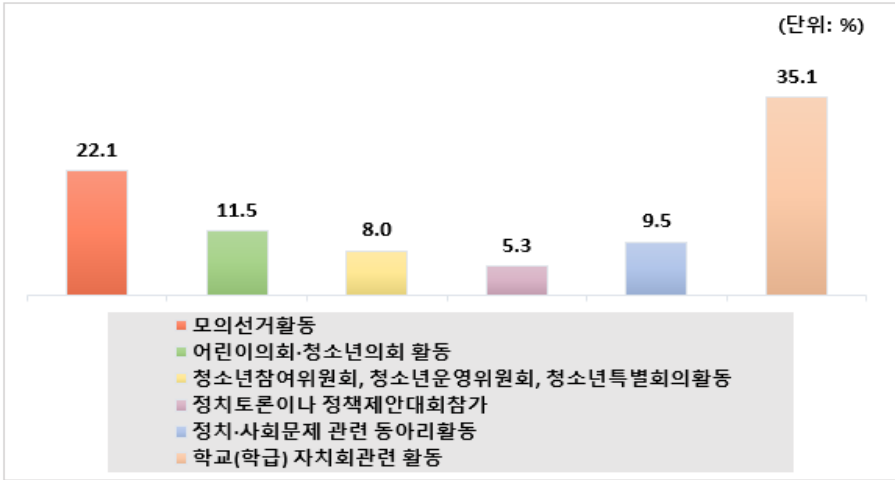


그림 V-21. 학교 안팎 정치 활동 경험 비율(전체)

학교 안팎에서 정치 활동을 경험한 청소년들의 비율은 <표 V-30>과 [그림 V-21]에서 나타나듯 전반적으로 높지 않았다. 가장 높은 비율로 활동 경험을 보고한 학교(학급) 자치회관련 활동의 경험 비율이 35.1%에 그쳤으며, 그 다음으로는 모의선거활동이 22.1%로 뒤를 따랐다. 어린이의회·청소년의회 활동(11.5%), 정치·사회문제 관련 동아리활동(9.5%),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특별회의활동(8.0%) 등의 활동을 경험했다고 보고한 청소년의 비율은 각각 10% 내외였으며, 특히 정치토론이나 정책제안대회참가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비율은 5.3%에 그쳤다.

표 V-31. 학교 안팎 정치 활동 경험 유무_변인 수준 별

(단위 : %)

배경 변인 수준	모의선거 활동		어린이의회· 청소년의회 활동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특별회의 활동		정치토론회나 정책제안대회 참가		정치·사회문제 관련 동아리 활동		학교(학급) 자치회 관련 활동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성별	남학생	21.7	78.3	11.2	88.8	7.4	92.6	5.9	94.1	8.6	91.4	29.9	70.1
	여학생	22.5	77.5	11.9	88.1	8.6	91.4	4.8	95.2	10.4	89.6	40.6	59.4
학교급	중학교	20.3	79.7	12.6	87.4	6.9	93.1	4.9	95.1	8.5	91.5	32.6	67.4
	고등학교	23.9	76.1	10.4	89.6	9.0	91.0	5.8	94.2	10.4	89.6	37.4	62.6
경제적 수준	상	25.6	74.4	13.7	86.3	9.8	90.2	6.7	93.3	10.9	89.1	38.6	61.4
	중	19.5	80.5	9.6	90.4	6.9	93.1	4.7	95.3	8.4	91.6	33.0	67.0
	하	17.1	82.9	10.0	90.0	5.7	94.3	2.7	97.3	6.6	93.4	30.4	69.6
학업 성적	상	27.6	72.4	14.3	85.7	11.0	89.0	7.0	93.0	11.2	88.8	44.2	55.8
	중	23.5	76.5	11.8	88.2	7.9	92.1	5.6	94.4	9.8	90.2	36.0	64.0
	하	15.2	84.8	8.8	91.2	5.7	94.3	3.9	96.1	7.1	92.9	26.6	73.4
정치 생향	보수	21.2	78.8	10.5	89.5	6.9	93.1	9.6	90.4	11.3	88.7	34.4	65.6
	중도	22.0	78.0	11.5	88.5	7.6	92.4	4.7	95.3	9.1	90.9	35.7	64.3
	진보	35.9	64.1	20.9	79.1	19.0	81.0	12.3	87.7	18.0	82.0	48.5	51.5
부모 학력	고졸	19.7	80.3	10.7	89.3	9.6	90.4	4.6	95.4	8.9	91.1	35.8	64.2
	대졸	23.4	76.6	11.8	88.2	7.2	92.8	5.2	94.8	9.0	91.0	35.9	64.1
	대학원졸	30.3	69.7	17.4	82.6	13.8	86.2	9.4	90.6	14.3	85.7	44.9	55.1
잘모르겠음	15.5	84.5	8.4	91.6	5.4	94.6	5.2	94.8	8.2	91.8	26.3	7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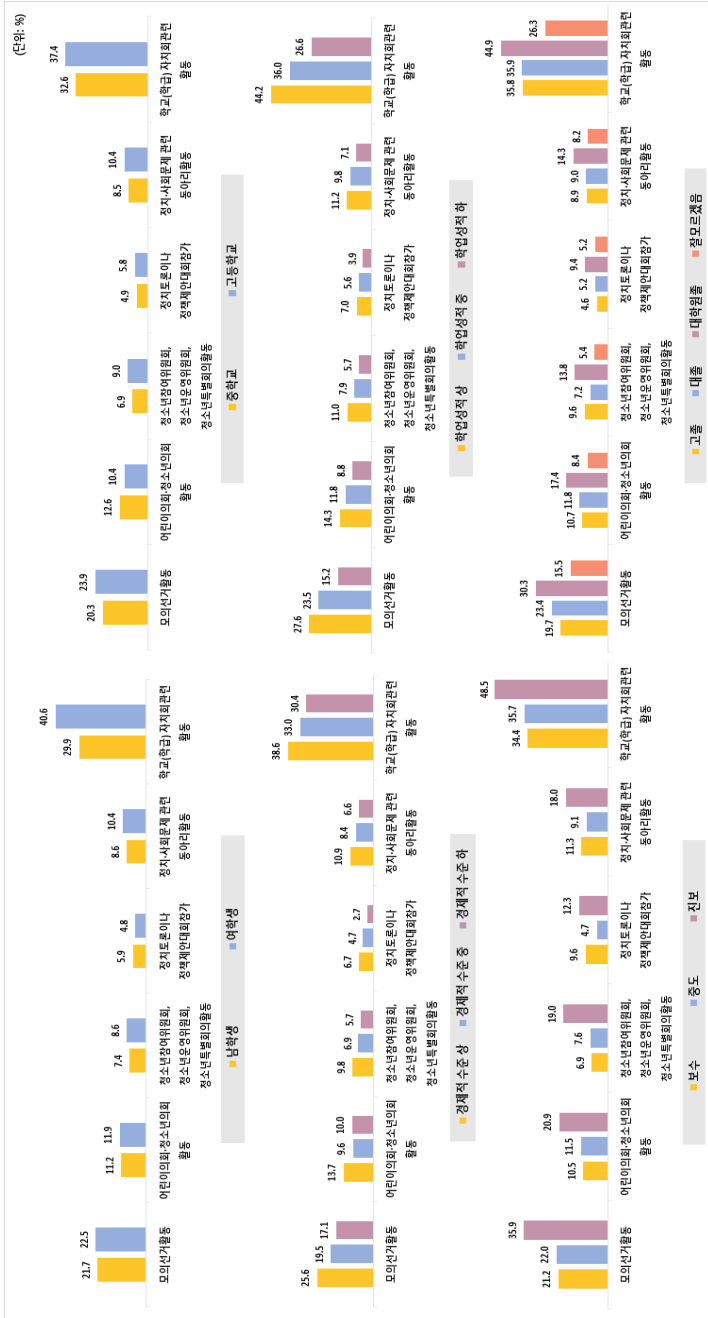


그림 V-22. 학교 안팎 정치 활동 경험 비율(별인 수준 별)

〈표 V-31〉과 〈그림 V-22〉를 보면, 여타 정치 활동들에서 성별에 따른 경험 비율의 차이가 크지 않은데 반해, 학교(학급) 자치회관련 활동을 경험한 여학생(40.6%)남학생 29.9%)들의 비율이 남학생들에 비해 두드러지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학급) 자치회관련 활동경험 유무의 차이는 학교급에 따른 차이에서도 발견되는데, 다른 활동들에서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차이가 2~3%내외로 보고된 반면, 학교(학급) 자치회관련 활동에서는 고등학생(37.4%)중학교 32.6%)들의 경험 비율이 중학생들에 비해 5% 가량 높게 나타났다.

경제적 수준, 학업성적 그리고 부모학력에 따른 경험 유무의 차이는 유사한 경향성을 공유하는데,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부모학력이 고학력일수록 각 정치 활동을 경험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모의선거 활동(상 25.6%)중 19.5%, 하 17.1%)과 학교(학급) 자치회관련 활동(상 38.6%)중 33.0%, 하 30.4%)에서, 높은 경제적 수준 집단의 경험 비율이 다른 집단에 비해 5% 가량 높게 관찰되었고, 같은 활동들에서 학업성적 수준에 따른 차이(모의선거 활동(상 27.6%)중 23.5%)하 15.2%), 학교(학급) 자치회관련 활동(상 44.2%)중 36.0%)하 26.6%))가 더욱 두드러졌으며, 부모학력에 따른 경험비율의 차이는 대부분의 활동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었다.

정치성향의 경우, 진보 성향 집단의 전반적인 경험률이 보수 또는 중도 성향 집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모의선거활동(진보 35.9%)중도 22.0%, 보수 21.2%), 어린이의회·청소년의회활동(진보 20.9%)중도 11.5%, 보수 10.5%),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특별회의활동(진보 19.0%)중도 7.6%, 보수 6.9%), 학교(학급) 자치회관련 활동(진보 48.5%)중도 35.7%, 보수 34.4%)등 대부분의 활동에서 진보 성향 집단의 경험 비율이 다른 집단에 비해 10%이상 높게 보고되었다.

표 V-32. 정치활동경험의 역량 강화 도움 여부_전체

(단위 : %, 평균)

주요 역량	사례수	안 되었다	보통 이다	되 었다	계	평균	표준 편차
사회·정치적 문제를 이해하는 능력	1,211	18.7	37.0	44.3	100.0	3.30	1.03
사회·정치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1,210	20.8	39.1	40.1	100.0	3.22	1.04
사회·정치적 현안에 대한 의사 결정 능력	1,211	17.6	37.6	44.9	100.0	3.33	1.02
서로 다른 정치적 견해를 수용하는 태도	1,211	13.3	32.2	54.6	100.0	3.55	1.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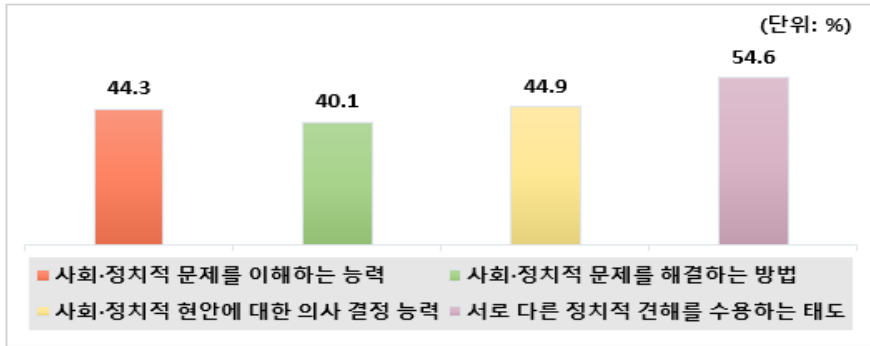


그림 V-23. 정치활동경험의 역량 강화 도움 정도(전체)

〈표 V-32〉와 〈그림 V-23〉을 보면 모든 역량 부분에서 40% 이상의 청소년들이 자신의 정치활동경험이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전체 역량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고한 역량은 서로 다른 정치적 견해를 수용하는 태도로, 반수가 넘는 54.6%($M=3.55$)에 달하는 청소년들이 해당 역량 강화에 정치활동경험이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사회·정치적 현안에 대한 의사 결정 능력(44.9%, $M=3.33$)과 사회·정치적 문제를 이해하는 능력(44.3%, $M=3.30$)이 거의 동일한 비율로 그 뒤를 따랐으며, 가장 낮은 비율로 보고된 사회·정치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40.1%, $M=3.22$) 또한 여전히 40%이상의 수치를 보고하였다.

표 V-33. 정치활동경험의 역량 강화 도움 여부_변인 수준 별

(단위 : %)

배경 변인 수준	사회·정치적 문제를 이해하는 능력		사회·정치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사회·정치적 현안에 대한 의사 결정 능력		서로 다른 정치적 견해를 수용하는 태도						
	안되었다	보통이다	안되었다	보통이다	안되었다	보통이다	안되었다	보통이다					
성별	남학생	21.6	35.5	42.9	22.4	38.0	39.5	20.4	37.6	42.0	18.3	32.0	49.7
	여학생	16.2	38.4	45.4	19.4	40.0	40.5	15.1	37.6	47.3	9.0	32.3	58.7
학교급	중학교	18.8	37.2	44.0	20.8	39.4	39.8	19.3	38.0	42.7	13.6	34.2	52.3
	고등학교	18.6	36.9	44.5	20.8	38.8	40.3	16.0	37.3	46.7	13.0	30.4	56.6
경제적 수준	상	17.9	33.6	48.5	18.7	38.6	42.7	16.7	35.2	48.1	13.6	29.7	56.7
	중	18.4	40.5	41.1	21.4	40.2	38.5	17.0	39.9	43.2	12.0	32.3	55.7
	하	25.3	36.6	38.0	29.1	33.4	37.4	25.1	36.6	38.4	16.9	38.7	44.4
학업 성적	상	18.2	28.8	52.9	20.4	30.6	49.0	14.1	29.7	56.2	12.6	23.2	64.2
	중	15.5	40.8	43.7	18.1	41.4	40.5	16.7	39.5	43.8	10.5	34.0	55.5
	하	25.9	39.0	35.1	26.6	44.5	28.9	24.0	42.8	33.2	19.7	38.7	41.7
정치 성향	보수	20.4	33.5	46.0	21.1	29.8	49.1	17.1	31.4	51.5	14.4	34.7	50.9
	중도	17.8	38.5	43.7	19.5	41.4	39.1	16.3	40.9	42.8	13.1	33.9	53.0
	진보	17.7	25.3	57.0	20.2	24.7	55.1	20.7	18.6	60.6	13.8	17.8	68.4
부모 학력	고졸	22.3	41.2	36.5	26.5	39.2	34.3	21.7	39.8	38.5	16.1	35.1	48.8
	대졸	17.9	36.3	45.8	20.7	38.7	40.6	16.7	35.9	47.4	13.0	29.6	57.4
	대학원졸	18.8	26.5	54.7	18.0	30.2	51.8	18.1	29.4	52.5	11.6	28.9	59.4
질모르겠음	16.5	44.9	38.7	14.1	50.8	35.1	14.6	50.3	35.1	11.6	41.4	46.9	

〈표 V-33〉과 〈그림 V-24〉에서 성별 변인을 기준으로, 남녀 간의 응답률 차이가 두드러지게 관찰된 역량은 사회·정치적 현안에 대한 의사결정 능력(여학생 47.3%)남학생 42.0%)과 서로 다른 정치적 견해를 수용하는 태도(여학생 58.7%)남학생 49.7%)였으며, 특히 서로 다른 정치적 견해를 수용하는 태도에 대한 여학생의 평가는 남학생에 비해 9% 높게 나타났다. 학교급 간의 차이 역시 해당 역량들(사회·정치적 현안에 대한 의사결정 능력(고등학교 46.7%)중학교 42.7%), 서로 다른 정치적 견해를 수용하는 태도(고등학교 56.6%)중학교 52.3%))에서 관찰되었는데, 고등학생들의 평가가 중학생들에 비해 약 4% 가량 높게 관찰되었다.

경제적 수준에 따른 차이의 경우, 경제적 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정치활동경험이 해당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사회·정치적 문제를 이해하는 능력(상 48.5%)중 41.1%)하 38.0%), 사회·정치적 현안에 대한 의사결정 능력(상 48.1%)중 43.2%)하 38.4%) 그리고 서로 다른 정치적 견해를 수용하는 태도(상 56.7%, 중 55.7%)하 44.4%)에서 상 수준의 집단과 하 수준 집단의 비율 차이는 약 10% 이상이었다.

학업성적과 부모학력 또한 경제적 수준 변인과 유사한 경향성을 보이는데, 학업 성적이나 부모학력이 높은 수준의 집단일수록 정치경험이 해당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한 비율이 높았다. 이러한 경향성은 학업성적 변인에서 더욱 두드러지는데, 대부분의 역량에서 각 학업성적 수준 집단 간의 비율 차이가 약 10%로 유지된 바, 높은 학업성적 집단과 낮은 학업성적 집단의 차이가 모든 역량에 걸쳐 약 17~23%로 높게 나타났다.

정치 성향에 따라 집단을 나눌 경우, 모든 역량에 대해 진보 성향 집단이 가장 두드러지게 높은 비율로 정치경험이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했으며, 서로 다른 정치적 견해를 수용하는 태도(진보 68.4%)중도 53.0%)보수 50.9%)를 제외한 역량들에 대해 정치경험이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중도 성향 집단에서 가장 낮게 관찰되었다.

표 V-34. 학교 수업에서 경험한 정치관련 토론

(단위 : %, 평균)

		없다	보통이다	있다	계	평균	표준편차
성별	남학생	59.8	19.2	21.0	100.0	2.32	1.19
	여학생	45.2	22.2	32.6	100.0	2.74	1.23
학교급	중학교	55.5	19.6	25.0	100.0	2.47	1.21
	고등학교	50.1	21.7	28.2	100.0	2.57	1.24
경제적 수준	상	50.9	19.7	29.4	100.0	2.58	1.25
	중	53.2	21.4	25.4	100.0	2.49	1.24
	하	57.1	22.1	20.8	100.0	2.38	1.15
학업 성적	상	55.2	16.6	28.1	100.0	2.48	1.29
	중	46.8	22.9	30.3	100.0	2.66	1.23
	하	58.8	21.0	20.2	100.0	2.33	1.17
정치 성향	보수	56.8	11.7	31.5	100.0	2.50	1.36
	중도	49.8	23.2	27.0	100.0	2.56	1.20
	진보	43.8	18.4	37.8	100.0	2.80	1.36
부모 학력	고졸	54.8	22.6	22.6	100.0	2.45	1.18
	대졸	51.7	20.3	27.9	100.0	2.54	1.24
	대학원졸 잘모르겠음	49.8 53.8	17.6 21.5	32.6 24.7	100.0 100.0	2.63 2.49	1.32 1.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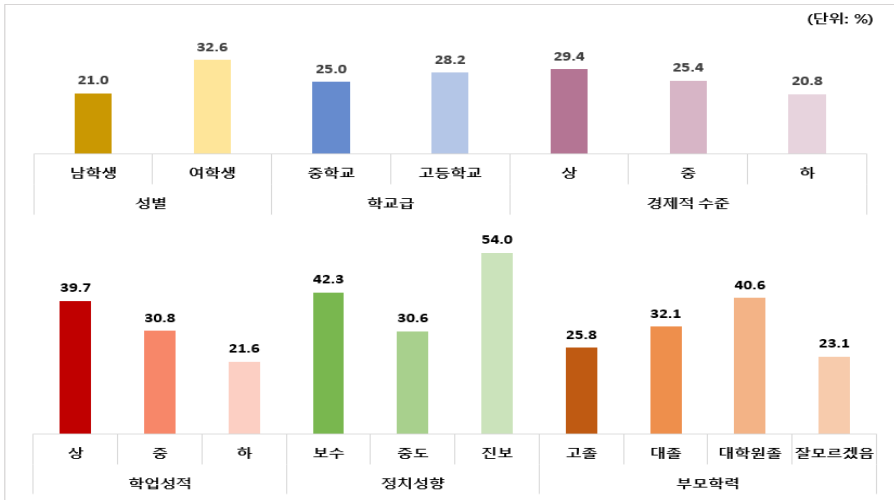


그림 V-25. 학교 수업에서 정치관련 토론 경험 정도

〈표 V-34〉와 [그림 V-25]를 보면 학교 수업에서 정치 관련 토론을 경험한 여학생의 비율(32.6%) 남학생 21.0%)이 남학생의 비율보다 11.6%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에 따른 비율은 고등학생이 28.2%, 중학생이 25.0%로, 고등학생들이 정치 관련 토론을 학교 수업에서 경험한 비율이 약 3% 높게 관찰되었다.

경제적 수준의 경우, 각 수준별로 약 4~5%의 차이를 보였으며, 경제적 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정치 관련 토론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관찰되었다(상 29.4%)>중 25.4%)<하 20.8%). 학업 성적의 경우, 높은 수준과 중간 수준의 차이 크지 않았으나, 낮은 학업성적 수준 집단의 경험 비율이 다른 두 수준에 비해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상 28.1%, 중 30.3%)<하 20.2%).

정치성향에 따른 차이 또한 관찰되었는데, 진보 성향 집단의 경험 비율이 37.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보수 성향 집단(31.5%)나 중도 성향 집단(27.0%)에 비해 약 6~10% 높은 수준이었다. 부모학력에 따른 경험 비율 차이는 각 수준별로 약 5%의 차이를 보였는데(상 32.6%)>중 27.9%)<하 22.6%), 부모의 학력이 고학력에 가까울수록 정치 관련 토론을 경험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35. 학교 수업에서 경험한 모의 선거_전체

(단위 : %, 평균)

모의 선거	사례수	없다	보통 이다	있다	계	평균	표준 편차
모의 대통령 선거	2,798	82.8	10.7	6.5	100.0	1.67	0.96
모의 국회의원 선거	2,799	85.4	10.4	4.2	100.0	1.59	0.88
모의 지방자치 단체장이나 교육감 선거	2,800	87.4	9.7	2.9	100.0	1.53	0.82
모의 UN 선거	2,800	87.9	9.1	3.0	100.0	1.51	0.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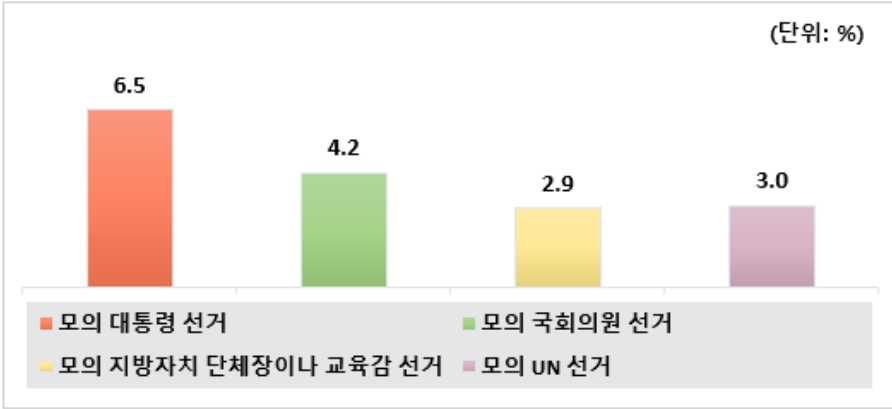


그림 V-26. 학교 수업에서 모의 선거 경험 정도(전체)

〈표 V-35〉와 [그림 V-26]에서와 같이 학교 수업에서 모의 선거를 경험한 청소년들의 비율은 모든 선거에 걸쳐 7% 미만으로 매우 낮게 조사되었다. 가장 높은 경험 비율을 보고한 모의 대통령 선거가 6.5%($M=1.67$)의 경험률을 보고하는데 그쳤고, 모의 국회의원 선거 4.2%($M=1.59$), 모의 UN선거 3.0%($M=1.51$), 모의 지방자치 단체장이나 교육감 선거 2.9%($M=1.53$) 순으로 그 뒤를 이었으나, 전반적으로 경험률이 매우 낮아 각 모의 선거 간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

표 V-36. 학교 수업에서 경험한 모의 선거 빈인 수준 별

(단위 : %)

배경 빈인 수준	모의 대통령선거			모의 국회의원 선거			모의 지방자치 단체장이나 교육감 선거			모의 UN 선거			
	없다	보통이다	있다	없다	보통이다	있다	없다	보통이다	있다	없다	보통이다	있다	
성별	남학생	82.6	11.1	6.3	84.8	10.4	4.8	86.2	10.2	3.5	86.2	10.3	3.5
	여학생	83.1	10.3	6.7	85.9	10.4	3.6	88.6	9.2	2.2	89.7	7.8	2.5
학교급	중학교	80.6	12.1	7.4	84.8	11.0	4.3	86.9	10.4	2.7	87.8	9.6	2.6
	고등학교	85.0	9.4	5.6	86.0	9.9	4.2	87.8	9.1	3.1	88.0	8.6	3.4
경제적 수준	상	81.1	11.3	7.6	83.1	11.6	5.3	86.0	10.4	3.5	85.6	10.1	4.3
	중	84.5	11.0	4.5	86.8	9.6	3.6	88.2	9.4	2.4	89.5	8.6	2.0
	하	87.1	7.8	5.1	88.5	9.0	2.5	88.4	8.9	2.6	90.0	7.9	2.1
학업 성적	상	83.1	9.3	7.6	86.0	8.2	5.8	88.8	7.6	3.6	88.4	7.0	4.6
	중	82.8	11.8	5.4	84.3	12.4	3.3	85.7	11.4	2.9	86.6	10.8	2.5
	하	83.8	10.8	5.4	86.0	9.6	4.4	87.9	9.6	2.6	88.6	8.9	2.5
정치 성향	보수	85.9	9.2	4.9	88.1	7.3	4.6	89.3	8.1	2.5	90.5	5.9	3.6
	중도	81.7	12.8	5.5	83.3	12.8	3.9	85.0	11.9	3.1	85.7	11.5	2.8
	진보	78.8	5.9	15.3	82.1	6.7	11.2	85.3	7.8	7.0	83.6	6.8	9.5
부모 학력	고졸	82.8	12.1	5.2	85.3	11.0	3.7	86.1	10.9	3.0	87.0	10.6	2.4
	대졸	83.6	10.1	6.3	85.8	10.0	4.2	88.0	9.3	2.6	89.1	8.3	2.6
	대학원졸	81.1	11.6	7.3	83.6	10.2	6.2	88.1	7.9	4.0	85.2	8.6	6.2
철모르겠음	83.4	11.0	5.6	84.7	11.1	4.2	85.2	11.4	3.5	85.7	10.8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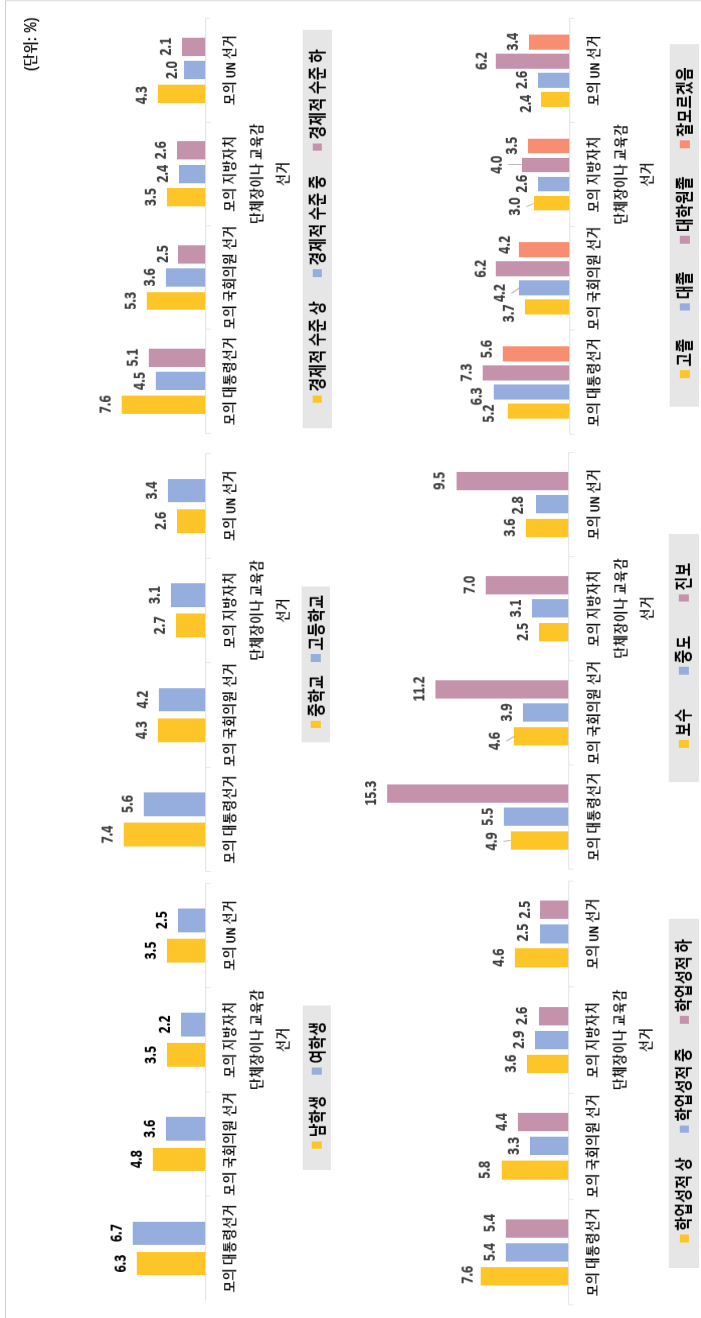


그림 V-27. 학교 수업에서 모의 선거 경험 정도(변인 수준 별)

〈표 V-36〉과 [그림 V-27]을 보면, 모의 선거 전반에 걸친 경험 비율이 매우 낮아, 각 변인 수준에서의 두드러진 차이 또한 거의 관찰되지 않았다. 성별과 학교 급에 따른 차이는 거의 드러나지 않았고, 경제적 수준과 학업성적, 부모학력에 따른 수준별 차이 또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치성향에 따라 집단을 구분할 경우, 진보 성향 집단의 모의 선거 경험 비율이 다른 두 집단에 비해 약 2~3배 높은 것으로 관찰되었다(모의대통령선거(진보 15.3%)중도 5.5%, 보수 4.9%), 모의 국회의원 선거(진보 11.2%)중도 3.9%, 보수 4.6%), 모의 지방자치 단체장이나 교육감 선거(진보 7.0%)중도 3.1%, 보수 2.5%), 모의 UN 선거(진보 9.5%)중도 2.8%, 보수 3.6%)).

표 V-37. 학교 내 학생의견 수용정도_전체

(단위 : %, 평균)

모의 선거	사례수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계	평균	표준 편차
학교의 규칙·규정을 만들거나 고칠 때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다.	2,808	20.6	26.5	52.8	100.0	3.47	1.20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행사(체험학습/운동회/축제 등)를 계획·진행한다.	2,806	21.2	28.8	50.1	100.0	3.42	1.20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통로(건의함/신문/홈페이지 등)가 마련되어 있으며, 학교는 이를 적극 활용한다.	2,807	27.4	38.0	34.6	100.0	3.11	1.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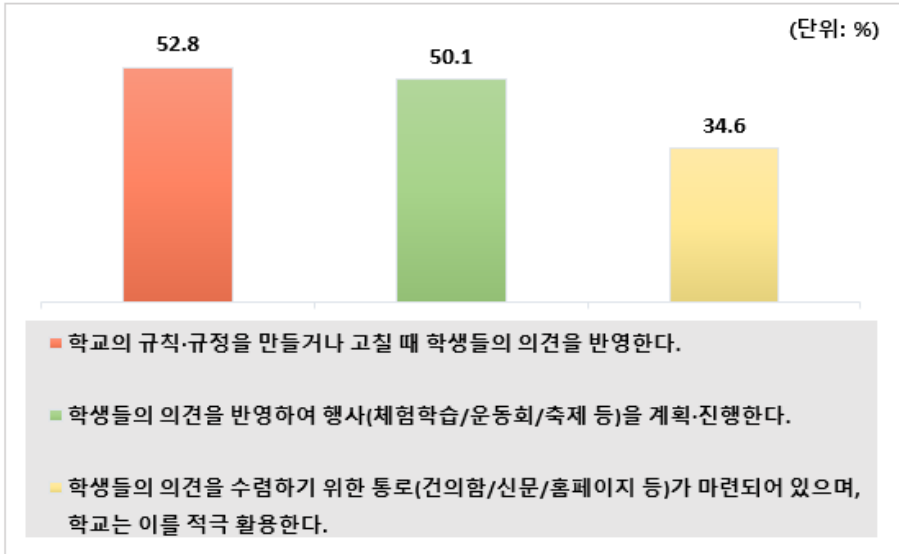


그림 V-28. 학교 내 학생의견 수용 긍정 정도(전체)

〈표 V-37〉과 [그림 V-28]에서 청소년의 절반 이상이 학교 내에서 학생들의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학교의 규칙·규정을 만들거나 고칠 때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된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비율은 52.8%($M=3.47$)이었으며, 교내 행사를 계획·진행함에 있어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된다고 응답한 비율 또한 50.1%($M=3.42$)로 과반을 넘어섰다. 다만,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통로를 마련하고 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그렇다’고 응답한 청소년들의 비율은 34.6%($M=3.11$)에 머물러, 다른 항목들에 비해 현저히 낮은 비율을 기록하였다.

표 V-38. 학교 내 학생의견 수용정도_변인 수준 별

(단위 : %)

배경 변인 수준	학교의 규칙·규정을 만들거나 고칠 때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다.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행사 (체합학습/운동회/축제 등)을 계획·진행한다.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통로 (건의함/신문/홈페이지 등)가 마련되어 있으며, 학교는 이를 적극 활용한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성별	남학생	21.6	29.9	48.5	23.3	30.0	46.7	30.0	37.5	32.5		
	여학생	19.6	22.9	57.5	18.8	27.5	53.7	24.4	38.6	37.0		
학교급	중학교	18.0	26.0	56.1	20.5	26.7	52.7	23.5	38.8	37.7		
	고등학교	23.3	27.1	49.6	21.8	30.8	47.4	31.2	37.2	31.6		
경제적 수준	상	20.0	24.4	55.6	19.5	27.6	52.9	27.0	35.3	37.7		
	중	20.3	28.1	51.6	20.2	31.5	48.2	27.2	40.1	32.7		
	하	27.8	28.5	43.7	31.1	23.9	45.0	31.7	38.0	30.3		
학업 성적	상	20.8	25.0	54.2	20.1	27.4	52.5	28.8	37.9	33.3		
	중	20.4	27.8	51.8	21.1	29.0	49.9	27.3	36.9	35.8		
	하	21.8	25.6	52.6	21.5	29.9	48.6	26.9	38.1	34.9		
정치 성향	보수	21.1	26.7	52.2	26.6	27.0	46.4	28.0	31.1	40.8		
	중도	20.7	28.5	50.8	19.8	31.1	49.1	26.5	40.3	33.1		
	진보	24.0	17.4	58.6	24.4	19.9	55.7	31.5	31.3	37.2		
부모 학력	고졸	20.1	29.1	50.8	18.6	31.5	49.9	28.6	36.7	34.7		
	대졸	20.4	25.7	53.9	20.7	28.1	51.2	26.2	36.9	37.0		
	대학원졸	20.7	21.0	58.3	22.9	25.2	51.9	31.4	38.1	30.5		
잘모르겠음	23.9	30.6	45.5	24.1	32.7	43.2	28.8	41.3	3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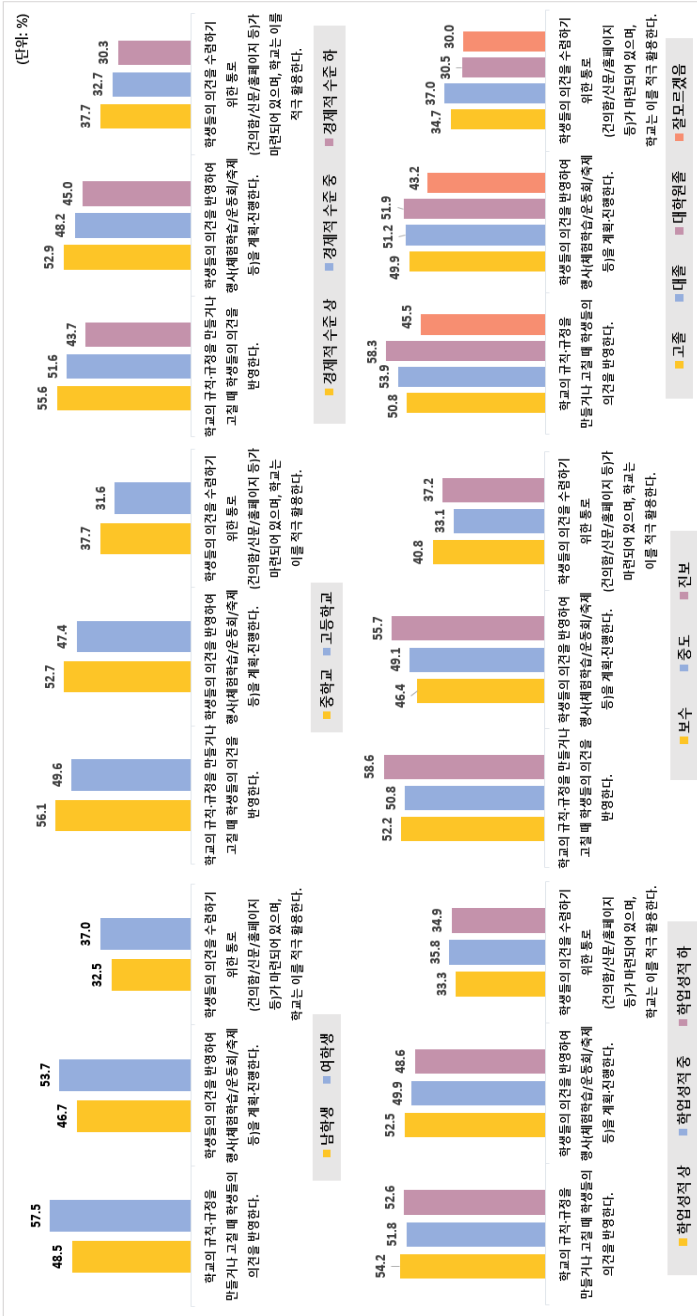


그림 V-29. 학교 내 학생의견 수용 긍정 정도(변인 수준 별)

〈표 V-38〉과 〈그림 V-29〉에서 성별 변인을 놓고 볼 때, 전반적으로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교내의 학생의견 수용정도를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내 규칙·규정에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된다고 평가한 여학생들의 비율은 57.5%〈남학생 48.5%〉로 남학생들의 응답 비율보다 약 9% 높게 관찰되었으며, 교내에 행사에 대한 학생 의견 반영(여학생 53.7%〈남학생 46.7%〉)과 의견 수렴 통로 및 활용도(여학생 37.0%〈남학생 32.5%〉)에 대한 평가 또한 여학생들이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드러났다. 학교급 변인의 경우, 중학생들에 비해 고등학생들이 교내 학생의견 수용정도를 전반적으로 낮게 평가하고 있었다.

경제적 수준 또한 응답 비율에 반영되어 나타났는데, 경제적 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학교가 학생의견을 수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관찰되었으며, 이러한 경향성은 특히 교내 규칙·규정에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는가(상 55.6%〈중 51.6%〉하 43.7%)에 대한 항목에서 두드러져, 높은 경제 수준 집단과 낮은 경제 수준 집단 간에 약 12%의 차이를 보고하였다.

학업성적에 따른 차이는 거의 없는 수준으로, 성적집단별로 약 2~3%의 차이만이 나타났다. 정치성향에 의한 차이는 각 항목별로 상이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교내 규칙·규정에서의 학생의견 반영(진보 58.6%〈보수 52.2%〉중도 50.8%) 항목의 경우 진보 성향 집단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관찰된 반면, 의견 수렴 통로와 활용도(보수 40.8%〈진보 37.2%〉중도 33.1%) 항목에서는 미세하게나마 보수 성향 집단의 비율이 진보 성향 집단보다 높았으며, 학교 행사에서의 학생의견 반영(진보 55.7%〈중도 49.1%〉보수 46.4%) 항목에서는 중도 성향 집단이 근소한 차이로 보수 성향 집단보다 높은 응답 비율을 보고하였다.

부모학력 변인 또한 다양한 양상으로 응답에 반영되었는데, 교내 규칙·규정의 학생의견 반영 항목(대학원졸 58.3%〈대졸 53.9%〉고졸 50.8%)에서는 고학력 부모 집단이 높은 응답 비율을 보이는 듯 했으나, 교내 행사의 학생의견 반영(대학원졸 51.9%, 대졸 51.2%, 고졸 49.9%)에서는 집단 간 차이가 거의 드러나지

않았고, 의견 수렴 통로와 활용도(대졸 37.0%>고졸 34.7%>대학원졸 30.5%) 항목에서는 오히려 부모학력이 가장 높은 집단의 응답 비율이 가장 낮게 관찰되었다.

표 V-39. 학생들이 느끼는 정치참여 활성화 교육의 필요성_전체

(단위 : %, 평균)

교육 내용	사례수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필요하다	계	평균	표준편차
정치적인 문제나 이슈에 관한 토론수업	2,807	22.8	31.8	45.4	100.0	3.30	1.16
모의선거	2,805	27.2	35.9	36.9	100.0	3.12	1.14
시민성함양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2,803	25.4	37.9	36.7	100.0	3.14	1.14
리더십함양교육	2,805	21.2	32.9	45.9	100.0	3.33	1.16
국회나 도의회/시의회 등 정치기관 견학	2,808	26.5	33.2	40.3	100.0	3.19	1.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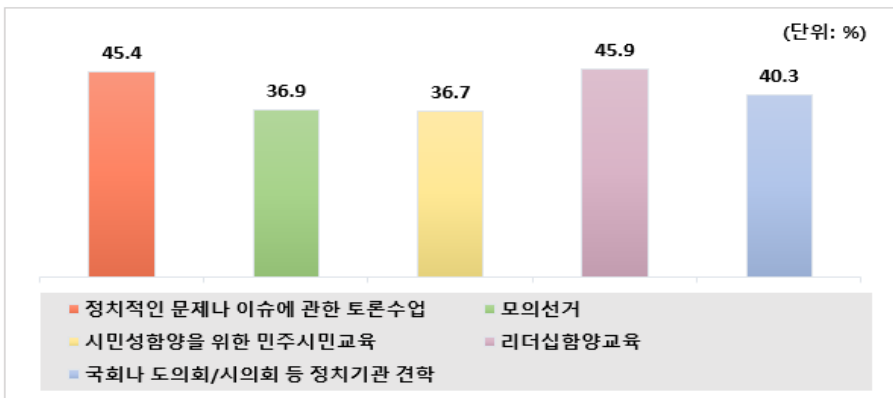


그림 V-30. 학생들이 느끼는 정치참여 활성화 교육의 필요 정도(전체)

<표 V-39>와 [그림 V-30]에서 청소년들이 필요하다고 느낀 정치참여 활성화 교육 중 가장 높은 비율로 보고된 것은 리더십함양교육(45.9%, $M=3.33$)이었다.

정치적인 문제나 이슈에 관한 토론수업(45.4%, $M=3.30$)에 대한 필요성 또한 리더십함양교육과 거의 동등한 비율을 기록하였으며, 국회와 같은 정치기관 견학(40.3%, $M=3.19$)에 대한 필요성이 그 뒤를 따랐다. 모의선거(36.9%, $M=3.12$)와 시민성함양을 위한 민주시민교육(36.7%, $M=3.14$)에 대한 필요성이 가장 낮은 비율로 관찰되었는데, 이 또한 전체 청소년의 1/3이 이상이 필요하다고 느낀 교육 내용들이었다.

표 V-40. 학생들이 느끼는 정치참여 활성화 교육의 필요성_변인 수준 별

(단위 : %)

배경 변인 수준	정치적인 문제나 이슈에 관한 토론수업				모의선거				시민성함양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리더십함양교육				국회나 도의회/시의회 등 정치기관 견학			
	필요하 지 않다	보통 이다	필요 하다	필요 하다	필요하 지 않다	보통 이다	필요 하다	필요 하다	필요하 지 않다	보통 이다	필요 하다	필요 하다	필요하 지 않다	보통 이다	필요 하다	필요하 지 않다	보통 이다	필요 하다		
	성별	남학생 27.4	32.5	40.1	34.1	34.9	31.0	31.5	37.0	31.6	26.1	34.8	39.1	33.3	33.5	33.2	33.2	33.5	33.2	
	여학생 17.8	31.0	51.2	19.7	37.0	43.3	18.8	38.9	42.3	15.8	30.9	53.3	19.2	32.8	48.0	48.0	32.8	48.0		
학교급	중학교 25.0	32.4	42.7	28.2	38.0	33.8	28.0	39.0	33.0	24.2	33.1	42.7	27.7	33.3	39.0	39.0	33.3	39.0		
	고등학교 20.6	31.2	48.1	26.2	33.9	39.9	22.8	36.8	40.4	18.2	32.7	49.1	25.3	33.1	41.6	41.6	33.1	41.6		
경제적 수준	상 24.0	28.8	47.2	26.5	33.8	39.7	25.4	35.2	39.4	20.9	30.3	48.8	27.6	30.4	42.0	42.0	30.4	42.0		
	중 21.4	36.0	42.5	27.2	39.1	33.7	25.0	40.2	34.9	20.3	36.5	43.2	24.9	37.1	38.1	38.1	37.1	38.1		
	하 22.6	31.2	46.2	30.8	36.2	33.0	26.7	37.2	36.1	21.3	32.5	46.2	27.7	33.0	39.3	39.3	33.0	39.3		
학업 성적	상 17.3	26.5	56.2	21.9	32.5	45.6	20.5	33.0	46.5	16.5	28.8	54.7	22.9	29.2	47.8	47.8	29.2	47.8		
	중 22.7	31.7	45.6	26.4	36.9	36.7	24.9	38.0	37.1	20.2	33.7	46.1	25.9	33.6	40.5	40.5	33.6	40.5		
	하 28.0	37.6	34.4	33.3	38.9	27.8	30.6	40.9	28.5	25.2	36.1	38.7	30.5	37.1	32.4	32.4	37.1	32.4		
정치 성향	보수 21.0	27.8	51.2	30.0	31.6	38.4	34.3	28.4	37.3	25.7	31.5	42.8	29.9	30.5	39.6	39.6	30.5	39.6		
	중도 22.1	34.6	43.3	26.7	37.8	35.5	23.6	39.7	36.7	18.8	35.1	46.1	25.5	34.2	40.3	40.3	34.2	40.3		
	진보 21.2	15.0	63.7	27.0	24.2	48.8	23.7	23.4	53.0	21.6	21.5	56.8	24.0	24.0	52.0	52.0	24.0	52.0		
부모 학력	고졸 27.3	34.0	38.7	31.3	38.1	30.6	28.9	40.3	30.8	23.4	34.7	41.9	30.8	35.6	33.6	33.6	35.6	33.6		
	대졸 18.8	32.1	49.0	23.9	35.8	40.2	22.8	37.6	39.6	17.3	32.3	50.4	22.9	33.0	44.1	44.1	33.0	44.1		
	대학원졸 18.8	24.7	56.4	23.1	31.7	45.2	19.1	31.4	49.5	19.3	30.5	50.2	23.2	27.0	49.8	49.8	27.0	49.8		
	잘모르겠음 33.6	34.8	31.6	36.6	39.3	24.1	34.1	39.0	26.8	29.8	35.6	34.6	35.1	37.3	27.6	27.6	37.3	2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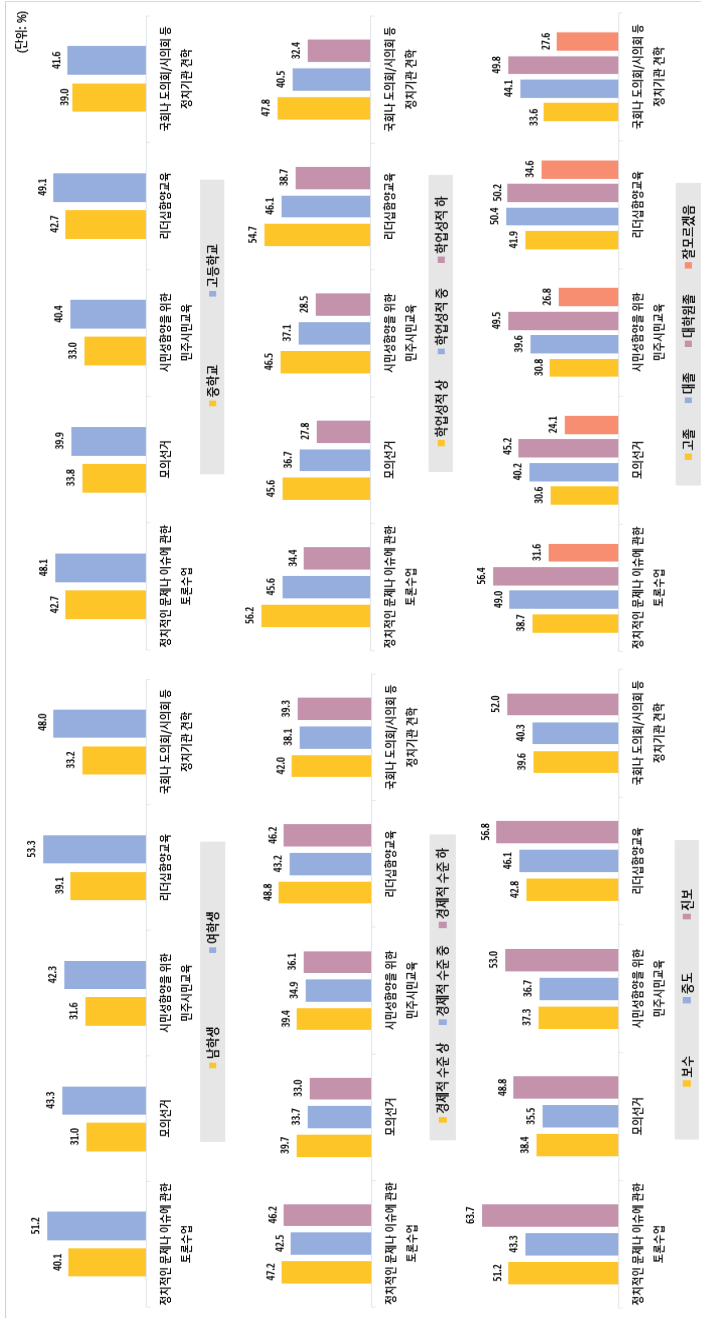


그림 V-31. 학생들이 느끼는 정치참여 활성화 교육의 필요 정도(변인 수준 별)

〈표 V-40〉과 〈그림 V-31〉에서 정치참여 활성화 교육의 필요성은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는데, 교육의 필요성을 보고한 여학생들의 비율이 모든 교육 내용에서 남학생들보다 약 10~15% 가량 높게 나타났다. 학교급별 수준에 따른 차이 또한 관찰되었는데, 비교적 작은 차이를 보인 정치기관 견학(고등학교 41.6%, 중학교 39.0%)을 제외한 모든 교육 내용에서, 고등학생들의 비율이 중학생들에 비해 약 6~7% 가량 높게 나타났다.

경제적 수준으로 집단을 나눌 경우, 상, 하, 중의 순서로 정치참여 활성화 교육의 높은 필요성을 보고하였으며, 그 간격은 약 2~3% 수준이었다. 단, 모의선거(상 39.7%>중 33.7%, 하 33.0%) 교육의 필요성은 중간 수준 집단과 낮은 수준 집단의 차이가 없었으며, 높은 수준 집단의 응답률이 두드러졌다.

학업성적 변인과 부모학력 변인에 따른 차이는 유사한 양상을 공유하였는데, 학업성적 또는 부모학력의 수준이 높을수록 교육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특히 높은 학업성적과 낮은 학업성적, 또는 최고학력부모와 최저학력 부모 집단의 차이는 매우 뚜렷했는데, 정치 문제 또는 이슈에 관한 토론수업의 필요성을 느끼는 높은 학업성적 집단(상 56.2%>중 45.6%>하 34.4%)의 비율은 낮은 학업성적 집단에 비해 약 20% 높게 보고되었으며,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보고한 대학원졸 부모 집단(49.5%>대졸 39.6%>고졸 30.8%)의 비율은 고졸 부모 집단에 비해 약 19% 높게 나타났다.

정치성향의 차이는 각 교육 내용에 다양하게 반영되었다. 전반적으로, 진보 성향 집단이 정치참여 활성화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가장 높은 비율로 보고하였다. 보수 성향 집단과 중도 성향 집단의 경우, 토론수업(진보 63.7%>보수 51.2%>중도 43.3%), 모의선거(진보 48.8%>보수 38.4%>중도 35.5%)에서 보수 성향 집단이 다소 높은 비율로 응답한 반면, 리더십함양교육(진보 56.8%>중도 46.1%>보수 42.8%)에서는 중도 성향 집단의 응답률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표 V-41. 정치참여저해 요인_전체

(단위 : %, 평균)

요인	사례수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계	평균	표준 편차
가정에서의 자기 의사표현 등 결정권이 보장되지 않음	2,807	51.4	29.3	19.3	100	2.48	1.17
학교에서의 자기 의사표현 등 결정권이 보장되지 않음	2,807	44.9	31.2	23.9	100	2.66	1.18
학교에서 정치참여의 실천적 기회가 제공되지 않음	2,803	28.9	35.1	36.0	100	3.09	1.21
입시위주의 교육 제도	2,807	20.4	32.5	47.2	100	3.47	1.27
학생정치참여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시각	2,807	31.4	34.4	34.2	100	3.03	1.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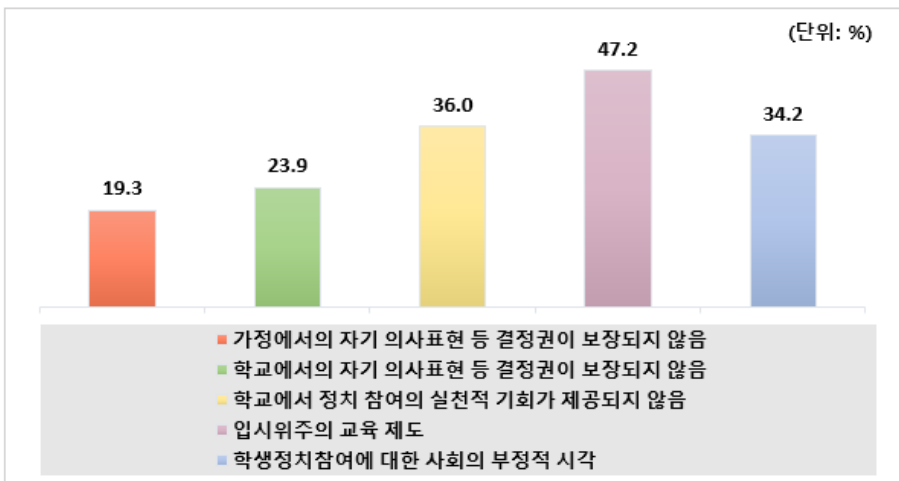


그림 V-32. 요인별 정치참여저해 정도(전체)

<표 V-41>과 <그림 V-32>에서 보면, 청소년들이 가장 높은 비율로 응답한 정치참여저해 요인은 입시위주의 교육제도(47.2%, $M=3.47$)로, 전체 청소년의

절반에 가까운 청소년들이 입시위주의 교육제도를 정치참여저해 요인으로 꼽았다. 그 다음으로 높은 비율은 기록한 요인으로는 학교에서 정치참여의 실천적 기회가 제공되지 않음(36.0%, $M=3.09$)과 학생정치참여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시각(34.2%, $M=3.03$)이 있었으며, 이는 전체 청소년의 1/3에 가까운 응답 비율이었다. 학교(23.9%, $M=2.66$)와 가정(19.3%, $M=2.48$)에서 자기 의사표현 등의 결정권이 보장되지 않은 점을 정치참여저해 요인으로 꼽은 청소년도 일부 있었다.

표 V-42. 정치참여저해 요인_변인 수준 별

(단위 : %)

배경 변인 수준	가정에서의 자기 의사 표현 등 결정권이 보장되지 않음		학교에서의 자기 의사 표현 등 결정권이 보장되지 않음		학교에서 정치참여의 실천적 기회가 제공되지 않음		입시위주의 교육 제도		학생정치참여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시각							
	그렇지 않다	필요 하다	그렇지 않다	필요 하다	그렇지 않다	필요 하다	그렇지 않다	필요 하다	그렇지 않다	필요 하다						
성별	남학생	54.1	30.6	15.3	48.3	31.5	20.2	33.5	35.7	30.8	25.2	33.8	40.9	33.1	35.7	31.3
	여학생	48.4	27.9	23.7	41.3	30.9	27.8	23.9	34.5	41.6	15.1	31.0	53.9	29.5	33.1	37.4
학교급	중학교	51.1	31.5	17.4	47.1	33.5	19.4	32.4	37.8	29.9	25.2	37.0	37.7	33.8	36.7	29.5
	고등학교	51.6	27.1	21.3	42.8	28.9	28.3	25.4	32.5	42.0	15.5	27.9	56.5	29.0	32.2	38.9
경제적 수준	상	53.5	28.9	17.7	45.3	31.4	23.3	29.1	34.9	36.0	20.6	30.0	49.4	31.6	32.4	36.0
	중	51.3	29.9	18.9	45.6	31.4	22.9	30.4	35.6	34.0	21.2	33.3	45.5	32.9	36.7	30.4
	하	45.1	29.5	25.5	37.7	30.3	32.0	22.5	33.6	43.9	18.3	32.9	48.7	27.0	34.1	38.9
학업 성적	상	52.9	26.6	20.4	44.7	28.3	27.0	25.7	27.0	47.4	15.3	27.9	56.8	29.3	30.0	40.8
	중	53.0	29.4	17.6	45.5	31.5	23.0	28.2	36.9	34.9	20.8	31.4	47.8	31.8	34.9	33.3
	하	48.7	31.6	19.6	43.2	33.8	22.9	32.9	39.7	27.4	25.0	35.7	39.2	33.9	37.5	28.5
정치 성향	보수	53.2	23.8	23.0	45.9	25.5	28.6	35.7	24.6	39.7	29.1	26.0	44.9	38.3	29.2	32.5
	중도	50.4	31.6	17.9	43.1	33.2	23.6	28.7	37.2	34.2	19.9	33.3	46.8	30.2	36.0	33.8
	진보	48.7	21.3	30.0	39.3	25.1	35.6	26.0	19.6	54.4	15.2	18.7	66.1	28.9	21.8	49.3
부모 학력	고졸	51.3	28.4	20.3	46.1	29.4	24.5	31.2	34.9	33.9	24.3	33.1	42.6	34.3	34.7	31.1
	대졸	50.9	29.7	19.4	43.8	31.3	24.9	27.6	33.9	38.4	18.8	30.0	51.3	30.4	33.7	35.9
	대학원졸	55.0	22.4	22.6	45.4	25.1	29.5	22.6	35.4	42.0	11.5	26.4	62.1	27.2	30.8	42.0
잘모르겠음	53.6	34.4	12.0	45.1	38.9	16.0	34.8	40.4	24.8	28.4	40.4	31.2	35.7	39.5	2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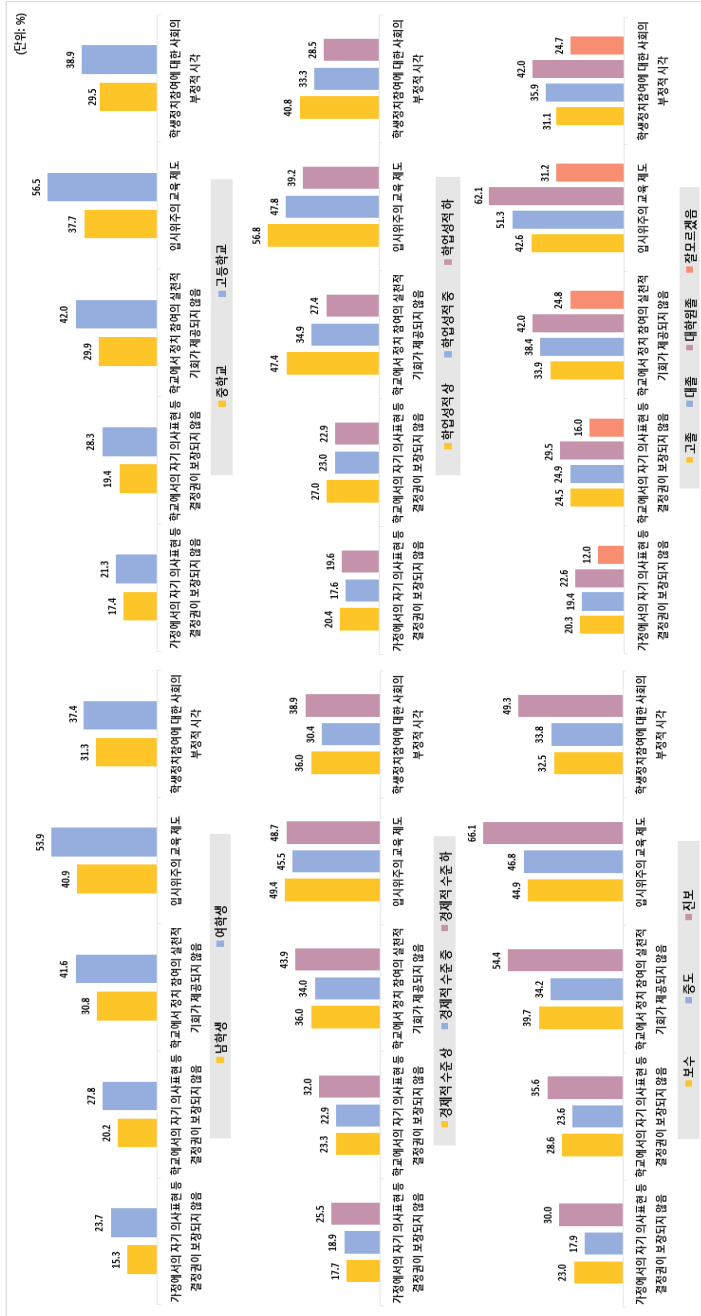


그림 V-33. 요인별 정치참여저해 정도(변인 수준별)

각 요인들을 정치참여저해 요인으로 평가한 비율은 남학생들보다 여학생들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각 요인들을 정치참여저해 요인으로 꼽은 남녀 차이는 최소 6.1% (학생정치참여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시각(여학생 37.4%)남학생 31.3%))였으며, 입시위주의 교육제도(여학생 53.9%)남학생 40.9%)에 대한 비율 차이가 13%로 가장 두드러졌다. 학교급에 따른 차이도 비교적 현저했는데, 모든 요인들에서 해당 요인을 저해 요인으로 평가한 비율이 중학생들보다 고등학생들이 높았으며, 특히 가정에서의 결정권 미보장(고등학교 21.3%)중학교 17.4%)을 제외한 여타 모든 요인들에서의 비율 차이는 약 10% 이상인걸로 드러났다.

경제적 수준에 따른 차이의 경우, 대부분의 요인에서 낮은 경제적 수준 집단의 '그렇다' 응답 비율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는데, 특히 가정에서의 결정권 (하 25.5%)중 18.9%, 상 17.7%), 학교에서의 결정권(하 32.0%)중 22.9%, 상 23.3%), 학교에서 정치참여 기회가 제공되지 않음(하 43.9%)중 34.0%, 상 36.0%)에서 그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학업성적과 부모학력 변인에 따른 응답율의 차이는 유사했는데, 대부분의 요인에서 학업성적 높은 집단과 부모학력이 높은 집단이 해당 요인을 저해 요인으로 가장 많이 꼽은 반면, 학업성적이 낮은 집단과 부모학력이 낮은 집단이 해당 요인들을 저해 요인으로 평가한 비율은 각 변인의 세 집단 중 가장 낮았다. 학업성적 변인의 경우, 학교에서 정치참여 기회가 제공되지 않음(상 47.4%)중 34.9%)하 27.4%)과 입시위주의 교육 제도(상 56.8%)중 47.8%)하 39.2%)에서 그 차이가 가장 극명했으며, 부모학력 변인 또한 입시위주의 교육 제도(대학원졸 62.1%)대졸 51.3%)고졸 42.6%)에서 집단 간 가장 큰 차이가 관찰되었다.

정치성향에 따른 차이 또한 다소 드러났는데, 일반적으로 진보, 보수, 중도 성향 집단 순으로 해당 요인들을 저해 요인으로 평가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각 간극은 약 5~7% 내외였다. 다만, 입시위주의 교육제도(진보 66.1%)중도 46.8%, 보수 44.9%)와 학생정치참여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시각(진보 49.3%)중도 33.8%,

보수 32.5%)을 저해요인으로 평가한 보수 성향 집단과 중도 성향 집단의 차이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표 V-43. 정치참여 활성화 요인_전체

(단위 : %, 평균)

요인	사례수	중요하지 않다	보통 이다	중요 하다	계	평균	표준 편차
가정에서의 자기 의사표현 등 결정권 보장	2,806	12.4	34.7	52.9	100.0	3.59	1.09
학교에서의 자기 의사표현 등 결정권 보장	2,805	10.1	32.4	57.5	100.0	3.71	1.07
학교에서 정치 및 인권 교육의 확대	2,804	11.6	33.4	55.0	100.0	3.64	1.08
중·고등학생의 정당가입 허용	2,806	25.9	39.0	35.1	100.0	3.14	1.16
청소년의 학교 밖 정치 참여 활동 허용	2,806	17.0	38.8	44.2	100.0	3.39	1.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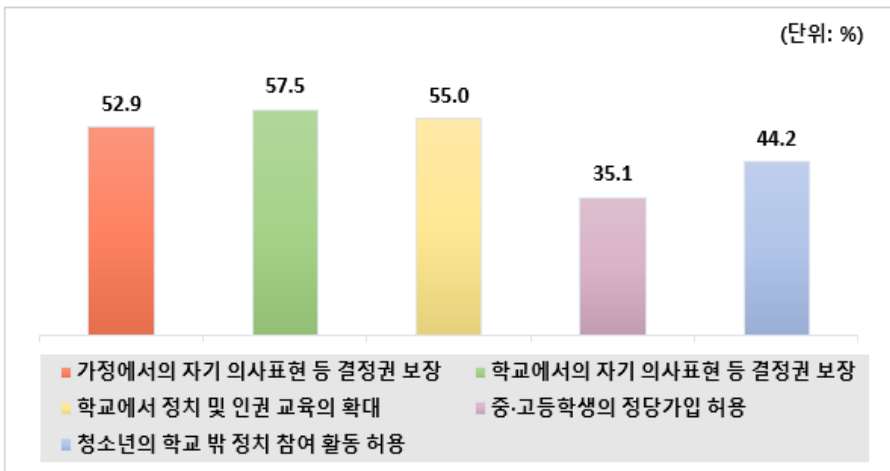


그림 V-34. 요인별 정치참여 활성화 정도(전체)

〈표 V-43〉과 [그림 V-34]에서 학교에서 자기 의사표현 등의 결정권을 보장하는 것이 정치참여를 활성화 시키는 요인이라고 꼽은 청소년의 비율은 57.5% ($M=3.71$)로, 전체 요인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고하였다. 교내 정치 및 인권 교육을 확대가 중요하다고 꼽은 청소년의 비율이 55.0%($M=3.64$)로 그 뒤를 이었고, 가정에서의 자기 의사표현 등의 결정권 보장(52.9%, $M=3.59$)이 중요하다고 평가한 비율 또한 전체 청소년의 절반을 넘어섰다.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해 학교 밖 정치 활동을 허용이 중요하다고 평가한 청소년의 비율은 44.2%($M=3.39$)로 절반에 조금 못 미쳤으며, 중·고등학생의 정당가입이 활성화에 중요하다고 생각한 청소년은 전체의 35.1%($M=3.14$)로, 다른 요인들에 비해 다소 낮은 비율로 관찰되었다.

표 V-44. 정치참여 활성화 요인_변인 수준 별

(단위 : %)

배경 변인 수준	가정에서의 자기 의사			학교에서의 자기 의사			학교에서 정치 및 인권 교육의 확대			중·고등학생의 정당가입 허용			청소년의 학교 밖 정치 참여 활동 허용			
	표현 등 결정권 보장	중요	하	표현 등 결정권 보장	중요	하	인권 교육의 확대	중요	하	정당가입 허용	중요	하	정치 참여 활동	중요	하	
	보통 이하	중요	하	보통 이하	중요	하	보통 이하	중요	하	보통 이하	중요	하	중요	보통 이하	중요	하
성별	남학생	17.4	37.3	45.2	14.6	36.3	49.1	16.6	37.1	46.3	29.7	38.5	31.8	22.3	38.9	38.8
	여학생	6.9	31.9	61.2	5.4	28.2	66.4	6.1	29.4	64.5	21.8	39.5	38.7	11.3	38.7	50.1
학교급	중학교	11.3	35.8	52.9	9.6	35.2	55.3	11.7	36.5	51.8	22.0	40.9	37.1	16.6	39.2	44.2
	고등학교	13.4	33.7	52.9	10.7	29.6	59.6	11.4	30.3	58.2	29.8	37.0	33.2	17.3	38.4	44.2
경제적 수준	상	11.9	32.3	55.9	9.4	30.4	60.2	12.0	31.5	56.4	25.3	36.3	38.4	16.2	36.6	47.2
	중	12.2	37.2	50.6	10.3	34.0	55.7	11.1	35.8	53.1	26.0	42.1	31.9	16.5	41.6	41.9
	하	16.6	31.2	52.2	12.9	31.4	55.7	11.3	32.5	56.2	29.4	37.1	33.5	21.1	37.8	41.1
학업 성적	상	11.7	29.2	59.1	8.0	25.4	66.6	9.3	26.4	64.3	25.7	34.6	39.7	14.1	31.4	54.6
	중	11.3	34.5	54.2	9.1	32.2	58.7	10.6	34.3	55.1	26.7	38.5	34.7	17.0	39.4	43.6
	하	15.0	38.5	46.6	13.6	37.8	48.6	15.0	38.5	46.5	25.2	42.7	32.1	19.1	44.8	36.1
정치 성향	보수	18.3	29.2	52.6	14.6	32.8	52.6	19.5	31.6	48.9	28.3	35.2	36.6	21.2	34.7	44.1
	중도	12.2	35.6	52.2	9.9	33.2	56.9	11.1	34.3	54.6	25.3	39.7	35.0	16.0	40.7	43.3
	진보	12.2	24.8	63.0	9.0	22.1	69.0	9.8	22.6	67.6	25.9	24.5	49.7	12.9	23.4	63.6
부모 학력	고졸	12.1	35.9	52.0	8.8	33.7	57.5	11.6	35.5	52.8	25.6	40.3	34.1	16.9	40.6	42.4
	대졸	11.6	33.3	55.1	9.2	31.1	59.7	9.8	31.9	58.3	27.2	38.5	34.3	16.4	38.7	44.9
	대학원졸	11.4	26.9	61.7	8.0	26.4	65.6	12.3	26.7	61.0	22.1	31.3	46.5	12.1	31.8	56.2
잘모르겠음	17.1	41.3	41.6	17.1	37.8	45.1	17.0	41.9	41.1	25.1	44.0	30.9	21.8	43.0	3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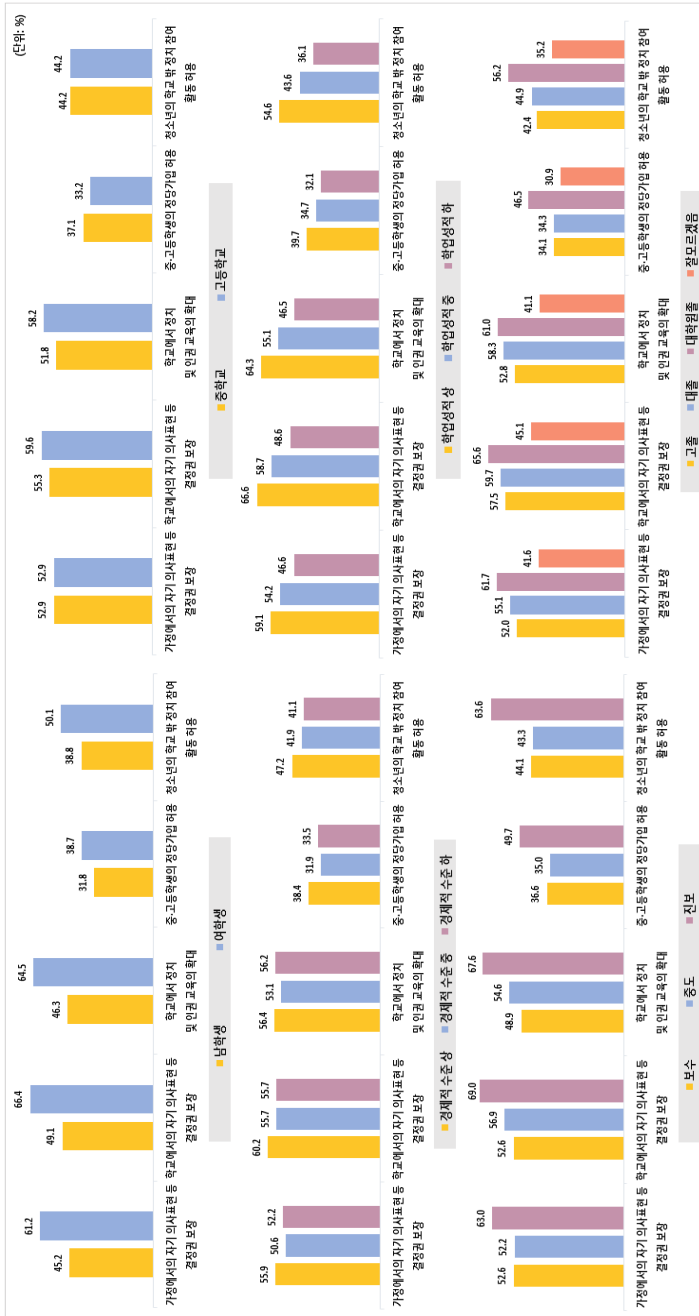


그림 V-35. 요인별 정치참여 활성화 정도(변인 수준 별)

〈표 V-44〉와 〈그림 V-35〉를 보면, 일반적으로 각 요인들이 정치참여 활성화에 중요하다고 평가한 여학생들의 비율이 남학생들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남녀 간의 차이는 중·고등학생의 정당가입 허용(여학생 38.7% 남학생 31.8%) 항목에서 가장 작았으며, 학교에서 정치 및 인권 교육의 확대(여학생 64.5% 남학생 46.3%) 항목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났다. 학교급에 따른 차이 또한 일부 항목에서 관찰되었는데, 중·고등학생의 정당가입 허용(중학교 37.1% 고등학교 33.2%)이 중요하다고 평가한 비율이 고등학생보다 중학생들에게서 더 높게 나타난 반면, 교내에서의 인권 교육 확대(고등학교 58.2% 중학교 51.8%)가 중요하다고 평가한 비율은 고등학생들에게서 비교적 높게 보고되었다.

경제적 수준에 따라 집단이 나뉠 경우, 상, 하, 중의 순으로 각 요인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관찰되었는데, 낮은 경제적 수준 집단과 중간 경제적 수준 집단의 간의 차이는 크지 않은 반면, 높은 경제적 수준 집단과 중간 경제적 수준 집단 간의 차이가 비교적 뚜렷했으며, 이는 가정에서의 결정권 보장(상 55.9% 하 52.2% 중 50.6%), 중·고등학생의 정당가입 허용(상 38.4% 하 33.5% 중 31.9%) 항목에서 나타난 양상이었다.

학업성적과 부모학력이 높을수록 해당 요인들이 중요하다고 평가하는 경향성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중·고등학생의 정당가입 허용(대학원졸 46.5% 대졸 34.3%, 고졸 34.1%) 항목에 대한 응답 비율은 대졸 부모 집단과 고졸 부모 집단에서 유사한 수준이었으나, 이를 제외한 기타 요인들에서는 학업성적 또는 부모 학력 집단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해당 요인들을 중요하다고 평가한 비율이 증가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정치성향으로 집단을 구분할 경우, 진보 성향 집단이 다른 두 집단에 비해 해당 요인들을 정치참여 활성화 요인으로 평가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타 요인들에서는 보수 성향 집단과 중도 성향 집단 간의 차이가 거의 없는 것에 비해, 학교에서의 결정권 보장(진보 69.0% 중도 56.9% 보수 52.6%)과 교내 정치

및 인권 교육 확대(진보 67.6%)중도 54.6%)보수 48.9%)에 대한 평가에서 중도 성향 집단의 비율이 보수 성향 집단에 비해 다소 높게 관찰되었다.

표 V-45. 차기 대통령이 갖추어야 할 자질_전체

(단위 : %, 평균)

주요 자질	사례수	중요하지 않다	보통 이다	중요 하다	계	평균	표준 편차
비전제시	2,801	5.6	25.1	69.3	100.0	4.02	1.01
인사능력	2,799	5.3	21.7	73.0	100.0	4.11	1.00
위기관리능력	2,802	4.2	13.2	82.6	100.0	4.44	0.94
민주적 정책결정	2,802	4.5	13.6	81.8	100.0	4.40	0.95
정책실행력	2,804	4.0	13.2	82.8	100.0	4.42	0.94
도덕성	2,806	4.8	13.1	82.0	100.0	4.41	0.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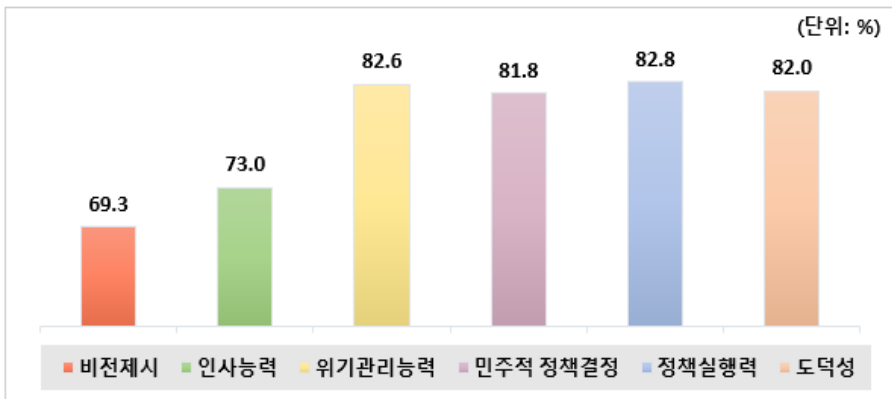


그림 V-36. 차기 대통령이 갖추어야 할 주요 자질(전체)

〈표 V-45〉와 [그림 V-36]을 보면, 청소년들은 대부분의 자질들을 차기 대통령이 갖추어야 할 중요한 자질들로 평가했다. 가장 높은 비율을 보고한 자질은 정책실행력으로 82.8%(M=4.42)의 청소년들이 중요하다고 평가하였다. 정책실행력 다음으로

위기관리능력(82.6%, $M=4.44$), 도덕성(82.0%, $M=4.42$), 민주적 정책결정(81.8%, $M=4.40$)이 높은 비율을 보고하였는데, 가장 높은 비율로 관찰된 정책 실행력과 거의 차이가 없는 수준이었다. 인사능력과 비전제시를 중요하다고 평가한 청소년들의 비율은 각각 73.0%($M=4.11$), 69.3%($M=4.02$)였는데, 이는 80%의 비율을 상회한 다른 자질들보다는 다소 낮은 수치였다.

표 V-46. 차기 대통령이 갖추어야 할 자질_변인 수준 별

(단위 : %)

배경 변인 수준	비전제시		인사능력		위기관리능력		민주적 정책결정		정책실행력		도덕성								
	중요하지 않다	중요 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 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 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 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 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 하다							
성별	남학생	8.5	27.1	64.4	8.4	24.4	67.2	6.6	15.6	77.7	7.4	16.9	75.7	6.2	16.0	77.8	7.7	16.8	75.5
	여학생	2.5	22.9	74.6	1.9	18.8	79.3	1.6	10.6	87.8	1.5	10.1	88.5	1.6	10.1	88.2	1.8	9.1	89.0
학교급	중학교	5.6	28.3	66.1	5.6	24.3	70.1	4.5	14.8	80.7	4.6	14.9	80.4	4.2	14.5	81.3	4.8	13.0	82.2
	고등학교	5.6	21.9	72.5	4.9	19.2	75.9	3.9	11.6	84.5	4.5	12.3	83.2	3.8	11.8	84.4	4.9	13.2	81.8
경제적 수준	상	5.1	23.8	71.1	5.1	20.0	74.9	3.9	12.8	83.2	4.9	13.4	81.8	4.0	12.9	83.1	4.8	13.0	82.2
	중	5.8	27.6	66.6	5.6	23.9	70.5	4.7	13.4	81.9	4.3	14.8	80.9	4.0	13.8	82.2	5.1	13.7	81.3
	하	7.3	22.5	70.2	5.4	21.5	73.1	3.7	13.7	82.6	4.3	9.9	85.8	4.3	10.6	85.1	4.8	12.0	83.2
학업 성적	상	2.8	19.3	78.0	2.7	17.2	80.1	1.9	10.2	88.0	3.0	10.0	87.0	2.3	8.3	89.3	3.5	12.2	84.3
	중	5.0	27.1	67.9	5.0	22.9	72.1	4.0	13.9	82.0	4.3	13.8	81.9	3.5	14.7	81.8	4.4	14.0	81.5
정치 성향	하	9.1	27.7	63.2	8.1	24.2	67.7	6.5	14.7	78.8	6.3	16.4	77.3	6.1	14.7	79.1	6.8	12.6	80.6
	보수	7.0	25.4	67.6	8.4	24.6	67.0	6.1	16.9	77.1	8.4	17.0	74.6	5.9	13.7	80.4	13.1	18.3	68.6
정치 성향	중도	6.3	25.9	67.8	5.6	22.5	71.8	4.6	14.1	81.2	4.9	14.4	80.7	4.3	14.4	81.3	4.7	13.7	81.6
	진보	4.9	14.4	80.8	4.0	15.0	80.9	2.5	6.9	90.6	3.0	8.9	88.1	2.5	7.5	90.0	3.4	10.1	86.4
부모 학력	고졸	5.5	30.6	63.9	5.5	26.0	68.5	4.0	14.3	81.8	4.8	13.3	81.9	4.1	13.7	82.3	4.8	12.9	82.3
	대졸	4.7	22.0	73.3	3.9	18.9	77.2	3.3	11.7	85.0	3.5	12.2	84.3	2.9	11.2	85.9	3.8	11.4	84.8
대학원졸	대학원졸	2.5	18.3	79.2	5.6	13.9	80.6	1.0	9.4	89.7	4.1	10.8	85.1	1.6	10.1	88.3	4.4	15.1	80.5
	전문대졸	11.3	34.7	54.1	9.6	32.3	58.0	10.3	19.8	69.9	8.7	21.4	69.9	9.8	21.6	68.6	9.6	18.4	7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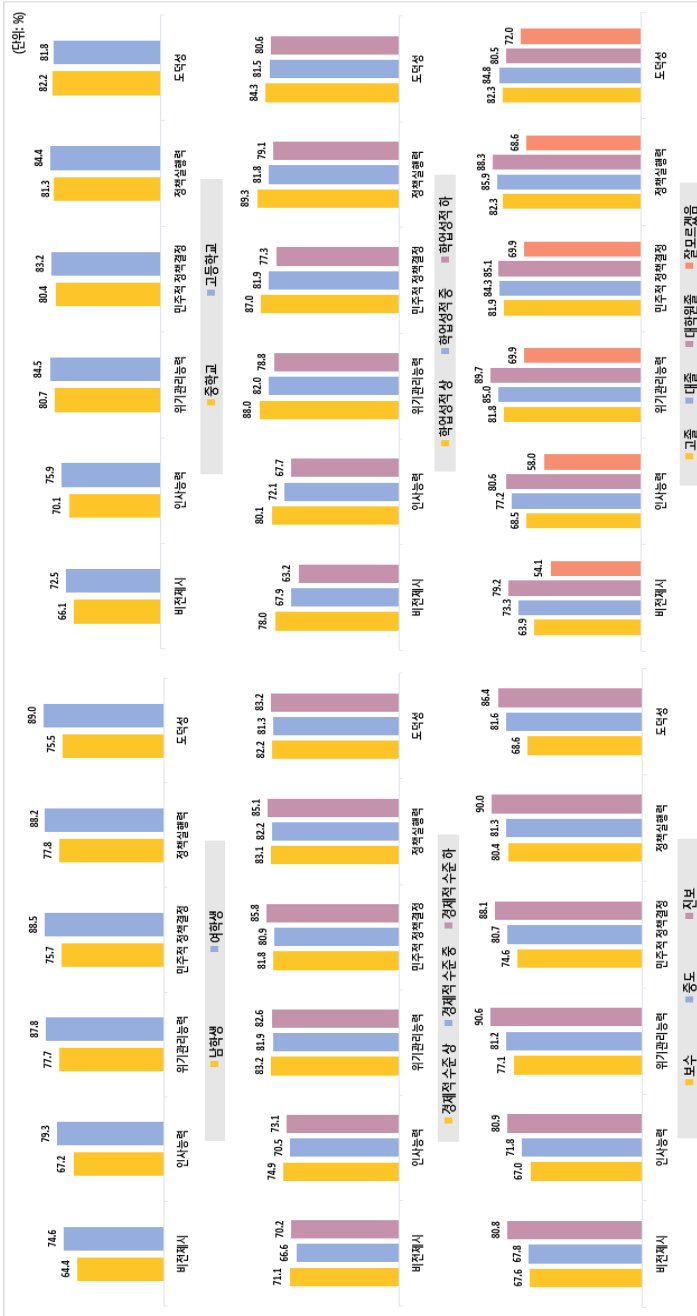


그림 V-37. 차기 대통령이 갖추어야 할 주요 자질(변인 수준 별)

<표 V-46>과 <그림 V-37>에서와 같이 남녀 집단 중 각각의 자질들을 중요하다고 평가한 비율이 높은 집단은 여학생 집단이었다. 여학생들은 대부분의 자질들을 남학생들보다 약 7~10% 가량 높은 비율로 중요하다고 평가하였으며, 특히 도덕성(여학생 89.0%>남학생 75.5%)이 중요하다고 평가한 여학생의 비율은 남학생에 비해 13.5% 높게 관찰되었다.

고등학생과 중학생의 차이는 다수의 자질에서 드러나지 않았으나, 비전제시(고등학교 72.5%>중학교 66.1%)와 인사능력(고등학교 75.9%>중학교 70.1%) 부분에서 고등학생들의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경제적 수준에 따른 차이 또한 뚜렷하게 나타났지만, 민주적 정책결정(하 85.8%>상 81.8%, 중 80.9%) 자질에 대한 중요성을 낮은 경제 수준의 집단이 여타 집단에 비해 높은 비율로 강조하였으며, 비전제시(상 71.1%, 하 70.2%>중 66.6%) 항목에서는 중간 수준의 경제력을 가진 집단이 다른 두 집단에 비해 해당 자질의 중요성을 다소 낮게 평가하였다.

학업성적의 경우, 학업성적이 높은 집단일수록 각 자질의 중요성을 높게 평가하는 경향성을 보였으며, 이는 부모학력 변인에서도 대부분 관찰된 양상이었다. 다만, 도덕성(대졸 84.8%>고졸 82.3%>대학원졸 80.5%)의 경우, 중간 수준인 대졸 부모 집단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오히려 낮은 부모학력 집단인 고졸 부모학력의 비율이 대학원졸 부모학력 집단의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정치성향에 따른 차이 또한 일정한 경향성을 띠고 있는데, 진보, 중도, 보수 순으로 해당 자질들의 중요성을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관찰되었으며, 특히 도덕성(진보 86.4%>중도 81.6%>보수 68.6%)에 대한 중요도 평가는 보수 성향 집단의 응답 비율이 진보 성향 집단에 비해 약 18%나 낮게 보고되었다.

표 V-47. 차기 대통령이 발전시켜주길 희망하는 분야_전체

(단위 : %, 평균)

분야	사례수	중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중요하다	계	평균	표준편차
행정	2,806	5.9	25.2	68.9	100.0	3.98	1.01
외교	2,803	5.5	22.2	72.3	100.0	4.10	1.01
통일안보	2,800	12.5	29.2	58.4	100.0	3.75	1.16
경제	2,802	4.4	15.5	80.1	100.0	4.29	0.96
교육	2,805	5.0	14.2	80.7	100.0	4.32	0.98
과학기술	2,800	5.9	22.4	71.8	100.0	4.08	1.01
사회복지	2,807	5.8	18.7	75.5	100.0	4.17	1.01
문화예술체육	2,807	8.1	27.6	64.3	100.0	3.91	1.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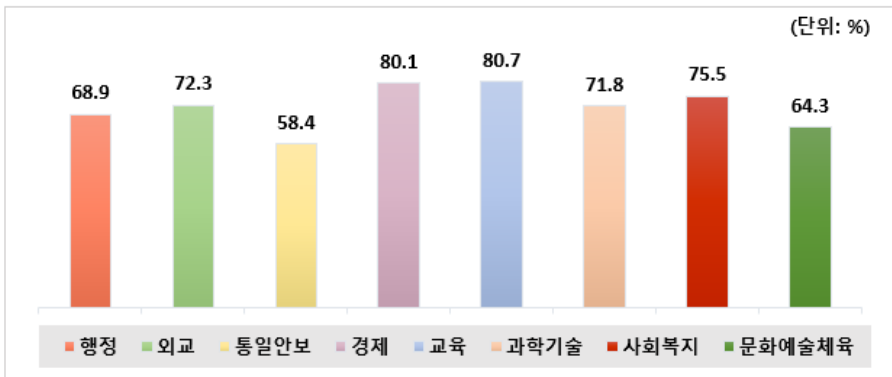


그림 V-38. 차기 대통령이 발전시켜주길 희망하는 분야별 중요도(전체)

<표 V-47>과 [그림 V-38]에서 차기 대통령이 발전시켜주길 희망하는 분야 중, 청소년들이 가장 높은 비율로 그 중요도를 평가한 분야는 교육(80.7%, $M=4.32$) 분야였으며, 경제(80.1%, $M=4.29$) 분야 또한 교육과 유사한 수준의 비율로 보고되었다. 사회복지(75.5%, $M=4.17$), 외교(72.3%, $M=4.10$), 과학기술

(71.8%, M=4.08) 분야가 그 뒤를 이었으며, 해당 분야 모두 70% 이상의 청소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야였다. 행정(68.9%, M=3.98), 문화예술체육(64.3%, M=3.91), 통일안보(58.4%, M= 3.75) 분야의 경우, 청소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다른 분야들에 비해 비교적 낮았는데, 특히 통일안보 분야를 차기 대통령이 발전시켜주길 바란 청소년의 비율은 모든 분야를 통틀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48. 차기 대통령이 발전시켜주길 희망하는 분야_변인 수준 별

(단위 : %)

배경 변인 수준	행정						외교						통일안보						경제					
	중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중요하다	
성별	남학생	9.2	27.5	63.4	8.5	24.7	66.8	16.6	29.8	53.6	6.9	18.2	74.8											
	여학생	2.4	22.8	74.8	2.3	19.5	78.2	8.0	28.5	63.5	1.7	12.5	85.8											
학교급	중학교	6.9	28.8	64.3	6.4	24.3	69.3	12.3	29.1	58.6	5.2	16.8	78.0											
	고등학교	4.9	21.7	73.4	4.6	20.1	75.3	12.6	29.2	58.2	3.7	14.1	82.2											
경제적 수준	상	6.0	24.6	69.4	5.3	21.4	73.3	12.6	27.8	59.6	4.3	15.3	80.4											
	중	6.0	26.4	67.6	6.0	23.1	70.9	12.3	29.5	58.2	4.4	15.9	79.7											
	하	5.2	24.1	70.7	4.1	20.8	75.2	12.2	29.7	58.1	4.7	14.6	80.7											
학업 성적	상	4.6	20.8	74.6	3.5	16.2	80.3	13.3	23.6	63.1	2.9	12.1	85.0											
	중	4.4	26.3	69.3	4.3	24.1	71.5	10.3	30.5	59.2	3.7	16.3	80.0											
	하	9.3	28.0	62.7	8.8	24.2	67.0	14.8	30.8	54.4	6.7	17.3	76.0											
정치 성향	보수	11.1	21.5	67.4	10.0	20.0	70.0	21.1	27.2	51.8	6.0	12.9	81.1											
	중도	6.1	26.1	67.7	5.6	22.5	71.9	11.6	30.3	58.1	4.5	16.2	79.4											
	진보	3.9	16.4	79.7	3.3	13.5	83.2	17.5	18.4	64.1	3.7	9.9	86.4											
부모 학력	고졸	5.0	29.6	65.5	4.8	25.2	69.9	11.8	32.8	55.5	2.5	19.3	78.2											
	대졸	4.6	22.6	72.8	4.3	18.8	76.9	11.6	25.8	62.6	3.8	11.3	84.9											
	대학원졸	5.4	22.0	72.6	4.3	19.3	76.5	16.4	23.4	60.2	3.4	13.3	83.3											
잘모르겠음	12.0	31.3	56.6	11.4	31.2	57.4	13.6	38.6	47.9	10.2	26.8	63.0												

표 V-48. 차기 대통령이 발전시켜주길 희망하는 분야_변인 수준 별(표 계속)

(단위 : %)

	교육						과학기술			사회복지			문화예술체육					
	중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중요하다	
성별	남학생	7.7	17.1	75.2	7.9	22.4	69.7	9.1	22.7	68.2	11.4	29.3	59.2					
	여학생	2.1	11.2	86.7	3.7	22.3	74.1	2.2	14.5	83.3	4.5	25.8	69.7					
학교급	중학교	5.7	15.3	79.0	6.7	24.3	69.0	6.8	20.5	72.7	8.4	28.6	63.0					
	고등학교	4.3	13.2	82.4	5.1	20.4	74.5	4.7	17.0	78.3	7.8	26.6	65.6					
경제적 수준	상	5.1	13.1	81.8	6.0	21.9	72.1	6.3	17.3	76.4	8.9	26.3	64.8					
	중	4.5	16.1	79.4	5.6	22.6	71.8	5.0	20.6	74.4	7.0	29.5	63.5					
	하	6.4	12.3	81.3	6.0	23.0	71.0	6.2	17.8	76.0	8.8	23.8	67.5					
학업 성적	상	3.6	10.0	86.5	4.1	17.0	78.9	5.6	15.7	78.7	9.0	26.5	64.5					
	중	4.6	15.3	80.2	5.7	22.7	71.6	5.0	19.4	75.6	7.4	27.5	65.2					
	하	6.8	16.6	76.6	7.4	26.5	66.1	6.9	20.5	72.6	8.0	28.0	64.0					
정치 성향	보수	6.0	12.5	81.5	8.5	17.8	73.7	13.3	20.3	66.4	14.9	25.5	59.6					
	중도	5.1	14.8	80.2	6.1	23.9	70.0	5.3	20.1	74.6	7.7	28.7	63.7					
	진보	5.3	8.9	85.7	4.0	14.3	81.7	7.4	13.0	79.6	10.1	22.2	67.7					
부모 학력	고졸	3.3	17.7	79.0	5.5	24.5	70.0	4.1	20.6	75.3	6.3	30.7	63.0					
	대졸	3.7	11.6	84.8	5.2	20.4	74.3	4.5	16.4	79.0	7.7	23.7	68.6					
	대학원졸	5.7	9.7	84.5	4.2	18.8	77.1	8.5	13.8	77.7	8.6	30.1	61.3					
잘모르겠음	11.6	22.9	65.5	9.4	29.3	61.2	10.5	28.5	61.0	11.2	33.8	55.0						

〈표 V-48〉과 〈그림 V-39〉에서 성별 특성에 따른 차이의 경우, 차기 대통령이 발전시켜주길 희망하는 각 분야의 중요도를 더 높게 평가한 집단은 여학생들이었다. 여학생과 남학생의 차이가 가장 작게 나타난 분야는 과학기술(여학생 74.1%>남학생 69.7%) 분야였으며, 사회복지(여학생 83.3%>남학생 68.2%) 분야에서 드러난 성별에 따른 차이는 약 15%로 모든 분야에서 관찰된 남녀 차이 중 가장 두드러졌다.

학교급에 따른 차이도 대부분의 분야에서 나타났는데, 일반적으로 고등학생들이 각 분야의 중요도를 더욱 높게 평가하는 경향성을 보였으며, 행정(고등학교 73.4%>중학교 64.3%), 외교(고등학교 75.3%>중학교 69.3%) 분야에서 그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난 반면, 통일안보(고등학교 58.2%, 중학교 58.6%) 분야에서는 교급에 따른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경제적 수준을 변인으로 관찰했을 때는 집단 간의 차이가 거의 드러나지 않았지만, 학업성적으로 집단을 구분할 경우, 높은 학업성적 집단일수록 각 분야에 대한 중요도를 높게 평가하는 경향성이 나타났다. 다만 문화예술체육(상 64.5%, 중 65.2%, 하 64.0%) 분야에서는 학업성적에 의한 집단 간의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부모학력에 따른 차이 또한 일정한 경향성을 보였는데, 학업성적 변인의 경우 상, 중, 하 집단의 구분이 비교적 뚜렷했던 반면, 부모학력에 따른 구분에서는 상(대학원졸), 중(대졸) 집단 간의 차이가 비교적 미미한 수준이었다. 즉, 대부분의 분야에 대해 부모학력 하(고졸) 집단의 비율이 다른 두 집단에 비해 두드러지게 낮게 보고되었다. 다만 문화예술체육(대졸 68.6%>고졸 63.0%, 대학원졸 61.3%) 분야의 경우, 대졸 부모 집단의 비율이 다른 두 부모학력 집단의 비율보다 다소 높게 관찰되었다.

정치성향에 따른 비율의 차이는 대부분의 분야에서 진보, 중도, 보수 성향 집단 순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특히 중도와 보수의 차이가 거의 나지 않은 경제(진보 86.4%>보수 81.1%, 중도 79.4%)와 교육(진보 85.7%>보수 81.5%, 중도 80.2%)

분야를 제외하면, 각 분야에서 보고된 진보 성향 집단과 보수 성향 집단의 비율 차이는 약 7~13%로 다소 현저하게 드러났다.

표 V-49. 현행 정부에서 해결돼야 할 청소년 관련 문제_전체

(단위 : %, 평균)

청소년 관련 문제	사례수	시급하지 않다	보통이다	시급하다	계	평균	표준편차
입시위주의 교육문제	2,804	8.7	24.7	66.7	100.0	3.96	1.09
선거권연령 하향	2,798	35.4	42.6	22.1	100.0	2.81	1.10
학교폭력문제	2,803	6.5	18.9	74.6	100.0	4.12	1.03
게임중독문제	2,799	21.7	30.2	48.1	100.0	3.39	1.23
안전문제	2,796	8.1	27.8	64.1	100.0	3.85	1.03
학교 밖 청소년 등 위기청소년 문제	2,801	8.2	24.1	67.7	100.0	3.93	1.05
청소년자살 문제	2,803	4.8	13.7	81.4	100.0	4.34	0.97
학생인권 문제	2,801	7.2	21.7	71.1	100.0	4.05	1.05
청소년대상 성폭력 문제	2,802	5.6	16.8	77.6	100.0	4.24	1.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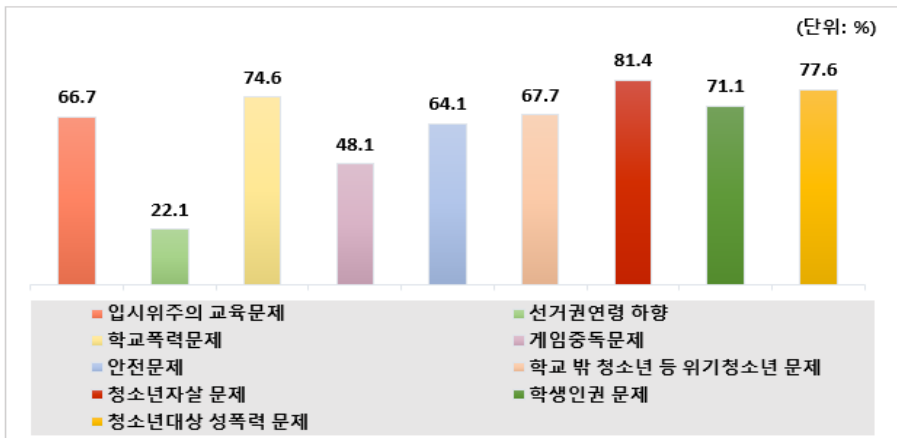


그림 V-40. 현행 정부에서 해결돼야 할 청소년 관련 문제 수급 정도(전체)

〈표 V-49〉와 [그림 V-40]에서 나타나듯 전체 청소년 중 80%가 넘는 청소년들이 청소년자살(81.4%, $M=4.34$)이 현행 정부에서 해결돼야 할 시급한 문제라고 응답했으며, 이는 전체 청소년 관련 문제 중 가장 높은 비율이었다. 그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보고한 문제는 청소년대상 성폭력 문제(77.6%, $M=4.24$)와 학교폭력 문제(74.6%, $M=4.12$), 그리고 학생인권 문제(71.1%, $M=4.05$) 순이었으며, 모두 70% 이상의 청소년들이 시급하다고 판단한 청소년 관련 문제들이었다. 위기청소년 문제(67.7%, $M=3.93$), 입시위주의 교육문제(66.7%, $M=3.96$), 안전문제(64.1%, $M=3.85$) 등이 그 뒤를 따랐으며, 게임중독문제(48.1%, $M=3.39$)와 선거권연령 하향(22.1%, $M=2.81$) 문제가 시급하다고 평가한 청소년의 비율은 절반에 미치지 못했는데, 특히 선거권연령 하향 문제가 시급하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비율은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한 청소년자살 문제에 비해 약 60% 낮은 수치인 22.1%에 머물렀다.

표 V-50. 현행 정부에서 해결돼야 할 청소년 관련 문제_관련 문제_변인 수준 별

(단위 : %)

배경 변인 수준	입시위주의 교육문제			선거권연령 하향			학교폭력문제			게임중독문제			안전문제			
	시급하지 않다	시급하다	보통이다	시급하지 않다	시급하다	보통이다	시급하지 않다	시급하다	보통이다	시급하지 않다	시급하다	보통이다	시급하지 않다	시급하다	보통이다	
성별	남학생	12.7	28.9	58.5	37.7	40.8	21.5	10.7	25.0	64.3	30.9	29.2	39.9	11.3	32.1	56.6
	여학생	4.4	20.1	75.5	32.8	44.5	22.7	2.0	12.2	85.7	11.9	31.2	56.9	4.6	23.2	72.3
학교급	중학교	11.8	30.7	57.5	32.3	44.7	23.0	6.0	15.7	78.3	19.0	28.0	53.0	8.2	25.0	66.8
	고등학교	5.6	18.7	75.7	38.3	40.5	21.2	7.1	22.0	71.0	24.5	32.3	43.2	7.9	30.5	61.5
경제적 수준	상	8.9	23.5	67.5	34.9	42.3	22.8	5.9	19.0	75.1	21.9	28.8	49.3	8.2	27.2	64.6
	중	7.9	26.9	65.2	36.1	43.4	20.5	7.0	19.6	73.3	20.9	31.9	47.3	7.3	29.2	63.5
	하	10.5	21.7	67.8	37.7	40.9	21.3	7.2	15.3	77.5	24.5	27.7	47.8	10.8	26.1	63.2
학업 성적	상	6.8	18.5	74.7	36.8	38.5	24.7	4.9	15.2	79.9	23.4	26.5	50.1	8.1	26.0	65.9
	중	8.3	25.3	66.4	35.4	42.9	21.7	6.4	19.8	73.8	19.6	31.1	49.3	7.3	25.9	66.8
	하	11.0	29.6	59.4	34.9	46.1	19.1	8.1	20.7	71.1	23.4	31.4	45.2	9.2	32.4	58.4
정치 성향	보수	9.7	29.6	60.7	39.7	36.7	23.6	14.1	20.1	65.8	36.6	24.5	38.9	14.0	24.4	61.6
	중도	9.0	26.0	65.0	34.6	44.0	21.4	6.3	20.0	73.7	20.4	30.8	48.7	8.3	29.0	62.8
	진보	4.0	13.6	82.4	36.2	33.1	30.8	6.4	17.8	75.8	27.5	26.7	45.8	6.7	26.1	67.2
부모 학력	고졸	8.8	30.8	60.4	36.5	44.4	19.1	5.1	17.8	77.1	18.8	33.6	47.6	6.0	28.8	65.3
	대졸	7.2	21.8	71.0	36.3	41.3	22.4	5.8	18.7	75.6	21.1	28.4	50.6	7.9	26.8	65.3
	대학원졸	6.3	15.4	78.3	35.1	39.1	25.8	5.7	19.7	74.6	21.5	30.3	48.2	6.5	31.3	62.2
잘모르겠음	15.3	34.5	50.2	32.6	49.2	18.2	12.2	20.9	66.9	28.5	31.3	40.2	13.3	28.3	58.4	

표 V-50. 현행 정부에서 해결돼야 할 청소년 관련 문제_변인 수준 별(표 계속)

(단위 : %)

배경 변인 수준	학교 밖 청소년 등 위기청소년 문제						청소년자살 문제			학생인권 문제			청소년대상 성폭력 문제			
	시급하지 않다		보통이다		시급하다		시급하지 않다	보통이다		시급하다		시급하지 않다	보통이다		시급하다	
	시급하지 않다	보통이다	시급하다	시급하지 않다	보통이다	시급하다	시급하지 않다	보통이다	시급하다	시급하지 않다	보통이다	시급하다	시급하지 않다	보통이다	시급하다	
성별	남학생	12.3	29.8	57.9	7.9	18.2	73.8	11.4	26.5	62.1	9.6	23.5	66.9			
	여학생	3.8	17.9	78.3	1.5	8.9	89.7	2.6	16.6	80.8	1.3	9.5	89.2			
학교급	중학교	7.8	22.5	69.6	4.8	13.3	81.9	7.2	20.6	72.2	5.8	15.6	78.6			
	고등학교	8.6	25.6	65.8	4.9	14.2	81.0	7.2	22.8	70.0	5.4	18.0	76.6			
경제적 수준	상	7.8	24.1	68.1	4.7	13.0	82.4	6.8	21.1	72.1	5.2	16.3	78.5			
	중	8.3	24.5	67.2	4.5	14.9	80.6	6.6	23.4	70.0	5.7	18.5	75.8			
	하	10.2	24.2	65.6	6.3	12.4	81.3	10.1	19.3	70.6	7.3	12.2	80.5			
학업 성적	상	7.5	22.8	69.7	4.0	11.5	84.5	6.2	21.6	72.3	4.5	14.0	81.5			
	중	7.6	23.0	69.3	4.0	13.6	82.4	6.4	21.4	72.2	4.9	16.3	78.8			
	하	9.6	27.5	62.9	6.6	16.0	77.4	8.7	22.6	68.7	7.7	20.0	72.3			
정치 성향	보수	15.9	23.5	60.6	12.2	13.3	74.5	16.8	19.7	63.6	14.9	16.1	69.0			
	중도	7.7	24.9	67.4	4.4	15.1	80.5	6.1	23.3	70.6	5.1	18.8	76.0			
	진보	7.9	21.8	70.2	5.4	8.9	85.6	6.5	15.1	78.5	5.4	11.3	83.3			
부모 학력	고졸	7.9	24.0	68.1	3.2	16.5	80.3	6.0	21.3	72.7	4.9	16.2	78.9			
	대졸	7.4	23.1	69.5	4.1	11.9	84.0	6.3	21.4	72.3	4.7	15.9	79.4			
	대학원졸	4.9	23.4	71.7	4.4	12.8	82.9	5.2	21.7	73.0	5.1	18.5	76.4			
	잘모르겠음	13.8	30.4	55.7	9.4	17.9	72.6	12.2	25.6	62.2	10.7	19.9	6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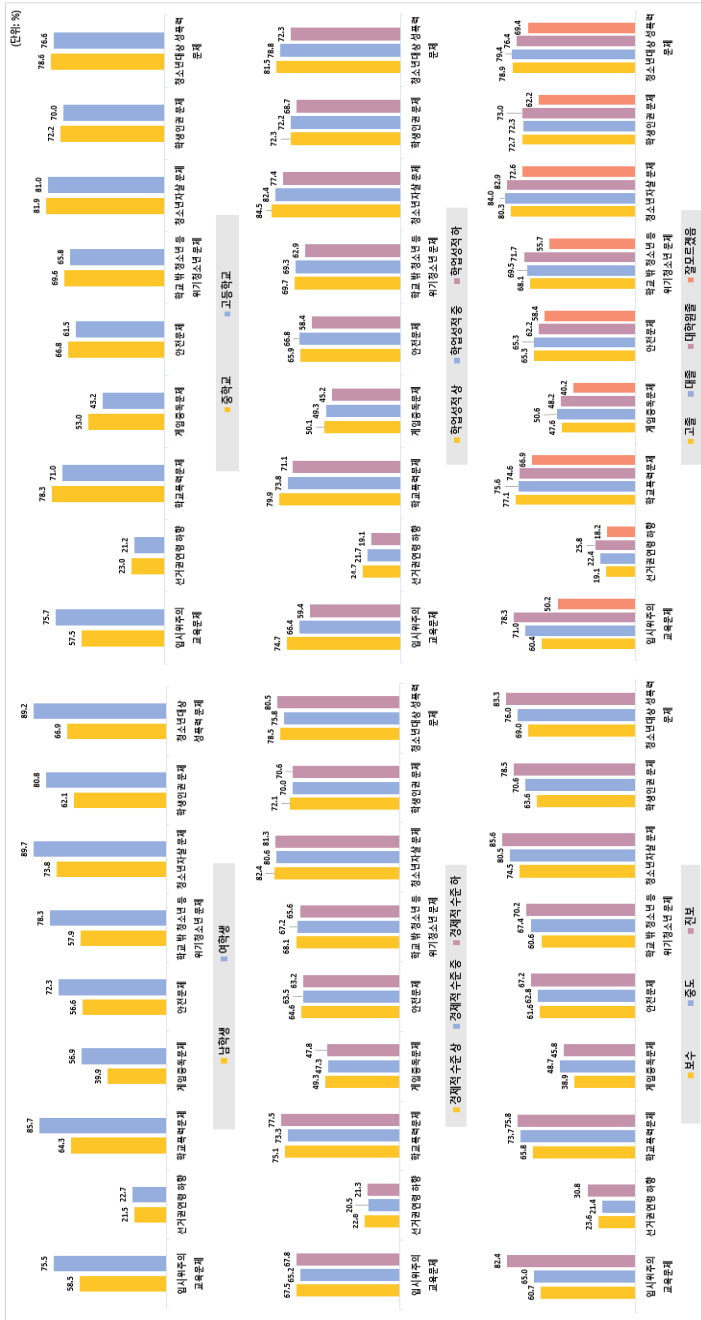


그림 V-41. 현행 정부에서 해결되어야 할 청소년 관련 문제 수급 정도(변인 수준 별)

현정부의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평가한 여학생들의 비율이 남학생들에 비해 청소년 관련 문제 전반에 걸쳐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경향성이 관찰되지 않은 현안은 선거권연령 하향(여학생 22.7%, 남학생 21.5%)이 유일했다. 남녀 간의 차이는 약 16~23% 수준으로 꽤나 현저했으며, 특히 청소년대상 성폭력 문제(여학생 89.2%)남학생 66.9%)의 경우 거의 90%에 가까운 여학생들이 시급한 문제라고 평가한 반면, 남학생의 약 67%만이 시급하다고 응답해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학교급에 따른 차이를 볼 경우, 대부분의 문제에 대해 고등학생들보다 중학생들이 시급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학교폭력문제(중학교 78.3%)고등학교 71.0%)와 게임중독문제(중학교 53.0%)고등학교 43.2%)에서 그 차이가 두드러졌다. 다만, 입시위주의 교육문제(고등학교 75.7%)중학교 57.5%) 해결이 시급하다고 응답한 고등학생들의 비율은 중학생들에 비해 약 18%나 높은 수치를 보고하였다. 경제적 수준에 따른 차이는 거의 관찰되지 않았으나, 청소년 성폭력 문제(하 80.5%, 상 78.5%)중 75.8)에 대해서는 중간 경제수준 집단의 비율이 다른 두 집단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났다.

학업성적으로 집단을 나눌 경우, 학업성적이 높은 집단일수록 해당 문제의 해결이 시급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높은 학업성적 집단과 중간 학업성적 집단의 차이는 크지 않은 항목들이 많았으며, 낮은 학업성적 집단의 낮은 비율이 두드러진 항목은 입시위주의 교육문제(상 74.7%)중 66.4%)하 59.4%)와 청소년 대상 성폭력 문제(상 81.5%)중 78.8%)하 72.3%)였다.

부모학력에 따른 차이는 현안에 따라 비교적 다양한 양상을 보였는데, 입시위주의 교육문제(대학원졸 78.3%)대졸 71.0%)고졸 60.4%)와 선거권연령 하향(대학원졸 25.8%)대졸 22.4%)고졸 19.1%) 문제에 대해서는 부모학력이 높을수록 해당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반면, 학교폭력문제(고졸 77.1%)대졸 75.6%)대학원졸 74.6%)와 청소년대상 성폭력 문제(고졸 78.9%, 대졸

79.4%>대학원졸 76.4%)에 대해서 미세하게나마 가장 학력이 높은 부모를 둔 집단의 응답 비율이 세 집단 중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정치성향으로 집단을 나눌 경우, 현안 해결이 시급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집단은 대부분 진보 성향 집단이었으며, 보수 성향 집단이 가장 낮은 비율로 해결이 시급하다고 대부분의 현안에 대해 응답하였다.

표 V-51. 공공(민간)기관에 대한 신뢰_전체

(단위 : %, 평균)

기관	사례수	신뢰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신뢰한다	계	평균	표준편차
중앙정부	2,801	30.1	46.9	23.0	100.0	2.86	1.00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	2,801	29.1	50.7	20.2	100.0	2.84	0.94
정당	2,803	36.0	48.3	15.6	100.0	2.69	0.95
국회	2,801	34.6	43.3	22.1	100.0	2.80	1.04
언론기관	2,802	39.3	43.3	17.3	100.0	2.67	1.01
시민단체(NGO)	2,803	24.7	46.4	28.9	100.0	3.01	1.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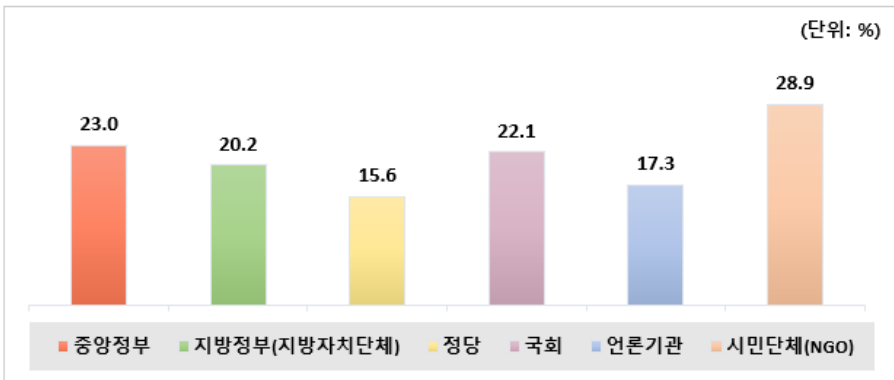


그림 V-42. 공공(민간)기관에 대한 신뢰 정도(전체)

〈표 V-51〉와 [그림 V-42]에서와 같이 공공(민간)기관에 대한 청소년들의 신뢰도는 대체적으로 낮게 보고되었다. 전체 기관 중 가장 높은 신뢰도를 보고한 기관은 시민단체(NGO)(28.9%, $M=3.01$)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30%에 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으며, 중앙정부(23.0%, $M=2.86$), 국회(22.1%, $M=2.80$), 지방 정부(20.2%, $M=2.84$)에 대한 신뢰도가 그 다음으로 높게 조사되었으나, 그 또한 20%를 갓 넘어선 수치였다. 언론기관(17.3%, $M=2.67$)과 정당(15.6%, $M=2.69$)에 대한 신뢰도는 여타 기관들에 비해 더욱 낮은 신뢰도를 보고하였으며, 특히 정당에 대한 청소년들의 신뢰도는 전체 기관 중 가장 낮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표 V-52. 공공(민간)기관에 대한 신뢰_변인 수준 별

(단위 : %)

배경 변인 수준	중앙정부			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당			국회			언론기관			시민단체(NGO)			
	신뢰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신뢰한다	신뢰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신뢰한다	신뢰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신뢰한다	신뢰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신뢰한다	신뢰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신뢰한다	신뢰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신뢰한다	
성별	남학생	21.4	43.0	21.4	35.0	46.6	18.5	40.4	45.0	14.7	38.4	40.4	21.2	41.5	42.3	16.3	31.8	43.7	24.4
	여학생	24.8	51.0	24.8	22.7	55.2	22.1	31.4	51.9	16.7	30.4	46.5	23.1	37.0	44.5	18.5	16.9	49.4	33.7
학교급	중학교	24.3	47.7	24.3	26.4	50.2	23.3	31.4	50.4	18.2	31.6	41.6	26.8	36.0	44.6	19.4	22.2	45.6	32.2
	고등학교	21.8	46.0	21.8	31.7	51.2	17.1	40.7	46.2	13.1	37.5	45.0	17.5	42.5	42.1	15.4	27.1	47.2	25.6
경제적 수준	상	25.8	45.8	25.8	27.6	49.0	23.4	35.2	46.8	18.0	32.6	42.7	24.7	37.2	42.9	19.9	22.8	45.0	32.2
	중	21.6	48.7	21.6	29.0	52.2	18.7	34.9	50.0	15.0	33.6	45.7	20.7	39.3	44.4	16.3	25.8	47.8	26.4
	하	19.2	42.9	19.2	37.4	48.2	14.5	46.9	43.2	9.9	44.8	35.8	19.3	46.7	40.9	12.4	30.6	40.8	28.6
학업 성적	상	29.9	39.4	29.9	27.7	45.5	26.8	40.0	40.8	19.2	35.2	39.9	24.9	40.9	38.5	20.6	23.6	40.9	35.6
	중	24.1	48.3	24.1	27.3	51.7	21.0	33.5	49.5	17.0	32.4	44.0	23.6	37.6	44.5	17.9	22.9	47.3	29.8
정치 성향	보수	12.6	36.5	12.6	42.1	45.0	12.8	48.8	40.4	10.8	49.4	34.5	16.1	53.4	33.4	13.3	46.0	32.0	21.9
	중도	23.7	47.5	23.7	28.4	51.2	20.5	35.0	49.2	15.8	33.4	44.3	22.4	37.7	44.5	17.8	23.9	47.9	28.2
부모 학력	진보	35.9	31.0	35.9	34.8	37.7	27.4	47.4	34.7	17.9	41.2	31.4	27.4	46.2	30.3	23.4	22.7	32.9	44.4
	고졸	21.3	49.4	21.3	28.2	53.4	18.4	33.4	52.1	14.6	32.0	46.1	21.9	35.7	48.0	16.3	24.7	47.6	27.7
대졸 학력	대졸	25.5	44.7	25.5	29.1	48.1	22.8	37.2	46.0	16.8	34.4	41.6	24.0	40.0	40.6	19.4	24.4	45.1	30.4
	대학원졸	24.5	43.7	24.5	31.7	47.7	20.6	43.0	41.7	15.4	40.5	38.3	21.2	43.8	39.3	16.9	22.4	44.2	33.4
잘모르겠음	17.0	52.7	17.0	29.8	56.3	13.9	33.2	53.3	13.5	33.6	49.0	17.4	37.1	50.0	12.9	28.3	47.6	24.1	

각 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도는 남학생들보다 여학생들에게서 높게 나타났으나, 그 차이는 2~4% 내외로 크게 두드러지지는 않았다. 다만 시민단체(NGO)(여학생 33.7%)남학생 24.4%)에 대한 남녀 간의 신뢰도 차이는 약 10%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학교급에 따른 차이 또한 일관적인 양상을 보였는데, 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고등학생보다 중학생들에게서 높게 관찰되었다. 특히 지방정부(중학교 23.3%)고등학교 17.1%), 정당(중학교 18.2%)고등학교 13.1%), 국회(중학교 26.8%)고등학교 17.5%), 시민단체(중학교 32.2%)고등학교 25.6%)에서 나타난 고등학생들의 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중학생들에 비해 뚜렷하게 낮은 편이었다.

경제적 수준과 학업성적은 기관에 대한 신뢰도에 유사한 경향으로 반영되었는데, 경제적 수준 또는 학업성적이 높은 청소년 집단일수록 기관에 대해 높은 신뢰도를 보고하는 양상을 보고하였다. 특히 경제수준에 따른 정당(상 18.0%)중 15.0%)하 9.9%)과 지방정부(상 23.4%)중 18.7%)하 14.5%)에 대한 신뢰도 차이는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의 차이에서 비교적 크게 나타났으며, 학업성적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의 차이는 중앙정부(상 29.9%)중 24.1%)하 16.2%), 지방정부(상 26.8%)중 21.0%)하 14.1%), 시민단체(상 35.6%)중 29.8%)하 23.1%)에 대한 신뢰도에서 두드러지게 관찰되었다.

부모학력의 수준은 기관에 대한 신뢰도에 크게 반영되지 않았는데, 시민단체(대학원졸 33.4%, 대졸 30.4%)고졸 27.7%)에 대한 고졸 부모 집단의 신뢰도가 여타 부모학력 집단의 신뢰도가 미세하게나마 낮게 보고되었다. 정치성향의 경우, 진보 성향 집단의 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세 집단 중 가장 두드러졌는데, 특히 중앙정부(진보 35.9%)중도 23.7%)보수 12.6%), 지방정부(진보 27.4%)중도 20.5%)보수 12.8%), 시민단체(진보 44.4%)중도 28.2%)보수 21.9%)에 대한 진보 성향 집단의 신뢰도는 보수 성향 집단이 평가한 각 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2배 이상 상회하였다.

표 V-53. 2021 지방보궐 선거(서울 / 부산) 참여 여부_변인 수준 별

(단위 : %)

배경 변인 수준		사례수	했다	안했다	투표권 없음
전체		93	12.4	21.0	66.6
성별	남학생	31	11.7	17.5	70.8
	여학생	62	12.8	22.8	64.4
학교급	고등학교	93	12.4	21.0	66.6
경제적 수준	상	48	12.6	13.0	74.4
	중	34	6.0	26.9	67.0
	하	11	32.3	31.4	36.3
학업 성적	상	27	12.4	2.2	85.4
	중	42	10.1	22.3	67.6
	하	23	17.0	37.4	45.6
정치 성향	보수	7	0.0	0.0	100.0
	중도	57	11.2	19.9	68.9
	진보	7	16.0	34.6	49.4
부모 학력	고졸	21	16.9	33.9	49.2
	대졸	52	13.1	16.6	70.3
	대학원졸	13	8.8	4.3	86.9
	잘모르겠음	7	0.0	48.8	51.2

〈표 V-53〉과 〈그림 V-44〉를 보면 2021 지방보궐 선거에 참여 여부에 응답한 청소년의 수는 93명에 불과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투표권이 없는 청소년의 비율이 66.6%에 달했다. 투표권이 있는 청소년 중 2021 지방보궐 선거에 참여한 청소년의 비율은 12.4%로 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청소년의 비율인 21.0%보다 낮게 보고되었다. 남녀 간의 투표율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으나, 경제적 수준에 따른 차이에서는 하, 상, 중의 순서로 높은 투표율을 보고하였다(하 32.3% > 상 12.6% > 중 6.0%). 이와 유사한 경향성은 학업성적 변인에서도 유사하게 관찰되었는데, 낮은 학업성적 집단이 17.0%, 높은 학업성적 집단이 12.4%, 중간 학업성적 집단이

10.1%의 투표율을 각각 보고하였다. 부모학력 변인의 경우, 부모의 학력이 낮은 수준일수록 높은 투표율이 나타났다(고졸 16.9% > 대졸 13.1% > 대학원졸 8.8%). 정치성향에 따른 투표율의 차이 또한 관찰되었는데, 보수 성향 집단에 속한 청소년 중 투표에 참여한 인원은 없었으며, 중도 성향 집단은 11.2%, 진보 성향 집단은 16.0%의 투표율을 각각 보고하였다. 다만, 이상의 결과들은 매우 적은 수의 표본과 집단 간의 표본 수가 상이한 조사의 관측치들로 해석상의 주의를 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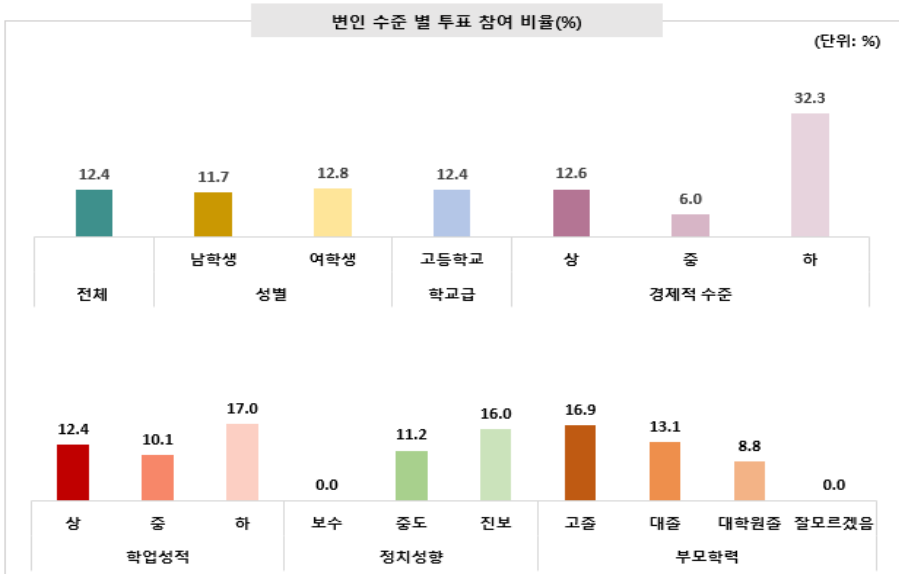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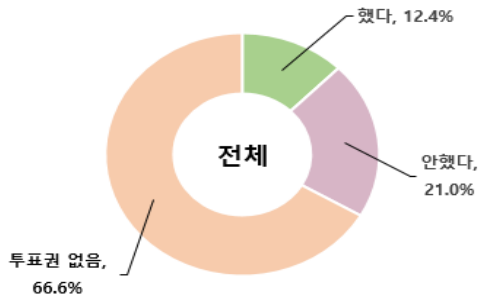


그림 V-44. 지방보궐 선거(서울 / 부산) 참여 비율(변인 수준 별)

표 V-54. 2021 지방보궐 선거(서울 / 부산) 후보자 선택 기준_변인 수준 별

(단위 : %)

배경 변인 수준	사례수	후보자가 제시한 공약	후보자가 속한 정당	후보자의 능력	후보자의 이미지	
전체	12	42.1	29.0	16.3	12.5	
성별	남학생	4	28.6	35.7	35.7	0.0
	여학생	8	48.3	26.0	7.5	18.2
학교급	고등학교	12	42.1	29.0	16.3	12.5
경제적 수준	상	6	34.5	34.5	21.5	9.6
	중	2	28.1	0.0	29.3	42.6
	하	4	63.4	36.6	0.0	0.0
학업 성적	상	3	0.0	82.7	0.0	17.3
	중	4	41.6	14.1	44.3	0.0
	하	4	78.0	0.0	0.0	22.0
정치 성향	보수	-	-	-	-	-
	중도	6	34.5	42.7	9.3	13.5
	진보	1	0.0	51.0	0.0	49.0
부모 학력	고졸	4	58.5	41.5	0.0	0.0
	대졸	7	40.9	18.8	27.5	12.7
	대학원졸	1	0.0	51.0	0.0	49.0

2021 지방 보궐 선거에 참여한 12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표 V-54>과 <그림 V-45>에서 나타나듯 후보자가 제시한 공약(42.1%)을 기준으로 후보자를 선택한 청소년들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후보자가 속한 정당(29.0%)을 기준으로 투표에 임한 청소년들의 비율이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후보자의 능력(16.3%) 또는 후보자의 이미지(12.5%)를 통해 후보를 선택한 학생의 비율은 비교적 낮게 보고되었다. 모든 후보자 선택 기준에 걸쳐 남녀의 차이가 드러났는데, 공약(여학생 48.3%)남학생 28.6%)이나 후보자의 이미지(여학생 18.2%)남학생 0%)를 기준으로 후보를 선택한 비율은 여학생들에게 높게 나타났으나, 후보자의 정당(남학생 35.7%)여학생 26.0%) 또는 능력(남학생 35.7%)여학생 7.5%)을 기준으로 후보를 선택한 비율은 남학생들에게서 높게 관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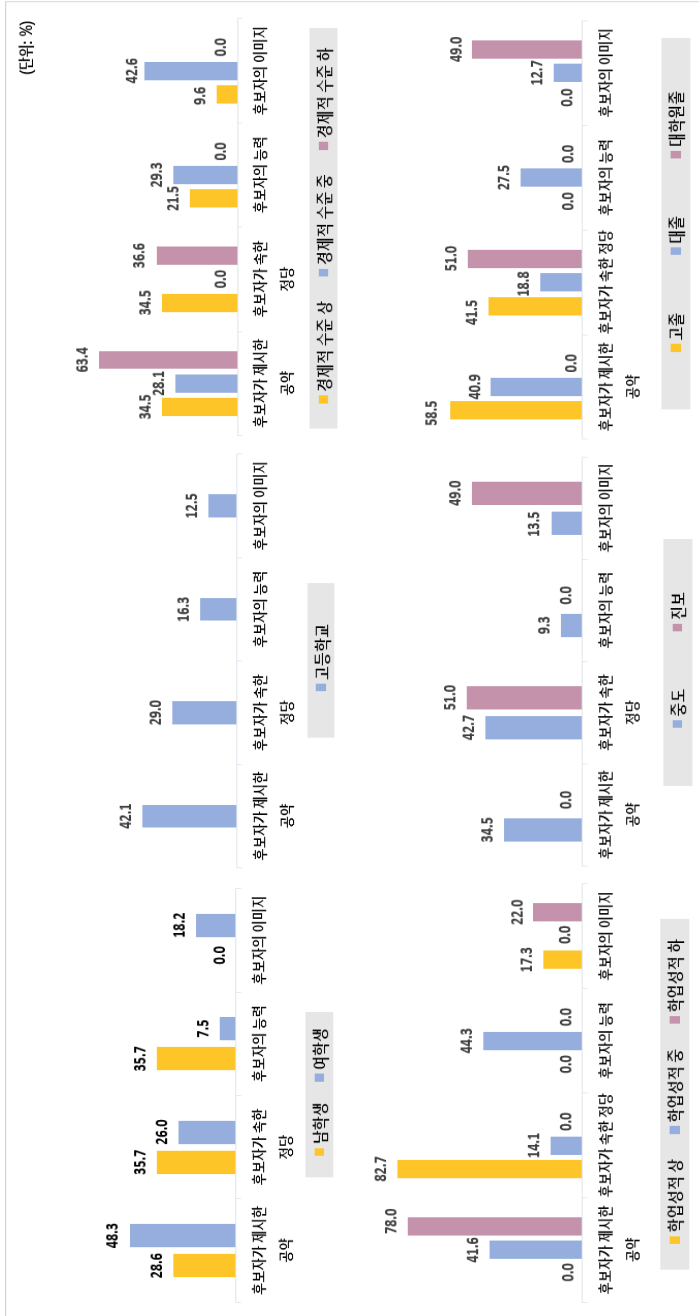


그림 V-45. 2021 지방보궐 선거(서울 / 부산) 후보자 선택 기준(변인 수준 별)

〈표 V-54〉와 〈그림 V-45〉를 보면 경제적 수준에 따른 차이도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후보자의 공약(하 63.4%)상 34.5%, 중 28.1%)을 기준으로 선택한 낮은 경제수준 집단의 비율이 다른 집단에 비해 크게 높았으나, 후보자의 능력 또는 이미지를 기준으로 한 낮은 경제수준 집단의 청소년은 없었다. 후보자의 이미지(중 42.6%)상 9.6%)가 기준이 된 경우, 중간 경제수준 집단의 비율이 높은 경제수준 집단에 비해 높게 관찰되었다.

학업성적에 따른 구분에서는, 대부분의 상위 학업성적 집단 청소년들이 정당(82.7%)을 기준으로 후보자를 선택했으며, 중간 학업성적 집단 청소년들의 주된 선택 기준은 공약(41.6%)과 능력(44.3%)이었다. 반면, 낮은 학업성적 집단의 학생들의 대부분은 후보자의 공약(78.0%)을 선택 기준으로 삼았다고 보고했다.

표 V-55. 보궐 선거기간 동안의 경험_전체

(단위 : %, 평균)

경험	사례수	하지 않았다	보통이다	했다	계	평균	표준편차
나는 이번 선거와 관련하여 온/오프라인 공간에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	12	41.7	7.5	50.7	100	3.24	1.67
나는 이번 선거와 관련된 정보를(후보자 개인정보 및 공약 등) 탐색한 적이 있다.	12	41.6	-	58.4	100	3.32	1.77
나는 내가 선호하는 후보를 온/오프라인 공간에서 지지한 적이 있다.	12	89.7	5.2	5.2	100	1.66	1.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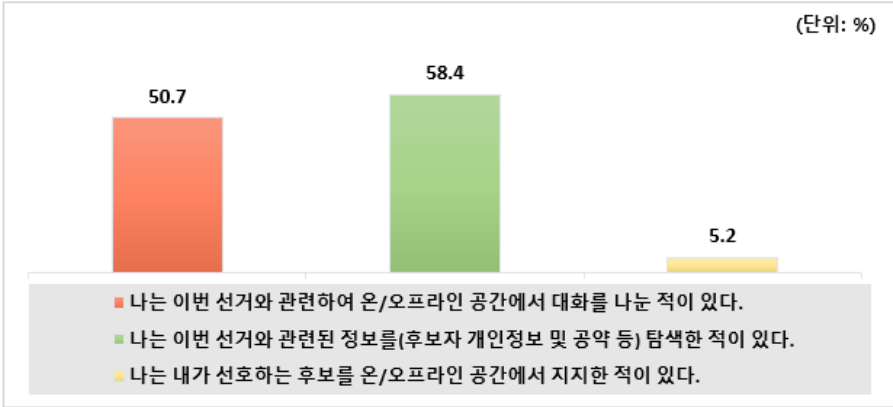


그림 V-46. 보궐 선거기간 동안의 경험(전체)

〈표 V-55〉와 [그림 V-46]을 보면 보궐 선거기간 동안 청소년들이 가장 높은 비율로 경험한 활동은 선거 관련정보 탐색(58.4%, $M=3.32$)으로, 절반이 넘는 청소년들이 해당 활동 경험을 보고하였다. 선거와 관련된 대화를 경험(50.7%, $M=3.24$)한 청소년들이 비율 또한 선거 관련정보 탐색 경험과 유사한 수준으로 관찰되었다. 다만, 후보를 온/오프라인에서 지지한 경험을 보고한 청소년의 비율은 5.2%($M=1.66$)에 불과해, 보궐 선거기간 중 후보 지지 활동을 경험한 청소년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56. 보궐 선거기간 동안의 경험_변인 수준 별

(단위 : %)

배경 변인 수준	사례수	나는 이번 선거와 관련하여 온/오프 나는 이전 선거와 관련된 정보(후보자 나는 내가 선호하는 후보를 온/오프 라인 공간에서 대화를 나누는 적이 있다. 개인정보 및 공약 등) 탐색한 적이 있다. 라인 공간에서 지지한 적이 있다.			나는 내가 선호하는 후보를 온/오프 라인 공간에서 대화를 나누는 적이 있다. 개인정보 및 공약 등) 탐색한 적이 있다. 라인 공간에서 지지한 적이 있다.				
		하지 않았다	보통이다	했다	하지 않았다	보통이다	했다		
성별	남학생	4	35.7	0.0	64.3	35.7	100.0	0.0	0.0
	여학생	8	44.5	11.0	44.6	44.2	85.0	7.5	7.5
학교급	고등학교	12	41.7	7.5	50.7	41.6	89.7	5.2	5.2
	상	6	55.9	14.5	29.5	46.0	80.1	10.0	10.0
경제적 수준	중	2	42.6	0.0	57.4	70.7	100.0	0.0	0.0
	하	4	17.0	0.0	83.0	17.0	100.0	0.0	0.0
학업 성적	상	3	17.9	26.1	55.9	17.9	100.0	0.0	0.0
	중	4	58.4	0.0	41.6	57.8	71.9	14.1	14.1
정치 성향	하	4	43.9	0.0	56.1	43.9	100.0	0.0	0.0
	중도	6	32.0	13.5	54.5	22.8	81.5	9.3	9.3
부모 하력	진보	1 ¹⁾	51.0	0.0	49.0	51.0	100.0	0.0	0.0
	고졸	4	41.5	24.6	33.8	41.5	83.1	0.0	16.9
대학원졸	대졸	7	40.3	0.0	59.7	39.9	91.3	8.7	0.0
	대학원졸	1 ¹⁾	51.0	0.0	49.0	51.0	100.0	0.0	0.0

* 주: 1) 본 연구는 기층지가 적용된 결과를 제시하였기 때문에, 사례수가 1명임에도 두 개의 항목(하지 않았다 51.0%, 했다 49.0%)에서 응답 비율이 나타난 것임.

〈표 V-56〉과 〈그림 V-47〉에서와 같이 보궐 선거 기간 중, 선거에 대한 대화를 나누거나(남학생 64.3%)여학생 44.6%) 선거 관련 정보를 탐색한(남학생 64.3%)여학생 55.8%) 남학생의 비율은 여학생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온/오프라인에서 후보를 지지한 경험을 보고한 남학생은 없었다.

경제적 수준을 변인으로 볼 경우, 낮은 경제 수준 집단이 대화(하 83.0%)중 57.4%)상 29.5%)와 탐색(하 83.0%)상 54.0%)중 29.3%) 활동에서 다른 두 집단보다 높은 경험률을 보고하였으며, 대화 경험에서는 중간 경제 수준 집단이, 탐색 경험에서는 높은 경제 수준 집단이 각각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학업 성적에 따른 차이도 일부 관찰되었는데, 대화(하 56.1%, 상 55.9%)중 41.6%)와 탐색(상 82.1%)하 56.1%)중 42.2%) 경험에서 중간 학업성적 집단이 가장 낮은 비율로 관찰되었고, 특히 탐색 경험에서 상위 학업성적 집단과의 차이가 두드러졌다.

표 V-57. 2021 지방보궐 선거(서울 / 부산) 후보자 선택 기준_변인 수준 별

(단위 : %)

배경 변인 수준	사례수	마음에 드는 후보가 없어서	관심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전체	20	30.2	36.5	33.3	
성별	남학생	5	19.0	61.9	19.0
	여학생	14	34.5	26.8	38.7
학교급	고등학교	20	30.2	36.5	33.3
경제적 수준	상	6	16.8	28.4	54.8
	중	9	16.1	49.5	34.4
	하	3	100.0	0.0	0.0
학업 성적	상	1	0.0	0.0	100.0
	중	9	15.7	37.0	47.4
	하	9	51.0	32.1	16.9
정치 성향	중도	11	29.6	35.6	34.8
	진보	3	0.0	0.0	100.0
부모 학력	고졸	7	14.5	14.5	71.0
	대졸	9	46.1	37.0	16.9
	대학원졸	1	0.0	100.0	0.0
	잘모르겠음	3	27.3	72.7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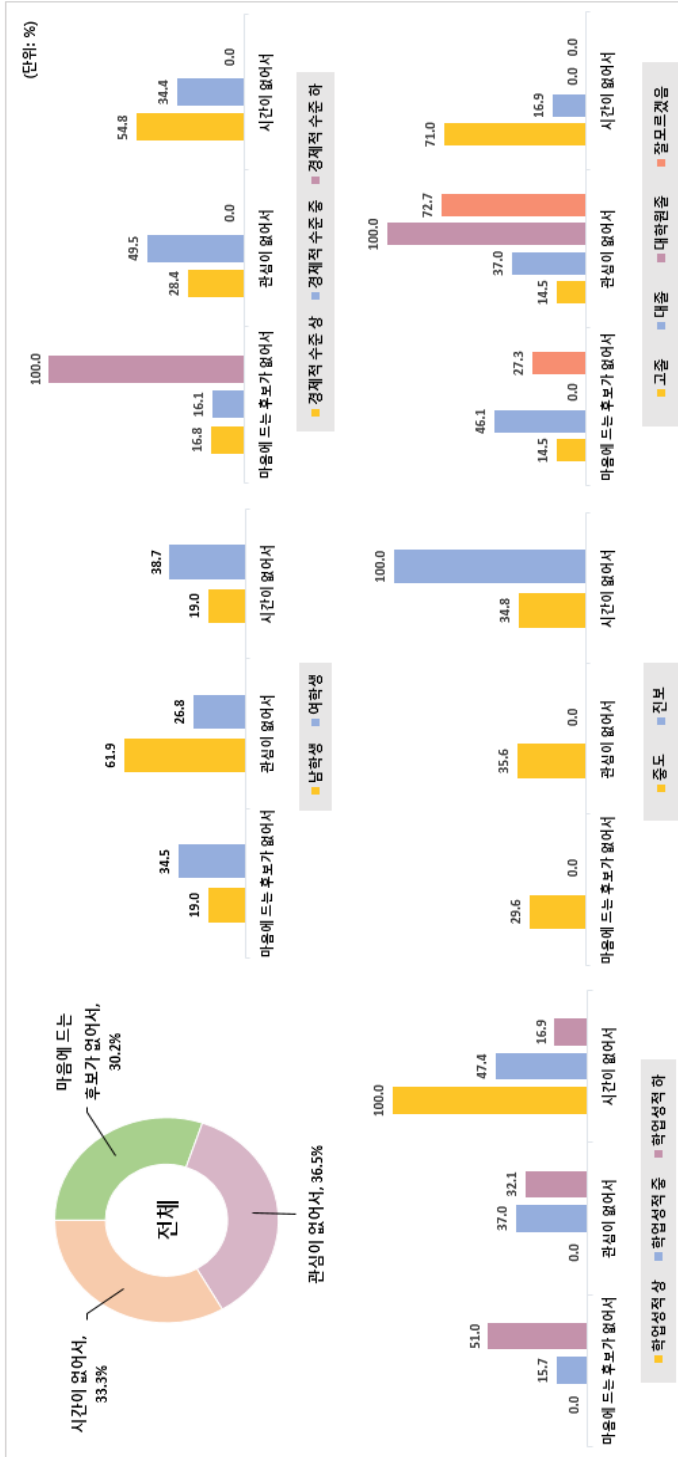


그림 V-48. 2021 지방보궐 선거(서울 / 부산) 후보자 선택 기준(변인 수준 별)

〈표 V-57〉과 [그림 V-48]을 보면, 투표에 불참한 이유 중 가장 높은 비율로 관찰된 것은 무관심(관심이 없어서)(36.5%)이었으며, 시간이 없거나(33.3%) 마음에 드는 후보가 없어서(30.2%) 투표에 임하지 않았다고 보고한 청소년들의 비율이 그 뒤를 이었으나, 세 가지 모든 이유 중 두드러지게 높은 비율을 나타낸 것은 없었다. 남학생의 경우, 관심이 없어서(61.9%)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다른 이유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던 반면, 여학생들의 각 이유 간 응답 비율은 비교적 고르게 관찰되었다.

경제적 수준이 높은 청소년들은 시간이 없어서(54.8%) 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중간 경제적 수준 집단 청소년들은 관심이 없어서(49.5%)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비율이 가장 높았다. 반면, 경제적 수준이 낮은 청소년들의 전부가 마음에 드는 후보가 없어서(100%) 투표에 임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정치성향 변인의 경우, 중도 성향 집단의 응답 비율이 세 가지 이유에 걸쳐 고르게 분포된 반면, 진보 성향 집단의 모든 청소년들은 시간이 없어서(100%) 투표에 임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부모학력에 따른 차이도 일부 관찰되었는데, 고졸 부모 집단의 대부분이 시간이 없어서(71.0%) 투표에 임하지 않은 반면, 대졸 부모 집단에서 해당 이유를 보고한 비율은 16.9%로 세 가지 이유 중 가장 낮았다.

표 V-58. 정책 신뢰도_전체

(단위 : %, 평균)

경험	사례수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계	평균	표준 편차
나는 국회의 입법이 국민의 의사를 수용하여 반영한다고 생각한다.	2,806	32.9	44.4	22.7	100.0	2.86	1.01
나는 정부의 정책이 국민과 공익에 기여한다고 생각한다.	2,807	31.8	46.0	22.2	100.0	2.84	0.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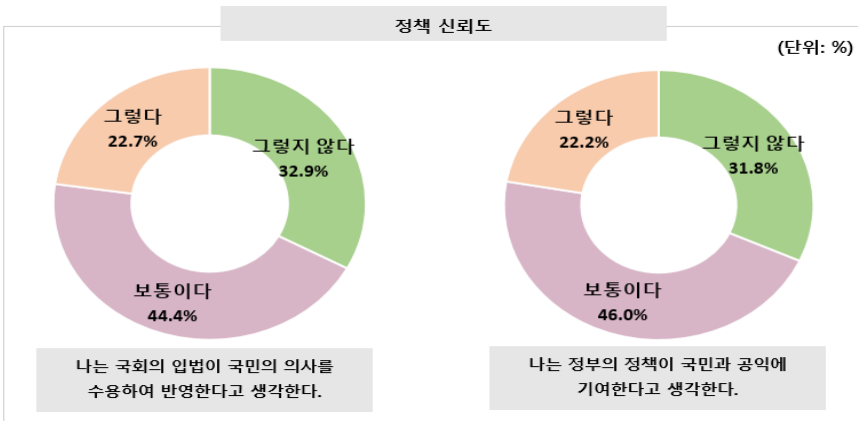


그림 V-49. 정책 신뢰도 응답 비율(전체)

〈표 V-58〉과 [그림 V-49]를 보면 정책의 신뢰도를 묻는 질문에 긍정적으로 답변한 청소년들의 비율은 전반적으로 낮게 관찰되었다. 국회의 입법절차(22.7%, $M=2.86$)가 국민의 의사를 반영한다고 생각한 청소년의 비율은 20%를 겨우 넘긴 수준이었으며, 정부의 정책(22.2%, $M=2.84$)이 국민과 공익에 기여한다고 평가한 청소년의 비율 또한 유사한 수준에서 관찰되었다. 청소년들의 정책 신뢰도를 측정할 두 문항의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신뢰도(Cronbach's α)는 .801로 나타나 높은 수준의 문항 내적 합치도를 보고하였다.

표 V-59. 정책 신뢰도_변인 수준 별

(단위 : %)

배경 변인 수준	나는 국회의 입법이 국민의 의사를 수용하여 반영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정부의 정책이 국민과 공익에 기여한다고 생각한다.						정책 신뢰도(문항 합산)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사례수	평균(표준편차)	F	유의확률	
	37.3	41.4	21.3	37.0	42.6	20.4	28.1	47.6	24.2	26.2	49.7	24.1	1,348	5.90(1.66)	32.33	<.001	
성별	남학생	37.3	41.4	21.3	37.0	42.6	20.4	28.1	47.6	24.2	26.2	49.7	24.1	1,348	5.90(1.66)	32.33	<.001
	여학생	32.1	45.4	22.5	32.8	46.2	21.0	33.7	43.4	22.9	30.8	45.8	23.3	1,413	5.71(1.83)		
학교급	중학교	31.0	44.0	25.0	30.8	43.6	25.6	33.8	46.0	20.2	31.3	48.8	19.9	1,130	5.66(1.80)	4.29	.01
	고등학교	38.1	41.1	20.8	36.5	44.5	18.9	33.1	40.8	26.1	31.7	39.4	28.9	725	5.83(1.93)		
경제적 수준	상	31.2	46.4	22.4	29.4	48.8	21.8	35.4	45.2	19.3	34.7	47.5	17.8	793	5.52(1.83)	6.46	<.001
	중	45.6	32.4	22.0	55.9	30.8	13.3	32.2	46.3	21.5	29.3	48.3	22.4	1,693	5.75(1.75)		
학업 성적	하	33.4	32.3	34.3	29.3	31.2	39.5	34.8	44.4	20.9	34.2	47.4	18.4	558	5.62(1.69)	17.39	<.001
	보수	32.2	46.3	21.5	29.3	48.3	22.4	33.4	45.3	22.2	30.1	45.5	24.3	1,474	5.73(1.85)		
정치 성향	중도	31.2	46.4	22.4	29.4	48.8	21.8	34.8	46.4	26.5	34.4	38.6	27.0	291	5.74(1.91)	.73	.53
	진보	34.8	44.4	20.9	34.2	47.4	18.4	33.4	32.3	34.3	29.3	31.2	39.5	262	6.01(0.04)		
부모 학력	고졸	32.5	45.3	22.2	30.1	45.5	24.3	34.8	45.3	26.5	34.4	38.6	27.0	291	5.74(1.91)	.73	.53
	대졸	34.8	38.7	26.5	34.4	38.6	27.0	31.2	47.2	21.6	31.2	51.1	17.8	401	5.66(1.85)		
잠모르겠음	31.2	47.2	21.6	31.2	51.1	17.8	401	5.66(1.85)									

각 배경 변인 간의 정책 신뢰도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두 문항의 답변을 설문 참가자별로 각각 합산한 뒤, 배경 변인별 집단 간의 평균값을 분산 분석(ANOVA) 하였다. 먼저, 성별 변인의 경우 여학생들의 정책 신뢰도가 남학생들에 비해 0.39점 높게 관찰되었다[$F(1, 2804)=32.33, p<.001$]. 경제적 수준에 따라 집단을 구분할 경우, 높은 경제적 수준 집단과 낮은 경제적 수준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관찰되었으며[$F(2, 2711)=4.29, p<.05$], 높은 경제적 수준 집단의 정책 신뢰도가 0.32점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적 변인에서도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는데[$F(2, 2713)=6.46, p<0.01$], 낮은 학업성적 집단의 정책 신뢰도는 높은 학업성적 집단에 비해 0.31점, 중간 학업성적 집단에 비해 0.25점 더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정치성향에 따른 정책 신뢰도 차이 또한 관찰되었는데[$F(2, 2150)=17.39, p<.001$], 보수 성향 집단의 정책 신뢰도가 진보 성향 또는 중도 성향 집단에 비해 각각 0.97점, 0.72점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급 또는 부모학력에 따른 정책 신뢰도의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V-60. 정치효능감_전체

(단위 : %, 평균)

경험	사례수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계	평균	표준 편차
나는 바람직한 국가정책이 무엇인지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다.	2,805	20.8	41.2	38.0	100.0	3.20	1.03
나는 정치적 문제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참여할 능력이 있다.	2,805	26.1	39.2	34.7	100.0	3.10	1.08
나의 정치적 관심과 참여는 바람직한 국정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다.	2,806	28.0	39.7	32.3	100.0	3.05	1.12

대부분의 청소년들의 중간 수준의 정치효능감을 보고하였다. 자신의 정치효능감을 묻는 세 가지 질문에 대해, 중간 수준('보통이다')의 응답을 한 청소년의 비율이 공통적으로 가장 높았으며, 높은 수준('그렇다')의 정치효능감을 보고한 비율이 그 뒤를 이었다. 각 문항 별 차이가 두드러지진 않았지만, 자신이 바람직한 국가정책에 대한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다(38.0%, $M=3.20$)고 응답한 청소년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자신의 정치적 관심과 참여가 바람직한 국정운영에 도움이 될 것(32.3%, $M=3.05$)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의 비율이 비교적 낮았다. 하지만 각 문항은 청소년들의 정치효능감을 유사한 수준에서 측정한 것으로 보이며, 신뢰도 (Cronbach's α)는 .854로 나타나 정치효능감 세 문항 간 높은 내적 합치도를 보였다.

표 V-61. 정치효능감_변인 수준 별

(단위 : %)

배경 변인 수준	나는 바람직한 국가정책이 무엇인지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다.				나는 정치적 문제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참여할 능력이 있다. 직한 국정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정치효능감(문항 합산)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	유의 확률	
성별	남학생	23.4	39.8	36.8	29.0	38.3	32.7	30.9	39.3	29.8	1,455	9.13(3.04)	18.78	<.001
	여학생	18.1	42.8	39.2	22.9	40.2	36.9	24.9	40.1	35.0	1,348	9.59(2.60)		
학교급	중학교	22.9	41.3	35.8	29.7	40.1	30.2	31.5	40.5	27.9	1,392	9.07(2.81)	26.60	<.001
	고등학교	18.8	41.1	40.1	22.5	38.4	39.1	24.5	38.9	36.6	1,411	9.62(2.86)		
경제적 수준	상	19.5	38.0	42.6	24.2	36.8	39.0	25.8	39.0	35.2	1,290	9.55(2.87)	4.75	.009
	중	22.6	43.4	34.0	26.6	42.5	30.9	29.7	40.6	29.8	1,130	9.20(2.81)		
	하	20.6	43.1	36.3	28.7	38.3	33.1	28.0	40.3	31.8	292	9.25(2.82)		
학업 성적	상	14.2	33.2	52.6	17.3	33.7	49.1	21.0	35.1	43.9	725	10.21(2.81)	67.32	<.001
	중	20.4	42.5	37.1	24.6	41.5	34.0	26.5	41.8	31.7	1,196	9.40(2.71)		
	하	27.8	45.3	26.9	34.9	41.4	23.7	35.5	41.1	23.4	793	8.56(2.85)		
정치 성향	보수	29.7	23.6	46.7	32.7	25.1	42.2	39.5	27.5	33.0	198	9.32(3.70)	23.73	<.001
	중도	18.3	43.1	38.6	23.6	41.5	34.9	25.8	42.4	31.8	1,691	9.45(2.67)		
	진보	12.3	32.9	54.8	14.4	27.1	58.4	16.9	29.4	53.6	262	10.71(2.96)		
부모 학력	고졸	21.7	43.5	34.8	25.3	42.6	32.1	27.6	43.2	29.2	558	9.29(2.71)	22.41	<.001
	대졸	19.6	39.3	41.0	24.9	37.9	37.2	26.7	38.5	34.8	1,474	9.48(2.87)		
	대학원졸	14.3	40.1	45.6	15.6	37.1	47.3	21.0	35.8	43.2	290	10.15(2.65)		
참모르겠음	29.3	43.8	26.9	35.9	43.1	20.9	36.1	43.4	20.5	399	8.45(2.82)			

정치효능감을 측정한 세 문항의 답변을 설문 참가자별로 각각 합산하여, 배경 변인별 집단 간의 평균값을 분산 분석(ANOVA)하였다. 성별 변인에 따른 차이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F(1, 2800)=18.78, p<.001$], 여학생들의 정치효능감이 남학생들에 비해 0.46점 높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학교급에 따른 정치효능감 차이도 관찰되었는데 [$F(1, 2800)=26.60, p<.001$], 고등학생들의 정치효능감이 중학생들에 비해 0.55점 높게 나타났다. 정치효능감의 집단 간 차이는 경제적 수준에서도 일부 나타났으며 [$F(2, 2708)=4.75, p<.01$], 높은 경제적 수준 집단의 정치효능감이 중간 경제적 수준 집단보다 0.35점 가량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학업성적에 따른 차이는 모든 집단 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F(2, 2709)=67.32, p<.001$], 상 집단의 정치효능감은 중 집단보다 0.81점 높았으며, 하 집단의 정치효능감은 중 집단에 비해 0.84점 낮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정치성향 변인에서도 집단 간의 차이가 드러났으며 [$F(2, 2148)=23.73, p<.001$], 진보 성향 집단의 정치효능감점수가 보수 성향 또는 중도 성향 집단에 비해 각각 0.26점, 0.19점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부모학력을 기준으로 집단을 나눴을 경우에도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관찰되었는데 [$F(3, 2716)=22.41, p<.001$], 부모학력을 잘 모르는 집단을 제외한 집단 간 차이는 대학원졸 집단과 여타 집단 사이에서 유의미했으며, 대학원졸 집단의 정치효능감이 고졸 또는 대졸 집단에 비해 각각 0.85점, 0.67점 높게 관찰되었다.

표 V-62. 민주시민의식_전체

(단위 : %, 평균)

경험	사례수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계	평균	표준 편차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도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2,802	4.4	10.7	84.9	100.0	4.42	0.94
나는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들어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2,801	4.2	9.5	86.4	100.0	4.45	0.91
나의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의 의견 중에도 수용할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	2,800	5.0	11.5	83.5	100.0	4.34	0.95
나는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의 시위나 집회도 허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2,800	7.5	21.8	70.8	100.0	4.01	1.04

청소년들은 스스로의 민주시민의식을 대체로 높게 평가하는 경향성을 보였다. 자신의 민주시민의식을 묻는 네 항목의 질문 중, 자신이 민주시민의식을 함양하고 있다(‘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80%에 미치지 못한 항목은 자신과 의견이 다른 사람들의 시위 또는 집회 허용(70.8%, $M=4.01$)에 대한 질문뿐이었으며, 그조차도 70%가 넘는 높은 응답률을 보여주었다.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항목은 자신과 의견이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는 것(86.4%, $M=4.45$)이었으며, 다른 사람의 의견 제시 권리(84.9%, $M=4.42$)와 다른 사람의 의견 수용(83.5%, $M=4.34$)에 대한 답변 비율이 근소한 차이로 그 뒤를 이었다. 민주시민의식 문항들의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신뢰도(Cronbach's α)는 .926로, 청소년들의 민주시민의식을 측정할 네 문항의 신뢰도가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V-63. 민주시민의식_변인 수준 별

(단위 : %)

배경 변인 수준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 들은 나의 의견도 들어줘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민주시민의식(문항 합산)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	유의 확률	
성별	남학생	6.7	13.5	79.8	6.1	12.5	81.5	7.6	14.4	78.0	10.3	24.3	65.4	1,456	16.63(3.93)	90.81	<.001										
	여학생	2.0	7.6	90.4	2.1	6.2	91.7	2.2	8.4	89.5	4.3	19.0	76.6	1,343	17.86(2.75)												
학교급	중학교	4.6	10.5	84.9	4.2	9.4	86.4	5.4	11.9	82.8	7.5	20.9	71.6	1,390	17.22(3.46)	.001	.97										
	고등학교	4.2	10.9	84.9	4.1	9.6	86.3	4.6	11.2	84.3	7.4	22.7	70.0	1,409	17.22(3.48)												
경제적 수준	상	4.3	11.1	84.6	3.7	9.9	86.4	4.3	12.2	83.5	6.9	21.2	71.9	1,289	17.26(3.45)	.118	.89										
	중	4.5	10.7	84.9	4.2	9.7	86.1	5.7	11.3	83.0	7.9	22.8	69.2	1,129	17.19(3.46)												
	하	4.8	8.8	86.4	5.6	7.1	87.3	4.4	9.9	85.7	7.8	21.4	70.9	291	17.23(3.69)												
학업 성적	상	3.0	6.5	90.5	2.7	6.6	90.7	3.0	8.2	88.8	4.3	15.2	80.6	724	17.86(3.09)												
	중	3.9	11.3	84.8	3.6	9.3	87.1	4.8	12.4	82.8	7.0	23.2	69.8	1,196	17.26(3.36)	25.29	<.001										
	하	6.5	13.7	79.9	6.1	12.7	81.2	6.7	13.5	79.8	10.8	26.3	63.0	790	16.60(3.84)												
정치 성향	보수	10.5	11.2	78.3	11.0	12.9	76.1	12.2	14.7	73.1	19.2	20.4	60.4	198	15.96(4.54)												
	중도	4.3	11.3	84.4	3.8	9.8	86.4	4.5	12.5	83.0	6.7	23.6	69.7	1,686	17.22(3.41)	13.80	<.001										
	진보	3.4	9.3	87.3	3.4	9.2	87.4	4.1	8.0	87.9	8.1	14.3	77.5	262	17.59(3.30)												
부모 학력	고졸	4.0	11.2	84.9	3.9	10.7	85.4	3.7	11.6	84.8	7.9	22.6	69.4	557	17.17(3.24)												
	대졸	3.8	9.5	86.6	3.7	9.0	87.4	4.5	10.6	84.9	6.8	22.3	70.9	1,471	17.32(3.41)	9.94	<.001										
	대학원졸	3.4	8.9	87.7	2.3	8.0	89.7	4.5	9.5	85.9	5.2	12.9	81.9	287	17.87(3.02)												
잘모르겠음	7.9	16.0	76.2	7.4	11.6	81.0	8.3	16.8	74.9	11.0	26.3	62.7	401	16.47(4.17)													

청소년들의 민주시민의식 수준을 각 집단에 따라 비교하기 위해 민주시민의식을 측정한 네 문항의 답변을 설문 참가자별로 각각 합산하여, 배경 변인별 집단 간 평균값에 대한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V-63>에서 제시한 것처럼 성별에 따라 민주시민의식 수준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F(1, 2796)=90.81, p<.001$], 여학생들의 민주시민의식 점수가 남학생들에 비해 1.23점 높게 나타났다.

학업성적에 따른 집단 간 차이 또한 드러났는데 [$F(2, 2706)=25.29, p<.001$], 상, 중, 하 세 집단 간의 모든 차이가 유의미했으며, 상 집단이 중 집단에 비해 0.60점 높은 민주시민의식 점수를 보고하였고, 중 집단은 하 집단에 비해 0.66점 높은 민주시민의식 점수를 보고하였다.

정치성향에 의해 구분된 집단 간 차이의 경우 [$F(2, 2143)=13.80, p<.001$], 보수 성향 집단의 민주시민의식 점수가 다른 두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진보 성향 집단보다 1.64점, 중도 성향 집단보다 1.26점 낮은 점수를 기록하였다.

부모학력 변인의 경우, 분산 분석의 결과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고하였으나 [$F(3, 2712)=9.94, p<.001$], 이러한 차이는 부모의 학력을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집단과 타 집단의 차이에 의한 것일 뿐, 고졸, 대졸, 대학원졸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는 보고되지 않았다. 그 외에도 학교급이나 경제적 수준에 따른 차이 또한 관찰되지 않았다.

6. 실태조사 조사결과 요약

청소년들의 정치적 현안에 대한 관심도는 약 30%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여학생보다 남학생들의 관심이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고교생 중에는 고등학생들의 정치적 현안에 대한 관심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경제적 수준이 높을

수록,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전반적인 정치적 관심도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성이 관찰되었다. 정치 성향의 경우, 진보 성향의 청소년들이 과반의 비율로 다른 정치 성향 집단에 비해 가장 높은 관심도를 보였다.

주요 이슈에 대한 청소년들의 관심도는 주제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여론과 미디어 동향,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관심도가 가장 높은 비율로 보고되었으며, 정당 관련 이슈나 국회 의정활동에 대한 관심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이슈에 대한 집단 간의 차이 또한 다양했다. 대통령과 정부, 국회 의정활동, 정당 관련 이슈에 대한 관심은 남학생들이 비교적 높게 드러난 반면, 사법부 판결이나 시민단체 활동 관련 이슈에 대한 관심도는 여학생들의 비율이 다소 높았다. 학교급 별로 집단을 나눌 경우, 주요 이슈 전반에 대한 고등학생들의 관심이 중학생들보다 높게 관찰되었다. 중간 수준의 경제적 배경을 가진 청소년들이나 중도의 정치성향을 띤 청소년들의 경우, 다른 경제적 수준이나 정치성향을 가진 청소년들에 비해 주요 이슈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졌다. 더불어, 청소년의 학업 성적이 높을수록 또는 부모의 학력이 높은 수준일수록 정치 관련 주요 이슈들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도 높아지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청소년들이 가장 큰 관심을 보인 정치 분야는 교육 분야와 문화예술체육 분야였으며, 가장 낮은 비율의 관심을 보고한 분야는 정치행정 분야였다. 개별 분야별로 관심도를 분석하였을 때, 남학생들이 더 큰 관심을 보인 정치 분야는 정치 행정, 경제, 과학기술 분야였으며, 여학생들의 관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분야는 교육, 사회복지, 문화예술체육 분야였다. 학교급에 따른 관심도의 차이는 비교적 일관적으로 나타났으며, 고등학생들의 관심 수준이 중학생들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게 관찰되었다. 중간 수준의 경제적 배경을 가진 청소년들의 경우, 높거나 낮은 경제적 수준의 청소년들보다 각 정치 분야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는 것 경향성을 보였으며, 학업 성적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정치 분야 전반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경향성 또한 관찰되었다. 또, 이 같은 양상은 부모학력 변인에도 유사하게 적용

되어 나타나, 부모의 학력이 고학력일수록 높은 관심도를 보고하였다. 정치 성향의 경우, 진보, 보수, 중도 성향 순으로 각 이슈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표명하였다.

청소년들이 정치 관련 이슈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대상의 비율은 부모님, 친구, 온라인 유저, 학교 선생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부모님과 친구에 비해 온라인 유저나 학교 선생님과 대화를 나누는다고 응답한 청소년들의 비율은 매우 낮았다. 남녀 간의 차이는 부모님 또는 친구와 정치 관련 대화를 나누는다고 응답한 항목들에서 두드러졌으며, 부모님 또는 친구와 대화를 나누는 여학생의 비율이 남학생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에 따른 전반적 차이는 뚜렷하지 않았으나, 부모님과 대화를 나누는 고등학생의 비율이 중학생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중간 수준의 경제적 배경 청소년들의 경우, 다른 경제적 배경 청소년들에 비해 정치 관련 대화를 덜 나누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높은 경제적 수준 학생들은 부모님과의 대화 비율이, 낮은 경제적 수준 학생들은 온라인 유저와의 대화 비율이 각각 서로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학업성적에 따른 차이는 부모님과 대화를 나누는 비율에서만 나타났는데, 낮은 학업성적의 청소년들이 부모님과의 정치 관련 대화를 상대적으로 덜 나누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러한 경향성은 부모학력에 따른 차이에서도 유사하게 관찰되었다. 정치 성향이 서로 다른 청소년들의 차이도 일부 나타났는데, 보수 또는 진보 성향의 청소년들이 중도 성향의 청소년들에 비해 친구들과 더 많은 정치 관련 대화를 나누며, 부모님과 대화를 나누는 비율은 진보 성향의 청소년들이 여타 정치 성향의 청소년들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청소년들의 정치적 견해 형성에 영향을 준 요인들은 다양했다. 청소년들이 정치 견해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고 응답한 요인은 언론매체였으며, 부모님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의 비율 또한 그보다 낮거나 유사한 수준이었다. 반면, 온라인 유저나 학교 선생님은 청소년들의 정치 견해 형성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각 요인이 자신의 정치적 견해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학생

보다 여학생들에게서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차이는 언론매체의 영향을 평가한 문항에서만 관찰되었으며, 고등학생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경제적 수준의 경우, 중간 수준 집단이 여타 집단에 비해 각 요인의 영향을 대부분 낮게 평가하는 경향성을 보였으며, 학업성적 수준에서는 성적이 높은 학생일수록 각 요인의 영향을 높게 평가하는 양상이 관찰되었다. 부모학력 또한 유사한 집단 간 차이를 보이며,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각 요인이 영향을 끼쳤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비율이 증가하였다. 정치 성향의 경우, 진보 성향 청소년들이 보수 또는 중도 성향 청소년들에 비해 각 요인의 영향력을 높게 평가하는 경향성을 보였다.

주요 미디어 중, 청소년들이 정치관련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주로 이용하는 매체는 소셜미디어, Youtube, TV 뉴스였으며, 세 미디어 모두 과반의 청소년들이 정보 획득을 위해 이용한다고 응답한 매체들이었다. 이에 반해, 라디오 뉴스나 정치팟캐스트를 이용하는 청소년의 비율은 매우 낮았다. 미디어 전반에 걸쳐,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주요 미디어를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등학생의 미디어 이용률 또한 중학생들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게 집계되었다. 또, 경제적 수준이 높은 청소년들의 미디어 이용률이 중간 또는 낮은 경제적 수준의 청소년들에 비해 대체적으로 더 높게 관찰되었다. 학업성적 따라 나눌 경우, 학업성적이 낮은 청소년들이 다른 청소년들에 비해 미디어를 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하게도 부모의 학력이 낮을수록 정치관련 정보 획득을 위해 미디어를 이용하는 비율이 낮게 조사되었다. 정치성향에 따른 구분에서는 진보 성향 청소년들이 다른 청소년들에 비해 주요 미디어들을 더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셜미디어를 이용해 정치활동을 경험 청소년의 비율은 대체적으로 높지 않았다. 정치 이슈에 대한 게시글을 읽거나 온라인 청원 또는 서명에 참여한 청소년의 비율이 약 20~30%에 머물렀으며, 그 외 활동 경험을 보고한 청소년들의 비율은 매우 낮았다. 온라인 청원 또는 서명에 참여한 여학생의 비율이 남학생에 비해

다소 높았으나, 그 외 활동에서는 남녀 간의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소셜 미디어를 통한 정치활동 중, 학교급 간의 차이가 나타난 활동은 정치 게시글 읽기와 온라인 청원 또는 서명이었으며, 해당 경험을 한 고등학생들의 비율이 중학생들보다 높게 나타났다. 경제적 수준이 낮은 청소년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험률이 일부 활동에서 보고되었으며, 정치 성향이 진보 해당되는 청소년들의 높은 경험률 또한 각 활동 전반에 걸쳐 나타났다. 학업성적이 높은 청소년들 또한 다른 청소년들에 비해 많은 정치활동을 경험한 것으로 보이나, 부모의 학력에 따른 경험의 차이는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

주요 선거에 대한 청소년들의 관심은 대통령 선거에서 현저히 높게 나타났으며, 그 외의 선거에 대한 관심은 대통령 선거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일반적으로, 남학생들보다 여학생들이 주요 선거들에 대해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교육감 선거에는 고등학생들의 관심도가 더 높은 반면, 대통령 선거에 대한 관심은 오히려 중학생들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수준에 따른 선거에 대한 관심도 차이는 두드러지지 않은 반면, 학업성적과 부모학력에 따른 차이는 비교적 뚜렷한 경향성을 보였는데,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또는 부모의 학력이 고학력일수록 선거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정치 성향에 따른 차이 또한 일정한 경향성이 나타났으며, 진보, 보수, 중도 성향 순으로 선거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통령 선거에 투표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비율은 약 80%에 육박했으며, 국회의원 선거와 교육감 선거에 투표하겠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비율은 약 60%에 이르렀다. 주요 선거 전반에 걸친 투표 의향은 남학생들보다 여학생들에게서, 중학생보다 고등학생들에게서 더 높게 관찰되었다. 경제적 수준에 따른 투표 의향의 차이는 거의 관찰되지 않았으나, 교육감 선거에 대한 투표의향은 높은 경제적 수준 청소년들의 비율이 두드러지게 높았다. 학업성적과 부모학력에 따른 차이는 유사했는데, 학업성적이 높거나 부모의 학력이 높은 수준의 청소년

일수록 높은 투표 의향을 밝혔다. 정치 성향의 경우, 가장 높은 비율로 투표 의향을 밝힌 집단은 진보 성향의 청소년들이었다.

선거권 연령을 만 17세로 하향하는 것에 대한 청소년들의 의견은 찬성 의견이 근소한 차이로 반대 의견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찬성 의견을 표한 남학생과 여학생의 비율은 거의 차이가 없었으나, 연령 하향에 반대하는 여학생의 비율은 남학생에 비해 다소 높았다. 또, 고등학생에 비해 중학생이 선거권 연령 하향에 동의한 비율이 더 높았으며, 다른 경제적 수준의 청소년들에 비해 중간 수준 경제적 배경의 청소년들이 하향에 찬성한 비율이 낮았다. 학업 성적이 높은 청소년의 경우, 학업 성적이 낮거나 중간 수준인 청소년들에 비해 선거권 연령 하향에 동의한 비율이 높았으며, 부모의 학력이 고학력에 가까울수록 하향에 동의한 청소년의 비율 또한 증가하였다. 진보 성향의 청소년들의 경우, 다른 정치 성향의 청소년들보다 연령 하향에 동의한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감 선거권 연령을 만 16세로 하향하는 것에 대해, 약 40%의 청소년들이 하향에 찬성한다고 응답했으나, 이는 반대 의견 비율인 36.6%에 비해 크게 높은 수치는 아니었다. 성별과 교급에 따른 의견 차이는 찬성 비율보다 반대 비율에서 두드러졌는데, 여학생들과 고등학생들의 반대 비율이 각각 남학생과 중학생들의 반대 비율을 다소 상회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경제적 수준이 중간에 해당되는 청소년들의 경우, 상, 하 수준의 학생들보다 하향에 찬성한 비율이 낮았고, 학업 성적과 부모학력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하향에 동의한 비율이 높게 관찰되었다. 또, 진보 성향을 가진 청소년들의 찬성 비율은 보수 또는 중도 성향의 청소년들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다.

학교 안팎에서 정치 활동을 경험한 청소년의 비율은 대체적으로 낮았다. 전체 정치 활동 경험 중, 20% 이상의 청소년들이 경험했다고 보고한 경험은 학교(학급) 자치회 관련 활동과 모의선거활동 뿐이었으며, 특히 교외 정치 활동 경험을 보고한 청소년들의 비율은 다수의 활동에서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 정치 활동 경험 비율의

남녀간 차이는 학교(학급) 자치회 활동에서만 두드러졌는데,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높은 비율로 학교 자치회 활동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 간의 차이 또한 거의 관찰되지 않았으나, 경제적 수준, 학업성적, 부모학력에 따른 경험률은 각 변인의 수준이 높을수록 증가하는 경향성을 공통적으로 보고했다. 또, 진보 성향을 띤 청소년들의 경우, 보수 또는 중도 성향 청소년에 비해 전반적인 정치 활동경험이 풍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활동경험이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었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다수의 청소년들이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전체 역량 중, 정치활동경험에 의해 강화된 역량 중 서로 다른 정치적 견해를 수용하는 태도 항목에 대해 과반의 청소년들이 긍정적으로 해당 역량을 평가하였으며, 여타 역량들에 대해서도 40% 이상의 청소년들이 정치활동이 해당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남녀 집단 중, 대부분의 역량에 대해 보다 높은 긍정 답변을 보고한 집단은 여학생이었으며, 교급에 따른 차이에서는 고등학생들의 비율이 다소 높았다. 경제적 수준, 학업성적, 부모학력 변인은 서로 유사한 양상을 보였으며, 각 변인의 수준이 높을수록 역량 강화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경향을 나타냈다. 정치성향에서는 대부분의 역량에서 진보 성향 청소년들이 가장 높게, 중도 성향 청소년들이 가장 낮게 해당 역량 강화에 정치 활동이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교내 정치 관련 토론 활동을 경험한 청소년의 비율은 전체 청소년의 1/3 수준에 미치지 못했으며, 남학생들보다는 여학생들이, 중학생들보다는 고등학생들이 더 많은 정치 관련 토론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수준이 높거나 부모학력이 고학력인 청소년일수록 토론을 경험한 비율이 높았으며, 학업성적이 낮은 청소년들은 다른 청소년들에 비해 토론 경험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진보 성향 집단의 청소년들은 보수 또는 중도 성향의 청소년들보다 높은 비율로 정치 관련 토론을 경험했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청소년들은 학교 수업에서 모의 선거를 거의 경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가장 높은 비율로 보고된 모의 선거인

모의 대통령 선거의 경험 비율이 6.5%에 불과했다. 전체적인 경험비율이 현저히 낮게 관찰되어, 정치 성향을 제외한 각 변인 수준에서의 집단 간의 차이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정치 성향의 경우, 진보 성향 청소년들이 보수 또는 중도 성향 청소년들에 비해 높은 모의 선거 경험 비율을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이 보고한 바에 따르면, 교내 규칙·규정을 만들거나 행사를 기획할 때 학생들의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지만,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통로는 충분히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적으로, 학교의 학생 의견 수용 정도를 비교적 높게 평가한 집단은 남녀 중 여학생 집단이었으며, 고등학생들보다 중학생들이 학생의견 수용 정도를 전반적으로 높게 평가하였다. 경제적 수준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학생의견 수용이 잘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한 비율이 높았던 반면, 학업성적에 따른 차이는 거의 관찰되지 않았다. 부모학력으로 집단을 구분할 경우, 가장 높은 부모학력 집단이 교내 규칙·규정을 만들 때 학생들의 의견이 가장 잘 반영되고 있다고 평가했으나, 학생 의견 수렴을 위한 통로에 대한 평가는 다른 부모학력 집단에 비해 가장 낮은 수준을 보고하였다. 정치 성향 변인에 초점을 맞추면, 학생 의견 수렴 통로에 대한 긍정 비율이 높은 청소년은 보수 성향 집단이었으며, 교내 규칙·규정을 만들거나 행사를 기획 시 학생 의견 반영에 대해서는 진보 성향 집단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체 청소년 중 35~45% 해당하는 청소년들이 정치참여 활성화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리더십함양 교육 또는 정치 이슈에 대한 토론수업의 필요성은 거의 절반에 가까운 청소년들이 필요성을 주장한 교육 내용이었다. 남학생들보다 여학생들이, 중학생들보다 고등학생들이 정치참여 활성화 교육의 필요성을 더 많이 느끼고 있었으며, 중간 정도의 경제적 수준을 가진 청소년들이 상, 하 수준의 청소년들에 비해 관련 교육의 필요성을 적게 느끼고 있었다. 학업성적이 높거나 부모학력이 고학력에 가까울 경우, 정치참여 활성화 교육의 필요성에 더욱 공감하는 경향 또한 관찰되었다. 진보 성향 청소년들이 다른 정치 성향의 청소년

들에 비해 정치참여 활성화 교육의 필요성을 더욱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가장 큰 정치참여저해 요인은 절반에 가까운 청소년들이 꼽은 입시위주의 교육제도였으며, 그 밖에도 약 1/3의 청소년들이 정치참여의 실천적 기회의 부재, 학생 정치참여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저해요인으로 꼽았다. 각 요인을 저해요인으로 지목한 비율은 남학생들보다 여학생들에게서 두드러졌고, 중학생들보다 고등학생들이 관련 요인들을 저해요인으로 평가한 비율이 높았다. 또, 다른 청소년들에 비해 낮은 경제적 수준의 청소년들이 대부분의 요인들을 저해요인으로 평가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학업성적이 높거나 부모의 학력 수준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관련 요인들을 저해요인으로 간주하는 비율이 높게 보고되는 경향성이 나타났다. 진보 성향 청소년들의 경우, 각 요인들이 정치참여를 저해한다고 주장한 비율이 보수 또는 중도 성향의 청소년들보다 높았으며, 보수 성향 청소년들은 중도 성향 청소년들보다 높거나 같은 수준에서 관련 요인들을 저해요인으로 평가하였다.

청소년들이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한 요인들은 학교 및 가정에서의 결정권 보장과 정치 및 인권 교육의 확대였다. 각 요인의 중요성을 더욱 높게 평가한 집단은 남녀 중 여학생 집단이었으며, 특히 정치 및 인권 교육의 중요성을 여학생들이 비교적 높게 평가하였다. 정치 및 인권 교육 확대의 중요성은 중학생보다 고등학생들에게서 더욱 높게 나타난 반면, 중·고등학생의 정당가입 허용이 중요하다 주장한 비율은 중학생들에게서 다소 높게 관찰되었다. 경제적 수준에 따른 차이의 경우, 중간 수준 경제적 배경의 청소년들이 각 요인의 중요성을 가장 적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학업성적이 높거나 부모의 학력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각 요인들이 정치참여 활성화에 중요하다고 평가한 비율이 높았다. 더불어, 보수 또는 중도 성향의 청소년들보다 진보 성향의 청소년들이 관련 요인들의 중요성을 높게 평가하는 경향성이 관찰되었다.

청소년들이 꼽은 차기 대통령이 갖추어야 할 자질 중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한 자질은 정책실행력이었다. 다만, 그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보고한 위기관리능력, 도덕성, 민주적 정책결정 등의 비율 또한 정책실행력과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그 중요성을 청소년들에게 평가 받았다. 일반적으로, 남학생들에 비해 여학생들이 각 자질의 중요성을 높게 평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특히 도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여학생들의 비율은 남학생들에 비해 뚜렷하게 높았다. 학교급에 따른 차이의 경우, 고등학생들이 비전제시와 인사능력의 중요성을 중학생들에 비해 다소 높게 평가하였으며, 경제적 수준으로 나눈 지표에서는 집단 간의 두드러진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각 자질의 중요성을 높게 평가하는 양상이 관찰되었으며, 이는 부모학력 수준에서도 대부분 유사하게 관찰되었다. 정치성향에 따른 차이에서 나타난 경향성은 진보, 중도, 보수 순의 중요도에 대한 높은 응답 비율이었는데, 특히 보수 성향 청소년들이 도덕성을 차기 대통령의 주요 자질로 꼽은 비율은 진보 또는 중도 성향 청소년들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사회의 주요 분야 중, 가장 많은 비율의 청소년들이 차기 대통령이 해결해주길 희망한 분야는 교육과 경제 분야였으며,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가장 낮게 평가된 분야는 통일안보 분야였다. 대부분의 분야에 대해 남학생들보다 여학생들이, 중학생들보다 고등학생들이 더 높은 비율로 각 분야의 해결을 희망하고 있었으며, 경제적 수준에 따른 청소년들의 의견 차이는 거의 관찰되지 않았다. 다만, 학업성적과 부모학력에 따른 차이는 일부 유사하게 보고되었는데, 상위 수준에 따라 각 분야에 대한 중요도를 높게 평가하는 경향성이 학업성적 수준에서는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난 반면, 높은 학력부모(대학원졸)와 중간 학력부모(대졸)를 둔 청소년들 간의 평가 비율 차이는 다소 미미했다. 정치성향 변인에서 집단을 구분한 경우, 진보 성향 청소년들이 각 분야의 해결을 희망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보수 성향 청소년들이 해결을 희망한 비율은 대부분의 분야에서 가장 낮았다.

현행 정부에서 해결되어야 할 청소년 문제 중에는 청소년자살 문제가 가장 시급한

해결 과제로 떠올랐다. 전체 청소년의 80% 이상이 현행 정부가 청소년자살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한다고 주장했으며, 청소년대상 성폭력이나 학교 폭력 또한 현행 정부의 해결이 시급하다고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응답했다. 반면, 선거권연령 하향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청소년들의 비율 다른 청소년 관련 문제들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청소년 문제 전반에 걸쳐, 해결이 시급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학생보다 여학생들에게서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전체 여학생의 90%가 청소년 대상 성폭력 문제 해결의 시급하다고 생각했다. 학교급 변인의 경우, 입시위주의 교육문제를 제외한 대부분의 문제에 대해 해결이 시급하다고 주장한 청소년의 비율은 고등학생보다 중학생에게서 더 높게 나타났다. 경제적 수준 별 두드러진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학업성적의 경우, 낮은 학업성적 청소년들이 상, 중 학업성적의 청소년들에 비해 청소년 문제의 해결이 덜 시급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입시위주의 교육 문제와 선거권 연령 하향의 시급성을 높은 부모학력(대학원졸) 청소년들이 가장 크게 느낀 반면, 학교폭력문제와 청소년 대상 성폭력 문제의 시급성을 미세하게나마 가장 크게 느낀 청소년들은 낮은 부모학력(고졸) 청소년들이었다. 정치성향으로 집단을 나눌 경우, 현안 해결이 시급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집단은 대부분 진보 성향 집단이었으며, 보수 성향 집단이 가장 낮은 비율로 해결이 시급하다고 대부분의 현안에 대해 응답하였다.

청소년들의 공공(민간)기관에 대한 신뢰는 대체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가장 높은 신뢰도를 보고한 기관은 시민단체(NGO)였으나 전체 청소년 중 30%에 못 미치는 비율이었으며, 가장 낮은 신뢰도가 관찰된 정당을 신뢰한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비율은 시민단체(NGO)의 절반 수준인 15% 내외였으며, 그 외의 기관에 대한 신뢰도 또한 20% 내외에 머물렀다. 각 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전반적으로 여학생들에게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학교급 수준에서는 중학생들이 더 기관을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수준이 높거나 학업성적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관찰되었으며, 부모학력에 따른 수준 간 신뢰도 차이는

드러나지 않았다. 진보, 중도, 보수 성향 청소년들 중에서는 진보 성향 청소년들이 가장 기관을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수 성향 청소년들의 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진보 또는 중도 성향 청소년들에 비해 매우 낮게 관찰되었다.

조사에 응한 청소년 중, 2021 지방보궐 선거 참여 여부에 응답한 청소년은 총 93명이었으며, 그 중 66%가 투표권이 없는 청소년들이었다. 투표권을 가진 청소년 중 투표에 참여한 청소년보다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청소년이 더 많았다. 투표에 참여한 비율은 경제적 수준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경제적 수준이 낮은 청소년들이 가장 높은 비율로 투표에 참여했으며, 경제적 수준이 중간에 속하는 청소년들의 참여율이 가장 저조하였다. 유사한 양상이 학업성적에서도 나타났는데, 학업성적 하, 상, 중의 순서로 높은 투표율을 보고하였다. 부모학력으로 구분할 경우, 부모의 학력이 낮은 청소년 집단일수록 높은 투표율을 보고하였다. 보수 성향의 청소년 중 투표에 참여한 청소년은 없었으며, 중도 성향 청소년보다 진보 성향 청소년들의 투표율이 다소 높았다. 투표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중, 후보자의 공약을 기준으로 투표에 임한 청소년들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정당을 기준으로 후보자를 선택한 청소년의 비율이 그 다음으로 높게 관찰되었다. 공약을 기준으로 후보자를 선택한 비율은 여학생들이 높은 반면, 정당이나 후보자의 능력을 기준으로 투표에 임한 비율은 남학생들이 더 높았다. 후보자의 능력이나 이미지를 기준으로 투표에 임한 낮은 경제적 수준의 청소년은 없었으나, 공약을 기준으로 투표한 낮은 경제적 수준의 청소년의 비율은 상, 중 경제 수준의 청소년들의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다. 학업성적이 상위권인 청소년들의 대부분은 후보자가 속한 정당을 기준으로 투표하였으며, 학업성적인 하위권인 청소년들의 대부분은 후보자의 공약을 기준으로 투표에 임하였다.

투표에 참여한 청소년의 절반 이상은 선거와 관련된 대화를 나누거나, 선거 관련 정보를 탐색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신의 선호 후보를 지지한 경험을 보고한 청소년은 거의 없었다. 선거 관련 대화는 여학생보다 남학생들이

더 많이 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선거 관련 정보 탐색 또한 남학생들이 더 높은 비율로 경험한 것으로 관찰되었다. 낮은 경제적 수준의 청소년의 경우, 다른 경제 수준의 청소년들에 비해 선거 관련 대화나 정보 검색을 더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 성적이 중간 수준인 청소년들의 선거 관련 대화 또는 정보 탐색 경험이 다른 학업성적의 청소년들에 비해 낮은 비율로 보고되었다.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투표에 관심이 없어서 불참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이는 기타 이유(마음에 드는 후보가 없음, 시간이 없음)들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각각 불참 이유의 차이가 뚜렷하지 않았다. 단, 변인에 따른 차이는 일부 나타났는데, 대부분의 남학생들이 관심이 없다는 이유로 투표에 임하지 않은 것에 반해, 여학생들이 투표에 불참한 이유는 각 이유에 걸쳐 비교적 균등하게 분포하였다. 경제적 수준의 경우, 높은 경제적 수준의 청소년들의 과반이 시간이 없어서 투표를 하지 않은 반면, 중간 경제적 수준의 청소년들의 절반은 관심이 없어서 투표에 임하지 않았으며, 낮은 경제적 수준의 청소년들은 모두 마음에 드는 후보가 없어서 투표에 불참했다고 밝혔다. 학업성적에 따른 차이도 일부 관찰되었는데, 상위권과 중위권 청소년의 대다수가 시간이 없어서 투표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으나, 하위권 청소년의 대부분은 마음에 드는 후보가 없어서 불참했다고 보고하였다. 또, 정치적 중도 성향 청소년들의 비율이 불참 이유에 각각 고르게 나타난 것에 반해, 모든 진보 성향 청소년들이 시간이 없어서 투표에 불참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고졸 부모 집단의 대부분이 시간이 없어서 투표에 임하지 않은 반면, 대졸 부모 집단 청소년 중 시간이 없어서 불참했다고 비율은 전체 세 가지 이유 중 가장 낮았다.

청소년들의 정책에 대한 신뢰도는 전반적으로 낮은 편으로, 정책과 입법 과정이 국민의 의사와 공익을 반영하고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비율은 약 20%에 불과했다. 각 변인 수준에서는, 여학생들의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남학생들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높은 경제적 수준 청소년들의 정책 신뢰도가 낮은 경제적

수준 청소년들에 비해 높았다.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보수 성향 청소년들의 정책 신뢰도는 진보 또는 중도 성향 청소년들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의 정치효능감은 중간 수준에 머물렀다. 여학생들의 정치효능감이 남학생들에 비해 다소 높았으며, 중학생들보다 고등학생들의 정치효능감이 더 높았다. 중간 경제적 수준의 청소년들의 정치효능감은 상위 경제적 수준 청소년들에 비해 비교적 낮게 보고되었으며, 학업성적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더 높은 정치효능감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학력이 높은 청소년들의 정치효능감은 다른 부모 학력 청소년들에 비해 높았으며, 진보 성향 청소년의 정치효능감 또한 보수 또는 중도 성향 청소년에 비해 높게 관찰되었다.

청소년들의 민주시민의식은 매우 높은 수준으로 보고되었으며, 남녀 중 여학생들의 민주시민의식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적이 상위권에 속한 청소년일수록 민주시민의식이 높게 관찰되었으며, 정치 성향이 보수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의 민주시민의식 점수는 진보 또는 중도 성향의 청소년들에 비해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 — 제6장 청소년 정치참여 면접조사(FGI)

- 1. 면접개요
- 2. 중학생 청소년 대상
면접조사(FGI) 결과
- 3. 고등학생 청소년 대상
면접조사(FGI) 결과

1. 면접개요

청소년의 정치참여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내외적 요인에 대한 심층적 탐색과 제도적 제약과 보완점, 활성화 요인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청소년 참여기구가 학교 자치회 및 의회에서 활동 경험이 있거나, 자발적으로 정치적 이슈나 현안 사항, 권리옹호를 위한 참여경험이나 정치참여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과 학교 안팎에서 정치에 무관심하거나 참여경험이 없는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FGI)을 실시하였다.

본 면접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본 조사에 대한 본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승인(승인번호: 202105-HR-고유-013)을 2021년 5월 24일 획득하였다. 이후 면접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면접대상자를 섭외하였다. FGI 참여자의 집단은 중·고등학교 학교급 및 정치참여집단과 비 참여 집단으로 구분하여 각 5명씩 선정하여 총 20명으로 구성되었다.

초점집단(FGI)면접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연구진이 주도하여 실시되었다. 면접조사 앞서 해당 연구에 대한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면접 대상자로부터 연구 참여 동의서와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를 날인 서명 한 뒤 취합하였다. 이후 미리 준비한 면접영역 별 면접질문지의 내용을 토대로 면접을 실시하였다.

144) 제6장은 모상현 선임연구위원과 최용환 연구위원이 공동으로 집필하였다.

질문과 답변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부연 설명이 필요한 경우 연구자가 중간에 개입하여 질문의 취지를 보완하는 하는 방식으로 답변자의 이해를 도왔다. 조사는 2021년 6월 19일~8월28일까지 서울 모처의 회의 전용 공간에서 진행되었다. 초점집단면접은 총 4개 집단 별로 개별적으로 진행되었으며 각 9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주요 조사영역은 정치참여 관심정도, 정치효능감 및 정치의식, 정치참여 저해 요인, 정치참여 활성화 요인, 학교 안팎에서의 참여활동 및 정치교육, 정치·행정 기관(정책) 신뢰도, 선거권과 투표에 대한 내용들로 구성되었다. 초점집단 인터뷰를 위한 면접영역과 면접내용은 아래 <표 VI-1>에 기술되어 있다.

표 VI-1. 면접영역 및 면접내용

면접영역	면접내용
정치참여 관심 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치참여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이 있나요? 관심/무관심이 있다면 왜? - 주로 어떤 정치 영역과 이슈에 관심이 있나요? - 주로 정치적 이슈와 관련된 정보는 어떻게 얻나요? - 정치적 현안에 대해 누구와 주로 대화를 하나요?
정치효능감 및 정치의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치를 통해 어느 정도 사회가 변화될 수 있나요? - 나와 다른 정치적 견해를 지닌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형성하는데 주로 어떤 사람/어떤 요인이 영향을 미쳤나요? - 정치적 참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 선거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있나요?
정치참여 저해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의 정치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은 무엇인가요? - 왜 해당요인이 청소년의 정치참여를 저해한다고 생각하나요? - 청소년의 정치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을 어떻게 해결 할 수 있을까요?
정치참여 활성화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의 정치참여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요인은 무엇인가요? - 왜 해당요인이 청소년의 정치참여를 활성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 청소년의 정치참여를 활성화를 위한 교육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학교 안팎에서의 참여활동 및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안팎에서 다양한 참여활동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 참여경험이 자신의 정치적 성장과 정치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었나요?

정치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에서 정치 혹은 선거 관련 교육(민주시민교육)이 진행 된 적이 있나요? 주로 어떤 내용이었나요? - 학교 내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활동(학교 규칙 제개정 등)에 반영하고 있나요?
정치·행정 기관 및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삶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정치·행정·언론 기관을 얼마나 신뢰하나요? - 해당 기관에서 해결해야 할 주요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선거권과 투표 관련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기 대통령에게 필요한 자질은 무엇인가요? - 차기 대통령이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가요? - 선거권 연령 하향 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 각각의 견해(하향/기존 연령유지/상향)가 있다면 왜 그런가요?

면접참여자는 고등학생의 경우 정치참여 경험이 있는 학생은 총 7명으로. 이들 중 남학생이 2명, 여학생이 5명으로 나타나 여학생이 더 많았으며, 정치참여 경험이 없는 고등학생은 3명으로 남학생이 2명, 여학생이 1명으로 나타나 남학생이 더 많았다. 중학생의 경우 정치참여 경험이 있는 학생은 총 7명으로. 이들 중 남학생이 4명, 여학생이 3명으로 나타나 남학생이 더 많았으며, 정치참여 경험이 없는 중학생은 3명으로 남학생이 1명, 여학생이 2명으로 나타나 여학생이 더 많았다. 애초 정치 경험 유무에 따른 면접 대상자를 학교급별로 각각 5명 씩 동수로 선정·모듬을 구성 하려고 했지만, 초기 면접을 진행하던 중 정치경험이 없다고 교사로부터 추천을 받은 학생들 중 학급 자치회나 청소년 참여기구 및 시설 등에서의 참여 활동경험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모듬별 동수 확보를 할 수 없었다.

정치참여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은 고등학생의 경우 청소년의회 의원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거나 학교 내에서 학년회장 등 학급 자치회 활동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로 주로 구성되었다. 중학생도 마찬가지로 참여위원회 등 참여기구에 소속되어 활동한 경험이 있거나 학교 내에서 학년회장 및 부회장 등 학생자치회 활동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포함되었다. 정치참여 경험이 없는 청소년들은 정치와 관련된 이슈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참여기구 혹은 학급 자치회 경험이 없는 학생들로 구성되었다. 면접대상자에 대한 기본정보는 다음의 <표 VI-2>와 <표 VI-3>와 같다.

표 VI-2. 면접대상자(정치참여 경험이 있는 청소년)

연번	이름	성별	교급	비고
1	임○○	남	컨○고등학교	청소년의회 및 학년 회장
2	서○○	여	성○고등학교	청소년의회
3	김○○	남	외국고등학교	청소년의회
4	김○○	여	성○고등학교	학생 자치회
5	이○○	여	신○고등학교	학생 자치회
6	이○○	여	매○고등학교	학급임원 및 참여동아리
7	송○○	여	광○고등학교	학년 부회장
8	안○○	여	동○중학교	학년 회장
9	김○○	여	세○중학교	학년 회장
10	남○○	여	대○중학교	참여기구
11	김○○	남	문○중학교	참여기구
12	배○○	남	강○중학교	참여기구
13	이○○	남	경○중학교	학년 회장
14	정○○	남	중○중학교	학년 회장

표 VI-3. 면접대상자(정치참여 경험이 없는 청소년)

연번	이름	성별	교급	비고
1	백○○	남	평○고등학교	정치참여 경험 없음
2	이○○	남	평○고등학교	
3	김○○	여	매○고등학교	
4	강○○	여	상○중학교	
5	정○○	여	상○중학교	
6	황○○	남	중○중학교	

2. 중학생 청소년 대상 면접조사(FGI) 결과

1) 정치 영역별 주요 면접조사 결과(경험 有 vs. 경험 無)

(1) 정치참여 관심 정도

- ① 정치참여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이 있으며, 주로 어떤 정치영역과 이슈에 관심이 있나요?

경험 有: 면담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대다수가 정치참여에 관심이 많은 편이었고, 각각 청소년 참여위원회나 기타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 정치 활동에 참여하고 있었다. 청소년들의 관심 정치 영역은 교육, 문화, 복지, 진로, 법, 부동산 등으로 다양했으며, 주로 자신이 처한 상황(예, 입시)이나 장래희망과 연관시켜 관심을 드러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험 無: 정치참여 경험이 없는 중학교 청소년들은 정치, 세부 정치 영역 별 이슈 또는 정치참여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정치에 관심이 없거나 정치참여 경험이 없는 청소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정치참여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② 정치적 이슈와 관련된 정보는 주로 어떻게 얻으며, 정치적 현안에 대해 누구와 주로 대화를 하나요?

경험 有: 청소년들이 정치적 이슈와 관련된 정보를 얻는 경로는 진학설명회, 진로상담, 인터넷 매체 등이었다. 정치적 현안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상대로는

가족 구성원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으며, 그 외에는 친구 집단, 선생님, 참여위원회 구성원 등이 있었다.

경험 無: 정치적 이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대화를 나누는 상대 또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정치효능감 및 정치의식

① 정치를 통해 어느 정도 사회가 변화될 수 있나요?

경험 有: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정치를 통해 사회가 변화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하면서도, 변화의 정도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시와 교육에 초점을 둔 청소년들의 경우, 정책의 변화와 사회적 상황(예, 코로나 팬데믹)이 교육에 끼친 영향을 예로 들며, 정치가 큰 폭의 사회적 변화를 야기한다고 주장하였다. 그 외의 청소년들은 정치가 사회적 변화에 끼치는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는 점에 동의하는 한편, 그 영향력이 사회적 변화에 온전히 반영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경험 無: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정치와 사회 변화의 관계에 대해 답변이나 의견을 제시하지 못했으며, 정치적 변화가 사회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주장하는 한 청소년의 의견이 있었으나 그 또한 구체적이거나 명확하지는 않았다.

② 나와 다른 정치적 견해를 지닌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또,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형성하는데 주로 어떤 사람/요인이 영향을 미쳤나요?

경험 有: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자신과 다른 정치적 견해를 지닌 사람에 대한 '존중'을 강조하였다. 타인의 입장에서 자신의 견해를 되돌아보려는 태도 또한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더불어, 특정 사안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병존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는 견해를 덧붙인 청소년도 있었다. 청소년들의 정치적 견해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사람은 부모님이었다. 청소년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한 가족 구성원임과 동시에, 정치적 현안에 대한 대화가 주로 부모님과 이뤄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자신의 진로와 목표가 정치적 견해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고 보고한 청소년도 있었다.

경험 無: 다수의 청소년들이 다른 사람과 정치적 이슈에 대해 대화를 나눠본 경험이나, 다른 정치적 견해를 가진 사람과 대화를 나눈 경험이 없다고 보고하였다. 자신과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이 있다하더라도 '그렇게 생각하는구나'라는 수준에서 존중할 것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부모님이 자신의 정치적 견해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생각했으며, 학교 선생님이 정치적 견해 형성에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한 청소년도 있었다.

(3) 정치참여 저해 요인

- ① 청소년의 정치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은 무엇이며, 왜 해당 요인이 청소년의 정치참여를 저해한다고 생각하나요? 또, 해당 요인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경험 有: 청소년들은 청소년 정치참여를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청소년을 미성숙하다고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을 꼽았다. 청소년들이 어리고 미성숙하여 정치적 권리를 행사할 능력이 없다고 바라보는 성인들의 고정 관념이 청소년들의

정치참여를 제한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 정치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청소년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같은 맥락에서, 청소년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청소년들의 정치적 무관심과 무지를 독려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에게 선거권이 주어진다면 정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증가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경험 無: 청소년들이 생각한 청소년 정치참여 저해 요인은 ‘흥미롭지 않음’이었다. 청소년들에게 정치란 아직 본인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제가 아니며,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정치란 ‘지루하고 재미없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이에 뉴스 등의 매체에서 정치 관련 용어 또는 개념을 쉽게 풀어 설명할 것을 해결 방안으로 제시한 청소년도 있었으며, 정치에 대한 관심은 각 개인의 영역일 뿐, 굳이 정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있었다.

(4) 사회·정치참여 활성화 요인

- ① 청소년의 정치참여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요인은 무엇이며, 왜 해당 요인이 청소년의 정치참여를 활성화한다고 생각하나요?

경험 有: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인식 외에도, 실질적인 정치 교육의 부재와 청소년 참여 활동을 제한하는 입시제도가 저해 요인으로 지목되었다. 교육 현장에서의 정치 교육 부재는 청소년과 정치 사이의 거리감을 형성하였으며, 정치참여를 비롯한 대외 활동을 인정하지 않는 현 입시제도는 청소년들의 형식적 참여마저 감소하게 만들었다. 청소년들은 이러한 문제가 청소년 참여 기구 홍보 등과 같은 참여 유도형 교육과 입시제도 상에서의 대외활동에 대한 혜택 부활을 통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경험 無: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청소년 정치참여 활성화 요인 또는 방안에 대해 답변하지 못하였다. 청소년들의 의견을 모아 국회의원 또는 단체장 등에게 전달하는 방식을 제시한 청소년이 있었으나, 그 또한 무의미하고 한계가 존재할 것이라고 스스로 일축하였다.

(5) 학교 안팎에서의 참여활동 및 정치교육

- ① 학교 안팎에서의 다양한 참여활동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그러한 경험이 자신의 정치적 성장과 정치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었나요?

경험 有: 청소년들은 학교 내에서 학급 회장, 학생 회장 등을 주로 경험하였으며, 교외에서는 어린이 청소년 참여위원회, 청소년의회와 같은 청소년 참여기구 활동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활동들은 생각의 폭을 넓히고, 정치적 적극성과 책임감을 배양하며, 타인의 의견을 수용하는 태도를 기르는 등의 방식으로 청소년들의 정치적 성장과 정치역량 강화에 영향을 끼쳤다.

경험 無: 교내외로 정치적 참여활동을 경험하지 않은 청소년들이 대부분이었으나, 한 청소년의 경우, 해당 경험들이 리더십을 기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답변했다.

- ② 학교에서 정치 혹은 선거 관련 교육이 진행된 적이 있나요? 또 정치 혹은 선거 관련 교육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까요?

경험 有: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정치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조차 받고 있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교육이 진행되었다하더라도 매체 또는 구성의 미비함으로

말미암아 그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청소년들은 수동적인 지식 전달 방식보다는 토론, 정책 제안과 같은 참여 유도형 정치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은 정치에 대한 역사·의식, 선거와 투표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 등이 포함되어야 하되, 청소년들에게 ‘정치란 멀고 무거운 것이 아니며, 우리의 일상이다.’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할 필요성 또한 제고하였다.

경험 無: 학교 현장에서 이뤄지는 정치 혹은 선거 관련 교육은 사회 교과목에서 단편적으로 이뤄지는 수준인 탓에, 청소년들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청소년들은 학교에서의 정치 교육이 일방향적인 정보 전달 방식이 아닌, 발표 등의 형식을 통해 청소년들의 자연스러운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6) 정치·행정 기관 및 기능

① 삶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정치·행정·언론 기관을 얼마나 신뢰하시나요?

경험 有: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입법부·행정부·언론에 대해 낮은 신뢰도를 보였으며, 특히 특정한 정치 성향을 띠거나 관심을 끌기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언론에 대한 깊은 불신감을 나타냈다. 입법부와 행정부에 대한 불신은 국회의원 또는 공무원들이 저지르는 비리에 대한 반감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경험 無: 각 정부 기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알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대부분이었다. 한 청소년은 언론에 대한 신뢰와 불신을 함께 표하는 동시에, 청소년의 수준에서 각 정부 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

(7) 선거권과 투표 관련 내용

① 차기 대통령에게 필요한 자질은 무엇인가요?

경험 有: 청소년들은 차기 대통령에게 필요한 자질로 국민과 소통하려는 자세, 희생과 책임감, 도덕성, 공약을 지켜나가는 역량, 정책의 일관성, 결단력 등을 꼽았다.

경험 無: 청소년들은 차기 대통령에게 필요한 자질로써 국민과의 소통 역량, 공약을 이행하려는 의지, 리더십 등을 꼽았다.

② 선거권 연령 하향 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험 有: 선거권 연령 하향 조정에 동의하는 청소년들의 경우, 청소년들 또한 권리를 가진 국민이며, 교육의 당사자인 청소년들이 교육과 관련된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이에 반해, 하향 조정에 반대하는 청소년들은 현재 정치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비교적 미성숙한 청소년들에게 정치적 권리 행사를 보장하는 것은 다양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경험 無: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을 만 18세로 유지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청소년기부터 투표 경험을 쌓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진지하지 못한 태도로 투표에 응할 청소년들이 많을 것을 우려하여, 만 18세 이하로 선거권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다만, 청소년들에게 비교적 큰 영향을 끼치는 교육감 선거의 경우, 선거권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유지 또는 상향해야한다고 주장한 청소년들이 있는 반면, 교육 정책이 청소년들의 이익을 더욱 반영할 수 있도록 선거권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고 주장한 청소년 또한 있었다.

③ 선거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있나요?

경험 有: 일부 청소년들은 청소년들에게 참정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 단위 선거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다만,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선거의 기능과 중요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으며, 학급 선거, 전교회장 선거 등과 같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청소년 선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험 無: 자신과 관련된 직접적인 사안에 관련된 선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면접조사(FGI) 결과 요약

(1) 정치참여 경험이 있는(有) 중학생 대상 FGI 조사결과 요약

면접에 참가한 청소년들은 학급·학생회나 청소년 참여기구에서 정치참여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학생들이었다. 교내·외를 아우르는 정치참여 활동은 청소년들의 정치적 성장과 정치역량 강화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는데, 사고의 확장, 책임감 배양, 타인과의 소통 역량 증진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견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소년들의 관심 정치 영역은 교육, 문화, 복지, 사법체계 등으로 세분화되었

으며, 주로 각각의 청소년들이 처한 상황이나 본인이 희망하는 진로와 연관되어 나타나는 경향성을 보였다. 청소년들이 정치적 이슈와 관련된 정보를 얻는 경로는 관심 분야의 설명회, 부모님 또는 선생님과 상담, 인터넷 매체 등이었다. 정치적 현안에 대한 대화는 주로 부모님과 나누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소년들의 정치적 견해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요인 또한 부모님이었다.

자신과 다른 정치적 견해를 가진 사람을 상대함에 있어,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한 것은 '존중하는 태도'였다. 또, 서로 다른 정치적 견해가 엇갈리는 것은 올바른 정책 형성에 있어 바람직한 현상이라 견해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정치가 사회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청소년들은 다양한 의견을 피력하였다. 정치가 사회 변화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는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공감하였지만, 변화의 정도에 대해서는 각각의 의견 차이를 보였는데, 일부 청소년들은 교육 정책과 입시의 예를 들어 정치가 큰 폭으로 사회적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 반면, 일부 청소년들은 정치의 영향력이 사회 변화에 온전히 반영되지 못할 것이라는 관점을 지지하였다.

청소년들은 '청소년을 미성숙하다고 바라보는 사회의 인식'이 청소년 정치참여를 저해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으로 생각했다. 청소년을 미성숙함을 강조하는 기성 세대의 시선은 고정관념이며, 오늘 날의 저조한 청소년 정치참여는 이러한 고정관념의 산물이라는 것이 청소년들의 관점이었다. 왜곡된 인식으로부터 탈피해 청소년들에게 정치참여의 권한을 부여한다면, 오히려 청소년들의 정치참여와 관심이 증대될 것이라는 의견도 덧붙였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정치 교육을 등한시 한 채, 청소년들이 입시에만 치중하게 만든 현 교육제도 또한 저해 요소로 지목되었다. 정치 교육의 부재로 인해 청소년과 정치 사이에 필요이상의 괴리가 형성되었으며, 청소년 참여 활동을 인정하지 않는 현 교육제도는 그나마 명맥을 이어온 청소년들의 형식적인 정치참여 활동마저 저해하고 있다는 것이 청소년들의 생각이었다.

실제로,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정치에 대한 기초적인 수준의 교육조차 받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교육이 진행되었다하더라도 그 효과가 체감되지 않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은 정치 교육이 토론, 정책 제안과 같이 청소년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고안되어야한다고 주장했으며, 청소년들이 정치를 멀고 어렵게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를 강조하였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민주사회에서의 선거의 기능과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었지만, 일부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참가할 수 없는 국가 단위 선거에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권 연령 하향에 대한 청소년들의 의견 또한 분분하였다. 하향 조정에 동의하는 청소년들의 경우, 청소년 또한 국민이 일원으로서 동등한 권리를 부여 받아야하며, 특히 교육감 선거의 경우, 교육의 수혜자이자 당사자인 청소년들이 선거권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하향 조정에 반대하는 청소년들은 실질적인 정치 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 교육의 실태를 지적하며, 교육 받지 못한 청소년들의 정치 권리 행사는 다양한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입법부·행정부·언론 기관에 대한 청소년들의 신뢰도는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특히 정치적 성향을 띠거나, 대중의 관심을 끌기 위해 사실 전달의 기능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언론에 대해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입법부·행정부에 대한 불신은 공직자들의 비리·부정부패에 대한 반감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이 꿈은 차기 대통령의 필수 자질로는 국민과 소통하려는 자세, 희생과 책임감, 도덕성, 공약을 지켜나갈 수 있는 역량, 정책의 일관성 등이 있었다.

(2) 정치참여 경험이 없는(無) 중학생 대상 FGI 조사결과 요약

정치참여 경험이 없는 중학교 청소년들의 경우, 교내외 정치참여 활동 경험이

거의 전무한 학생들이었다. 이들은 정치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 정도가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 이슈에 대한 타인과의 대화나 정보 검색 활동 또한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와 사회 변화의 관계에 대한 자신의 확실한 태도여부, 즉 '정치효능감'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다수였으며, 입법, 행정, 사법 등 각 정부 기관의 역할과 기능 또한 모르는 청소년들이 대부분이었다. 다만, 정치에 대한 무관심과는 별개로, 청소년들의 정치참여에 대해선 공통적으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청소년들은 정치를 자신들의 삶과 무관한 '지루하고 재미없는 주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학교 현장에서 이뤄지는 정치 또는 선거 관련 교육은 매우 일방적이고 단편적인 수준이었으며,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청소년들은 발표 등의 형식을 통해 학생들의 자연스러운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는 정치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뉴스 등의 매체에서 정치 관련 주제를 다룰 때, 정치 용어와 개념에 대한 쉽고 간단한 설명이 동반된다면, 청소년들이 정치에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선거권 연령 하향에 대한 청소년들의 의견은 '현 선거권 연령을 유지하자'는 방향으로 모아졌다. 청소년들은 선거 가능한 최소 연령이 만 18세 이하로 조정될 경우, 일부 청소년들이 진지하지 않은 태도로 투표에 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며, 더 이상 선거권 연령을 하향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다만, 교육감 선거의 경우, 청소년들의 이익과 목소리가 교육 정책에 더욱 반영될 수 있도록 선거 가능 연령을 하향해야한다는 의견 또한 일부 있었다.

청소년들이 꿈은 차기 대통령에게 필요한 자질로는 국민과의 소통 역량, 공약 이행에 대한 의지, 리더십 등이 있었다.

3. 고등학생 청소년 대상 면접조사(FGI) 결과

1) 정치 영역별 주요 면접조사 결과(경험 有 vs. 경험 無)

(1) 정치참여 관심 정도

- ① 정치참여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이 있으며, 주로 어떤 정치영역과 이슈에 관심이 있나요?

경험 有: 정치참여 경험이 있는 고등학교 청소년들의 대다수가 정치참여에 관심이 많은 편이었고, 각 학교의 학생회나 청소년의회 등을 통해 정치참여 활동을 하고 있었다. 관심 영역은 주로 교육이었으며, 특히 억압되고 획일화된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것에 관심이 많았다. 교육 외에도 환경, 사법체계, 경제, 부동산 정책 등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경우도 있었다. 청소년들이 정치참여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로는, 청소년들 또한 권리를 가진 대한민국의 국민이며, 청소년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에 대해서는 정책의 당사자인 청소년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야한다는 생각이 주를 이뤘다. 덧붙여, 성인이 되어 올바른 참정권을 행사하기 위한 역량이 청소년 시기부터 배양되어야함을 이유로 들기도 했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정치참여가 중요하다는 점에 동의하였다. 민주 사회에서 정치참여는 국민으로서의 당연한 권리이며, 정치참여에 대한 비판적이고 회의적인 시선 또한 경계해야한다고 청소년들은 주장했다. 다만, 일부 청소년들은 정치참여에 앞서 올바른 정치관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며, 각각의 의견은 존중되어야하지만 그 뒤에는 책임과 사회적 공익성이 전제되어야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경험 無: 정치참여 경험이 없는 고등학교 청소년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은 매우 낮은 편이었다. 아직 미성년인 본인들의 삶과 정치가 직접적으로 맞닿아있거나

관련되어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청소년들이 대부분이었다.

- ② 정치적 이슈와 관련된 정보는 주로 어떻게 얻으며, 정치적 현안에 대해 누구와 주로 대화를 하나요?

경험 有: 청소년들은 대부분 정치적 이슈와 관련된 정보를 SNS, 포털 사이트, 인터넷 매체를 통해 얻고 있었다. 그 외에도 국회의원 또는 시의원에게 직접 문의하여 정치 관련 이슈를 접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유사한 가정환경을 가진 또래 집단으로부터 정치 이슈를 접하게 된 경우도 있었다. 정치적 현안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상대는 공통적으로 가족 구성원들이었다. 일부 청소년의 가정에서는 정치적 성향이 특정되는 것을 우려하여, 정치 관련 이슈에 대한 대화를 자제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다. 가족 구성원 외에는 동아리, 친구 집단 등이 정치적 현안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대상이었다.

경험 無: 정치적 이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대화를 나누는 상대 또한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다만 선거나 사회적으로 큰 화제가 되는 정치적 이슈에 대해서는 뉴스,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해 정보를 접하거나, 부모님, 선생님 등과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정치효능감 및 정치의식

- ① 정치를 통해 어느 정도 사회가 변화될 수 있나요?

경험 有: 청소년들은 정치를 통한 사회 변화 정도가 정치인 또는 국민의 참여도와 관심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았다. 직접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각 분야의 전문가로서 정치인의 역할 또한 중요하지만, 정치인을 선출하고 그를 평가하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수반될 때 사회 변화가 가능할 것이라는 관점이 뒷받침되었다. 그 외에도, 사회 변화를 가능케 하기 위해선 구체적인 정책과 방향성이 수반되어야한다는 의견과 사회 변화가 항상 옳은 방향으로만 이뤄지지 않는다는 한계점을 지적한 의견이 있었다.

경험 無: 모든 청소년들이 정치가 사회 변화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의견에 동의하였다. 일선에서 정치에 참여하는 정치인들의 역량과 영향력, 민주적인 합의 과정의 효과성, 역사적 관점에서 정치가 사회 변화에 끼친 영향 등이 근거로 제시되었다.

② 나와 다른 정치적 견해를 지닌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또,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형성하는데 주로 어떤 사람/요인이 영향을 미쳤나요?

경험 有: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본인과 다른 정치적 견해를 가진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태도를 공통적으로 보였다. 서로 다른 관점에서 대화를 통해 합의를 도출해내는 과정 자체가 정치라는 견해도 있었으며, 정치적 견해의 충돌은 민감한 주제이며 이를 통해 갈등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한다는 입장 또한 있었다. 청소년들의 정치적 견해 형성에는 부모님이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치적 현안에 대한 대화가 주로 부모님과 이뤄지다보니 나타나는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부모님 외에도, 정치참여 또는 정치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낸 정치인, 선생님, 관련 서적 또한 청소년들의 정치적 견해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험 無: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견해가 다른 상대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과 인정을 강조하였다. 다만, 일부 청소년은 상대와의 논쟁을 통해 합의점에 이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청소년들의 정치적 견해는 주로 부모님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어떠한 외부적 요인 또는 사람도 자신의 정치적 견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한 청소년도 있었다.

(3) 정치참여 저해 요인

- ① 청소년의 정치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은 무엇이며, 왜 해당 요인이 청소년의 정치참여를 저해한다고 생각하나요? 또, 해당 요인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경험 有: 청소년들은 교육현장에서의 정치 교육 부재와 청소년을 미성숙하다고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이 청소년 정치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생각했다. 덧붙여, 정치 교육의 부재가 현 입시제도가 강제하는 학업부담에 기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정치 교육이 이뤄짐과 동시에, 청소년들이 미성숙하다고 생각하는 사회적 인식이 개선될 때 청소년의 적극적인 정치참여가 도모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다만, 일부 청소년들은 ‘청소년들이 미성숙하다’는 인식의 정당성을 일정 부분 인정하는 듯한 견해를 내비쳤으며, 나아가 청소년들이 학생의 본분을 차치한 채 정치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회의적인 관점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경험 無: 청소년들이 꼽은 청소년 정치참여 저해 요인은 학업과 정치 교육의 부재였다.

(4) 사회·정치참여 활성화 요인

- ① 청소년의 정치참여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요인은 무엇이며, 왜 해당 요인이 청소년의 정치참여를 활성화한다고 생각하나요?

경험 有: 청소년들은 청소년의회와 같은 청소년 참여기구를 통해,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정치 교육이 이뤄짐으로써 청소년들의 정치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청소년 참여기구에 대한 풍부한 지원과 홍보가 이뤄져야한다고 생각했다. 즉, ‘1일 국회의원 체험’, ‘정책 제안하기’ 등과 같이 청소년들에게 직접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청소년의 정치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청소년 참여기구에 대해 알리고 참여를 유도하는 것은 홍보일 뿐이며, 인문학과 역사와 같이 정치에 필요한 인간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교육하는 것이 청소년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교육이라는 주장 또한 존재하였다.

경험 無: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청소년 정치참여 활성화 요인 또는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은 하지 못하였다. 다만 해결 방안으로 학생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며 지속적으로 정치에 대한 생각을 환기시키는 정치 교육이 필요하다고 청소년들은 주장했다.

(5) 학교 안팎에서의 참여활동 및 정치교육

- ① 학교 안팎에서의 다양한 참여활동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그러한 경험이 자신의 정치적 성장과 정치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었나요?

경험 有: 청소년들은 학교 내에서 학급 회장, 학생 회장, 선도부장 등을 주로 경험하였으며, 교외에서는 청소년의회, 청소년 운영위원회와 같은 청소년 참여기구 활동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활동들은 정치 자체에 대한 관심 증대,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확립, 타인과의 소통 역량 증진 등의 방식으로 청소년들의 정치적 성장과 정치역량 강화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경험 無: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교내외서 참여활동 경험을 보고하지 않았다.

② 학교에서 정치 혹은 선거 관련 교육이 진행된 적이 있나요? 또, 정치 혹은 선거 관련 교육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까요?

경험 有: 현재 교육현장에서는 정치 혹은 선거 관련 교육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정치 관련 교육은 사회 교과 시간을 통해 단편적 수준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며, 교과 외의 영상 시청과 특별 강연 또한 청소년들의 관심을 이끌어내지 못해 그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험 無: 중학교 재학 시절, 선거 관련 교육 영상을 시청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도 있었지만, 다수의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정치 또는 선거 관련 교육을 충분히 받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6) 정치·행정 기관 및 기능

① 삶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정치·행정·언론 기관을 얼마나 신뢰하시나요?

경험 有: 현 정권의 행정부에 대해 높은 신뢰도를 가진 청소년 또한 존재하였으나,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정치·행정·언론에 대한 깊은 불신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정치와 유착하여 특정 정치 진영을 옹호하고, 거짓 뉴스와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는 점에서, 언론에 대한 청소년들의 반감은 매우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법부에 대한 청소년들의 신뢰 또한 높지 않았는데, 이는 사법부에 만연한 전과 예우의 폐습, 엄격하지 못한 양형 기준에 대한 불만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경험 無: 모든 청소년들이 입법부(국회)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드러냈으며, 이는 매체를 통해 비춰지는 국회의원들의 부정적인 모습에 대한 반발심이 원인이었다.

(7) 선거권과 투표 관련 내용

① 차기 대통령에게 필요한 자질은 무엇인가요?

경험 有: 청소년들은 차기 대통령에게 필요한 자질로 공정성, 정의, 인내심, 지도력, 청렴함, 국가를 위하는 진실한 마음, 인재를 적절히 등용할 수 있는 안목 등을 꼽았다.

경험 無: 청소년들은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에게 걸맞은 품행과 인성, 책임감, 국민과의 소통 역량 등을 차기 대통령에게 필요한 자질로 꼽았다.

② 선거권 연령 하향 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험 有: 선거에 대한 청소년들의 관심은 출마한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본다거나, 개표 방송 등을 통해 선거의 결과를 확인하는 수준이었는데, 이 또한 일부 청소년들에게서만 보고되었다. 이는 청소년들이 선거 연령에 이르지 못해, 선거가 청소년들의 직접적인 주의를 끌지 못한 결과로 보인다. 실제로 한 청소년은 선거 연령 하향이 이슈화되면서 선거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선거권 연령 하향 조정에 청소년들의 찬반 의견은 분분하였다. 한 학생은 선거권뿐만 아니라 피선거권 연령 또한 하향 조정하여, 더 적극적인 청소년 정치참여가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선거권 연령 하향 조정에 반대하는 학생의 경우, 정치에 대한 기본 개념조차 청소년들에게 교육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선거권 연령 하향이 시기상조임을 주장했다. 다만, 정치 교육의 부재는 찬반 의견과 관계없이 청소년

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사안이었으며, 정치에 대한 교육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선거권 연령 하향이 무의미하다는 점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동의하였다.

경험 無: 선거권 연령 하향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청소년들이 다수였다. 정치참여의 책임은 학업에 매진하는 청소년들에게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진중하지 못한 태도로 선거에 임할 청소년들이 많을 것이란 우려가 그 이유였다. 한편, 학업과 입시에 대한 부담이 과증되는 연령인 만 18세보다, 더 낮은 연령인 만 16, 17세부터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청소년도 있었다.

③ 선거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있나요?

경험 有: 선거를 통해 직접적인 정치참여가 이루어 질 수 있으며, 적극적인 청소년 정치참여의 실천을 선거임을 피력하였다.

경험 無: 자신과 관련된 직접적인 사안에 관련된 선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면접조사(FGI) 결과 요약

(1) 정치참여 경험이 있는(有) 고등학생 대상 FGI 조사결과 요약

대부분의 청소년은 각 학교의 학생회나 청소년의회, 청소년 운영위원회를 통해 청소년 정치 활동에 참여하고 있었다. 이러한 활동들은 정치 자체에 대한 관심 증대,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확립, 타인과의 소통 역량 증진 등의 방식으로 청소년들의 정치적 성장과 정치역량 강화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들은 각각

환경, 경제, 부동산 정책 등 다양한 정치 영역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 중 교육 분야에 대한 관심이 가장 두드러졌다. 정치적 이슈와 관련 정보의 습득은 주로 SNS, 포털 사이트 등의 온라인 매체를 통해 이뤄지고 있었다. 정치적 현안에 대한 대화는 가족들과 가장 많이 나누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제로 본인의 정치적 견해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사람은 부모님이라고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공통적으로 보고하였다.

청소년들은 정치를 통한 사회 변화가 정치를 행하는 주체, 즉 정치인과 국민의 참여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동의하였다. 국민이 선출한 각 분야의 전문가로서의 정치인들의 노력과 그를 평가하고 감시하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수반될 때, 정치를 통한 사회적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견해가 주를 이뤘다. 같은 맥락에서, 다수의 청소년들이 정치참여의 중요성에 공감하였는데, 민주 사회에서의 정치참여는 국민으로서의 당연한 권리이며, 정치참여에 대한 비판적이고 회의적인 시선은 지양되어야함을 주장하였다. 다만, 선거에 대한 관심도는 다소 떨어지는 듯 보였는데, 이는 청소년들이 선거 연령에 포함되지 못함으로 인해 선거에 대한 청소년들의 주목도가 비교적 낮은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들이 생각한 청소년 정치참여 저해 요소는 정치 교육의 부재와 청소년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었다. 입시에 치중된 한국의 교육제도는 과도한 학업부담을 청소년들에게 부과하는 반면, 정치에 대한 교육은 단편적이고 일회적인 수준에 머물러 청소년들의 정치적 소양을 배양함에 있어 실질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청소년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더불어, ‘청소년들은 미성숙하다’라는 인식의 고착화가 청소년들의 정치참여를 가로막고 있음에도, 그를 개선하려는 시도 또한 부족한 실정이라고 청소년들은 주장했다. 이에 청소년들은 청소년의회와 같은 청소년 참여기구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해당 기관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1일 국회 체험’, ‘정책 제안하기’ 등과 같이 청소년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정치 교육이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하였다. 또, 청소년 정치참여에 대한 기성세대들의 부정적 인식의 재고가 이

뤄져야한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다만, 일부 청소년들은 ‘청소년들이 미성숙하다’는 인식이 부정적이라고만 볼 수는 없으며, 청소년들이 학업을 뒤로 한 채 정치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정치 교육 부재에 대한 청소년들의 공통적인 문제의식은 선거권 연령 하향에 대한 청소년들의 관점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선거권 연령 하향 조정에 대한 청소년들의 의견은 ‘선거권뿐만 아니라 피선거권까지 하향 조정해야한다.’는 의견에서부터, ‘더 이상의 하향은 불가하다.’는 의견까지 다양하게 나타났지만,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선거권 연령 하향에 앞서 정치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이 선행되어야함에 공감하였다.

정치·행정·언론에 대한 청소년들의 신뢰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언론에 대한 반감과 불신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으며, 이는 정치적 성향을 떠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언론의 부정적 면모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들이 꼽은 차기 대통령에게 필요한 자질은 공정성, 정의, 인내심, 지도력, 청렴함, 국가를 위하는 진실한 마음, 인재 고르는 안목 등이었다.

(2) 정치참여 경험이 없는(無) 고등학생 대상 FGI 조사결과 요약

본 집단면접에 참여한 대부분 정치참여 경험이 없는 고등학생들이었다. 청소년들은 정치가 자신들의 삶과 크게 연관되어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사회적으로 큰 화제가 되는 정치적 이슈들에 대해서만 가끔 관심을 가질 뿐, 정치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 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적 이슈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되는 경로는 주로 뉴스나 부모님이었으며, 청소년들의 정치적 견해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또한 부모님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부 청소년은 정치적 견해와 관점이 매체나 부모님과 무관하다고 보고하기도 하였다.

정치에 대한 관심 수준이 높지 않았지만, 청소년들의 정치의식이 부재한 것은

아니었다. 모든 청소년들이 정치가 큰 사회 변화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며, 정치인들의 역량과 영향력, 민주적인 합의 과정의 효과성, 정치가 사회 변화를 일으켰던 역사적 사실 등을 근거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였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정치적 견해가 다른 상대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과 인정을 강조하였으며, 상호배타적인 관점에서의 논쟁과 합의가 중요하다고 주장한 청소년도 있었다.

청소년들은 학교 현장에서 충분한 정치 교육을 받고 있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소년들은 청소년의 정치참여를 저해하는 요인 중 하나로 정치 교육의 부재를 꼽았으며, 학교에서 정치 또는 선거 관련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답한 청소년들이 대다수였다. 덧붙여,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지속적으로 정치에 대한 생각을 환기시킬 수 있는 정치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청소년들이 꼽은 또 다른 정치참여 저해 요인은 입시부담(학업)이었으며, 이는 선거권 연령 하향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도 이어졌다. 선거 연령을 하향함으로써 청소년들에게 정치적 책임을 부과한다면, 이는 학업에 매진하는 청소년들에게 과중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청소년들은 주장하였다. 또, 선거권 연령이 하향될 경우, 자신의 정치적 책임을 방기한 채, 진중하지 못한 태도로 투표에 임할 청소년들이 많을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반대로, 학업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한 만 16, 17세부터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보인 청소년도 있었다.

입법부(국회)에 대한 청소년들의 불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체를 통해 보도되는 국회의원들의 비리, 몸싸움과 같은 폭력적인 행태, 부정부패 등에 대한 청소년들의 반발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소년들이 꼽은 차기 대통령에게 필요한 자질로는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에게 걸맞은 품행과 인성, 책임감, 국민과의 소통 역량 등이 있었다.

○———— 제7장 청소년 정치참여 활성화에 대한 전문가 AHP 및 IPA분석

- 1. 조사개요
- 2. 청소년 정치참여 활성화에
대한 기본 설문 결과
- 3. 청소년 정치참여 활성화에
대한 전문가 의견 AHP분석
- 4. 청소년 정치참여 활성화에
대한 전문가 의견 IPA분석
- 5. 전문가 의견 조사 시사점



청소년 정치참여 활성화에 대한 전문가 AHP 및 IPA분석¹⁴⁵⁾

1. 조사개요

지금까지 청소년의 정치참여 활성화에 대한 현황과 청소년의 실태조사 의견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청소년 정치참여 활성화의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현장 또는 학계 전문가들을 바탕으로 보다 심층적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청소년전문가패널단’을 대상으로 청소년 정치참여의 활성 요인과 앞으로 중요한 과제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¹⁴⁶⁾, 응답자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청소년전문가패널단’ 소속의 전문가들이다. 이들은 청소년활동분야의 현장전문가 집단인 ‘청소년전문가(활동)’, 청소년보호복지분야의 현장전문가 집단인 ‘청소년전문가(보호복지)’ 그리고 학계 및 연구소 등에 종사하는 전문가 집단인 ‘청소년전문가(기타)’로 구분된다.

조사는 9월 중순부터 10월 초까지 온라인 URL로 진행하며 응답하도록 하였다. 전체 사례 수는 301명이며, 남자는 146명(48.5%)이고 여자는 155명(51.5%)이다. 연령대는 20대 19명(6.3%), 30대 100명(33.2%), 40대 114명(37.9%), 50대 63명(20.9%), 60대 이상 5명(1.7%)이다. 최종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1명(0.3%), 전문대학

145) 제7장은 모상현 선임연구위원과 최용환 연구위원이 공동으로 집필하였다.

146) 본 전문가 설문조사는 2021년 9월 3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제24차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다.

졸업 4명(1.3%), 대학교 졸업 103명(34.2%), 석사 졸업 116명(38.5%), 박사 졸업 76명(25.2%), 기타 1명(0.3%)이다. 업무경력은 5년 미만은 41명(13.6%), 5~10년 미만은 90명(29.9%), 10~15년 미만은 72명(23.9%), 15~20년 미만은 55명(18.3%), 20년 이상은 43명(14.3%)이다.

응답자 소속 기관(유형)의 경우, 청소년 활동 관련 기관/시설은 147명(48.8%), 청소년보호복지 관련 기관/시설은 104명(34.6%), 연구기관/연구소는 20명(6.6%), 대학 23명(7.6%), 기타 7명(2.3%)이다. 응답자 소재지는 서울 38명(12.6%), 부산 24명(8.0%), 대구 15명(5.0%), 인천 12명(4.0%), 광주 16명(5.3%), 대전 15명(5.0%), 울산 11명(3.7%), 세종 8명(2.7%), 경기 20명(6.6%), 강원 18명(6.0%), 충북 19명(6.3%), 충남 20명(6.6%), 전북 12명(4.0%), 전남 23명(7.6%), 경북 16명(5.3%), 경남 20명(6.6%), 제주 14명(4.7%)이다.

표 VII-1. 응답자 특성

분류	구분	빈도	비율(%)
성별	남자	146	48.5
	여자	155	51.5
연령대	20대	19	6.3
	30대	100	33.2
	40대	114	37.9
	50대	63	20.9
	60대 이상	5	1.7
최종 학력	고등학교 졸업	1	0.3
	전문대학 졸업	4	1.3
	대학교 졸업	103	34.2
	석사 졸업	116	38.5
	박사 졸업	76	25.2
	기타	1	0.3

분류	구분	빈도	비율(%)
업무 경력	5년 미만	41	13.6
	5~10년 미만	90	29.9
	10~15년 미만	72	23.9
	15~20년 미만	55	18.3
	20년 이상	43	14.3
기관 유형	청소년 활동 관련 기관 / 시설	147	48.8
	청소년보호복지 관련 기관 / 시설	104	34.6
	연구기관 / 연구소	20	6.6
	대학	23	7.6
	기타	7	2.3
소재지	서울	38	12.6
	부산	24	8.0
	대구	15	5.0
	인천	12	4.0
	광주	16	5.3
	대전	15	5.0
	울산	11	3.7
	세종	8	2.7
	경기	20	6.6
	강원	18	6.0
	충북	19	6.3
	충남	20	6.6
	전북	12	4.0
	전남	23	7.6
	경북	16	5.3
	경남	20	6.6
	제주	14	4.7

2. 청소년 정치참여 활성화에 대한 기본 설문 결과

청소년 정치참여 활성화에 대한 기본 설문은 크게 8가지로 이루어졌다. ① 청소년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교육 분야, ② 학교 안팎에서 학생들의 정치참여를 저해하는 요인, ③ 학교 안팎에서 학생들의 정치참여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요인, ④ 청소년 정치참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적 이슈, ⑤ 청소년 정치참여 활성화에 중요한 최근 정치 환경, ⑥ 청소년 정치참여 활성화에 중요한 주요 요인, ⑦ 청소년 정치참여 활성화에 중요한 추진 전략, ⑧ 청소년 정치참여 활성화에 중요한 주요 교육내용이 각각 그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설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교육 분야

청소년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교육 분야는 크게 5가지로 구분되어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정치적인 문제나 이슈에 관한 토론수업, 모의선거, 시민성 함양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리더십 함양 교육, 국회나 도의회/시의회 등 정치기관 견학이 그에 해당한다. 각각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 VIII-2>와 같다.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응답 점수를 보인 교육 분야는 ‘시민성 함양을 위한 민주 시민교육(4.62)’이며, 이어서 ‘정치적인 문제나 이슈에 관한 토론 수업(4.53)’, ‘모의선거(4.50)’ 순이다.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응답 점수로 나타난 교육은 ‘국회나 도의회/시의회 등 정치기관 견학(3.88)’이다.

이러한 결과는 세 분야로 구분된 청소년 전문가 각각의 응답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대체로 청소년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해 시민성 함양을 위한 민주시민 교육을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반면, 정치기관 견학은 낮게 인식하고 있다.

표 VII-2. 청소년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교육 분야

(단위: 명, 5점 척도)

교육 분야	집단	전체	청소년 전문가		
			활동	보호복지	기타
사례수		301	147	104	50
정치적인 문제나 이슈에 관한 토론수업		4.53	4.50	4.59	4.52
모의선거		4.50	4.61	4.52	4.18
시민성 함양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4.62	4.64	4.60	4.60
리더십 함양 교육		4.38	4.44	4.40	4.12
국회나 도의회/시의회 등 정치 기관 견학		3.88	3.87	3.92	3.80

2) 학교 안팎에서 학생들의 정치참여를 저해하는 요인

학교 안팎에서 학생들의 정치참여를 저해하는 요인 역시 크게 5가지로 구분되고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가정에서의 자기 의사표현 등 결정권이 보장되지 않음, 학교에서의 자기 의사표현 등 결정권이 보장되지 않음, 학교에서 정치참여의 실천적 기회가 제공되지 않음, 학교에서 정치참여의 실천적 기회가 제공되지 않음, 입시 위주의 교육 제도, 학생정치참여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시각이 그에 해당한다. 각각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 VII-3>과 같다.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응답 점수를 보인 요인은 ‘입시위주의 교육 제도(4.72)’이며, 이어서 ‘학교에서 정치참여의 실천적 기회가 제공되지 않음(4.33)’, ‘학생정치참여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시각(4.09)’ 순이다.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응답 점수로 나타난 요인은 ‘가정에서의 자기 의사표현 등 결정권이 보장되지 않음(3.70)’이다.

이러한 결과는 세 분야로 구분된 청소년 전문가 각각의 응답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대체로 입시위주의 교육제도가 학교 안팎에서 학생들의 정치참여를 많이

저해하고 있는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표 VII-3. 학교 안팎에서 학생들의 정치참여를 저해하는 요인

(단위: 명, 5점 척도)

저해 요인	집단	전체	청소년 전문가		
			활동	보호복지	기타
사례수		301	147	104	50
가정에서의 자기 의사표현 등 결정권이 보장되지 않음		3.70	3.65	3.90	3.42
학교에서의 자기 의사표현 등 결정권이 보장되지 않음		3.93	3.95	3.96	3.84
학교에서 정치참여의 실천적 기회가 제공되지 않음		4.33	4.39	4.30	4.24
입시위주의 교육 제도		4.72	4.78	4.71	4.56
학생정치참여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시각		4.09	4.29	3.90	3.88

3) 학교 안팎에서 학생들의 정치참여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요인

학교 안팎에서 학생들의 정치참여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요인은 크게 5가지로 구분되어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가정에서의 자기 의사표현 등 결정권 보장, 학교에서의 자기 의사표현 등 결정권 보장, 학교에서 정치 및 인권 교육의 확대, 중/고등학생의 정당가입 허용, 청소년의 학교 밖 정치참여 활동 허용이 그에 해당한다. 각각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 VII-4>와 같다.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응답 점수를 보인 요인은 ‘학교에서 정치 및 인권 교육의 확대(4.60)’이며, 이어서 ‘학교에서의 자기 의사표현 등 결정권 보장(4.58)’, ‘가정에서의 자기 의사표현 등 결정권 보장(4.37)’ 순이다.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응답 점수로 나타난 요인은 ‘중/고등학생의 정당가입 허용(3.19)’이다.

이러한 결과는 활동 분야와 기타 분야 청소년 전문가들의 응답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단, 보호복지 분야 전문가들의 응답에서는 미세한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전체적인 경향은 유사하다. 따라서 학교와 가정에서의 역할이 학교 안팎에서 학생들의 정치참여를 활성화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VII-4. 학교 안팎에서 학생들의 정치참여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요인

(단위: 명, 5점 척도)

활성화 요인	집단 전체	청소년 전문가		
		활동	보호복지	기타
사례수	301	147	104	50
가정에서의 자기 의사표현 등 결정권 보장	4.37	4.35	4.46	4.20
학교에서의 자기 의사표현 등 결정권 보장	4.58	4.61	4.61	4.48
학교에서 정치 및 인권 교육의 확대	4.60	4.67	4.60	4.38
중/고등학생의 정당가입 허용	3.19	3.33	3.13	2.90
청소년의 학교 밖 정치참여 활동 허용	3.85	4.03	3.78	3.48

4) 청소년 정치참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적 이슈

청소년 정치참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적 이슈에 대해 크게 5가지로 구분하여 9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코로나19 감염증의 지속, 1인 온라인 미디어 사용의 증가, 인공지능 등 스마트 기술 등장, 메타버스 등 가상현실 등장, 가짜뉴스 증가가 그에 해당한다. 각각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 VII-5>와 같다.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응답 점수를 보인 사회적 이슈는 ‘가짜뉴스 증가(7.72)’

이며, 이어서 '1인 온라인 미디어 사용의 증가(7.59)', '인공지능 등 스마트 기술 등장(7.12)' 순이다.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응답 점수로 나타난 사회적 이슈는 '코로나19 감염증의 지속(6.73)'이다.

이러한 결과는 세 분야로 구분된 청소년 전문가 각각의 응답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대체로 가짜뉴스 증가와 1인 온라인 미디어 사용의 증가가 청소년의 정치 참여에 많은 영향을 주는 사회적 이슈로 인식되고 있다.

표 VII-5. 청소년 정치참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적 이슈

(단위: 명, 9점 척도)

사회적 이슈	집단 전체	청소년 전문가		
		활동	보호복지	기타
사례수	301	147	104	50
코로나19 감염증의 지속	6.73	6.97	6.58	6.36
1인 온라인 미디어 사용의 증가	7.59	7.75	7.52	7.28
인공지능 등 스마트 기술 등장	7.12	7.20	7.22	6.70
메타버스 등 가상현실 등장	7.03	7.14	7.10	6.60
가짜뉴스 증가	7.72	7.76	7.77	7.50

5) 청소년 정치참여 활성화에 중요한 최근 정치 환경

청소년 정치참여 활성화에 중요한 최근의 정치 환경에 대해 크게 6가지로 구분하여 9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제도권 내 젊은 정치인 증가, 지역 간 감정 대립 감소,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 증가, 과반석 이상의 단일 정당 존재, 여성 국회의원 증가, 의원입법 증가가 그에 해당한다. 각각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 VII-6>과 같다.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응답 점수를 보인 최근의 정치 환경은 '제도권 내 젊은

정치인 증가(6.87)'이며, 이어서 '지역간 감정 대립 감소(6.65)', '의원입법 증가(6.59)' 순이다.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응답 점수로 나타난 최근 정치 환경은 '과반석 이상의 단일 정당 존재(5.17)'이다.

이러한 결과는 세 분야로 구분된 청소년 전문가 각각의 응답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각 분야 전문가 모두가 제도권 내 젊은 정치인의 증가가 청소년의 정치 참여 활성화에 중요한 최근 정치 환경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VII-6. 청소년 정치참여 활성화에 중요한 최근 정치 환경

(단위: 명, 9점 척도)

최근 정치 환경	집단 전체	청소년 전문가		
		활동	보호복지	기타
사례수	301	147	104	50
제도권 내 젊은 정치인 증가	6.87	6.92	7.00	6.46
지역 간 감정 대립 감소	6.65	6.73	6.73	6.22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 증가	6.45	6.57	6.48	6.02
과반석 이상의 단일 정당 존재	5.17	5.36	5.14	4.64
여성 국회의원 증가	6.13	6.09	6.20	6.10
의원입법 증가	6.59	6.81	6.49	6.16

6) 청소년 정치참여 활성화에 중요한 주요 요인

청소년의 정치참여 활성화에 중요한 주요 요인은 크게 5가지로 구분되어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청소년의 주도적 참여, 일반 청소년의 참여기회 확대, 지역 사회에서 청소년의 일상적 참여 확대, 형식적/일회적 참여에서 탈피해 지속 참여, 학교 자치활동 강화 및 교육이 그에 해당한다. 각각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 VII-7>과 같다.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응답 점수를 보인 요인은 '청소년의 주도적 참여(4.21)'와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의 일상적 참여 확대(4.21)’이며, 이어서 ‘일반 청소년의 참여기회 확대(4.13)’, ‘학교 자치활동 강화 및 교육(4.12)’ 순이다.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응답 점수로 나타난 요인은 ‘형식적/일회적 참여에서 탈피해 지속 참여(4.09)’이다.

이러한 결과는 활동 분야와 보호 복지 분야 청소년 전문가들의 응답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단, 기타 분야 전문가들의 응답에서는 학교 자치활동 강화 및 교육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다소의 차이를 보였다.

표 Ⅶ-7. 청소년 정치참여 활성화에 중요한 주요 요인

(단위: 명, 5점 척도)

주요 요인	집단	전체	청소년 전문가		
			활동	보호복지	기타
사례수		301	147	104	50
청소년의 주도적 참여		4.21	4.37	4.19	3.80
일반 청소년의 참여기회 확대		4.13	4.22	4.10	3.92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의 일상적 참여 확대		4.21	4.29	4.20	3.98
형식적/일회적 참여에서 탈피해 지속 참여		4.09	4.18	4.09	3.80
학교 자치활동 강화 및 교육		4.12	4.12	4.14	4.08

7) 청소년 정치참여 활성화에 중요한 추진 전략

청소년의 정치참여 활성화에 중요한 추진 전략은 크게 5가지로 구분되어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구체적으로 청소년참여가 지속적일 수 있게 법·예산·조직 등 제도적 여건 구비, 청소년 참여기구 활성화 방안 마련, 다양한 매체를 통한 참여 통로 확대 및 논의의 장 마련, 청소년참여를 위한 다양한 유인책 마련, 참여의

개방성 확보 등 전 과정에서 청소년참여의 가치와 원칙이 고려되는 정책 실천이 그에 해당한다¹⁴⁷⁾. 각각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 VII-8>과 같다.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응답 점수를 보인 추진 전략은 ‘참여의 개방성 확보 등 전 과정에서 청소년참여의 가치와 원칙이 고려되는 정책 실천(4.12)’이며, 이어서 ‘청소년참여가 지속적일 수 있게 법·예산·조직 등 제도적 여건 구비(4.11)’, ‘청소년 참여기구 활성화 방안 마련(4.10)’ 순이다.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응답 점수로 나타난 추진 전략은 ‘다양한 매체를 통한 참여통로 확대 및 논의의 장 마련(4.04)’이다.

이러한 결과는 활동 분야와 보호 복지 분야 청소년 전문가들의 응답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단, 기타 분야 전문가들의 응답에서는 청소년참여를 위한 다양한 유인책 마련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다소의 차이를 보였다.

표 VII-8. 청소년 정치참여 활성화에 중요한 추진 전략

(단위: 명, 5점 척도)

추진 전략	집단	전체	청소년 전문가		
			활동	보호복지	기타
사례수		301	147	104	50
청소년참여가 지속적일 수 있게 법·예산·조직 등 제도적 여건 구비	4.11	4.23	4.12	4.12	3.74
청소년 참여기구 활성화 방안 마련	4.10	4.18	4.10	4.10	3.84
다양한 매체를 통한 참여통로 확대 및 논의의 장 마련	4.04	4.10	4.08	4.08	3.80
청소년참여를 위한 다양한 유인책 마련	4.05	4.09	4.01	4.01	4.02
참여의 개방성 확보 등 전 과정에서 청소년참여의 가치와 원칙이 고려되는 정책 실천	4.12	4.24	4.07	4.07	3.86

147) 청소년 정치참여 활성화에 중요한 추진 전략은 이혜숙과 이영주(2017)에서 활용한 문항을 인용하였음.

8) 청소년 정치참여 활성화에 중요한 주요 교육내용

청소년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교육 내용은 크게 6가지로 구분되어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기본적 시민권 지식 습득과 주요 개념 이해, 토의, 토론을 통한 의사결정 및 의사결정 참여, 지역사회 활동 참여, 시민사회 활동 참여, 갈등 조정과정 이해, 선거제도의 이해가 그에 해당한다. 각각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 VII-9>와 같다.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응답 점수를 보인 교육 내용은 ‘토의, 토론을 통한 의사결정 및 의사결정 참여(4.17)’이며, 이어서 ‘지역사회 활동 참여(4.13)’, ‘시민사회 활동 참여(4.03)’ 순이다.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응답 점수로 나타난 교육 내용은 ‘선거제도의 이해(3.99)’이다.

이러한 결과는 세 분야로 구분된 청소년 전문가 각각의 응답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단, 기타 분야 전문가의 경우 다소의 차이를 보이지만, 전반적으로는 모든 분야 전문가들이 청소년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해 토의, 토론을 통한 의사결정 및 의사결정 참여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

표 VII-9. 청소년 정치참여 활성화에 중요한 주요 교육내용

(단위: 명, 5점 척도)

교육 내용	집단 전체	청소년 전문가		
		활동	보호복지	기타
사례수	301	147	104	50
기본적 시민권 지식 습득과 주요 개념 이해	4.02	4.06	4.03	3.90
토의, 토론을 통한 의사결정 및 의사결정 참여	4.17	4.15	4.18	4.20
지역사회 활동 참여	4.13	4.20	4.08	4.04
시민사회 활동 참여	4.03	4.14	3.97	3.82
갈등 조정과정 이해	4.00	3.93	4.06	4.10
선거제도의 이해	3.99	4.04	3.96	3.92

3. 청소년 정치참여 활성화에 대한 전문가 의견 AHP분석

1) 개요

본 조사에서는 세 분야로 구분된 청소년 전문가(활동, 보호복지, 기타)를 대상으로 AHP 분석을 실시하여 청소년 정치참여와 관련된 주요 사항별 중요도를 도출하였다. 청소년 전문가들은 각각의 주요 사항에 대해 정성적 지식에 기초하여 상대적인 중요도를 판단하였다. 중요도 판단 결과는 가중치로 계산된다.

분석된 주요 사항에 해당하는 항목은 크게 5개이다. ① 청소년 정치참여 교육의 시기적 중요성, ② 청소년 정치참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관의 중요성, ③ 청소년의 정치참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화 상대의 중요도, ④ 청소년들의 정치참여 활성화와 관련한 정치행위의 중요도, ⑤ 청소년의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해 다방면(교육, 직접 참여 등)의 사례로 활용할 수 있는 우리나라 주요 선거의 중요성이 각각에 해당한다.

2) 청소년 정치참여 교육의 시기적 중요성

청소년 전문가들이 청소년 정치참여 교육의 시기적 중요성을 판단한 결과에 따르면, 그 가중치는 ‘청년기’,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가중치로 계산된 청년기는 40.6%이고, 고등학교는 27.7%, 중학교는 16.8%, 초등학교는 14.9%이다. 따라서 청소년 전문가들이 상대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치참여 교육 시기는 청년기이며, 이는 가장 낮은 초등학교 시기보다 25.7% 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그림 VIII-1]은 그에 대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청소년 전문가별로 정치참여 교육의 시기적 중요성에 대한 가중치 차이를 보면, 전체적인 중요도 양상은 모두 비슷하지만 다소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보호복지 분야 청소년 전문가가 다른 전문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청년기의 중요도 가중치(45.5%)를 더 높게 부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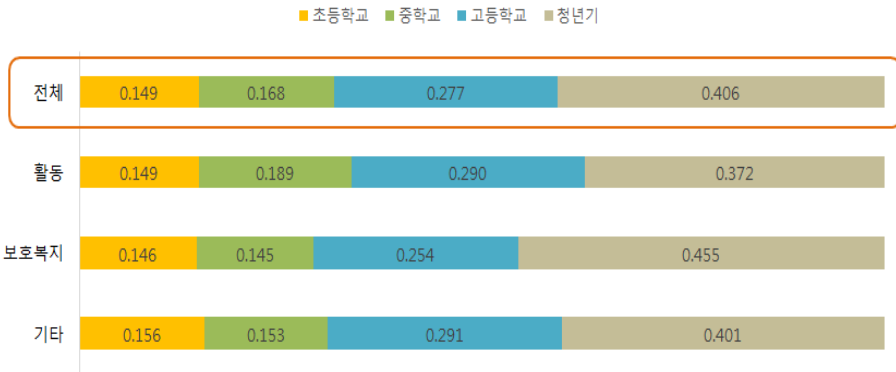


그림 VII-1. 청소년들의 정치참여 교육의 시기적 중요성

3) 청소년 정치참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관의 중요성

청소년 전문가들이 청소년 정치참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관의 중요성을 판단한 결과에 따르면, 가중치 기준으로 볼 때 ‘학교 및 청소년시설’, ‘시도교육청’,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정당’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가중치로 계산된 학교 및 청소년시설은 36.9%이고, 시도교육청은 27.1%,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는 23.4%, 정당은 12.6%이다. 따라서 청소년 전문가들이 상대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청소년 정치참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관은 학교 및 청소년시설이며, 이는 가장 낮은 정당보다 24.3% 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그림 VII-2]는 그에 대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청소년 전문가별로 청소년 정치참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관의 중요성에 대한 가중치 차이를 보면, 전체적인 중요도 양상은 모두 비슷함을 알 수 있다.

상대적으로 기타 분야 청소년 전문가들이 활동 및 보호복지 분야 전문가들에 비해 학교 및 청소년 시설의 중요도 가중치(38.6%)를 다소 높게 부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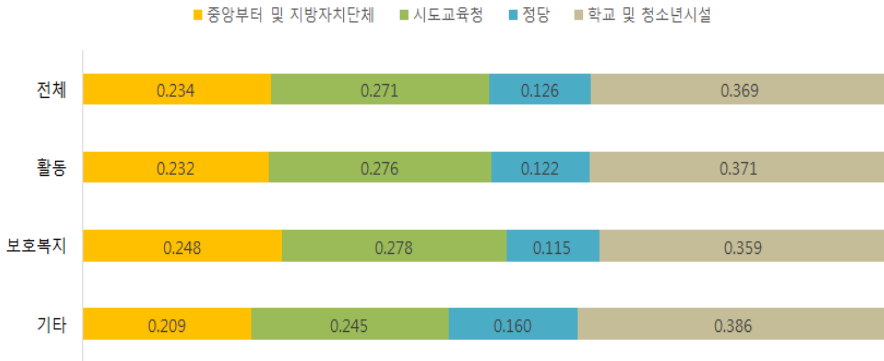


그림 VII-2. 청소년들의 정치참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관별 중요성

4) 청소년의 정치참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화 상대의 중요도

청소년 전문가들이 청소년 정치참여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화 상대의 중요성을 판단한 결과에 따르면, 가중치 기준으로 볼 때 ‘부모님’, ‘학교 선생님’, ‘친구들’, ‘온라인 유저’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가중치로 계산된 부모님은 29.6%이고, 학교 선생님은 26.5%, 친구들은 25.8%, 온라인 유저는 18.1%이다. 따라서 청소년 전문가들이 상대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청소년 정치참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화 상대는 부모님이며, 이는 가장 낮은 온라인 유저보다 11.5% 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그림 VII-3]은 그에 대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결국 온라인을 활용한 각종 미디어를 접하는 정도가 높아지더라도 부모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작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소년 전문가별로 청소년의 정치참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화 상대의 중요성에

대한 가중치 차이를 보면, 활동 분야의 청소년 전문가의 경우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중요도 양상은 비슷함을 알 수 있다. 특히 보호복지 전문가와 기타 전문가는 정치참여에 영향을 주는 대화 상대로서 부모님의 가중치가 그 외 대상들 보다 비교적 큰 폭의 차이로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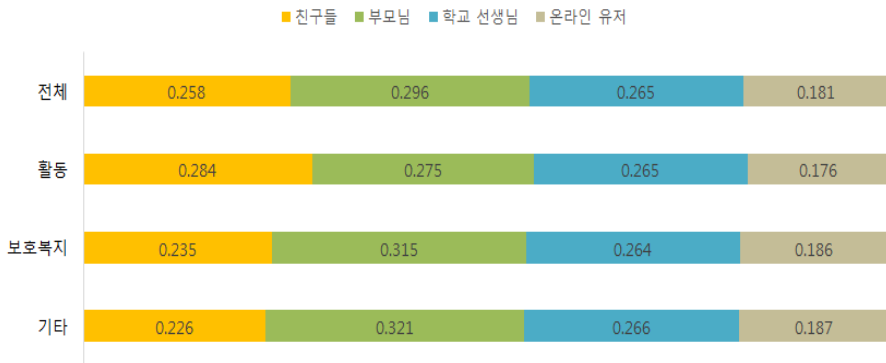


그림 VII-3. 청소년들의 정치참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화 상대의 중요성

5) 청소년들의 정치참여 활성화와 관련한 정치행위의 중요도

청소년 전문가들이 청소년들의 정치참여 활성화와 관련한 정치행위의 중요도를 판단한 결과에 따르면, 가중치 기준으로 볼 때 ‘자치활동’, ‘투표’, ‘정치교육’, ‘SNS 활동’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가중치로 계산된 자치활동은 32.8%이고, 투표는 26.2%, 정치교육은 25.2%, SNS 활동은 15.7%이다. 따라서 청소년 전문가들이 상대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청소년 정치참여 활성화와 관련된 정치행위는 자치활동이며, 이는 가장 낮은 SNS 활동보다 17.1% 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그림 VII-4]는 그에 대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청소년 전문가별로 청소년들의 정치참여 활성화와 관련한 정치행위의 중요성에

대한 가중치 차이를 보면, 전체적인 중요도 양상은 모두 비슷함을 알 수 있다. 특히 기타 분야 청소년 전문가들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가중치(37.6%)를 보이면서, 다른 정치행위들보다도 비교적 큰 폭의 차이로 그 중요성을 판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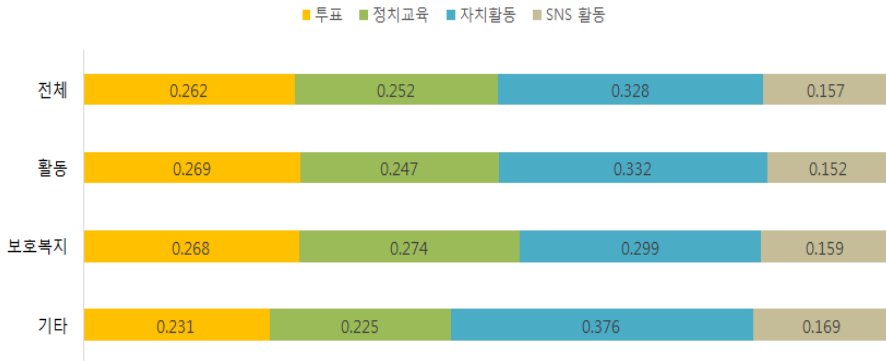


그림 VII-4. 청소년들의 정치참여 활성화와 관련한 정치행위의 중요성

6) 청소년 정치참여 활성화 사례로 활용될 수 있는 선거의 중요성

청소년의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해 다방면(교육, 직접 참여 등)의 사례로 활용할 수 있는 우리나라 주요 선거의 중요도를 판단한 결과에 따르면, 가중치 기준으로 볼 때 ‘교육감 선거’, ‘대통령 선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의회의원 선거’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가중치로 계산된 교육감 선거는 27.6%이고, 대통령 선거는 27.5%,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17.4%, 국회의원 선거는 14.4%, 지방의회의원 선거는 13.0%이다. 따라서 청소년 전문가들이 상대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청소년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례로 활용될 수 있는 선거는 교육감 선거이며, 이는 가장 낮은 지방의회의원 선거보다 14.6% 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그림 VII-5]는 그에 대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청소년 전문가별로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선거에 대한 가중치 차이를 보면, 다소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활동 분야 전문가를 제외하고 보호복지와 기타 분야 전문가들은 교육감 선거보다 대통령 선거가 정치참여 활성화 사례로 활용되는데 더 중요성이 높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실제로 전체 가중치 분석 결과에서도 주요 선거 중 대통령 선거와 교육감 선거 간 가중치 차이는 크지 않은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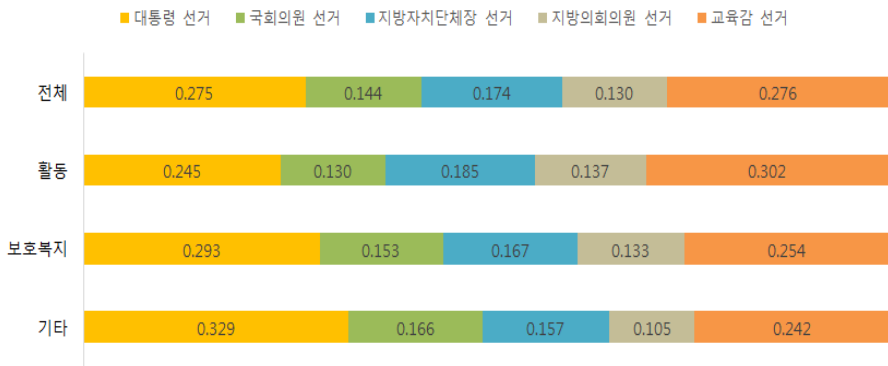


그림 Ⅶ-5. 청소년들의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례로 활용할 수 있는 주요 선거의 중요성

4. 청소년 정치참여 활성화에 대한 전문가 의견 IPA분석

1) 개요

본 조사에서는 중요도-성과 분석(IPA: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을 활용하여 정부에서 해결해야할 청소년 관련 문제와 그 실행(성과) 정도를 파악하였다. 이는 청소년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선행 해결 과제 및 상호 복합 요인에 대한 중요도와 성과 분석에 해당된다. 이를 위해 세 분야(활동, 보호복지, 기타)로

구분된 청소년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청소년 전문가는 정부에서 해결해야 할 청소년 관련 문제의 중요도와 실행정도를 각각 9점 척도(1~9점)로 평가하였고, 중요도와 실행정도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IPA 매트릭스 분석을 실시하였다. IPA 매트릭스는 유지강화(I 사분면), 중점개선(II 사분면), 점진개선(III 사분면), 지속유지(IV 사분면) 네 영역으로 구분된다(그림 VII-6).



그림 VII-6. IPA 매트릭스

[그림 VII-6]에서 I 사분면은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해결해야 할 청소년 관련 문제 이면서 동시에 현재 그 문제 해결이 충분히 실행되며 성과를 보이고 있는 위치이다. 중요도와 성과 모두 높은 상태를 계속 유지 및 강화해야 할 영역에 해당한다. II 사분면은 중요도는 높으나 그 실행정도가 낮은 상태를 보이고 있는 위치이다. 이는 중점적으로 개선해야 할 영역에 해당한다. III 사분면은 중요도와 실행정도가

모두 낮은 상태를 나타내는 위치이다. 이 위치는 점진적으로 개선해야 할 영역으로 분류된다. IV사분면은 중요도는 낮은 반면, 실행정도는 높은 위치이다. 이는 지속 유지 영역에 해당한다.

본 조사에서 청소년 전문가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청소년 관련 문제 종류는 총 9가지이다. 여기에는 입시위주의 교육문제, 선거권 연령 하향, 학교 폭력 문제, 게임 중독 문제, 안전 문제, 학교 밖 청소년 등 위기 청소년 문제, 청소년 자살 문제, 학생 인권 문제, 청소년대상 성폭력 문제가 포함된다. 따라서 청소년 전문가 각각의 청소년 관련 문제에 대해 정성적 지식에 기초하여 상대적인 중요도와 성과를 평가하였다.

2) 전체 분석 결과

청소년 전문가들이 정부에서 해결해야 할 청소년 관련 문제의 중요성에 대해 9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대상 성폭력 문제(8.18)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서 청소년 자살 문제(8.16), 입시위주의 교육 문제(8.07), 학교 폭력 문제(7.94), 학생인권 문제(7.80), 학교 밖 청소년 등 위기 청소년 문제(7.77), 안전 문제(7.59), 선거권 연령 하향(7.38), 게임 중독 문제(7.34) 순이다. 각 청소년 전문가별 중요성 점수를 포함한 전체 결과는 <표 VII-10>과 같다.

표 VII-10. 현행 정부에서 해결되어야 할 청소년 관련 문제의 중요성

(단위: 명, 9점 척도)

청소년 관련 문제	집단	전체	청소년 전문가		
			활동	보호복지	기타
사례수		301	147	104	50
입시위주의 교육문제		8.07	8.12	8.11	7.84
선거권연령 하향		7.38	7.90	7.18	6.26
학교폭력문제		7.94	7.93	8.13	7.62
게임중독문제		7.34	7.24	7.62	7.08
안전문제		7.59	7.59	7.69	7.36
학교 밖 청소년 등 위기청소년 문제		7.77	7.63	8.06	7.58
청소년자살 문제		8.16	8.12	8.30	7.98
학생인권 문제		7.80	7.89	7.80	7.56
청소년대상 성폭력 문제		8.18	8.24	8.15	8.06

이와 함께 청소년 전문가들이 정부에서 해결해야 할 청소년 관련 문제에 대한 성과(성과)에 대해서도 9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그 결과에 따르면, 안전 문제(5.20)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서 선거권 연령 하향(5.00), 학교 밖 청소년 등 위기 청소년 문제(4.89), 학생인권 문제(4.83), 학교 폭력 문제(4.46), 게임 중독 문제(4.38), 청소년 자살 문제(4.33), 청소년대상 성폭력 문제(4.21), 입시위주의 교육 문제(3.71) 순이다. 각 청소년 전문가별 성과 점수를 포함한 전체 결과는 <표 VII-11>과 같다.

표 VII-11. 현행 정부에서 해결되어야 할 청소년 관련 문제의 성과

(단위: 명, 9점 척도)

청소년 관련 문제	집단	전체	청소년 전문가		
			활동	보호복지	기타
사례수		301	147	104	50
입시위주의 교육문제		3.71	3.84	3.74	3.26
선거권연령 하향		5.00	5.17	4.90	4.72
학교폭력문제		4.46	4.62	4.58	3.74
게임중독문제		4.38	4.63	4.37	3.66
안전문제		5.20	5.47	4.97	4.88
학교 밖 청소년 등 위기청소년 문제		4.89	5.18	4.81	4.24
청소년자살 문제		4.33	4.54	4.31	3.76
학생인권 문제		4.83	5.05	4.73	4.36
청소년대상 성폭력 문제		4.21	4.45	4.27	3.38

이와 같이 청소년 전문가들이 청소년 관련 문제별로 중요도-성과에 대해 정성적 판단 및 평가를 한 결과는 [그림 VII-7]과 같이 중요도와 성과의 각 평균값을 기준으로 4개의 영역으로 구분되어 도출된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중요도의 평균은 7.80 이고 성과는 4.56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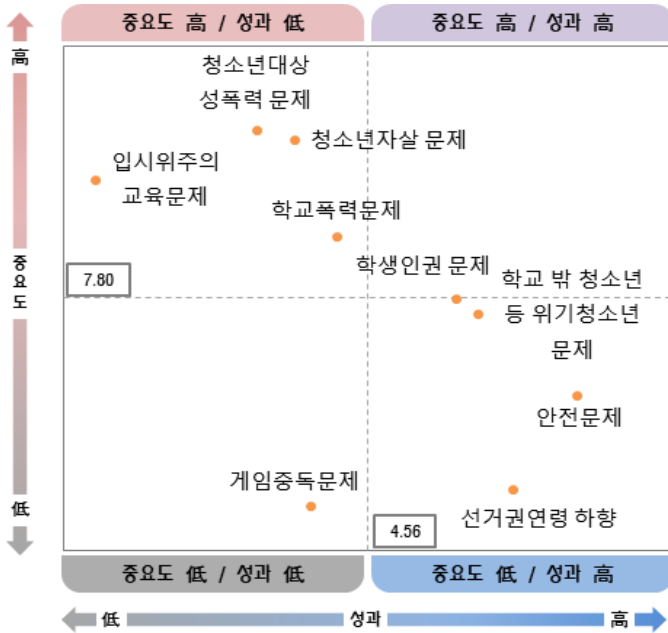


그림 Ⅶ-7. 청소년 전문가 대상의 전체 IPA 결과

구체적으로 보면, 상대적으로 중요도와 성과가 모두 높아서 유지 강화해야 할 영역에 해당하는 청소년 관련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중요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성과를 보이는 중점개선 영역에는 총 4개의 청소년 관련 문제가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폭력 문제, 청소년 자살 문제, 청소년 대상 성폭력 문제, 입시위주의 교육 문제가 그에 해당한다. 이 문제들은 해결을 통한 성과 향상을 위해 중점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들이다.

중요도와 성과 모두 낮은 수준에 해당하는 점진개선 영역에는 1개의 청소년 관련 문제로, 게임 중독 문제가 그에 해당한다. 낮은 중요도에 비해 높은 성과를 나타내는 지속유지 영역에는 총 4개의 청소년 관련 문제가 포함되었다. 학생인권 문제, 학교 밖 청소년 등 위기청소년 문제, 안전 문제, 선거권 연령 하향 문제가 그에 해당한다.

따라서 청소년 전문가들의 판단 및 인식에 기초해서 볼 때, 특히 중점개선 영역에 해당하는 학교 폭력 문제, 청소년 자살 문제, 청소년 대상 성폭력 문제, 입시위주의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가장 시급함을 알 수 있다.

3) 청소년 전문가별 분석 결과

청소년 전문가별 분석 중에서 우선 활동 분야 청소년 전문가들의 경우, 청소년 관련 문제별로 중요도-성과에 대해 [그림 VII-8]과 같이 판단 및 평가하였다. 이 역시 중요도와 성과의 각 평균값을 기준으로 4개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중요도의 평균은 7.85이고 성과는 4.77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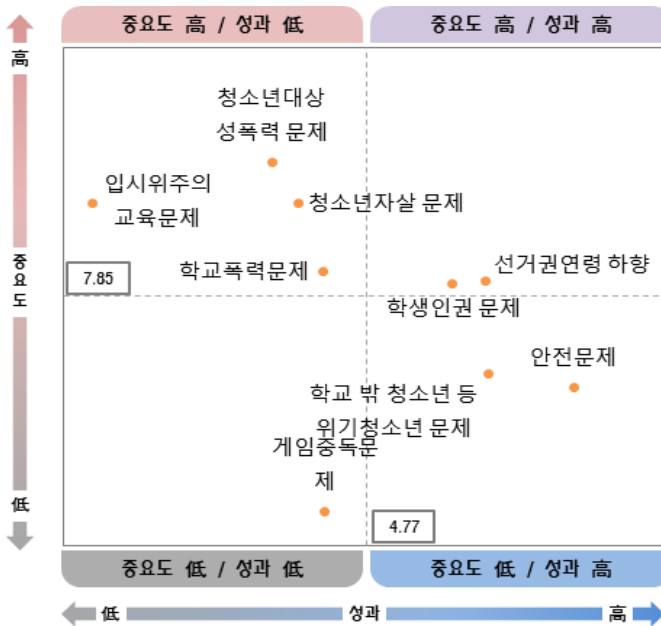


그림 VII-8. 활동 분야 청소년 전문가 대상의 IPA 결과

활동 분야 청소년 전문가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중요도와 성과가 모두 높아서 유지 강화해야 할 영역에는 총 2개의 청소년 관련 문제가 포함되었다. 선거권 연령 하향과 학생 인권 문제가 그에 해당한다. 중요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성과를 보이는 중점개선 영역에는 총 4개의 청소년 관련 문제가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자살 문제, 청소년 대상 성폭력 문제, 입시위주의 교육 문제, 학교 폭력 문제가 그에 해당한다. 이 문제들은 해결을 통한 성과 향상을 위해 중점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들이다.

중요도와 성과 모두 낮은 수준에 해당하는 점진개선 영역에는 1개의 청소년 관련 문제가 포함되었다. 게임 중독 문제가 그에 해당한다. 낮은 중요도에 비해 높은 성과를 나타내는 지속유지 영역에는 총 2개의 청소년 관련 문제가 포함되었다. 안전 문제와 학교 밖 청소년 등 위기 청소년 문제가 그에 해당한다.

따라서 활동 분야 청소년 전문가들에게는 중점개선 영역에 해당하는 청소년 자살 문제, 청소년 대상 성폭력 문제, 입시위주의 교육 문제, 학교 폭력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둔 개선 노력이 가장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또 다른 청소년 전문가로서 보호복지 분야 청소년 전문가들의 경우, 청소년 관련 문제별로 중요도-성과에 대해 [그림 VII-9]와 같이 판단 및 평가하였다. 이 역시 중요도와 성과의 각 평균값을 기준으로 4개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중요도의 평균은 7.89이고 성과는 4.52이다. 이는 활동 분야 청소년 전문가들의 중요도 점수 보다는 다소 높고 성과는 낮은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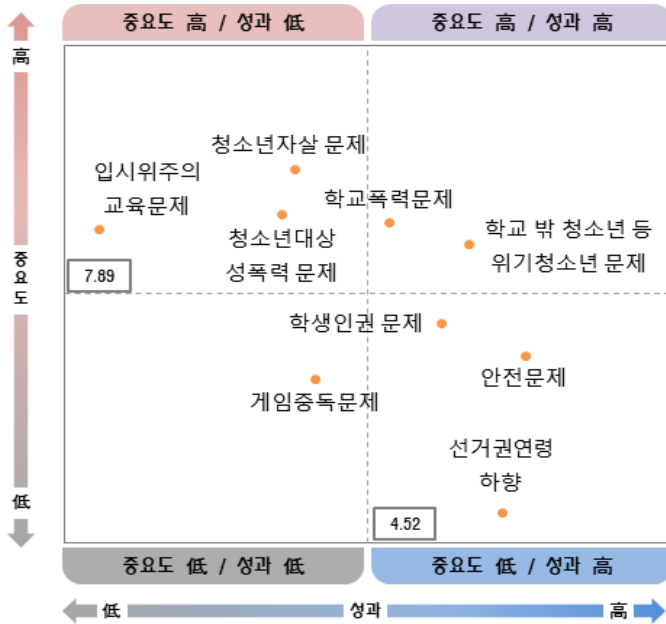


그림 Ⅶ-9. 보호복지 분야 청소년 전문가 대상의 IPA 결과

보호복지 분야 청소년 전문가들의 경우에도 중요도와 성과가 모두 높아서 유지 강화해야 할 영역에 총 2개의 청소년 관련 문제가 포함되었다. 학교 폭력 문제와 학교 밖 청소년 등 위기 청소년 문제가 그에 해당한다. 중요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성과를 보이는 중점개선 영역에는 총 3개의 청소년 관련 문제가 해당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자살 문제, 청소년 대상 성폭력 문제, 입시위주의 교육 문제가 그에 해당한다.

중요도와 성과 모두 낮은 수준에 해당하는 점진개선 영역에는 1개의 청소년 관련 문제가 포함되었는데 이는 활동 분야 전문가들의 결과와 동일하게 게임 중독 문제가 그에 해당한다. 낮은 중요도에 비해 높은 성과를 나타내는 지속유지 영역에는 총 3개의 청소년 관련 문제가 포함되었다. 선거권 연령 하향, 학생 인권 문제, 안전 문제가 그에 해당한다.

따라서 보호복지 분야 청소년 전문가들은 중점개선 영역에 해당하는 청소년 자살 문제, 청소년 대상 성폭력 문제, 입시위주의 교육 문제 등의 해결을 통한 성과 향상을 상대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타 분야 청소년 전문가들이 청소년 관련 문제별 중요도-성과에 대해 응답한 결과는 [그림 VII-10]과 같다. 이 역시 중요도와 성과의 각 평균값을 기준으로 4개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도출되었는데, 분석 결과에 따르면 중요도의 평균은 7.48이고 성과는 4.00이다. 앞서 살펴본 두 분야의 청소년 전문가들이 응답한 중요도와 성과 점수보다 모두 낮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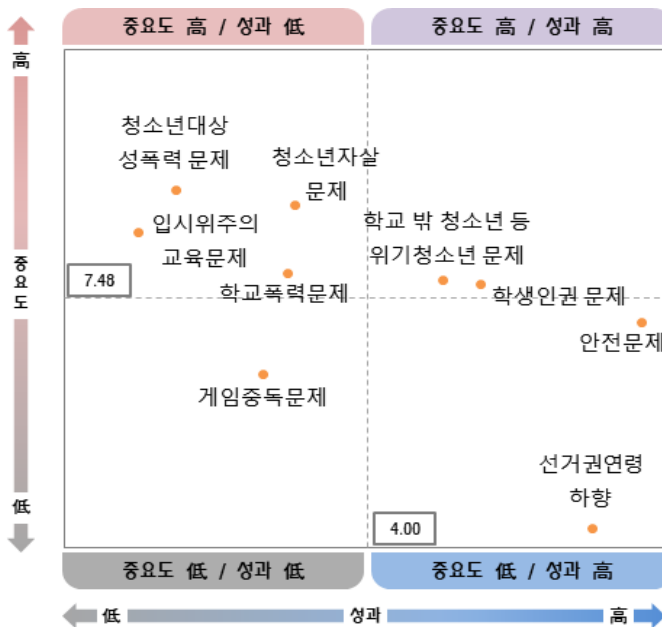


그림 VII-10. 기타 분야 청소년 전문가 대상의 IPA 결과

기타 분야 청소년 전문가들 역시 앞의 전문가들과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중요도와 성과가 모두 높아서 유지 강화해야 할 영역에 총 2개의 청소년 관련 문제가

포함되었다. 학교 밖 청소년 등 위기 청소년 문제와 학생 인권 문제가 그에 해당한다. 중요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성과를 보이는 점진개선 영역에는 총 4개의 청소년 관련 문제가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자살 문제, 청소년 대상 성폭력 문제, 입시위주의 교육 문제, 학교 폭력 문제가 그에 해당한다. 기타 분야 청소년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문제들은 해결을 통한 성과 향상을 위해 중점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들이다.

앞의 다른 분야 청소년 전문가들과 마찬가지로 중요도와 성과 모두 낮은 수준에 해당하는 점진개선 영역에는 1개의 청소년 관련 문제가 포함되었으며, 게임 중독 문제가 그에 해당한다. 낮은 중요도에 비해 높은 성과를 나타내는 지속유지 영역에는 총 2개의 청소년 관련 문제가 포함되었고, 선거권 연령 하향과 안전 문제가 그에 해당한다.

따라서 기타 분야 청소년 전문가들 역시 활동 분야 청소년 전문가들과 동일하게 점진개선 영역에 해당하는 청소년 자살 문제, 청소년 대상 성폭력 문제, 입시위주의 교육 문제, 학교 폭력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둔 개선 노력이 가장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5. 전문가 의견 조사 시사점

청소년 전문가 대상으로 이루어진 설문 분석 결과에 비추어 볼 때, 크게 4가지 점에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이 시사점은 청소년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주요 고려 사항에 해당되기도 한다.

첫째, 청소년의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기본 설문조사에 따르면, 정치참여 활성화에 다음의 요인들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성 함양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입시위주의 교육 제도, 학교에서 정치 및 인권 교육의 확대, 가짜뉴스 증가, 제도권 내 젊은 정치인 증가, 청소년의 주도적 참여,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의 일상적 참여 확대, 참여의 개방성 확보 등 전 과정에서 청소년참여의 가치와 원칙이 고려되는 정책 실천, 토의, 토론을 통한 의사결정 및 의사결정 참여 등이 그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들 요인들을 고려한 관련 제도 마련 및 기존 제도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하며, 특히 정치참여 활성화 요인을 더욱 촉진할 수 있는 노력은 물론이고 저해요인의 경우 그 영향의 최소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뒤따라야 한다.

둘째, 청소년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AHP 분석에 따른 중요성 판단 결과를 보면, 중요도가 높은 교육 시기는 청년기이며, 관련 기관 중에서도 학교 및 청소년 시설의 중요도가 높고, 정치참여에 영향을 주는 대화상대로는 부모의 중요성이 높으며, 정치행위 중에서는 자치활동이의 중요성이 높았다. 그리고 정치참여 활성화 사례로 활용될 수 있는 선거 중에서는 교육감 선거가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체로 청소년과 보다 가깝고 친밀하고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대상(물)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성 역할을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특히 이는 이어지는 세 번째 시사점과도 관련된다.

셋째, 최근에는 온라인 환경의 발달로 인해 많은 청소년들이 다양한 형태의 각종 온라인상의 청소년 미디어 환경에 노출되어 있지만, 정치참여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인은 오프라인 상의 친밀성과 밀접성이 더 높은 대상인 부모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소년 정치참여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대화 상대의 중요성에 대한 설문에서는 부모가 가장 높은 중요성을 보인 반면 온라인 유저는 가장 낮은 중요성을 보였다. 그리고 정치참여 활성화와 관련한 정치행위의 중요성 설문에서도 SNS 활동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청소년 정치참여 활성화에 온라인과 같은 형태로 형성되어 있는 각종 청소년 미디어보다는 부모의 영향력이 더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넷째, 청소년 정치참여 활성화는 청소년 관련 문제와 밀접하게 관계되며 일부

문제는 복합적 영향 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청소년 문제들이 선결될 필요가 있다. IPA를 활용한 전문가 설문 분석에 따르면, 특히 학교 폭력 문제, 청소년 자살 문제, 청소년 대상 성폭력 문제, 입시위주의 교육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그 중요성에 비해 문제해결의 성과가 낮기 때문에 향후 이들 문제에 대한 해결 노력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물론 그 외 청소년 관련 문제들 역시 청소년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선결 과제로 인식하고, 구체적인 해결 성과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제8장 정책 제언

- 1. 청소년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유관법률의 개정
- 2. '유스 정치 아카데미' 운영
- 3. 부모와 함께하는 정치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 4. 지역사회 내 범 청소년의회 구성 및 시범운영
- 5. 선거권 보호 및 투표율 제고 방안 마련

본 연구는 지금까지 청소년의 정치참여 실태조사, 심층면접, 전문가 조사를 통하여 청소년 정치참여 활성화의 요인을 분석하였다. 이에 앞으로 청소년 정치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5가지의 정책 제언을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한다. 5가지 정책 제언은 주로 청소년 정치참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의 공고화와 청소년 시설 및 지자체가 일선에서 추진할 수 있는 청소년 맞춤형 정책으로 구성하였다.

148) 제8장은 모상현 선임연구위원과 최용환 연구위원이 공동으로 집필하였다.

청소년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

정책제언	정책방향	세부 정책대안	관련 정책추진체계					
			중앙	광역	기초	국책	산하	시설
유관법을 개정	1. 청소년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유관법들의 개정	1-1. (1안) 청소년기본법 개정 1-2. (2안)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	●	●	●	●	●	●
유스(Youth) 정치 아카데미 운영	2.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춘 '유스 정치 아카데미' 운영	2-1. (1안) 청소년시설의 (가칭) '유스 정치 아카데미' 운영	●	●				●
정치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3. 세대 간 소통의 정치문화 형성을 위한 '부모와 함께하는 정치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3-1. 부모와 함께하는 대한민국 정치 역사와 소양 교육 3-2. 부모와 함께 하는 정치 이슈 토론 3-3. 미디어를 활용한 세대 간 새로운 정치소통			●	●	●	●
지역사회 내 범 청소년 의회 구성 및 시범운영	4. 청소년 참여기구, 청소년의회 및 학생자치회 등 범 청소년 참여 기구 구성 및 시범운영	4-1. 범 청소년의회 구성 4-2. 범 청소년의회 시범운영 4-3. 범 청소년의회 확대운영		●	●			●
선거권 보호 및 투표율 제고	5. 선거권 보호 및 투표율 제고 방안 마련	5-1. 선거권 보호방안 마련 5-2. 투표율 제고를 위한 모의투표 프로그램 개발·운영	●					●

그림 Ⅷ-1. 정책 제언 요약

1. 청소년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유관법률의 개정

표 Ⅷ-1. 청소년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유관법률의 개정

정책방향	세부 정책대안	관련 정책추진체계					
		중앙	광역	기초	국책	산하	시설
1. 청소년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유관법률의 개정	1-1. (1안) 청소년기본법 개정						
	1-2. (2안)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	○	○	○	○	○	○

1) 제언 배경

앞선 분석에서 청소년 전문가들은 청소년의 정치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책이 일시적이고 단편적으로 수행되는 것이 아닌,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토대를 마련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입법적 토대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특히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활동진흥법」의 개정은 필수적이다. 이러한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청소년의 정치참여 활동의 지속성 보장뿐만 아니라 관련 예산의 편성 등의 근거도 마련할 수 있는 것이다.

2) 정책 대안

청소년의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입법적 토대를 갖추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청소년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을 명시하고 있는 청소년기본법에서 청소년의 정치참여와 관련한 입법적 근거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는 청소년활동진흥법에서 청소년의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입법적 근거를 체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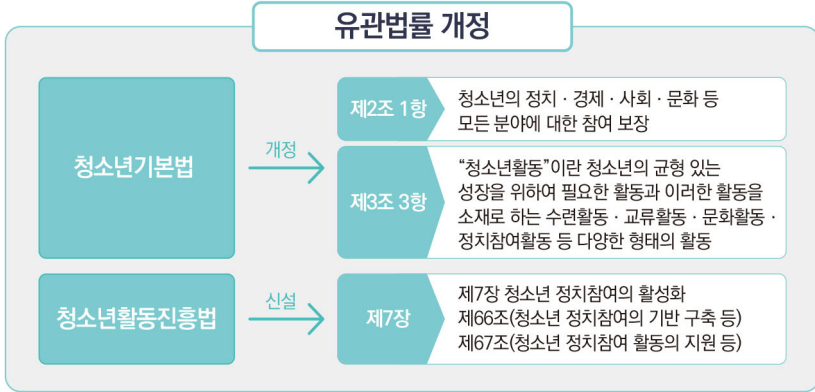


그림 VIII-2. 유관법률 개정안

이러한 입법적 근거를 두는 경우, 청소년 정책의 수행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례 제·개정도 활성화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청소년 정치참여 활성화 제고를 위한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의 개정안의 예는 다음과 같다.

표 VIII-2. 청소년기본법 개정 예시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조(기본이념) ① 이 법은 청소년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 받음과 아울러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며 보다 나은 삶을 누리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p> <p>② 제1항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장기적·</p>	<p>제2조(기본이념) ①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장기적·</p>

<p>종합적 청소년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추진 방향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청소년의 참여 보장 2. 창의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청소년의 능동적 삶의 실현 3. 청소년의 성장 여건과 사회 환경의 개선 4. 민주·복지·통일조국에 대비하는 청소년의 자질 향상 	<p>종합적 청소년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추진 방향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청소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참여 보장 2. ~ 4. (현행과 같음)
<p>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2. (생략) 3.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4. ~ 8. (생략) 	<p>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2. (현행과 같음) 3.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정치참여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4. ~ 8. (현행과 같음)

* 출처: 청소년기본법의 현행 조문은 청소년기본법(2020.5.19. 일부개정, 법률 제17285호)의 내용을 인용함.

표 VIII-3.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 예시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장 <신 설>	<p>제7장 청소년 정치참여의 활성화</p> <p>제66조(청소년 정치참여의 기반 구축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정치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p> <p>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p> <p>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제67조(청소년 정치참여 활동의 지원 등)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정치에 자율적으로 참여하기 위하여 조직하고 운영하는 다양한 형태의 모임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또는 민간단체가 청소년의 정치참여활동을 실시하거나 촉진할 때에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서의 청소년단체 등이 청소년의 정치참여활동을 실시하거나 촉진하는 경우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 출처: 청소년활동진흥법의 현행 조문은 청소년활동진흥법(2020.5.19. 일부개정, 법률 제17286호)의 내용을 인용함.

3) 기대효과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활동진흥법」의 개정을 통하여 청소년의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입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정책 실행의 종합성·체계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입법적 근거를 통하여 관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등 재원을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정책실행의 지속성도 확보할 수 있다.

2. ‘유스 정치 아카데미’ 운영

표 Ⅷ-4. ‘유스 정치 아카데미’ 운영

정책방향	세부 정책대안	관련 정책추진체계					
		중앙	광역	기초	국책	산하	시설
2. ‘유스 정치 아카데미’ 운영	2-1. (1인) 청소년 시설의 (가칭) ‘유스 정치 아카데미’ 운영	○	○				○

1) 제언 배경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청소년 정치참여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대표적 제도는 청소년참여위원회와 청소년의회 정도이다. 그러나 이러한 참여 제도의 실효성과 관련된 비판을 받는다. 즉, 제도 운영은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인 제도의 디커플링(decoupling)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디커플링이란 환경의 압력에 따라 조직이 제도를 도입하나, 관습이나 문화적 요인 등으로 인해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현상을 일컫는다(정장훈, 2013). 대부분의 공공부문에서 도입하는 참여제도들은 이러한 디커플링 현상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청소년 정치참여와 관련된 제도에서도 불가피하게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기존 연구들은 제도의 운영목적이 달성되지 못하는 여러 장애 요인들을 밝히고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청소년 정치참여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원인을 밝히는데 초점을 두었다. 일반적으로 참여보장을 위한 시스템 체계화 또는 행정 지원 등의 참여기반 강화, 참여 범위 확대, 참여 역량 강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이혜숙, 이영주, 2017). 다만, 청소년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행·재정적 지원과 제도적 강화가 수반될 필요가 있으나, 제도의 디커플링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참여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무엇보다 본 연구 실태조사 및 면접조사 결과에서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정치교육이 효과가 없었고 전혀 동기부여가 되지 않은 채 진행되었다고 답변한 비율이 현저히 높은 만큼 학생 청소년들이 체감하고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이 필요하다.

특히 청소년들의 정치참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정책제안 반영률이 낮고, 활동과 관련된 정보의 부족 등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조금주, 2017; 최창욱, 조혜영, 2007). 바꾸어 말하면, 청소년 정치참여의 제도적 범위와

내용을 확장하는 것은 청소년들의 정치참여 역량이 강화될 때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 운영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참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으로서 '유스 정치 아카데미' 운영을 제안한다.

2) 정책 대안

과거 청소년들의 정치참여는 청소년참여위원회와 청소년의회 등을 통해 활성화 되었으나, 참여자 대표성 부족, 형식적 운영, 정책 제안 반영률 저조 등의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이러한 제도가 당초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청소년 정치참여의 활성화를 통하여 미래 사회발전, 지역사회의 발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정치참여 제도 자체의 개선과 더불어 청소년의 참여역량을 증진하는데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히 과거 제도 시행에서 나타난 주요 문제점 중 낮은 정책반영률은 청소년들의 정책 전문성이 낮다는 점에서 기인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이 정책과 관련된 기본 소양을 배양하는 것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 정치참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과정 및 특성 등에 대한 이해가 수반될 필요가 있다. 청소년들의 정책제안이 정책에 반영되기 어려운 현상은 청소년들이 정책화 과정, 정책수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이와 관련된 기초교육이 부재하다는 점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유스 정치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청소년들의 정치참여의 결과물이 정책화될 수 있도록 한다면, 제도의 형식적 운영이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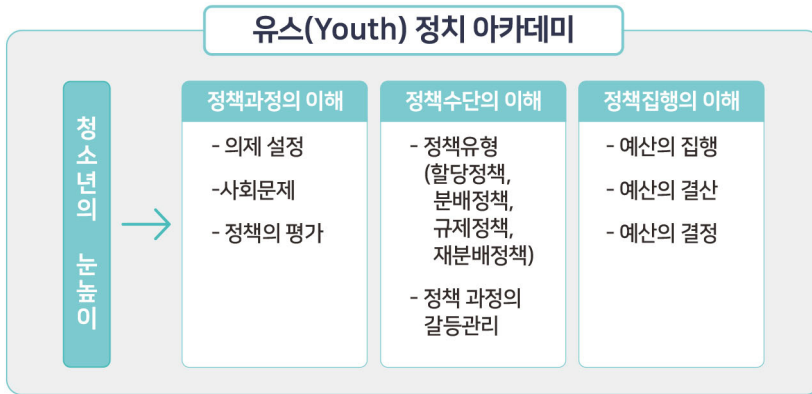


그림 Ⅷ-3. '유스 정치 아카데미' 교육 구성안

구체적으로 정책과 관련된 교육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이 필요하다. 첫째, 정책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정책의 의제설정과 정책결정, 정책집행, 정책평가 등으로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과 각 단계에서 나타나는 현상 및 특징 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정책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써 현재 제안하고 있는 정책의 향후 방향에 대하여 가늠해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정책 의제설정과 관련하여 현재 나타난 사회문제가 정책문제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 또는 그 과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수 있다. 또한 현재의 정책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정책평가와 관련된 지식이 활용될 수 있다.

둘째, 정책구조와 정책특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정책은 다양한 목표를 갖고 있으며, 각 정책목표들이 상충되기도 한다는 특성이 존재한다. 특히 정책목표와 관련해서 상위목표와 하위목표 간의 연계성, 목표의 명확성 등이 정책의 성과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을 학습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 제안을 할 경우 정책 반영도가 높아질 수 있다. 또한 정책 유형(할당정책, 분배정책, 규제정책, 재분배정책 등)의

특성은 정책의 결정, 집행과정에서의 갈등이 나타나는 원인 등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책수단이 적절하게 활용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정책수단에 대한 개괄적 내용을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 외에도 정책집행을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된다는 점에서 예산결정과 집행, 결산 등과 관련된 내용을 더불어서 교육할 필요가 있으며, 정치체제와 관련된 내용 등을 교육할 것이 요구된다.

단, 유스 정치 아카데미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은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추어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선, 상기에 언급한 기초적인 정책 전문성은 다양한 사례를 통한 설명과 더불어 역할극(모의 청문회, 모의재판 등), 브레인스토밍 등을 통한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책과 관련된 심화된 내용의 학습은 제안하고자 하는 정책의 유형, 특성에 해당하는 내용을 실무자, 전문가 등이 설명해줌으로써 정책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방식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고양시에서 추진하는 ‘청소년 제안창작소’는 지역 내 청소년들이 특별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약 3회에 걸쳐 제안 교육 워크숍·현장조사 활동·컨설팅 등을 통해 정책제안의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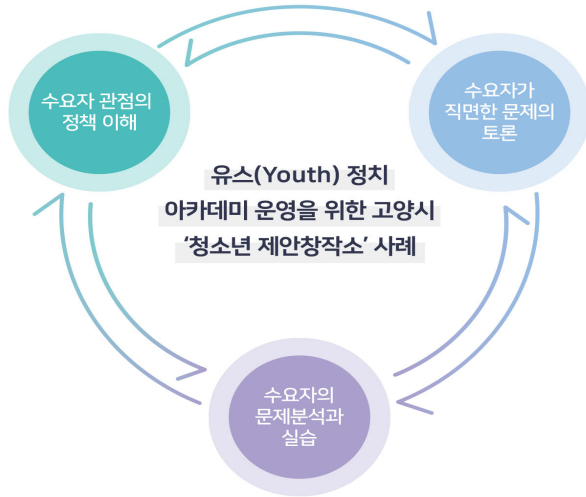


그림 Ⅷ-4. 고양시 청소년 제안창작소 교육

3) 기대효과

청소년 정치참여제도의 문제점과 이의 개선방안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다만, 청소년 정치참여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도내용이나 체계 구축 등과 더불어 청소년 위원들의 역량 강화에도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즉, 정책과정 전반에 대한 기초소양교육을 통해 미래 민주시민으로서 정책 전문성을 배양하는 것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들은 과거 정치참여 경험, 정치효능감, 정치 신뢰 등 외에도 참여 관련 교육경험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김영인, 2007), 청소년들의 정치참여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기의 정치참여 활동과 더불어 교육활동은 청소년들이 성인이 된 이후 적극적인 정치참여를 수행하는 유인을 제공할 수 있다. 즉, 정책, 정치체제, 예산과정 등과 관련된 내용을 교육함으로써 청소년의 현재 정치참여와 더불어 미래의 정치참여를 이끌 수 있다. 아울러

본 아카데미는 청소년 참여기구 및 청소년의회에서 활동하는 청소년들 대상의 교육과 함께 연계될 수 있다.

3. 부모와 함께하는 정치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표 VIII-5. 부모와 함께하는 정치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정책방향	세부 정책대안	관련 정책추진체계					
		중앙	광역	기초	국책	산하	시설
3. 세대 간 소통의 정치문화 형성을 위한 '부모와 함께하는 정치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3-1. 부모와 함께 하는 대한민국 정치 역사와 소양 교육						
	3-2. 부모와 함께 하는 정치 이슈 토론			○	○	○	○
	3-3. 미디어를 활용한 세대 간 새로운 정치소통						

1) 제언 배경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자녀의 제반 행위 및 심리에 미치는 영향은 이미 실증적으로 많이 분석되어 있다. 청소년 역시 부모와 어떤 관계를 맺는가에 따라 성취 동기, 생활 만족도, 학업성취도, 일탈행동, 진로의사결정 등에 영향을 받는다(김혜경, 장진경, 2017; 노동철, 1999; 박진아, 2019). 그리고 부모와 청소년 간 관계 변화도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박영신, 김의철, 2000). 1차적 밀착 대상인 부모는 청소년에게 다방면으로 영향을 준다.

청소년의 정치참여를 비롯한 정치적 행동과 인식에도 마찬가지다. 수동적이든 능동적이든 청소년들은 부모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정치적 이슈에 대한 배경 지식을 습득하고 의견 모방 및 비판 의식 등을 형성한다. 특히 부모와 청소년의 의사소통 관계에 따라 청소년의 정치사회화(political socialization) 등에 차이가 발생

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서도 이미 여러 실증연구들이 존재한다(김위정, 2012; 송원숙, 2018).

특히 정치적 이슈는 그 속성상 가치 기반의 의견 표출과 교류를 주요 매개활동으로 이루어지는데, 청소년의 가치 형성 여건 중 시·공간적으로 가장 밀접한 상대는 부모가 된다. 성장시기별 관계 형성의 정도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청소년과 부모 간 높은 밀접성은 가치관 형성과도 무관할 수 없다. 또, 정치관련 정보 전달과 정치적 행위 등이 미디어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볼 때, 청소년 시기에 그 미디어의 선택과 사용 공간, 그리고 통제 등이 주로 부모에 의한다는 점도 청소년의 정치참여 및 활성화 논의에서 청소년과 부모 간 관계의 중요성을 말해준다.

따라서 청소년과 부모와의 관계는 생득적이고 구조적이며 1차원적 수준을 이루고 있어서 청소년 관련 문제해결에서 핵심적으로 고려할 사항이다. 청소년의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각종 방안 마련에서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청소년과 부모와의 관계를 핵심에 둘 수 있다.

2) 정책 대안

청소년의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청소년과 부모 간 관계에 기초하여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주요 정책 방향 중 하나는 세대 간 소통의 정치문화 형성을 위한 ‘부모와 함께하는 정치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단순히 청소년의 정치 활성화 차원을 넘어 그것을 통해 세대 간 소통의 정치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크게 3가지 세부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부모와 함께 하는 대한민국 정치 역사와 소양 교육’, ‘부모와 함께 하는 정치 이슈 토론’, ‘미디어를 활용한 세대 간 새로운 정치소통’이 그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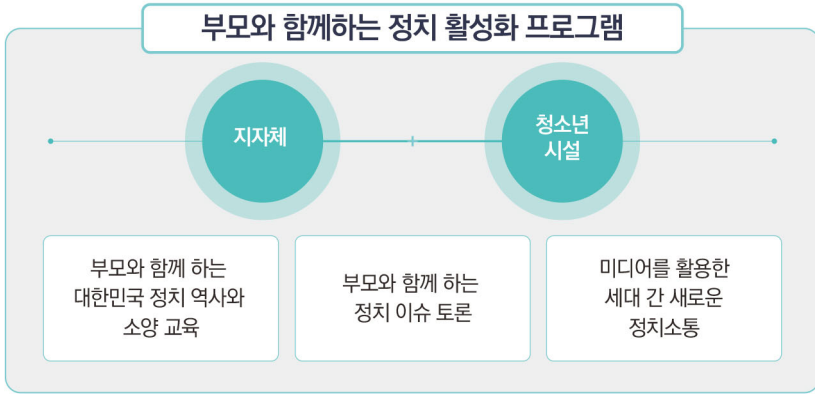


그림 Ⅷ-5. 부모와 함께하는 정치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안

우선, 정치참여는 우리나라 정치 역사를 비롯한 소양교육이 기본 바탕이 되어야 한다. 그것을 토대로 하여 정치적 이슈에 대한 의견 표명과 교류 등으로 정치소통을 이룰 수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청소년과 부모가 함께 대한민국 정치의 역사 교육은 물론이고 소양교육에 참여하는 것이다. 부모와 함께 학습하고 교육에 참여하는 것은 정치참여의 기초 환경을 보다 친숙하게 하고 접근의 수월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

이와 더불어 또 다른 정책 대안으로서 부모와 함께 정치 이슈에 대한 토론을 실시하는 것도 중요하다. 정치는 곧 사안에 대한 의견 정립과 표명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현실적 정치 이슈를 두고 토론하는 활동이 필요하다. 이때도 부모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은 상호 영향을 많이 주고받는 관계에서 정치적 이슈를 활용한 토론이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더 넓여줌으로써 일종의 효능감을 체험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특히 미래 정치의 주역이 될 청소년이 부모와의 정치 이슈 토론을 통해 유익한 성과 창출을 경험하게 되면, 향후 성인이 된 이후의 정치참여 활성화를 견인하는데도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마지막으로 미디어를 활용한 세대 간 새로운 정치소통의 활동을 하는 것 역시 하나의 정책대안이 된다. 이 역시 청소년과 부모 세대가 함께 참여하는 것을 전제한다. 최근 각종 미디어의 손쉬운 사용은 연령을 불문하고 광범위하게 퍼져있다. 향후 미디어가 제공하는 정치 정보 전달과 의견 및 소통 창구의 역할은 스마트 기술이 적용됨에 따라 더욱 더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다. 이와 같은 환경 속에서 새로운 미디어의 활용은 세대 간 정치 소통의 새로운 기회를 계속 제공해줌으로써, 특히 청소년에게 자신의 의견 정립과 표출과 같은 정치참여의 수월성을 높여준다. 이는 곧 청소년의 정치참여에 대한 친숙한 경로 제공을 통해 그 활성화를 더 높일 수 있는 새로운 기회이자 여건 조성이 된다.

3) 기대효과

부모와 함께 하는 정치참여 활성화 프로그램을 시행하면 청소년의 정치참여에 크게 세 가지 측면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첫째, 세대 간 소통의 정치 문화를 고양시켜 청소년의 정치참여 활성화는 물론이고 사회통합의 한 측면에 기여한다. 가치가 다변화되고 그 속도가 빠른 오늘날에 세대 간 갈등 문제가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다. 정치적 주제에서 비롯되는 세대 간 갈등 문제도 점점 깊어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세대 구분의 가장 원초적 관계에 위치하고 있는 부모와 자녀가 공통의 정치적 이슈에 대해 함께 토론하며 공감대를 형성하는 프로그램은 세대 간 소통을 높이는 것은 물론이고 그에 기초한 소통의 정치문화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된다. 더 나아가 소통의 정치문화는 갈등을 이해와 공감으로 이끌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정치참여 활성화에 기여하는 동시에 이를 바탕으로 한 사회통합에도 일정한 도움이 된다.

둘째, 일상을 함께하는 청소년과 부모가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정치가 일상 속 문제를 논의하는 체험의 자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치에 대한 청소년들의

친숙함을 더 높일 수 있다. 흔히 청소년들은 정치에 대해 일상의 생활과는 별개로 생각하며 정치관련 기관들에 한정된 행위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하지만 부모와 함께 참여하는 정치 활성화 프로그램은 소소한 일상 속 문제를 정치적 논의로 접근하며 해결하는 과정을 모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에 대한 친근감을 높여준다. 무엇보다도 부모가 함께 참여함으로써 정치가 정치기관의 행위가 아닌 자신들의 문제해결 과정임을 더욱 실감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부모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의 정치참여 활성화에 기여한다.

셋째, 각종 미디어를 활용한 정치소통의 새로운 가능성을 경험할 수 있다. 청소년이 특히 부모와 함께 미디어를 활용해서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때문에 최신 미디어로 인한 세대 간 소통 단절 극복은 물론이고 오히려 미디어가 새로운 소통의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정치적 이슈가 그 매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이는 곧 부모와 청소년 세대의 새로운 정치소통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4. 지역사회 내 범 청소년의회 구성 및 시범운영

표 VIII-6. 지역사회 내 범 청소년의회 구성 및 시범운영

정책방향	세부 정책대안	관련 정책추진체계					
		중앙	광역	기초	국책	산하	시설
4. 청소년 참여기구, 청소년 의회 및 학생자치회 등 범 청소년 참여 기구 구성 및 시범운영	4-1. 범 청소년의회 구성 4-2. 범 청소년의회 시범운영 4-3. 범 청소년의회 확대운영		○	○			○

1) 제언 배경

청소년 시설의 청소년 운영위원회, 지자체 단위의 청소년 참여위원회 등은 여성 가족부의 운영·지원 하에 제도화된 기구로서 각 청소년 참여기구 설립의 근본취지에 맞게 각각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법적으로 청소년들의 참여를 보장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지만 실질적인 권한은 요원한 과제로 남아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마찬가지로 청소년의회 역시 시의회에서 지방의회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되는 모의회의로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자신과 관련된 정책과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지만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목적으로 각 지자체별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의회 활동 교육과 캠페인을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고 있다. 또한 학교 내에서의 활동은 주로 학급 단위, 학년 단위 및 학교 전체 단위에서 학교 규칙 제·개정 등 학생사안 관련된 의제들을 학생자치회에서 심의하고 학교장 제안·보고되고 있는 실정으로 실제적인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서는 소외되는 형편이다. 또한 지역 내 학교 밖에서 소외 되고 있거나 보호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권익과 권리를 실제적으로 그들의 목소리를 통해 보장받을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며, 비제도권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자기 목소리도 들을 필요가 있다. 비록 참여의 법·제도적 혹은 태생적 기반은 다른지만 해당 기구(단체)들과 지역사회 내 청소년 관련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정책제안 및 정책 수립에 이르기까지 대표성을 가지고 실제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받을 필요가 있다.

2) 정책 대안

현재 지역사회 내 청소년의회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의 일환으로 아동·청소년의회, 어린이의회, 청소년의회 등의 명칭으로 각 지자체별로 아동·청소년

의회 조례를 만들어 운영되고 있다. 지역사회 내 다양한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자신과 관련된 정책이나 이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실제적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된 모든 단체 및 청소년 개인이 대표성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소통구조를 만들어 내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 범 청소년의회를 구성·시범 운영할 필요가 있다.

영국의 경우 영국청소년의회(UKYP)는 영국 전역 11~18세 청소년들이 민주적 절차 따라 205개 선거구에서 선출되며, 총 379개 의석이 배정되어 있다. 선거구의 의석수는 해당 지역의 청소년 인구비율¹⁴⁹⁾에 따라 결정되는데, 해외의 영국 주둔군 자녀들을 대표하는 청소년의원의 의석도 보장하고 있다. 또한 성별, 소수민족, 장애, 취약계층의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다. 영국청소년의회의 경우 무엇보다 청소년이 직접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집행하고, 의회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산편성, 행사 운영정책 등을 청소년이 직접 결정하는 청소년 권한을 강화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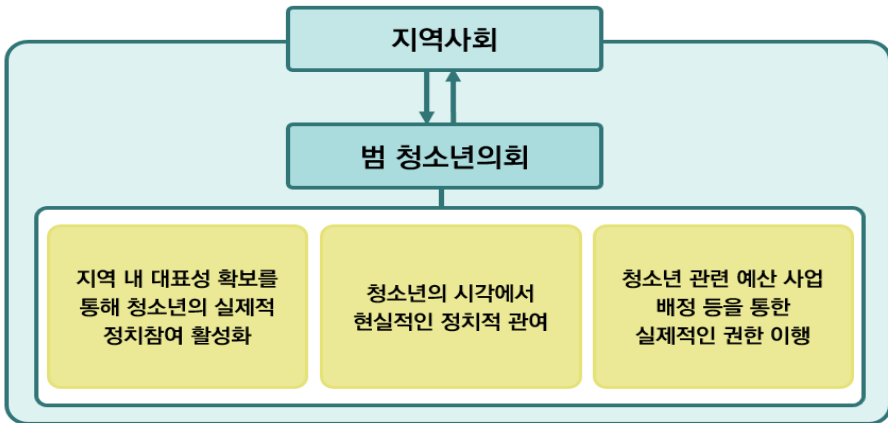


그림 VIII-6. 지역사회 내 범 청소년의회 구성

149) 청소년 인구 22,800명당 1개 의석이 배정됨: 잉글랜드 308명(1/22,800), 북아일랜드 18명(의회 선거구 기준), 스코틀랜드 25명(1/22,800), 웨일스 24명(1/22,800), 해외 영국 주둔군 자녀 4명

범 청소년의회도 지역 내 대표성을 확보함으로써 단지 개별 기구나 단체의 의견 주장에만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 내 주요 의제가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활동들을 전개함으로써 청소년의 삶의 질 제고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즉, 지금까지 유니세프 인증의 틀 안에서 제한된 가용자원과 의제 제안이나 의사 진행 과정 체험 위주로 진행되어온 활동에서 벗어나 보다 실제적이고 지역 사회 내 청소년의 다양한 문제에 대해 의회 차원에서 해결 할 수 있는 정책결정의 수준까지 확대될 필요가 있다. 이는 지금까지 제한된 대표성에 의존하여 형식적으로 운영되어온 청소년의회에서 벗어나 현실적인 정치적 관여가 일어 날 수 있는 '운동'적 성격과 함께 의회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지역사회에 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권한 이행이 요구되어야 한다.

3) 기대효과

지역 사회 내 범 청소년의회를 구성·운영하면 청소년 정치참여에 크게 세 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첫째, 그 동안 대표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각각의 영역에서 분절적으로 운영되어 왔던 청소년 참여기구들이 통합적인 형태로 실제적 정치 참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참여기구, 청소년의회 및 학교 자치회 및 학교 밖 청소년과 비제도권 청소년 단체 등 각각의 사업 영역에서 분절적으로 운영되어 왔던 청소년 관련 사안들이 지역 사회 내 범 청소년의회를 구성하여 운영될 경우 의회 내에서 직접적으로 현안을 다룰 수 있으며, 전체 청소년 현안 내에서 각 사업들의 접점을 찾을 수 있고, 실제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둘째, 청소년 관련 지역 사회 현안에 대해 보다 다각화된 시각과 문제 해결의 현실적·구체적 접근이 가능하다. 각자 기구 단위에서 논의되어 온 사안들이 범

청소년의회 내 분과의 주요의제로 다루어 질 수 있으며, 당사자 시각에서 현장성을 지닌 현실적인 문제가 심의·처리 될 수 있어 보다 구체적인 결과를 거둘 수 있다. 체험이나 프로그램 위주의 의회 활동에서 벗어나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구체적인 해결방안까지 제시할 기회가 높아진다.

셋째, 청소년 대표성 확보로 인한 의회 예산요청 등 권한에 대한 요구의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유니세프 요청 기반 제한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이 지역 사회 각계각층을 망라한 대표성을 확보한 의원들로 구성·운영됨에 따라 지방정부에 보다 강력한 권한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는 실제 청소년 관련 예산을 사업에 배정하여 진행하는 청소년 참여예산 제도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 할 수 있고, 실제 배정을 통해 정책집행에 이르기까지 보다 강력하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5. 선거권 보호 및 투표율 제고 방안 마련

표 VIII-7. 선거권 보호 및 투표율 제고 방안

정책방향	세부 정책대안	관련 정책추진체계					
		중앙	광역	기초	국책	산하	시설
5. 선거권 보호 및 투표율 제고 방안 마련	5-1. 선거권 보호방안 마련						
	5-2. 투표율 제고를 위한 모의투표 프로그램 개발·운영	○					○

1) 제언 배경

2021년 4월 7일 지방보궐(서울 및 부산) 기준 선거연령에 해당하는 청소년(N=32)을 대상으로 투표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 투표에 참여한 청소년(N=12) 보다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청소년(N=20) 비율이 높게 관찰되었고, 투표율은 37.5%에 불과해 서울 58.2%, 부산 52.7%, 전체평균인 56.8%보다 현저히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투표 불참여이유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서라고 응답한 비율(36.5%)이 가장 높았지만, 이는 기타 이유인 시간이 없음(33.3%)과 마음에 드는 후보가 없음(30.2%)들과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동 실태조사에서 대통령 선거 투표 의향 비율은 약 80%, 국회의원 선거와 교육감 선거에서 투표 의향 비율이 약 60%로 관찰된 것과 비교하여 볼 때, 비록 4월7일 지방보궐 선거였지만, 이들 사이의 갭은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경우도 2016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18-29세 연령층은 50%에 못 미치는 투표율을 나타냈으며 이는 미국민 전체 투표율과 비교하면 15% 정도 낮은 것으로¹⁵⁰⁾, 이에 대한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2) 정책 대안

모의투표 경험이 투표참여를 독려할 수 있어 투표율 제고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으며, 이는 모의투표를 통해 학교에서 가정으로 토론이 이행되는 과정을 통해 부모의 정치적 관심을 확대하게 되는 이른바 분수효과(trickle-up effect)로 나타날 수 있다(Linimon & Joslyn, 2002). 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2020년 2월 6일 발표¹⁵¹⁾를 통해 선거권이 없는 학생을 대상으로 모의선거를 진행할 경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공직선거법」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렇지만 미국의 경우 키즈보팅(Kids Voting) 프로그램을 통해 투표권이 없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모의투표를 제공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도 유사한 유니오발(Juniorwahl) 프로그램(education program)을

150) The New York Times(2020.10.8.). Why Don't Young People Vote, and What Can Be Done About It?. <https://www.nytimes.com/2020/10/08/upshot/youth-voting-2020-election.html> 에서 2021년 7월 10일 인출.

151)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20.2.6.). 중앙선관위, 청소년 대상 모의투표 가능 여부 결정: 교육청 주관하에 교원이 실시하는 모의투표는 선거권이 없는 학생 대상으로도 불가. <https://www.nec.go.kr/site/nec/ex/bbs/View.do?cbldx=1090&bcldx=134823> 에서 2021년 9월 14일 인출.

통해 선거권이 없는 청소년들이 실제 선거와 흡사하게 모의투표를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김종갑, 2020). 이러한 프로그램은 단순 투표체험 뿐만 아니라 학교정치 교육 과정과 연계하여 관련 수업과 접목되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비록 선거 관리위원회에서 제기한 모의투표 위법가능성에 대해서는 면밀히 살펴 보아야 하지만,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 투표율 제고를 위한 모의투표 프로그램의 개선안을 마련해 볼 필요가 있다.

3) 기대효과

모의투표는 단지 행위로서의 투표뿐만 아니라 정치교육을 통한 참정권의 의미와 내용을 되새길 수 있으며, 정치적 의사 형성 능력을 증진시키고 정치에 대한 관심도 제고 및 정치참여 동기를 높일 수 있도록 전반적인 정치효능감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무엇보다 만 18세 유권자들에게 자신에게 부여된 선거권을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도록 도움을 함으로써 민주시민으로서의 가치관 정립과 정치참여 의식을 고양시킬 수 있는 정치교육 방안이기도 하며(김종갑, 2020), 궁극적으로 정치참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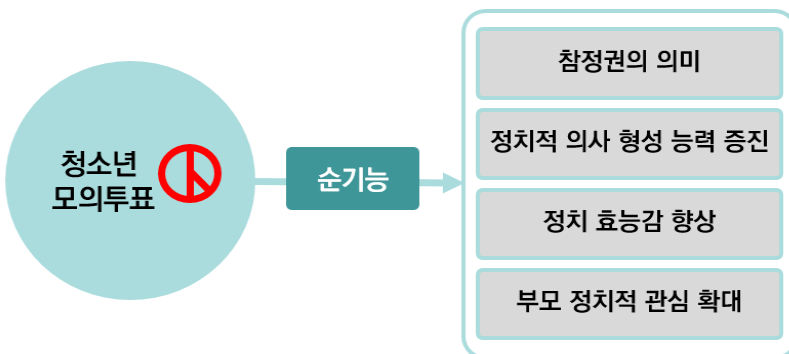


그림 Ⅷ-7. 청소년 모의투표 기대효과

○———— 참고문헌

참고문헌

- 강옥선 (2019). 역사적 관점에서 본 여성의 시민권: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사상을 중심으로. **동서비교문학저널**, 48, 7-25.
- 공현 (2020). 18세 선거권, 그리고 청소년 참정권 확대의 의미와 과제. **월간 복지동향(258)**, 30-34.
- 군산시 (2017). **아동권리 향상 및 정책참여 활성화를 위한 어린이 청소년의회 운영계획**. 군산시 내부자료.
- 김명정 (2009). 대한민국청소년의회 참여활동이 청소년의 민주적 태도 변화에 미치는 영향. **정치정보연구**, 12(2), 119-143.
- 김영인 (2007). 청소년의 대한민국청소년의회 참여경험과 시민성 변화. **청소년학연구**, 14(6), 99-127.
- 김영지, 김희진 (2015).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방안 연구 :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 이행과제 개발 기초연구**.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위정 (2012). 가정환경과 학교경험이 청소년의 시민성 형성에 미치는 영향: 사회참여의식과 공동체 의식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23(1), 201-222.
- 김윤나 (2012). 청소년참여유형에 따른 정책활동 및 생활역량의 차이와 영향 변인. **청소년시설환경**, 10(4), 41-51.
- 김은미, 양소은 (2013). '디지털 네이티브'의 시민성. **한국언론학보**, 57(1), 305-334.
- 김종갑 (2020). **미국과 독일의 청소년모의투표제도와 시사점. 이슈와 논점**, 1765

- 호. 국회입법조사처.
- 김효연 (2020). 18세 선거권 제도화에 따른 학교의 준비와 대응에 대한 토론문.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서울교육 포럼 자료집: 18세 선거권 시대의 교육적 의의와 과제**, 53-55.
- 김혜경, 장진경 (2017). 부모와 청소년 자녀의 의사소통과 진로 의사결정 관계에서 자아정체감의 매개효과.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5(3), 25-40.
- 남미자, 장아름 (2020). 청소년 정치참여의 의미와 학교교육의 방향. **교육정치학 연구**, 27(1), 31-60.
- 노동철 (1999). 부모-자녀관계와 학업성취도 및 일탈행동에 대한 분석: 농촌지역 인문고 실업고 학생을 중심으로. 인하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대한민국청소년의회 (2004). **2003 대한민국청소년의회보고서**. 서울: 대한민국.
- 모상현 (2019). **청소년 참여 연구사업 운영을 통한 청소년활동 활성화 및 역량 증진방안 연구**.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민영 (2008). 뉴스미디어, 캠페인 미디어, 그리고 정치 대화가 후보자 이미지와 정치적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제17대 대통령 선거를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44, 108-143.
- 민영, 노성중 (2011). 한국과 미국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 정치의식, 그리고 정치 참여. **한국언론학보**, 55(4), 284-308.
- 박선영 (2019). 청소년참여와 영국 시민교육. **한국청소년활동연구**, 5(4), 71-90.
- 배상률 (2015). 2030세대의 소셜미디어 이용과 사회인식 및 정치참여간의 관계. **한국언론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54-160.
- 박영신, 김의철 (2000). 부모-자녀관계 변화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교육학연구**, 38(2), 109-147.
- 박진아 (2019). 부모자녀관계가 청소년 자녀의 문제행동, 친사회적 행동 및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심리재활학회**, 23(3), 75-92.
- 송원숙 (2018). 가족 의사소통 유형에 따른 청소년의 정치사회화 차이 연구. **한국**

청소년연구, 29(2), 69-96.

- 심익섭 (2001). 시민참여와 민주시민교육. **한독사회과학논총**, 11(2), 51-79.
- 오동선, 강은숙 (2019). UN 아동권리협약에 의거한 시·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의 비교분석. **교육문화연구**, 25(4), 5-25.
- 완주군 (2018). **2018 완주군 어린이청소년의회 매뉴얼용 내부 자료**.
- 유니세프한국위원회 (2019). **알기 쉬운 아동친화도시 길라잡이**.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권리옹호팀.
- 윤민중, 정은진, 정건희 (2016). **청소년 참여예산제 실태 및 발전 방안 연구**.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윤종희 (2016). 개인과 사회의 공진화를 위한 실천적 시민교육. 이영제, 김윤철, 윤종희 (편.), **공동체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시민교육: 시민교육의 원칙과 현재적 과제**, 59-83. 서울: 한국민주주의연구소.
- 이광호, 송지은 (2016). 경기침체기 영국청소년정책 및 사업의 변화 동향과 시사점. **청소년학연구**, 23(7), 221-251.
- 이봉민 (2014). 청소년의 참여 경험과 정치 활동 유형별 참여 의사의 관계. **시민교육연구**, 46(1), 183-212.
- 이용교, 이중섭 (2010). 청소년의 사회참여활동이 시민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사회참여의식, 사회적 신뢰, 친사회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7(2), 203-232.
- 이윤주 (2015). 청소년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실천중심 기능학습의 필요성-사회과교육에서의 청소년 정치참여 연구동향을 기반으로. **시민교육연구**, 47(2), 85-113.
- 이윤주, 정상우 (2018). 청소년 정치참여의 소통 플랫폼으로서 청소년의회 고찰: 청소년의회 조례 분석과 평가를 중심으로. **교육문화연구**, 24(4), 539-566.
- 이은선 (2018). 왜 청소년에게 참정권이 보장되어야 하는가. **월간 복지동향(231)**, 11-16.

- 이정진 (2021). 청년 정치참여 현황과 개선과제. **이슈와 논점**, 1803, 1-4.
- 이재신, 이영수 (2009). 정치정보 습득, 관여도, 정치적 불만과 정치참여 유형의 관계. **한국언론학보**, 53(2), 183-205.
- 이창호 (2017). **고등학생들의 정치참여욕구 및 실태 연구**.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창호 (2020). **선거법개정에 따른 청소년정책 및 활동지원방안 연구**.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창호, 모상현 (2012). 청소년의 정치, 사회적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탈물질주의가치와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4(4), 143-164.
- 이창호, 성운숙, 정낙원 (2012).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실태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혜숙, 이영주 (2017). **서울시 청소년참여 활성화 방안**. 서울: 서울연구원.
- 장근영, 박수익 (2011).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 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 I: 2011 민주시민역량실태 조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장세룡 (2016). 도시공간점거와 직접행동 민주주의: 2011년 9월 뉴욕 월 가 “점령하라”운동에 관한 성찰. **역사와 경계**, 99, 251-296.
- 전민경, 장미 (2021). **경기도청소년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연구**. 수원: 경기도의회.
- 전지원, 전자배 (2018). 청소년 참여활동 경험이 초기 성인기 시민의식과 사회참여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육**, 45(2), 5-30.
- 정장훈 (2013). 공공부문 성과주의 인사제도 활용에 관한 분석-제도 운영의 디커플링(decoupling)을 중심으로.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0(1), 179-204.
- 정일권, 이준웅, 배영 (2013). 인터넷 교류범위와 자기노출이 정치적 관용에 미치는 영향과 세대 효과. **언론과 사회**, 21(2), 160-204.
- 정희옥, 정승희 (2018). 한국 청소년의 정치의식 수준 분석. **시민교육연구**, 50(2), 159-183.

- 조금주 (2017).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청소년학연구**, 24(1), 355-376.
- 조성익 (2017). 금천구 청소년의회의 운영성과와 과제. 진선미의원실·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 세미나, '청소년정치참여확대 및 활성화 방안' 세미나자료집, 19-32.
- 조지형 (2007). **헌법에 비친 역사**. 서울: 푸른역사.
- 조호운, 조성환, 김영희 (2012). 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이 시민의식과 긍정적 자
기지가 및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21(4), 729-744.
- 조혜영, 최창욱 (2008). 청소년 참여활동의 성과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탐색:
청소년 참여기구 청소년들과의 심층면담을 중심으로. **미래청소년학회지**, 5(1),
111-140.
- 천정웅 (1997). [97-02] 지방 청소년정책 사업 강화를 위한 청소년참여 증대 방안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천정웅 (2018). 서구 시민청소년운동의 동향과 유형: 청소년주도성과 행동주의
관점. **글로벌청소년학회**, 8(2), 7-29.
- 천정웅 (2020). 미국 지역사회청소년개발(CYD)의 이론적 기초와 실천사례 연구.
청소년시설환경, 18(3), 11-20.
- 천정웅, 이민희, 박선영, 황성하 (2013). **글로벌 청소년정책론**. 경기: 양서원.
- 최창욱, 김승경 (2010). **청소년 권리증진을 위한 참여확대 방안 연구**. 서울: 여성
가족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최창욱, 문호영, 김정주 (2016).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Ⅲ**. 세종: 한국청
소년정책연구원.
- 최창욱, 전명기 (2013). **청소년참여기구 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
연구원 연구보고서, 1-251.
- 최창욱, 조혜영 (2007). 청소년 정책참여 실태와 활성화 방안: 청소년 정책참여
기구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4(6), 203-227.

한은영, 김미강 (2013). 청소년의 사회참여활동이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복지학**, 43, 95-124.

허인숙, 이정현 (2004). 청소년의 사회참여 활동과 시민성 형성에 관한 연구. **한국 청소년연구**, 15(2), 443-472.

황여정 (2017).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 모형개발 연구**.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Albanesi, C., Cicognani, E., & Zani, B. (2007). Sense of community, civic engagement and social well-being in Italian adolescents. *Journal of Community & Applied Social Psychology*, 17(5), 387-406.

Akiva, T., Carey, R. L., Cross, A. B., Delale-O'Connor, L., & Brown, M. R. (2017). Reasons youth engage in activism programs: Social justice or sanctuary?.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53, 20-30.

Allen, D., & Light, J. S. (2015). *From voice to influence: Understanding citizenship in a digital age*. Chicago, IL: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Andolina, M. W., & Conklin, H. G. (2019). Fostering democratic and social-emotional learning in actin civics programming: Factors that shape students's learning from Project Soapbox.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20(10), 1-37.

Andolina, M. W., & Conklin, H. G. (2021). Cultivating empathic listening in democratic education. *Theory & Research in Social Education*, 1-28.

Avril, K., David, K., Thomas, B., & Joana, L. (2010). *Citizenship Education in England 2001-2010: young people's parctices and*

- prospects for the future: the eighth and final report from the Citizenship Education Logitudinal Study(CELS)*. Research Report DFE-RR059. Department for Education.
- Banaji, S., & Buckingham, D. (2013). *The civic web: Young people, the internet and civic participation*. Cambridge, MA: The MIT Press.
- Besley, J. C. (2006). The role of entertainment television and its interactions with individual values in explaining political participation. *Harvard International Journal of Press/Politics*, 11(2), 41-63.
- Brady, B., Chaskin, R. J., & McGregor, C. (2020). Promoting civic and political engagement among marginalized urban youth in three cities: Strategies and challenges.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116, 1-11.
-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2015). *Eigenständige Jugendpolitik. Dialogprozess, Leitlinien, Herausforderungen*.
-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2017). 15. Kinder- und Jugendbericht. Bericht über die Lebenssituation junger Menschen und die Leistungen der Kinder- und Jugendhilfe in Deutschland. bmfjsf.de.
-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ngen. (2020). 16. Kinder- und Jugendbericht. Förderung demokratischer Bildung im Kindes- und Jugendalter. bmfjsf.de.
- Cabinet office & Department for Education. (2013). *2010 to 2015 Government Policy: young people*. (last updated 2015, May 8).
- Carlson, C. (2006). The Hampton experience as a new model for youth civic engagement. *Journal of Community Practice*, 14(1/2), 89-106.

- Castenmiller, P. (1997). Herindelung in Zicht: Opmattingen en Verwachtingen over Veranderingen in de Schaal van het Bestuur. *Bestuurswetenschappen*, 51(5), 295-312.
- Center for Information and Research on Civic Learning and Engagement (CIRCLE) (2005). *Census data shows youth voter turnout surged*. Maryland: CIRCLE.
- Checkoway, B., Allison, T., & Montoya, C. (2005). Youth participation in public policy at the municipal level.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27(10), 1149-1162.
- Cheung, C. K., Lee, T. Y., Chan, W. T., Liu, S. C., & Leung, K. K. (2004). Developing civic consciousness through social engagement among Hong Kong youths. *The Social Science Journal*, 41(4), 651-660.
- Collin, P. (2008). The internet, youth participation policies, and the development of young people's political identities in Australia. *Journal of Youth Studies*, 11(5), 527-542.
- Conner, J., & Rosen, S. M. (Eds.). (2016). *Contemporary Youth Activism: Advancing social justice in the United States*. Santa Barbara, CA: Praeger.
- Deutscher Bundesjugendring(Hg.). (2014). *Macht}Junge Politik!*. Deutschland: Deutscher Bundesjugendring.
- Deutsches Forschungsinstitut fur offentliche Verwaltung(Hg.). (2018). *Erster Bericht des Kompetenzzentrums Jugend-Check. Fur eine jugendgerechte Gesetzgebung*. Speyer: Deutsches Forschungsinstitut fur offentliche Verwaltung.
- Easton, D., & Dennis, J. (1965). The child's image of government.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361(1), 40-57.

European Commission(Hrsg.). (2016). *EU Youth Report 2015*. Verfügbar über. Luxembourg: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Galston, W. (2004). Civic education and political participation. *PS: Political Science and Politics*, 37(2), 263-266.

Habermas, J. (1992). *Faktizität und Geltung: Beiträge zur Diskussion des Rechts und des demokratischen Rechtsstaats*. Frankfurt a. M: Suhrkamp.

Hampton Coalition for Youth. (1993). *2 commit 2 the future/ 4 youth: Proposed plan of action*. Hampton, VA: Hampton Coalition for Youth.

Hayes, D. (2021). Youth parliament comes of age. *Children and Young People Now Select*, 2021(3), 14-14.

Hughes, D. M., & Curnan, S. P. (2000). Community youth development: A framework for action. *CYD Journal*, 1(1). 7-13.

Holbein, J. B. & Hillygus, D. S. (2020). *Making young voters: Converting civic attitudes into civic action*. New York,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Isaac, K. (1992). *Civics for democracy: A journey for teachers and students*. Washington, D.C.: Essential Information. 조희연 역, **우리는 참여와 행동을 통해 민주주의로 간다: 교사·학생·시민을 위한 사회참여 길라잡이**. 서울: 아르케.

Jung, N., Kim, Y., & De Zúniga, H. G. (2011). The mediating role of knowledge and efficacy in the effects of communication on political participation. *Mass Communication and Society*, 14(4), 407-430.

Kitchel, N. (2015). *Why they voted: Youth political participation in the*

- 21st century*. UC Berkeley The Charles H. Percy Undergraduate Grant for Public Affairs Research Papers.
- Larsen, E.G., Levinsen, K., & Kjaer, U. (2016). Democracy for the youth? The impact of mock elections on voting age attitudes. *Journal of Elections Public Opinion and Parties*, 26(4), 435-451.
- Linimon, A., & Joslyn, M. R. (2002). Trickle up political socialization: The impact of kids voting USA on voter turnout in Kansas. *State Politics & Policy Quarterly*, 2(1), 24-36.
- McConville, K.S., Stokes, L., & Gray, M. (2018). *Accumulating evidence of the impact of Voter ID Laws*. Student engagement in the political process.
- McDevitt, M., & Kioussis, S. (2006). *Experiments in political socialization: Kids Voting USA as a model for civic education reform*. CIRCLE working paper 49. Medford: CIRCLE.
- Menezes, I. (2003). Participation experiences and civic concepts, attitudes and engagement: Implications for citizenship education projects. *Europe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2(3), 430-445.
- Mikva Challenge & A Better Chicago. (2021). *2020 SOCY: State of Chicago Youth*. Chicago, IL: Mikva Challenge.
- Miller, K. K., Shramko, M., Brown, C., & Svetaz, M. V. (2021). The election is over, now what?: Youth civic engagement as a path to critical consciousness.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68(2), 233-235.
- Niedermayer, O. (2015). *Parteimitglieder in Deutschland: Version 2015. Arbeitsheft aus dem Otto-Stammer-Zentrum, H. 25*. Berlin: Freie Universität Berlin.
- Piketty, T. (2020). *Capital and ideology*. Harvard University Press.

- Putnam, R. D. (2002). *Democracies in flux: the evolution of social capital in contemporary society*.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 Saud, M., Ida, R., & Mashud, M. (2020). Democratic practices and youth in political participation: A doctoral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Adolescence and Youth*, 25(1), 800-808.
- Schneekloth, U. (2015). Jugend und Politik: Zwischen positivem Gesellschaftsbild und anhaltender Politik verdrossenheit. In: Shell Deutschland Holding (Hrsg.): *Jugend 2015. Eine pragmatische Generation im Aufbruch*. 17. Frankfurt a. M: Fischer Taschenbuch.
- Schugurensky, D. (2004). The tango of citizenship learning and participatory democracy. *Lifelong citizenship learning, participatory democracy and social change*, 2, 324-332.
- Shell Deutschland Holding(Hrsg.). (2002). *Jugend 2002. Zwischen pragmatischem Idealismus und robustem Materialismus*. 14. Shell Jugendstudie. Frankfurt a. M: Fischer Taschenbuch.
- Shell Deutschland Holding(Hrsg.). (2006). *Jugend 2006. Eine pragmatische Generation unter Druck*. 15. Shell Jugendstudie. Frankfurt a. M: Fischer Taschenbuch.
- Shell Deutschland Holding(Hrsg.). (2010). *Jugend 2010. Eine pragmatische Generation behauptet sich*. 16. Shell Jugendstudie. Frankfurt a. M: Fischer Taschenbuch.
- Shell Deutschland Holding(Hrsg.). (2015). *Jugend 2015. Eine pragmatische Generation im Aufbruch*. 17. Shell Jugendstudie. Frankfurt a. M: Fischer Taschenbuch.
- Sirianni, C., & Schor, D. M. (2009). City government as enabler of youth

- civic engagement: Policy designs and implications. In J. Youniss & P. Levine (Eds.), *Engaging young people in civic life* (pp. 121-163). Nashville, TA: Vanderbilt University Press.
- UK Parliament Education and Engagement Service (2020). *Guide to the UK Youth Parliament* (Inside document). London: British Youth Council.
- UNICEF. (2002). *The State of the World's Children 2003*. New York: Editorial and Publication Section of UNICEF.
- UNICEF. (2005). *Cities With Children-Child Friendly Cities in Italy*. UNICEF Innocenti Research Center: Florence.
- Weiss, J. (2020). What is youth political participation?: Literature review on youth political participation and political attitudes. *Frontiers in Political Science*, 2(1), 1-13.
- Wringe, C. A. (1981). *Children's rights: A philosophical study*.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 Yoldas, O. B. (2015). Civic education and learning democracy: Their importance for political participation of young people. *Procedia: 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174, 544-549.
- Youniss, J., & Yates, M. (1999). Youth service and moral-civic identity: A case for everyday morality. *Educational Psychology Review*, 11(4), 361-376.

[기타 웹사이트 국내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에서 2021년 9월 17일 인출.
- 대전청소년활동진흥센터. http://www.tjyvc.net/sub2/menu_5.php 에서 2021년 9월 30일 인출.

대한민국청소년의회. <http://www.youthassembly.or.kr> 에서 2021년 7월 1일
인출.

서울시 NPO 지원센터 (2020.9.6.). 2010년대 미국 청소년 운동.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npo_aca&wr_id=4430
에서 2021년 6월 25일 인출.

서울시 NPO 지원센터 (2020.9.20.). 2020년 주목할 만한 미국 청소년 운동 6가지.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npo_aca&wr_id=4436
에서 2021년 6월 25일 인출.

위키백과 홈페이지. 대한민국의 청소년의회. https://ko.wikipedia.org/wiki/대한민국의_청소년의회 에서 2021년 7월 1일 인출.

유연수 (2017.7.6.). 미국 청소년의 민주시민 교육.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
보고서.

https://www.nypi.re.kr/brdartcl/boardarticleView.do?menu_nix=iBwu01rV&brd_id=BDIDX_zewPqUx5V8ZThtw5o5fm99&cont_idx=158&edomweivgp=R 에서 2021년 5월 15일 인출.

정우석 (2016.5.18.). 스웨덴의 강력한 아동학대 금지 정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 해외동향리포트.

https://www.nypi.re.kr/brdartcl/boardarticleView.do?menu_nix=iBwu01rV&brd_id=BDIDX_zewPqUx5V8ZThtw5o5fm99&tab=&seltab_idx=0 에서 2021년 7월 10일 인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0.1.28.). 중앙선거관위, 18세 선거권 부여에 따른 정치관
계법 운용기준 제시.

<https://www.nec.go.kr/site/nec/ex/bbs/View.do?cbIdx=1090&bcIdx=134823> 에서 2021년 9월 14일 인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0.2.6.). 중앙선거관위, 청소년 대상 모의투표 가능 여부
결정: 교육청 주관하에 교원이 실시하는 모의투표는 선거권이 없는 학생 대상

으로도 불가.

<https://www.nec.go.kr/site/nec/ex/bbs/View.do?cbIdx=1090&bcIdx=134818> 에서 2021년 9월 14일 인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1.5.25.). 중앙선관위,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제출.

<https://www.nec.go.kr/site/nec/ex/bbs/View.do?cbIdx=1090&bcIdx=145752> 에서 2021년 9월 14일 인출.

청소년참여포털. <http://www.youth.go.kr> 에서 2021년 9월 29일 인출.

[기타 웹사이트 국외 자료]

ADL. 10 Ways Youth Can Engage in Activism.

<https://www.adl.org/education/resources/tools-and-strategies/10-ways-youth-can-engage-in-activism> 에서 2021년 7월 15일 인출.

AID: A. (2014). Aufwachsen in Deutschland: Alltagswelten-Befragungen 2014.

<https://surveys.dji.de/index.php?m=msw,0&sID=107> 에서 2021년 8월 13일 인출.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2021.8.1.). Block the Vote: How Politicians are Trying to Block Voters from the Ballot Box.

<https://www.aclu.org/news/civil-liberties/block-the-vote-voter-suppression-in-2020/> 에서 2021년 8월 10일 인출.

ARD Tagesschau Bundestagswahl 2017 Bilder.

<https://www.tagesschau.de/wahl/archiv/2017-09-24-BT-DE/umfrage-alter.shtml> 에서 2021년 8월 13일 인출.

Association of American Colleges & Universities. Civic Learning: Leading Organizations.

<https://aacu.org/resources/civic-learning/organizations> 에서 2021년 8월

10일 인출.

Baylor University. iEngage Summer Civics Institute.

<https://www.baylor.edu/soe/index.php?id=935599> 에서 2021년 8월 10일 인출.

Bite the Ballot. <http://www.bitetheballot.co.uk> 에서 2021년 7월 2일 인출.

British Youth Council. (2019). UK Youth Parliament Rulebooks.

<https://www.byc.org.uk/wp-content/uploads/2020/04/2020-UK-Youth-Parliament-Rulebook.pdf> 에서 2021년 7월 28일 인출.

British Youth Council. (2021a). Who we are and what we do.

<https://www.byc.org.uk/aboutus> 에서 2021년 7월 28일 인출.

British Youth Council. (2021b). Youth Select Committee.

<https://www.byc.org.uk/uk/youth-select-committee> 에서 2021년 7월 28일 인출.

British Youth Council. (2021c). Local Youth Council Network.

<https://www.byc.org.uk/uk/local-youth-council-network> 에서 2021년 7월 28일 인출.

Bundestagswahl. <https://www.bundeswahlleiter.de/bundestagswahlen/2013.html> 에서 2021년 8월 13일 인출.

Center for Media & Social Impact. (CMSI).

<https://cmsimpact.org/report-list/participatory-civic-media/> 에서 2021년 6월 3일 인출.

Chicago Tribune. (2020.10.20.). Six years after Laquan McDonald shooting, activists rally for justice for slain teen.

<https://www.chicagotribune.com/news/breaking/ct-jason-van-dyke-rally-20201021-p626eogowfcntptiblisb2cd7m-story.html> 에서 2021년 7월 10일 인출.

CIRCLE. <https://circle.tufts.edu/understanding-youth-civic-engagement> 에서 2021년 7월 10일 인출.

CIRCLE. (2020.11.25.). Election Week 2020: Young People Increase Turnout, Lead Biden to Victory.

<https://circle.tufts.edu/latest-research/election-week-2020>

에서 2021년 7월 10일 인출.

CIRCLE. (2020.11.25.). Election Week 2020: Young People Increase Turnout, Lead Biden to Victory.

<https://circle.tufts.edu/latest-research/election-week-2020#youth-voter-turnout-increased-in-2020> 에서 2021년 7월 10일 인출.

CNNPolitics. (2020.8.13.). Lawmakers introduce new bill to protect youth voting rights.

<https://www.cnn.com/2020/08/13/politics/legislation-youth-voting-rights/index.html> 에서 2021년 8월 10일 인출.

Common Sense Media. (2020.4.1.). 6 Youth-Led Political Movements to Inspire You to Vote.

<https://www.common sense media.org/blog/6-youth-led-political-movements-to-inspire-you-to-vote> 에서 2021년 6월 25일 인출.

CYP Now. (2021.4.26.). UK Youth Parliament tender 'set up to fail' by government, campaigners warn.

<https://www.cypnow.co.uk/news/article/uk-youth-parliament-contractor-set-up-to-fail-campaigners-warn> 에서 2021년 7월 2일 인출.

Department for Digital, Culture, Media and Sport [DCMS]. (2018a). Civil society strategy: Building a future that works for everyone.

<https://tinyurl.com/52y6sbcr> 에서 2021년 7월 26일 인출.

Department for Digital, Culture, Media and Sport [DCMS]. (2018b). Civil

society strategy youth voice programme youth voice groups grant scheme. <https://tinyurl.com/25tu5hxf> 에서 2021년 7월 26일 인출.

Department for Digital, Culture, Media and Sport [DCMS]. (2021.3.12.). UK youth parliament programme 2021/22-Grant application.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uk-youth-parliament-programme-202122-grant-application/uk-youth-parliament-programme-202122-guidance-for-applicants> 에서 2021년 7월 26일 인출.

Department for Digital, Culture, Media and Sport [DCMS]. (2021.7.15.). Youth engagement grant 2021 to 2022. <https://tinyurl.com/ycycn3ye> 에서 2021년 7월 26일 인출.

Department for Digital, Culture, Media and Sport [DCMS]. (2021.7.19.). Youth social action rapid evidence assessment.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youth-social-action-rapid-evidence-assessment> 에서 2021년 7월 26일 인출.

Department for Education. (2010.11.25.). Citizenship education in England 2001 to 2010.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citizenship-education-in-england-2001-2010-young-peoples-practices-and-prospects-for-the-future-the-eighth-and-final-report-from-the-citizenship-e> 에서 2021년 7월 30일 인출.

Department for Education. (2013). National curriculum in England: citizenship programmes of study. <https://tinyurl.com/ddmkazr2> 에서 2021년 7월 30일 인출.

Department for Education. (2013.9.11). National curriculum in England: citizenship programmes of study-key stages 3 and 4. <https://tinyurl.com/6vuumjt> 에서 2021년 7월 30일 인출.

Department for Education. (2015). Citizenship programmes of study: key stages 1 and 2.

<https://tinyurl.com/2t3nmfbf> 에서 2021년 7월 30일 인출.

Duke. (2020.4.7.). Making Young Voters-new book from Sunshine Hillygus.

<https://polisci.duke.edu/news/making-young-voters-new-book-sunshine-hillygus-0> 에서 2021년 7월 10일 인출.

Future Coalition. <https://futurecoalition.org/what-we-do/> 에서 2021년 7월 10일 인출.

GALLUP. (2014.7.10.). Party Identification Varies Widely Across the Age Spectrum.

<http://www.gallup.com/poll/172439/party-identification-varies-widely-across-age-spectrum.aspx> 에서 2021년 7월 23일 인출.

Hampton, VA. Youth Commission.

<https://hampton.gov/221/Youth-Commission> 에서 2021년 6월 26일 인출.

Hampton Youth Commission.

https://hampton.gov/DocumentCenter/View/1766/HYC-application_complete2013?bidId= 에서 2021년 6월 26일 인출.

iEngage Summer Civics Institute. iEngage 2021 UPDATE.

https://blogs.baylor.edu/iengage/?_ga=2.137746361.843974444.1629365629-1123332920.1629365629 에서 2021년 8월 10일 인출.

Local Government Association. Bright Futures: our vision for.

<https://tinyurl.com/4ckpzrca> 에서 2021년 7월 25일 인출.

Local Government Association. (2019.3.27.). Must Know for youth services.

<https://www.local.gov.uk/publications/must-know-youth-services> 에서

2021년 7월 25일 인출.

Make it. (2020.11.18.). The 2020 election shows Gen Z's voting power for years to come.

<https://www.cnbc.com/2020/11/18/the-2020-election-shows-gen-z-s-voting-power-for-years-to-come.html> 에서 2021년 6월 25일 인출.

Mikva Challenge. <https://mikvachallenge.org/annual-reports/> 에서 2021년 7월 23일 인출.

Mikva Challenge. <https://mikvachallenge.org/about-us/history/> 에서 2021년 7월 23일 인출.

Mikva Challenge. <https://mikvachallenge.org/our-work/programs/> 에서 2021년 7월 23일 인출.

My Life, My Say. <http://www.mylifemysay.org.uk> 에서 2021년 7월 2일 인출.

National League of Cities. <https://www.nlc.org/about/> 에서 2021년 7월 10일 인출.

Northern Ireland Assembly Education Service.

<https://education.niassembly.gov.uk/about-education-service> 에서 2021년 7월 2일 인출.

Northern Ireland Youth Assembly. <http://www.niyouthassembly.org/> 에서 2021년 7월 2일 인출.

National Citizen Service. <https://wearencs.com/> 에서 2021년 7월 2일 인출.

NYRA. <http://www.youthrights.org/issues/voting-age/> 에서 2021년 6월 3일 인출.

Scottish Youth Parliament. <https://syp.org.uk/> 에서 2021년 7월 2일 인출.

Scottish Youth Parliament. The Scottish Youth Parliament “The democratically elected voice of Scotland’s Young people”.

<https://syp.org.uk/wp-content/uploads/2021/04/Stand4SYP-Engagement-Presentation-final.pdf> 에서 2021년 7월 2일 인출.

Shout out UK. (2021). About SOUK. <https://www.shoutoutuk.org/about-us/> 에서 2021년 7월 2일 인출.

Strava. <https://www.strava.com/features> 에서 2021년 6월 25일 인출.

Team ENOUGH. <https://www.teamenough.org/who-we-are> 에서 2021년 6월 26일 인출.

Teen Vogue. (2019.12.16.). Youth Activist Movements of the 2010s: A Timeline and Brief History of a Decade of Change. <https://www.teenvogue.com/story/youth-activist-movements-2010s-brief-history-timeline-decade-of-change> 에서 2021년 6월 25일 인출.

TurnUp. <https://www.turnup.us> 에서 2021년 6월 25일 인출.

TurnUp. <https://www.turnup.us/our-history> 에서 2021년 6월 25일 인출.

The Guardian. (2017.11.11.). 'We're having a menstrual liberation': how periods got woke. <https://www.theguardian.com/society/2017/nov/11/periods-menstruation-liberation-women-activists-abigail-radnor> 에서 2021년 6월 25일 인출.

The Institute of Politics at Harvard University. (2021.4.23.). Spring 2021 Harvard Youth Poll. <https://iop.harvard.edu/youth-poll/spring-2021-harvard-youth-poll> 에서 2021년 7월 10일 인출.

The National's Report Card. https://www.nationsreportcard.gov/hgc_2014/#civics 에서 2021년 7월 10일 인출.

The New York Times. (2020.10.8.). Why Don't Young People Vote, and

What Can Be Done About It?.

<https://www.nytimes.com/2020/10/08/upshot/youth-voting-2020-election.html> 에서 2021년 7월 10일 인출.

Unicef. <http://www.unicef.or.kr> 에서 2021년 7월 6일 인출.

United We Dream. <https://unitedwedream.org/about/#principles> 에서 2021년 6월 25일 인출.

U.S. News. (2021.3.3.). House Gives Initial Approval to Civics Test for Graduation.

<https://www.usnews.com/news/best-states/kansas/articles/2021-03-03/house-gives-initial-approval-to-civics-test-for-graduation> 에서 2021년 7월 10일 인출.

U.S. News. (2021.3.25.). Indiana Lawmakers Require Civics Class for Middle Schoolers.

<https://www.usnews.com/news/best-states/indiana/articles/2021-03-25/indiana-lawmakers-require-civics-class-for-middle-schoolers> 에서 2021년 7월 10일 인출.

VOTE16USA. (2020.2). Young Voices at the Ballot Box.

<https://vote16usa.org/wp-content/uploads/2020/05/white-paper-5-14.20.pdf> 에서 2021년 7월 15일 인출.

Vote411. <https://www.vote411.org/first-time-voter-checklist> 에서 2021년 8월 10일 인출.

Wikipedia. https://de.wikipedia.org/wiki/Wahlrecht#Deutschland_2 에서 2021년 8월 13일 인출.

Youth Commission. <https://sfbos.org/youth-commission> 에서 2021년 6월 26일 인출.

Youth Commission. <https://sfgov.org/youthcommission/about-us> 에서

2021년 6월 26일 인출.

Youth Parliament. (2020). Make Your Mark 2020 Results Report.

<https://2u6szgq3e9x2hmfuy16guf8q-wpengine.netdna-ssl.com/wp-content/uploads/2021/01/2020-v2-Make-Your-Mark-Results-with-Infographics.pdf> 에서 2021년 7월 2일 인출.

Young Essex Assembly. <https://www.young-essex-assembly.org.uk/> 에서 2021년 7월 2일 인출.

#iwill. What is the #iwill Fund?.

<https://www.iwill.org.uk/about-us/iwillfund> 에서 2021년 7월 2일 인출.

<http://academyforeducationaldevelopment.orghub.net/> 에서 2021년 8월 10일 인출.

[법령]

경기도 학교자치 조례 (2019.11.11. 제정, 경기도조례 제6403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416669&chrClsCd=010202&gubun=> 에서 2021년 10월 15일 인출.

군산시 청소년 자치권 확대를 위한 조례 (2016.9.29. 제정, 전라북도군산시조례 제1371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자치법규/군산시청소년자치권확대를위한조례/\(1371,20160929](http://www.law.go.kr/자치법규/군산시청소년자치권확대를위한조례/(1371,20160929) 에서 2021년 6월 21일 인출.

청소년기본법 (2020.5.19. 일부개정, 법률 제17285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청소년기본법> 에서 2021년 10월 18일 인출.

청소년활동진흥법 (2020.5.19. 일부개정, 법률 제17286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청소년활동진흥법> 에서 2021년 10월 18일 인출.

초·중등교육법 (2021.3.23. 일부개정, 법률 제17958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초·중등교육법> 에서 2021년 10월 15일

인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2021.6.22.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1790호). 법제처 국가
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초·중등교육법%20시행령> 에서
2021년 10월 15일 인출.

○ — 부 록

부록

1. 청소년의 사회·정치참여 실태조사 설문지

1. 청소년의 사회·정치참여 실태조사 설문지

통계법 제 33조(비밀의 보호 등)	조사학교ID(면접원이 작성합니다)
① 통계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는 통계작성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청소년의 사회·정치참여 실태조사

안녕하세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 기관으로 청소년의 인성 함양과 잠재력 개발, 디지털,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원에서는 학교 안팎에서 청소년들의 사회·정치참여 실태를 파악하고 청소년의 사회·정치적 요구수준을 진단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정치적 참여방안을 마련할 목적으로 본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사결과는 청소년의 사회·정치적 참여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제도적 정책마련과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성장할 수 있고 시민적 역량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한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계획입니다.



여러분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무기명으로(이름을 밝히지 않고) 처리되어 아동, 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 자료로만 활용되므로 개인의 비밀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정확하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설문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응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바쁘신데 본 조사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년 5월

※ 이 설문지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작성 이외의 목적으로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주관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담당자: 모상현 선임연구위원 044-415-2126 최용환 연구위원 044-415-2253 홍정윤 연구원 044-415-2214	수행기관	 ※ 담당자: 박종경 차장 ※ 문의전화: 02-3014-0988
------	--	------	--

조사 동의	1. 나는 이 조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2. 나는 내가 원하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중간에 그만 둘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3. 나는 내가 응답한 내용이 연구목적으로 제3자(연구자)에게 제공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4. 나는 이 조사에 참여하는 것에 스스로 동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않음
-------	--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청소년의 사회·정치참여 실태조사> 관련 의견 수렴 • 개인정보 수집 항목: 성별 •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않음
-----------------	--	------------------------------	---------------------------------

성별	본인의 성별을 응답해주세요.	<input type="checkbox"/> 남자	<input type="checkbox"/> 여자
----	-----------------	-----------------------------	-----------------------------

설문 응답방법 안내문

- ※ 설문지에는 여러분 자신에 관한 질문들이 들어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을 잘 읽고 정확하고 솔직하게 응답해 주십시오.
- ※ 이해가 되지 않거나 궁금한 것이 있으면 앞에 계신 면접원께 손을 들고 질문해도 좋습니다.

01 표시하는 방법

질문 다음에는 대개 ①에서 ⑤까지의 숫자 중 하나를 골라 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문장을 읽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전혀 관심이 없다'면 ①에, '별로 관심이 없다'면 ②에,
'보통이다'면 ③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다'면 ④에, '매우 관심이 있다'면 ⑤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세요.

	전혀 관심이 없다	별로 관심이 없다	보통이다	어느 정도 관심이 있다	매우 관심이 많다
나는 우리사회 전반의 정치적 문제에 관심이.....	①	②	③	④	⑤

02 표시한 것을 바꾸고 싶을 때

아래와 같이 처음 답을 한 곳에 가위표(X)를 하고 맞다고 생각하는 답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세요.
지우개 또는 볼펜으로 지우지 않아도 됩니다.

	전혀 관심이 없다	별로 관심이 없다	보통이다	어느 정도 관심이 있다	매우 관심이 많다
나는 우리사회 전반의 정치적 문제에 관심이.....	①	X	③	④	⑤

03 응답을 선택한 후 지시문에 따라 해당 번호로 이동

항목 오른쪽에 지시문이 있는 경우는,
응답을 한 후 선택한 항목의 오른쪽에 색칠된 지시문이 이동하라고 하는 번호로 이동해야 합니다.

23 (2002년 4월 7일 이전에 태어난 서울/부산지역 고3 학생에 한해)
학생은 지난 4월 7일 실시된 (서울/부산) 시장 선거에서 투표를 했습니까?

① 했다
② **○** 했다 → 23-3번 문항으로
③ 투표권이 없음 → 배운1 문항으로

23-1 (23번에서 "① 했다"고 응답한 학생에 한해서)
후보자를 선택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한 가지만 골라 주세요.

04 강조 지침

색칠이 되어 있는 항목, 굵은 글씨에 밑줄이 되어있는 항목은 반드시 지침에 따라 응답합니다.

8 학생은 **최근 한 달간** 소셜미디어(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유튜브 등)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얼마나 자주 하였나요?

소셜미디어를 통하여...	전혀 하지 않았다	별로 하지 않았다	보통 이다	가끔 했다	자주 했다
1) 정치문제나 이슈에 대한 게시글 읽기	①	②	③	④	⑤
2) 정치문제나 이슈에 대한 자신의 견해나 의견 달기(글쓰기, 댓글달기 등)	①	②	③	④	⑤

1 학생은 평소 우리사회 전반의 정치적 현안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전혀 없다	별로 없다	보통 이다	조금 있다	매우 있다
나는 우리사회 전반의 정치적 현안에 관심이.....	①	②	③	④	⑤

2 학생은 평소 다음과 같은 이슈(주제)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전혀 없다	별로 없다	보통 이다	조금 있다	매우 있다
1) 국회 의정활동 관련 이슈	①	②	③	④	⑤
2) 사법부의 판결 관련 이슈	①	②	③	④	⑤
3) 대통령과 정부 관련 이슈	①	②	③	④	⑤
4) 여론과 미디어의 통향 이슈	①	②	③	④	⑤
5) 정당 관련 이슈	①	②	③	④	⑤
6) 선거 관련 이슈	①	②	③	④	⑤
7) 국제정치 관련 이슈	①	②	③	④	⑤
8) 시민단체 활동관련 이슈	①	②	③	④	⑤

2-1 학생은 평소 다음의 정치 분야에 대하여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전혀 없다	별로 없다	보통 이다	조금 있다	매우 있다
1) 정치 행정 분야	①	②	③	④	⑤
2) 외교 분야	①	②	③	④	⑤
3) 통일안보 분야	①	②	③	④	⑤
4) 경제 분야	①	②	③	④	⑤
5) 교육 분야	①	②	③	④	⑤
6) 과학기술 분야	①	②	③	④	⑤
7) 사회복지 분야	①	②	③	④	⑤
8) 문화예술체육 분야	①	②	③	④	⑤

3 학생은 평소 정치적 이슈나 문제에 대해 아래의 사람들과 얼마나 대화를 나누는 편입니까?

	전혀 하지 않는다	별로 하지 않는다	보통 이다	가끔 한다	자주 한다
1) 친구들	①	②	③	④	⑤
2) 부모님	①	②	③	④	⑤
3) 학교 선생님	①	②	③	④	⑤
4) 온라인 유저(온라인 지인 혹은 온라인 상 익명의 대상)	①	②	③	④	⑤

4 학생은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형성하는데 있어 아래의 사람 혹은 요인들이 얼마나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미치지 않는다	별로 미치지 않는다	보통 이다	가끔 미친다	매우 미친다
1) 친구들	①	②	③	④	⑤
2) 부모님	①	②	③	④	⑤
3) 학교 선생님	①	②	③	④	⑤
4) 온라인 유저(온라인 지인 혹은 온라인 상 익명의 대상)	①	②	③	④	⑤
5) 언론매체(TV, 라디오, 인터넷 방송 등)	①	②	③	④	⑤
6) 정치(선거) 관련 수업 혹은 프로그램	①	②	③	④	⑤
7) 관련 서적 등 독서	①	②	③	④	⑤

5 학생은 다음과 같은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국회의 입법이 국민의 의사를 수용하여 반영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정부의 정책이 국민과 공익에 기여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바람직한 국가정책이 무엇인지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정치적 문제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참여할 능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의 정치적 관심과 참여는 바람직한 국정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6 다음은 민주시민의식에 관한 질문입니다. 학생은 다음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도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들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의 의견 중에도 수용할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의 시위나 집회도 허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7 학생은 우리 사회의 정치적 현안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아래의 미디어를 얼마나 이용하십니까?

정치적 현안에 관한 정보를...	전혀 이용하지 않는다	별로 이용하지 않는다	보통 이다	가끔 이용한다	자주 이용한다
1) TV 뉴스	①	②	③	④	⑤
2) 라디오 뉴스	①	②	③	④	⑤
3) 소셜미디어(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등)	①	②	③	④	⑤
4) 인터넷신문(조선닷컴, 한겨레닷컴, 쿠키뉴스 등)	①	②	③	④	⑤
5) 포털뉴스(네이버, 다음 등)	①	②	③	④	⑤
6) 정치팟캐스트	①	②	③	④	⑤
7) Youtube	①	②	③	④	⑤

8 학생은 최근 한 달간 소셜미디어(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유튜브 등)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얼마나 자주 하였습니까?

소셜미디어를 통하여...	전혀 하지 않았다	별로 하지 않았다	보통 이다	가끔 했다	자주 했다
1) 정치문제나 이슈에 대한 게시글 읽기	①	②	③	④	⑤
2) 정치문제나 이슈에 대한 자신의 견해나 의견 달기(글쓰기, 댓글달기 등)	①	②	③	④	⑤
3) 정치문제나 이슈에 대한 타인의 글을 공유하거나 퍼나르기(좋아요 누르기 등)	①	②	③	④	⑤
4) 정치문제나 이슈에 대한 온라인청원이나 서명참여	①	②	③	④	⑤

9 학생은 우리 사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선거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전혀 없다	별로 없다	보통 이다	조금 있다	매우 있다
1) 지방 선거(광역시/도 단체장)	①	②	③	④	⑤
2) 지방 선거(시, 군, 구 기초자치단체장)	①	②	③	④	⑤
3) 국회의원 선거	①	②	③	④	⑤
4) 교육감 선거	①	②	③	④	⑤
5) 대통령 선거	①	②	③	④	⑤

10 만약 학생에게 투표권이 주어진다면(투표권이 있는 경우도 해당), 다음과 같은 선거에서 얼마나 투표할 의향이 있습니까?

	전혀 없다	별로 없다	보통 이다	조금 있다	매우 있다
1) 지방 선거(광역시/도 단체장)(광역시장/도지사)	①	②	③	④	⑤
2) 지방 선거(시, 군, 구 기초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	①	②	③	④	⑤
3) 국회의원 선거	①	②	③	④	⑤
4) 교육감 선거	①	②	③	④	⑤
5) 대통령 선거	①	②	③	④	⑤

11 2019년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현행 선거권(투표를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연령은 만18세 이상(고3 나이)입니다. 선거권 연령을 만 17세(고2 나이)로 낮추자는 견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① 찬성
- ② 반대
- ③ 잘 모르겠음

12 교육감 선거의 경우도 만18세 이상부터 선거권이 주어집니다. 만 16세(고1 나이) 이상부터 참여가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① 찬성
- ② 반대
- ③ 잘 모르겠음

13 학생은 학교안팎에서 다음과 같은 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	없다
1) 모의선거활동	①	②
2) 어린이의회· 청소년의회 활동	①	②
3)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특별회의 활동	①	②
4) 정치토론이나 정책제안대회참가	①	②
5) 정치·사회문제 관련 동아리활동	①	②
6) 학교(학급) 자치회관련 활동	①	②

13-1 (13번의 선택지 중 하나라도 "① 있다"고 응답한 학생에 한해서)
13번의 참여활동이 자신에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습니까?

	전혀 안되었다	별로 안되었다	보통 이다	조금 되었다	매우 되었다
1) 사회·정치적 문제를 이해하는 능력	①	②	③	④	⑤
2) 사회·정치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①	②	③	④	⑤
3) 사회·정치적 현안에 대한 의사 결정 능력	①	②	③	④	⑤
4) 서로 다른 정치적 견해를 수용하는 태도	①	②	③	④	⑤

14 학생은 지금까지 학교 내에서 아래의 활동을 경험한 적이 어느 정도 있나요?

학교 내에서...	전혀 없다	별로 없다	보통 이다	조금 있다	매우 있다
1) 수업시간에 정치적인 문제나 이슈에 관한 토론	①	②	③	④	⑤
2) 모의 대통령선거	①	②	③	④	⑤
3) 모의 국회의원선거	①	②	③	④	⑤
4) 모의 지방자치 단체장(도지사나 시장)이나 교육감선거	①	②	③	④	⑤
5) 모의 UN 선거	①	②	③	④	⑤

15 학교 내에서의 학생 활동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해당되는 내용에 표시해 주세요.

학교는...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학교의 규칙·규정을 만들거나 고칠 때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다	①	②	③	④	⑤
2)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행사(체험학습/운동회/축제 등)를 계획·진행한다	①	②	③	④	⑤
3)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통로(건의함/신문/홈페이지 등)가 마련되어 있으며, 학교는 이를 적극 활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16 학생은 청소년의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해 아래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니까?

	전혀 필요하지 않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보통 이다	조금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1) 정치적인 문제나 이슈에 관한 토론수업	①	②	③	④	⑤
2) 모의선거	①	②	③	④	⑤
3) 시민성함양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①	②	③	④	⑤
4) 리더십함양교육	①	②	③	④	⑤
5) 국회나 도의회/시의회 등 정치기관 견학	①	②	③	④	⑤

17 학교 안팎에서 학생들의 정치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각 항목별로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가정에서의 자기 의사표현 등 결정권이 보장되지 않음	①	②	③	④	⑤
2) 학교에서의 자기 의사표현 등 결정권이 보장되지 않음	①	②	③	④	⑤
3) 학교에서 정치 참여의 실천적 기회가 제공되지 않음	①	②	③	④	⑤
4) 입시위주의 교육 제도	①	②	③	④	⑤
5) 학생정치참여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시각	①	②	③	④	⑤

18

학교 안팎에서 학생들의 정치참여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요인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각 항목별로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보통 이다	조금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1) 가정에서의 자기 의사표현 등 결정권 보장	①	②	③	④	⑤
2) 학교에서의 자기 의사표현 등 결정권 보장	①	②	③	④	⑤
3) 학교에서 정치 및 인권 교육의 확대	①	②	③	④	⑤
4) 중·고등학생의 정당가입 허용	①	②	③	④	⑤
5) 청소년의 학교 밖 정치 참여 활동 허용	①	②	③	④	⑤

19

다음해인 2022년 3월 9일에 20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대통령이 갖추어야 할 자질 관련된 내용입니다. 각 항목별로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보통 이다	조금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1) 비전 제시	①	②	③	④	⑤
2) 인사능력	①	②	③	④	⑤
3) 위기관리능력	①	②	③	④	⑤
4) 민주적 정책결정	①	②	③	④	⑤
5) 정책실행력	①	②	③	④	⑤
6) 도덕성	①	②	③	④	⑤

20

다음해인 2022년 3월 9일에 20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차기 대통령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발전시켜주셨으면 하는 분야에 대해 각 항목별로 응답해주시길 바랍니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보통 이다	조금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1) 행정분야	①	②	③	④	⑤
2) 외교 분야	①	②	③	④	⑤
3) 통일안보 분야	①	②	③	④	⑤
4) 경제 분야	①	②	③	④	⑤
5) 교육 분야	①	②	③	④	⑤
6) 과학기술 분야	①	②	③	④	⑤
7) 사회복지 분야	①	②	③	④	⑤
8) 문화예술체육 분야	①	②	③	④	⑤

21 현행 정부에서 해결돼야 할 청소년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각 항목별로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시급하지 않다	별로 시급하지 않다	보통 이다	조금 시급하다	매우 시급하다
1) 입시위주의 교육문제	①	②	③	④	⑤
2) 선거권연령 하향	①	②	③	④	⑤
3) 학교폭력문제	①	②	③	④	⑤
4) 게임중독문제	①	②	③	④	⑤
5) 안전문제	①	②	③	④	⑤
6) 학교 밖 청소년 등 위기청소년 문제	①	②	③	④	⑤
7) 청소년자살 문제	①	②	③	④	⑤
8) 학생인권 문제	①	②	③	④	⑤
9) 청소년대상 성폭력 문제	①	②	③	④	⑤

22 학생은 아래의 기관을 얼마나 신뢰하나요?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보통 이다	조금 신뢰한다	매우 신뢰한다
1) 중앙정부	①	②	③	④	⑤
2)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	①	②	③	④	⑤
3) 정당	①	②	③	④	⑤
4) 국회	①	②	③	④	⑤
5) 언론기관	①	②	③	④	⑤
6) 시민단체(NGO)	①	②	③	④	⑤

23

(2002년 4월 7일 이전에 태어난 서울/부산지역 고3 학생에 한해서)
학생은 지난 4월 7일 실시된 (서울/부산) 시장 선거에서 투표를 했습니까?

- ① 했다
- ② 안했다 → 23-3번 문항으로
- ③ 투표권이 없음 → 12페이지 배문1 문항으로

23-1

(23번에서 “① 했다”고 응답한 학생에 한해서)
후보자를 선택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한 가지만 골라 주세요.

- ① 후보자가 제시한 공약
- ② 후보자가 속한 정당
- ③ 후보자의 능력
- ④ 후보자의 이미지
- ⑤ 후보자의 청렴성
- ⑥ 후보자의 학력

23-2

(23번에서 “① 했다”고 응답한 학생에 한해서)
학생은 이번 선거기간 동안 아래에 열거된 경험을 어느 정도 했나요?

	전혀 하지 않았다	별로 하지 않았다	보통 이다	조금 했다	매우 했다
1) 나는 이번 선거와 관련하여 온/오프라인 공간에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이전 선거와 관련된 정보를(후보자 개인정보 및 공약 등) 탐색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내가 선호하는 후보를 온/오프라인 공간에서 지지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응답 후 12페이지 배문1 문항으로

23-3

(23번에서 “② 안했다”고 응답한 학생에 한해서)
투표를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한 가지만 골라 주세요.

- ① 마음에 드는 후보가 없어서
- ② 마음에 드는 공약이 없어서
- ③ 관심이 없어서
- ④ 시간이 없어서
- ⑤ 투표장에 가기가 두려워서

응답 후 12페이지 배문1 문항으로



배경변인

배문1

부모님은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나요?

부모님께서 학교를 완전히 마치신(졸업하신) 학교를 표시해 주세요.

※ 중간에 학교를 그만둔 경우는 '졸업'이 아닙니다.
예)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졸업하지 않고 중간에 그만둔 경우 '중학교 졸업'에 표시합니다.

	부모님 안 계심	학교 안다님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	대학원 졸업 (석사·박사)	잘 모르겠음
1) 아버지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어머니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배문2

귀하 가정 형편(경제 수준)이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까?



배문3

학생의 학업 성적(2021년 1학기)은 반에서 대략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나요?



배문4

학생의 정치적 성향은 어디에 가깝다고 생각합니까?

※ 본인의 정치적 성향을 모르거나 정치적 성향이 없을 경우 해당 문항에 응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끝까지 성의 있게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문초록

본 연구는 청소년의 정치참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청소년 정치참여 현황과 실태를 살펴보고, 청소년의 정치참여 기회 및 저변을 확대하고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파악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우선 청소년 정치참여에 대한 이론적 논거 정립을 위하여 청소년 정치참여의 의미와 쟁점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청소년의 정치참여의 법·제도적 토대가 되는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초·중등교육법 및 공직선거법에서 관련 조항을 살펴보고, 정치참여 제도로서 청소년 참여기구 및 청소년의회의 현황과 사례를 개괄하여 향후 개선과제로서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이미 청소년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틀을 갖추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영국, 독일, 미국 등 해외사례를 통해 국가별 청소년 정치참여 특징을 살펴보고 한국 상황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모색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청소년의 정치참여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정치참여 관련 다양한 조사영역에 대해 전국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을 대상($N=2,816$)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정책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또한 정치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심층 요인을 파악할 목적으로 정치참여 경험이 있는 청소년과 참여경험이 없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면담조사(FGI)를 실시하였다. 추가적으로 청소년 현장 전문가 대상 실태조사 및 분석(AHP/IPA)을 실시하여, 청소년 정치참여 정책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이상에서의 연구결과와 도출된 성과를 바탕으로 청소년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 및 정책방안을 제시하여 향후 청소년 정치참여 정책에 미칠 수 있는 미래적 영향력과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 마련을 모색하였다.

ABSTRACT

We conducted this study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and actual conditions of youth political participation at a time when social interest in youth political participation is increasing. We also identified ways to expand and revitalize youth political participation opportunities and bases.

First, to establish a theoretical basis for youth political participation, we reviewed previous studies on the meaning and issues related to youth political participation. We also reviewed the relevant provisions in the Basic Youth Act, the Youth Activity Promotion Act and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nd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which are the legal and institutional bases for youth political participation. We outlined the current status and cases of youth participation organizations and youth councils as political participation systems. Through this, we derived policy implications as future improvement tasks. In addition, we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of political participation in various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Kingdom, Germany, and the United States, which have already established a legal and institutional framework to promote youth political participation and systematically support it. We

explored the applicability of such a framework in the Korean situation and found that policy implications have been proposed in this regard.

To understand the current status and actual conditions of youth political participation, we conducted a nationwide fact-finding survey ($N=2,816$) of youth enrolled in middle and high schools across the country in various survey areas related to political participation. We used this survey as the basic data for policy development. In addition, we conducted an interview survey (FGI) to identify factors affecting political participation among youths with and without experience in political participation. We also conducted a fact-finding survey and analysis (AHP/IPA) for youth field experts to provide basic data for the policy development for youth political participation.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urveys, we presented implications and policy proposals for revitalizing youth political participation to explore the influence that they may have on policies related to youth political participation in the future. We prepared specific measures to support these implications and policy proposals.

2021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발간자료 목록

기관고유과제

- 21-R01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현황 및 대응방안 연구 / 장근영·임지연
- 21-R02 지역사회 청소년 스포츠 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 김정숙·정은주·정현우
- 21-R03 10대 청소년의 정신건강 실태조사 / 최정원·문호영·전진아·박용천
- 21-R04 청소년 정치참여 실태와 활성화방안 연구 / 모상현·최용환·남미자·정건희
- 21-R05 미래지향적 청소년 시설 및 공간 혁신방안 연구 / 김경준·강경규·변나향
- 21-R06 아동·청소년의 놀이 실태 및 성장지원 방안연구 / 김영한·이유진
- 21-R07 청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 유민상·신동훈
- 21-R08 장애청소년 친화적 청소년정책 추진방안 연구 / 김지연·김승경·오욱찬·정소연
- 21-R09 청소년 분야 한국판 뉴딜 대응전략 연구 / 최창욱·좌동훈·성은모·남화성
- 21-R10 2021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총괄보고서 / 김영지·최홍일·유설희·이민희·김진호
- 21-R10-1 2021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심화분석보고서 / 유성상
- 21-R10-2 2021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총괄보고서 / 김영지·최홍일·유설희
- 21-R11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소년 성장지원정책 추진체계 구축 방안 연구 III / 황세영·이경상·송민경·조윤정
- 21-R12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청소년정책 대응 방안 연구 / 서정아·성윤숙·홍순구·권일남
- 21-R12-1 비정형 민원 데이터를 활용한 청소년 정책의제 도출 / 홍순구·임지원
- 21-R12-2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청소년 정책의제 도출 / 홍성호
- 21-R13 2021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 / 하형석·황진구·김성은·이용해
- 21-R13-1 2021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 데이터분석보고서 / 김성은·박찬호
- 21-R14 2021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 양계민·장윤선·정윤미·한지형
- 21-R14-1 2021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기초분석보고서(1기 패널) / 양계민·장윤선·정윤미·한지형
- 21-R14-2 2021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기초분석보고서(2기 패널) / 양계민·장윤선·정윤미·한지형

협동연구과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1-76-01 학교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Ⅳ: 질적
패널조사를 중심으로 / 김희진·서고운·김은정 (자체번호 21-R15)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1-76-02 학교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Ⅳ: 질적
종단자료 심층분석보고서 / 김희진·서고운·김미정·류정희·권지성 (자체번호 21-R15-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1-77-01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Ⅲ:
후기청소년 / 임희진·황여정·유성렬 (자체번호 21-R16)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1-77-02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Ⅲ:
후기청소년 - 해외사례 분석 / 임희진·박윤주·황여정 (자체번호 21-R16-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1-77-03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Ⅲ:
후기청소년 - 기초분석보고서 / 임희진·황여정 (자체번호 21-R16-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1-78-01 청소년 미디어 이용 실태 및 대상별 정책대응방안
연구Ⅱ: 10대 청소년 / 배상률·이창호·김남두 (자체번호 21-R17)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1-78-02 청소년 미디어 이용 실태 및 대상별 정책대응방안
연구Ⅱ: 10대 청소년 - 청소년 미디어 교육 지원을 위한 부모 참여 중심 소셜리빙랩
운영 방안 / 정현선·조병영·권은선·김광희 (자체번호 21-R17-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1-78-03 청소년 미디어 이용 실태 및 대상별 정책대응방안
연구Ⅱ: 10대 청소년 - 기초분석보고서 / 배상률·이창호 (자체번호 21-R17-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1-79-01 청년 빈곤 실태와 자립안전망 체계 구축방안 연구Ⅰ/
김형주·연보라·정세정·변금선 (자체번호 21-R18)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1-80-01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Ⅰ: 일자리
/ 김기현·배정희·김창환·성재민 (자체번호 21-R19)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1-80-02 2021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 기초분석보고서 /
김기현·배정희 (자체번호 21-R19-1)

수시과제

- 21-R20 보호종료아동 및 자립준비청소년 자립지원 현안과 과제 / 김지연
- 21-R21 청소년 자살 원인 탐색 및 예방 대책 연구 / 서고운
- 21-R22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 문호영

- 21-R23 청년정책연구 분야별 현황 분석 / 신동훈·김세현
- 21-R24 학교미디어교육센터 설치 유형별 지역 안착방안 / 배상률
- 21-R25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행정자료 연계 및 법제화방안 연구 / 양계민

연구개발적립금

- 21-R26 정책동향분석 / 이지연

수탁과제

- 21-R27 제4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 김승경·배정희
- 21-R28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및 청소년시설 운영기준 수립 연구용역 / 최용환·이희철·장혜윤
- 21-R29 청소년 자살예방 교육프로그램 효과성 분석 연구 / 김형주·강영배
- 21-R30 2021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 매뉴얼 / 성윤숙·방인자·김유민·조아라
- 21-R31 2020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프로그램 적용효과 분석 / 성윤숙·홍성효·김현수·장원빈
- 21-R32 한국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 구축 방안 연구Ⅱ / 유민상
- 21-R33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교과 연계 프로그램(중학교용-영어) / 성윤숙·임희진
- 21-R34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교과 연계 프로그램(중학교용-기술·가정) / 성윤숙·서정아
- 21-R35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교과 연계 프로그램(중학교용-체육) / 성윤숙·김영지
- 21-R36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교과 연계 프로그램(고등학교용-영어) / 성윤숙·임희진
- 21-R37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교과 연계 프로그램(고등학교용-기술·가정) / 성윤숙·서정아
- 21-R38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교과 연계 프로그램(고등학교용-체육) / 성윤숙·김영지
- 21-R39 2020년 학부모용 학교폭력 예방교육 소식지 모음집 / 성윤숙·김옥수

- 21-R40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열어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안내서(초등학교용) / 성윤숙·김정민·김효주·장원빈
- 21-R41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열어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안내서(중학교용) / 성윤숙·김옥수
- 21-R42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열어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안내서(고등학교용) / 성윤숙
- 21-R43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현황통계 생성을 위한 행정자료 연계방안 연구 / 양계민·장윤선
- 21-R44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 김기현·문호영·황세영·유민상·이용해·김균희
- 21-R45 2021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학생서포터즈단 시범 운영 매뉴얼 / 성윤숙·장원빈·최동혁·김예원
- 21-R46 (초등용) 학업중단 위기 학생을 위한 비대면 꿈지락 / 황세영·송원일·배수인·유한별
- 21-R47 (중등용) 학업중단 위기 학생을 위한 비대면 꿈지락 / 황세영·송원일·배수인·유한별
- 21-R48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 / 배상률
- 21-R49 강원 2024 청소년 참여 기본계획 / 김정숙·김경준·정은주·이용해·김혁진
- 21-R50 보호대상아동 심리정서지원체계 통합구축방안 연구 / 김지연·이상정·정소연
- 21-R51 위기청소년 자립지원 표준화방안 및 평가지표 개발 연구 / 김지연·정경은·권해수
- 21-R52 인천 다문화교육 종합발전방안 연구 / 연보라·김정숙·신동훈·김재우
- 21-R53 지자체 및 중앙부처 청년정책 분야별 시행계획 평가방안 심화연구 / 배정희·장근영·이용해
- 21-R54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 개선연구 / 최창욱·좌동훈
- 21-R55 청소년 참여활성화 및 권리인식 신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 연구 / 좌동훈·김지수
- 21-R56 2021년 대학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실태조사 / 정은주·문호영
- 21-R57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성남시 청소년서비스 수요분석과 대안전략 수립 연구 / 최용환·곽창규·김민주
- 21-R58 2021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실태조사 / 김성은·김영지·김지연·강경균·서고운·최홍일·임경원
- 21-R59 학교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컨설팅 매뉴얼 / 정은주·임지연
- 21-R60 (2022년 개정판)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열어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안내서(초등학교용) / 성윤숙·유설희·장원빈
- 21-R61 (2022년 개정판)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열어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안내서(중학교용) / 성윤숙·유설희·김예원
- 21-R62 (2022년 개정판)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열어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안내서(고등학교용) / 성윤숙·유설희·신보람
- 21-R63 지속가능한 청소년국제교류사업 발전방안 연구 / 양계민·김민

- 21-R64 2021 경기도 다문화학생 직업교육 지원방안 / 양계민·장윤선·강희숙
- 21-R65 이주배경 청소년 실태조사 / 양계민·정윤미·장윤선
- 21-R66 학업중단 위기 청소년의 유형별·단계별 지원 방안 / 김영지·박하나·손진희
- 21-R67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지역자원 유형 조사 및 연계 방안 / 김성은·송원일·최홍일·배수인
- 21-R68 2021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만족도 조사 연구 / 서정아·조아미
- 21-R69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한·중 청소년 생활실태 및 가치관 비교연구 / 배상률·장수·김수영
- 21-R70 니트 등 비경제활동 청년층의 노동시장 유입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김기현·유민상·배정희·신동훈
- 21-R71 청년정책 해외사례 및 시사점 / 김기현
- 21-R72 청년과 정의 연구 / 김기현
- 21-R73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지역기관 연계 시범사업 모니터링, 평가 및 모델개발(2차) / 연보라·좌동훈·장윤선·김재우·오성배·장흔성
- 21-R74 2021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 김희진·임희진·김정숙·서고운
- 21-R75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실무 개발 연구 / 황진구·좌동훈
- 21-R75-1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실무 매뉴얼 / 황진구·좌동훈
- 21-R76 강진 청소년문화예술센터 건립 연구용역 / 김영한·이유진·선민철·이상선
- 21-R77 2021년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모델 운영사업 / 황세영·이경상·유민상·최홍일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21-S01 2020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프로그램 우수사례집 (1.28)
- 21-S02 2021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 워크숍(1.27)
- 21-S03 2020년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 우수사례 시상 및 성과보고회(1.28)
- 21-S04 청년 연속기획포럼: 『2020 한국청년을 말한다』3차 포럼 - 한국청년, 무엇을 원하는가? (1.15)
- 21-S05 청소년정책 토론회 『코로나 팬데믹, 그리고 청소년』(2.26)
- 21-S06 2021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학생서포터즈단 발대식 및 사전교육 자료집(6.5)
- 21-S07 근거기반 이주배경청소년정책 추진방안모색을 위한 전문가 포럼(7.27)
- 21-S08 21세기 비전, 한국-몽골 청소년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7.19)

- 21-S09 대안교실 프로그램(꿈지락) 이해 및 활용 직무연수 자료집(7.27)
- 21-S10 2021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 상반기 성과보고회(8.10)
- 21-S11 2021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포럼: 미래 대안교육, 함께 길을 찾다-청소년에게 맞춤형 교육기회를(8.20)
- 21-S12 대안학교 및 대안교육특성화학교 역량강화 연수(8.18)
- 21-S13 2021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발전방안 포럼(8.18)
- 21-S14 2021 미디어교육 현장지원단 워크숍: 학교 미디어교육 활성화 제고 및 현장 적용 방안 수업의 실제와 사례 공유(8.13)
- 21-S15 National Youth Policy Review: India(6.14)
- 21-S16 National Youth Policy Review: Malawi(6.21)
- 21-S17 제41회 청소년정책포럼: 미래 청소년 정책의 새로운 구상(11.5)
- 21-S18 National Youth Policy Review: Gambia(6.29)
- 21-S19 2021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학생서포터즈단 중간워크숍 자료집(8.21)
- 21-S20 제4회 한일진로교육포럼: 코로나 시대의 진로교육, '다양한 배움의 장'에서의 진로교육기회보장에 관한 한일비교(9.25)
- 21-S21 미래를 대표하기: 핀란드 정부의 청소년 참여 정책(9.10)
- 21-S22 제12차 청년정책포럼: 청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 및 대응방안(10.5)
- 21-S23 콜로키움 Mongolian Youth Policy Review 5차(10.1)
- 21-S24 콜로키움 Guatemalan Youth Policy Review 6차(10.8)
- 21-S25 Youth and Public Policy in Afghanistan(11.22)
- 21-S26 제42회 청소년정책포럼: 청소년 정치참여 현안과제 및 활성화 방안 모색(11.25)
- 21-S27 청소년정책 릴레이 토론회 자료집 '환경변화에 따른 청소년 위기상황 대응 및 보호지원 방향'(10.27)
- 21-S28 영국의 청년 고용 및 훈련 정책(11.23)
- 21-S29 청소년정책 릴레이 토론회 자료집 '뉴노멀 시대의 청소년 활동 환경 조성 방안'(11.3)
- 21-S30 청소년정책 릴레이 토론회 자료집 '뉴노멀 시대의 청소년 복지정책 방향'(11.10)
- 21-S31 직원역량 콜로키움: 실무자를 위한 예산 편성의 실제(11.22)
- 21-S32 2021 대안학교 관리자 및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랜선토크 워크숍 자료집(11.25)
- 21-S33 청소년 정책 토론회: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성인지 감수성 제고 방안(12.2)
- 21-S34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체계 구축 시범사업Ⅲ" 시범사업기관 성과공유 워크숍(11.24)

- 21-S35 미국 연방정부 및 주정부의 주요 청소년 정책 사례(12.3)
- 21-S36 제10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11.19)
- 21-S37 2021년 우수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사업 연차평가 사전 워크숍(12.17)
- 21-S38 2021 학업중단예방 집중지원학교 및 대안교실 성과공유회(12.16)
- 21-S39 2021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담당자 역량강화 연수(12.16)
- 21-S40 청소년 정책 토론회: 청소년 참여활성화 및 권리의식 신장을 위한 제도(12.15)

학술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32권 제1호(통권 제100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32권 제2호(통권 제101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32권 제3호(통권 제102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32권 제4호(통권 제103호)

기타 발간물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30호 : 청소년활동의 사회적 가치 제고방안 연구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31호 : 청소년지도자 양성시스템 재구축 방안 연구Ⅱ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32호 : 국가 미래 인적자원으로서 재외동포청소년 성장과 지원방안 연구 Ⅲ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33호 :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체계 구축방안 연구 Ⅱ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34호 :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Ⅲ: 질적 패널조사를 중심으로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35호 : 청소년 빅데이터 체계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36호 : 청소년·청년의 플랫폼 노동 실태와 대응 방안 연구
- NYPI Bluenote 통계 53호 : 위기청소년 실태 파악을 위한 예비조사 결과
- NYPI Bluenote 통계 54호 : 아동·청소년의 주거환경 인식조사
- NYPI Bluenote 통계 55호 : Z세대 10대 청소년의 가치관 변화 연구

- NYPI Bluenote 통계 56호 : 청년 사회·경제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Ⅴ
- NYPI Bluenote 통계 57호 : 위기청소년 건강권 실태
- NYPI Bluenote 통계 58호 : 2020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2기 패널 주요 조사 결과
- NYPI Bluenote 통계 59호 : 청소년 혐오표현 노출 실태 연구
- NYPI Bluenote 통계 60호 :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Ⅲ: 청년 이직자
- NYPI Bluenote 통계 61호 : 10대 청소년 미디어 이용 실태
- NYPI Bluenote 통계 62호 :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 제3차년도 주요 조사 결과 및 데이터
분석·활용
- NYPI Bluenote 통계 63호 :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청소년 정치참여 실태와 활성화방안 연구

인 쇄 2021년 12월 23일

발 행 2021년 12월 31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김 현 철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나라인쇄 044-866-6384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44) 415-2125(학술정보관)

ISBN 979-11-5654-312-1

연구보고 21-R04

청소년 정치참여 실태와 활성화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7층
Social Policy Building, Sejong National Research Complex, 370,
Sicheong-daero, Sejong-si, 30147, Korea
Tel. 82-44-415-2114 **Fax.** 82-44-415-2369



ISBN 979-11-5654-312-1